



gosystemchange.kr

2024 체제전환운동

우리의 대안을 조직하자

「2024 체제전환운동포럼 : 우리의 대안을 조직하자」는 2023년 11월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조직위원회의 제안으로 78개의 단체와 함께 주최하는 포럼입니다.

공동주최 단체들은 체제전환운동포럼이 이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운동이 체제전환운동으로 모이면서 어떤 전망을 버리고 밝힐지,

체제가 만들어내는 위기에 맞설 대중의 힘을 어떻게 조직할지 등을 탐색하는 자리.

사회운동 안팎의 다양한 쟁점을 교통하고 토론하며 서로 이해하는 가운데 향후 어떤 실천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지 모색하는 자리.

서로의 운동을 입체적으로 연결하며 두터운 사회운동을 만들어가는 자리.

모두가 위기를 말하는 시대,

사회운동이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꾸는 체제전환운동으로 나아가길 기대하는 모든 이들과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에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일시 2024년 2월 1일(목) ~ 3일(토), 3일간

장소 스페이스살림 지하1층 다목적홀 (서울시 대방동 노량진로 10, 지하철 1호선 대방역 인근)

공동주최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조직위원회 + 가족구성권연구소, 건강권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교육공동체 나다, 교육공동체 벗,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권리찾기유니온, 기후위기기록인연대, 난민인권센터, 넥스트젠코리아,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중심 사회대전환 전국모임, 노동해방 마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전국결집, 녹색당, 녹색정치Lab 그레, 누구나데이터, 다른세계로길을내는활동가모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새로운노동자정치운동추진모임, 서강대 인권실천모임 노고지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성미산학교 포스트중등,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음성노동인권센터,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연대하는 교사잡것들,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옥바라지선교센터, 이윤보다인간을,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여성공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환, 정의당,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 3.0,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방79-1, 책방도닥도닥,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개네,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춘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탄소잡는채식생활네트워크, 투명가방끈, 플랫폼C,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향꾸네 틈모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홀리스행동

2024 체제전환운동포럼

- 6 행사 순서 및 평등약속
- 9 [오프닝 세션] 이때다! 체제전환**
- 11 사회운동, 체제전환을 향한 정치적 전망과 대안을 조직하자 - 정록 | 기후정의동맹
- 16 견고한 세계를 깨뜨리기 위해 - 혜진 |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 18 지역과 현장에서 서로의 연결됨을 상상하는 날 - 김찬 |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조직위 부산모임
- 20 coupangism = 쿠팡식 한국 자본주의, 체제전환의 정치로 읽어보자 - 정성용 |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 25 [가로지르길 1] 주거권과 가족구성권, 하나의 지도만들기**
- 27 발제1. 한국 사회 '집'의 역사와 주거권 운동 - 이원호 | 빈곤사회연대
- 45 발제2. 가족은 어떻게 '집'에 포섭되거나 배제되는가? - 타리 | 가족구성권연구소
- 62 토론1. 홈리스 운동 경험의 몇 가지 부연 - 이동현 | 홈리스행동
- 67 토론2. 제너레이션 렌트, 소유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돌보고 존엄하게 머물 세계를 꿈꾸자 - 지수 | 민달팽이유니온
- 79 [가로지르길 2] 불평등을 가르치는 학교에 저항하는 연대를 위하여**
- 81 발제1. 교육 체제 전환, 무엇을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가 - 난다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92 발제2. 체제전환 그리고 교육, 학교를 체제전환을 향한 저항과 연대의 공간으로! - 보란 | 교육노동자현장실천
- 105 토론1. 자본주의 사회에서 배제되는 것이 곧 학교에서도 배제된다 - 연혜원 | 투명가방끈
- 108 토론2. 근본없는 것들을 위한 교육으로의 전환 - 진냥 | 연대하는 교사잡것들
- 113 토론3. 빈곤과 청소년의 삶에 교육이 답해야 할 것들 - 김중미 | 기차길옆작은학교
- 120 토론4. 교육복지를 다시 인식하고, 새롭게 학교공공성을 말하자 - 박성식 |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 127 [가로지르길 3] 자본에 포획된 농업으로부터 정의로운 전환**
- 129 발제1. '농(農)'을 중심으로 한 체제전환 운동 - 채효정 | 기후정의동맹
- 152 발제2. 귀농 청년이 본 자본에 포획된 3농(농업, 농촌, 농민) - 연어 | 향꾸네 협동조합
- 162 토론1. 농을 중심으로 한 체제전환 운동,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 - 송원규 |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 165 토론2. 한 손에는 투쟁을 한 손에는 대안을 세상을 바꾸는 여성농민 - 박미정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175 토론3. 모두를 살리는 길 '농생태' 보아야 할 지점과 걸어야 할 지점에 대하여 - 문영규 | 곡성농민·향꾸네협동조합
- 185 토론4. 농과 새롭게 관계 맺기 - 김진아 | 한살림연합회
- 191 [가로지르길 4] 지금 여기, 체제전환 페미니즘**
- 193 발제. 편입과 분할의 정치를 넘어 구조적 차별에 맞서기 - 몽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208 토론1. 체제를 전복하는 반성폭력운동을 위하여 - 닷별 | 한국성폭력상담소
- 217 토론2. 체제와 불화하는 돌봄의 정치 - 진은선 | 장애여성공감
- 224 토론3. 노동자계급 정치로서 페미니즘 운동의 방향 - 정은희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자료집 목차



231	[가로지르길 5] 기후위기 시대, 공공재생에너지로 체제전환운동을!
233	발제1. 기후위기 시대 국가/공공의 역할은 무엇인가 - 서영표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254	발제2. 공공재생에너지운동, 어떻게 대중운동으로 만들 것인가? -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274	토론1. 2024~2030년 새로운 국가로 이행할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80	토론2. 기후위기 시대,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의 의미와 전략 -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286	토론3. 에너지민영화 흐름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체제전환은 민영화를 막아내는 일로부터 - 조진 공공운수노조
291	토론4. '대한민국 에너지전환 1번지 제주'는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의 연료가 될 수 있을까 - 부순정 제주녹색당
298	토론5. 공공재생에너지운동 입구전략 제안 - 손솔 진보당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304	토론6. 노동자 투쟁으로 기후문제 해결과 정의로운 전환 쟁취를 - 이재백 정의로운에너지전환을위한태안화력발전노동자모임
311	[가로지르길 6] 체제전환을 향한 노동/운동의 도전
313	발제1. 우리가 아직-다시 노동을 말하는 이유 - 장진범 플랫폼c
332	발제2. 노동/운동이 간혀있는 선을 넘는 활동을 시작하자 - 김하늬 민주노총 서울본부
350	발제3. 삶의 시공간을 반영하는 노동의 전환, 체제의 전환 -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
367	[가로지르길 7] 도래하는 전쟁위기에 맞서 사회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369	발제1. 361 국제질서 변동에 관한 지배 담론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 - 박기형 서교인문사회연구소
394	발제2. 오늘날 제국주의와 진영론에 맞선 반제반전 평화운동 - 양동민 사회주의를향한진전
417	발제3. 통일 담론의 한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사회운동의 도전 - 홍명교 플랫폼c
436	발제4. 평화운동은 무엇을 해왔나? 2003~2023년 시기 한국 평화운동 분석 - 임재성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451	발제5. 동북아 군비 증강과 무장 갈등 위험에 맞선 과제 - 김한민영 피스모모
459	[종합 세션] 자본주의를 질문하기, 체제전환을 모의하기
461	발제. 체제전환운동, 공동의 역사를 만들어가자 - 미류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조직위원회
488	토론1. 체제전환운동에서 "지역"을 위치지우기 - 남영란 노동해방 마중
491	토론2. 현장을 만들어가고 현장을 연결하는 사회운동을 위하여 돌봄과 인권을 고민하며 -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495	토론3. 어려워도 없는 길은 아닌, 빈곤에 맞서 체제전환 -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502	토론4. 삶의 고통을 함께 정치화하는 체제전환운동을 위해 -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510	토론5. 지구 행성 거주자들의 체제전환운동 -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517	[폐막식] 봄을 부르는 편지 - 사회 김윤영 / 발언 닷별·조영은·진영·홍명교 / 공연 황푸하
519	체제전환운동포럼 공동주최 단위소개
522	Special thanks to: 후원단체 및 고마운 분들
523	3월 23일,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에 함께 합시다!

체제전환운동포럼

2월 1일

목요일

오프닝

이때다 체제전환!

14:00 → 14:50

가로지르길 1

주거권과 가족구성권,
하나의 지도만들기

15:00 → 17:00

사회 이종건 옥바라지선교센터

발제1. 한국 사회 '집'의 역사와
주거권 운동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발제2. 가족은 어떻게 '집'에 포섭되거나
배제되는가? →
타리 가족구성권연구소

토론1. 이동현 홀리스행동

토론2.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가로지르길 2

불평등을 가르치는 학교에 저항하는
연대를 위하여

18:30 → 20:30

사회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발제1. 교육 체제 전환,
무엇을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가 →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발제2. 학교를 체제전환을 향한 저항과
연대의 공간으로 →
보란 교육노동자현장실천

토론1. 연혜원 투명가방끈

토론2. 진냥 연대하는 교사잡것들

토론3. 김중미 기차길옆작은학교

토론4.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2월 2일

금요일

가로지르길 3

자본에 포획된 농업으로부터
정의로운 전환

10:00 → 12:00

사회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발제1. 농(農)을 중심에 둔 체제전환 →
채효정 기후정의동맹

발제2. 귀농청년이 본 자본에 포획된
3농(농업, 농촌, 농민) →
언어 향꾸네 협동조합

토론1. 송원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토론2. 박미정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토론3. 문영규 향꾸네 협동조합

토론4. 김진아 한살림

가로지르길 4

지금 여기, 체제전환 페미니즘

13:00 → 15:00

사회 류민희 플랫폼c

발제 편입과 분할의 정치를 넘어
구조적 차별에 맞서기 →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토론1. 닷별 한국성폭력상담소

토론2.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토론3. 정은희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월 3일

토요일

가로지르길 5

기후위기 시대, 공공재생에너지로
체제전환운동을!

15:30 → 17:30

사회 류민 충남노동권익센터

발제1. 기후위기 시대 국가/공공의 역할은
무엇인가 →

서영표 제주대 사회학과

발제2. 공공재생에너지운동,
어떻게 대중운동으로 만들 것인가? →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토론1.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토론2. 황인철 녹색연합

토론3. 조진 공공운수노조

토론4. 부순정 제주녹색당

토론5. 손솔 진보당

토론6. 이재백 정의로우에너지전환을위한태안화력발전
노동자모임

가로지르길 6

체제전환을 향한 노동/운동의 도전

18:30 → 20:30

사회 임용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발제1. 우리가 아직 -다시 노동을 말하는
이유 → 장진범 플랫폼c

발제2. 노동/운동이 감혀있는 선을 넘는
활동을 시작하자 →
김하늬 민주노총 서울본부

발제3. 삶의 시공간을 반영하는 노동의 전환,
체제의 전환 →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가로지르길 7

도래하는 전쟁위기에 맞서 사회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10:00 → 12:00

사회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발제1. 반전평화운동의 어제와 오늘 →
임재성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발제2. 국제질서 변동에 관한 지배 담론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 →
박기형 서교인문사회연구소

발제3. 오늘날 제국주의와 진영론에 맞선
반제반전평화운동 →
양동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발제4. 통일 담론의 한계를 넘어 한반도
평화체제로 → 홍명교 플랫폼c

발제5. 동북아 군비 증강과 무장 갈등
위험에 맞선 과제 →
김한민영 피스모모

종합세션

자본주의를 질문하기, 체제전환을 모의하기

13:30 → 16:00

사회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발제 체제전환운동,
공동의 역사를 만들어가자 →
미류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조직위원회

토론1. 남영란 노동해방 마중

토론2.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토론3.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토론4.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토론5.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폐막식

봄을 부르는 편지

16:30 → 17:30

[체제전환운동 포럼에 모인 우리는 아래의 약속을 존중하고 실천합니다.]

하나. 우리는 나이, 성별, 성적지향과 정체성, 가족형태, 장애, 병력, 신체조건, 출신지역, 학력, 사회적 지위, 경제적 상황 등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한 관계를 지향합니다.

둘. 우리는 개방적인 태도로 서로를 환영하고, 각자의 경험과 현재를 존중합니다. 민주적 토론을 지향하며, 모두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합니다.

셋. 우리는 원치 않는 신체 접촉, 성차별을 비롯한 성폭력에 반대합니다. 다양한 정체성을 인정하고 소수자를 차별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조직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체제전환운동은 추상적인 자본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대면한 구체적 현실에서 체제와 단절하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대중 스스로의 정치적 행동을 통해 사회운동의 대안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집합행동을 조직하고, 공동의 정치적 전망과 과제를 만들어가기 위해 서로의 운동을 깊이 이해하는 동시에 비판과 갈등에 열린 토론을 열고자 합니다.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조직위원회는 오는 3월 23일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를 열고, 두터운 사회운동의 전망을 통한 체제전환을 선언합니다.

조직위원회는 위 문제의식과 목표에 동의하는 위원들에게 열려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꾸는 체제전환, 함께 시작할 동료가 됩시다.



오프닝

이때다 체제전환!

2024년 바로 지금, 한국사회에서 '체제전환운동'의 필요성을 확인하며, 체제전환운동포럼을 기획하게 된 배경과 목표를 공유한다.

또한 이번 포럼에서 참여자들이 함께 고민할 운동의 화두와 과제들의 큰 그림을 제안하고 각 세션이 준비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한편, 각기 다른 위치에서 다른 계기로 '체제전환운동포럼'에 함께 하게 된 참가자 3인이 들려주는 포럼에 기대를 나누면서,

'우리의 대안을 조직하는' 체제전환운동포럼을 힘차게 시작한다.



오프닝+가로지르길1
문자통역 QR코드

세션 진행

사회: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기조연설: 정록  (기후정의동맹)

참가자 스피치:

- ▷ 혜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 ▷ 김찬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부산모임)
- ▷ 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사회운동, 체제전환을 향한 정치적 전망과 대안을 조직하자

정록 | 기후정의동맹

기후정의동맹이 체제전환을 내걸고 있는 만큼 이번 포럼과 정치대회를 기후정의동맹의 핵심 사업으로 미리 계획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전혀 계획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불과 한 달 전에만 해도 이렇게 많은 이들과 함께 체제 전환을 모의할 줄 몰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시작은, 이제는 목전에 닥친 22대 총선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기후정의운동, 이번 총선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고’. 질문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총선’이라니요. 특정 정당의 후보로 출마하는 게 아닌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확고한 보수정치구조에서 ‘기후공약평가’와 같은 선거시기 정책대응이 지금 기후정의운동에 필요한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총선에 대한 물음이 왜 저에게 그토록 낯설었을까요? 저는 이 낯설음은 한국 사회운동이 다른 세계를 향한 ‘정치적 전망’을 세워내지 못하고 ‘정치적 주체’로 스스로를 조직하지 못해왔던 역사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위기가 만들어낸 대중들의 불안과 적대를 부추기며, 자신들의 정치적 자산 만들기에 여념없는 ‘한국 정치’에 대한 냉소는 이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언제나 ‘정치’를 실천해왔습니다. 억압받고 투쟁하는 이들과 함께 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집단적 관계와 힘을 조직하는 ‘정치’는 한국 사회운동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치’는 과연 각자의 의제와 부문을 넘어, 체제전환의 정치적 전망과 대안으로 조직되고 있을까요?

사회가 여러 집단으로 쪼개져 제로섬 게임과 각자도생의 삶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정치는 이를 더욱 부채질하면서 체제의 문제를 각자 감당할 책임의 문제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사회운동이 활동해온 각 부문과 의제 대응 역시 근본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복잡하게 맞물린 문제들에 대응하는 거대하고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감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회운

등이 변혁해야 할 대상을 명확히 ‘체제의 문제’로 규정하고, 이를 위한 정치적 전망과 대안으로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조직해야 합니다. 바로 그 답답함과 목마름이, 오늘 이 자리 ‘2024 체제전환운동포럼’을 열었습니다.

체제전환, 자본주의 분석과 비판을 확장하기

지금 우리가 겪는 삶의 위기가 ‘체제가 초래한 위기’라고 한다면, 이 체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수백 년 뒤의 역사가 존재한다면, 미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라고 부를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경제 시스템’을 부르는 말로 여겨지지만, 바로 이 ‘경제 시스템’이 다양한 사회적 영역과 질서들을, ‘자연’을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조직하고 배치해 이윤추구의 계기로 삼는다는 점에서 자본주의는 ‘경제’를 넘어 지금 이 세계의 다른 이름입니다.

체제전환운동은 체제가 작동하는 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체제의 모순과 적대의 지점을 발견하며 투쟁을 조직하고 전환의 계기를 포착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인식하는 것을 갱신하고 확장하는 것은 바로 지금, 체제전환운동의 전망을 세우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러한 비판과 분석의 확장으로, 자본주의는 착취와 수탈이라는 고유의 자본 축적 양식을 언제나 함께 작동시켜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착취가 임노동계약이라는 등가교환 이면에 숨겨졌던 자본 축적의 비밀을 드러낸 마르크스의 분석이라면, 수탈은 이러한 착취가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사회적 노동과 부, 자연에 대한 강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착취와 수탈은 생산/재생산, 인간/비인간 자연, 북반구/남반구 분할선과 결합합니다. 착취는 주로 북반구의 사회적 생산영역에서, 자본주의 경제원리인 대가의 지불, 교환관계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수탈은 여성의 돌봄 재생산 노동에, ‘스스로 존재하고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라던 자연에, 남반구 주변부 국가 민중에게 폭력적으로 자행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탈이 가족형태와 국가형태를 매개로 이루어지면서 자본은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발뺌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돌봄 재생산 위기, 기후생태위기, 전쟁위기는 바로 자본주의 체제가 마음껏 수탈해온 사회생태적 재생산의 조건들이 무너진 결과입니다.

조금은 복잡한 이야기를 길게 했습니다. 자본주의는 그 무엇이든 가장 값싸게 조달하기 위해 착취와 수탈을 서슴지 않고, 그 무엇이든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 이윤을 추구하고 무한 성장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체제입니다. 확장된 자본주의 분석은 생산영역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사회적 영역을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조직해 수탈하는 자본의 파노라마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의 포괄적 성격과 함께 다양한 영역들의 저항과 투쟁을 체제에 저항하는 반자본주의 투쟁, 체제전환운동의 현장으로 조직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중첩된 삶의 위기에 저항하는 흐름들이 ‘체제전환’이라는 구호로 연결되고 모여온 지구 곳곳의 투쟁의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또한 이러한 저항과 투쟁의 흐름은 성별/성적지향, 인종/민족, 인간/비인간 자연의 분할선을

따라 작동하는 지배와 억압에 맞서온 운동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페미니즘, 반제국주의/반인종주의, 생태주의는 이러한 운동에 붙은 이름들입니다.

이는 앞으로 3일 동안 열리는 체제전환운동포럼에서 우리가 함께 토론하고 고민할 과제의 큰 그림이기도 합니다. 각각의 개별 부문과 의제들은 이 체제의 어떤 적대와 모순들이 드러나는 현장인지, 자본주의 체제를 변혁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거나 전제된 채 구상되는 투쟁이 갖는 한계와 곤경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하고, 자본주의 체제전환의 전망이 열어내는 새로운 투쟁의 가능성을 함께 찾아봅시다.

체제전환의 전망이 열어내는 투쟁의 가능성들

이제부터 체제전환운동포럼의 각 세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될 첫 번째 가로지르길 세션 ‘주거권과 가족구성권, 하나의 지도만들기’입니다. 돌봄과 친밀함의 공동체인 가족을 구성할 권리는 가족이 함께 머물 장소인 주거로부터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집>은 불평등을 확대하는 경로이자 ‘정상성’과 ‘취약성’으로 출세우기를 강요하며 다양한 가족을 거부합니다. 주거권이 한국 자본주의의 강력한 토대인 ‘부동산 체제’에 결박당하고, 정상가족을 통한 노동력 공급과 재생산의 도구로 주택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보편적 권리로서 주거권과 가족구성권의 실현을 위한 체제전환정치의 가능성과 전망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가로지르길 세션은 ‘불평등을 가르치는 학교에 저항하는 연대를 위하여’입니다. 지난 여름 잇따른 교사 사망사건은 입시경쟁교육체계, 능력주의, 각자도생, 차별의 구조화, 배제와 혐오의 문제가 켜켜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견고해진 학교의 불평등은 교육 주체 간 연대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사람을 출세우고 구획하며 차별을 내면화, 정당화하는 제도이자 물리적 시공간으로서 학교와 교육에서의 저항 그리고 교사, 학부모, 학생을 넘어서는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가로지르길 세션은 ‘자본에 포획된 농업으로부터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농업, 농민, 농촌은 자본에 철저히 식민화되어 수탈당하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도시-농촌’ 관계 속에서 ‘북반구-남반구’ 스케일로 작동하는 착취와 수탈 구조의 문제입니다. 자본에 맞선 생태적 사회로의 전환에서 농업은 체제전환운동이 반드시 발디터야 할 현장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농(農)’은 삶의 구체적인 연결고리를 상실한 채 식량산업으로만 앙상하게 남아있습니다. 체제전환의 전망에서 ‘농(農)’의 가능성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가로지르길 세션은 ‘지금 여기, 체제전환 페미니즘’입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윤석열 정권의 선언은 ‘젠더갈등’을 더욱 부추기면서 차별과 억압의 구조를 삭제하려는 동원정치의 전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페미니즘이 지난 20여 년간 이어진 신자유주의 시기 ‘가족-여성노동력 육성책’에 효과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면서 강화된 생산-재생산, 남성-여성의 분할구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반자본주의·반체제운동으로서 ‘체제전환 페미니즘’의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다섯 번째 가로지르길 세션은 ‘기후위기 시대, 공공재생에너지로 체제전환운동’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 전환’은 체제전환의 방향과 경로를 가늠하는 가장 핵심적인 쟁투의 영역입니다. 기후정의운동은 그 구체적인 전환의 경로로서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을 제기합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영역’에서 체제전환운동의 구체적 모습을 등장시키고 전환의 계기들을 조직하고자 합니다. 2025년부터 본격화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약탈적 전환이 아닌 체제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공공재생에너지 대중투쟁의 전략을 모색합니다.

여섯 번째 가로지르길 세션은 ‘체제전환을 향한 노동/운동의 도전’입니다. 가장 주요한 대중운동이자 물질 토대를 지닌 노동운동이 체제의 일부가 아니라, 체제전환운동의 중요한 흐름이 되기 위한 가능성과 전망을 모색합니다.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이라는 구분을 넘는 체제전환운동의 시야로 현장과 대중을 조직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동/행동의 단초들을 그려봅니다. 자본주의 생산체제에 균열을 내는 대중운동의 조직 가능성 역시 이러한 단초들 속에서 열릴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가로지르길 세션은 ‘도래하는 전쟁위기에 맞서 사회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에서 전쟁과 학살이 자행되고, 미중갈등과 함께 북핵 고도화가 진행되면서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질서의 변동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가 초래하고 있는 구조적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극우보수진영은 한미일 안보동맹에 사활을 걸며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평화통일운동 진영은 과거의 남북경협과 비핵화 프레임을 반복할 뿐입니다. 체제전환운동이 제기하는 동아시아 반전평화운동의 계기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3일 간 이어진 포럼의 이야기들을 엮어내는 자리입니다. 종합세션 ‘자본주의를 질문하기, 체제전환을 모의하기’입니다. 누구나 위기를 이야기하는 현재, ‘체제의 위기’라는 직관을 넘어 자본주의가 주조해 온 한국 사회의 구조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도모합니다. 이에 대응해왔던 한국 사회운동의 곤경으로부터 체제전환운동의 필요성, 전망과 과제를 함께 토론하고 모의합니다. 체제전환운동 공동의 역사, 연합의 구조를 만들어가자는 구체적 제안이 함께 이야

기됩니다.

다양한 영역과 현장에서 해방의 꿈을 잃지 않고 운동을 일궈온 여러 활동가들이 정말 몸과 마음을 모아 열심히 준비한 자리입니다. 포럼 자료집 두께에 놀라지 마시고, 앞으로 체제전환운동을 펼쳐나갈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자, 가득 충전된 배터리라고 생각해주십시오. 이제 첫 발을 떼려는 체제전환운동입니다. 전망, 가능성, 도모, 모색이라는 단어들 반복됩니다. 앞으로 이어질 우리의 분투로 전환, 현실, 쟁취, 변화라는 단어들 등장하는 운동을 함께 열어갑시다.

정치가 사라진 시대, 위기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대자본과 고소득층에 대한 대규모 감세,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해체하는 대규모 긴축, 부자들의 계급투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꾸는 체제전환, 우리가 시작합시다.

이때다, 체제전환!

견고한 세계를 깨뜨리기 위해

혜진 |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름

prifairy@naver.com

이 땅의 자원을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견고한 이데올로기 아래에,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도 누군가에겐 주어지지 않는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하여 생존해야 하는 사회이기에,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들은 타인의 노동력을 통해 이윤을 얻고, 노동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을 통해 발생한 이윤을 착취당한다. 성별이분법적 이성애중심 규범 아래 ‘남성’을 ‘정상’으로, ‘여성’을 ‘타자’로 주변화하고 있는 사회는, 모든 영역에서 여성을 남성의 부차적인 위치로 배치하며, 여성을 성적인 존재로 환원하고 대상화한다.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논리에 의해 조직된 세계에서, 이들이 착취하고 배제하는 가지지 못한 사람들, 권력관계의 약자의 위치에 놓인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의 논리에 맞게 살아갈 것을 강요당한다. 대학 진학을 위해 노력할 것, ‘좋은’ 취업을 위해 노력할 것, 이성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할 것을 강요당한다. 누군가는 탈락할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경쟁체제에서 승리하지 못한 사람들, 사회가 요구하는 ‘정상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배제되고 있다.

성매매 현장과 체제전환의 필요성

현장활동을 하고 있는 성매매 영역은 이러한 정치경제적 권력관계에 의한 계급모순과 젠더-섹슈얼리티 권력관계에 의한 모순이 접합하는 지점이다. 여성을 성적으로 종속시키고 지배하는 것이 남성들의 ‘유혹’이 되는 남성문화가 성매매를 가능하게하고, 이것이 큰돈이 되기에 많은 자본이 흘러든다. 한국사회에서 성매매산업은 업주, 관리자, 건물주 등 개별자들의 경제행위로만은 생각할 수만은 없게끔 큰 규모의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대부업, 성형산업 등 곳곳의 산업들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며, 이들은 거대한 수익을 착복한다. 많은 여성들은 저마다의 상황과 조건 속에서, 각자의 합리적인 요인으로, 각자의 경제적인 이유로 성산업에 종사한다. 자원이 없을수록, 눈앞에 놓인 선택지가 적을수록, 성매매는 매력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지가 된다.

성매매산업의 자본들이 착복하고 있는 막대한 수익은 여성의 성적 지배와 종속을 통해 발생한 수익, 즉 여성의 성을 활용해 발생한 이윤이다. 이들은 이윤을 창출할 여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원이 없는, 선택지가 적은, 자본이 원하는 임금노동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끊임없는 경쟁체제에서 지치고 주변화된 여성들을 불러 모은다. 성매매 산업은 이렇게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맞물려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에 대한 개입을 위해서는, 여성의 성적 종속과 지배가 남성의 욕망이 되지 않는 사회, 모두에게 성매매하지 않고도 충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원이 주어지는 사회가 필요하다.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논리에 의해 조직된 세계에 대한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착취당하고 배제되는 우리들을 위한 체제전환

체제전환운동에 갖는 기대는 여기에 있다. 성매매 현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진 사람들의 논리로 조직된 지금의 세계에 대한 전환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각기 다른 의제로 보일지라도 각 현장에서 겪는 문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각 사안에 대한 대응 통해 부당하고 폭력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이 세계에 대한 전환을 필요로, 목표로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성적 조건에 의해 특정 성들이 주변화되고 대상화되는 사회, 여성의 성적 종속과 지배가 남성의 유흥이 되는 사회의 견고함을 목도하며 젠더-섹슈얼리티 권력관계에 대한 해소는 요원해보이고, 이 땅의 자원이 개인의 자산이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 모든 노동이 자본을 위한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는 사회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의 견고함을 목도하며 정치경제적 권력관계에 대한 해소는 요원해보이기도 한다. 지금 사회의 논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기에 다른 세계를 상상하는 것은 어렵고,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타격과 저항은 어떻게 가능할까 막막하고 무력해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지금의 세계에서 주변화되고, 배제되고, 생존을 보장받지 못하는 수많은 존재들을 생각한다면 다른 세계는 필수적이다. 어렵고 막막하고 무력해지기도 하는 다른 세계의 가능성은 지금의 세계에서 착취당하고 배제되고 있는 존재들에게 있을 것이다. 혼자서는, 개별 단위로는 어려운만큼 같이 고민할 때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함께 다른 세계에 대해 고민하고 조직해나가고 싶다.

지역과 현장에서 서로의 연결됨을 상상하는 날

포럼을 통해 서로를 만나고 엮을 힘 기르기

김찬 | 체제전환정치대회 부산모임

defdict@gmail.com

운동과 운동이 연결되는 포럼인 만큼, 내가 함께하는 운동이 다른 운동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청소년운동은 어리고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다양한 경험과 권리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청소년으로부터 빼앗는 사회를 바꾸기 위해 활동한다. 책임질 수 없는 무능력자라는 이유로 정치, 성적 실천, 학교, 가족 등에서 경험과 권리를 제한하는 사회를 거부한다. 그중 단언컨대 학교는 체제전환운동의 전체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부분 중 하나이다. 학교는 자본이 요구하는 ‘높은 학벌’과 ‘다양한 스펙’을 갖춘 사람을 길러내기 위한 입시제도를 운영한다. 입시 반영 교과목 중심의 학습만 중요시되며, 그 밖의 경험들은 하면 안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폭력적인 학교 질서에 순응하게 만들기 위해 학생의 몸과 생활을 통제하고,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은 탈락자로 구분하는 곳이 바로 학교다. 답안지에 오답을 쓰는 실수, ‘어른’들만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일들을 감히 하게 되면 어떠한 차별도 당연한 것이 된다.

그러다보니 청소년운동을 하는 나는 미성숙해도 경험과 기회를 제한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입시경쟁을 폐지해야 하고, 입시경쟁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본주의 사회를 바꾸기 위한 다른 운동과의 “연대”도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실제로 투쟁하는 현장과 함께해야 하는 순간이 올 때마다, 동료들과 주체로서 함께하지는 못했다. 왜 그랬을까? 함께 세상을 바꾸고 있고, 불평등과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는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관”되어 있다는 말은 동료들에게 운동의 경계를 뛰어넘어 참여해야 한다는 당위를 설득할 수 없었던 게 아닐까? 운동이 교차하고,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일은 세상을 바꾸는 일의 전제조건일 수는 있어도, 우리의 끝은 아니지 않을까? “연관”됨을 넘어 “연결”됨을 확인하고, 서로의 운동이 공유하는 이해관계에 주목해야 한다. 저들의 운동이 잘 되어야 우리 운동도 잘 된다는 공동의

이해관계, 저들이 겪고 있는 억압이 우리들이 겪고 있는 억압을 상호 강화시키며 유지시킨다는 사실을 운동에 함께하는 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경계를 뛰어넘는 연결, 체제전환운동의 세력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운동과 노동의 접촉을 상상하게 된다. 청소년운동이 지향하는 누구나 미성숙하고 취약해도 안전하게 실패하며 자신의 속도와 조건에 맞는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사회는 노동자를 억압하는 구조와 연결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상호 강화하는 조건에 있기 때문이다. 남성과 비남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주민과 정주민 등으로 서로를 파편화시키는 것처럼 미성숙함(무능력함)과 성숙함(능력)으로 노동자들을 파편화시키는 전략을 자본은 택하고 있다. 자본은 이윤 창출에 방해가 되는 무능력하며 미성숙한 노동자가 실수를 하면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상품인 것마냥 해고한다. 그렇기에 청소년운동이 없애고자 하는 실수와 미성숙을 용납하지 사회는 자본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윤 축적 수단이다.

이러한 연결과 엮음, 이해관계의 통합 속에서 체제전환은 구체화될 수 있다. 마치 학교에서 급식을 먹기 위해서는 농업노동자, 물류노동자, 조리노동자의 노동이 필요한 것을 발견하고, 급식을 먹기까지의 경로를 추적하는 것처럼 한 운동이 겪고 있는 억압이 어떤 경로에서 어떤 억압과 만나며 강화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서로는 서로와 연결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확인하고, 함께 공동의 이해관계 위에서 새로운 사회의 전망을 세워내는 것이 체제전환의 전략일 것이다. 지금 당장 체제전환의 구체성이 보이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운동들을 연결하고 엮어가는 과정 속에서 구체성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포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 서로가 서로를 가로지르면서 연결됨을 확인하는 자리, 곳곳의 활동가들이 모여 함께 접촉되는 자리라는 점이 너무나도 매력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함께 나섰으면 하는 고민이 있다. 운동과 운동을 엮어가는 것처럼, 지역과 지역을 현장과 현장을 엮는 시도도 지속되어야 한다. 체제전환정치대회 부산모임은 지역과 현장에 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아쉽게도 비수도권 참여자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체제전환운동이 서울의 상층 활동가 중심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많은 지역에서 지역체제전환운동이 조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서울은 지역이지 않은가? 서울의 자치구 단위로도, 그리고 비수도권 곳곳으로도 운동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자. 더 나아가 우리가 만들어낸 새로운 전망과 언어들이 활동가들만의 것이 되지 않도록 현장과 만나야 한다. 교차성을 바탕으로한 새로운 전망들을 우리가 만나는 민중들이 공감하고, 자신의 삶에 외닿을 수 있는 언어로 풀어내야 한다. 부산모임의 이런 고민들을 다들 해주시리라 믿으면서, 또 우리가 연결된 힘을 바탕으로 체제를 전환시켜낼 수 있다는 두근거림을 바탕으로 포럼에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다.

coupangism = 쿠팡식 한국 자본주의, 체제전환의 정치로 읽어보자

정성용 |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지회장

coukeyrun@gmail.com

이럴 줄 알았으면 발언을 미리 준비할 걸 그랬습니다. 다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시나요? 노동조합 집회나 무슨 결의대회나 갈 때, 평소와 다르게 너무 가벼운 거죠. 깃발도 챙겼고 조끼도 챙겼는데. 알고 보니깐 본인이 발언인데 까먹은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지하철로 이동 중이고, 아직 도착하려면 30분 남은 거죠. 열심히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모장에 발언문을 적습니다. 그렇게 부족하지만 무사히 발언을 마치는 경우. 다들 그런 경우 있으시죠? 저만 그랬던 거 아니죠?

이번 체제전환 정치대회도 그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몇 시간 앞두고, 또는 미리 준비하면 전날 정도에 발언문 작성하면 된다고. 그런 줄 알았는데 카드뉴스에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부터 뭔가 심상치 않았습디다. 기조 발언 해주신 동지에게 '원고 작성 요령'이란 걸 받았어요. 진짜 뭔가 잘못된 거 같았습디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홍명교 동지께서 대강당 500명짜리 안 빌리고 400명짜리 빌려서 아쉽다, 우리에게 자신감이 부족했던 것 같다. 이런 글을 적어주셨습디다. 쿠팡 후원주점 홍보해야 하니깐 하는데 발언 제안을 냉큰 수락했던 제 자신을 너무나도 후회했습디다. 너무나도 뒤늦게 '체제 전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디다. 동지들 반갑습디다. 체제 전환에 대해서 뒤늦게 생각하기 시작한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지회장 정성용입니다. 쿠팡물류센터 노동자입니다. 지금 400석에 500명 앉아계신거 맞죠? 한 번만 여쭙볼게요. 제게 죄송해하지 않고 솔직하게 부탁드립니다. 나 쿠팡 와우 회원이다. 나 휴대폰에 쿠팡 앱 깔려있다. 나 쿠팡에서 로켓배송/새벽배송 주문한 적 있다. 난 택배가 하루만에 도착하지 않으면 답답하다. 모 프로그램 속담 맞추기에서 '같은 값이면 ㅇㅇㅇㅇ'이라는 질문에 가수 이영지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시는 분? "같은 값이면 배송 빠른 거"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워졌습디다. 하루 만에 배송되지 않는 거에 답답함과 불편함을 느낍니다.

'체제'라는 것은 그렇게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부턴가 당연하게 느끼는 것. 그 체제와 다르면 불편하고 거부감이 느껴지는 것. 그 '체제'조차도 인간과 사회가 만들어낸 것이고, 옛 체제와는 다른 무엇임에도 말입니다.

쿠팡주의, coupangism. 들어보셨나요? 당연히 안 들어보셨겠죠. 제가 지금 침 뱉어본 말입니다. 쿠팡 의장 김범석이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나' 전 국민이 생각하게 만들 겁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지만, 분명 쿠팡주의, 아마 쿠팡식 자본주의라고 해야겠지요. 쿠팡식 자본주의는 쿠팡이 만들어냈을까요? 잘 아시는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아닙니다. 미국 아마존이 만들었습니다. 쿠팡이 이를 잘 베껴서 한국에 적용했을 뿐이죠. 땅덩이 큰 미국이기에 아마존은 실현하지 못했지만, 국토가 좁고, 교통이 편리하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배송, 새벽 배송까지도 실현한 쿠팡입니다.

쿠팡식 자본주의, 조금 과장일까요? 포드 정도는 되어야, '주의'를 붙일 수 있으려나요. 적어도 전 세계적으로는 아마존 자본주의라 부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린 한국이니깐 쿠팡식 한국 자본주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쿠팡이 이전의 다른 생활 물류 기업들과 다른 점은 1) 매장이 없다 2) 로켓배송/새벽배송을 한다는 점일 겁니다. 이걸 밀고 나가면서 코로나 때 대박을 쳤습니다. 매년 매출이 2배씩 늘었습니다. 코로나 2년~3년 동안에요.

매장이 없으면서 로켓배송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물류센터입니다. 거대한 물류센터입니다. 축구장 몇 배라는 얘기를 해도 감이 안 오는 크기의 물류센터 말입니다. 이런 물류센터가 전국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인구의 절반 가까이 사는 수도권에 그리고 주된 도심지 주변에. 그래서 쿠팡의 거대한 물류센터는 전국에 50여 개가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 거대한 물류센터에서 '야간노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만에 배송이 말이 쉽죠. 진짜 시간 쪼개야 합니다. 다들 택배 언제 오나 기다렸던 시절 있으시죠. ~허브 터미널 지나고 있다. 주로 군포 대전 곤지암 이런 지명 많이 보셨죠. 왜 인천에서 출발한 물건이 굳이 대전까지 찍고 인천으로 돌아와야 하나 싶으셨을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루 내에, 하루보다 더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모든 과정이 아주 빠르게, 체계적으로 빈틈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낮 시간뿐만 아니라 밤 시간도 아깝고, 그러니 노동자들 휴게시간도 아깝고 밥 먹는 시간도 아깝고,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깝고, 휴대폰 보는 시간도 아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해고되기 전까지 주간 노동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분회 사무장님, 7년째 쿠팡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언제나 야간 노동자였습니다. 주 5일 오후 6시 출근하고 새벽 4시에 퇴근합니다. 연장하면 새벽 5시 넘어서도 퇴근하기도 하고요. 노동운동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야간노동은 발암 물질이라고, 철폐해야 한다고 외쳐왔습니다. 금속사업장들에서는 주간연속2교대제라는 방식도 도

입시켰죠. 쿠팡은 철폐하라고 외치는 것마다 적극 도입하는 회사입니다.

다음으로 쿠팡이 무엇을 도입했을까요? 우리 평소에 철폐하라고 외치는 거 뭐 있었죠? 제게 이런 어마어마한 자리라는 걸 알려주시지 않고 발언 요청하신 임용현 동지께서 속해있는 단체 이름 아시는 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바로 불안정노동입니다. 전국의 50여개 물류센터에 3만~4만 명의 노동자들이 고용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절반이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1.5만~2만 명이 일용직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말 그대로 하루 일하는 노동자들입니다. 매일 근로계약서를 새로 씁니다. 그것도 아주 로켓배송처럼 체계적으로 빨리 빨리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의 노동자들도 1년차 1년 계약직, 2년차 1년 계약직, 무기계약직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정규직은 관리자에 한정됩니다. 50%가 일용직, 90%가 비정규직인 것입니다. 현재 쿠팡물류센터 지회 조합원 수는 세 자리 정도입니다. 자세한 수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쿠팡 퇴사로 인해 탈퇴한 조합원 수는 그 두 배입니다. 이분들만 계속 조합원으로 남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쿠팡을 퇴사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노조를 탈퇴하신 겁니다. 쿠팡이 꽤 많은 비용을 들여 비효율적인 '불안정노동체제'를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 같이 1.5만~2만 명을 고용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쿠팡 때문에라도 철폐를 외치지 말아야 하나 고민입니다.

쿠팡이 이렇게 하는 이유 특별하지 않습니다. 저임금을 부릴 수 있고, 고용을 미끼로 현장 통제할 수 있고, 노동조합은 꿈도 못 꾸게 하고, 만약 노동조합 만들더라도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일용직은 출근 확정 안 주고, 계약직은 재계약, 무기전환 거부해서 해고하면 되고. 그렇게 노조 없는 자본 천국을 만드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쿠팡물류센터 현장이 열악한 것은 너무 당연한 상황일 겁니다. 식사시간 외에는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휴게시간 있는 현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식사시간 1시간을 쪼갠 것입니다. 40분 식사, 20분 휴게시간과 같은 방식으로요. 그 휴게시간 없음은 평소에 그나마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겨울일 때, 바깥 기온과 비슷한 영하의 기온에서 일해야 합니다. 그래도 겨울은 끼입을 수 있어서 괜찮다고 합니다. 더이상 벗을 것이 없는 여름이 문제입니다. 바깥 기온보다 더 높ی 올라갑니다. 냉난방장치(에어컨)은 당연히 없고, 환기 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환기가 안 되니 습도가 조절이 안 되고, 찜통 더위 속에서 노동자들은 휴게시간 없이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제일 인기 있을 때, 바로 여름입니다. 노동조합이 제일 잘 한 일,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현장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름철 회사가 얼음물 제공하게 만든 것. 올해도 여름이 올겁니다.

현장 얘기하니깐 말이 길어집니다. 쿠팡에 없는 거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뭘까요? 휴게시간, 냉난방장치 외에, '인권' 맞습니다. 그 '인권'을 없애기 위해 없앤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휴대폰입니다. 관리자 외에, 아주 특별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 외에는 모든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는 현장

에 휴대폰을 들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현장 출입할 때 보안검색대를 지나가야 하고, 그때 휴대폰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합니다. 공항 검색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가지가지 하죠? 이로 인해 휴대폰에는 인권이 없고, 마찬가지로 철폐되어야 할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성희롱/성폭력, 앞과 연관된 부당노동행위가 판을 칩니다. 하지만 휴대폰이 없기에 녹음도 안 되고, 사진 또는 영상 증거도 없습니다. 경찰이나 재판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녹음, 사진, 영상, 증인 없으면 진짜 그냥 없던 일입니다. 심지어 쿠팡은 넓고 노동자들이 드문드문 떨어져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인 구하기가 어려운 거죠. 휴대폰이 없으니 화재가 나도 바로 신고할 수 없고, 그렇게 쿠팡 덕평센터가 전소됐고, 소방관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일하다 쓰러졌는데 119 바로 부를 수 없으니 휴대폰 갖고 있는 관리자부터 찾아야 하고. 제가 골든 타임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쿠팡에게 로켓 배송을 위한 골든 타임은 있어도, 노동자 건강과 안전을 위한 골든 타임 따윈 없습니다.

불법 아니냐고요? 안타깝게도 위에서 언급한 쿠팡에 없는 것들이 모두 불법이 아닙니다. 휴대폰 반입을 금지하는 것도 불법이 아니고, 유급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고, 여름에는 찜통, 겨울에는 얼음장이 되는 현장에 냉난방장치와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7년 내내 야간노동을 시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켓배송 때문에 말 그대로 1년 365일 내내 가동되는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 4만 명 중 90%를 비정규직으로 채용, 절반을 일용직을 쓰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5년 동안, 3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역시! 불법이 아닙니다.

그니깐 진지하게 쿠팡법을 만들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위 내용을 모두 금지하는 법 말이죠. 법 만들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나라에서 소용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현장이기에, 쿠팡이 이런 기업이기에 지금까지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쿠팡 대구물류센터에서 과로사로 3년 전에 돌아가신 27세 고 장덕준님을 포함해서요.

작년 8월 14일, 쿠팡물류센터지회는 폭염 대책을 요구하는 8월 1일 하루 파업에 이어서 하루 불매를 조합원들과, 현장 노동자들과,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나요? (호소력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작년 8월 14일은 택배 없는 날이었습니다. 택배노동자들 하루라도 쉬 수 있게 해달라고 택배노동자들이 택배 자본과 정부를 압박하여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2년 연속 쿠팡은 택배 없는 날을 불참합니다. 쿠팡과 같은 거대한 물류 회사가 동참하지 않으니 다른 택배사들도 난리였답니다. ‘그럼 우리도 안 하겠다.’ 택배 없는 날 피해서 국민들이 다 쿠팡에 주문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노동운동의 성과가 쿠팡 하나로 인해 무위로 돌아가려는 상황입니다.

쿠팡이 그 정도냐? 주식 상장 당시 시가 총액 한국 2위였고, 고용순위도 현대차 삼성전자 다음을 기록한 회사라고 말씀 드리면 납득이 되실까요? 돈이 있으니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을 삽니다. 그렇게 쿠팡-김앤장-청와대 카르텔을 형성합니다. 쿠팡 대표 강한승,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 정종철 모두 김앤장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 쿠팡 출신들이 또 윤석열 정부 하에서

청와대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점점 더 건드릴 수 없는 권력이 되어갑니다. 국적도 피해가고, 법도 피해갑니다. 한국 출신 미국인 김범석, 영업은 한국에서 하는데 투자는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통해서 받습니다. 주식 상장은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합니다. 국적 불분명으로 재벌 총수 지정을 짝싸게 피해갑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드니깐 김범석은 쿠팡 한국 대표를 내려놓고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쿠팡 덕평센터 화재 직후였습니다.

노동조합 너무 힘들 것 같죠. 네 많이 힘듭니다. 삼성과 아마존에서 못된 것만 배워서 쿠팡식 한국 자본주의를 개척하고 있는 쿠팡입니다. 실제로 삼성에서 나쁜 짓 많이 한 인간들도 쿠팡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돈 많이 주면 어디든 가는 사람들이니깐요. 쿠팡식 한국 자본주의 체제라는 말이 조금은 설득력이 있었을까요?

참으로 다행인 것은 선배들의 앞선 투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삼성 무노조경영도 이겨내고 노동조합도 세워봤고, 이재용도 박근혜-이명박도 감옥에 보내본 우리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그것만 믿고 버티고, 투쟁하고, 조합원 확대를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취업할 수 있는 수많은 일용직 일자리 때문에, 쿠팡 물류센터에는 정말 남녀노소, 다양한 사정과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모두 모입니다. 방학 시즌 때 많이 보이는 대학생, 청년뿐만 아니라 아니라 코로나 때 특히 많았던 사업이 어려워진 분들, 경력단절을 겪으신 중년 여성분들 등. 저랑 같이 일했던 분 중에는 성악가 분도 계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 모두 취소되었기 때문이죠. 제게 차를 판매했던 딜러 분도 쿠팡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로 반도체 공급 차질 때문에 차 생산이 둔화됐기 때문이죠.

이런 처지의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뭉쳤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 때부터 공공운수노조와 쿠팡대책위원회에서 정말 많은 연대와 힘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분 나쁘게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체제 자체를 개척하는 쿠팡에 맞서는 우리의 연대는, 저항은, 아직 부족합니다. 쿠팡에 역부족입니다. 우리가 감히 체제 전환을 외치고자 한다면, 쿠팡 자본의 힘에 대항할 수 있는 무엇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노동조합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노조로도, 쿠팡대책위로도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건 아마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를 포함한 불안정노동을 조직하는 전략, 그리고 체제 전환을 위한 정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장은 자본의 힘에 비해 미약해 보일 수 있지만, 이재용-박근혜를 감옥에 보낸 우리들이 쿠팡이라고 못해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로 시작하는 체제 전환을 위한 정치대회가, 쿠팡식 한국 자본주의를 철폐시키는 길의 한줄기 희망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주거권과 가족구성권, 하나의 지도만들기

한국 사회에서 <집>은 불평등을 확대하는 경로이자
가난을 더욱 가혹한 것으로 경험하게끔 만드는 장소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주택을 공급해온 역사,
주택 소유 기회를 줄세우는 방식, 주택의 금융화,
임차인에게 전가된 주거위기가 구조적으로 연결된 결과이다.
또한 청약제도부터 임대주택 가점에 이르기까지
'정상성'과 '취약성'이라는 두 개의 관문에 줄서기를 반복하게끔 하는
주택 공급방식은 그 자체로 다양한 가족을 거부한다.
한국 자본주의의 강력한 토대인 '부동산 체제'를 넘어서 주
거권을 재구축하는 것은 체제전환의 필수적인 경로이다.



오프닝+가로지르길1
문자통역 QR코드

세션 진행

사회 : 이종건 (옥바라지선교센터)

발제1. 한국 사회 '집'의 역사와 주거권 운동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발제2. 가족은 어떻게 '집'에 포섭되거나 배제되는가?

- 타리 (가족구성권연구소)

토론1. 이동현 (홈리스행동)

토론2.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준비팀

가족구성권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한국 사회 '집'의 역사와 주거권 운동

이원호 | 빈곤사회연대

wonho95@gmail.com

1. 들어가며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작년 6월, 반포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 광고가 온라인을 달궜다. 불평등을 노골적인 카피로 사용했다는 비판과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자조가 온라인상에서 이어졌다. 주택의 금융화가 확대된 2000년대 이후 주택의 상품화, 자산화 현상이 강화되면서 ‘당신의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준다(2001년 롯데캐슬)’는 식의 집(아파트)을 통한 계급적 분리를 강조한 광고들은 그동안에도 여럿 있었다.

주택의 상품화·금융화·자산화 현상과 이로 인한 주거지의 계급적 분리 현상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계 자본주의체제의 금융화를 주도하고 있는 주택의 금융화 체제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지구적 현상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국 사회 집의 역사를 통해 형성된 특수성이 결합하여, 한국의 주거 불평등을 구조화했다.

2018년, 한국을 공식 방문해 주거권 실태를 조사한 라일라니 파르하(Leilani Farha)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은 “한국 시민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거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인식조차 없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소회를 말했다. 지구적 금융자본주의 하의 주택의 상품화라는 보편적 현상만으로는 집 문제를 대하는 한국사회의 인식이 충분히 해석되지 않는 것이다. 도시 노동자 민중들의 삶에 위협이 될 수 있는 3대 요소로 이야기되는 교육, 의료, 주거 문제와 관련해 한국사회의 권리 투쟁·공공성 강화 투쟁의 역사를 기억해 봐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의 공공성이나 의료의 공공성을 위한 대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요구와 투쟁의 역사적 기억들이 머릿속에 떠올려 봄직한 장면이 있는 것에 비해, 주거권을 위한 사회적 투쟁은 어떤 기억들이 있나? 2010년 이후 다

양한 영역에서 주거권 이슈들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기억에 주거권에 대한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요구와 투쟁은 ‘주거권을 보장하라!’라고 외치는 집을 빼앗긴 철거민들의 투쟁을 넘어선 기억을 떠올리기 어렵다. 보편적이고 사회적 권리로써 집단적으로 주거권을 요구하는 투쟁의 장면은 잘 떠오르지 않는다.* 집값이 오르내릴 때마다 소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노들이 제기되었고 심지어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까지 위협하기도 했지만, 이에 대한 사회운동은 산발적이고 또한 전문적인 정책 개선 요구를 넘지 못했고 집단적인 사회적 권리로 요구하는 투쟁은 형성되지 못했다.

모두가 고민하는 집에 대한 문제는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요구가 아닌 개인이 각자의 임금소득으로 또는 대출상품이나 가족주의에 기댄 개별적 방식으로 해결하려 해 왔다. ‘정상성’과 ‘취약성’이라는 두 개의 관문에 줄서기를 반복하게끔 하는 주택정책은 사회연대적이고 집단적 권리를 상상하기보다는 의자뺨기의 불행경쟁으로 내몰았고, 사적 생존수단으로서의 집을 열망하게 했다. ‘우리 사회에서 주택의 탈 상품화를 위한 사회연대적 대안보다 오히려 상품화된 주택의 소유를 통한 개별적 문제 해결방식이 더 중시’되었고,⁰¹ 자가소유로 집중되는 대중의 열망만큼 더욱 노골적으로 상품화된 주택은 소유는커녕 안정적으로 점유할 수조차 없는 재화가 되어, 주거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특히 주택금융화를 통한 자가소유 촉진 정책은 점점 더 가족주의(혹은 개인주의)와 자산기반 복지 체제를 강화하고, 주택에 대한 금융부담으로 인해 공공복지나 사회공공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크다.

체제전환을 위한 주거권운동은 주택의 금융화·자산화·상품화라는 자본주의 주택체제의 보편성과 발전주의, 가족주의라는 한국의 특수성이 결합한 한국의 주택체제의 불평등한 구조를 밝히고, 도시 민중들의 계급적 단결을 가로막는 데에 각자도생의 집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돌아보는 데서 재구축되어야 한다.

주거권의 재구축은 체제 내 실현 가능성을 중심에 둔 정책과제나 —소위 민주당의 가장 왼쪽에 해당하는 정치세력이 받을만한— 개혁과제를 제시하는 정책 운동을 넘어서야 하지만,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체제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자본주의가 문제다’, ‘사회주의가 답이다’는 식의 선언에 멈춰버리는 것도 경계하여야 한다. 지금의 체제 내부에 개입하면서 당면한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것이나 이를 확장하고 이탈하려는 요구들은, 때로는 미시적으로 개입하고 때로는 급진적으로 요구하며 행동해야 한다.

체제전환을 위한 주거권운동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 발전주의 국가체제 아래에서 개발을 통해

* 여기에는 한국사회운동의 핵심적인 대중 주체인 민주노총의 공공성 투쟁에 대한 접근의 한계도 있다고 생각된다. 교육이나 의료는 관련 사업장과 노조가 있어 해당 주체 단위를 중심으로 교육·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투쟁을 대 사회적인 운동으로 전개해왔다면, 주거는 그렇지 못했다. 관련한 주체가 없다는 이유로, 민주노총의 사회연대나 공공성 요구와 투쟁에서 주거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주택을 공급해온 역사에서 가족주의, 집 갖기의 열망과 경쟁, 주택의 금융화 등이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세입자의 주거불안과 위기를 심화시켜 왔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주택의 사회화 관점에서 기존 주거권운동의 요구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2. 한국사회 집의 역사

살(buy) 수 있는 집, 살(live) 수 있는 집

주택문제에 접근하는 정부 정책의 방향은 단일할 수 없겠지만, 크게 두 개의 길이 있다. 하나의 길은 주택공급을 늘려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살(buy) 수 있게 해 집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살(live) 수 있게 하는 길이다.

한국은 철저히 전자(buy)의 길을 따라 공급중심의 주택정책을 통해 자가소유를 정점으로 줄 세우는 정책들을 배치했다. 단기간에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발전주의 국가 주도로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도 직접적인 국가 재원 투입 없이 민간자원을 동원하는 주택공급 체제를 구축했다. 합동재개발, 선분양제, 청약제도, 주택기금, 주택금융 등이 그 핵심을 이룬다. 여기에 더해 아파트단지는 규격화된 삶의 표준화를 상징하는 ‘국민주택-도시중산층가족(정상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가 결합되었다. 특히 취약한 한국의 공공복지는 가족에게 부담을 떠넘겼고, 집은 가족의 중요한 복지 수단이었다. 생존수단으로서의 집 장만에 온 가족이 매달렸고, 가족중심의 주택 소유를 통한 자산증식 추구 행위는 정당화되고 강화되었다. 반면, 후자(live)의 길인 소유여부를 떠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인,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임차인 권리 강화는 미약했다.

공급중심의 정책(민간 개발의 건설공급정책)을 통해, 1990년 이후 지금까지 연간 45만~50만 호 이상 주택을 공급해오면서, 주택의 절대 부족 문제는 해소되었다. 모든 가구가 한 채씩 집을 갖고도 남는다는 통계가 발표된 지도 15년이 넘었다.** 개발을 통한 화려한 도시로의 변화는 우리의 삶의 풍요를 보여주는 발전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선전되었다. 개발로 쫓겨나는 이들의 문제는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부수적인 문제이거나 국가 전체를 위해 양보해야 할 개인적인 피해 또는 도시중산층가족으로의 진입에 실패한 존재로 치부했다. 도시의 발전과 주택공급,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등의 온갖 수식어를 붙이더라도, 지난 도시개발의 역사는 폭력의 역사였고, 세입자 주거불안의 역사였다. ‘선 성장 후 분배’라는 발전주의 국가의 근대화 정책 기조 아래 주택공급만능론도 경

** 기존 주택보급률은 2002년부터 전국 100%를 넘었고, 1인 가구를 포함해 보완한 신(新)주택보급률로는 2008년부터 100%를 넘었다.

제의 낙수효과론처럼 정당화했지만, 실패한 낙수효과론과 마찬가지로 그 이익의 배분은 철저히 건설자본과 소수에게 독점되었다. 사실상 주택정책이 아닌 토건과 자본주의 공간재편을 통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설정된 부동산 경제정책이었다. 부동산 경제정책하에서 개발이익을 독점하고 사유한 건설사와 금융사들이 금융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실을 드러내며 발생한 손실은 국가기구를 통해 손쉽게 사회화되어, 피해는 약한 고리인 세입자들에게 지워지고 있다.

아파트단지 개발, 투기와 전세의 확대

1960~70년대,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판자촌의 형성과 이에 대한 불량주거지 철거, 집단이주 정착지 조성 정책은 와우아파트 붕괴('70.04)와 광주 대단지 항쟁('71.08)으로 이어졌다.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한 영동지구(강남개발)와 주택건설 10개년계획('72.10), 주택건설촉진법 제정('72.12)은 주택 부족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만 볼 수 없는 정치적 정당성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10월 유신발표 직후 비상국무회의에서 250만호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 10개년 계획이 발표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수출산업 육성에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으로 주택에 대한 자금 투입은 억제했다. 반면 수출산업의 역군이라는 이름으로 도시로 밀리듯 유입된 이농인구의 증가로 주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이들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면서도 노동자들의 주택문제는 방치했다. 기존의 공식 주택시장에 진입할 경제적 기반이 없는 유입된 도시 노동자들은 스스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적 관계망 형성으로 대체하는 형태로 하천변 빈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천막과 판잣집 등을 짓고 생활하며 무허가 정착지를 형성했다. 이들은 공장 안에서 살인적인 노동착취를 당하는 노동자로, 공장 밖에서는 단속이라는 이름의 철거와 복구가 반복되는 일상의 도시 난민으로의 삶을 살았다.

70년대 들어서 산업화에 필요한 노동력을 감당할 주택의 절대부족 문제가 사회 갈등 요인화되는 것에 대한 대책과 유신독재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 수단으로 단기간에 대량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아파트단지 건설이 추진되었다. 강남개발과 주택건설 10개년계획을 국가 주도로 추진하면서도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로 민간부분을 동원하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72.12)했다. 또한 '주택건설촉진법' 제정으로 인해 '국민주택'의 개념을 법제화하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규격화된 국민주택이 재규정되면서, 아파트단지의 대량 공급이 체계가 뒷받침되었다. 국민주택은 '1가구 1주택' 자가소유의 '규격화된 삶의 표준화'라는 주거문화⁴²를 생성하고 규격화·표준화로 주택(아파트)의 대량생산시스템이 마련되었다.

이처럼 70년대 아파트 건설은 산업 노동력을 감당할 주택부족과 정치적 정당성 확보의 수단으

* `68년 영동1지구(신사, 논현, 역삼 일대), `71년 영동2지구(대치, 삼성, 청담, 압구정 일대), `74년 잠실지구 개발

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추진되었다. 한편, 동시에 도시화로 인해 청계천 등 도심 일대의 효용 가치가 높아지면서 무허가 정착지를 대대적으로 철거하고 외곽의 집단 이주정착지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추진 과정에서 곳곳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1971년 수만 명의 군중이 관공서 등 주요 거점을 장악하며 저항해 당시 폭동이라 불리던 광주대단지 사건은, 엄혹한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시기에도 도시개발의 극심한 폭력으로 밀려난 철거민들의 분노를 보여줬다.

70년대 산업화와 중동건설 붐으로 연평균 11%의 고도성장과 함께 아파트단지의 개발은 아파트값의 고도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시기 투기가 '대중화'되었고, '전세'도 확대되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아파트 공급 확대와 아파트값 고도 상승 속에서, 전세제도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집을 구매하는 사금융 제도로 활용되면 확대되었다. 금융화 이전까지 은행은 가계대출이 아닌 기업대출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에 아파트 분양이 곧 높은 시세차익으로 연결되면서 분양자금 동원이 가능한 중산층의 투기가 촉발되었다. 그 자금 동원 수단으로 집을 소유한 이들이 은행 대출이 아닌 사금융으로서의 전세금을 활용하면서, 전세가 확대된 것이다. 이후 전세제도를 통한 가족 간 원조도 일상화되었다. 한편 78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제정을 통해 청약저축 가입을 분양의 전제조건으로 도입하면서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개별가구로부터 동원하면서 가족주의를 통한 자가소유 열망을 강화했다. 또한 이 시기 주택투기로 인한 집값과 전세가 상승이 정권의 정당성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준으로 투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도 했다. 특히 권력과 시장 영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투기의 대중화 현상이 있었으나 '구조적 주택문제를 투기에 가담한 복부인'이라는 개인의 도덕성 차원으로 치환⁰³했다.

개발연대의 형성과 소유를 통한 타협

본격적인 대규모 개발은 1980년대에 극대화되었다. 80년대 개발의 폭력은 집단 이주정착지로 조성된 달동네 지역을 아파트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극심해졌다. 이 시기 자본이 주택건설에 동원되어 주택-산업이 결합되는 '주산복합체(housing-industry complex)가 형성'⁰⁴되고, 건설기업들이 대형 건설자본으로 성장했다. 당시 불량주거지 정비라는 정책적 필요와 신군부 세력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 수단의 필요 그리고 중동 건설에서 돌아온 유희 건설 장비와 자본을 투자할 활로를 찾던 건설자본의 요구가 맞물리게 되면서, 80년 9월 주택 500만 호 건설계획을 발표 대규모 개발을 추진했다. '택지개발촉진법(80.12)' 제정을 통한 택지개발사업과 민간주도의 새로운 개발방식이 전개되었는데, 1983년 도입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합동재개발 방식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 권력과 건설자본, 소유자(투기자)로 이어지는 '개발연대'가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 합동재개발은 토지와 주택 소유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건설사와 함께 개발하는 민간주도 방식으로, 이윤추구 동기가 분명해진 개발방식은 더욱 폭력적인 양상을 띠게 된다. 1886년, 최초로 폭력조직이 설립한 입산개발이라는 철거용역 업체가 생겨나면서, 70년대 판잣집을 단속하던 시청 '철거반'이 아닌

본격적인 ‘철거용역 깡패’ 회사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특히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둔 철거의 폭력성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86년 한 해 철거 현장에서 5명이 숨졌고, 86년에서 88년 2월 사이에 14명이 강제철거 때문에 사망했다고 한다. "86, 88이 사람 죽인다."라는 말까지 나돌았다. 이 시기 철거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1987년 국제주거연맹(HIC)은 한국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함께 ‘가장 비인간적이고 잔인하게 철거하는 나라’라고 지목했다. 철거 폭력이 극심해질수록, 철거민들의 저항도 더욱 조직화 되었다. 1983년 목동철거민 투쟁을 원동력으로, 사당동, 상계동, 양평동 등지의 세입자들이 조직적으로 격렬히 투쟁했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에 맞선 저항의 80년대 철거민 투쟁 과정에서 건물잔해에 깔리거나, 비관 자살, 용역 깡패의 폭행, 방화에 의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십 명이 죽고, 수백 명이 다친 후야, 1990년을 전후로 영구임대주택 정책 도입 등 철거민들이 요구하던 세입자용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도입되었다.

한편, 이 시기 3저(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호황으로 시중에 풀린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며 주택투기를 통한 계층화가 가속화되었고, 86·88 국제 스포츠 행사로 인한 철거로 80년대 후반부터 집값, 전셋값의 폭등이 심각했다. 86년 말~90년 2월 말까지 도시지역 주택 매매가는 평균 47.3% 상승했고 전세가도 82.2% 상승했다. 노태우 정권은 89년 영구임대주택을 도입하고 89년 12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1년이던 갱신 기간을 2년으로 개정했다. 그러나 1990년 봄(3~4월), 세입자 일가족 17명이 연쇄적으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이어졌다. 투기의 가속화와 계층화, 주거불안의 심화는 ‘주거안정이 필요한 가족을 생존의 단위로 더욱더 결속’⁰⁵하게 하였다.

한편, 87년 민주화운동과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강화된 민주노조운동은 노동자 주택문제의 의제화를 시도했다. 민주노총의 전신으로 90년 1월 22일 창립한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은 창립한 달 후인 2월 20일 자로 지역노동조합협의회(지노협)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전월세폭등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주거안정화 대책에 대한 해설 그리고 주거문제를 90년 임투와 단체협약 투쟁의 관철 목표로 설정해 ‘주거안정을 위한 노동조합의 대회사 요구’와 ‘추진지침’을 하달해, 노동자들의 주거문제를 회사 내외에서 의제화하려 했다.*

그러나 당시 노태우 정권은 자가소유 촉진의 중산층육성 전략을 통해 87년 민주화운동이 내포한 경제적 갈등의 폭발력을 수렴했다. 노태우 정권은 200만 호 주택건설 계획(‘89.02)을 실현할 신도시(1기) 개발과 재개발을 통한 아파트 공급, 다세대·다가구 주택건설 촉진의 기반을 마련해 자가소유 촉진 정책을 펼쳤다. 이 시기 출현한 중간계급 시민운동(경실련)은 청약제도 개혁 등 주택가격

* ‘노동조합의 대회사 요구’에는 임투시 무주택 조합원의 주거비 상승분만큼 기본급 인상요구에 포함하거나 주택수당 신설을 요구, 단체협약 갱신을 통해 회사의 주택건립 기금 적립, 주택용자 실시, 사원 주택 확대(기업 비업무용 토지를 노동자주택 건설부지로 전환 등)를 요구가 포함되었다. ‘추진지침’으로는 지역내/조합원 임대료 폭등 등 주거실태 조사, 노조 주최의 대주민 강연회 등 개최로 주거문제에 대한 공감대 확산, 조합원 교육선전, 단위노조, 타계층 및 단체와의 공동활동 조직화 등이 포함되었다.

역제를 통한 아파트 소유의 형평성 운동의 중산층 주거전략을 전개했으며, 노동자계급도 기업복지를 통한 주택소유의 중산층화 전략으로 수렴되었다. '노동자계급의 주거문제가 사회주택(공공주택) 등 집단적 요구 전략이 아닌, 자가소유에 기초한 개별적 문제해결 전략으로 귀결되는 소유를 통한 타협을 통해 주거문제의 폭발력이 흡수'⁰⁶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복지를 통한 주거문제 해결은 대기업 노동자들에게만 집중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의미 있는 철거민 투쟁의 승리들***이 있기도 했지만, 철거 폭력 또한 더욱 악랄했다. 입산개발에서 나온 이들이 설립한 철거용역 깡패 업체인 적준개발(이후 다원건설)이 서울시 재개발 현장을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악랄한 폭력을 자행했다. 당시 인권·사회단체들이 '다원건설(구 적준용역) 사법처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기까지 할 정도였다. 폭력에 맞선 이 시기 철거민들의 투쟁도 망루 투쟁을 비롯한 더욱 목숨을 건 싸움으로 전개되었다.⁰⁷

주택의 금융화...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김대중 정권은 경기 부양을 위해 소비자 금융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며, 집 구매를 위한 은행 대출이 권장되었다. 은행은 기업대출의 축소에 대한 탈출구로 가계대출을 활성화했고, 2000년 9월 국내 첫 장기모기지론인 '주택담보대출'이 도입되었다. 공급을 통해 자가소유를 촉진하던 정책에 더해 부채를 통해 자가소유를 촉진하는 정책이 전개된 것이다. 본격적인 주택·부동산 금융화 체제가 시작되었고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었다. 빚으로 지은 집은 집값 하락 시 위험자산이 되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고, 장기 대출을 통해 집을 구매한 계층에게 주택가격의 변동은 가족의 삶에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강화된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춰, 서울 등 도시공간 역시 전 지구적 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한 도시전략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도시개발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명분도 사라진 채, 지구적 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도시의 경쟁력 향상으로 재구성되면서 전개되었다. 신자유주의 도시화를 구성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Project Financing)등 부동산의 금융화가

** 1988년 현대차노조는 노조 집행부에 주거복지부를 만들어 사측과 단체교섭을 해 사원분양아파트를 얻어내기도 했다(송명관, 2020, 87년 이후 중산층 육성전략과 주택금융화, 진보평론 86호)

*** 90년대는 개발기간 동안의 임시주거시설인 가이주단지 쟁취와 미해당자로 분류된 철거 세입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쟁취가 저항의 쟁점으로 전개되었다. 다규 '행당동사람들'로 유명한 금호·행당·하왕십리동의 송학마을 철거 세입자 102세대의 1995년 가이주단지 쟁취를 시작으로 삼양동, 미아동, 무학마을(하왕1-3), 바탕마을(금호6) 등에서 연이어 가이주단지를 쟁취했고 임대주택으로 집단 재정착했다.

**** 한국은 주택 금융화의 영향이 다른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해 심하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제도 금융권을 통한 주택자금 조달 비중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고 리츠나 사모펀드 등 간접투자도 다른 국가에 비해 발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전세제도와 가족 원조가 대체(가족주의가 금융화를 대체)한 면이 있어 주택 금융화 영향이 적어 보이는 면이 있다(김수현, 2022). 그러나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매우 높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금융부분이 주택시장을 이끌어가는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본격화되면서, 기존의 건설재벌에 금융세력까지 연결된 강력한 개발동맹체제가 구축되었었다.

2000년대 초반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과 오세훈 시장으로 이어진 뉴타운 광역개발과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고 불리던 용산철도정비창부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신자유주의 도시의 욕망이 집결되었다. '타운돌이'라 지칭되던 정치적 욕망과 집값 상승이라는 개인과 가족의 욕망이 결합하면서 개발의 욕망과 환상은 거품처럼 팽창해 갔다. 그리고 그 욕망의 정점에서 우리는 돌이킬 수 없이 참혹한 용산참사를 필연처럼 맞이해야 했다.

2008년 말까지 지배했던 부동산 욕망은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금융위기로 주춤했다. 2006년 전후 과도한 빚으로 주택을 구매한 이들에 대해 집값 하락과 함께 '하우스 푸어'라는 별칭이 등장했다. 부동산 침체와 건설사 부실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등 건설사 PF대출의 부실이 확산되면서,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약 30조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

더 이상 금융상품을 통한 자금 동원에 기반을 둔 개발이 어려워진 부동산 장기 침체 국면에서 2012년 이후 전면철거형 개발은 도시재생으로 전환이 모색되었다. 즉, 더 이상 기존의 대규모 개발방식이 자본의 이윤을 무한정 보장해줄 수 없게 된 경제위기의 조건에서, 개발의 새로운 탈출구로 도시재생이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도 현시기 다시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정치적 집권 세력의 변화 등과 맞물리면서 건설공급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다.

한편 박근혜 정권부터 문재인 정권에 이르며 저출생 대책의 하위 기제로 주택정책의 배치가 강화되었다. 기존의 소득기준 이외에 생애주기 및 출생, 경제활동과의 연관성을 적용한 주택공급제도의 변화가 청년·신혼부부를 주거 담론으로 강화되었다. 이와 맞물려 “빛내서 집사라”, “빛내서 세 살아라”는 정책이 강화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박근혜 정권(‘13~’16)에서 514조 원에서 714조 원으로 200조 이상 증가했고, 문재인 정권(‘17~’21)에서도 770조 원에서 985조 원으로 역시 200조 이상 증가했다. 전세대출 역시 박근혜 정권의 ‘목돈 안 드는 전세’ 도입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자금대출(바팀목)정책을 청년·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강화했고, 문재인 정권도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대출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했다. 그로 인해 전세자금대출잔액은 2013년 이전 25조 원 내외였으나 ‘목돈 안 드는 전세’를 도입한 2014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해, 2019년 100조 원을 초과했고 2021년 약 180조 원까지 증가했다. 전세제도가 70년대 아파트 투기의 자금용으로 확대되었다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이 발전한 지금은 ‘전세가 임대인이 이자 없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도구로 변질’⁰⁸되어 갭투기로 악용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50년 만기주택담보대출’을 도입, 가계부채를 증폭시키고, 취임 직후부터 “민간·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 확 바뀌어야!” 한다는 기조로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민간주도 공급 및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개발·세제 등 규제 완화 정책은 ‘둔촌주공 살리기’ 대책이라

* 2008년 18대 총선에서, 무분별한 뉴타운 공약으로 대거 당선된 의원들을 일컬어 '타운돌이'라 지칭되었다.

는 말까지 나온 2023년 1월 '1.3부동산대책(주택시장 연착륙 방안)'에서 정점을 찍어, 분양·재개발/재건축·금융·세제의 모든 부동산 규제정책을 폐기 또는 무력화시키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선(善)이 아니다.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날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요인이다. 다주택자 세금 완화는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는 서민정책”이라는 윤석열의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집값 폭등기에 재보궐선거로 등장한 오세훈 시장은 취임 직후 신속통합기획 도입과 규제 완화로 재개발·재건축, 모아타운 등 신규 정비구역을 100곳 이상 빠른 속도로 지정했다. 그러나 최근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건설사가 시공권을 반납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 등 사업의 정체가 예상된다. 이는 과거 뉴타운 시대와 같이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 간 갈등은 심화되고 지역이 황폐해진 채 방치되는 상황이 지속될 우려가 크다. 개발지역 철거민들의 투쟁은 더욱 고립에 내몰리는 한편, 일시적 반등기에 규제 완화 효과가 큰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폭력적으로 밀어붙일 강제철거의 위협도 상존한다.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투기와 개발 부양정책에도 불구하고, 소위 부동산시장의 침체 및 급락과 건설사 부도 위기 상황은 심화하고 있다.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2,200조 원(전세보증금 포함 3,000조 추정)으로 GDP를 넘어서 위험도도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부실의 책임이 사회에 그리고 주택부문의 약한 고리인 세입자들과 도시의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용산참사 15주기를 열흘 앞둔 1월 10일, 윤석열 정권은 “재개발 재건축을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표제를 달고 발표했지만 발표된 개발 규제 완화와 주택 세금 완화, 수조 원 규모의 건설사 부실 PF 정상화 펀드 조성 등의 최종 수혜자는 건설자본과 금융자본을 향해 있다.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들의 선 구제를 위한 보증금 반환 채권 공공매입은 혈세낭비와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거부하면서, 빚으로 부실을 쌓아 올리면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며 이익을 사유화했던 금융사와 건설사들의 실패로 인한 부동산PF 부실채권은 대규모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을 끌어들이 85조원 규모의 유동성 프로그램을 통해 구제하겠다고 한다. 손실의 사회화로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다.

3. 주거권운동,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1) 자가소유 신화에서 벗어나 주택의 사회화로 재구성하기

건설공급과 금융화를 통한 대출 확대의 선한(?) 혹은 포장된 의도는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소유

** 2022년 1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율은 104.3%

하게 해줌으로써 주택문제를 해결한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폭력적인 강제퇴거와 주거불안의 심화였다. 주택모기지 대출 확대와 연평균 50만 호 내외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가점유율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점유형태별 주거 현황을 보면, 자기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자가점유율은 1980년 58.6%에서 2020년 58.9%로 60% 미만에서 거의 변동이 없다. 반면, 전세 비율이 높던 세입자 가구의 점유형태는 2010년에 전세와 월세가 비슷해진 이후 역전해 월세의 비율이 더 높아졌다(2020년 기준 월세 22.3%, 전세 15.3%). 도시 임차 가구의 주거비부담이 높고, 점유의 안정성이 낮으며(임차 가구 평균 거주기간 3.2년), 고시원 등 비가시적 주거 빈곤 가구가 급격히 증가했다.

자가소유 촉진 정책으로 소유의 진입장벽을 낮추려고 해도 모든 것이 내 집 마련으로 수렴되는 체제에서는 역설적으로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자산이 없는 무주택 가구가 집을 구매하기는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지만, 다주택자는 집을 담보로 한 대출과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주택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세입자의 주거비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보이는 전세제도와 전세대출이 오히려 주택의 투기를 부추겨 집값과 전세가를 올리는 전세의 역설로 작용해 전세사기·강통전세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결국, '자산증식 가족주의'⁹⁾에 기반해 배제와 차별의 줄 세우기가 형성되는 '내 집 마련' 정책과 소유를 통한 계급상승의 욕구가 결합된 건설공급과 금융(대출) 중심의 주택정책은 주택의 독점만을 키워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소유를 정점으로 하는 '1가구 1주택' 신화의 '주거 사다리' 지원정책은 자가소유 가능 계층에 지원을 집중시켜, 공적 자원 배분의 계층 역진을 초래했고,* 청년·신혼부부 등 분양시장에 지속적으로 유입시킬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대출을 확대하면서 집값과 전·월세 가격상승의 압력을 지속시켰다.

사회운동이 '집값 내리기'를 위한 정책 요구를 최우선 과제로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대중들의 열망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일 거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집값 폭등과 자산 불평등, 그리고 LH 직원 투기와 고위 공직자의 주택 자산증식에 대한 대중적 분노가 높아지자 집값을 낮춰야 한다(소유에 대한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를 시민사회단체나 진보정당들에서도 중요하게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집값'이 문제라며 부동산 언론과 국민의힘에서도 중요하게 제기했다. 이들은 LH 투기 사태 등을 '공공실패'로 규정해 실패한 공공의 자리에 '공정경쟁 시장'이라는 '민간'을 대치시켰다. '공공'의 '불공정 투기' 방지를 저지선으로 해, '민간'의 '공정한

* 자가소유로의 주거상향 이동에 정책 중심을 두면, 민간 주택시장에서 주거문제 해결이 어려운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해결 능력이 있는 계층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계층 역진성이 발생한다. 주택기금 등 자원은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등),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에 더 많은 배분된다. 현 SH공사 김현동 사장 체제에서 sh공사의 주택공급 자원을 소위 반값이라는(실제는 아니지만) 중상층용 분양아파트 공급하는데 몰인하느라,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은 줄여두고 있다.

투자'라는 사적 투기를 사수하는 전략으로 집값 담론을 펼쳤다.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도 패배 원인을 집값으로 보며, 불공정 투기를 철저히 근절하되 민간의 공정한 투자를 보장하겠다는 반성문을 제출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은 '91년생 비정규직 딸'을 언급하며, 2030의 분노에 대한 화답으로 LTV·DTI를 90%까지 풀자는 주장도 했다. 20·30 세대에게 빛으로 만든 사다리를 놔줘서라도 공정한 주택투기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었다. '패닉바잉', '영끌'이라는 신조어들이 집 문제로 절망하는 청년 세대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처럼 사용했지만, '지(하)·옥(탑)·고(시원)' 거주 청년들을 하루아침에 '영끌'해 집을 구매하려는 집단으로 둔갑시키며, 영끌은 부동산 욕망을 부추기고 투기를 감추는 용어로 이용되었다.

'집값을 내리기' 위한 규제와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아무리 집값을 내린다고 해도 집은 여전히 비싸고, 세입자의 다수인 월세 세입자들,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들은 소유에 닿을 수 없다. 집값을 낮춰 소유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집값은 오른다. 자가소유를 지원하는 신자유주의적 해법은 주택위기를 더욱 키울 뿐이다.

집값 폭등과 주거불안의 현실을 보면, 삶을 집에 저당 잡혀서라도 그들만의 경쟁적 주택시장에 진입하고 싶은 심정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언제까지 집을 집으로 떠메고 살 것인지, 우리는 물어야 한다. 자산으로서의 주택 소유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세입자로서의 설움, 즉 내 집이 있어야만 주거가 안정되는 현실 때문에 주거안정을 위해 내 집 갖기를 원하고 있다. 집값을 내리고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체제전환을 위한 주거권운동은 소유로 수렴되는 요구가 아닌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와 구조를 요구하고 행동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기존의 전통적인 주거운동의 요구(공공임대주택 확충 등)를 주택의 사회화(공공성 강화, 탈 상품화)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내나라, 공공임대”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주택을!

지금 획기적으로 공급해야 할 집은, 사고파는 분양 아파트(그것이 소위 반값 아파트라 해도)가 아니라 장기 공공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사회주택)**은 주택의 탈 상품화와 주거권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구이다. 유럽에서 사회주택은 '노동조합과 계급정당을 통한 계급역량의 결집으로 마련된 주택으로, 주택의 탈 상품화를 이루는 기초'¹⁰였다. 사회주택에 해당하는

** 한국에서 유독 사회주택은 민간의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만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언급하는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에 준하는 비영리(혹은 제한영리) 주택을 포괄하는 서구의 개념으로 사용한다. 특히, 한국의 주택체제에서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하는 것에 가깝다.

우리나라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126만 호(2021년 기준)로, 전체 주택의 5.5% 수준에 불과하다. 20% 내외에서 30%까지 이르는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매우 과소하다.

지난 정권에서 집값 폭등과 맞물린 주요 선거(지방선거와 대선)를 지나면서 여야 거대양당은 공공임대주택을 시민들의 주택 소유 욕망과 괴리된 요구로 취급했다. 셸럽 건축가인 어느 교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월세 소작농 만들겠다는 것”, “인간의 본능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하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낙인을 강화했다. 윤석열 정권도 첫 예산에서 시장주도를 강조하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했고 분양주택 예산을 늘렸다.

공공임대 예산삭감 저지를 위해 주거를 의제로 한 국회 앞 첫 농성인 <내나라, 공공임대! 농성단>이 꾸려져 69일간의 연말 농성을 전개했다. 그제야 민주당은 윤 정권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을 비판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의 자치구에 공공임대주택이 계획될 때마다 '우리 동네 공공임대주택 반대'라는 소유주들의 집값 수호 목소리를 대변하며 나섰다. 공공임대주택 요구가 더 이상 도시민들의 요구와 떨어진 것 같이 말하지만, 주거 불평등이 심각한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모집 경쟁률은 강남 분양아파트 경쟁률 못지않다. 기본 몇십 대 일에서 백 대 일을 초과하는 곳이 다수일 정도로, 서울시민들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거주 의사가 높고,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만족도도 높다.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도심 내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돼야 한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확대의 요구가 물량으로만 이야기되는 그동안의 방식을 넘어서야 한다. 정작 어디에 어떤 공공임대주택에 필요한지 잘 이야기되지 않는 못했다.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곳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살고있는 생활권이다. 특히,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 불안정한 노동으로 생존하는 노동자 일수록 교통편 등이 좋은 도심의 기존 생활권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열악하지만 주거비가 저렴해 오랫동안 살 수 있었던 집과 동네를 떠나 멀리 떨어진 임대주택으로 가는 것은, 관계망의 해체와 장소에 기반한 기존 복지체계에서의 단절 등이 우려되어 꺼릴 수밖에 없다.

도심에 가용할 수 있는 공공택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도심 생활권에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은 기존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의 사회화 방식이고, 기후정의와 주거정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발라크리쉬난 라자고팔(Balakrishnan Rajagopal)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은 2022년 주제 보고서 <정의로운 전환을 향하여 : 기후위기와 주거권>에서, 주거부문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방안으로 탄소중립 사회주택 공급과 기존 재고 주택의 개보수를 위한 투자 확대를 권고했다.

집이 기후재난 피해의 조건이 되는 현실에서 도심에 안전하고 안정적인 저렴 주택의 공급이 더욱 필요한데, 건축 부문은 도시의 대표적인 탄소배출 원인이라는 점에서 공급방식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이 요구된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도 자연녹지를 해제해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건설하거나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한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에 의존해 공공임대

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확보는 도심 내 저렴 주택을 전면철거하고 대규모 분양주택을 건설하면서 일부만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증가한다 해도 저렴 주택 멸실과 대규모 이주 수요 증가로 인한 전·월세가 상승을 불러 주거권에 역행한다. 이는 기후위기 시대에 더는 유효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하다.

매입임대주택은 택지개발을 통한 대규모 건설 공급방식이 아닌, 기존주택을 활용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한 주택 공급방식이자 상품화된 기존주택을 사회화해 탈 상품화하는 방식이다. 기존주택을 매입해 에너지 효율화 개선 등 장수명의 탄소중립 공동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건축 부문의 탄소배출을 줄이면서 생활권 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목적으로 민간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개선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민간주택에 대한 공적 지원이 주택가격과 주거비부담을 높이는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의 무리한 추진으로 이른바 ‘기후 젠트리피케이션(climate gentrification)’이 발생하는 것이다. 임대료에 대한 규제 장치가 강한 독일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리모델링에 대한 임대료 규제 완화 조치가 월세 폭등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기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라는 측면에서도 기존주택을 탄소중립 사회주택(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¹¹

도심 내 저렴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이 중요한데, 기존주택의 매입실적은 줄어들고 있다. 매입임대주택 공급의 부진은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적 의지가 크게 작동하고 있기도 하지만, 민간의 주택을 공공이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신규 공급 정체와 지역 편중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공선매권 도입과 자치구별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 적용이 필요하다. 공공선매권 제도는 ‘사인 사이에서 토지 등의 부동산이 매도되려고 할 때 행정청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우선 매입권이 인정되는 제도’를 말한다.

프랑스는 투기 억제를 위해 1960년대 전후부터 공공선매권을 제도를 도입했다. 2015년 프랑스 파리지 정부는 신년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고급주택화 현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시내 257개 번지(8천여 세대의 아파트에 해당)를 소형 임대주택 후보지로 선정해, 해당 지역에서 주택 매각 시 1차로 개인에게 매매를 금지해 파리시가 후보지의 우선매입권을 행사하고 있다. 시에서 매입을 포기하기 전에 주택 소유자는 다른 개인에게 주택을 팔 수 없는데, 파리시는 이 정책의 목적이 주택 소유자의 매매나 재건축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도 선매권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주민-지구(地區) 유지 구역(사회유지구역)’을 설정해 적용하고 있다. 사회유지구역에서 주택이 매매되는 과정에서 임대료가 폭등할 조짐이 보이면 기초 지방 자치 단체인 ‘게마인데’가 그 매매에 개입하여 우선해서 당해 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사회주택으로 운영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² 독일 베를린시는 1991년 사회유지구역을 처음 지정한 이후 2020년까지 64곳을 지정했는데, 베를린시 전체 인구의 26%인 약 98만 명이 사회

유지구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주택의 약 27%인 53만 채가 구역내에 위치해 있다.¹³

공공선매권에 대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고 공격할 수 있다. 그러나 선매권은 현행 토지수용제도와 비교하면 오히려 더 온건하다. 공공의 목적을 위한 공공의 권한인 토지수용제도가 우리나라에서 민간개발 조합에게 위임되어 수용권이 남발되고 있다. 주택의 투기를 방지하고 도심 생활권 내 기후위기에 대응한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기존주택의 공공선매권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논의에서 권리의 강화에 기반한 민주적 통제도 중요하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의 관료적 통제 시스템에서 입주민은 복지수혜자로 위치 지워진다. 심지어 가난한 이들이 집단화된 임대주택은 슬럼화된다며 중산층 임대주택 전략을 강조하기도 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슬럼화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아무런 권리도 부여하지 않고 복지수혜자, 시혜의 대상으로만 위치 지워왔던 것이 문제이다.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그들의 집(공공임대주택)과 마을(단지)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서, 그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권한이 부여된다면 어떨까?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운영에서의 입주민의 참여와 권한 강화, 자치권의 부여 등 민주적 관리와 통제가 필요하다.

3) “팔지마, 공공의 땅” - 미래를 위해 점거하자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도시경쟁력 강화를 내세운 업무지구, 혁신지구 등으로 공공의 땅이 기업을 위한 땅으로 넘어가고 있다. LH공사를 비롯한 공기업들도 부채 해결을 명목으로 공공토지의 상당량을 매각해 왔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민선 8기 슬로건(동행·매력 특별시)의 한 축인 ‘매력 특별시(매력 있는 글로벌 선도도시)’를 살펴보면, 서울시 도시계획은 ‘누구에게’ 매력 있는 도시를 추구하고 있고, ‘어떤’ 서울 도시를 계획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매력 특별시와 2040에서 서울시는 ‘도시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하락이 심각하다고 진단하면서,* 글로벌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적극적 대응 필요를 도시공간 계획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경쟁력은 국제투자 활성화에 강조점을 둔 글로벌 컨설팅기업들**의 평가이다. 다국적 기업의 투자 가치에 중점을 두고 평가되는 서울과 시민의 삶의 질을 중점으로 평가되는 서울 중 우리는 어떤 서울을 원하는가?

‘매력도시’라는 슬로건을 앞세운 서울시 도시계획은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3대 중심

* 오세훈 시장은 페이스북(2021.3.10)에, "내가 끌어올린 도시경쟁력, 무능한 좌파 박원순 10년 동안 폭삭 주저앉았다"며 한탄했다.

** 2040도시계획에서 서울시가 제시하는 도시경쟁력의 근거는 국제 컨설팅기업 AT커니社의 보고서에 근거하는데, 이 평가는 국제투자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도시경쟁력 담론은 주로 다국적 기업들이 투자하기에 좋은 도시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순위가 매겨지고 있다.

지(여의도, 강남, 도심) 기능 강화를 제시하는데, 이 중 강조한 역점 프로젝트는, 세계 금융 중심도시로 계획된 '여의도'와 '용산정비창 개발'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조성해 연계하는 것으로, '한강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혁신코어로 조성'을 제시하고 있다. 대규모 개발프로젝트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투기만 부추기는 조감도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

2022년 7월, 오세훈 시장은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지체가 서울 도시경쟁력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며 “글로벌 하이테크 기업이 몰려드는 아시아(亞) 실리콘밸리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의 <미래新중심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구상>을 직접 발표했다.*** 발표한 개발구상에 따르면, 사업추진 전담부서로 ‘(가칭)용산개발청’을 신설하고 sh공사 재정을 투입해 부지와 인프라를 조성한 후 민간에 부지를 분할 분양(매각)해 구역별 민간개발로 업무지구 조성하는 방식으로, 서울 도심의 대규모 공공의 땅을 민간기업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도 2022년 11월 공공기관 혁신을 명분으로 공공자산 매각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중 가장 큰 매각 규모가 용산정비창 부지였다. 공식 축구장 70개 규모의 약 50만㎡에 이르는 대규모 공공택지인 용산정비창 부지의 국제업무지구로의 개발 계획은 2007년 당시 민선 4기 오세훈 시장이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상징으로 발표한 후 민관합작의 (주)드림허브프젝트금융투자(PFV)를 설립해 개발을 추진하다 2009년 용산참사를 촉발했으며, 2013년 부동산 침체로 PF 부도 사태와 함께 구역 해제되어 실패로 귀결되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온 오세훈 시장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재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에 2021년 10월 1일, 세계 주거의 날을 앞두고 반빈곤·주거권 활동가들은 “미래를 위한 점거, 투기 개발과 주거 불평등 여기서 끝내자”는 성명과 대형 플래카드를 들고 용산정비창 부지를 일시 점거했다. 용산정비창을 점거하는 주거권 직접행동을 통해, 점유와 사용의 권리, 주거의 권리를 요구했다. 민간에 매각되어 개인과 기업의 부동산 소유로 귀결시키려는 공공의 땅을 점거해, 소유를 넘어 거주의 권리를 되찾고자 했다. 막대한 개발이익의 불로소득 잔치를 벌이는 지금까지의 개발방식과 자본주의 도시공간 계획에 순응하는 전문가 중심의 도시계획을 거부하고, 용산정비창 개발에서부터 공공성 강화라는 개발의 근본적인 전환을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은 도시경쟁력 강화를 기치로 용산정비창뿐만 아니라 불광동 서울혁신파크 등 공공토지의 민간 매각을 통한 복합상업지구 개발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모두의 땅인 공공부지를 공공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유지로 여기고 있다.

체제전환을 위한 주거권운동은 단 한 뼘의 공유지라도 더 이상 자본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 “해외자본이 들어오고 글로벌 기업이 들어오는 아시아 실리콘밸리”, “용산으로 투자금을 가지고 들어오는 외국 기업들과 회사원들이 쾌적한 도시 생활 즐길 수 있게”, “달 홍콩기업들이 각종 세제 혜택이 높은 싱가포르 가고 있다. 용산에 여가와 문화예술 기능을 넣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 24시간 즐기면서 기업 활동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면, 싱가포르 가는 외국 기업들이 용산으로 오게 될 것”_오세훈 시장,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 기자회견 명회 발언 중

“팔지만, 공공의 땅” 선언과 함께, 점거의 직접행동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베를린의 ‘에르아베 RAW’로 불리는 곳은 150년의 역사를 가진 철도 정비창 부지인데 통일 이후 버려지다시피 한 정비창 부지를 한때 젊은 예술가와 활동가들이 점거한 뒤 클럽 파티장을 포함한 대안 공간을 만들었다고 한다.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겠지만 세력화된 체제전환운동조직이 용산정비창부지를 일시 점거해 대규모의 1박 2일 록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신나는 상상을 해 본다. 오늘을 위해, 그리고 미래를 위해 점거하자.

4) “늘려라, 세입자 권리!” - 민간임대주택의 사회적 통제

공공임대주택을 늘린다고 해도 세입자들의 다수는 민간의 전월세 임대주택에 거주한다. 개발로 인한 강제퇴거가 심각한 인권침해이듯, 2~4년마다 계약 갱신이라는 이름으로 이삿짐을 싸야 하는 비자발적인 강제퇴거도 심각한 주거권 침해다. 민간임대주택에 살아도 공공임대주택에 준하는 세입자 주거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세입자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주거불안 심화의 지속 상황에서 2020년 7월,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하는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고, 블랙마켓으로 방치된 임대차 거래에 대한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었다. 임대차법 개정으로 세입자 권리가 30년 만에 매우 미약하게 도입되었지만, 기한의 정함이 없는 갱신권을 보장해 주거권과 정주권을 확대하는 대신 1회의 갱신권만 보장하고, 신규 임대차의 임대료를 통제하지 않고 있다.

독일을 비롯해 대륙법 체계의 유럽 국가들은 임대차 기한의 정함이 없이 특별한 사유(임대료 연체 등)가 아니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독일은 한국과 민간임대주택 비율이 비슷한데 독일 세입자가 한 집에 거주하는 평균 거주기간은 12.8년이고, 20년 이상 한 집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22.7%라고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세입자 권리는 여전히 봉인되어 있다.

계속 주거권(기한의 정함이 없는 갱신권)과 공정(표준)임대료* 도입, 임대료의 통제와 주거 품질에 대한 규제 등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저강도의 주택 사회화와 세입자 권리 강화를 실현해야 한다.

* 독일, 프랑스 등에 도입된 공정임대료 또는 표준임대료 제도는, 민간의 임대주택에 대한 다양한 정보(유사한 종류, 크기, 시설, 위치, 임대료, 경제적 여건, 지역 생계비 지표 등)를 토대로 공정(표준)임대료를 산정하고 세입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공정(표준)임대료는 임대료 관련 분쟁 발생 시에 법적 근거로 활용되며,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하려면 표준임대료 기준 등에 따라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공정(표준)임대료 산정에는 세입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한다.

4. 맺으며

2021년 9월 26일, 베를린주 의회 선거와 동시에 시행된 베를린주 주택 사회화 표결에서 59% 베를린 시민들이 부동산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24만 채의 주택을 (재)사회화하는데 찬성 투표했다. 주택의 재사회화를 통해 거주자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관리하자는 세입자들의 지속된 대중 조직운동의 성과였다. 물론 그 실현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의회가 관련한 법령을 만들어야 하고 재원 마련 등, 부동산 세력과 자본의 반격이 예상되고, 이에 맞서 세입자들은 연대와 저항운동을 강화할 것이다. 지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한국 정부가 ‘착한 임대인’만 찾고 있을 때, 미국 대도시와 유럽 국가들에서는 임대료 미납에 따른 강제퇴거 금지(퇴거 모라토리엄)나 임대료 동결조치를 취했었다. 이는 도시 세입자들이 연대를 강화해 렌트스트라이크(rent strike, 임대료 파업) 운동을 전개했고 주택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요구하는 사회운동이 꾸준히 전개되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대규모 개발과 부동산 금융의 부실로 인한 건설자본과 투기적 금융사의 손실을 또다시 우리에게 사회화하려는 현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사회화의 저항 지점을 만들 수 있을까? 저들의 벌인 손실의 사회화가 아니라 건설기업의 주택·토지에 대한 사회화, 은행의 초과 이윤에 대한 사회화에 대한 담론과 저항의 직접행동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집과 땅으로 돈 버는 개발-부동산 기득권 동맹세력에 맞선 우리들의 동맹이 절실하다. 독일의 세입자조직은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한다. 우리의 세입자 동맹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100년을 지속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도 약 100년 전인 1930년 전후 당시 일제 강점기 아래에서도 서울, 평양, 부산, 대구, 목포, 신의주, 전주 등 20여 개 도시 세입자(차가인)들은 ‘차가인 동맹’을 결성했다. 차가임 고율 반대, 차가료 인하교섭, 차가법 제정 요구, 공동주택 설치운동 등 가옥주와의 교섭을 통한 임대료 인하와 법제 개선 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했다. 특히 당시 노동운동의 활성화로 주민들의 계급의식이 성장한 평양에서 차가인 동맹이 활발했다고 한다. 1929년 12월, 평양 차가인 동맹은 선언문을 통해 이렇게 말한다. “비싼 집세와 땅세에 울고 있는 형제여! 분기하라! 속속 가맹하라! 비싼 집세 땅세를 내리우자! 승리는 분투하는 자의 것이다.”¹⁴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권과 도시에 대한 권리를 위해, 만국의 노동자, 만국 도시민들의 단결이 필요하다. 속속 가맹하라! 승리는 분투하는 자의 것이다.

참고 자료

- 01 김명수, 2018, 한국 주거문제의 구조적 기원(1970~1985) - 자원동원형 주택공급연쇄와 그 내부 긴장, 공간과 사회 2018년 제28권 2호(통권 64호)
- 02 신운경, 2021, 1950~1970년대 국민주택 담론과 개념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03 최시현, 2020, 한국 발전주의 주택체제와 중산층 여성주체의 형성, 가족과 문화 제32집 4호
- 04 정병순, 2017, 발전도시 위기와 포용도시로의 도시정체성의 재정립, '위기의 도시, 희망의 도시 심포지움' 자료집, 서울연구원
- 05 최시현, 2020
- 06 김명수, 2018, 한국의 주거정치와 계층화 -자원동원형 사회서비스 공급과 생존주의 주거전략의 탄생, 1970-2015,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07 이원호, 2018, 용산참사 10년 도시개발과 부동산 욕망, 월간 워크스 48호
- 08 송명관, 2023, 사회적 재난으로서 전세사기, 금융의 타락
- 09 김수현, 2023. 『부동산과 정치』
김수현, 2022, 우리에게 생소한 '주택의 금융화' 논의,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까?, 주택연구 제30권 2호
- 10 김명수, 2018, 위의 책
- 11 이원호, 2023, 기후위기 시대, 주거부문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 도시와빈곤 124호
- 12 이계수, 2023, 「반란의 도시, 베를린」, 스리체어스
- 13 서울연구원, 2021.09.15, 세계도시동향
- 14 명령과 2000, 일제하(1920~30년대 초) 도시 주거 문제와 주거권 확보 운동, 부산대 사학과 석사논문

가족은 어떻게 '집'에 포섭되거나 배제되는가?

공공성의 지향과 전략을 갱신하기

타리/나영정 | 가족구성권연구소

taripink@gmail.com

1. '집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

한국사회의 집과 가족은 압축적 자본주의 경제개발 기조를 확립하고 실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집과 가족이 어떻게 경제개발의 도구로 기능하면서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왔는지를 주목하는 것은 현재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일터와 시설 못지 않은 중요한 현상이다.**

1) 한국사회 위기를 제대로 호명하기

많은 이들이 주장해왔듯이 한국사회는 국가주도의 경제개발과 그를 위한 인구정책을 강압적으로 펼쳐냄으로써 일상생활과 관계, 삶의 재생산을 위한 시공간을 국가에 종속시키고, 사람들의 권리와 건강과 생명과 자유, 즐거움을 희생시켜왔다. 국가는 그러한 희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 집 마련의 꿈, 중산층 진입, 자녀의 대학진학과 사회적 성공을 약속했다. 하지만 세계적 자본주의 위

* 이 발제문을 작성하는데 4주간 진행된 체제전환운동포럼 주거권팀 세미나가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주거권 세미나를 기획한 김윤영 동지를 비롯해 모든 준비팀과 참여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세미나 커리큘럼 보기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65h2xq-FUqehrNx6lY2BXY0dKf-4Lr7sznWMWepag/edit?usp=sharing>

** 장경섭은 한국의 개발자본주의가 경제생산과 사회재생산간의 비대칭적 관계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압축적 근대성의 생산주의적 성격을 강화시키는 사회정책 체제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체제의 특징으로 1) 개발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부분에서 노동력의 사회재생산에 대한 공적 지원은 단호히 거부 2) 사회재생산의 책임과 비용은 최대한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전가, 드물게 일어나는 공적 지원마저 사회적 임금이 아닌 비용 용자나 보조의 형태로 제공 3) 주택, 보건, 교육과 관련해 시장 상품화가 보편적으로 용인되거나 은밀하게 장려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대출이 고안되어 제공, 4) 경제생산주의나 개발주의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회재생산의 특성과 재용이 임의로 조작되는 등의 형태를 지적하였다. 장경섭, [압축적 근대성의 논리], 장홍경 옮김, 문학사상, 2023, 205~206쪽.

기속에서 한국 또한 연이은 경제위기를 겪으며 국가의 약속은 불가능하며 애초에 그렇게 분배될 수 없었던 자본주의의 허상이었음이 드러났다. 사람들은 이런 절망속에서 자살과 자발적 고립, 각자도생, 출산 하지 않음 등의 각기 다른 생존전략을 취하면서 버티는 중이다. 하지만 분명히 해둘 것은 1인가구의 증가 등 가족의 변동을 사회적고립을 촉발하는 원인으로 보는 것은 사회적 불평 등의 문제를 보이지 않게 한다는 점이다. 특정한 가족의 형태가 정상성/비정상성으로 규정되는 한 실제 사람들이 겪는 차별과 고통에 다가갈 수 없다.*

“국가 전체가 소멸을 결심”했다, “한국사회가 자살하고 있다”, “벼락발전에서 벼락소멸로 가고 있다”는 진단 또한 제기되고 있다. 합계출산율과 자살률을 근거로 제시되고, 청년들은 노력해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없어서 희망을 잃었다고 답한다.⁰¹

이런 현상을 단기간의 경제위기, 세대간의 갈등이 아니라 한국사회가 수십년간 축적해온, 자본주의 체제가 배태해온 결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금 자본주의의 위기는 지구적 차원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이 주로 생태적 차원과 사회재생산 차원에서 드러나고 있다.**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발전적 위기’에 따라, 그동안 전유해온 여성을 중심으로 한 무상의 재생산 노동과 수탈된 자연이 이제는 더이상 내어줄 것이 없는 소진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는 논의를 통해서 현재의 생명-재생산-기후의 위기를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느낀다. 한국사회는 세계 그 어느곳보다 소진의 속도가 빠르고, 지배권력이 이에 대해 무심하고 무능하기에 무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회라는 점에서 특징적일 것이다. 또한 이 소진상태는 “자본에 넘겨주는 무상 일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역량이 고갈한다는 바로 그 의미에서 소진된다. 무상 일을 넘겨줄 수 있는 잠재력이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소진이면서, 앞이 보이지 않기에 찾아오는 역량 고갈일 것이다.⁰² 이런 상황에서 지난 18일 민주당은 “미래생명담보대출 상품”을 공약으로 만들어 냈는데, 바로 신혼부부에게 1억을 10년간 대출하고, 첫째 아이를 낳으면 무이자, 둘째 아이를 낳으면 원금 절반 감면, 셋째 아이를 낳으면 원금 전액 감면을 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신혼부부 생계를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그동안 무상으로 이루어졌던 출산 행위를 통해 새롭게 화폐의 가치를 생산하려는 통화 정책(?)으로 느껴질 뿐이다. 국민의힘은 이 공약에 대해서 가족가치를 왜곡하는 포

* 김순남은 "개인이 경험하는 불평등과 차별을 '이상적인 가족'을 갖지 못한 사적인 문제로 돌리는 사회에서 누가 자신의 어려움을 이웃과, 타인과 쉽게 나눌 수 있을까? 내 삶이 힘든 이유가 '한부모 가정'이기 때문이라 생각하는 사회에서, 나의 고립이 1인 가구로 살기 때문이고 비혼으로 살기 때문이며 성소수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회에서, 나와 이웃이 고립되지 않고 시민과 시민으로 연결되기란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면서 성별과 계급, 가족상황에 대한 정상성의 규범이 고립을 강제하는 조건임을 강조한다. 김순남, [가족을 구성할 권리], 오월의봄, 2022, 39~40쪽.

** 낸시 프레이저는 [좌파의 길](장석준 옮김, 서해문집)에서 자본주의 경제가 시스템 내부의 '비-경제적' 주변 영역과 맺는 관계는 자본주의 경제가 제 배를 채우기 위해 가족과 공동체, 생활 터전, 생태계의 피와 살을 다 빨아먹어버리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식인자본주의로 명명한다. 그는 계급투쟁 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접합 부위마다 벌어지는 계급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재생산과 비인간 자연이 인간과 맺는 관계, 인종화된 수탈, 국가 등 정치시스템의 역할의 의미들을 포괄적으로 짚어낸다.

플리츠이라고 비판했는데 말하는 자신들도 한심할 것이다.

2) 가족구성권 운동이 만난 '집 문제'

87년 체제 이후, 최소 2000년대 이후를 돌아볼 때 가족에 대한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시각은 어떻게 변화해왔을까. 가족구성권연구소(전신인 가족구성권연구모임은 2006년에 시작)는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가 확장된 상황에서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호주제 폐지 운동이 성공한 이후 시작되었다. 이 시기는 성평등과 여성의 경제적 참여에 대한 열망이 국가를 위한 새로운 경제성장의 자원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은 여성인력의 활용으로 일부 제도화되는 흐름과도 맞물렸다. 가족구성권운동은 2000대 진보정당의 약진, 비혼여성, 레즈비언, 장애여성을 비롯한 새로운 여성운동의 주체 형성, 성소수자 운동과 이주민 운동의 부상, 정보인권과 사회권 운동의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초기부터 생활동반자등록법에 대한 해외 동향을 살펴보고 입법가능성을 고민했으며, 결혼제도가 가진 억압성을 해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고, 정상/합법 가족을 중심으로 한 사회정책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를 함께 논의하면서, 제도밖 개인들과 가족들이 어떻게 자유롭게 돌보고 상호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파악하고 미래를 그려왔다.⁰³

지난 20여년간 파악해온 제도 안팎 개인들과 가족의 고통은 '집 문제'로 대표된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집 문제'가 가장 고통스러운 이유는 개인들과 가족들이 따로 또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마련해야 할 물질 토대이자 매일 매일을 영위하는 생활의 단위이며, 동시에 여타의 사회정책에 비해서 처참할 정도로 공공성의 수준이 낮은 영역이기 때문이다. 집이 공공재여야 하여, 평생 소유하지 않고 살아가도 문제없는 사회를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여타의 사회제도 등에 대한 인식에 비해서 낮다. 국가는 인구정책을 구사하면서 집과 가족을 최대치로 도구화했다. 한국사회의 가족은 친밀성과 돌봄, 자율적이고 사적인 시공간이기보다 경제성장을 위한 베이스캠프일 뿐이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체제의 인구정책으로 포섭되지 않는 개인들과 가족, 공동체를 어떻게 욕망하고 추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사회정의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 시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몸/마음 노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차별과 위계를 타파하며 자유의 평등의 가치를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이미 존재하는 제도적 대안으로 단지 수렴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과 변화가 필요한 가능성의 영역으로 함께 인식할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한 질문으로 수렴된다면 주거권과 연결해서 구체적이면서도 급진적인 대안을 상상하고 만들어나가는 노력을 사회운동이라고 함께 인식하고 여타의 운동과 적극적으로 연결하며 동참할 수 있을까.

3) 제도화된 정체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전략

도구적인 인구정책의 대표적인 정책 대상이 주거라는 것은 자명하다. 주거가 사회적인 권리가

아니라 금융자본질서를 위해 봉사하는 대출을 통해서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정책으로 이루어져왔다. 그 어떤 사회정책의 영역보다 압도적으로 대출을 중심으로 한 '지원' 정책과 극소수의 주거복지 정책으로 마련된 상황에서 때로 주거권의 요구는 1인가구, 청년, 동거가족, 동성커플을 위해서 분양과 대출 기회를 제공하라는 것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과연 이것이 '차별'인지, 어떤 차별인지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

국가와 자本是 차별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발생하는 차별은 장애인, 청년과 같은 제도화된 정체성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투자 가치가 있는 시민, 지불 능력이 있는 시민을 선별하고 그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배분하는 것이며 경제적 능력에 따라 위계화하는 조치들이다. 분명히 소수자 집단은 정체성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불평등이 누적되고 이것이 빈곤의 구조를 함께 이룬다. 정체성에 따른 차별이 단지 문화적인 차별 효과로 한정된다고 보는 시각에 단호히 반대한다. 문제는 차별의 원인을 제도화된 정체성으로 파악하면 전략 또한 할당조치, 우대조치, 포섭전략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는 차별 해소 전략이 오히려 제도를 강화하고, 제도가 배태하는 배제성, 차별성을 더욱 공고히 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출 대상을 누구로 설정할 것인가, 임대아파트 가산점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를 바로 정체성 집단에 대한 차별로 설정하면 운동의 방향 또한 그것의 거울쌍이 되는 방식으로 협소화될 수 있고, 해방의 방식이 아니며 제로섬 게임으로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문제는 정체성이 아니라 제도이다. 문제의 원인을 짚어내는 방식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요구를 정초하는 방식 모두 체제전환의 방법론으로 갱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제도화된 정체성 범주가 때로 유용하고, 특정한 법제도를 수립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규정되어야 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국가가 주거권을 기본권으로서 보장하지 않고 경제성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면서 인구집단을 선별하는 것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제도화된 정체성 범주를 해체하고, 집과 가족 모두를 도구화하는 전략 자체에 맞서는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또한 분양과 대출의 대상을 확대하라는 요구 자체도 사회운동이 될 수는 없다. 특정한 요구를 대중의 요구로 호명하고, 그 요구를 받아안아 대리하는 것이 진보(정치)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또한 체제전환 사회운동을 고민하는 이 자리에서 짚어보고 싶은 고민이다.

이 자리를 통해서 집-가족과 관련해 어떠한 주체와 정치적인 의제들이 연루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현장을 통해서 짚어본다. 이 현장을 함께 방문함으로써 '집 문제'에 대한 확장된 문제의식을 공유하기를 원한다. 나아가 가족구성권 운동과 주거권 운동이, 사회운동이 함께 해나가야 하는 "공공성"을 매개로 공동작업을 모색할 수 있는 단초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2. 주거권과 가족구성권 운동의 주변화된 이력과 현장들

1) 주거권과 가족상황차별⁰⁴

반차별 운동의 과정에서 주거권과 가족상황 차별을 함께 문제제기했던 운동의 경험이 있다. 틈새모임은 인권운동사랑방이 사회권 영역에 대한 고민과 깊이를 더해가던 시기에 장애여성공감,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등 소수자 운동과 공익변호사그룹 등이 만나서 소수자주거권확보를 위한틈새모임을 결성하고 주거권의 확장을 시도했던 시도였다. 개인적으로는 진보신당에서 활동할때 35세미만 1인가구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허용하라는 대중운동을 벌인 이후에 진행한 작업이다. '1인가구 대출요구'는 주거정책이 왜 가족형태와 나이에 따라 위계를 두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가진 계기였으나 대출불허 논리를 마주하는 순간 더이상 대출 요구에 머무를 수는 없었다. 틈새모임 작업을 통해서 주거권을 인권(사회적 권리)로서 강조하고, 국가의 책무와 비차별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가족구성권과의 접점을 만들 수 있었고 소수자들이 경험하는 주택 공급을 넘어선 배제와 차별, 폭력의 문제를 주거권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아래는 보고서 내용 일부를 전제한다.*

비차별의 원칙은 '인권'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권리를 관통하는 원리다. 주거의 이용이나 공급에서도 차별은 없어야 한다. 주거권에 대한 일반논평 역시 이를 주거권의 주요 내용으로 설명한다. 모든 사람이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적절한 주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나 피부색, 가족 상황 등을 이유로 하는 직접차별은 금지되어야 한다.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무시함으로써 발생하는 간접차별들도 사라져야 한다. 정상가족만을 모델로 주택정책을 설계해 동성애자나 비혼 가구가 주택정책으로부터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국가의 의무

인권규약의 당사국은 인권을 존중, 보호, 실현할 의무를 진다. 당사국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당사국의 입법, 사법, 행정에 걸쳐 차별적 조치가 있거나 주거권을 침해하는 조치가

* "특히, 본 보고서는 주거권과 관련하여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에 주목하고자 한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을 이유로 주거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이란 일반적으로, "가족 구성의 권리를 포함한 가족의 형태, 가족의 구성과정, 그리고 가족구성원 및 가족에 대한 책임과 관련한 사항"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가족'이란 혼인과 혈연을 통해 맺어진 관계처럼 협소한 의미가 아니라, 보다 폭넓은 파트너십과 돌봄의 관계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이란, 이혼, 사별이나 비혼,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재혼가족, 동거가족, 공동생활가족, 단독가구(1인가구), 그룹홈 및 위탁가정, 동성커플가족(동성가족)처럼 가족의 형태, 가족의 구성과정 그리고 가족의 구성원 및 가족에 대한 부양, 돌봄, 지원, 가족 유대 형성, 경조사 의무 등의 책임과 관련한 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을 말한다." 위 보고서, 16쪽.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 당사국이 스스로 개인이나 집단을 강제되거나, 주택공급이나 주택금융의 이용에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보호할 의무는, 당사국이 아닌 다른 행위자가 개인이나 집단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적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주택의 임대차나 금융의 이용에 대해서도 인권침해나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집주인이 부당하게 임대를 거부하거나 임대료를 부당한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합당한 이유 없이 퇴거를 요구할 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실현할 의무는 주거권 실현을 위한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창출할 의무다. 모든 사람들이 살만한 집에 살 수 있도록 저렴한 사회주택을 공급하거나, 토지, 주택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각종 규제들을 시행하는 것, 도시계획이나 개발 사업이 공공의 책임 아래 지역 주민들의 인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이러한 의무에 해당한다. 일부 국가들에는 주택에 대한 청구권을 명시하는 법률이 제정되기도 했다. 일정한 목표 기간을 정하고 가장 취약한 집단부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점차 모든 사람들의 주거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계획을 밝힌 것이다. 흔히 사회권은 점진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아예 권리적 성격을 부정당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당사국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경로나 방식은 다양하다. 국가의 주거권 실현의무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분명하다. 또한 이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는 것 역시 국가의 의무다.

사람들이 주거권을 누리는 데에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차별을 시정하는 것 역시 국가의 중요한 의무다. 특히 차별금지법은 "즉각적인 효력이 있고 전체를 관통하는 의무"다.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차별금지사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면서 규약 상 권리에 대한 평등한 인정, 향유, 행사를 무효화하거나 훼손하는 의도 또는 효과가 있는, 모든 종류의 구별, 배제, 제한, 선호, 기타 차등적 대우"와 "차별 선동과 괴롭힘"은 금지되어야 한다. 당사국의 법률이나 정책이 공식적으로 차별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차별을 발생시키거나 존속시키는 조건과 태도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주거권과 관련해 차별을 살필 때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물리적 주택의 공급이나 조건에 그치지 않는다. 주거권이 물리적 요건에 한정되지 않듯이 차별 역시 주택이라는 재화에 한정되지 않는다.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엄하다는 선언에 따르는 사회적 약속이다. 따라서 각각의 영역으로 구분되는 권리들은 사실상 서로 나뉘질 수 없고 긴밀한 상호연관과 상호의존성을 띠고 있다. 그것은 모두 인간의 '존엄', 즉 모욕당하지 않을 권리를 향해 있다. 다양한 정체성이나 사회적 조건들이 주거를 누리는 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를 살피는 것은 개개인의 구체적 삶에서 출발해야 한다. 각자가 처한 상황들이 다만 안타깝거나 서러운 상황이 아니라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인식의 전환은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주거정책의 정상가족중심성

소수자의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족상황차별의 문제와 함께 복합적으로 고민하면서 주거정책이 가족제도를 기반으로, 정상가족중심성을 전제로 설계되고 운영되어 왔다는 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 이유는 주거정책이 주거기본권이라는 원칙 아래 정립되었다기보다는 인구정책이나 경제부양정책으로 수단화되어온 것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정책은 경제정책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경쟁력이나 정체성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부여됨으로써 규범화 되어왔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 모델이 변하고, 남성가장이 자녀를 부양하는 4인 가족 모델이 규범화되면서 주거정책은 그것을 뒷받침 하는 물적 토대로 작용하는 성격이 있었다. 문제는 주택이 계속해서 "4인 가족의 내집 마련"에 맞춰 공급되고 있고, 내집 마련은 곧 '주택구입'에 맞추어져있기 때문에 주택공급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부채 증가에 따른 몰락을 가져오고 있다. 아래는 정부가 제시하는 가구생애주기이며, 이에 따라 주택공급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건설사 배불리기와 시세차익을 노린 계층상승 욕망에 따른 재개발 등을 불러일으키는 문제 외에도 더 이상 이러한 생애주기에 따라 살아갈 수 없는/살아가지 않는 많은 계층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생애주기를 가정하고 기본권에 해당하는 주거계획을 세우는 것은 다른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분	특성 및 내용
가구 형성기	31세: 결혼(평균 초혼 연령: 30.6세) 소득증가, 출산
가구 성장기	39~40세: 주택구매(결혼 후 주택구입: 평균 8.6년 소요) 40대 초중반: 교육비 증가, 소득증가, 주택구입 용자액 증가, 저축 증가
가구 안정기	47~50세: 주택의 교체(주택 구입 후 평균 8.5년) 56세: 퇴직, 자녀출가, 교육비 부담감소
가구 쇠퇴기	60세 이상: 주거 면적 감소 소득감소, 가족축소

특정한 생애주기, 정상가족규범, 계층상승의 욕망이라는 세 가지가 맞물려서 진행되어왔던 현재의 주거정책은 내 집이 없고 다른 생애주기를 겪거나 가족제도에 포함되지 못하거나 장애, 인종, 성적지향, 나이, [성별]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들의 주거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는다.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계급재생산이 유지되고 재생산 되는 현상이 규범적 집이며 그것이 '해체'되는 것은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으로 이해한다. 복지/가족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과 결혼이주민에 대한 지원이 있고 집을 마련하거나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것에도 정책적인 개입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잔여적인 형태로 한정된다. 최근 1~2인 가구를 위해서 도입했다고 하는 도시형생활주택 정책에서 중요한 대상은 1~2인 가구의 세입자가 아니라 이들로 부터 임대소득을 올리는 집주인이다. 따라서 '중계업자'로서의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임대료가

적정한지, 세입자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안정된 주거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시민권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주거공간을 어떤 방식으로 사고하고, 어떻게 구하고 점유하며, 어떤 이유로 이동하고 밀려나는지를 파악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활양식과 정체성, 사회적 지위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따라서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 드러나지 않거나 주변화 된 사람들의 권리는 재현되거나 대표되기 어렵다. 한국사회는 결정적으로 집의 소유자가 드러나고 그곳엔 그들의 혈연가족이 함께 존재한다고 믿을 뿐이다. 하지만 특정한 주거공간에서 어떤 행위가 규제되고 금지되고 혐오의 시선을 받는가를 보면 차별을 좀 더 문제화할 수 있다.

소수자들의 주거경험을 말하기 위해서 집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이야기가 필요하다. 사실상 집 없는 상태(홈리스)에 놓이게 되는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저주거기준이나 홈리스 개념과 맞물려 좀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홈리스에 대한 확장된 정의(노숙인-노숙인시설-쪽방/고시원/PC방/사우나-불안정하고 임시적인 거주형태)를 두고 경제적 빈곤과 함께 다양한 차별의 형태를 함께 파악해야 한다. 노숙인의 성별과가족 내 지위는 노숙의 동기와 기간, 형태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 인종,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은 홈리스상태에 놓이게 만드는 요인일 수 있으며그것은 가족상황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2) 장애인 탈시설 운동

장애인 탈시설 운동은 근대 국가의 시설수용 정책의 역사와 함께 한다. 일제 해방 이후 건국의 과정에서, 전후 복구 과정에서 국가는 집을 잃고, 가장의 보호를 받기 어렵고, 생존하기 어려운 이들을 시설에 수용하는 방식으로 ‘보호’하였다. 그러한 수용시설에는 임노동 불가능자, 부랑자, 노동 기피자, 탈가정하거나 가장이 보호를 철회한 윤락우려 여성과 우범우려 소년을 비롯해 제도화된 정체성으로 구획되기 어려운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했다. 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시설 비리와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는 시설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졌고, 진보적 장애인운동의 성장으로 시설민주화 운동은 탈시설 운동으로 이어졌다. 2020년대에 이르러 시설폐쇄라는 명확한 지향을 제시하고 투쟁하고 있고, 정신장애인 요양시설 또한 과도한 입소기간과 탈시설 지원의 부재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탈시설 운동 과정에서 드러난 수많은 운동의 과제 중에서 여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탈시설이 주거권과 가족구성권을 갱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거주시설이 주거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은 시설이 최소한의 신체적 안전을 물리적으로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일상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외출하고 시설 밖의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것인지, 성적 즐거움을 누리고 임신출산 등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누구와 혼인하거나 동거할 것인지 전혀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증의 지적장애와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신변보조가 필요

하고 혼자서 거동이 어렵고 의사소통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선택을 애초에 부정당할 수 없다는 선언이자 실천이다. 이는 시민권의 자격과 정상성 규범에 질문을 던지고 인간다움을 재정의한다. 시설이 제공하는 ‘안전’과 ‘보호’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위험의 존엄성’을 옹호하는 운동이다. 또한 시설에 수용되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초생활수급제도가 굴절된다. 시설장이 급여를 대리 수령하여 관리하는 상황인데, 이는 거주시설에서 거주인은 세대주인 원장과 동거하는 개별 세대원의 개념으로, 무연고인 경우에는 시설장에게 보호자 책임까지 주어지는 구조는 가족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권리가 박탈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도시의 인프라(건물, 도로, 교통수단, 의사소통을 위한 접근성 등)의 필요를 공공성으로 규정하고 마땅히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임노동이 아닌 시민공공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와 소득 보장의 방식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탈시설 이후 고립된 관계 속에서 생존하고 있는 이들이 많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의미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조력자들의 고민도 여전하다. 이러한 이슈는 가족구성권과 주거권에 포함되거나 그 사이에 있는 중대한 문제들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공성의 영역으로 인식될 필요가 다분하다.

3) 청소년 주거권 운동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에서는 ‘정해진 거처 없이 거리생활을 유지하거나, 타인의 임시적 호의에 기대어 잠자리를 해결하거나, 보육원이나 쉼터 등 시설에서 일시적으로 머무르거나, 고시원이나 원룸텔 등 비적정 주거환경에 머물고 있는 상태’에 놓인 청소년들을 ‘홈리스 청소년’ 또는 ‘탈가정 청소년’이라고 정의한다. 현재 청소년을 위한 ‘보호’ 정책은 원가정 복귀와 시설 보호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가족구성권과 주거권 모두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 (시설생활 경험을 가진) 아동·청소년들은 시설에서의 삶은 "원하는 사람과 살 수 없고 친구도 초대하지 못하고 시설에 산다고 말할 수도 없는 완벽한 거짓말 인생"이라고 말한다.⁰⁵

아동에 대한 양육 책임이 개인의 능력으로 수렴될때 빈곤과 가정폭력, 일방의 방임 등으로 혼

*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 원하는 경우,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한다. 이에 보장시설수급자는 보장기관 및 보장비용 부담기관의 명확화, 수급자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시설소재지로 수급자의 주민등록의 이전필요하며 보장기관은 시설수급자의 주민등록이 시설에 설정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안내) 진은선, "탈시설 정책은 자발적 퇴소를 지원하는가?", [시설사회, 제도화 이후에 무엇이 오는가 : 장애인 탈시설 운동의 현재와 미래] 포럼 자료집, 2021.11.16, 재인용(미간행)

자서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위기에 빠진다. 유기와 방임, 폭력으로 인해서 원가족과 분리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대안적인 가정 양육이 우선시되지 못하는 상황이 시설화를 촉진해왔다. 또한 오랫동안 이어져온 해외입양 중심의 정책 또한 대안가정 양육을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게 했다. 청소년 성소수자가 겪는 상당수의 고통과 탈가정의 요인도 가정폭력이며 탈가정 이후에 겪는 생존 불안은 이후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강제로 가족이 해체되지 않고, 가족구성원들 간에 불화나 폭력으로 인해 헤어져야 할때 취약한 상황에 있는 이들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가 해야 할 책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시설이 아닌 주거를 만들고, 혼자서 고립되지 않고 양육을 받아야 하는 아동이 공백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마련 뿐만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관계와 아동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이 필요하다. 이 형식을 구성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공동체’, ‘마을’, ‘이웃’, ‘선택한 가족’, ‘양육 책임을 공유하는 주체들’과 같은 것들이 새롭게 발명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커먼즈,* 공공, 공동, 공유의 개념과 실천이 어떻게 개입될 수 있을지 궁금하며, 이러한 조건을 만드는데 있어서 안정적인 주거의 확보는 필요충분 조건임이 분명하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분-가족제도 안에서 보호의 대상으로 놓이는 아동(그리고 아동으로 간주되는, 시대적으로 바뀌는 이 들)이 어떻게 가장(세대주)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온전한 시민인가에 대해서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4) 이주민/난민의 주거와 시민권

이주민과 난민의 주거권은 현재 복잡한 비자 자격 속에서 이주민을 분할 관리하고 난민을 심사를 통해서 극소수만 인정하고 있는 조건 속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이라는 기이한 이분법 속에서 마련된 이주정책은 한국의 정부가 일관되게 유지해온 경제성장을 위한 인구관리 정책 속에서 구조화되었다. 농촌총각을 장가보내기 위해서 시작된 결혼이주정책은 이주하는 여성들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생략하고 바로 ‘다문화가족’ 단위의 지원 정책이 수립되는 결과를 낳았다.

* "돌봄노동의 부담을 과중하게 져야 하는 여성들의 투쟁과, 도시민들이 공유하면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는 투쟁, 자연자원에 대한 절대적 소유권을 약화시키려는 투쟁, 금융자본의 약탈을 제어하려는 투쟁, 더 나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투쟁, 원자력발전의 중단을 요구하는 투쟁, 다양한 가족 형태와 성정체성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 등은 모두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의 사회에서 박탈당한 어떤 자원의 공유를 요구하는 커먼즈운동 속에서 만나는 것이 가능하다.(중략) 공동의 삶에 대한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돌봄이 가능한 삶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현실이 가능함을, 국가나 관만이 공공성의 담지자라는 인식을 넘어 커먼즈를 확대하는 것이 곧 공공성을 확보하는 과정임을 볼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가 직면한 돌봄의 위기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가 여부는 결국 위기를 통해 공유와 협동, 호혜성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적 실천과 가능성의 공간으로서의 커먼즈를 얼마나 확대해나갈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백영경, "복지와 커먼즈: 돌봄의 위기와 공공성의 재구성", [창작과 비평], 통권 제177호, 2017, 32;38쪽.

이주노동자와 난민의 경우 가족결합권을 부정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를 도구화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지위자들의 실질적인 삶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지역소멸이 대두되면서 지자체별로 이주노동자들의 정주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최근 나오고 있지만 주민을 정착하고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면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미지수다.

현재까지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으나 결국엔 정주할 권리와 가족구성권을 함께 논의해야 이주노동자들의 집이 삶을 재생산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주거권 운동과 가족구성권 운동이 만나 인구정책에 동원되는 기조를 비판하고자 할때 이주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어떻게 이러한 문제의식과 결합하고, 함께 총체적인 대안을 마련해나갈 수 있는가가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다. 가족과 집, 이주노동자의 삶, 노동, 관계가 다같이 함께 해방될 수 있는 비전을 마련해나갈 수 있는 비전이 필요하다.

5) 성소수자 주거권 운동

성소수자는 가족구성권을 부정당함으로써 주거권을 확보해나가는데 차별을 겪는 대표적인 집단이다. 또한 청소년 성소수자의 경우 정체성을 빌미로한 가정폭력 등의 경험을 하고 탈가정 한 이후 성별분리된 쉼터에 접근하기 어려워 홈리스 생활을 하게 되는 조건도 마주한다. 성소수자 중에서도 특히 트랜스젠더퀴어들이 열악한 주거상황에 살고있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이는 트랜스젠더퀴어가 학력, 소득, 종사상 지위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과도 연동된다.⁰⁶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하거나 동성결혼을 법제화해서 커플의 재산을 보장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하지만 모든 성소수자가 이런 관계를 등록하길 원하지 않을 수 있고, 특히나 성애적 커플이 아닌 동거 관계 또한 다수를 이루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거한다면 가족이나 커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내가 계약자와 어떤 관계인지를 증명하지 않고서도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성소수자 운동 차원에서 제기된 주거권 요구를 통해서 주거권이 물리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거를 함께 이루고 있는 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보호하고, 드러내고, 정치적 대표성에 기입할 것인가를 질문하도록 했다. 이는 성적인 낙인을 받는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처하는 차별과도 연결되는데 아동에게 유해하다고 여겨지는 퀴어, 성노동자, 미혼모, 유색인, 장애인이 경험하는 것과도 겹쳐진다.

6) 퀴어불구들의 난잡한 관계성들은 도시를 어떻게 바꿀까.

앞서서 언급한 장애인, 청소년, 이주민/난민, 성소수자, 따로 언급하지 못했지만 한부모, 홈리

스 등의 집단은 공통적으로 정상가족 중심의 인구정책과 그것을 추동하기 위해서 활용된 주거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온 집단이다. 이들은 청년일때라도 결혼이 기대되지 않고, 출산양육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기를 기대받지 않거나 구조적으로 금지된 이들이다. 이들의 나이들은 사회적인 관심사가 아니며, 가족 밖에 기댈 곳이 없다고 여기는 사회에서 이들이 대체 어떻게 삶을 재생산하고 있는지 질문하지 않는다. 동시에 이들은 가족구성권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저항집단이다. 이들은 '시설사회'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정상성과 생산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여겨지는 개인과 집단이 어떻게 도시에서 밀려나고 은폐되는지를 드러냈다. 이들의 주거는 열악하고 이들이 하는 노동은 무상으로 전유되고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되고 고통을 드러내기가 더욱 어렵고, 시설이나 요양병원을 유지하기 위한 몸으로 포획된다. 이러한 문제를 각자의 현장에 기반하되, 법제도와 지배질서가 구획한 문제제기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 서로의 몸과 현장을 가로지르며 집과 시설, 일터와 광장의 경계를 새롭게 인식하고 동료로 만나기 위해서 공통의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⁰⁷

권리의 지향과 형식을 갱신하려는 지금, 이들을 제도화된 정체성으로 다시 구획하고 호명하면서 개별적인 권리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는 여기에서 논의로 한다. 지금 주목하는 것은 주거권을 요구하는 얼굴들을 다양하게 드러내고,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기존의 부동산 정책과 주거복지의 틀로는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하고, 어떻게 공통의 급진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함께 그릴 수 있는가이다. 또한 이들의 삶과 관계와 필요가 포함된 주거권 운동이 사회 운동 전반에 제기하는 역할을 파악하고, 이들의 삶이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그 중요성을 반영하여 공통의 자원과 생존 전략을 어떻게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을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여기에서는 공공성의 재구성과 연결해보려고 한다.

3. 그리고 공공성을 재구성하기

위에서 살펴본 현장들을 가로질러 (미처 언급하지 못했지만 토론자가 충분히 이야기해줄 홈리스와 청년, 세입자들의 현장과 더불어) 어떤 공동의 인식과 행동이 가능할까. 그것을 위해 공공성이라는 키워드를 갱신하고 확장해보면 어떨까. 이제 본격적으로 공공성이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영역으로서 머물지 않고 사회적 관계와 권력을 재배치할 수 있는가를 질문해야 한다고 느낀다. 가족과 집의 문제를 다르게 사유하고 운동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공공성 개념을 함께 재구성하길 제안한다. 그 재구성의 길라잡이로 이 절에선 지배적 공공성, 대항적 공공성과 같은 언어를 통해 공공성 담론과 성장 담론 간의 관계, 공공성, 국가, 기업, 시민 간의 관계, 보다 근본적으로 공공성과 공공성 영역 밖으로 쫓겨난 이들의 관계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1) 지배적 공공성, 혹은 국가, 성장, 공공의 관계

공공성은 그 동안 사회운동을 하면서 국가와 자본의 억압과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주 지향이자 전략으로 내세웠던 개념이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사회를 재생산하기 위한 필수적인 노동과 재화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각성도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공공성 확보와 관련해 주된 논의는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고용을 보장하거나 공무원 신분을 가지게 하는 것, 소유와 관리의 주체를 기업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로 하는 것 등에 맞춰져 있다. 하지만 그러한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차별과 낙인으로 인해 그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배제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백으로 남겨져 있다. 이 공백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공공성이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 무엇으로 의미화되었는지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공공성 추구 개념은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자본/자산의 증식과 모호하게 결합되어 있다. 고원은 성장담론이 공공성을 전유해왔다고 주장하며 서구에서 공과 사를 배타적으로 구성해온 것과 달리 한국사회의 경우 탈식민과정에서 국가주도의 경제성장 일변도의 국정기조는 공과 사 모두 경제성장 기조아래 식민화되었고, 신자유주의가 유입되면서 효율성으로 변모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최근까지도 성장담론은 거의 항상 분배나 복지담론을 압도 해왔다. 이는 성장이 하나의 강력한 공공성 담론으로 자리잡아왔음을 나타낸다.”는 것이다.⁰⁸

한편 하승우는 식민지 지배체제가 공공성을 약화시켰다고 진단한다. 일제 강점기에 도시는 민중을 관리하는 체제였고, 농촌은 식민지를 위한 식량기지였기 때문이다. 공설, 공립이라는 말이 그때 등장했지만 대부분 이주 일본인을 위한 공간이었다고 한다. 그러한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19~20세기 민중 반란의 토대였던 시장과 광장과 같은 장소들을 밀어내고 시민이 공적인 삶을 누릴 장을 대체하며 공공성을 점차 축소시켰다. 그러면서 한국의 공공성은 정부가 주민에게 베푸는 시혜성 정책으로 대체되었고 시민이 주체적으로 함께 구성한다는 과정의 의미는 사라졌다고 진단한다. "공공성의 반대말이 민영화보다 사유화에 가깝듯, 공적인 대안도 국유화가 아닌 공유화에 가깝다."⁰⁹

그동안 국가가 공공성을 독점해온 탓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밀려났던 철거민은 그냥 불법적인 존재로 남겨지고, 공공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공적인 논의에서 밀려나 타자가 되었던 주민, 시민들은 이기적인 '사적 개인'으로 위치지어져왔다. 통신은 사유화되었고, 전기는 공공성이 '유지'되고 있지만, 밀양지역에 송전탑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몰아내고 땅을 포기하라고 회유했던 것은 한국전력이었다. 따라서 국가의 소유도 아닌, 사적 소유도 아닌 공공의 소유가 무엇인지, 특히 주택과 관련해서 어떤 대안을 가질 수 있는지 더 논의해나가야 할 것이다.

2) 대항적 공공성, 혹은 공공에서 밀려난 이들의 공공성

나아가 가족이 대항적 공공성의 영역 속에서 다시 논의된다는 것은 단지 시민의 욕구를 가족화, 시장화 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가족구성권에서 주목하는 고립을 넘어선 결속과 친밀성을 통한 존재들의 출현과 의사소통 접근성의 확보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현재 혼인/혈연 관계만을 인정하고, 인구정책을 위해서 도구화되고, 중심의 가족제도 속에서 부정당하기 때문이다. 인구정책은 성장의 가치만큼 출산을 중요한 공공의 자산이라고 보고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한다. 공공의 자산이 증가하는 것은 좋다고 여기는 것은 어떤 몸이 성장의 도구로 동원되고 도구화되는지 볼 수 없고, 이 과정에 공공성의 개념 또한 훼손되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공공을 호명하고 해석하는가에 대한 투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배적 공공성에 대항하기 위해서 국가가 아닌 작은 단위의 공동체를 많이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태현은 '작은 共' 개념을 "첫째, 국가가 아니라는 의미, 둘째, 거시적 사회구조보다는 보다 미시적인 실존적 삶에 가깝다는 의미, 셋째, 공권력을 향유하기보다는 그로부터 자유로움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 특히 구성원들에 대해 억압적 지배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구성원들을 위해 외부에 대한 억압적 지배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¹⁰로 사용하였다. 이 개념을 통해서 가족과 공동체가 단지 사적인 관계/공간으로 공적 공간과 대비되는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지배질서로부터 식민화되거나 경제성장을 위해 베이스캠프처럼 도구화되지 않도록 하는 대항 논리를 적극적으로 형성해나갈 수 있다.

권리를 확립하고 보장하며, 그것을 이행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면서도 국가가 결정을 독점하지 않도록 하는 것, 하지만 단지 개인들의 선택권의 확장이 아니라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인 조건을 함께 만들고, 그 조건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것, 공공성이 대중의 요구로 치환되고 포퓰리즘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에 출현하지 못한 배제된 자들의 목소리와 몫을 길어올리는 것이 사회운동이 해나갈 역할이라는 것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는 투쟁의 목표이자 전략이다. 특히 재생산권 운동을 재생산정의 운동으로 바꾸어내려는 페미니스트/퀴어의 오랜 투쟁을 통해서 참조할 수 있다. 하나의 예시로서 미국 등에서는 임신중지가 일부 합법화되고 보건정책 안에 위치시키고 건강보험으로 적용시키는 등의 제도화를 한 뒤에도 유색인종과 원주민은 임신중지를 결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실행하지 못했다. 이는 정착식민주의와 노예제도가 구조화한 뿌리깊은 인종차별이 "합법화된 권리"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는 실질적인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이 정치에서 가장 기본적인 항쟁의 라인은, 생명의 어떠한 필요를 공공적으로 대응해야 할 욕구로 해석하는 담론과, 그러한 필요를 개인/가족에 의해서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재-개인화하는' 담론 사이에 있다. 프레이저에 의하면 후자가 취하는 전략은 새로운 욕구로 해석되고 제기되는 것을 '가족화 및 혹은 '경제화'하는 것이다. 요컨대 공공적 대응을 요구하는 욕구를 가족이나 친족을 통해 충족되어야 할 것, 스스로의 힘으로 시장에서 구매해야 할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그 욕구를 다시 공공적 공간에서 추방하는 탈-정치화의 전략이다." 사이트 준이치, [민주적 공공성], 윤대석, 류수연, 윤미란 옮김, 이음, 2009, 80쪽.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법을 만들고 실행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의 기조와 정책을 특정한 방식으로 만드는 권력을 해체하고 어떻게 하면 권리가 '합법'의 틀 속에서 간힘으로써 불법화 된, 타자화된 존재들을 출현시키고 공론장에서 함께 논의하고, 권리의 주체로 상호인식하고 인정할 것인가로 연결되어야 한다.

3) 우생학적 충동을 거절하는 공공성

그간의 공공의 개념이 너무 협소해서, 서구적 맥락에서 형성된 공-사 이분법의 구도 속에서 한 국가의 현실을 설명할 수 없어서 지금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고, 공공에서 배제된 존재와 가치들을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비정상이라고 여겨져온 이들은 공공성 안에서 어떻게 포함될 수 있는가, 그러한 낙인이 공공성을 축소시키고 통치에 종속되게 만들었다면 대항적 공공성, 대안적 공공성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도 따라나올 수밖에 없다. 공공성이 공리주의로 쉽게 이해되는 분위기에서 공공성의 가치는 우생학적 충동을 단호하게 거부하는가? 좋아보이지 않은 것, 다수에게 이롭게 느껴지지 않은 것, 누군가를 기본상하게 하는 것, 낯설고 혐오스러운 것, 불필요해 보이는 것, 정말 사적으로 보이는 것, 너무나 실현하기 비용/노력이 부담스러운 것, 소수만을 위한 것... 이런 것들은 대항과 대안의 자리에 기입될 수 있을까. 사이트 준이치는 지배적 공공권에 대항하는 것 또한 공공성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을 따라가다 보면 공공성에서의 소수자는 소수자 정체성을 가지고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집단이라기보다, 제도가 구획한 정체성 집단이 아니라 공론장에 진입하지 못한, 고립되고 고독한 삶을 살도록 강제당하는 개인들이다. 타인에게 보여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경험을 배제당한 이들도이다.***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다. 집안에서, 친밀한 관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존재와 경험이 은폐되고 있는지, 그 안에서 벌어지는 비임금 재생산 노동과 돌봄과 쾌락, 즐거움과 우정이 생존에 미치고 있는 중대한 영향들을 모두에게 접근가능한 자원이자 권리로 만들어어나가는 것 또한 공공성과 관계된다. 다시말해 기존 개념의 공공성에서 가장 멀게 느껴지는 영역 속에서도 공공성을 발견하는 것은 무상으로 무가치화된 것들을 다시 건져올려서 변혁적인 것으로 구성하는 것과 관련될 수 있다는 말이다.

** "자신들의 '필요'에 대해 바깥으로부터 부여된 해석을 문제삼고, 자신들에게 부여된 '정체성'을 의문시하며, '정상이 아니다', '열등하다', '뒤쳐져 있다'는 식으로 폄하되어 왔던 자기 삶의 존재 방식을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등, 재해석/재정의의 실천이 시도될 것이다. (중략) 대항적 공공권의 대부분은 그것을 형성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생명을 배려하는 '친밀권'이라는 성격도 갖고 있다. (중략) 자기 주장을 실행하고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장소에서 긍정되고 있다는 감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사이트 준이치, 위의 책, 36~39쪽.

*** "고독한 삶이 제기하고 있는 것은 정체성에 대한 승이라기보다도 존재에 대한 긍정이기 때문이다. 자신은 없어도 상관없지 않나 하는 존재의 현실성에 대한 의심은, 타인과 다른 나의 삶의 방식이 동등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존중과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나 슬픔보다 더욱 통절한 것이리라." 사이트 준이치, 위의 책, 40쪽.

집안에서, '가족' 안에서 상호돌봄이 가능하고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할 책임과 역할을 '공공적인 것'으로 구성할때 고립되고 배제된 개인과 집단이 집과 가족 안에서 존엄함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법적으로 승인된 관계만을 지원하는 질서에 도전하고, 상호돌봄과 시민들의 유대가 왜 서로의 생존 뿐만 아니라 사회재생산에서도 절박한 실천인지를 드러낼 수 있게 한다. 생물학적 재생산을 하지 않아도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비인간 동물과 상호돌봄을 지속하는 것, 비영리적 시공간을 가꾸는데 참여하는 것, 정치적인 행동에 참여하는 것이 재생산이며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중요하다. 가족구성권은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성을 확장하고 도전하는데 기여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가족을 구성할 권리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가족, 시설, 관계, 국가를 떠날 권리와 떠난 이후에도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 또한 공공성의 문제로 제기하는 것이다. 그래야 집을 배분받을 능력이 나 자격에 규제하는 현 체제에 맞서서 주거권을 인권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을 형성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 01 이관후, 「국가가 통째로 소멸을 결심했다... 한국, 절망의 이유는?」, 한겨레21, 2023년 6월 23일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4055.html
- 02 제이슨 W. 무어,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 김효진 옮김, 갈무리, 354-355쪽. 박이은실, "만기된 청구서의 도래와 가부장체제적 자본축적양식의 종말: 텃밭이 우리를 구할 수 있을까?",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제10회 학술대회 발표문, 2023.12.23.(미간행).
- 03 가족구성권연구소, [가족을 구성할 권리, 가족을 넘어선 가족 - 가족구성권연구소 창립 기념 발간자료집 2006-2018], 2019.(미간행)
- 04 소수자주거권확보를위한 틈새모임, [주거권과 가족상황차별 - 소수자 주거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며], 2012. (미간행)
- 05 정찬송, "우리의 탈시설은 모두의 지역사회 삶을 만든다", [모두를 위한 탈시설 포럼 "우리의 탈시설은 모두의 지역사회 삶을 만든다"], 2023.5.16. 재인용. <https://yhrights.notion.site/956c3d2e830f467d8d259aebb4546f6f>
- 06 성소수자 주거권 네트워크, [성소수자, 주거권을 말하다]. 2021, 미발행. 성소수자 주거권 네트워크, [불안한 삶과 집: 성소수자 집을 말하다- 트랜스젠더 남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2022, 미발행.
- 07 장애여성공감 기획, [시설사회], 와온, 2020.
- 08 고원, "공공성의 재구성", [황해문화], 2014 가을, 29쪽.
- 09 하승우 지음, [공공성], 책세상, 2014, 13쪽.
- 10 최태현, "공과 쫓의 사이에서: '작은 쫓'들의 공공성 가능성의 고찰", [한국행정학보], 제53권 제3호, 2019, 11쪽.

홀리스 운동 경험의 몇 가지 부연

이동현 | 홀리스행동 상임활동가

dobin87@gmail.com

1. 체제 문제로서의 주거 문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노동력 가치의 최소 한계는 “인간이 자기의 생명 과정을 갱신”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이때, “음식물·의복·난방·주택 등”과 같은 재생산 수단은 연명할 만큼 먹고, 비가 새는 판잣집에 새우잠 자는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 이 필수적인 욕구는 “한 나라의 문화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평균적 범위”(Marx 1867, 226-228) 내 충족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노동자가 임금으로 평균적 수준의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일의 한계에 대한 싸움 만큼이나 보편적이고 치열한 전장(戰場)이라 생각한다. 노동자가 적정한 재생산 수준을 누릴 수 있는지 여부는 단지 임금 ‘금액’이 아니라 ‘수준’ 차원에서, 총자본과 총노동이 맞선 투쟁 몫이다. 어찌 될지도 모르는 미래의 임금을 끌어올 게 아니라(빛), 자본에게 그 몫을 빼앗거나(임금), 국가를 매개로 한 사회 임금(복지)으로 요구해야 한다. 자본주의 내에서 적정한 주거에 산다는 일은 개량이나 제3의 대안으로 넘을 수 없는, 노동일과 마찬가지로 ‘권리와 권리가 서로 맞서’고 ‘힘이 문제를 해결’(Marx 1976, 313) 하는 차원의 문제다. 엥겔스는 당시 영국 사회를 관찰하며, 노동자들이 ‘주택’을 구하기 위해 무거운 저당 채무를 지고 이를 상환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부과되는 어떤 노동 조건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은행 빛에 저당 잡힌 한국 사회 노동자들의 모습과 같다. “이미 지금 대도시에는 합리적으로 이용할 경우 모든 현실의 ‘주택난’을 즉각 시정할 수 있기에 충분한 주택용 건물이 있다.”(Engels 1887, 194-195)는 서술은 현 시기 한국사회의 주택보급률과 부동산시장을 일컫는 듯하다. 맑스는 불량주택의 철거와 도심 고급화로 더욱 열악해지는 빈민들의 주거상태를 언급하며 “집세는 그 질에 반비례해 비싸”고 주택투기꾼들은 빈곤을 광산 삼아 이윤을 채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Marx, K. 1867, 896). 흡사, 강남 고급 아파트 단위 면적당 임차료보다 1.5배나 비싼 쪽방의 실태를 말하는 듯하다. 맑스에게 주택문제는 자본주의적 축적, 자본주의적 소유관계의 적대성의 명백한 발현이다. 엥겔스 역시 “주택난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제도이며, 주택난은 그것을 발생시키는 전체 사회 질서가 그 기초로부터 변형되어야만 비로소 위생 등

등에 미치는 그 반작용과 함께 제거될”(Engels 1887, 207) 문제로 인식된다.

2. 제안된 주제 몇 가지에 대한 부연

그렇다고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폐지’를 부적처럼 되뇌거나,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처럼 ‘공중누각’을 지을 수는 없다.* 누구도 지름길을 알려 주지 않았기에 현재의 조건들에 선, 현재의 상태를 폐기해나가는 ‘현실의 운동’을 벌일 뿐이다(Marx·Engels 1845~1846, 67). 주거 문제는 기본적으로 체제 문제이기에 일면적으로 접근될 수 없고, 발제자들이 제시하였듯 같은 심급에서 발원하는 기후위기, 젠더, 가족주의 등의 이슈와 교차·융합하며 실천해야 할 것이다. 발제자들이 제안한 이러한 주제들을, 그간의 홈리스 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부연하는 수준에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1) 가족주의 견어내기

가족주의는 사회복지제도에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 국민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이 대표적이다. 주거정책의 대상 선정에 있어서도 그렇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무주택세대주의 조건을 ‘성년자’로 정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주거 대책을 가족에게 떠넘긴다. 「노숙인복지법」상 ‘노숙인 등’은 ‘18세 이상의 자’로, 18세 미만자를 제도 외로 내몬다. ‘원 가족 복귀’라는 가족주의가 정책에 녹아든 탓이다. 가정 밖 청소년들은 ‘친구 또는 선·후배 집’(72.5%)에서, ‘건물이나 길거리 노숙’(23.0%)을 하며 살아간다(참여정·이정민, 255). 집을 벗어나는 원인도 폭력, 학대에 따른 ‘생존형’의 비율이 가장 높아(허민숙 2021, 8), 원가족 복귀는 ‘해결’이 아니라 ‘문제’에 가깝다. 법률은 ‘노숙인 등’의 개념에 주거가 없어 가족이나 친구들과 더부살이를 하는 이들**을 포함하지 않고, 가시적 주거형태(사실상 거리, 시설, 일부 쪽방 만을 포함)만으로 협소하게 정의한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지 않더라도 동일 세대로 규정하고 있다. 그로 인해 사실상 이혼 상태로 오랫동안 홈리스 상태에 있었더라도 임대주택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아니면, 주거를 선택하기 위해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배우자와 상면하여 협의 이혼을 하는 복잡 심란한 과정을 겪어야 했다. 홈리스주거팀*** 등 단위의 일부 요구가 반영돼 2022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상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기준이 바뀌어 기

* 오웬은 1825년에 미국 인디애나주에 3만 에이커의 토지를 구입하여 ‘뉴하모니 평등촌’을 건설했으나 실패하고 2년 후에 귀국하였다(Marx·Engels 1848, 149).

** 유럽연합이나 OECD 등은 이를 포함한 7가지 범주로 홈리스의 인구를 파악한다.

*** 홈리스 주거문제에 집중 대응하기 위한 상설연대모임으로, 16개 단체(2023년 말 기준)가 함께 하고 있다.

초생활보장제도 상 개별가구로 인정하는 세대원은 구성원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서 사실 이혼 상태의 일부는 입주 신청이 가능하게 됐으나 다양한 비수급 빈곤층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 여러 제도 속에 꼼꼼하고도 광범위하게 녹아 있는 이런 문제들을 사회운동이 함께 찾고, 바꾸었으면 한다.

2) 공공임대, 대출보다 가까운 주거 대안으로

한국갤럽이 지난 1월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본인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74%로 나타났다고 한다. 다양한 심리가 반영된 응답이었지만 공공임대주택이 주거 확보 대안으로 큰 고려가 되지 못하는 현실도 작용했을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얼마 되지도 않는 물량에다 분양전환임대나 사실상 임대료 용자프로그램에 불과한 전세임대주택 등 여러 형태가 혼재한다. 지속 거주가 가능한 영구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재고의 1%에 불과하다(2022년 기준). 공공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영구 거주할 수 있도록 재계약 횟수의 제한을 폐지해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이미 현행 법제(「공공주택 특별법」)는 재계약 횟수 제한뿐 아니라, 임대주택 유형마다 각각의 훈령을 통해 재계약 소득·자산요건을 심사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2중 필터의 하나만이라도 들어내자고 요구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작년, 매입임대주택 제도 도입 20년을 한 해 앞두고, 20년으로 설정된 최대거주기간을 확대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오래살자 임대주택 주민모임'이 조직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전세임대주택 최대거주기간만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했을 뿐, 매입임대주택 거주기간은 손대지 않았다. 전세, 매입임대주택 모두 입주자의 기존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유형임에도 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만을 연장한 것은 돈 안 쓰겠다는 것 말고는 해명이 안 된다. 모든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부동산 시장으로 팔려나갈 상품으로서의 성격을 탈각시키고, 보금자리로서 그 사용가치만을 용인하도록 전환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공공임대주택이 보편적 주거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공급 확대에 노동자 민중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총량은 줄어만 가는데 세대와 계층을 줄 세우는 배분 전략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시도들에 함께 맞서야 한다.

3) 공공장소의 울타리 허물기

봉건 영주는 사라졌을지언정 공유지(common land) 울타리 치기는 계속되고 있다.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입한 소규모 휴식 공간인 '공개공지'는 홈리스의 출현이 빈번해진다 싶으면 폐쇄적 조치가 시작된다. 홈리스가 앉거나 눕지 못하게 벤치에 (팔걸이로 위장한) 분리대를 설치하거나, 주변을 가시덤불로 두르는 식의 적대적 건축물(hostile architecture)을 설치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지하철 옆 소공원은 거리 홈리스가 상주하자 아예 울타리를 둘러쳐 폐쇄시켜 버렸다. 서

울시는 2012년, ‘공원 안전 종합 대책’을 수립한 후 공원 안전 점검을 하기로 했는데 ‘불안 요인’으로 “노숙자, 비행 청소년, 취객, 기타”를 포함, 이들 중 하나만 포함되더라도 ‘RED(위험) 등급’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2017년 5월, 서울시는 공원 형태로 개장한 ‘서울로 7017’ 운영 조례를 제정하며 “눕는 행위, 노숙행위 및 구걸행위 등 통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제한하려 하였다. 홈리스 운동의 대응에 “눕는 행위, 노숙행위 및 구걸행위 등 통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되었으나 나머지 조항은 포함되었다. 서울역, 부산역 등 철도역사 내 홈리스 퇴거조치와 이를 위한 인력 고용, 역광장과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생활하는 노숙 물품의 임의 폐기처분 같은 조치는 일상화되어 있다. IMF 이후 급증한 실직 홈리스들로 텐트촌을 이뤘던 서소문공원은 ‘노숙자 예수’라는 이름의 조형물은 있으나, 실물 ‘노숙자’는 있을 수 없는 공간이 되어 버렸다. 철도 역사 등 공공장소의 민간자본의 침투, 이들의 이윤을 위한 기반시설의 봉사는 오래된 관례다. 서울지역은 지속적으로 지하철이 늘어나며 지하연결통로* 개설이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초까지 원칙 없이 민간사업자의 개별적 신청에 의해 통로가 개설되고, 2012년에야 관련 조례가 제정되는 등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공공적 통제와 운영은 미흡하다. 그 사이 민간사업자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이윤 확대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으로 지하공공보도시설에서 하루하루 의탁하는 거리 홈리스들을 퇴거시키고 규율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실제와 다른 허위 시설물**을 통해 이런 행위에 마치 정당성을 부여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 역시 지하보도 내 다양한 상업시설들을 입점하는 대신, 거리 홈리스의 존재를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여 퇴거시키고 있다. 작년 8월, 서울시의원 47명은 서울역 광장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서울역 광장 건전 이용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이윤을 위한 공간, 지배계급의 규율의 공간으로 변질되어 진입할 수 있는 사람과 공간의 용도를 강제하는 공공장소에 대한 율타리 치기는 심화하고 있다. 공공장소의 쓸모는 무엇인지, 홈리스의 임시피난권을 비롯해 공공적 이용은 어디까지 확장되고 재규정될 수 있는지 노동자 민중이 함께 토론하고 제도로서 확정하자.

3. 나가며

반성이고 다짐이다.

* 지하철역, 지하도상가 등과 인접 사유건물 대지 내 또는 사유건물 내를 연결하는 통로.

** 경계표식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중구청이 소유 관리 주체인 ‘서울역 앞 지하보도’에 “서울스퀘어 관리구간”이라는 시설물 경계표식을 부착하였는데, 홈리스행동이 문제를 제기하자 2023년 7월, “중구청 관리구간”으로 바뀌 다는 주먹구구식 대응을 하기도 하였다.

학습하자! 홈리스행동은 홈리스 당사자 조직은 아니지만, 홈리스 상태를 만드는 구조를 철폐하는데 홈리스 당사자의 조직된 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믿는다. 그러기 위해 당사자들과 함께 홈리스 상태를 근원적으로 인식하는데 나아가야 하나 그렇지 못하다. 자본주의 너머에 대한 이야기는 발화조차 되지 않고, 각종 제도와 정책을 이해하고 비판하는데 노련하다. 엘리트주의에 경도되지 않도록 함께 학습하며 투쟁하기 위한 긴 호흡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조직하자! 홈리스의 생활세계는 주거뿐 아니라 고용, 의료 등 많은 부분에서 사회복지의 자장(磁場)에 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들은 당사자들을 순응시키는 경향이 있다. 자본주의 통치 도구로서의 기원, 기금 재원, 운영 주체의 특성 등이 버무려진 결과일 것이다. 일테면,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치력 향상 프로그램은 운영하면서도, 당사자가 조직을 만들고 세력화 될라치면 화들짝 놀라는 식이다. 이런 식의 길들임에서 벗어나도록, 특히 서울시 내 대부분의 쪽방 지역이 재개발 이슈에 놓여 곧 재산권과 주거권이 침해하게 부딪히게 될 것을 예비하며 쪽방 주민들이 주거권 투쟁의 주체로 서도록 집중하자.

연대하자!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뿌리로 하는 다양한 사회운동과의 연대는 홈리스 운동의 건강을 담보하는 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요즘 절실하게 느끼는 바는 이주민과의 연대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거나 진입하지 못한 이주 홈리스들은 본국, 한국 양측의 사각에 있다. 「주거기본법」은 주거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노숙인복지법」은 문언상으로 국적을 불문하나 외국인을 실제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주민으로서 홈리스 상태라는 극한의 빈곤을 경험한다는 것은 더욱 가혹할 수밖에 없다. 국적과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이주민 홈리스들도 의식주의 기본적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요구를 정선하고, 지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01 Marx, K. 1867, 김수행 역, 2015, 자본론 1권(상·하), 비봉출판사.
- 02 Engels, F. 1887, 최인호·김석진 역, 1998, 주택 문제에 대하여,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4, 박종철 출판사, pp.163-267.
- 03 Marx, K-Engels, F., 1848, 남상일 역, 공산당선언, 백산서당.
- 04 Marx, K-Engels, F., 1845~1846, 박재희 역, 독일 이데올로기, 청년사.
- 05 허민숙, 2021, 홈리스 청소년 지원 입법·정책과제: 가정복귀 프레임 넘어서, 국회입법조사처.
- 06 황여정·이정민, 2020,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너레이션 렌트, 소유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돌보고 존엄하게 머물 세계를 꿈꾸자

지수 | 민달팽이유니온
minsnailunion@gmail.com

1. 너 평생 세입자로 살걸?

제너레이션렌트

"너 평생 세입자로 살걸?" 이라고 들으면 기분 어때요?" 라고 묻는다. 불안하거나, 불쾌하거나, 저주의 말같거나, 아무래도 쪽 세입자일 것 같긴 한데 막상 그리 불리니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찝찝함이 밀려오는 이들의 얼굴을 마주한다. 사실 평생 세입자로 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사는 내내 햇빛과 바람과 반려동물과 함께 평온하게 머물 집을 찾아해매이다 죽으라는 말과 다름 없기도 하며, 벽 하나도 네 뜻대로 꾸미지 못하고 살면서, 갑자기 쳐들어오는 임대인이나 중개인을 참아가면서, 집에 갑자기 비가 새도 참아가면서, 월세 오를까 관리비 오를까 눈치보면서, 임대인의 변심과 재개발과 모종의 사유로 원치 않는 이사를 해야 하진 않을까 불안해 하면서, 이사 나갈 때는 보증금 떼일까 전세사기 당할까 걱정하면서, 새집 구하러 다닐 때는 코 베이지 않을까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서, 그러나 운이 나쁘면 보증금 떼이고 계약금 날리고 전 재산 날리고 수십 년을 빚진 채 내 삶의 기반을 처음부터 다시 쌓는 위험이 도사리는 무법지대와 다름없는 주택임대차 시장에 내던져진 삶을 살라는 말처럼 느껴진다. 그러니 불쾌하고, 수궁하다가도 우울하고, 체념하다가도 짜증과 반감이 들기 일쑤다. 반응을 보며 매번 확신한다. 여기서. 우리가 버티고 서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기, '세입자'다.

2. 세입자 꼭꼭 숨기기

권한 없이 도시를 빌려 살아온 세입자들

평생 세입자로 살아가는 이들, 제너레이션렌트는 이미 한국 사회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때

년 짓겠다고 나서는 주택의 수는 연간 40-50만호를 넘나드는 와중에, 자가점유율은 수십 년간 60%를 넘지 못하고 있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6%가 채 되지 않는다. 청년 1인 가구 10명 중 8-9명이 전월세 세입자로 살며, 상위 20-30%만이 이용가능한 법한 분양/청약/주택구입 자금대출 정책을 기웃거린다. 한국 사회는 집을 소유하지 않은 채 남의 집을 빌려쓰는 이들을 무주택자 혹은 실수요자라 부르는 것에 더 익숙하다. 주택 소유자들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된 한국의 도시 개발 및 부동산 정책은 도시로부터 세입자를 끊임없이 배제하고 타자화시켰다. 수십 년 동안 연간 수십 만호를 공급해온 이 땅에서, 사람보다 집이 더 많은 이 땅에서, 그러나 장기공공임대는 전체 주택의 100분의 6도 채 되지 않는 이 땅에서 세입자들은 몸 둘 곳을 찾기 어려웠다. 이 땅에 사는 이들 10명 중 4명이 세입자이지만 이들은 소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시가 어떻게 구성되어가는 지에 관여할 권한을 티끌만큼도 나눠갖지 못한 채 도시 곳곳을 빌려 살아왔다.

소유해야만 주거 안정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처럼 치부되어 온 관계

세입자들에게 보장되지 않은 몫은 고스란히 주택을 소유한 이들의 것이 되어 그것이 마땅한 순리인양 여겨졌다. 소유권은 곧 발언권이었다. 이 집, 이 동네, 이 도시에서 소리내고 모이고 세력화할 수 있는 힘처럼 쓰였다. 주택 소유자들의 힘은 도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저층주거지와 판자촌과 성매매집결지와 녹지와 농림을 개발하겠다는 목소리, 새로운 브랜드 아파트를 짓고 복합쇼핑몰을 유치하는 것이 우리의 품격을 높여준다는 목소리, 이를 위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고 공부지를 영구히 팔아넘기겠다고 호언장담하는 목소리들을 알알이 구성하며 도시 구석구석을 굴러다녔다. 이 힘은 민간주택임대차에서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로 이어져, 세입자들로 하여금 세입자이기에 모욕받는 세계를 이뤄냈다. 세입자가 집을 구할 때 감히 임대인과 중개사에게 이것저것 따져 묻지 못하도록, 곰팡이와 누수 같은 주택하자 또는 주거침입이나 불시방문같은 사생활침해 정도는 운 나빴다 생각하고 감내하며 살도록, 세입자 자신이 정주 및 이주 계획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없도록 하는 질서를 형성하고 공고히 해왔다.

3. 자가소유담론과 청년담론, 세입자를 기만한다

경로에 놓인 미완의 존재이 토양 위에서 청년과 후발세대의 주거불평등이 펼쳐진다. 청년은 새롭게 주택을 구매할 소비자로서만 계산된다. '내 집 마련'이라는 직관적인 표현과 함께, 안정된 주거 상태는 집을 사적으로 소유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 세입자 청년은 아직 집을 소유하지 못한, 월세-전세-자가로 가는 주거사다리의 경로에 놓인 미완의 존재로 분류되고, 세입자 상태에서 겪은 불평등과 차별은 장차 집을 소유함으로써 해소될 그 미래에 도달하고나면 자랑스

러운 무용담이 될 일시적인 문제로 여겨진다. 다가오지 않은 혹은 다가오지 않을 지도 모를 미래를 저당잡힌 채 오늘 당장의 위기와 불안은 덜 중요한 것, 나중에 해결될 것, 하위 카테고리, 그래도 우는 소리가 심하면 가끔 껴주는 무엇 정도로 위치한다.

주거사다리라는 판타지, 영끌담론이라는 기만

영끌담론은 기만이다. 2019-2021년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3년 사이 주택소유자는 50대 이상 연령대가 79만6천명 증가했고, 특히 60대에서 45만6천명 증가했다. 반면, 30대의 주택소유는 9만5천명 감소했다. 오히려 청년세대에서 증가한 수치는 부채였다. 2017-2022년간 만29세 이하의 부채 증가율은 109.5%로, 전연령(29.2%)보다 급격히 늘었다. 통계청과 언론은 이를 영끌때문이라 보았지만 실상은 달랐다. 만29세 이하 가구주의 담보 대출 사유 중 부동산 마련은 2017년 61.2%에서 2022년 33%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 반면, 전월세보증금 마련은 36.9%에서 64.5%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럴 만도 하다. 청년 가구 10명 중 1명만이 자가에 살고 있고(국토부, 2022년 청년 가구 자가점유율 13.2%), 이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영끌했다면 보증금 때문이었을 테다. 그러니, 연령대 하나 빼고는 절대 균일하지 않을 청년이라는 인구집단에게 굳이 일반적인 얼굴 하나를 갖다 붙인다면 그건 적어도 영끌은 아니어야 했겠다. 그러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집값을 빗 내서 조달하는 적극적 주체로 청년을 호명하고, 그것에 정상성을 부여하며 정치는 잇속을 챙겼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재개발 재건축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에 정상성을 부여하는 것과 다름 없는 정부여당의 횡포를 목도한다. 그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고 동조하는 정치세력까지가 하나의 패키지를 구성한다. 그 모습을 보고 있다보면 기가 차다.

청년이라는 포장지로 싸맨 주거불평등

기존 사회 질서가 가진 관성은 청년에 관한 공공의 개입에서도 손쉽게 우위를 점하는 저력을 보인다. 청년주거빈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공감대를 얻었던 공공임대 확대의 필요는 보증금 2억4천만원짜리 행복주택과 월세 100만원짜리 역세권청년주택(청년안심주택)으로 수렴됐다. 기존 사회 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에도 청년이 호명된다. 청년들의 집에 대한 꿈과 희망을 복원하겠다는 선언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조치와 함께 펼쳐진다. 친모와 월세 살던 청년이 재개발로 강제퇴거 당한 뒤 숨지기 전까지 친모가 살 공공임대를 소원했다. 여기에 청년의 얼굴을 붙여 호들갑 떠는 이는 하나도 없다. 그래야 한다는 게 아니라, 청년이란 것은 포장지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재개발 재건축은 그 자체로 소유자들의 권리인양 받아들여지고, 그곳에서 쫓겨나는 세입자의 삶은 그 자체로 존엄을 훼손 당하며, 청년이라는 연령대는 아무 쓸모를 내보이지 못한다.

기존 사회 질서에 포섭되는 요구들

도시 곳곳에서 쫓겨나는 세입자를 위한 전담부서는 없어도, 신통개발부서를 신설하여 도시 곳곳을 누비며 주민들을 만나고 조직하는 데에는 공공이 빠르게 앞장선다. 미혼 청년 전용 청약 특별공급을 만들겠다는 정책 선언은, 미혼 청년의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제한하는 정책 개선 과제보다 훨씬 신속하게 추진 및 도입된다. 심지어 2024년 최근에는 정상가족 중심의 주거 정책으로부터 배제된 소수자 주거권에 대한 요구는 비혈연 가구의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기이한 정책을 마주하고 있는 형국이다. '청년'을 위한다며 떠들석하게 도입됐던 50년 주택담보대출 제도의 실제 이용자 중 절반 이상인 52.3%가 주택소유자였고, 40대 이상의 비율은 70.0%였던 것을 생각하면, 이 정책의 실상이 어떨지는 이미 뻔하다.

4. 맴도는 정치, 참을 수 없다

반성과 성찰 없는 정치

2024 총선을 앞두고, 현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은 청년을 내세운 '내집마련' 정책을 발표하고 재개발 재건축 공약을 선불리 뺏어내기 바쁜 와중에, 민주당이라고 해서 별반 다를 게 없다. 민주당에서는 청년 공약으로 공공기숙사 공급을 내세웠는데, 수십 년째 공회전 하고 있는, 심지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던 21대 국회에서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던 공약을 어떤 반성과 성찰 없이 그럴싸 하게 내세우는 모습이 참으로 나태하다. 기숙사를 비롯한 시설화된 공간과 인권 침해 실태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고 있는 공간에 관한 문제의식은 결여된 채다. 보호의 이름으로 통제와 감시가 이뤄지는 주거공간에 대한 문제의식 또한 부재하다. 그나마도 지역사회 내 조직된 주택 소유자 및 원룸장사꾼들의 정치적 동맹으로 결성되는 공공임대/기숙사 반대 목소리에 공공이 중재자의 역할을 하거나 이를 위해 개입하는 정치는 발동되지 않는 채 무산되거나 무기한 연기되었던 것이 수두룩 하다. 서울 성동구에도, 광진구에도, 전국 곳곳에서도 방치된 문제다. 그러니 이 공약은 참으로 헛헛하다.

'빛 내서 집 사라', '빛 내서 세 살라'

최근 여야는 2024년 청년 월세 지원 정책 개편을 합의하면서 청약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고작 20만원을 1년 지원하면서 월 120만원 버는 청년에게 수 억원에 달하는 주택 분양을 위한 월 5~10만원 청약을 요구하며 사실상 또다시 청년들에게 '빛내서 집사라'고 말 건네는 것과 다를 없다. 어디 그 뿐인가, 전세사기 피해자 중 3분의 2가 청년층일 정도로 청년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가 극심하지만, 거대양당 어디에서도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논

의는 부채하다. 청년 가구 10명 중 9명은 세입자이지만, 이들이 지금 당장 겪고 있는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들은 정부와 국회 어디에서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토양 위에서 견고해져가는 불평등은 청년세대를 비롯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삶에서 크고 작게 벌어지는 위기들을 그저 우리가 정상 궤도에서 벗어났거나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에 겪는 개인적이고 언젠가 노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문제로 취급하는 기존 질서를 지탱하는 또 다른 기동으로 기능한다.

'세입자'를 긍정하는 사회운동의 정치를 만들고 싶다

지겹다. 우리는 언제까지 생존을 위해 빚 지며 살아가며 주택 소유를 선망하고 지향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왜 지금 당장 불안정 노동을 하는 나, 영끌해서 겨우 보증금을 마련하는 나, 평생 세입자로 살아가게 될 나를 그저 더 나은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경로'에 놓인 존재, '미완'의 존재로 취급하는 사회를 감내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 자체로 존엄하고 평등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은 채, 기존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는 연료로 쓰이고 있는 삶으로는, 이렇게로는 살 수 없다. 2010년대 청년운동의 주체로 자임해왔던 청년단체 중 하나였던 민달팽이유니온은 스스로에게도 묻는다. 우리는 무엇에 청년의 얼굴을 붙이는가. 우리는 무엇을 문제라 말하며 청년문제를 이야기하고, 청년담론을 구성해왔는가. 답은 분명하다. 청년과 주거 운동을 해나가고 있는 민달팽이유니온에게 지금 당장의 우리, '세입자'를 긍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기존 사회 질서가 요구하는 정상 궤도 바깥에 놓은 이들의 삶을 함께 긍정하는 시간. '나중에' 정상 궤도에 올라서면 나아질 것이라며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유예시키는 기존 사회 질서가 야기하는 지금 당장 여기에 있는 우리 삶의 위기를 함께 말하고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세입자'로 사는 것 것이 그 자체로 불안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라면, 필요한 것은 그런 삶들의 존엄을 지금 당장 보장하지 않는 기존 질서를 바꾸기 위한 움직임이다. 우리는 세입자여서, 불안정한 주거 상태에 놓인 삶을 차별하는 질서 자체를 바꿔야 한다.

5. 세입자 착취하기 편한 사회, 를 전부를 뒤집어야

세입자 착취하기 편한 사회

마음껏 세입자를 착취하고 모욕해도 괜찮은 사회에서 비로소 소유권 중심의 주택 체계가 완성된다. 저렴하고 안전한 장기공공임대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많은 세입자들은 민간임대시장에 나와있는 주택을 몰색하고 사적인 계약을 통해 일정 기간 점유하고 머물 거처를 마련한다. 이것은 생각보다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기에, 세입자는 자신이 계약했던 내용 이상의 피해

를 보게 되더라도 그것에 대응하는 일에 몹시 취약하다. 불안정한 주거 상태는 세입자이기에 겪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로 취급된다.

무법지대와 다름없는 주택임대차시장

민달팽이유니온은 세입자를 높은 집값을 지탱하는 연료로 전락시켜왔던 한국 사회의 부정의하고도 무법지대와 다름없는 주택임대차시장에 관한 문제제기를 지속해왔다. 수십 년간 세입자는 임대인의 사금융, 심지어 대출이자도 없고 상환날짜를 마음대로 주물러도 괜찮은, 간편하고도 관대한 사금융 수단으로 쓰여왔다. 세입자는 주택임대차계약을 통해 세입자가 되는 것만으로는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 절차를 마친 뒤에도 다음날 0시가 될 때까지 대항력이 없는 무의 상태에 머물다가, 대항력이 생기면 그 때부터는 또다시 혹시나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비하여 소액임차인의 기준을 임대인이 먼저 빚진 날짜와 비교하며 확인해줘야 하고, 확정 일자를 갖춰 우선변제권을 획득한 뒤 만약을 대비하고, 실제로 집이 경매 넘어가면 배당순서에 따라 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 반환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매일같이 살아냈다. 이 나라의 세입자들이라는 건 참으로 불완전한 존재였다. 어느 집에 살고 있지만, 그 자체로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로는 존엄하지도 평등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집으로 돈 버는 사회의 수레바퀴는 끊임없이 세입자를 굴러왔다. 현재에 이르러, 이 나라의 세입자들은 빚을 내서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고, 임대인은 그 돈으로 집을 구매하고, 깡투기는 몇몇한 부동산 투자의 유형 중 하나로 유행처럼 번져나가며, 집세는 계속해서 치솟아왔다.

당연하게 여겨왔던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질서

세입자들이 얼마나 쉽게 보증금을 떼이는지,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시작은 세입자가 중개사와 임대인에게 자신이 몸 둘 곳에 대한 질문 하나 마음 편히 하지 못하는 관행을 강요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세입자는 중개사로부터 임대인에 대한 설명이랍시고, '롤스로이스를 탄다', '주택이 500채가 있다', '강남에 산다', '관악산에 위치한 대학교 교수다', '성형외과 의사다' 따위의 말을 듣는다. 이런 말들을 위안삼은 채 무지막지한 보증금을 넘겨주는 것이 세입자에게 허락된 역할의 전부와 다름 없다.

들어올 때도 쉽지 않지만, 나갈 때도 쉽지 않다. 세입자 김아무개씨가 임대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말하면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가 올 때까지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한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리저리 휘둘린다. 민달팽이유니온 주거상담에는 "전세 계약 만료 통보 후 3개월이 지났지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는데... 우선 임차권설정등기 신청까지 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려니 막막하고, 변호사 선임비도

비쌉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걱정하는 세입자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겠다고 하니까 공인중개사가 말합니다. 그러면 집이 더 안나간다고 하면서요. 부모님도 일단 3개월은 기다려보자고 합니다." 라고 걱정하는 세입자들이 모여든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열악한 주거환경을 참고 사는 것도, 또다른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도 전부 세입자의 몫이다. 그러다보니 중국에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현금 유통이 원활하길, 사업이 망하지 않길, 보증을 서준 것들이 무탈하길 바라야 하는 지경에 이른다. 이 모든 불안은 세입자의 몫이다. 세입자가 이 불행에 빠져든 이유를 찾는 화살은 구조가 아닌 세입자 개인을 향한다. 애당초 그런 집을 '계약'한 세입자의 탓으로 취급된다.

사실 대다수 부동산업자들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가하는 '보증금 미반환' 행위를 문제로 생각조차 않는다. 그저, 몹시 일반적인 주택임대차시장의 관행으로 여긴다. 이것이 단순히 악습인 것을 넘어, 세입자로 존재하는 이들의 존엄 자체를 뒤흔드는 일이라는 생각을 일절 하지 않는다. 이토록 당연한 관행과 질서를 두고 세입자가 계약만료시점에서의 보증금 반환을 요구 하는 것은 도리어 그 자체로 '뻔뻔'하고 '돈 밝히는' 행위로 취급된다. 그리고 더 모욕적인 언사와 협박까지도 감당하겠다는 신호로 분류된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세입자가 일정 정도의 모욕을 견디는 것에는 그것이 '모욕'이라는 것조차 인정되지 않아왔다. 이미 형성된 권력 관계가 그랬고, 이를 방치한 제도가 모욕을 일상화하고 평범한 질서 중 하나로 작동하게끔 사실상 승인해왔다. 왜 이것은 법과 제도가 개입할 영역으로 다뤄지지 않았던가.

세입자들의 폭탄 돌리기

그 빈자리를 감당한 것은 세입자 개인들이었다. 한국의 세입자들은 수십 년간 복불복으로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폭탄 돌리기를 이어왔다. 이름모를 세입자 아무개씨가 모욕을 뒤집어쓴 그 자리에 또다른 아무개씨가 뺏도 모르고 그 집에 살겠다며 거처를 옮겨왔고, 불행은 반복됐다. 때때로 그 불행은 잠시간 끊기기도 했고, 금세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관계 사이에서 싹텄다. 세월이 흐르며 세입자들이 짊어진 임대인들의 집값은 더욱 거대해졌고, 국가가 마치 대출브로커처럼 역할하며 홍보하고 보증을 섰던 대출 또한 더 커지고, 더 흔해졌다. 한국 사회에서 주거용 임대 행위를 하는 이들은 제 마음대로 임대료를 정할 수 있기에, 임대인은 마음껏 2년마다 보증금을 올렸다. 그리고 그 무게를 감당하는 것이 곧 세입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감당해야 할 마땅한 순리인 것처럼 여겨졌다. 전월세를 살려면 임대인이 요구하는 보증금을 빚져서라도 마련해오는 것, 운이 좋다면 대출 정책을 활용하는 것, 그렇게 마련한 돈을 임대인에게 내줘야 비로소 어딘가에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 만약 계약만료 후 이사가고 싶다면 임대인이 원하는 순간까지 기다릴 것. 이 모든 과정에서 세입자는 돈 들어오는 통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존재로 취급됐다. 임대인은 세입자들의 삶이 담긴 보증금으로 또 다른 주택을 사들였다. 다주택자들의 주택소유도 계속해서 늘어났다. 세입

자들의 보증금은 오랜 시간에 걸쳐 임대인의 자산을 증식시켜주는 수단으로 전락해왔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먹이 삼아 임대인은 부를 축적하고, 중개사들이 이것을 견인했으며, 정부의 정책이 전세대출과 전세보증제도를 통해 이러한 상호작용을 원활하도록 도왔다. 그 결과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로 고통받는 세입자들의 피눈물이 전국 곳곳에 흥건하다.

전세사기는 악덕한 개인이 자행한 것이 아니다. 법과 제도가 채워내야 했을 자리가 수십 년간 비워진 상태로 주택임대차시장이 세입자의 고향 빨아먹는 것에 익숙해졌을 뿐이다. 국가는 이를 오랫동안 방치했고, 사실상 용인했다. 세입자의 삶이 쉽게 위태로워지고 세입자의 존엄이 쉽게 훼손당할 수 있도록 방치한 것, 이 책임에서 그 어떤 정치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간 정치는 보증금 떼이는 위험에서 안전하지 못한 일상이 지속되는 것이 얼마나 존재 자체의 불안으로 이어지곤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보다, 오랫동안 세입자의 삶 자체가 곧 울분어린 상태의 지속을 의미하는 것처럼 취급하며 자가소유 중심의 정책들을 펼치는 것을 중심으로 하며, 역대 정부의 주요 기조를 구성해왔다.

6. 세입자여도 존엄하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한 집에 머물 수 있다

소유 중심의 주택 체계를 완성하는 세입자의 설움과 모욕

보증금 떼인 이들이 세상에 던졌던 울분은 그렇게 길을 잃어왔다. 세입자로 사는 삶은 참으로 불안하기 짝이 없으니 어서 돈 모아서 내집마련을 하자 혹은 그렇게 위험한 곳에 함부로 뛰어들지 말고 부모의 집에 살다가 대출 받아 자가로 바로 넘어가자는 말 사이, 그 어디에도 세입자로 존재하는 이가 그 자체로 존엄하고 평등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상상은 영영 탈락되어 있었다.

어느 개인이 그 자신이 세입자라는 이유로 보증금을 떼이고, 어떤 모욕을 뒤집어쓰게 되면, 그 때 느꼈던 절망은 향후 집을 구하는 모든 순간을 크고 작게 지배한다. 심지어 이것은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세입자로 살아가는 삶 자체에 대한 위기감을 조성하고 불안감을 높이는 보증금 미반환의 경험은 그 자체로도 고통스럽지만, 개인의 내면을 너머 그 바깥에도 영향을 끼친다. 그 사람의 가족과 공동체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끼친다. 사회구성원들은 내가 존엄하게 머물 수 있는 집이라는 건, 세입자로 사는 동안에는 획득할 수 없는 것이라는 왜곡된 세뇌를 뒤집어쓴다. 이들 사이에서 가능한 사회적 합의란 절망적인 요구로 수렴되고야 만다. 정주하기 위해서는, 그런 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임대인 없는 세상에서 이 한 몸 두며 살기 위해서는, 내 집 마련만이 답인 것으로 취급된다. 그렇게 또 더 많은 개발과 신축 아파트 분양의 명분 중 하나는, 세입자의 삶이 이토록 서럽고 모욕적이라는 지점에서부

터 시작하지 않을까. 논리적으로 부적합할 순 있지만, 누군가의 삶은 그렇게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보증금 폐이는 세입자를 방치하는, 세입자 권리 보호 체계의 부재 자체가 분명 어떤 파급효과를 낳고 있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은 그 자체로 모욕적이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통보와 억지에 따라,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계획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조성한다. 항의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는 모욕적인 언사를 통해 수치심을 느끼기도, 공포와 무력감, 때로는 자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한국 사회는 구조적으로 세입자에게 심리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를 떠넘기고만 있다. 세입자로 사는 이들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위협에 노출되고 불안에 떠는 것으로부터 누가 이익을 얻는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순간마다 경험하는 크고 작은 모욕은 누구의 이익을 위한 댓가로 치뤄지는가. 계약을 앞세워 누구의 피해가 정당화되고, 누구의 이익이 온전히 보호되는가.

세입자가 어떤 모멸감을 견디는 동안, 이것은 반대로 누군가의 명예이자 지위, 권력을 반증하는 장면들을 완성시킨다. 빛이 있기에 어둠이 있듯이, 세입자가 겪는 모욕은 임대인이 한국 사회에서 획득해둔 사회적 명예가 있기에 가능하다. 모욕하지 말라는 요구, 내 권리를 보호하라는 요구는 한편으로는 임대인이 기존에 획득해두었던 명예를 일정 수준으로 내려놓아야 한다는 요구이기도 하다.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모욕당하지 않고 존엄하게 거주하고 정주하고 이주하고 싶다는 욕구는 집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어떤 형태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던 이들의 내려놓음을 필요로 한다.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 임대인과 중개사와 이해관계자들이 절대적으로 사수하고 정당화했던 구조, 그것에 대한 변화를 필요로 한다.

세입자여도 괜찮은 사회

우리에게는 세입자여도 괜찮은 사회가 필요하다. 보증금 미반환을 요구하는 세입자를 뻔뻔하고 정 없고 버릇없고 예의없는 이로 취급하면서 누가 이득을 보는지, 사회가 함께 직시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어떻게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를 넘어, 애당초 그런 주택을 누가 제공했으며 누가 그것의 거래를 용인했고 누가 그것을 세입자의 서명하는 손 아래 위치시키며 한순간 모욕과 불평등의 장면에 세입자를 홀로 방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나가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4가지 요건으로 판별하고 피해자 인정을 받아봤자 실효성 있는 구제책 하나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갇혀선 안된다. 현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폐쇄적이고 비좁은 공간에 갇혀 논의하기엔, 세입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불안과 모욕이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으며, 개인과 가족, 공동체 모두를 크고 작은 지옥에 빠뜨리고 있다.

7. 소유하지 않아도 상호 돌보고 머물 수 있는 권리

집은 자산 증식 수단이거나 금융상품이기에 앞서, 살아 있는 이들이 존재할 자리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기본 단위다. 집은 기후위기 재난으로부터 서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자, 친밀한 관계를 맺은 이들이 공동체를 꾸리고 돌봄을 주고받는 공간이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기초적인 안전 대책이자, 나아가 사회적 재생산이 가능하게 하는 장소가 집이다. 누구에게나 집이 필요하다. 세입자에게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으나 안전하고 존엄한 집이 필요하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지난 2022년, 120명의 청년들에게 물었다. 집을 소유하고 싶다면 왜 그러한지에 대한 설문예, 가장 1순위로 꼽힌 답은 '정주할 권리'에 대한 욕구였고, 2순위는 '임대인이 없는 것'에 대한 응답이었다. 한편, 점유 안정성이란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합부로 쫓겨나지 않고 안전하고 존엄하게 거주할 권리를 이야기 한다. 한국은 너무나도 점유 안정성이 낮은 형태로 주택임대차시장이 방치되고 있기에, 수십 년간 한국 사회에 존재했던 세입자들은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존엄할 수 있는 세상을 합부로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어쩌면 이것은 세입자를, 집을 소유하지 않은 이를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존 사회 질서에 대한 변화의 욕구를 내포하기 있기도 하다. 세입자가 일상을 살아가며 마주하게 되는 불안과 모욕을 해소할 방법에 대한 구상이 필요한 때다.

8. 소유하지 않은 이들이 존엄하고 평등하게 머물 자리를 함께 점유하자

내나라 공공임대, 팔지마 공공의땅, 지켜라 세입자권리 라는 구호는 누구도 배제하거나 낙오시키지 않고 서로 돌보며 함께 존엄하고 평등할 수 있는 집의 '공공성'을 이야기 한다. 소유하지 않아도 상호 돌보고 머물 수 있는 권리, 이것은 사실 지구의 모든 것을 빌려쓰고 있는 이들 모두에게 필요한 권리다.

존재할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은 '이대로 멈추자'는 말과 동의어가 될 순 없다. 예를 들자면, 지옥고 주택이외의 거처에 사는 가구가 86만에 달하는 지금, 모든 개발을 멈추자고 말할 순 없다. 다만 무엇이 잘못된 개발이었는지, 우리에게 어떤 도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함께 이야기 하고 싶은 것들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다. 주거환경정비를 핑계 삼아 벌어졌던 무자비한 개발과 투기를 멈추자. 도시에 이미 포화 상태인 주택들을 공공선매권을 통해 매입임대로 사회화하자. 쪽방과 같은 열악한 주거지를 공공 주도로 개발하고 우리 모두의 땅과 집으로 확보하자. 이미 확보되어 있는 공공부지는 더 이상 민간에게 팔아넘기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생계를 함께 하고 서로 돌볼 수 있는 집으로, 기존 주거 정책에서 배제되던 소수자들을 포용하는 모두의 도시로 동료시민

들과 함께 상상하고 시도하는 곳으로 만들자. 지금 당장 민간임대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권리를 그 자체로 존엄할 수 있게 함께 되찾자. 우리가 어떤 집에서 어떤 동네와 도시에서 살아왔고 살아 가고자 하는지, 소유가 아닌 존재로 이야기 하자.

2024 체제개선운동

불평등을 가르치는 학교에 저항하는 연대를 위하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 신자유주의는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이라는 한국사회 교육의 오랜 문제와 맞물려 학교의 구조와 문화를 빠르게 변화시켰다.

양극화의 심화, 기후위기, 차별과 혐오 문화 등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공교육의 목표와 역할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틈도 없이 능력주의, 각자도생, 위계와 차별, 배제와 혐오가 우리 교육 곳곳에 켜켜이 스며들어 문제를 키워 왔다. 2023년 여름 안타까운 교사 사망 사건은 이러한 다층적인 학교의 구조적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었음에도 이에 대한 토론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수 정권이 내세운 “교권 대 학생인권”의 프레임 안에서 교육 주체 간 연대마저 더욱 위태로워졌다.

교육 체제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들 간 관계의 재구성, 불평등을 내면화하고 차별을 확산하는 교육 내용의 재구성, 교육제도의 재구성,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의 재구성 등 다층적 전환이 모색되어야 한다.

무엇을 전복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공유하는 동시에 불평등을 가르치는 학교에 저항하는 새로운 주체 간 연대를 상상하고 그 힘을 모아나가야 할 때다.



가로지르길2
문자통역 QR코드

세션 진행

사회: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발제1. **교육 체제 전환, 무엇을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가**

-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발제2. **학교를 체제전환을 향한 저항과 연대의 공간으로**

- 보란 (교육노동자현장실천)

토론1. 연혜원 (투명가방끈)

토론2. 진냥 (연대하는 교사잡것들)

토론3. 김중미 (기차길옆작은학교)

토론4.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준비팀

교육공동체 벗,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연대하는 교사잡것들, 인권교육센터 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투명가방끈,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교육 체제 전환, 무엇을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가*

존엄과 평등의 이름으로 경쟁철폐와 탈성장을 함께 이야기하자

난다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n23podo@gmail.com

학교/교육은 오랫동안 사회운동의 부문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지금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교육 문제는 주로 일부의 교육정책으로서, 그중에서도 입시제도를 어떻게 바꾸느냐의 차원에만 초점을 맞춰 논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로는 소위 '교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교육당국은 '학생인권 대 교권' 대립 구도 프레임을 내세우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교육 체제의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교육/운동을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려고 한다.

1. 교육/운동 돌아보기

먼저 우리 사회가 교육(학교)을 바라보고 대하는 방식과 태도 전반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이 교육이 사회로부터 분리된 곳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한다. 교육이 사회의 여러 문제나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어린이·청소년을 '알아서 잘' 가르쳐 주길 기대한다. 그러면서 어떤 사회 문제가 불거지면 현재 사회에서 해결하기 버겁게 느껴질수록 그 해결을 교육에 맡기려 하며 특별한 교과목이나 교육을 밀어 넣는다. 경제 발전을 위해 경제·경영 교육을, 창의성 있는 인재를

* 이 글은 교육 세션 준비팀 및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청시행)' 공부모임에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한 글이다. 준비팀은 이진영(청시행), 서경(교육공동체 벗), 김진, 보란(교육노동자현장실천), 우둘, 진냥(연대하는 교사잡것들), 연잎, 개굴(인권교육센터 들), 난다(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연혜원(투명가방꾼)으로 구성되었다.

길러내기를, 정치와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성차별과 성폭력을 줄이기 위해 페미니즘 교육을,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생태환경교육을 하기를 바란다.

반면 학교 교육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좁게는 교사나 전문가를 중심으로, 넓게는 ‘교육 3주체’란 이름으로 학생이나 그 양육자 정도가 관심을 가질 일로 생각된다. 학교가 각종 사회 문제와 불평등을 반영하는 장이며 교육이 불평등을 정당화한다는 것이 가려지는 이유다. 대학입시 문제가 교육 이슈 중 그나마 가장 주목받는 이유는, 한국 사회의 촘촘한 학력·학벌 차별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학입시가 교육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바깥의 사회로 연결되는 장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배분되는 과정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학교에서 지워지거나 밀려나는 것들

발제를 준비하며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청시행)’ 활동가들과 두 차례의 공부 모임을 진행하며 지금 학교에서 무엇이, 어떤 존재들이 추방되고 있거나 학교에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지를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연대, 협력, 노동, 민주주의, 실수/실패, 지금, 소외된 것들에 대한 질문, 병풍처럼 앉아 있지 않는 이들 등이 학교에서 추방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었다. 조금씩 다르지만 비슷한 결의 고민이 오갔다.

최근 교육부의 ‘생활지도고시’^{*}를 보면 현장의 구성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입시를 위한 교육을 진행시키기 위해 ‘조용히, 가만히 있으라’는 메시지를 반복할 뿐이다. 이러한 메시지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학교에서 중요한 것은 평가를 통해 점수를 받아서 자리를 부여받는 일이다 보니 특히 상급학교로 갈수록 입시와 상관없는 모든 것들이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다양한 문제 상황 속에서 서로를 돌보려고 하는 교육적 시도도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어떤 존재들이 조용히 사라져버렸거나 보이지 않게 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지금 교육이 어떤 관계를 학습하도록 만들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점점 강력해지는 학생인권과 ‘교권’의 대립 구도는 그나마 구축되었던 교육운동의 연대도 깨뜨리고 있다. 몽글은 〈교육공동체의 (불)가능성과 학교라는 ‘장소’〉라는 글에서 “장소를 만든 구조는 사라진 채 개인만이 그 장소에 덩그러니 남게 되면, ‘폭력 교사’ 혹은 ‘무능력한 교사’와 ‘악성 민원인’만이 남는다”며, “학교라는 구조가 어떤 ‘장소’를 만들고 그 ‘장소’에 어떤 사람들을 배치하는지, 배후의 권력과

* 청소년인권단체들은 교육부가 2023년 9월 시행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학생 소지품 검사 및 압수, 수업방해 학생 분리 조치, 반성문 작성,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학생인권을 후퇴시킨다고 비판했다.

그 권력의 효과는 무엇인지 질문하지 못한 채 일부 몰지각한 개인을 비난하고 처벌하는 데 머물게 된다”고 이야기한다.⁰¹

지금 학교는 무엇이 문제인지 발견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질문과 토론은 허용되지 않은 채, 각자 주어진 과업을 견디며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각자도생 체제는 ‘정상성’에 맞지 않는 유형의 시민들은 더욱 배척하고 경쟁에서 탈락시킨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역할과 속도의 규범을 따라가지 못하는, 따라가지 않으려 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워지고 있다. 이주 배경, 발달장애, 성소수자 학생 등은 잘 보이지 않고 교육 의제로서 제대로 등장한 적도 없으며 그 곁에서 다른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도 같이 밀려나고 있다. 이렇게 지워지고 밀려나는 존재들은 어디로 흩어지고 있을까. 공존도 연대도 불가능한 지금의 체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어쩌면 지금 필요한 것은 다시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기존과는 다른 기반을 다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길을 내는 것일지도 모른다.

얼마나 나아졌을까

입시경쟁폐지는 교육운동의 오랜 구호였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⁰²라는 구호로 알 수 있듯 오래전부터 문제로 제기되었다. 그동안 교육과정도 수차례 바뀌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었다. 서열화를 기반으로 한 평가 시스템은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경쟁 체제라는 근본적 문제에 대한 인식 공유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정시 강화, 공정한 시험과 선발에 관한 논의로 수렴되었고 오히려 문제제기가 더 어려워지는 풍토를 형성했다. 정용주는 <공정의 담론에 갇혀 버린 교육, 그래서 더 비극적인>이라는 글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의 기초를 언급하며 “특히 공정한 입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화하면서 ‘수능과 학종 중에 무엇이 더 공정한가’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으며 “조국 사태에 대한 교육계의 대응 역시 수능과 학종 둘 중 어느 것이 다른 하나보다 더 공정하며 불평등을 덜 유발하는지에 대한 논쟁으로 축소되었”다고 말했다.⁰²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했던 2020년에도 한국의 공교육은 평가와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등교가 미뤄지고 온라인 수업을 확대할 때도 어떻게든 진도를 나가야 했고, 시험 성적으로 나타나는 ‘학력 격차’가 중요한 고민거리가 되었다. 수업 일수를 줄인다면 교육과정이나 내용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논의하기 이전에 그 조치가 수능 시험에서 고3 학생과 재수생 중 누구에게 유

** 1986년,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유서를 남겼다. 당시 신문에 공개된 학생의 유서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유서의 내용을 토대로 1989년에는 영화가 개봉되었고 1994년에는 가수 안치환의 노래(정확한 제목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로도 만들어지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리하게 작용하느냐 하는 논란이 먼저였다.⁰³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고졸자 중 대학 진학 희망자와 재수생 등을 포함한 자원자 수는 47만여 명이고 대학 모집 정원은 48만 5318명이다. 말하자면 진학 희망자 모두가 대학에 가는 게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입시 경쟁은 해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입학 전형이 다양해진 만큼 치러야 할 경쟁도, 갖춰야 할 스펙도 더 복잡다단해졌다. 지금 우리 사회 교육의 목표가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열화와 경쟁이라는 근본 틀이 그대로인 이유는 주류 교육운동에서도 개인 능력 논리와 공정성 논의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공교육 살리기(정상화) 운동’이나 ‘사교육비 부담 완화’라는 주장으로 등장했다.

교육 시장화라고 하면 교육이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 경제력 영향을 받는 소비 대상이 되거나 자본에 개방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공교육은 이미 시장 안에 있고 지금이 ‘시장적’이고 ‘자본주의적’이다. 학생을 상품화하고, 노동 시장에서 전문직-노동력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하는 곳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 자본주의적 욕망과 기대의 장소로서 학교는 운영되어 왔다.

진보교육감에 물음표를 띄우다

소위 ‘민주·진보교육감’(진보교육감)이 여럿 당선되고 지역 교육의 담당자가 되었던 지난 10여 년은 교육운동을 성찰하고 체제 전환을 위한 운동을 새롭게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더 뚜렷하게 보여 준다. 교육감 직선제나 교육자치의 확대는 성과였고 진보교육감의 정책에 힘입어 변화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진보교육감을 당선시키는 것’으로는 교육이 바뀔 수 없다는 한계들도 총체적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진보교육감이 직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해 교육운동의 가능성과 동력을 상실하게 되기도 했다.

진보교육감이 취임한다고 해서, 전체 지자체 중 과반이 진보교육감 집권 지역이 된다고 해서 교육이 그만큼 진보적으로 바뀌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전반적인 교육 체제와 정책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교육감이 개별 정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진보교육감 표 정책’으로 교육을 바꾸려 해 온 시도는 기존의 학교와 교육 관련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교육감이 행사 가능한 행정 권력을 활용해 변화를 만들려는 것이었다. 진보교육감들의 기조 또한 교사를 비롯한 학교 노동자, 학생, 양육자 그리고 시민 등을 교육의 주체로 세우고 민주적인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이었다기보다는, 행정적 수단과 지시를 통해 교육의 간판이나 색깔을 ‘진보’로 바꾸려 한 것에 더 가까웠다. 권한의 한계 때문이든, 애초에 그런 문제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든 교육 관련 주체들의 지형과 관계를 바꾸는 데는 소홀했다. 오히려 형식적으로만 확대된 ‘참여’, ‘거버넌스’ 등은 아래에서부터의 조직화와 참여의 의지를 꺾을 때도 있었다.

누군가 한국의 10대들 사이에서 어찌다가 '민주화'나 '참교육'이 혐오 용어가 된 건지 모르겠다고 말하자, 그 연구자가 대답하길 자신이 보기에 그건 '민주화나 참교육을 파시즘적으로 배워서'라고 말했다. (...) 형식적 절차를 따른 모든 논의는 처음부터 발언 기회를 갖지 못하는 물리적 억압보다 더 강력한 '침묵의 봉인'이라는 효과를 만든다. 이런 형식적 절차들은 말하고 싶은 마음,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 주도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를 꺾고 소멸시키기 때문이다.

- 교육공동체의 (불)가능성과 학교라는 '장소' (몽글)⁰⁴

진보교육감의 한계는 시간이 지나며 운동적 가치의 훼손과 보수화를 불러왔다. 정치적이고 운동적인 노력은 강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민주·진보교육감'이 교육운동의 어느 진영을 대표하는 존재인 듯 되면서 진보교육감의 당선을 위해 정책이나 언어가 보수화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진보교육감은 우리 편'이라는 인식 속에 제도권 권력과 사회운동 사이의 긴장감을 잃기도 했다. 공현은 <진보 교육감 기획은 계속 운동일 수 있는가>라는 글에서 "기존의 교육 제도나 교육계의 기득권층에 대한 반대가 '진보' 교육감이라는 기획의 동력이었던 것"이며, "진보교육감의 시대는 교육운동 단체에서 활동하던 이들 중 적잖은 수가 교육청으로, 구청으로, 도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시간이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⁰⁵ 교육운동의 몇 안 되던 주체들이 교육청 공무원이 된 것"은 운동을 할 사람이 모자라게 된다는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를 낳았다.

진보교육감과 교육운동이 함께 강화되고 서로를 견인하거나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했는데, 반대로 교육운동이 약화되고 행정으로 흡수된 것이 '진보교육감을 통한 운동의 플랜'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교육을 정치적 의제로 다루고 사회적으로 조직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운동성은 희미해지고, '교육감'이라는 체제 내의 자리에 매몰되어 진보교육감의 개별적·부분적 정책들에 주력하게 된 것은 아닌가? 지금 교육운동에는 이러한 질문과 성찰이 필요하다.

2. 교육체제전환을 위한 상상

지금까지 교육/운동을 돌아보며 무엇을 문제로 바라볼 것인지를 이야기했다. 이제 어떤 전환을 고민해야 할지, 그리고 전환하는 과정에서 무엇에 주목해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층적인 구조와 고민들 속에서 우리가 교육 체제 전환을 이야기할 때 빠뜨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교육의 목표와 학교의 존재 이유에 관한 재사유이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교육을 꿈꾼다면 현 체제와 그 체제를 유지시켜 온 많은 것들과 단절을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 혹은 교사들의 경우에는 혁신학교들로 모이는 모습도 나타났는데, 이 역시 정도는 달라도 지역에서의 운동 동력에 약영향을 미친 경우도 있었다.

우선 교육 체제의 전환을 우리의 사회 전반,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문제와 함께 연결지어 상상해볼 것을 제안한다. 개인이 자신을 더 많이 쥐어짜고 개발함으로써 경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체제, 그렇게 해서 자본에 잘 복무하여 더 많은 것을 생산·소비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성공한 삶이라고 제시하는 체제는 더 이상 지속불가능하다. 시험능력주의*에 지배당하는 현 교육 체제는 사회적 불평등과 착취의 결과물이며, 이러한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학습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공부 안/못 하면 저렇게 산다(가난해진다)’ 류의 협박과 낙인이 가능한 사회가 이를 보여 준다.**

기후위기 시대, 탈성장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 체제 역시 불안과 경쟁의 숨 기쁜 속도로부터, 능력주의와 성장주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인간을 소모재 취급하는 교육, 자원을 더 많이 쓰고 기후위기를 더 심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경쟁하는 교육은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⁰⁶ 따라서 체제 전환은 자기를 착취하지 않아도 되고, 생애주기에 따라 요구되는 과업 및 ‘정상성’을 기준으로 배제되거나 능숙하지 못하다고 압박당하지 않고, 더 느리게 살아가며 우리 모두의 미숙함과 취약함을 돌보는 사회와 교육을 목표로 한다. 존엄과 평등을 기본으로 경쟁 철폐와 탈성장을 함께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이다.

시험능력주의에서 벗어나 저항하자

시험은 ‘신분 상승의 합법적 사다리’로 일컬어지곤 한다. 시험이야말로 중요한 평가 절차이며 가장 공정한 방법이라는 인식도 크다. 학력·학벌 차별이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서 동시에 학력·학벌이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생각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즉 학교 교육은 능력주의적 제도로서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하고, 그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능력에 따른 차별은 공정하고 바람직하다는 능력주의의 원리가 학교와 시험, 대학 서열화 체제와 결합해 구체화된 것이 바로 학력 차별이고 학벌주의다. 교육학자 이경숙의 지적처럼 “또래 거의 전부의 인지적 능력을 일괄적으로 비교해서 점수와 등급을 부여하는”⁰⁷ 수능 시험과 대학 입시의 과정을 거쳐 갖게 되는 대학 학벌은 불안전하게나마 능력주의를 실체화시키는 사회적 경험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려 하자 ‘시험 성적이야말로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능력을 보는 것’이며, ‘열심히 공부한 결과로 대학에 진학했는데 학력을 안 보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반대 여론이 일어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 사회학자 김동춘의 책에서 가져온 말이다. 여기서 시험능력주의는 “성적 순위를 매기는 시험이 학력이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 지표라고 보는 능력주의”를 이른다.

**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은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며 “경쟁철폐가 기후위기 해결책!”, “지구도, 청소년도 경제성장을 위한 자원이 아니다. 우리를 착취하지 마!”라는 구호를 외친 적 있다.

이처럼 시험능력주의는 불평등한 체제를 유지하고 정당화한다. 시험능력주의를 통해 작동되는 교육 제도는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일부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교육 의제와 담론에서 과잉대표 되고 있다는 점도 짚어보아야 한다. 지금 교육 체제에서는 공부와 배움, 학습이나 시험, 평가는 거의 동일한 이름이다. 중요한 것은 시험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획득하는 일이기 때문에 학교가 얼마나 평가를 제대로 하는지가 관심사가 된다. ‘그들만의 리그’에 포함되지 못한 대다수의 학생은 사실상 교육에서 소외되었으나 미래를 인질로 잡힌 채 교실을, 자리를 채우고 있을 뿐이다. 이 과정에서 잠을 자거나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못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벌이는 태업과 유사하다.⁰⁸

시험능력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사실상 굉장히 일부에게만 적용될 수 있을 뿐인 지금의 교육 제도는 그 자체로 불평등하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서 교육 체제를 바꿀 수 있을까? 시험능력주의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학생을 가르쳐서 쓸모 있는 인적 자원으로 만들어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계급 분배를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멈추는 일이고, 계급 등과 무관하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체제에 저항한다는 것은 ‘학교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과는 달라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나 ‘내실화’라는 의제로 표현되는 교육 개혁은 기본적으로 공교육의 목표 자체를 흔들거나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능력’ 없는 존재들이 손 잡을 수 있는 장소로서 학교를 상상하자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온통 자격을 따지곤 한다.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민주주의와 정치에 참여할 자격도 주고 있다. 그중에서도 자본과 학력은 훌륭한 능력으로 인정받는다. 많은 사람이 ‘좋은 학벌’을 갖고 싶어 하고 ‘자본가’를 선망하는 것은 능력이 없으면 생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가족 돌봄 등 생계를 책임지느라 경쟁에서 밀려난다. 또 어떤 사람은 경쟁의 출발선에 서는 것부터가 너무 힘들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라는 슬로건도 등장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학습지원이나 멘토링 정책, 가산점 등 출발선의 기준을 조금 낮춰주겠다는 정도이다.

지금까지 교육의 방향성은 모두가 어느 선까지 도달할 수 있게 하고, 모두가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복지나 지원 제도가 목표로 하는 것도 비슷하다. 지원이 결국 어떤 기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면, 그 기준이 충족되어야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능력이 자격으로 작동할 때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능력만 능력으로 여겨지며 특권이 되고 차별과 불평등을 유지하는 힘이 되는 것이다. 특정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거나 차별이 정당화되는 사회에서는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모든 특징과 경험을 ‘스펙화’하게 된다. 하지만 능력이 무엇이든 끊임없이 개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기질이나 성격과도 같은 개성이나 특징처럼 여겨진다면 어떨까? 불평등을 내면화하는 곳이 아니라 더 적

극적인 평등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곳으로서 학교가 기능한다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정하고 훈육하고 평가하여 서열화하는’ 학교는 사라져야 한다. 시험과 평가를 전제로 한 교육과정과 경쟁을 철폐하여 학생의 시간과 삶이 유예되지 않고, 누구도 다른 누군가의 아래에 깔리지 않아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는 정치적 역량, 동등한 시민으로 연결되는 역량, 서로를 돌보는 역량이 필요하다. 이는 시민으로서 함께 살아가고 연대하기 위해 요구되는 핵심 역량이지만 그동안 저평가된 영역이기도 했다. 교육 체제 전환을 이야기하며, 이런 핵심 역량들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학교를 상상하기를 제안한다. 어린 시절부터 비교와 경쟁이 아니라 존중받는 경험을 할 수 있고 서로의 존재를 지지하는 공간으로서의 학교, 학생만이 아니라 양육자와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정치적 활동을 토론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학교, 정치적 활동과 시민적 참여에 관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학교, 특정 연령대의 사람만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학생이 될 수 있는 학교. 교육과정은 미숙함과 성숙함을 나누는 잣대가 되지 않고, 배움은 그 자체로 즐겁고 긍정적인 경험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학교는 개별 학교나 교과 수업, 교육 정책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다양한 능력이 평등하게 존중받으며 발휘되고 특정한 능력의 부족이나 약함이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는 사회, 학력이 중요하지 않은 사회, 각자가 가진 능력들의 차이가 차별의 조건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이들이 기대고 소통하는 힘이 되는 사회에서, 학교는 비로소 시민의 공간이 될 수 있다. 능력은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와 사회적 기반을 통해 발휘될 수 있기에, 우리는 함께 능력을 구성하고 책임을 공유할 수 있다. 경쟁이 아니라 실질적 필요와 보람을 위해 공부하고 배우고 그 배움은 시험과 평가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⁹⁾ 이를 위해서는 지식교육 중심 방향성의 전환이 일어나야 하며, 교육 양 자체를 대폭 줄이고 목표 또한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지식 중심 교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른 역량과 가치를 공동의 감각으로 익히고 공유하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3. 알고 보니 나도 교육/운동 주체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교육의 내용과 방식, 나아가 체제와 그 가치를 사회 전반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려면 교육을 정치적이고 민주적인 논의의 장으로 가져와야 한다. 과거부터 근래까지 우리 사회의 많은 교육에 관한 논의는 ‘교사(어른)가 가르치고 학생은 그것을 배운다’, ‘교육은 학생 개인을 더 유능하게 만들고 성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등의 전제를 답습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여러 교육 관련 주체들은 자기의 의제와 이익을 개별적인 정책이나 요구안으로 제기하고 나열시키는 데 그치고 있다. 체제 전환의 새로운 교육운동을 지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지향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앞으로 어떤 교육을 구상하고 이행하려 하는지를 제시하고, 우리가 왜, 어떻게 함께 싸워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교사 중심의 교육/운동을 넘어

지금껏 교육운동 혹은 교육운동이라고 불리는 운동이 다분히 교사운동 중심적이었음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원노조의 창립 이래로 교육에 관한 의제 설정도, 현실적 재정과 인력의 차원에서 교육운동의 중심에는 교사단체가 있었다. 물론 교육 현장에서 노동하고 있고 교육과정 및 정책 등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가진 교사들이 교육운동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며, 교육의 공공성이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 온 교사운동 주체들의 노고는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사운동과 일부 학부모운동 외에는 교육운동의 구심점이 되는 집단이나 주체들을 만나기 어렵다. 문제는 교사운동이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교사운동 외에는 중심 역할을 할 주체와 운동이 없다는 조건에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교육에 무관심하기 때문, 더 정확하게는 교육을 교사 및 교육전문가들의 소관이라 여기기 때문이기도 하다.

교육운동의 이러한 한계는 교육의 근본적 체제 전환을 지향하는 것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교육운동은 ‘교육 혁명’의 필요성을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쟁점에서는 기존 교육의 질서를 복원하는 선택을 내리기도 했다. 교사나 학교, 학생에 ‘정치적 중립성’의 족쇄를 채우는 것을 비판하면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워 교사·교수 등 교육전문가의 권위와 지위를 지키려 했다.* 진보교육감 기획의 좌초와 교사 집단 전반의 보수화 경향이 뚜렷한 현시점에서 교사운동에서의 후퇴는 교육운동 전반의 혼란과 지향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체제 전환을 위한 새로운 교육운동은 교육을 정치적·사회적 이슈로 논의하고 사람들을 교육운동의 주체이자 교육의 주체로 구성해 나가는 운동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교육에 ‘정치적 중립성’을 강요하는 국가에 맞서 싸우는 것인 동시에, 교육을 교사 등 전문가들의 전문성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주의’와도 대결하는 과정일 것이다. 교육 활동에서 숙련노동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관한 결정은 전문가만의 일도, 전문가가 주도해야 할 일도 아니다. 교육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공적인 문제이며 학교는 모두의 것이다. 교육을 지배·통제하려는 국가권력에 맞서는 힘은 ‘전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민주성과 공공성에서 나온다.

더 나아가 우리의 운동은 ‘교육 3주체론’ 또한 넘어서야 한다. 교육의 주체를 교사, 학생, 양육자(학부모)로 인식하고 그 집단들 간의 문제라고만 바라보는 것은 교육을 전문가와 소비자(수요자)

* 전교조 등의 교사단체들은 과거에는 한목소리로 교육감 직선제를 반대했다. 현재 교육감 출마 자격은 교사·교수 경력을 필요로 한다. 그 외에도 교육에 관련된 정치적,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교사가 우위를 가지려는 태도는 지속적으로 보인다.

사이의 문제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교사, 학생, 양육자 모두 우리 사회의 일부로서 여러 계급·집단에 걸쳐 있으며, 무수한 차이를 갖고 있음을 가린다. 또한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라는 식의 역할로 주체성이 구별되는 듯한 효과를 불러일으키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등 정작 민주적 속의가 필요한 자리에 모든 구성원을 초대하지도 않는다.* ‘교육 3주체’에서는 기간제 교사를 포함하여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가 겪는 문제도 다루지 않아서 이들의 차별 경험은 교육 의제로 제기되지도 해석되지도 않는다. 대표적으로 최근 ‘교권 강화 대책’으로 학교 행정직이 민원을 전담하게 하는 방안이 발표된 사례가 있다. 남학생의 여교사 성희롱 사건을 ‘교권 실추’로 바라보는 프레임도 교사와 학생을 단순 집단화하여, 학교 안의 권력 구조를 세세하게 들여다보기 어렵게 한다. 각각이 단일집단이 될 수 없음에도 3주체로 나뉘어 각자의 영역이나 이해관계가 뚜렷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며 연대를 깨뜨리기도 한다.

교육은 3주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욱 공적이고 보편적인 의제로 파악되어야 하며, 교육운동은 교육에 내재한 불평등과 이해관계의 차이를 정치적 문제로 불러내고 다른 방식의 연대와 조직화를 추구해야 한다. 젠더, 계급, 장애, 노동 형태 등 다양한 소수성을 가진 학생, 양육자, 교사, 교육노동자들, 교육과 연계된 혹은 연계되어야 할 무수한 존재들을 함께 교육의 주체로 호명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좋은 교육은 좋은 사회에서 가능하다

가정에서의 불평등이 심각한데 단지 같이 학교에 다니고 같은 교육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학생들이 평등해질 수는 없다. 사회가 차별적이고 혐오가 문화일 때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한다고 해서 차별과 혐오를 없앨 수 없다. 삶이 불안정하고 경쟁적인데 교육만 경쟁과 능력주의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대학입시의 문제는 노동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라는 지적과 같이 교육 체제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회 체제 전반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

좋은 교육은 좋은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체제 전환의 교육운동은 사회 체제의 변화 없이는 교육 체제의 변화도 요원함을 인정하면서, 교육이 불평등을 비롯해 사회 문제를 반영하고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체제 전반의 변화를 지향해야 한다. 어린이·청소년만을 ‘교육 대상’으로 삼는 학교 체제를 넘어, 보편적 교육권을 실현하는 탈학교적이고 평생교육적인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교육권의 주체인 학습자(학생)를 중심에 두고 모든 사회구성원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교육 3주체’를 넘어선 교육 주체들을 새롭게 호명하여 조직하고, 교육 문제를 정치적·사회적 이슈로 더 크게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교육을 통해 사람들이 정치적·사회적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가 운동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제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학교에서부터 함께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과 정치 운동의 가능성을 열어 함께 좋은 사회로 길을 만들어가기를 바란다.

참고 자료

- 01 몽글, 2023, 교육공동체의 (불)가능성과 학교라는 '장소', 오늘의 교육 77호, 교육공동체 벗
- 02 정용주의, 2023, 한국교육의 오늘을 읽다, 교육공동체 벗
- 03 난다, 2020, "코로나 시대에 학생은 그저 '입시 기계... 무생물에 가까운 존재" 코로나로 인한 교육 문제는 학력 격차로만 이야기되어야 하는가, 프레시안
- 04 몽글, 2023, 앞의 글
- 05 정용주의, 2023, 앞의 책
- 06 청소년단체공동선언, 2023 청소년인권기후정의선언
- 07 이경숙, 2017, 시험국민의 탄생, 푸른역사
- 08 김동춘, 2022, 시험능력주의, 창비
- 09 난다, 2023, 학력무관의 세계를 향하여, 한편 10호 대학, 민음사

체제전환 그리고 교육

학교를 체제전환을 향한 저항과 연대의 공간으로!

보란 | 교육노동자현장실천

borens314@gmail.com

I. '노동'으로 학교 안 들여다보기

학교 안의 권력 관계

2009년 가을, 신규 교사로 발령을 받았을 때였다. 교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전화기가 울렸다. 몇몇 선생님이 있었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교감의 전화였다. “지금 선생님의 도장을 들고 교무실로 올 수 있나요?” 주변 선생님들의 웅성거림을 뒤로한 채 교무실 밖으로 나왔다. 교감은 학교가 과학중점학교가 되기 위해 동의를 받는 중이라며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말했다. 왜 그것에 동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조차 없었다. 교감은 검지 손가락으로 신청서를 가리켰고 어딘가 모르게 초조해 보였다. 내가 물음표를 던지는 순간 교감의 기분을 거스를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들었다. 그래서 조용히 도장을 찍었다.

그날 저녁부터 마음이 불안했다. 원치 않는 동의를 했다는 것을 알았다. 고민하다가 선생님 몇 분께 전화를 드렸다. 고3 때 담임선생님은 내가 일하는 학교에 친한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이 전교조 분회장을 맡고 계시니 찾아가서 상담해보면 좋겠다고 하셨다. 다음 날 나는 그분께 찾아갔고 내가 원한다면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나는 그분과 같이 가서 말한 이후로도, 몇 차례나 두 교감이 나를 불러냈고 나는 동의서를 되돌려 받고 싶다고 간단하게 말했다. 얼마 후, 교감에게 나는 이런 말을 들었다. “성 선생은 나를 왜 선생님이라고 부르나? 나는 교감이고 자네와 같은 선생

* 이 글은 교육 세션 준비팀 및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청시행)' 공부모임에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한 글입니다. 준비팀은 이진영(청시행), 서경(교육공동체 벗), 김진, 보란(교육노동자현장실천), 우둘, 진냥(연대하는 교사잡것들), 연잎, 개굴(인권교육센터 들), 난다(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연혜원(투명가방꾼)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님이 아닐세. 꼭 교감 선생님이라고 부르께”라고 말했다.

결과만 좋으면 불행은 나아질까? 그런데 결과마저 불행하다면?

나는 우리가 만드는 게 무슨 부품인지 알지 못했다. 이따금 생산 부서 직원들이 ‘그것’을 조립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 부품의 이름조차 몰랐다.

어쨌든, 나는 내 일에 만족했다. 처음에는, 조금 피곤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조금씩, 더 피곤해졌다. 우리는 토요일 아침에도 일해야 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도 일해야 했다. 나중에는 결국, 토요일과 일요일 내내 일해야 했다.

『누가 진짜 나일까?』 다비드 칼리 글, 클라우디아 팔마루치 그림

나는 자주 무력감을 느꼈고, 학교에서 하는 일이 교육적인 일인지에 대해 의심했다. 작년 여름, 나의 부주의로 인해 학교 청소노동자가 다치는 일이 있었다. 실험 시간에 깨진 유리 기구를 비닐에 넣어 버렸기 때문이다. 청소노동자분은 고령의 여성이었고 손을 다치셨는데 제때 치료도 받지 못하신 것 같았다. 나는 뒤늦게야 내 잘못이란 걸 깨닫고 나서 청소노동자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다. 그 이후로 청소노동자분이 화장실이나 교무실을 청소할 때마다 일의 고충을 들을 때가 많았는데, 그분이 학교로부터 작업 지시를 계속 받고 있었지만, BTL(임대형 민간투자 사업 :Build-Transfer-Lease) 건설업체에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있어 실제 사용자인 학교로부터 안전과 건강권조차 보장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분이 고통을 호소하기 전까지 전혀 그런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 그분을 외면한 채 BTL 건설업체의 서비스를 당연하게 평가하는 선생님들을 보니 마음이 착잡하고 절망스러웠다.

나는 경기도의 농어촌 지역에 속하는 한 인문계 병설** 고등학교에서 일한다. 비평준화 지역이고 대중교통이 좋지 않은 곳에 있고 낮은 성적대의 학생들이 지원하다 보니 학생들도, 노동자들도 이곳을 꺼린다. 주변에 공장이 많고 이주 배경 학생의 비율도 높은 편이다. 11월, 시내의 한 중학교에 찾아가 고등학교 입시 홍보를 했다. 중3 학생들 앞에서 학교에서 만든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말하려니 얼굴이 화끈거렸다. 성적이 낮아도 우리 학교에서는 높은 내신 점수와 풍성한 생활기록부로 수도권 대학을 갈 수 있고, 고교 학점제 선도 학교로 학생 중심으로 원하는 과목을 고를 자유가 있다고 말이다. 학생 중심의 활동을 장려하는 학교, BTL 운영으로 청소노동자가 매일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급식 메뉴가 다양하고 맛있는 학교니까 꼭 오라고 말이다.

그런데 학교의 노동자는 불행하다. 교육노동자가 모두의 일상을 위해 왜 이렇게 힘겹게 일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 참 이상하다. 특히, 생존과 건강에 필수적인 돌봄 노동은 대부

~~~~~  
\*\* 지역 실정에 맞추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 기관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을 아울러 한곳에 세운 학교. 일반적으로 시설과 장소를 같이 사용한다.

분 저임금 고강도 노동이다. 급식노동자는 한여름에도 긴 팔, 모자와 마스크, 여러 겹의 장갑, 앞치마, 긴 장화를 착용하고 두 번씩 배식하기 위해 무거운 것을 들고, 장화를 슬리퍼로 갈아신을 틈도 없이 일하다가 손과 발이 퉁퉁 붓는다. 이들은 아파도 일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병원에 가볼 엄두조차 내지 못해서 속으로 고통을 삼킬 뿐이다. 우리는 노동자가 어떻게 비인간적인 노동과정을 견디며 가치와 생산물을 만들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그리고 '나이, 성별, 학력, 인종, 배경, 장애, 질병 여부에 따라 교육의 접근성과 할 수 있는 일이 왜 달라져야만 하는지?', '직업에 따라 서열이 매겨져 차별적인 임금과 대우를 받는데, 대체 왜 그래야만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지 않는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노동차별에 대해 침묵하면서 열심히 일하기만 한다면, 과연 행복한 삶과 사회에 도달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샤프도네 사장은 우리를 사장실로 불렀다. 그리고 별일 아닌 듯이 우리에게 몇 주 동안 집에 가지 않고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우리가 입을 깨끗한 옷과 밥은 회사에서 줄 거라고 덧붙였다. 샤프도네 사장이 말하는 동안, 나는 다른 직원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들은 곤혹스러운 표정이었고, 피곤해 보였다. 그들도 공원에서 밥을 지새운 것 같았다.  
『누가 진짜 나일까?』 다비드 칼리 글, 클라우디아 팔마루치 그림

노동과정이란 “인간이라는 살아 있는 구체적인 실체가 숨 쉬고 먹고 사랑하고 아파하는 일상의 실천 속에서 자기 존재를 창조해 가는 과정이다. 인간의 욕구는 거주 공간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소통을 제공하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한다.” 이때, 노동자는 자신의 에너지와 생명을 노동 대상에 붙여넣는다. 그러나 노동 대상이 그들의 손을 떠나 상품이 되면서, 노동자는 그들이 만드는 것에서 소외돼 있다. 이렇듯 노동과정을 통해 내가 만들어 낸 대상(가치와 자본)을 상실하면서도 그 대상에 속박당한다. 동시에 노동자 자신이 살아있고 욕구를 가진 자본이 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자본과 사회는 이윤을 무한 축적하기 위해 끊임없이 성장하고, 개발하고, 생산하라는 메시지를 구성원들에게 주입한다. 그러면서 노동자가 자기 몸과 마음조차 돌보지 못하고 자신을 착취하면서 고통받는다. 인류 역사에서 노동자는 모든 이(국가, 기업, 주류 시민 사회)에게 이익이 되라는 명령에 속박된 채, 상품 경제 안에서 계약 관계를 통해 자기 자신을 상실하고 희생하길 요구받는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는 제 살을 깎아 먹으며 착취와 억압의 대상을 꾸준히 포섭하는 식

\* 더크J.스트루이크 『1844년의 경제학-철학 수고』 서문, 『행복의 약속』, 사라 아메드. (2019), 후마니타스, pp.302-303

인 자본주의 체제\*\*와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자본주의 체제는 기후 파국을 불러왔다. 인간의 삶과 생태계 파괴를 통해 이윤을 축적하면서 엄청난 탄소 배출을 한 결과이다. 탄소 배출량이 큰 국가일수록 그에 대한 책임과 대가도 크게 지는 게 마땅한데도, 북반구 국가와 기업들은 기후 위기를 개인 소비자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처럼 캠페인과 교육을 하면서, 이윤 축적을 위한 생태 파괴와 탄소 배출을 멈추지 않는다. 이는 매우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일이다.

그리고 노동자는 교육을 통해 지배 계층의 욕망과 사고 및 태도를 내면화하면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입받는다. 교육노동자는 학습에 방해되는 행동을 할 때 이를 제재해야 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미래에 모든 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학습에만 집중해야 하며, 공정한 경쟁에 방해되는 행동은 모든 이에게 불안과 불행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때 말하는 '모든 이'는 지배 계층에만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피지배 계층은 그들의 배경으로 소외되면서 희생 또는 복종을 요구받는다. 이와 같은 논리로 노동자의 고통과 기후 재난으로 인해 위태로워진 삶들은 미래의 행복으로 완전하게 가려지고 있다.

우리는 사회와 학교에서 해롭지 않게, 문제없이 존재하려 노력할수록,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몸과 마음을 강탈당한다. 특히 내 가족의 역사 속에서도 '노동 소외'의 역사는 꾸준히 흐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엄마는 고등학교 직업과정을 마치고 가족 생활비와 남자 형제들의 대학 등록금을 보태기 위해 노동하는 동시에, 아픈 외할머니 대신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노동을 홀로 떠맡았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릴 적 가족에게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고등학교에 가는 대신 자동차 공장에서 일했다. 기계를 다루다가 손을 다쳤는데 가끔 상처를 보면서 속상해하고 눈물짓곤 했었다. 그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슬픔은 나의 일상에도 고스란히 흔적을 남겼다. 부당하고, 실업, 늘어나는 빚, 가족 우울증, 가정폭력, 독박 돌봄, 불안정 노동, 간병 노동. 이러한 수많은 일이 가족 구성원의 삶을 소리 없이 먹어 치워 버리기도 했다.

## II. 학교는 체제를 어떻게 떠받치고 있는가?

### 비정규직 고용과 수탈-착취-계급 관계

기업과 국가는 비정규직 고용을 통해 노동자를 쉽게 통제하고 관리한다. 이 비정규직 고용은

---

\*\* 동족 포식 자본주의 (cannibal capitalism), '식인종'을 자본가 계급을 묘사하였으며, 자본주의 경제가 시스템 내부의 '비-경제적' 주변 영역과 맺는 관계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 관계란, 자본주의 경제가 제 배를 채우기 위해 가족과 공동체, 생활 터전, 생태계의 피와 살을 다 빨아먹어 버리는 현실이다. <좌파의 길-식인자본주의에 반대한다>, 낸시프레이저 (2023), pp.16-17

비인간적이고 예측적인 고용 형태로, 계층, 성, 지역 불평등과 중첩되어 위태롭고 불안정한 삶을 양산하고 있다. 개인의 힘으로는 차별과 불평등에 저항하는 것이 어렵기에, 개인은 생존과 직결된 안정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지배 계층의 욕망과 관습을 적극적으로 내화하는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은 고용의 질이 가장 나쁘다고\* 볼 수 있고,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교육 현장에서도 일상 속에서 공동체 관계를 만드는 것을 배우는 것보다 수탈-착취-계급 관계를 적극적으로 내면화할수록 지위 경쟁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배운다.

자본주의가 작동하려면 어느 정도 실업률이 필요하기도 하다. 사람들이 나눠서 할 일이 충분히 있다면, 어떤 노동자도 일자리를 잃을까 봐 걱정하지 않게 되고, 모든 노동자는 더 높은 임금과 더 나은 노동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 (...) 마찬가지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는 실업자라는 '예비군'이 경제의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고용될 수 있다. 이처럼 의도적인 실업의 체제가 작동하려면 누가 일할 것이고 누가 실업자로 남겨질 것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그 방법이 주로 인종, 계급, 젠더, 장애로 이루어진다.

<트랜스 젠더 이슈: 정의를 위한 주장>, 손페이, 돌베개, pp.367-368

실제로 거대 기업과 서구 자본은 노동유연화를 통해 노동자를 기계 또는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이윤을 축적한다. 호황기에 일감이 많을 때는 일자리를 많이 늘리다가, 침체기에 빠지면 노동자를 대량으로 해고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1996년 한국은 IMF 시기에 서구 금융 자본의 요구에 따라 비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적극적으로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였다. 지금까지도 한국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증가를 위해 대기업과 해외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노동법, 건설법, 환경법과 관련된 법규제를 완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사회복지예산 감축과 더불어 의료·돌봄·에너지·교통 등 공동체 인프라의 시장화를 부추기고 있다. 게다가 현재 윤 정부는 노동계의 반발에도 주 52시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특구를 조성하는 것을 추진하였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2022년 37.5%, 임금근로자의 3분의 1을 넘었는데, 그 비율은 2021년 28.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8%)의 두 배를 넘었다. 2022년 정규직(348만원)과 비정규직(188만1000원)의 임금 격차는 159만 9000원으로 역대 최대로 벌어져 있다.

\*\* 여성이 남성의 두 배에 달하는 비정규직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외려 확대되고 있다. 남녀 고용률은 2021년 70.0% 대 51.2%로 현저히 나쁘다. 한국의 저임금노동자 비율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두 배 이상이다.

\*\*\*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이다. 그러나 이 GDP에는 포함되지 않은 노동이 있는데, 가정 내 가사노동, 돌봄, 양육, 간병 등 무임금 재생산 노동이다.

\*\*\*\*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이다.



학교도 마찬가지로 기간제 교사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해 신규 교사를 적게 선발하여 교사 정원을 크게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에 지역 교장, 교감, 부장의 네트워크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데, 기피 학교에 고용이 되거나, 기피 업무를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떠맡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기간제 교사에게 부차적이지만 힘든 일을 떠맡기면서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수탈-착취-계급 관계를 강요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출발선이 다르다는 것을 외면한 채 단 한 번의 시험 결과를 통해 서열을 매겨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능력주의’를 강화한다. 또한, 임금 등 노동조건을 차별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공고화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처우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노동유연화 정책은 교육노동자 간의 경쟁 심화를 통해 노동력을 쉽게 통제할 수 있게 하지만, 노동자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적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청소, 급식, 돌봄과 같은 고강도 저임금 노동의 경우 산업재해 및 인권 침해 위험이 빠르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교육 현장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양육자들의 돌봄 노동 부담을 덜어줄 것을 약속하면서도, 여전히 경제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설계된 학교 시스템을 고수하며 충분한 예산, 인력, 지원 체계조차 마련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교육 체제 속에서 인권 및 노동권 침해 문제와 더불어 구성원 사이의 갈등도 폭증하게 되었다. 특히, 교사 수 감소와 더불어 학급당 학생 수 증가로 인해 교육노동자의 업무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사도 증가하는 정보화 시스템 업무, 학교 성과 압박으로 인해 각기 자기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서 단절된 노동\*\*\*\*\*을 수행하면서 희생을 강요받으며 소진되고 있다. 게다가 교육노동자 간의 경쟁 또한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데, 이는 국가 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하에 개편되는 교원양성체제 및 교원 평가제, 성과금 제도와의 맞물려 있다.

### 교육-노동-정치의 분리, 그리고 무한경쟁사회

정부와 교육당국은 청소년과 교육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시민 교육과 정치, 노동 분야의 상호 연결성을 지우며 다양한 교육 주체의 계급적 연대를 탈각시키고 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과거에도 정부와 언론은 교육과 노동을 탈정치적이면서 탈이념적인 가치중립

\*\*\*\*\* 2022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정부가 학령 인구 감소에 대비해 2명 정년 퇴직을 해도 1명만 신규 교사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교사 정원을 줄이고 있다. 정규 교사 수는 2018년 44만6286명에서 올해 43만7736명으로 9000명 가까이 줄었다. 전국 유·초·중·고교에서 일하는 기간제 교사는 7만57명으로, 전체 교사 50만7793명 가운데 13.8%에 달한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5.9%, 중학교 19.8%, 고등학교 21%이다. 또한, 국·공립(2018년 8.9%→2022년 11.8%)보다 사립(14.1%→21.2%)에서 기간제 교사 비율이 많이 늘었다.

\*\*\*\*\* 노동자의 소외는 개방형 사무실의 반사회성 속에서 너무나 잘 드러난다. 여기서 노동자들은 서로 단절돼 있다. 이는 공간을 공유한다는 착각에 의해 유지되는 폭력이다. 『행복의 약속』, 사라 아메드. (2019), 후마니타스, p.310

적 속성을 가진 것처럼 호도했다. 국가는 교육과 노동의 사회 체제 유지와 재생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체제의 부정의를 증언하는 이들의 저항을 교육권 침해이자 불법 행위로 규정하며 과도한 폭력과 징계를 가하였다. 동시에, 수업권과 평가권을 가진 교사의 권력을 ‘교권’(전문가 권력)으로 특수하게 취급하여 학교 구성원과 교육노동자 내부의 위계를 강화했다. 교육 현장은 교육 자본화와 시장화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포섭되었고, 지식 중심 교육과정과 상대평가를 통해 취득한 점수로 인간의 능력을 평가하고 서열을 매겨 능력에 의한 차별(능력주의)을 공식화했다. 그 과정에서 교사들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전문가적 권력을 활용하여 평가 과정을 통한 서열화 및 차별 기제를 공식화했다.

학교는 대공장이자 수용소(시설)처럼 자본주의 권력구조를 답습했다. 인간을 경쟁력 있는 노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국가폭력을 정당화하고 주류 기득권의 이데올로기 자체인 지식, 태도, 가치관을 자본(상품)화하였다. 그로 인해 교사와 학생은 생산(공급)자와 소비(추출의 대상)자의 관계인 동시에 비인간적, 예측적 관계로 고착되었다. 결국 학교는 교육과 훈육을 명목으로 지루함을 견딜 줄 알고, 착취하기 좋은 노동자이면서 살아있는 자본을 양성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본주의 체제가 원하는 노동자의 상이 변화함에 따라서, 과거 강의식 수업과 일제식 지필고사가 상시적 수행평가 체제로 전환되면서 자본주의 체제가 학교 교육으로 과제집중력이 높고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노동력 양성하길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학생들은 학교 교육과 평가를 통해 능력주의를 내면화하면서, 지배 계급의 교육 자본과 문화 자본의 세습을 개인의 능력처럼 여기고 불평등한 계급과 지위 배분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 그리고 국가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교육 평가의 공정성만 보장하면 ‘학교가 계층 이동 사다리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것’이라는 희망을 심어주며, 사회 구성원 모두를 무한 경쟁 사회로 내몰고 있다.

## 진보라는 수식이 소외시킨 교육 주체들

특히 현재까지의 진보 교육 운동은 대통령, 국회의원들에게 진보적 의제에 대한 공약(실제로는 행동에 옮기지 않는) 받아내거나 교육감, 장학사 등의 행정관료 진출을 위한 대의민주주의 선거운동에 매몰돼 있었다. 진보 교육감은 권력관계와 진영논리에 간혀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행보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다. ‘강원 유천초등학교 교사 부당징계’와 같은 사례와 같이 교육노동자의 사용자로 군림하여 지배권력을 휘두르며 학생과 교사를 학교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교육 의제를 교육 전문가의 영역으로만 한정시키고 관료적 일방적 행정 권력을 통해 교육 조직, 정책, 담론 등을 결정했다. 노조와의 정책 협의와 교섭에도 소극적이었으며,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를 보이면서 다양한 운동 주체와도 자주 갈등을 빚기도 했다. 혁신학교도 교육부-교육청의 관료 중심적인 일방적 행정 권력에 방해를 받았고 관료적 모델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능력주의에 기반한 경쟁교육이 입시전형 다양화와 맞물리면서, ‘어떤 교육을, 학교를 지

향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이 학교 밖 다양한 주체와 만나지 못하면서 확산하지 못했다.

전교조와 민주노총도 보수적(우경화) 흐름에 포섭되어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힘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 큰 조직인 만큼 소수 의견이 집행부의 운동 기조를 바꾸는 데는 역부족이었으며, 진영논리에 갇혀 오히려 학생과 현장 노동자의 고통을 대상화하거나 외면 또는 공격하기도 했었다. 노조는 거대 자본의 행정 사법적 폭력 앞에서 교섭력을 상실하여 정치적 힘을 갖지 못했다. 노조 혐오와 학살을 견제하지 못하고 조합원 이탈을 막기 위해 기득권 유지에만 몰두하며 소수의 목소리를 침묵시켰고 운동의 지향과 동력을 잃어버렸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주류 진보 운동 세력과 노조 집행부의 행보를 보며 노조의 가치관과 운동 방향성에 회의감마저 느끼게 되었고, 이분법적인 보수-진보 구도에서 대안 없음을 길을 잃어버렸다.

하지만 이때가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각자도생으로 분열되고 혼란에 빠진 노동자 계급의 권력 위계와 갈등을 직면할 수 있고, 토론을 통해 다양한 주체의 차이를 재발견하면서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다각적으로 폭로하고 이를 바꾸기 위해 결집하는 '우연적인 마주침'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쩌다 마주치는 '우발적인' 순간들을 통해 교육 운동 주체가 단일하지 않으며 다양한 주체와 분야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체 내부의 위계와 차별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일상적으로 평등한 관계 맺음을 통해 타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에만 갇혀 있는 선형적 정치의 틀에 균열을 내는 대안적인 실천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 대안들은 희망과 행복의 허구성을 다양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는 힘을 발휘할 것이다.

### III.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식일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저항의 공간이 될 수 있다.

#### 교육과 감정을 정치적으로 바라보기

학교는 계층 불평등을 통한 지배-피지배 관계에서 비롯된 사회질서를 재생산하고 이를 은폐하는 사회화 기관\*이다. 그렇기에 학교 교육에서 '어떤 관점으로 교육을 바라볼 것인가?'라는 질문은 저항적이고 혁명적일 수밖에 없다. 학교 현장에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주배경 청소년, 성소수자, 장애인, 질병을 겪는 이, 빈곤·소외 계층에 속한 이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불평등이 가속화 하는 차별과 혐오, 기후 재난을 직면하면서 삶의 터전에서 존재할 수

\* 루카치, "부르주아 사회의 본성에 드리운 베일은 부르주아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행복의 약속』. 사라 아메드. (2019), 후마니타스, p.302

없게 된다. 이를 목격한 개인은 평화로운 삶이 학교 안팎의 고통과 불행과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행복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삶도 지속 불가능함을 예상하게 된다. 이렇게 현 체제의 이방인이 되면서부터 이 구조적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할 수 있게 된다.

어슐러K. 르권의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은 더 강력한 고전적 행복 모델인 선과 덕을 갖춘 삶을 비판한다. 오멜라스 사람들이 영위하는 행복한 삶은 의미있는 삶이다. (...) 하지만 그들의 행복에는 어두운 비밀이 있다. 그것은 한 아이, 지하에 갇혀 있는 한 아이의 비참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의 밤이면 살려 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크게 소리 내어 울기도 했지만, 지금은 ‘으어어, 으어어’하는 신음 소리만 낼 뿐이며 말수도 점차 줄어든다. (...) 직접 와서 본 사람도 있고, 단지 그런 아이가 있다는 것만 아는 사람도 있다. 사람들은 아이가 그곳에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 만약 다수의 행복이 한 사람의 불행으로 가능해진다면, 그 행복은 언제나 잘못된 것이다.

<행복의 약속> 사라 아메드 (2021), pp.350-351

얼마 전 전교조 참실대회에서 노동교육분과 ‘현재, 학교, 노동교육하기’에서 모든 강의를 듣고 나서 동그랗게 책상을 배치하고 앉아서 토론했다. 한 노동활동가 동지가 교사 중심적인 교육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나눠주셨는데,\* 담담하고 차분한 목소리와 그 목소리에 경청하는 청중의 눈빛에서 무언가에 크게 부딪힌 듯한 충격을 느꼈다.

그분은 청소년 산업재해 사고 유가족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가슴이 너무 미어지는 부분을 먼저 언급했다. 양육자 스스로 ‘노동을 가치 있게 생각하며, 다른 이들과 항상 화합해야 하고, 성실하게 노동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후회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도 산업재해 피해자는 살인적인 노동 현장을 힘겹게 버티다가 다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다. 오히려 교사가 노동을 신성하게 생각하고 어떤 노동이든 가리지 않고 근면하게 일해야 한다는 가치를 교육한 덕분에 청소년 노동자가 일터에서, 학교에서 죽게 되는 것이다.

삶의 고통과 불행을 개인의 감정 문제로 축소하려는 시도는 매우 정치적이다. 마치 산업재해 문제를 노동자 개인의 미숙함, 무책임, 감정의 문제로 축소하려는 기업과 정부 입장과 결이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은폐하면서 소외의 구조적 원인을 외면하게 만든다. 그리고 사회를 더 좋게 변화시킬 중심의제가 되지 못한 채, 개인이 자책감과 우울감에 매몰된다. 사회와 언론, 학교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전교조 법외노조\*\* 투쟁을 위해서 조합원 동지들이

\*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이영주 동지

\*\* 박근혜 전 정부는 전교조가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두었다는 근거로 법외노조로 규정하여 8년이나 노동3권을 제한했었다.

해직을 감수하며 힘겹게 투쟁하는 상황을 정치적인 의제로 폭넓게 다룰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나의 감정과 욕구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인 것으로 인지하면서, 저항하는 동지들과 함께하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을 것이다.

노동에서 느끼는 감정과 문제의식은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도 캐나다의 노동조합원 교육자료에서는 ‘노동 소외’를 가장 먼저 다룬다고 했다. ‘왜 계약을 만들면서도 행복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그것이 ‘소외’라고 대답해주는 내용(만들고 싶은 계약을 만들지 못해서, 만들어낸 노동 대상(자신)을 강탈당하는)이었다. 이것이 놀라웠던 이유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에 개입할 권한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정치적 실천과 혁명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자가 사용자(기업)와의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며 협상할 수 있게 하며, 소외를 겪는 이에게 구성원 모두가 ‘불행의 원인이 개인에게 있지 않고 체제 구조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그리고 어떤 대안 세상을 욕망하고 만들어야 할지 미리 답을 정하지 않은 채, 지배 계층으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된 다양한 주체들이 소통하며 서로 돌보는 것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 교사 중심 교육 운동에 내포된 능력주의에 균열 내기

2023년 7월 서울 서이초 신규 교사 사망사건 이후로 학교 현장 자체가 비인간적인 착취-수탈 관계를 토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전면적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현 정부와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사건을 일부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면서 학생과 양육자를 악마화하고 구조적 원인을 가리기 시작했다. 또한 수능 킬러 문항을 없애서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대대적 엄포와 함께, 경기, 서울, 충남 등 지역에서 자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공교육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학교 구성원의 연대마저도 분열시키기 시작했다. 이는 학생과 양육자에게만 책임과 의무만을 부과하는 동시에,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힘겹게 투쟁하여 얻은 주체성과 권리를 박탈하고, 교육 주체의 연대마저 분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와 여당, 언론은 교육 주체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고,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앞두고는 교육노동자가 집단행동을 하면 징계를 내리겠다고 협박했다. 그럼에도 전국의 교사들은 집회 참여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결근(연가, 조퇴 등)을 했다. 하지만 집회 주체는 이 교사 집회가 정치적 집회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며 노동자 계급성과 정치적 힘을 스스로 내던지기까지 했다. 이들은 각자도생의 노동 현장에서 제도적 권력을 부여받는 교권 강화 대책에 포섭되

~~~~~  
*** 전교조가 제한적인 교육주체 담론에 대한 비판의식을 운동 의제로 선언하지 못한 것에 문제를 느낀다. 사실, 전교조는 교육 3주체라는 표현을 처음 썼지만 다양한 교육 주체들을 발견하면서부터 내부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대의원대회 자료집에 교육3 주체라는 표현이 있으면 대의원들이 제안하여 3주체라는 말을 삭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런 흐름은 잘 보이지 않는데, 전교조가 정규직 교사 중심의 행보를 보이기 시작한 시기부터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었다. 정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교실에서 핸드폰 수거, 문제 행동 학생 분리 조치 등의 인권 침해가 가능할 수 있게 하였고, 이로 인해 교사가 학습과 무관한 행동을 하는 청소년을 직접 제재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청소년에게 교육과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정서적 체벌을 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고, 교사와의 갈등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또한, 정부는 교육 공무직 노동자를 학교 민원 업무 담당자로 지정하려 하여 구성원 간의 갈등을 증폭시켰다. 이러한 비장애인 남성 정규직 교사 중심의 위계적 관계가 강화되면서 교육 현장도 비민주적, 반인권적으로 퇴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정규직 중심의 노조 운동 문제점과 함께 고통과 불행의 구조적 원인 또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2023년 8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 현장에 참여한 이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교권 강화에 큰 목소리로 반대를 외치며 저항하는 청소년, 양육자, 비정규직 교육노동자, 성소수자, 대학비진학자, 발달장애인과 그 양육자 등 다양한 주체들을 자주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이 목격하고 경험한 것들을 경청하면서, 경계를 넘어 사람들이 어디서 살든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잠재가능성의 확장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힘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 누구라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평등한 관계를 맺으며 삶을 살아가고(죽어가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우리는 노동과정에서의 소외 경험이 어떻게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되었는지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만 불행을 가능하게 하는 불평등한 인간-비인간 생태와의 관계와 체제 구조를 전반적으로 정의롭게 전환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이의 돌봄 요구에 따라 사회적·물질적 부를 재분배하는 돌보는 경제 구조, ‘돌보는 시민권’까지도 상상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IV. 체제 전환과 교육 : 길을 헤매다 우연히 만난 존재들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은 이런 거야, 친구는 이런 거지, 연인이라면 이래야 해, 삶이란 이런 거야 같은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신할 수 없게 된다. 심지어 우리는 인간이라는 게 뭔지, 살아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확신하지 못한다. 이것이다 혹은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면, 그때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내야 하고 연결해야 한다. 혁명이 단지 주체들의 반란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술어의 혁명도 요구한다. 그것은 문장의 주어들에 무엇을 부착할 것인가를 둘러싼 혁명이다. 주어는 복수여야 할 것이다. 이때 “우리”는 이것에 대해 결정을 내리도록 소환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런 결정의 효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연 공동체들은 그런 유보의 순간에 형성되며, 거기서 “우리”는 함께 던져짐으로써 규합되고, 이것의

의미들에 의문을 던지면서 목적의식을 획득한다.

<행복의 약속> 사라 아메드 (2021), pp.346-347

체제전환 포럼을 준비했던 3주를 돌이켜보면, 길을 잃어버리고 현재의 불행과 고통에 직면하는 것을 반복했다. 교육의 구조적 문제와 모순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 그렇다고 해서 다양한 운동 주체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이 만들어간 역사를 무작정 따라가 보고 말을 걸어보는 행위가 결코 무의미했다고 볼 수는 없다. 주류 역사가 주목하지 않았던 수많은 존재들의 지난한 투쟁과 저항의 실천은 우리에게 삶과 체제 전환 문제가 절대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다양한 운동 주체와 대화하며 주류 교육 노동운동의 비민주성을 고찰하고 질문을 던져야 한다. 혁명은 타자와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내가 아닌 존재에게 내 에너지를 쏟으면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과 대상을 향해, 자신의 취약성을 열어젖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것은 주류 기득권 세력이 회유하고 포섭하는 과정에서 소위 진보 운동권 세력이 엄두조차 내지 않았던 저항이자 실천이다. 바로 그것은 불안을 동반한 우연한 관심[돌봄](hap care)*이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가 내포하는 '행복의 불안정한 토대'에 반대하는 일이기도 하다. 혁명과 함께 체제 전환으로 가는 길은 삶과 교육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던져지는 물음표와 저항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주류 운동이 다양한 주체 간의 차이를 지우려 했던 위계적 관계를 성찰하고, 질문과 돌봄을 통해 평등으로 나아가는 돌파구를 발견해 나간다면 주체 간의 연결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저항과 돌봄'의 가치로 주체들이 연결되어 길을 만들어나가는 것을 거칠게 상상해 본 것이다.

첫 번째, 수많은 비정규직 및 청소년, 성소수자, 장애인 등 다양한 노동자 주체를 가리는 위계적 '교육 주체' 담론을 해체하고, 교육 주체를 새롭게 발견하면서 평등한 관계를 함께 재구성해 보는 것을 상상한다. 특히, '교사·학생·학부모' 주체 담론은 각 주체의 이해와 욕망이 서로 다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교육 주체들 사이와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고, 상호의존관계와 연대의 필요성을 부정하게 한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운동 현장에서 비 교환 가치를 서로 증여하면서 돌봄을 통해 평등한 관계를 맺는 것이 일상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

두 번째, 다양한 체제 전환 주체를 버리기 위한 모임을 만드는 것을 상상한다. 이는 학교나 지역에서, 삶의 문제에 경청하며 운동 의제를 발견하고 함께 조직하는 모임이다. 모임 구성원은 나이,

*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는 것이다. 우연 돌봄은 돌봄에서 불안을 제거하려 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돌보는 것보다 더 취약한 것은 없다. '관심 가득하다, 조심스럽다'는 것은 그들의 미래가 걱정스러워서 (미래가 그 존속이 중요한 대상의 허약함 속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것들에 신경을 쓰는 것이다. <행복의 약속> 사라 아메드 (2021), p.335

성별, 장애 및 질병 여부, 출신, 직종, 노조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함께 할 수 있으며, 빈곤, 차별, 불평등, 학교 자치, 기후정의를 고민하는 청소년, 성소수자, 양육자, 교육노동자 등 교육과 관련된 당사자이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1~2가지 사안으로 모이고 흩어지는 연대 활동이 아닌, 일상적인 어려움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서로를 돌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청소년, 성소수자,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양육자의 파업 또는 불복종 행동에 함께 연대하고 조직하는 것이다. 2018년 8월 그레타 툰베리가 학교에 가지 않고 금요일마다 시위를 시작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시위에 동참한 역사가 있다. 2019년 5월 24일에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 동맹 휴교에 전 세계 100만 명이 넘는 청소년이 참여했으며, 2019년 9월 27일 광화문에서도 청소년들의 <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가 있었다. 이는 교육과 학교가 경쟁과 성장이 아닌 모든 이의 협력과 상호돌봄을 통한 회복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하는 운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과 비인간 생태가 추출 대상이 되는 것을 전면적으로 저항하는 행동으로 파업과 불복종 행동을 상상해본다. 기후위기 가속화와 심각성을 고려하여 하루 파업뿐만 아니라, 몇 차례의 경고 파업과 국제적 파업, 장기적 파업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운동 주체들과의 만남과 결집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 01 <우리 힘세고 사나운 용기-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10개의 시선> 자본-여성-기후 연구 세미나 기획, 한티재, 2023
- 02 <좌파의 길-식민주의에 반대한다> 낸시프레이저, 서해문집, 2023
- 03 <행복의 약속> 사라 아메드, 후마니타스, 2021
- 04 <돌봄선언-상호의존의 정치학> 더 케어 컬렉티브, 니케복스, 2021
- 05 '비정규직·노동시간 굴레에 갇혀...돈과 일에 매몰된 한국 사회', 박명림, 경향신문, (2023.05.04.)
- 06 '진보'라는 수식이 감춘 것들에 대한 질문 - 유천초 부당 징계 등의 사태를 통해 본 진보교육감의 현실, 명숙, 프레스시안, (2022.07.02.)

자본주의 사회에서 배제되는 것이 곧 학교에서도 배제된다

연혜원 | 투명가방꾼

hyewony0914@gmail.com

난다의 발제문과 보란의 발제문을 관통하는 것은 학교가 자본주의를 ‘위한’ 규범 위에 있으며, 그 규범을 재생산하기 위해 학생과 교육노동자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두 발제 모두 자본주의 체제를 전환하는 것은 교육 체제 전환을 위해 필연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매우 동의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배제되는 것이 곧 학교에서도 배제된다.

이 같은 사실은 난다가 발제문 말미에 말한 것처럼 좋은 교육은 좋은 사회에서 가능하다는 통찰과도 궤를 함께하는 것이다. 교육 운동과 청소년 인권 운동의 체제 전환은 곧 자본주의 체제를 전환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 문제의식을 실천하기 위해 운동과 연대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향들을 함께 논의해보는 것이 체제 전환 운동에서 이루어져야 할 지점일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발제문과 관련하여 투명가방꾼에서 활동하며 마주했던 구체적인 고민들을 이 자리에서 털어 놔보고 싶다. 그 이유는 앞으로의 운동과 연대가 달라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대전제를 선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해답은 어찌면 이미 우리가 마찰한 경험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운동의 목적지가 달라진다고 해도 지나온 길에 놓인 걸림돌들을 눈감고 간다면, 뒤따라올 동료들은 똑같은 걸림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더 많은 동료를 만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목적지를 바꾸는 일 만큼이나 지나온 길에서 발견한 걸림돌들을 재고해보는 일일 것이며, 어찌면 그 걸림돌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과정이 곧 우리에게 필요한 목적지를 재탐색하는 일일 수도 있다.

투명가방꾼은 2011년 대학/입시거부선언자들이 모여 만든 학력·학벌과 능력주의에 저항하는 단체이다. 자발적인 대학과 입시 거부선언을 입시경쟁교육 비판 운동의 동력으로 삼아온 투명가방꾼은 늘 자잘한 고민에 쉽게 부딪힌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지난해 무지개 교실로부터 개교 축하 메시지를 부탁받은 적 있다. ‘무지개교실’은 ‘노동, 사람, 연대’와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 모임 튜립연대’가 공교육 바깥의 성소수자 청소년을 위해 만든 교육 공간이자 커뮤니티로 점점

고시를 위한 교과교육을 함께 하고 있다. 난다의 발제문과 같이 퀴어 당사자와 같은 다양한 소수자들이 학교에서 차별받고 배제되며 탈락한다. 그리고 그것은 소수자들에게 이중고 삼중고가 되며, 나아가 좋은 일자리로부터의 배제와 탈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사회적인 배제와 탈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무지개교실의 검정고시 교실은 그러한 차별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하는 소중한 시도이다. 투명가방끈 역시 지난해 수능 당일 진행한 사회적 실패를 전유하고자 하는 행사에 무지개교실 활동가를 초대하고 발언을 요청했으며, 학력·학벌 차별 철폐로 평등한 교육 접근권을 주장하는 투명가방끈에게 무지개교실에서 축하 인사를 부탁한 것은 사실 전혀 이질감 없이 느껴지는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떤 지점에서 투명가방끈에게 이것은 섬세한 고민과 다시금 마주하는 일이기도 했으며, 이 마주침은 교육 운동과 청소년 인권 운동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마주하는 고민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교육 운동과 청소년 운동은 여전히 다른 소수자 운동, 이를테면 퀴어 운동, 장애 운동 등과 충분히 함께 소통해오지 못했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순전히 교육 운동과 청소년 운동만의 문제는 아니다. 난다의 발제에서 말해진 대로 사회운동 전반에서 청소년 운동과 교육 운동은 소위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팽배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때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비퀴어 비장애인 한국인으로 쉬이 상정되는 것은 모두의 문제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중심의 능력주의적인 교육의 체제를 전환하고자 할 때 우리는 일단 운동의 주체를 다시금 상상해야 한다. 학교와 자본주의가 배제하고 탈락시켜온 주체들을 교육과 청소년 인권 운동의 주체로 위치시킴으로써 교육과 청소년 인권 운동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운동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운동 또한 다시 상상되어야 하는 일인 것이다.

사례로 단 무지개교실은 대표적으로 퀴어의 관점에서 교육을 이야기하는 운동 중 하나이다. 퀴어의 관점에서 학교는 전혀 다른 맥락을 가지게 되고, 능력주의 또한 다른 맥락 위에 놓이게 된다. 학력과 능력을 취득을 통해 차별의 이중 삼중고의 고리를 조금이라도 끊어내고자 하는 소수자 지원 운동의 참여자들을 능력주의를 답습하는 주체라고 평가하고, 능력주의 저항 운동과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운동이라고 재단하지 않기 위한 방안을 갈구하는 것은 교육 운동과 청소년 인권 운동이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능력주의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관점을 다각화하고 더 많은 동료를 만들기 위해 필연적으로 깊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이는 학력과 사회에서 인정받는 능력을 지녔다고 여겨지는 이들을 자본주의 체제와 능력주의 저항 운동의 적이 아닌 동료로 맞이하기 위해서도 필연적인 관문일 것이다.

“저는 (다른 트랜스젠더들에게) 트랜지션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트랜지션 이후, 성별 정정 이후를 생각했을 때,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고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은 상태여야지 그나마 인생에 어려움이 적어요. 그러기 위해 대학에서 트랜스젠더들이 최대한 좋은 경험을 쌓고 (힘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성별 정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인생 좀 피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위에 인용한 발언에서 중요한 것은 ‘트랜스젠더는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트랜스젠더퀴어 당사자가 트랜지션만을 목적으로 하기 쉬운 성별이분법적인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데 학교와 공교육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며, 교육과 청소년 인권 운동이 퀴어 운동과 함께 적극적으로 연대 해나가야 하는 지점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입시교육은 경쟁에 전념할 수 없는 모든 몸을 삭제한다. 이는 노동 또한 마찬가지이며,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속성이다. 일례로 트랜스젠더퀴어가 차별받지 않는 학교는 경쟁이 중요한 학교가 아닐 것이며, 성별을 두 가지로 상상하는 학교가 아닐 것이며, 모든 몸을 동일하게 상상하는 학교가 아닐 것이며, 결국 이러한 학교는 자본주의적이지 않은 학교가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학교는 신체를 신자유주의적인 질서에서 상상하지 않는 사회와 연결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며, 이러한 학교와 사회의 연속체는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와 그 안에서의 노동을 다시 상상할 수 있는 사회일 것이다.

나아가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은 상태여야지 그나마 인생에 어려움이 적어요”라는 말은 학교가 더 이상 과거만큼 계층이동의 사다리로 기능하지 않음에도, 소수자들에게는 그만큼 절박한 사다리가 되기도 한다는 다층적인 현실을 드러내는 한편, 학력과 학벌이 소수자 안에서도 위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 같은 장면은 소수자 운동이 교육의 능력주의에 저항하는 운동의 적극적인 동료가 되어달라는 절박하고 필연적인 요청의 근거이기도 하다. 학교 속 능력주의는 전 사회를 갈라놓고 있다.

다시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배제되는 것이 곧 학교에서도 배제된다는 명제를 들여다봐야 한다. 교육을 자본의 편으로 만들고, 나아가 교육을 노동과 분리하고자 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적 기획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의 소외를 가속한다. 자본주의 사회가 임의로 규정한 ‘능력’에 따라 안정성과 임금에 따라 노동에 서로 다른 가치가 매겨지고, 이것이 다시금 각각의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 간에 위계를 만들 때, 노동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이에 정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민을 길러낼 수 없다. 기존에 학교가 외면해온 주체들의 학교 경험을 들여다보고, 그들을 학교의 주체로 세우는 일은 자본주의 사회가 승인하는 정상성에 균열을 일으키는 일이 될 것이며, 나아가 지금이 노동이 사람을 줄세우기 위해 당연하다고 여기는 능력의 임의적인 기준에 질문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해도 방향은 결국 우리에게로 향할 것이다.

* 『오늘의 교육』 77호, ‘트랜스젠더퀴어는 옆 반에 있다: 트랜스젠더퀴어로서 경험한 학교와 청소년기’ 177-178쪽. 오늘의 교육

근본없는 것들을 위한 교육으로의 전환

진냥 | 연대하는 교사잡것들

현 체제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더이상 말할 필요조차 없다. 지금 여기 우리가 '체제전환'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기 전에도 헬조선, 교육불가능, 교실붕괴 등의 언어로 증언되어 왔다. 또한 수많은 어린이, 청소년, 교육노동자의 고통이 현 사회 체제의 지속불가능성에 교육이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 체제에 미련이 없다. 보수층조차도 체제에 모순을 절감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체제를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에 집중하기보다 다음의 질문에 선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무엇으로 전환해야 할 것인가?

두 발표자들은 결이 비슷한 문제진단을 각기 다른 프리즘으로 관통하여 제시하고 있어 보다 입체적으로 전환을 상상할 수 있게 해주었다. 특히 그간 매우 정치적 영역이면서도 괴이한 방식으로 탈-정치화되어 있던 교육을 일상정치와 운동적 실천의 영역으로 옮겨오며 평등하게 연대맺고 돌보는 교육을 제안한 두 발표자들에게 공감과 동의, 지지를 표하며 몇몇 이야기를 보태어보고자 한다.

교육지방자치의 재점화: 서울공화국, 도시공화국으로부터의 전환

한국은 지방자치와 동시에 교육지방자치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한국의 교육이 지방자치가 실현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두 발표자가 공통적으로 지적한 '진보교육감' 운동의 한계와도 맞닿는 지점이다. 그러나 교육지방자치제는 주권자가 선출한 지방의 단체장이 가지는 책무나 권한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진다. 더욱이 공공연하게 서울공화국으로 호명되는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지방자치라는 네 글자의 의미는 더욱 무겁다.

브라질의 해방교육학자 프레이리과 미국의 페미니스트 학자 벨 훅스는 교육의 내용과 과정에서 다양한, 구체적으로는 비주류/소수자 집단의 당사자성을 반영하는 교육을 역설했다. 교육에서 다루어지는 신체, 계급, 지역(공간), 젠더, 문화적 배경이 주류집단의 것일 때 교육은 해방적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의 교육에서도 이러한 지적이 있어 최근의 교육과정에는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들의 사례가 종종 언급된다. 하지만 그 뿐이다. 한국 교육의 목표는 in서울이고, 온갖 문화 콘텐츠는 서울 '특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모든 자원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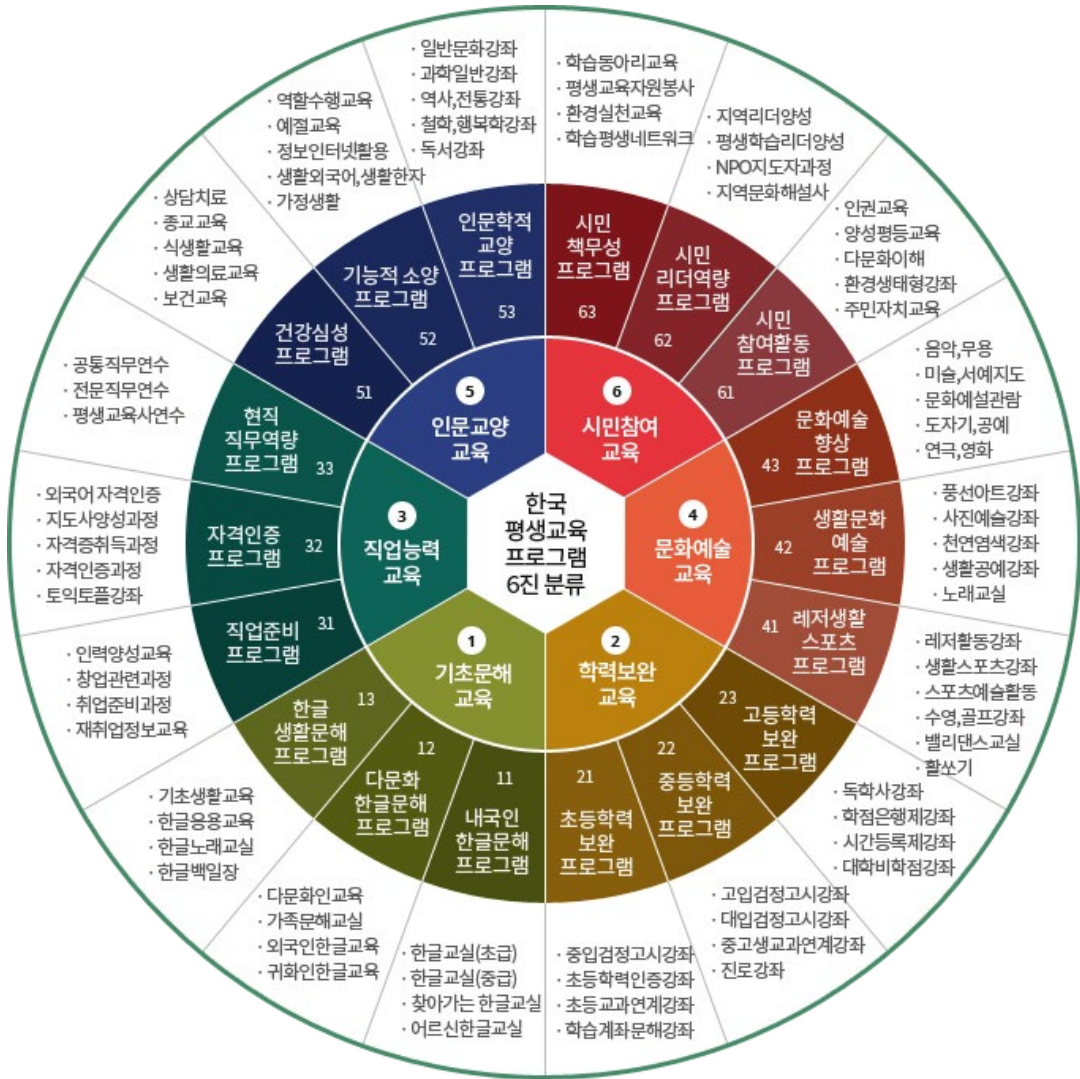
한국의 교육은 서울을 흠모하게 가르치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무지해도 괜찮게 세뇌한다. 한국 같이 작은 나라에서 광역지자체의 위치정도의 공간감을 가진 국민조차 다수가 아니라는 것은 한국 교육이 얼마나 지방교육을 도외시해왔는지를 시사한다.

지역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론이 있다. 좁은 국가에서 각 지역별 교육과정을 모두 개발하는 것이 차별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주장에도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와 생태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교육에는 이 지역의 역사와 생태에 터한 이상적인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 상상하고 구체화하고 제언하는 정치적 논의와 실천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경제발전의 필요성과 지역소멸에 저항하는 도시지향의 발전론이 아니라 어떤 사회, 어떤 공간, 어떤 지역에서 살고 싶은가에 대한 정치적 논의가 유아학교, 초등학교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그 지역의 텍스트가 교육의 내용으로 활용될 것이며 교육을 통해 지방자치의 일상적 실현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격차, 서울의 높은 지대, 부동산을 둘러싼 부의 불평등 등 서울중심주의를 해체하지 않고서는 한국 사회의 체제를 전환할 수 없다. 이 문제를 교육의 맥락에서 접근한다면, 서울과 도시 중심주의의 고리를 끊어내고 지역의 공공성을 시민적 감각으로 체득하는 교육을 실천해 낼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운동을 재점화해야 할 것이다.

나이에 귀속되지 않는 교육기회의 평등으로

한국 사회는 생애의 '정상' 궤도를 나이에 따라 촘촘하고 위계적으로 설정해두고 그것을 기반으로 차별과 통제를 구조화하고 있다. 한국의 나이주의는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강고하고 나이에 따른 정상성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 생산의 증추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제도권 학교에만 교육자원이 집중되는 학교 주도의 교육 체제는 소위 '배워야 할 나이'로 분류되는 어린이·청소년·청년의 삶을 억압할 뿐 아니라 다른 나이의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이중의 부조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한국 헌법 31조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권은 '모든 국민'의 권리임에도 보편 권리가 아닌 일부 연령대의 권리로 국한되어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권을 제도권 학교 교육을 통해 자본을 생성할 권리로 해석하는 것을 탈피하고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권리로 명명하고 제도로 구축해내는 교육운동이 필요하다. 유사한 시도로 마을교육공동체가 있었으나 마을교육공동체운동 역시 어린이와 청소년은 배우는 사람, 마을의 소위 '어른'들은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나이귀속성을 벗지 못했다. <한국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6진 분류>를 보면 굳이 나이에 국한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을 찾는 것이 더 어렵다. 또한 누구에게나 모두 필요한 내용이다. 모든 국민은 그들의 나이에 상관없이 전 영역의 교육에 접근을 보장받아야 한다.



한국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6진 분류

현 정부는 역대 정권들과 다를바 없이 사교육을 없애겠다고 각종 정책을 내어놓고 있다. 사교육 부담을 줄이겠다고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방과후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돌봄을 제공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정말 사교육은 없어져야 하는가? 모든 교육이 국가주도의 공교육이어야만 하는가? 국가의 개입없이 개인과 개인이 서로 배우고 가르치며 함께 공부하고 교육을 매개로 정치적인 또는 경제적인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없어질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사교육이 아니라 입시에 매몰된 경쟁교육이다.

오히려 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나이에 귀속되지 않는 수많은 교육 공동체들을 만들어내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이를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교사 중심 교육운동에서 벗어나 필요성만큼 학교 중심 교육운동에서도 벗어나야 할 필요성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학교 교육의 불가능성이나 문제점을 차지하고 더 이상 학교가 곧 교육이라는 도식에서 벗어나 교육은

등을 재구성하여야 한다. 교육기회의 평등은 나이에 국한될 필요가 없으며 ‘배워야 할 나이’이기에 권리가 제한당하는 사회 제도와 문화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동일연령 학급구성 원칙의 폐지, 자유학교 등 지금도 시도되고 있는 학년교육과정의 유연화 확대, 학교가 아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공동체,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 배움의 동료로 존중하는 교육문화 등은 이미 가시화되어 있는 과제다.

노동과 교육의 개념 확장

교육지방자치와 나이에 귀속되지 않는 교육기회의 평등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노동과 교육의 개념 확장 역시 요구된다. 누구나 어디서나 배울 수 있다면 교육의 경계가 흐릿해질 것이기에 교육노동자의 직무의 경계 역시 혼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교육은 복합적이고 경계가 불분명한 노동이다. 때문에 지금 교육계에서 ‘○○도 교육이다/○○은 교육이 아니다’의 논란이 뜨거운 쟁점인지 오래다.

지금도 교육노동자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수많은 집단을 중재하고 위계를 조정하는 정치행위이며, 이 노동은 사회가 복잡화될수록, 더 넓고 평등한 교육이 이루어질수록 노동강도가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돌봄과 연대, 조정과 소통의 노동을 부차화하지 않고 교육노동의 중요한 축으로 여길 수 있는 제도를 쟁취해야 한다. 이 제도는 교사의 양성과정, 교사관, 교육노동자의 노동환경, 교육참여자 및 주변인들의 이해관계 등을 포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환은 특히, 교육노동자 중 ‘전문직’ 정체성을 대중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사 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Davies(1995)는 ‘옛 전문직’을 엘리트주의, 온정주의, 권위주의, 고도로 배타적인 지식, 통제와 분리로 특징지어지는 것으로 설명한다. 또한 그의 주장에 공감하는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옛 전문직’ 모델을 열망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20세기 이후 직업의 전문성은 주로 국가에 의해 결정되어 왔으며 대부분의 전문가는 정부에 의해 고용되거나 최소한 규제되어 그들이 가지는 전문적 지위는 직업상 국가와 맺은 일종의 협정(‘전문적 권한’이라고 불린다)에 따라 달라진다. Gewirtz et al(1995)는 교육전문가성에 대해 시장화 정책의 결과가 반영되어 사실은 교육전문가가 아니라 ‘관 전문가(또는 복지주의자)’와 ‘신경영가’의 전통이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전제에서 우리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누가 ‘교사’라는 직업을 정의하는데 관여할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위해 관여할 것인지에 근본적으로 질문할 필요가 있다(Geoff Whitty, 2006).

이와 같은 배경에서 Whitty(2000)은 전통적인 폐쇄적 전문주의가 아니라 ‘민주적 전문주의’로, 교사와 다른 이해관계자들간의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협동적 전문성’을 제안한다. 즉 전문가인 개인들이 교육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간의 협업과 조직의 민주성으로 하여금 교육의 전문성이 발휘되는 생태계적 인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태고 싶은 쟁점은 교육참여자, 즉 학생의 노동자성에 대한 것이다. 이 쟁점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배움에 참여하는 것 역시 노동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학생이 교육공간 안에서 하는 노동에 대해 노동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토론자로서 학생의 배움 참여 역시 노동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이다. 이 주장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학생’은 학교의 중요하면서도 최대 다수의 구성원이며 학교의 실제적 운영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한다. 행사운영, 방송부, 도서부, 급식 활동 지원 등의 노동을 통해 학생들은 학교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심지어 학생들의 노동 중 일부는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노동이다. 학생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거나 학생들이 청소를 하고 나면 다시 해야 한다는 푸념들도 많은데, 그것은 ‘노동성’을 판별하는 데 관계가 없는 말이다. 일 못하는 직원을 해고할 순 있지만 근무한 시간에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노동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순 없다. 능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과 있었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그렇지만 학교는 늘 이를 노동이 아니라 ‘봉사활동’이라고 부른다(진냥, 2021).

혁명은 변화하는 것과 변화하지 않는 것의 이중주라고 하지만 변화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미리 설정해놓는다고 한들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이며 체제의 전환은 근본적이고 전 체제적일 수밖에 없다. 요컨대 교육의 공간이 동시에 노동의 공간임을 인식하고 가르치는 자만이 아니라 배우는 자 역시 노동하고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 노동에 대해 존중하고 보장하며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의 보장이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을 보편적 권리로! 모든 교육참여자에게 노동권 보장을!

참고 자료

- 01 진냥, 「이것은 왜 노동이 아닌가」, *오늘의교육*, 64, 2021.
- 02 Davies, C., 『Gender and the Professional Predicament in Nursing』,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1995.
- 03 Geoff Whitty, 「Teacher professionalism in a new era」, a paper presented at the first General Teaching Council for Northern Ireland Annual Lecture, Belfast, 2006.
- 04 Geoff Whitty, 「Teacher professionalism in new times」, *Journal of In-service Education*, 26(2), 2020.
- 05 Gewirtz et al., 『Choice, and Equity in Education』, Open University Press, 1995.

빈곤과 청소년의 삶에 교육이 답해야 할 것들

김중미 (기차길옆작은학교)

한국 사회에서 학교 교육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에서 타고난 계급적 지위를 공고하게 하는 수단 이 되었다. 초중고 모든 교육이 대학입시와 미래의 성공에 맞춰져 있어 학생들은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도태되고 실패한 인생이 된다. 또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지와 존중을 받으며 나이에 맞는 자아정체성을 확립해 가고, 민주주의와 공화를 배우는 곳이 되길 바라는 교사들의 바람은 처참하게 무너진다. 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공교육을 비판하며 대안학교들이 만들어 졌지만 대안학교 역시 중산층은 돼야 누릴 수 있는 특권이였다.

우리 공동체는 1988년부터 일제강점기 때부터 노동자들이 모여 살던 빈민지역에서 공부방을 하고 있다. 20대 초반에 모여 공부방과 함께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하며 살았다. 지역과 공부방에서 만나는 이웃들은 노동, 빈곤, 장애, 이주 배경 등 이중 삼중의 차별과 불평등을 경험한다. 그들의 자녀들 역시 경제적 곤란과 차별에, 학습 면에서나 정서심리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2000년대에 이르러 일부 지역이 재개발되고 LH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선주민들과 다른 주거환경이 조성되었지만 여전히 70, 80년 넘은 판잣집이나 90년대 우후죽순 지어졌던 다세대주택지역이 공존한다. 공부방이 있는 만석동을 제외하고는 곧 대규모 재개발이 시작된다. 2000년대 이후 공부방 부모님의 학력이 초졸이나 중졸에서 고졸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대기업이나 건설한 중소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보다 열악한 하청공장노동자나 비정규직 서비스 노동자, 건축노동자 비율이 높다. 2000년대 이후 공부방 아이들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하고, 드물게 대기업이나 전문직에 근무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여전히 연봉 2천만원에서 2천 500만원 정도 저임금노동자들이다.

불평등은 어떻게 대물림되는가

지난 1월 19일 기차길옆작은학교 고등부 졸업식이 있었다. 우리 공부방은 초등학교 때 공부방에 들어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닌다. 자신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지만 대부분 졸업하기 전 까지 공부방에 다닌다. 올해 졸업해야 할 아이들은 6명인데, 4명만 졸업했다. 2명은 중도에 그만 두었다. A는 보육시설에서 살아 팬데믹 동안 공부방에 올 수 없었고, 엔데믹 이후에도 한동안은 등

록된 학원이 아니면 외출이 허락되지 않았다. 또 다른 중도탈락자 B는 이주 배경의 느린학습자였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습뿐 아니라 교우관계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때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을 때라 B가 종합심리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기까지 지체된 시간이 많았다. 학교에서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B는 학습에 아예 흥미를 잃었고 고3 1학기 때 공부방을 그만두었다.

역설적이게도 팬데믹은 B를 비롯한 공부방 느린학습자들에게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 모두 알다시피 팬데믹은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필수노동자, 노인, 여성, 이주민 등의 소수자들에게 더 가혹했다. 당연히 공부방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 시기에 아이들과 아이들의 가정에 드러나지 않던 문제들이 표출되었다. 아이들에게 닥친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학교, 지역의 청소년상담센터, 다문화센터, 장애인복지관, Wee센터 등과 협력했다. 그 뒤 2년에 걸쳐 초등부 2명, 중등부 5명, 고등부 3명이 청소년상담센터와 위센터에서 종합심리검사를 받고 느린학습자, 경도지적장애 판정을 받았다. 한국에 이주한 지 20년이 된 B의 어머니는 공부방에 신뢰가 있어 B를 이해하고 적절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다른 가족의 이해가 부족했다. B가 자신이 느린학습자라는 것을 부정하고 반발했던 것과 달리, C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스스로 특수학급을 선택했고 친구들에게 자신이 느린학습자라는 것을 밝혔다.

C의 어머니는 이삿집센터 노동자로 남매인 자매에 대한 책임이 강했다. 공부방 이모삼촌들을 신뢰해 C가 가진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풀어갈 수 있었다. C의 남동생은 협력형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는데 고2 때부터 지역 내 기업체에서 일주일에 1,2일 씩 현장 실습을 하고 임금을 받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동일계 공업전문대학 야간에 진학할 수 있어 선택했다. C의 동생은 자신이 엄마와 누나를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강하다. 빈민지역일수록 가족 안에서 가부장적 질서가 공고한 편이다. 반면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C는 엄마가 카페를 차려줄 거라고 철썩같이 믿는다. 이모삼촌의 끈질긴 노력으로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이해한 C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내내 서 있어서 힘들 것 같기 때문이란다. 공부방 이모한테 앉아서 하는 아르바이트를 찾고 싶다고 고백한 C의 자립은 아직 막막하다. 서울에는 느린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1년 과정의 직업학교가 있다. 그곳에서는 바리스타 자격증만 따는 것이 아니라 손님 응대, 타인과 관계 맺는 법, 사회를 이해하는 법까지 배운다. 문제는 한 달 수업비가 5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전 정부 때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일정 정도의 지원이 나와 C의 선배들이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 지원이 끊겨 C는 그 혜택마저 받을 수가 없다.

D는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께서 소개를 받아 공부방에 다녔다. 게임중독이 심한 상태였지만 공부방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우고, 게임 쪽으로 진로를 정한 뒤 공부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정보계통 특성화고등학교를 다닌 D는 이번에 4년제 멀티미디어학부에 진학했다. 공부방에서는 D의 성적을 꾸준히 관리해 주었고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D의 어머니도 아들에게 계

속 관심을 가진 덕분이다.

E의 부모는 택배 일을 하며 삼남매를 키운다. E의 동생은 일찌감치 씨름 유망주로 뽑혀 운동을 하게 되어 공부방도 중간에 그만두었다. 어려운 형편에 E까지 지원해야 하는 가족은 늘 쪼들렸다. E는 동생들에 대한 책임감이 강해 특성화고등학교를 선택했다. E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4,5등급을 유지했고 자격증도 땀다. 처음에는 진학보다 취업 의지가 더 컸지만 결국 대학 진학을 선택했다. 공부방에서도 E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는 수도권 4년제 사회복지학과와 서울에 있는 전문대에 합격했는데, 전문대를 선택했다. E는 지금도 아르바이트를 두세 개씩 하고 있다.

F는 이번 졸업생 중 유일하게 공동체 자녀다.(88년 기차길옆작은학교가 시작한 이후 자원교사로 활동했던 청년들이 모여 만든 공동체. 열 가족이 함께 하고 있다.) 엄마는 교사이고 아빠는 기업의 연구실에 있다가 작년 창업했다. F는 공동체 언니 오빠들이 그랬던 것처럼 공부방에 다니면서 영어학습지만 따로 해왔다. 그래도 내내 상위권을 유지했고, 서울 시내 중상위권 대학의 물리학과에 진학했다. 수의학과와 물리학과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자신은 공부와 연구에 적성이 맞다고 판단해 물리학을 선택했다. 수시 여섯 개 대학 모두 합격했는데, 대학 순위나 명성보다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개설한 대학을 선택했다. F의 부모 역시 맞벌이고 공부방에서 하는 수업이 사교육의 전부였지만 다른 친구들과 가진 자산이 달랐다. 자신의 적성을 찾고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는 데는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모와 친척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F부모의 형제들은 교사, 의사이거나 대학 교수다. 그들의 존재는 F에게 든든한 자산일 뿐 아니라 동기부여가 되었다.

로버트 D 퍼트넘은 ‘우리 아이들/빈부격차는 어떻게 미래 세대를 파괴하는가’에서 자신이 자란 ‘포트클린턴’이란 지역을 중심으로 미국 사회의 불평등을 해부했다.

“대학교 교육을 받은 미국 가정의 총재산은 1989년과 2013년 사이에 47%정도가 증가했다. 반면에 고등학교 교육만 받은 가정의 총재산은 실제로 지난 사반세기 동안 17%나 떨어졌다. 사회적 지위 상승을 위해서는 부모의 부가 특히 중요한데, 아이들이 더 많은 보상을 찾는 과정에서 더 많은 모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비공식적 보험을 부모의 부유함이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엄마와 아빠로부터 생활비를 빌릴 수 있는 자녀는 직업을 찾는 데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은 반면, 부모가 제공하는 생활비가 없는 자녀는 자신에게 다가온 첫 번째 일자리를 잡아야만 한다.”
로버트 D 퍼트넘, 『우리 아이들/빈부격차는 어떻게 미래 세대를 파괴하는가』, 페이퍼로드

교사 출신의 사회학자 강지나 작가는 2010년부터 빈곤의 대물림을 연구하기 위해 빈곤 청소년들을 10년 동안 추적 관찰해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라는 책을 냈다. 그 책에서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자녀의 사회 진출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만한 여유는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 있다. 그럴 여유가 없는 가정의 자녀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고스펙을 쌓지 못하기 때문에 저소득 혹은 주변부 노동시장에 머물러야 한다. 즉, 첫 노동시장 진입까지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가족 공동체가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현 구조는 빈곤을 재생산한다. 이제 우리 사회는 계층 상승의 기회가 거의 없는, 아예 계층 상승의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구조인 셈이다. 비단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우리는 좀 더 넓은 계층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강지나 P158. 돌베개)

이주 학생과 장애 학생은 어떻게 지워졌나

우리나라의 교육은 아동과 청소년을 ‘인적자원’으로 본다. 사회에 필요한 인적자원이 될 수 있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당연히 미래의 인적 지원이 될 수 없는 장애 아동, 이주 배경을 가진 아동들은 그 ‘인적자원’에서 배제한다.

한국은 이주민이 220만(2022년 기준)이 넘는 다문화 사회이다. 우리 모두 다문화 사회의 다문화 인종인 셈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다문화’가 이주 배경을 가진 아이들만을 일컫는 말이 되었다. 다문화 아이들은 선주민 아이들과 달리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수동적 존재, 취약한 존재로 규정된다. 이주 배경을 가진 아이들 중에는 미등록인 경우가 많다. 부모 모두 이주민이거나 난민인 경우는 국적이 없기 때문이다. 온갖 저출생 대책을 쏟아내면서도 한국에 살고 있는 미등록 아동청소년들에게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다. 미등록인 아동청소년들은 한국어로 말하고 쓰고, 한국 음식을 먹고 살지만 스무 살이 되면 더는 한국에 있을 수 없다. 그들에게 한국은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곳이다.

인천의 연수구, 안산 단원구에는 선주민 학생들보다 이주민 학생들이 더 많은 학교가 있다. 선주민들이 이주민들이 많은 학교에는 자녀를 보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이주 배경 학생들 때문에 자신의 자녀가 수업에 방해받는다며 말한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으로 낙인이 찍히는 것은 장애인도 마찬가지다. 교실에서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같이 수업을 받을 경우, 장애아동 때문에 비장애아동이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장애 아동, 이주 배경 아동 역시 비장애 아동, 선주민 아동과 동등한 교육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학교와 학부모는 장애 학생, 혹은 이주 배경 학생 때문에 피해를 보는 비장애인 학생과 선주민 학생을 중심으로 놓는다. 물론 수업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또한 교육과정 중 하나다. 그런 문제는 장애보조교사, 협력교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장애 아동과 이주 배경 아동이 차별받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당국이 필요한 정책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문화 아이들이 많은 학교에 배치되는 교사들은 신규 교사가 많다.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이해나 전문성이 없는 채로 경력교사들이 기피하는 학교에 가게 된 신규교사들은 시스템이 제대로 갖

취하지 않은 현장에서 '다문화'에 대한 혐오와 거부감만 쌓일 수밖에 없다. 또 다문화 학생 역시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존중을 받지 못한다. 다문화 사회의 학교교육은 달라야 한다. 교육대학원에 다문화교육 관련 학과를 만들고 관심이 있는 교사들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또한 다문화 학생이 많은 학교에는 학교복지사와 전문상담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학생들이 처한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우선 빈곤, 장애, 이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힘을 가질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가난 때문에 의식주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일을 맘껏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냥 불편한 정도를 넘어, 사회적 개체로서 '나'의 위신과 존재가 부정당하는 일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자아는 자신감을 상실하고 사회적 존재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끼고 자신의 욕구에 대해 둔감해진다. 흔히들 빈곤층은 왜 미래를 위해 저축하지 않고, 왜 절박한 순간에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고, 왜 자신의 계급적 이해와 배치되는 선택을 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가난하다는 것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재화가 없음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고 사회적 존재가 일상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에 대처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야 한다. 즉, 생존 자체에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합리적 판단을 하고 미래 지향적 사고를 할 에너지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된다.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강지나 P99 돌베개.)

지워진 아이들을 어떻게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

윤석열 정부는 '늘봄학교'라는 정책을 도입해 2023년 시범 운영했다. 늘봄학교는 학부모가 원한다면 자녀를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최대 13시간 동안 학교에 맡길 수 있는 정책이다. 점심 급식뿐 아니라 아침저녁으로 간식과 간편식으로 세 끼를 제공한다. 교육 당국은 교사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했지만 시범 운영 때부터 지원하는 학교가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시범학교가 된 곳이 다수였다. 1년 동안 시범 운영된 '늘봄학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다. 갑자기 떨어진 예산을 쓰느라 교사, 돌봄전담사, 늘봄학교 담당자들이 골머리를 앓았다. 부모들의 부담은 덜었는지 모르나 아이들은 아침저녁으로 제공되는 간편식을 먹지 않아 음식물 쓰레기가 되기 일쑤였고, 예산을 쓰기 위해 만들어진 기획 프로그램에 동원되는 것을 귀찮아했다. '늘봄학교'가 시범 운영되는 동안 드러난 문제가 적지 않았는데도 정부는 늘봄학교를 2024년부터 전면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늘봄학교' 담당자를 구하지 못해 현직 교사나 기간제 교사를 배치하겠다고 했다.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한 '돌봄교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만들어진 '방과후 학교'가 주먹구구로 학교에 들어오면서 생긴 문제들을 '늘봄학교' 역시 그대로 되풀이할 우려가 크다.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가 가진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학교 공동체 안에서 계속 갈등을 일으킨 까닭은 정책이 장기적인 교육적 비전에 따라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권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급

조되었기 때문이다. ‘늘봄학교’를 도입할 때도 성장기 아동을 13시간씩 학교에 머물게 하는 것은 아동학대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정책을 밀어붙였다. ‘늘봄학교’가 필요한 보호자들은 대부분 맞벌이거나 한부모, 조부모 가정이거나, 혹은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아이들이 종일 학교에 있다면 보호자들의 마음은 편할지 모른다. 그러나 13시간 동안 학교에 있어야 하는 아동은 어떨지 아무도 묻지 않는다.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신체활동, 사회활동에 미칠 영향이나 정서적, 심리적인 영향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된 결과조차 없다. 아이를 맡길 데가 필요한 학부모를 위해 똑딱 만들어진 정책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할는지 모르겠다. 하긴 어차피 대한민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지금의 행복을 누릴 권리가 없지만 말이다.

방과후 돌봄의 시작은 80, 90년대 빈민지역에서 시작한 공부방이었다. 그때 공부방은 돌봄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 센터와 같은 곳이었다. 우리 공부방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들에게 학습이나 문화예술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인권, 성평등, 기후 문제를 깨닫고 배웠고,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와 공화를 경험할 수 있게 했다. 보호자들 역시 초기부터 공장지대인 지역에서 아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4.5톤 이상의 덤프트럭은 동네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마을도서관을 만들고, 진보정당운동도 함께 했다. 또 노동, 성평등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토론하고 각자의 일터에서 목소리를 내는 데 힘이 되기도 했다. 공부방은 단지 돌봄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시민교육의 장이었고 아이들이 지역사회의 주체로 자라나는 공간이었다.

그 공부방이 2000년대에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지역아동센터가 되었다. 이후 지역아동센터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혹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우선 돌보는 곳이 되면서, 지역아동센터는 가난한 아이들만 다니는 곳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반면 자신이 도움을 받을 대상이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미등록 이주 배경 아이들은 갈 수 없는 곳이 되었다. 또한 낙인이 찍힌 지역아동센터 대신 ‘보편적인 아동 돌봄’은 학교가 떠맡게 되었다. 지역공동체의 ‘서로 돌봄’과 운동적 성격은 사라지고, ‘돌봄’의 기능만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돌봄교실로 갔다. 그리고 이제 ‘돌봄’은 어른들의 노동문제가 되었다. 돌봄 수혜자인 아동과 청소년은 지역공동체, 시민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라 돌봄을 받아야 할 수동적인 존재가 되었다. 어디에서도 그들의 행복에 대해서 말하지 않게 되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의 어깨동무를 꿈꾸며

타인에게 의존하고 돕고 기대어 사는 것은 반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립된 개인으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교육과 돌봄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다. 교육을 받는 학생, 돌봄을 받는 어린이 모두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교육과 돌봄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들의 행복은 뒷전인 채로 만들어지는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 늘봄학교는 폐지되어야 하고, 돌봄교실은 학교 담장 너머 마을로 보내져야 한다. 안전이란 이름으로 학생들의 세상을 학교 담장 안

에 가뒤편은 안 된다. 물론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학교 밖에서든 학교 안에서든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돌봄의 기능이 제 모습을 찾고 그 가치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재개발 등으로 붕괴한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회과학자들은 사회적 연고, 즉 가족, 친구, 이웃, 지인과의 비공식적인 유대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회자본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 그것은 또한 시민 형의체, 종교기관, 운동 단체, 자원봉사 활동 등에의 참여를 통해서도 형성된다. 사회자본은 개인이나 공동체 모두의 행복을 예견할 수 있는 강력한 지표로도 반복해서 입증된다. 공동체의 결속과 사회관계망은 건강, 행복, 교육적 성공, 경제적 성공, 공동 안전, 그리고 (특히) 아동복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재정 자본이나 인적 자본과 마찬가지로 사회자본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여기서 분석하려는 것처럼, 사회적 연결성의 측면에서의 차이는 청소년들 간 기회 격차를 불러온다. (위의 책 299쪽)

작년에 대학교 졸업반인 자립준비청년 G가 응급 상황에서 중환자실까지 갔다가 회복한 일이 있었다. G가 다니는 학교는 천안에 있었는데 가까운 지역에 같은 보육시설 출신의 학생들이 있어서 병원비와 회복하는 동안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들은 그동안 같은 지역에 있는 자립청년들끼리 네트워크를 만들어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자립청년들에게 제공되는 혜택들을 적절하게 이용해 왔다. 한 기업에서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밀키트를 받아 식비를 줄이거나, 학원비를 지원하는 바우처를 이용해 영어 인터넷 강의를 들었다. 위의 지원책들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으나 네트워크가 없었다면 정보를 알 수 없어 이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았다. 자립청년들이나 빈곤청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주거 문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LH청년전세임대주택 혜택이 있지만 집을 구하기 어렵고 서류절차도 까다롭다. 이때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지역마다 자립지원센터가 있다면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과 취업 등, 독립을 위한 준비를 좀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

지역마다 있는 청소년아동상담센터, 다문화센터, 장애인지원센터나 복지관, 정신건강보건센터가 인력을 보강해 학교나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돌봄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들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다. 또한 신도시나 큰 도시의 아파트 지역에 집중된 아동 청소년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이 노동자와 서민들이 사는 지역 안에 만들어야 한다. 불평등한 상황에 놓인 아동 청소년, 청년들을 지원할 네트워크를 교육이나 돌봄이나 그 역할을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다. 둘은 따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미래의 인적자원이 아닌, 지금이 땅에서 살고 있는 아동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는 일, 그것이 참교육이 아닐까.

토론4

교육복지를 다시 인식하고, 새롭게 학교공공성을 말하자

교육공무직 노동자가 시도하는 교육운동의 지향점

박성식 |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bullet1917@hanmail.net

들어가며

한국은 교육입국 사회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교육열에 불타는 이 나라는 정작 ‘교육이란 무엇이나’는 질문을 하지 않는 나라다. 그 질문을 던져 파문을 일으키는 교육운동이 필요하고 근본적 방향이지만, 난 조금 다른 방향에서 천천히 그 문제에 접근하려 한다.

내가 속한 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운동의 한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의 교육과정보다 어떤 환경에서 교육할 것이냐 하는 토대, 즉 학교라는 시스템 문제에 주목하려 한다.

2022년부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를 바꾸기 위해 ‘교육복지’*를 우리 사회의 중요한 대중적 과제로 다시 인식하고, ‘교육공공성’과는 다른 ‘학교공공성’이란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려고 한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공론의 장에 꾸준히 제기하고 조합원들과 공감하려고 시도 중이다.

* 교육복지 개념은 아직 뚜렷하게 정의되지 않고 있으며, 교육현장에서는 통상 취약계층을 돕는 일개 사업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 다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교육복지의 개념은 ‘교육과 복지의 관계’, ‘교육과 교육복지의 관계’속에서 논의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교육복지의 대상 및 목적에 대한 관점’을 통해 논의되고 있다. 우선 ‘교육과 복지의 관계’를 통해 교육복지의 개념화를 시도하는 접근에서는 a) 교육에 복지의 개념이 내재되어 있다는 내재적 관점과 b) 교육을 사회복지 영역의 하나로 간주하는 입장, c) 교육복지를 교육 자체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여건으로 이해하는 입장으로 구분한다. 두 번째, ‘교육과 교육복지의 관계’를 통해 교육복지의 개념화를 시도하는 접근에서는 a) 교육과 교육복지를 동일하게 보는 관점, b)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복지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구분된다. 마지막 ‘교육복지의 대상 및 목적에 대한 관점’을 통해 교육복지의 개념화를 시도하는 접근에서는 a) 교육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최소한의 교육수준(또는 절대적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 b) 교육 소외 및 교육 불평등에 처한 교육취약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상대적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 한국교육개발원. 2019. <교육복지정책 평가 및 개선과제>

이런 정책 방향을 주제 발표문1 「교육체제 전환, 무엇을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가」 참고자료의 일부 내용과 연결시켜 소개해보고자 한다.

1. 학교의 사회적 역할에 주목하는 '학교공공성'

[발표문1] “교육체제전환을 이야기할 때 빠뜨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교육의 목표와 학교의 존재 이유에 관한 재사유”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운동을 다른 영역으로 확장해야 한다. '교육공공성' 차원에서 훌륭한 교육과정으로 좋은 교육을 하는 것은 핵심 과제다. 잘 해내면 좋지만, 한국은 교육의 '과정'이 아니라 '평가'에 몰두하는 사회다. 학습 성과를 평가해 줄 세우는 일에 전적으로 몰입하며, 다수의 소외와 실패, 불안을 양산한다. 그렇게 교육과정과 학교는 평가(시험)에 능숙한 학생들을 발굴하는 목표 아래 운영된다. 지금 학교는 학원과 더불어 각자도생 경쟁의 거점인데, 그런 학교를 공동체 돌봄과 평등의 가치로 짜여진 공간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이 또한 작지만 체제 전환을 꿈꾸는 한 풍경일 수 있다.

기존 교육운동은 교육을 '획일적 평가'가 아닌 교육 본연의 '과정의 문제'로 만들려 노력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노력은 결국 '어떤 공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의 문제에 국한돼왔다. 이런 운동은 전적으로 교사에게 의존하는 교사 중심 운동일 수밖에 없으며, 학교와 연결된 다른 대증을 주변화시킨다. 그리고 이런 교육운동은 우리 사회의 이념논쟁과 결부돼, 누구도 주도하지 못하는 답도 없는 정치적 공방을 벌이며 자본주의 경쟁에 저항할 힘을 잃고 끌려가고 있다.

교육운동이 주창해온 '교육공공성'도 퇴색하고 협소해졌다. '교육공공성'의 깊이와 철학을 되살리는 운동도 필요하지만, 나는 다른 영역인 '학교공공성' 운동도 개척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교사 외 대증을 객체화시키는 교육운동 말고, 대중의 절실한 요구에서 출발하는 '학교공공성' 운동이 가능함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비로소 운동은 변화를 주장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대중의 요구와 절실함에서 시작하는 만큼 '오늘 여기서' 변화를 만드는 힘으로 거듭날 수 있다.

2. 학교에서 체감하는 교육복지

[발표문1] “지금 체제에 저항한다는 것은 학교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즉 '공교육 정상화'나 '내실화'라는 의제로 표현되는 교육 개혁과는 달라야 한다. ... 중략 ... 체제 전환의 목표는 모든 사람의 존엄을 보장하고 '자기를 착취하지 않아도 되는', 더 느리고 우리 모두의 취약함을 돌보는 사회와 교육이다”

학교는 경쟁의 장이 아니라, 경쟁과 소외에 갇힌 취약한(가난의 의미 아님) 모든 개인들을 보편적으로 돌보는 장이 돼야 한다. 그렇게 학교는 신자유주의 사회가 파편화시킨 공동체의 가치를 돌보고 체감하여, 자라나는 세대의 몸에 각인시키는 공간이 돼야 한다. 그것은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몸소 체감함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교육복지다. 교육복지란 “교육의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제반 공적 교육지원 체계”라고 교육공무직 본부는 정의한다.⁰¹

3. 교육복지를 통해 체감하는 가치

[발표문1] “지금까지 교육의 방향성은 모두가 어느 선까지 도달할 수 있게 하고, 모두가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복지나 지원 제도가 목표로 하는 것도 비슷하다. 결국 어떤 기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일 때, 그 기준이 충족되어야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복지도 결국은 경쟁의 어느 지점에 도달하도록 도울 뿐이라는 주장은 결과론 측면에서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건 복지가 문제여서가 아니라 결국 학교 교육과정의 문제인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복지는 공동체의 연대와 상호지원이라는 가치에 입각해 있으며, 그 정신에 따라 대중들의 절실한 필요성에 호응하여 공적 지원을 함으로써 아이들과 양육자, 시민들이 공동체 정신을 체감하게 하는 ‘오늘 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4. 학교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교육복지

[발표문1] “어린 시절부터 비교와 경쟁이 아니라 존중받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하고 서로의 존재를 지지하는 공간으로서의 학교, 학생만이 아니라 양육자와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역할을 하는 학교”

어릴 적부터 경쟁이 아닌 상호 존중을 경험하는 학교, 서로의 존재를 지지하는 학교, 이런 학교가 바로 교육복지가 충만한 학교다. 보편적 교육복지는 가정환경이나 성적을 묻지 않고 학생이라는 존재 그 자체를 존중하는 시스템이다. 장애인 교육복지는 사회집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서로를 지지하는 시스템이며, 더불어 취약할수록 더 강력하게 지원돼야 한다.

교육복지가 직접 학교에 정치적 자유를 가져다주진 않는다. 다만 학교와 성인사회의 교육복지 체계를 정하는 것은 매우 정치적인 문제이며, 이 정치적인 문제에는 교사뿐만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는 배타적이지 않은 영역이다.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무상급식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붙인 시민투

표로 판가름 났다.

5. 교육공공성과 학교공공성

[발표문1]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서는 교육의 내용과 방식, 나아가 총체적 교육 체제와 그 가치를 사회 전반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 ... 중략 ... “체제 전환의 새로운 교육운동을 지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지향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앞으로 어떤 교육을 구상하고 이행하려 하는지를 제시하고, 우리가 왜, 어떻게 함께 싸워야 하는지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교육공공성’에 더해 또 다른 운동 영역으로서 ‘학교공공성’을 주창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위 발표문처럼 ‘교육공공성’은 현존 체제의 통념을 이미 재생산하는 범위 안에서만 논의되고 있다. 즉 어떤 교육, 그 교육의 내용과 방식, 즉 또 다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만 다루는 논쟁의 장으로 운동을 수렴시킨다. 실례로 ‘교육공공성’을 주장하는 교사조차 교수학습의 기능으로써만 학교를 바라보고 있으며, 교육복지(돌봄, 방과후학교 등)를 학교가 아닌 지자체나 민간의 역할로 밀어내려고 한다. 또한 우리 사회 교육 논쟁의 강한 관성을 보건데, 지금까지와 같이 평가가 뒤따르는 공부가 아닌 완전히 다른 배움으로 교육이 비약한다는 것은 지난 수십 년의 실패를 보건데 회의적이며, 지난 수십 년 못했어도 지금부터 될 수 있는 것이 역사이지만, 그 역사가 지금이라는 것도 회의적이다. 반면 ‘학교공공성’은 학교를 국가가 정한 교수학습의 기능만이 아닌 연대와 돌봄, 공적 지원, 도움과 평등, 학생의 다양한 가능성에 주목하는 공간으로 학교를 체계화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 학생의 학습만이 아니라 전인적 발달과 성장을 위한 모든 책임과 지원은 국유화되고, 개인은 자본주의가 지운 짐과 상처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나 평등한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 ‘학교공공성’의 목적이다.

6. 학교공공성의 역할과 기대효과

[발표문1] “가정에서의 불평등이 심각한데 단지 같이 학교에 다니고 같은 교육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학생들이 평등해질 수는 없다.”

학생의 불평등은 학교 밖에서부터 시작한다. 당연히 가정 환경의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학생들의 불평등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평등해질까? 이 문제는 단지 교육의 범주를 넘어서는 사회 전체 체제의 문제다. 이 문제의 해답을 교육 안에서 찾을 순 없다. 그 대신 학교는 가정환경의 불평등을 지우는 배움과 생활의 시간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사회의 교육은 가정의 불평등을 '개인적 노력'을 통해 '미래의 사적 성공'으로써 지울 것을 권한다. 반면 '오늘 여기서' 가정의 불평등을 지우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이 교육복지이며 학교공공성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이든 교육복지든 무엇으로서도 존재 자체가 평등해질 순 없지만 '학교 공공성'은 평등해지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고, 그로써 평등을 관념적 가치가 아니라 학교생활에서 체감하는 실제적 가치로 만드는 방향성이다.

7. 학교 밖 사회도 변화시키는 꿈

[발표문1] "학교가 운동과 연대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이 없다고 배제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학교에서부터 함께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과 운동-정치의 가능성을 여는 것이다."

교육복지와 학교공공성은 공동체와 연대의 거점이 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자 함이며, 학교로부터 그리고 공동체성을 체감한 우리 학생들로부터 파편화된 학교 밖 사회를 향해 진보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운동이다.

참고: 「교육복지 선언」

학교 공공성 강화의 핵심은 교육복지다

변화한 시대는 학교 공공성 강화를 요구한다. 공공 교육기관으로서 학교는 교육과정 학습에서 더 나아가 그 기능을 교육복지로 확장해야 한다. 학교는 수준 높은 학습체계(국가교육과정)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교육복지를 통해 신체와 마음의 돌봄, 사회적 관계의 성장, 소외와 방치로부터의 보호, 학교생활의 다양성과 경험의 확장, 안전 등 학생의 삶 전반을 보살피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것이 교육복지다.

교육복지 확대는 시대적 요구다

교육복지 확대는 가족구조의 변화와 한계에 따른 필수 과제다. 우리 사회는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족 등이 증가하는 뚜렷한 변화를 겪고 있다. 게다가 고용불안과 저임금

*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공무직본부가 교육운동을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작성한 <교육복지 +플러스학교> 중 '교육복지 선언'을 첨부함.

노동시장의 확대에 따른 소득감소로 여성은 물론 모든 가족 구성원의 경제활동 부담이 과중됐다. 이에 따라 교육복지 안전망 요구는 더욱 높다. 또한 사회양극화로 가정의 교육환경 격차가 벌어짐에 따라, 교육격차 해소는 물론 아동·청소년이 겪는 사회적 상처와 소외를 예방하고 치유해야 할 국가적 책임이 크다.

가족부담의 사회화가 절실하다

국가가 금전적 소액 지원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교육복지 기능을 다시 가족 단위나 시장에 맡긴다면 양극화 불평등 확산을 반복하는 한계에 갇히고, 성별 분업에 따라 여성의 부담에 다시 의존하는 성별 불평등도 초래한다. 또한 신자유주의 경쟁체제 아래 장시간노동에 내몰린 가족은 돌봄과 가정교육 등 전통적 기능의 붕괴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복지를 통한 가족부담의 사회화는 모든 시민의 매우 절실한 과제다.

교육복지는 공동체의 과제다

아동·청소년 양육을 개인이나 가족, 시장에만 맡긴다면 출생률 저하를 반전시킬 수 없다. 이는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위기다. 따라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복지 강화는 사회 구성원 전체를 위한 국가의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이때 교육복지 국가책임의 핵심은 결국 시장에 의존하게 되는 보육수당과 같은 금전적 보조에 머물지 않고, 학교와 지자체 등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제도화·체계화 된 교육복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학교는 지역공동체의 거점이다

사회 양극화와 개인의 소외 등 공동체의 붕괴는 아이들에게 더욱 깊은 사회적 상처를 남긴다. 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국가는 각종 복지지원과 시스템을 통해 지역사회의 공공성을 구현하는 한편, 아이들의 일상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교를 통한 공동체 지원의 체감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은 학교에서 처음으로 시민공동체를 배운다. 따라서 교육복지 확장을 통해 학교가 지역사회 공동체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학교는 각자도생 무한경쟁 자본주의의 상처를 치유하는 기초 생활단위가 될 수 있다.

학교는 사회복지의 거점이다

학교는 공교육을 위한 시간과 공간일 뿐만 아니라,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의 복지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회적 제도와 연결되고, 교육복지 지원을 담당함으로써, 그 자체로 사회복지의 중심축 중 하나로 발전해야 한다. 공교육은 △지역의 공적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사회적 공익을 증진하며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지는 교육이다. 누가 학교를 조직하든, 모든 학교는 아동·청소년과 양육자들

의 인권을 증진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사회적 차별과 소외에 맞서도록 교육복지를 지원해야 한다.

교육복지의 기본방향

변화하는 시대, 이제 학교도 역할과 기능을 교육복지로 적극 확장해야 한다. 국가와 학교 모든 구성원들의 협력과 연대로 교육복지를 책임지는 학교로 키워야 한다. 교육복지로 학교를 키우면, 학교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키우고, 다시 우리 아이들은 붕괴된 공동체를 살릴 것이다. 서열경쟁 학습을 넘어 학생의 전인적 삶 전반을 지원하는 학교로 만들자. 학습 적응이 우수한 학생만이 아닌 학생 저마다의 가능성과 아픔을 포용하는 학교가 필요하다. 학교는 교육복지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삶을 배우고, 다시 가정과 지역사회에 공동체의 메시지를 전하는 진보된 장소, 사회공공성을 촉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교육복지 +플러스학교'의 꿈이다.

참고 자료

01 <교육복지 +플러스학교>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2021.12.

자본에 포획된 농업으로부터 정의로운 전환

기후/생태위기 시대,
체제전환의 전망에서 농업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영역이다.
이는 특정 산업으로서 ‘농업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거대한 ‘도시-농촌’ 관계 속에서
‘북반구-남반구’ 스케일로 작동하는 자연 착취와 수탈의 구조 문제이다.
지속불가능한 먹거리 생산은 자본에 포획된 농업,
거대산업으로서 자본주의적 농업의 결과이다.
이는 농업노동의 주체로서 농민에 대한 수탈과 사회적 배제의 결과이기도 하다.
자본에 맞선 생태적 사회로의 전환에서 농업의 전환은
체제전환운동이 반드시 발디며야 할 현장이다.



가로지르길3
문자통역 QR코드

세션 진행

사회 :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발제1. **농(農)을 중심에 둔 체제전환** - 채효정 (기후정의동맹)

발제2. **귀농청년이 본 자본에 포획된 3농(농업, 농촌, 농민)** - 연어 (항꾸네 협동조합)

토론1. 송원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토론2. 박미정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토론3. 문영규 (항꾸네 협동조합)

토론4. 김진아 (한살림연합회)

준비팀

기후정의동맹, 인권운동사랑방, 항꾸네 협동조합

'농(農)'을 중심으로 한 체제전환 운동

채효정 | 기후정의동맹
measophia@naver.com

[요약] 오늘날 농업은 자본의 지배 질서 속에서 '생명산업'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이 생명산업에 대한 독점과 통제력은 자본의 생명권력을 강화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 또한 선물거래와 농업파생상품 등 복잡한 금융공학 기술이 만들어낸 농업의 새로운 가치는 전통적인 농업 수탈 체제와는 또 다른 형태의 수탈양식을 만들어내고 있다. 생명과 금융이 얽힌 융복합 산업으로 점점 변모하고 있는 농업 체제는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격전의 장이 되었음을 말해준다. 농민 인구가 200만 명에 불과하고, 농촌 사회 구성 변동에 의해 그마저 단일한 농민 주체로 호명하기 힘들게 된 지금, 싸움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도 어렵고 중요한 물음이다. 이 글은 자본으로부터의 '농'의 탈환과 재구성이 자본주의에서 벗어나려 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임을 호소하며, 그 과정에서 체제전환운동이 맞닥뜨린 곤경의 지점을 정리하고, 기후생태위기 속에서 농업 전환을 바라보는 각 계급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특히 현재 농업 체제에서 핵심 권력인 생명-금융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체제전환운동이 맞서 싸워야 할 농업 전선, 농민 전선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체제 전환 이후의 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기후위기, 생태위기를 초래한 '제국주의적 생활양식'의 대항에 '농생태적 생활양식'을 농음으로서, 어떻게 '농' 중심의 사회를 대안적 삶의 원형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지,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1. 왜 '농(農)'인가

'농' 중심의 체제전환이란 말은 잘 와 닿지 않는 말이다. '노동 중심'은 들어봤어도 '농 중심'이란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노동자·민중'과 함께 농민은 80년대까지 사회운동 속에서 계속 변혁의 주체로 호명되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농민은 진보운동 안에서도 소수가 되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도 농학연대는 노학연대와 함께 중요한 민중연대의 한 축을 이루고 있었고, 80년대까지 소설, 영화 등 여러 문학작품과 예술작품 속에서 농민은 민중의 형상을 대표하는 존재였다. 또한 농민운동은 90년대 반세계화 반신자유주의 투쟁에서 선봉에 서있었다. 그보다 더 앞서, 동학농민혁명이 보여주듯이 봉건질서와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가장 앞장섰던 것도 농민들의 저항이었다. 90년대 우루과이 라운드 반대투쟁, 2003년 이경해 열사가 목숨으로 항거했던 WTO 반대투쟁,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까지 이어졌던 한미FTA 반대 투쟁, 박근혜 정부 퇴진 시위의 도화선이 되었던 백남기 열사의 저항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 신자유주의화의 중요 국면마다 저항의 최선두에 농민이 있었지만, 그랬던 농민들이 이제 ‘약자’, ‘피해자’로 불리며 구호와 지원의 대상이 되었고, 전체 사회 운동 안에서도 주변화 되었다. 90년대 이후부터 환경운동의 태동과 발전 속에서 농업 문제는 주로 먹거리와 관련하여 ‘농업-먹거리’ 문제로 의제화 되었지만, 생협 운동, 친환경 급식, 도시텃밭, 직거래 운동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농촌보다는 도시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신토불이’나 ‘지산지소’ 같은 용어들이 수입농산물 개방 반대 운동에서 대중적 공감대를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애항심과 민족주의적 감정에 호소하면서 반자본, 반체제 성격의 농민운동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신토불이’는 유행가 가사로 남거나, ‘로컬 푸드’같은 매끈한 말로 대체되었다. 땅 살리기 농살리기 운동도 유기농, 친환경, 원산지 표기 등 여러 식품인증제의 형태로 제도화되면서 시장주의적인 ‘농업-먹거리’ 체제 내로 포섭되었다. 글로벌 식품공급사슬이 완전히 자리 잡은 오늘날, 신토불이 같은 말은 불가능한 소리나 미신처럼 여겨진다. 기후생태위기 속에서 식량위기와 농업의 중요성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으나 ‘농업 사회로 가자’고 하면, 진보 좌파는 물론, 환경운동가들 사이에서도 ‘과거로 돌아가자는 말이냐’는 말이 돌아온다.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로 농민이 다시 호명되고 있지만, 그 호명은 주로 ‘피해자’로서의 농민, ‘피해지역’으로서의 농촌을 바라보는 관점 속에 머물고 있다.

최근 ‘농업, 농민, 농촌’ 문제를 공론장의 주요 의제로 끌고 온 것은 ‘기후위기’ 담론임은 분명하다. 꿀벌 집단 폐사, 사과 한계선의 북상, 아열대 작물 재배, 가뭄,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 각종 병해충과 감염병 등 기후위기를 구성하는 많은 이야기 소재들이 농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다. 농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그 성격상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기후위기가 날로 체감되고, 그것이 식량위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위기감 속에 농업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확산되고 있지만, 그 관점은 대부분 도시 소비자나 기술전문가들의 관점이고, 해결 대안 역시 여전히 기술주의적 시장주의적 해결책을 벗어나지 못하는 체제유지적 농업전환 계획이다. 미래농업, 기술농업, 정밀농업, 혁신농업 등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농업 재편 전략 속에서, 농촌과 농민은 전문가들이 미래를 보여주고, 기술을 가르치며, 혁신해야 할 대상이 된다. 그럴수록 농업은 더욱더 자본에 포획되고, 농민은 점점 더 체제에 종속된다.

북반구의 반체제 저항운동은 농촌과 분리되어, 운동 주체들은 농업에 대한 자본주의적 수탈과

착취를 이론적으로나 피상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변화와 현실은 잘 모르고, 전문가들이 하는 말에 농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반박하며 싸워나가지 못한다. ‘농촌소멸론’ 같은 새로운 축출 담론에 대해서도 여기에 제대로 반박하는 대항담론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 현재 체제전환 운동의 현실이다. 도시와 농촌이 소비지와 생산지로 분리 단절 되면서, ‘시골’이라는 낭만적 관점에서 바라보던 농촌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면 새로운 노동착취의 지대로 등장하고, 농촌 사회 양극화 및 주민 구성 변화와 함께 도시민의 고정관념 속에 자리 잡은 농민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할 때면, ‘농민=가난한 민중’이란 표상에 혼란이 생기기도 한다. 시대가 변화하고, 자본주의 체제와 축적 양식에도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노동체제 변동과 함께 농업체제도 변동이 있었을 것임에도, 농업체제의 착취를 떠올릴 때는 ‘저렴한 노동, 저렴한 임금’을 떠올리는 ‘저렴한 식량’이라는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도식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지난 30년간 농촌 사회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온, ‘신자유주의적 농업 수탈 체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분리되어 있다. 도시생활자라 해도 80년대까지만 해도 부모 세대를 통해 농촌과 연결된 끈이 있었지만, 지난 한 세대를 거치면서 그런 연결고리도 다 끊어져 도-농간 감각적 분리가 심화되었고,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만 살아온 사람들에게 급격한 변화 속의 농촌은 외국보다 더 낯설고 상상하기 힘든 것이 되어버렸다.

‘농업’이 아니라 ‘농’이란 말을 굳이 쓰는 이유는 이리하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농사’란 말은 낯설고 ‘농업’이란 말이 더 친숙하다. 농업은 국민경제에 속하지만 농사는 농민에게만 속한 일 같다. ‘농업’이란 산업분류 체계에 따른 명칭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A 농업, 임업 및 어업’으로 분류된 산업 종류에 속한다. 표준산업분류체계는 기업의 경제활동 유형에 따라 분류한 것인데, 농업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정보통신업 등과 함께 나란히 산업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 이러한 분류는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의 상(像)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이는 농업과 다른 산업 사이에 놓여있는 근본적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농업에서 ‘농’의 생태적 문화적 정치적 의미는 점차 희미해졌으며, ‘생산성, 효율성, 유용성, 합리성, 소득, 이익’ 등 경제·경영의 용어들이 농업 분야 전반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추석이 되면 농촌에는 ‘농업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현수막이 내걸린다. 산업화 시대에 농사가 농업으로 재정의 되었다면, 신자유주의 시대에 농업은 ‘농업경영’이 되었고, 농가는 ‘농가경영체’가 되었으며, 농민은 ‘농업경영인(기업인)’이 되었다. 이제는 농업에서 아예 ‘농(農)’자도 떼고, ‘생명산업’으로 재규정되고 있다. ‘농학’은 ‘생명과학’으로 흡수되었다.* ‘생명산업’이란 용어는 농

* 농학과 생명과학은 완전히 다른 학문 분야다.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의 학부/학과는 바이오산업공학부, 생물자원과학부, 원예·농업자원경제학부, 환경융합학부, 지역건설공학과, 스마트팜농산업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학제 개편은 농촌, 농민, 농업이 분리되고 농업이 기술, 공학, 경제학에 의해 재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 공학, 경제학은 오늘날 지배적 기후 담론과 환경학을 구성하는 주요 뼈대이기도 하다.

업이 식품과 제조업의 원료조달 산업에서 생명기술 산업의 하위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오늘날 농촌은 '수탈탐식가'인 금융자본이 꿀꺽 집어삼키려는 새로운 기술-금융 수탈지로 재구획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 변동 속에서 농업 체제 변동과 농업을 재구성하는 자본주의적 기획은 농촌의 공간성과 시간성에 치명적인 변형을 가하며, 농업을 반생명적, 반생태적 산업으로 만들고, 농업경영인으로 호명되는 농민에게 기업가-투자자적 주체성을 요구하고 체화시킨다. 지금 정부의 농업정책은 이와 같은 자본의 기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뒷받침하는 정책이며, '농업선진화'나 '기술농업', '미래농업', '농정혁신' 등의 이름으로,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체계적인 말살정책을 펼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농촌은 오랜 시간에 걸쳐 느린 폭력의 형태로 이루어져 온 거대한 생태학살의 현장이며, 다시 '농'을 불러내는 것은 그 생태학살에 맞서 싸울 주체와 장소, 철학과 방법을 찾고 만들어가기 위함이다.

2. 운동이 마주한 곤경의 지점들

(1) 농촌 사회 주민 구성과 농민의 계급성 변화

자본주의 체제가 한 단계씩 나아갈 때마다 체제 재편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 농민의 해체와 재구성이다. 노동 체제 재편을 위해 노동자의 해체와 재편이 필수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농업 공동체를 파괴하여 공동체적 생산 양식을 사라지게 하고, 협동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농촌을 개별 농가들 간 소득경쟁의 시장으로 몰아넣고, 서로의 일손을 보태고 나누는 문화를 파괴하고 그 자리를 이주노동자로 매웠다. 이는 농촌 사회 계급 분화와 양극화를 초래했고, 빈농 소농은 물론 중간 규모의 농가도 생계 영위가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가 점점 해체되어가는 과정처럼 농촌에서는 전업 농민이 점점 사라져갔다. 농업으로 생계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중소농가에서는 투잡, 쓰리잡이 일상화되고 있다. '반농반X'는 자발적인 선택이기도 하지만 강제된 선택이기도 하다. 대부분 일자리는 저임금, 불안정, 임시고용직들이다.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고 비정규직 불안정 일자리로 대체되어간 과정과 흡사하다.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농촌 주민은 대부분 농민이 아니라 안정적인 소득을 가진 공무원, 은행원 등 관리 계급이거나 토지나 건물을 가진 자산소득층이다. 농촌에 돌아와 자리를 잡는 귀촌 청년들은 대부분 가족 배경이 중농이상의 토지 소유자나 자산 소유자로 부모의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귀촌 주민과 원주민과의 갈등도 잠재된 불안이다. 가난한 촌락 사이에 들어선 부유한 전원주택 단지는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바라보는 느낌이다. 대농과 소농 사이에 벌어지는 간극은 식민지에서 농촌 상층 계급이 식민 지배와 자본주의 농업 체제를 적극 받아들이면서 중간지주층이

되어갔던 모습과 흡사해 보인다. 내부의 계급분화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선 ‘농민’이 여전히 단일집단으로 표상된다. 하지만 지역 토호와 대농 등 농촌 사회의 지배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거버넌스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전체 농민의 대변자가 되고, 농민들에겐 정부의 대변자가 되어 정부 정책을 적극 수용하고 추진하는데 앞장선다. 농촌과 농민 전체가 정치적으로 대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도 특히 소농과 빈농의 목소리는 농촌 안에서도 대변되지 못한다.

중간층 농민들이라고 사정이 나은 것은 아니다. 농민을 계약 파트너, 동업자, 하청업체 사장님으로 부르면서, 사실상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고용관계임에도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근로계약이 아닌 대표 대 대표 간의 하청계약, 발주계약의 형태로, 농민을 ‘임금 없는 노동자’로 만들어 기업의 비용을 개개 농가에 전가함으로써 이윤을 수탈하는 방식은 플랫폼 자본주의가 노동자들을 임노동 체제 바깥으로 외부화시키는 것과 흡사하다. 일용직, 비정규직, 불안정, ‘불법화된’ 농업 노동자들과 은행 부채와 기업 계약에 종속되어 농사의 자율성을 완전히 상실한 하청 영농업자가 함께 ‘불안정 농민’군을 형성하며 농노와 지주, 소농과 대농, 가족농과 기업농 같은 구분을 가로지르며 나타나고 있다. 농촌의 공간성도 변화하고 있다. 오늘날 농촌은 전원일기의 농촌이 아니다. 버스터미널에 내리면 제일 먼저 롯데리아와 도미노피자, CU와 GS25를 만날 것이다. 도량물 흐르는 논두렁 따라 걷는 길은 사라진 지 오래, 자동차 없이는 이동하기 힘든 마을과 마을 사이에, 시멘트 공장, 물류창고, 식품가공공장, 사료 공장, 비료 야적장, 건축폐기물, 물류창고, 농공단지과 폐업한 가게들이 수시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농민 인구 절대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농촌 안에서도 농지가 줄고 농민이 점점 줄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이제는 정말 농민이 잘 보이지 않는다. 첫째는 농촌인구가 절대적으로 소수가 되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고령화 때문이며, 셋째는 소농과 빈농이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더 중요하게는 그 과정과 함께, 농촌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어 과거와 다른 성격으로 농촌 사회 내부의 계급 변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농민운동의 침체도 수반된다. 87년 민주화 이후 분출했던 많은 진보운동들이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쇠퇴되었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쇠퇴한 운동 중 하나가 농민운동이다. 30년 전 4-50대 농민들이 지금 7-80대가 되었다. 이들이 사라지면 마지막 농부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런 때를 대비해 스마트 팜, 팩토리 팜을 하라는 것이 지금 농촌소멸 대책이다. 소멸 지역 좌초 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고 여기고, 주민들의 삶을 위해 필수적인 공공 인프라를 철수시켜 소멸을 부추키는 것이 현재의 농정이다. 사회운동 역시 이런 소멸론에 적극 반격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쓸쓸한 모습’으로 무력하게 바라본다. 또 이들이 사라지면 농민운동의 대도 끊기지 않겠느냐고 한다. 지금 농촌의 운동은 도시의 운동을 따라가며 모방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농민운동이 가능하겠는가라는 물음이, 운동 안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농민운동을 기준으로 하여 보면서 새롭게 출현하는 운동을 놓치고 있는

지도 모른다.

(2) '도시대 농촌'의 대립구도

농촌 사회의 계급적 양극화에 따라 현실에서 마주하는 '농촌(귀촌) 주민'의 모습—어떻게 보면 도시 프롤레타리아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은 혼동을 불러일으킨다. 종종 도시의 활동가들은 농촌을 내부 식민지로 부르고, 도시 대 농촌을 제국 수도와 식민지의 관계로, 북반구 대 남반구의 관계로 설정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부유한 농민은 도시의 빈민보다 처지가 낫지 않은가.') 반면 농촌 주민들은 그런 말을 반박하며 부유한 흑인도 가난한 백인에게 차별을 받듯이, 도시와 농촌 사이에는 그와 유사한 인종주의적 차별의 선이 분명 존재한다고 말한다. 도시와 농촌 간의 괴리감과 적대감을 만들어내는 이런 분리의 선들은 완전히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대로 그어진 전선도 아니다. 문제는 이런 적대적 감정과 분리 의식, 차별 의식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고, 그것을 제대로 직면하고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농촌의 가뭄이 극심하고 강바닥마저 말라갈 때, '흙뻘쇼'라는 이름의 콘서트가 열린 적이 있다. 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300톤의 물은 해갈에 도움이 안된다, 비용을 내고 쓰는데 용처를 제재할 수 없다, 문화에 대한 몰이해다' 등의 반대 비난이 쏟아졌고, '수돗물 대신 빗물을 사용하자, 콘서트를 도시가 아니라 농촌에서 열자' 등의 중재안(?)도 제기되었다. 이 사건은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지나갔지만 도시와 농촌의 정서적 이질감과 감각 분절이 어느 정도 심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주로 환경주의적 관점에서 평가되었고, 식민주의 문제는 섬세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에너지를 둘러싼 도-농 갈등 양상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댐), 핵 발전소, 송전탑과,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에너지까지 모두 농어촌에 있다. 기후정의운동은 이런 불평등을 드러내고 부정의함을 고발했지만, 이 시설들을 어떻게 정의롭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했다. 그 외중에 들려오는 '핵발전소를 도시에 지어라'는 외침은—심정으로는 이해하지만—매우 우려스러운 적대의 전선을 만들어낸다. 당장 '우리가 낸 세금이다, 농촌으로 가는 재정지원 삭감하라'는 혐오 스피치가 돌아온다. 팬데믹 당시 부자들은 한적한 시골로 피신했다. 반면 가난한 노동자들과 도시 빈민은 일터와 주거지에서 집단 감염에 고스란히 노출됐다. 2차 대전 말기 일본에서는 전쟁으로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던 도시민들이 포탄을 피하고 먹을 것을 구해 농촌으로의 피난 행렬이 이어졌다. 농민들은 도시민을 수탈자로 보았고, 도시피난민들은 농민을—부자들은 먹고 있는데도—먹을 것을 나눠주지 않는 악마로 보았다. 불평등이 만들어내는 양극의 이주 경로와 그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을 우리는 앞으로의 재난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마주하게 될지 모른다.

이미 오랜 '이촌향도'가 세대를 거듭하여 진행됨에 따라 이제 도시생활자라 해도 과거 부모 세대를 통해 농촌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었던 고리도 끊어진 지 오래고,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농민운동의 쇠락으로 인해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이 약화된 것도 사회 공론장에서—뿐만 아니라 진보운동 안에서—농촌의 실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농민의 목소리가 주변화 되게 만든 원인이다. ‘도-농 갈등’으로 외화되고 있는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는 ‘중심부와 주변부’, ‘수도와 지방’의 문제이며,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식민주의 전선이 국가 단위에서 어떻게 재현되며, 어떻게 자본의 최상층부에서 최말단까지 식민지 구조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3) 기후정책에 저항하는 농민들

농민은 기후위기 당사자이면서도 기후정책에 대한 강력한 저항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태양에너지에 반대하는 농민’은 대표적인 사례다.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농민이 소외·배제되고, 난개발로 인해 농지 잠식과 훼손, 임대농-임차농 간, 주민간 갈등이 발생하고, 농촌형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자 이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던 것이지만, ‘부지 확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기업의 입장이나, ‘정책 추진’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부 입장에서, 농민들은 에너지 전환의 ‘걸림돌’같은 존재로 표상된다. 뿐만 아니라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는 농민단체 사이에서도 입장이 갈라지고 있다.

농촌 주민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직접적 피해는 물론이고, 여기에 더해 정책에 대한 농민의 저항이 마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부족이나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몰이해로 여겨지거나, 내집앞은 안 된다는 지역민 이기주의나 주민 간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으로 인식되는 데서 오는 억울함과 소외감까지 이중 삼중의 억압을 느껴야 한다. 자본과 시장 주도의 에너지 전환이 자리 잡게 되면, 농촌 주민은 재생에너지 전환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공간적 분리와 기업과 시장 수요 중심의 재생에너지 개발은 도시와 농촌, 자본과 농촌 간의 식민지적 종속 관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농민 간의 양극화와 농촌 사회 내부 불평등을 심화한다. 이런 과정은 가장 큰 피해자들인 가난한 농민들이 기후운동 전체에 대한 반감을 갖게 만들 수 있으며, 기후운동을 농촌 농민의 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도시-중산층-엘리트-환경주의자’ 운동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온실가스과 원인 물질인 ‘탄소’에 집중되면서, 논은 메탄가스 배출원이 되고 농업은 온실가스 배출산업으로 지목되었다. 함께 책임을 져주어야 할 문제는 모른 척하다가, ‘탄소 배출’에 대한 책임을 지울 때는 전문가들이 총동원 되어 책임의 양을 계산하고 의무를 부과한다. 기후 단체와 연구소,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메탄협약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가입을 종용하면서 농민의 의견은 묻지도 않았고,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과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 조치를 담고 있는 CPTPP에 대해서도, 저지 투쟁이 아니라 ‘안타까움을 표하며’ 피해보상 이야기부터 먼저 꺼냈다. 메가톤급 FTA라 불렸음에도 CPTPP 반대 투쟁은 과거 FTA 반대 투쟁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축소되었고, 반대 논리도 ‘농업-먹거리 안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

으며,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전민중적 투쟁으로 조직되지 못하였다. ‘WTO, FTA, CPTTP’ 같은 국제 협약들이야말로 기후위기의 주범이고 농촌말살의 주범이다. 이에 맞서 싸우는 농민투쟁에는 결합하지 않고, 이런 협약을 추진하는 정부를 지지하고 협력하며 농민에게 메탄 배출 책임을 묻는 환경주의자들에게서 농민은 등을 돌리게 된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한 농민의 저항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인도와 중국에서는 화석연료 에너지의 대안으로 대대적으로 수력발전소 건설이 시작되면서 농민들이 메가 댐 건설을 막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가고 있다. 친환경 전기 생산을 위한 메가 댐은 농민의 삶의 기반과 생계 수단을 모두 빼앗고, 삶터에서 추방하며 강제 이주를 강요한다. 아미타브 고시는 난민의 국가 간 이동만이 아니라 국가 내부의 강제 이주와 내부 난민화의 양상도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말한다. 국제사회에서 난민 문제는 주로 국외 탈출 난민, 특히 유럽과 미국 국경에 인접한 난민 문제에 주목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아프리카의 내부 난민과 동남아시아에서 내부 추방과 내부 이주 양상은 국제 이주 이상으로—국제법상 난민 인정도 받을 수 없는 이주/난민—심각한 상황이다. 그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고향을 떠나 도시로 갔다가 살 길이 없어 폐허가 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지만 결국 고향에서도 살지 못해 다시 떠나고, 다시 돌아오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 한국도 농촌 지역에선 이와 내부 난민화 양상을 점점 가까이 목격할 수 있다. 산업화 시기에는 농촌에서 축출된 농민이 도시에서 자리를 잡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농민은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기후위기도 농민을 위협하지만,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자본의 대응은 그에 앞서 농민을 죽이는 판국이다. ‘지구가 없으면 일자리도 없다’는 구호에 대항하며 노동자들이 ‘노동자가 없으면 지구도 없다’고 맞섰던 것처럼, 오늘날 농민도 ‘농민이 없으면 지구도 없다’를 외쳐야 할 판이다. 2023년 12월 독일 농민들은 자동차 보조금 삭감 정책에 강력히 항의하며 독일 전역에서 베를린으로 집결하여 트랙터로 도로를 점거하는 대규모 농민시위를 벌였다. 부자들의 세금이 삭감해주면서 농민에게 기후위기 책임을 묻는 농민시위 양상은 유류세 인상을 계기로 시작되어 신자유주의 정부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확산된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와 겹친다. 하지만 단결한 농민의 목소리는 이상한 방향으로 터져 나오기도 한다. 2023년 3월 네덜란드 지방선거에서 제1당으로 부상한 네덜란드의 ‘농민당’은 농업보조금 삭감과 축산업 축소에 항의하며 EU의 기후환경정책에 반기를 든다. 뿐만 아니라 축산업 반대와 채식주의를 내건 ‘동물당’과 정면 충돌하고, ‘우리나라 농민부터 보호하라’며 노골적인 인종차별과 배외주의를 선동하기도 한다. 체제전환운동이 농을 중심에 두지 않고, 농민이 겪고 있는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운동과 연결하지 못할 때, 농민을 피해자로 바라볼 뿐 해방의 주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농촌 농민 운동의 재구성과 조직화에 함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때, ‘농민당’이 극우정당으로 정치세력화 하는 모습은, 어디서든 어떤 모습으로든 나타

날 수 있다.

(4) 화석 자원에 포획된 석유 농업

체제전환운동이 마주하는 또 다른 곤경의 지점이 있다. 현 단계에서 농업이 '석유'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의 문제다. 석유는 전후 자본의 농업수탈 체제에서 핵심적 수단이었다. 그것을 우리는 농업 근대화, 기술화, 생산력 증대 등으로 불러왔지만, 합리성과 효율성, 생산성, 시장성이 농정의 주방향으로 도입되고 그에 따라 농업은 석유 산업으로 전환되었다. 석유는 농민이 자연과 맺는 관계를 변화시키고 농촌의 공간성과 시간성을 변형시킨 핵심 물질이자 자본이 농업을 예측시킬 수 있게 만든 권력의 원천이다. 기후정의운동과 농민운동은 농촌을 에너지 생산지대로 재구획하고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또다시 농민을 희생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해왔지만, 농촌에서 석유의 그림자를 어떻게 걷어낼 것인지, 그리고 다른 국가의 농촌과 농민을 죽이는 화석연료에 어떻게 맞서고 연대하며 싸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하지 않았다. 석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재 한국 농업의 현실에서, 이 문제는 사실상 기피되어온 주제인지도 모른다. 기후정의운동에서 농촌의 에너지에 대해 접근할 때는 에너지 기본권의 관점에서 주로 주거 및 난방용 에너지 문제로 접근해왔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농촌 주택 개량이나, 난방용 에너지 대안이 논의의 주제였지 '석유 없는 농업'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착수해본 적도 없다.

'탈석탄'이란 말은 있는데, 왜 '탈석유'란 말은 없을까. 왜 기후운동 안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와 싸우는 것만큼 석유 기업과의 싸움은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탄소중립과 탈석탄 시나리오는 짜면서 왜 유정 폐쇄 시나리오는 짜지 않는 것일까? 왜 생산에 대해선 건드리지 않고 소비와 수요조절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일까? '탈석탄'에 비해 '탈석유'가 들리지 않는 이유는 단위물질 당 석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석유보다 더 많기 때문만은 아니다. '정치적 힘'으로서의 석유 권력이 석탄 권력보다 더 힘이 세기 때문이다. 석유 자본이 석탄 자본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7개 석유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국제석유자본은 석유의 탐사, 시추, 회수, 파이프라인이나 탱크를 통한 수송, 정제, 판매, 석유화학, 선물거래 형태로 금융화된 석유파생상품까지 장악한 막대한 힘을 가진 세력이다. 20세기는 석탄 문명이 아니라 석유 문명이었다. 오늘날 석유는 생활의 모든 곳에 안 쓰이는 곳이 없으며, 석탄보다 훨씬 더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물질이다. 자동차, 항공과 운항에서 석유는 대체불가능하다. 석탄이 산업혁명기의 자본주의 연료였다면, 석유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시대의 자본주의 연료다. 또한 석유는 1980년대까지의 농업과 1990년대 이후의

* 메이저 석유 기업을 말해보라면 BP, 로얄더치셸, 엑손, 모빌, 텍사코, 등등 줄줄 말할 수 있지만 -그리고 이 기업들이 100년 넘게 석유 문명을 지배하고 있지만 - '석탄 기업'을 말해보라면 잘 떠오르지 않는다. 한전? 포스코? 석탄을 '사용'하는 것과 석유를 '생산'하는 것에는 분명 차이가 있음에도, 생산하는 기업은 놔두고 사용하는 기업, 투자하는 기업을 먼저 통제하는 것은 이상한 전도다.

농업을 가르는 기준이기도 하다.

북반구 산업국가들이 70년대부터 탈석탄을—환경적 이유만이 아니라 산업구조조정과 노조분쇄 등 정치경제적 이유에서—시작했고, 글로벌 분업 체계에서 탈석탄이 북반구에 유리하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다. 반면 석유는 남반구의 고통과 비극의 원천이지만, 북반구의 메이저 석유기업과 정부는 이 원천을 제거할 생각이 없다. 뿐만 아니라 석유는 산업의 에너지이기도 하지만 전쟁의 에너지이기도 하다. 핵발전을 EU그린텍소노미에 포함시키는 것과 기후 거버넌스에서 석유기업에 대한 규제가 번번히 기각되는 것도 동일한 정치적 이유가 작동한다. 북반구에서 탈석탄을 중심의제로 내세우는 것과 대조적으로 남반구의 기후정의는 주로 석유를 둘러싼 투쟁으로 전개된다. 석유 생산과 운반 과정에서 일어나는 생태파괴와 그로 인한 피해와 고통이 대부분 남반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후정의운동에서 농업 분야 화석연료에 대한 대응 방식은 ‘항공여행, 자동차 등에 쓰이는 에너지와 식량 생산을 위한 필수에너지는 구분해야 한다’ 정도의 논리에 입각해 있었다. 부유층의 낭비적 전기 사용과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과 존엄한 삶을 위한 필수적 전기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논리였다. 그런데 농업 생산 속에서 사용되는 석유화학물질은 농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농업의 생태적 기반을 파괴하는 것이기도 하다. 산업화된 농업은 트랙터, 경운기, 예초기 뿐만 아니라 비료, 농약, 멀칭용 비닐, 포트 같은 플라스틱 농자재, 값싼 중국산 일회용 도구들까지, 그야말로 석유화학물질의 거대한 범벅이다. 하지만 ‘플라스틱 제로’를 농촌에 쉽게 요구하기는 힘들다. 그 기계와 원료들이 모두 노동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형 재생에너지’ 전환만이 아니라 석유화학물질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계획과 전망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농민의 결의와 실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를 체제전환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농민 개개인의 실천으로 촉구할 때는 대의가 착취의 새로운 도구가 된다. 유기농업이 가혹한 노동시간과 노동 강도를 강제하고 농민의 몸을 망가뜨리면서 가능한 것이라면, 그것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공장에서 노동착취로 생산된 제품에 녹색인증을 붙이고 그것을 선별하여 구입하는 것을 녹색소비자라고 부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비닐하우스에서 전기화된 스마트 팜으로의 전환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연료만 바꾸는 것과 똑같다. 공장의 에너지 전환이 탄소만 벗은 착취의 에너지가 아니도록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촌의 에너지 전환도 연료만 바꾼 것이 아니라 농을 둘러싼 관계를 바꿀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찾아내야 한다.

이런 곤경의 지점들은 왜 우리가 ‘체제전환’ 속에서만 농업의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찾을 수 있는지 보여준다.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는 한, 모순을 다른 곳으로 전가하거나, 불평등을 더 심화하거나, 이해관계의 대립 구도 속에서 피억압자들이 서로 적대하며 싸우게 될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는 각각의 현안에 매몰되어 문제를 바라보는 좁은 시야를 벗어나 우리가 풀어

야 할 문제를 전체적이고 역사적으로 바라보도록 사유와 실천의 시공간을 반강제적(?)으로 엄청난 스케일로 확장시켰다. '자본주의 바깥도 없고 이후도 없다'며 30년간 신자유주의가 봉쇄했던 정치적 상상력이 모처럼 해방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실제로 수많은 사회운동에서 그동안 봉인되었던 불가능한 대안들이 가능한 대안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그러나 체제전환운동에서도 농에 대한 상상력은 여전히 부족하며, '가능할까'라는 회의와 패배적 정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사이, 가장 과감하고 급진적으로 전개되는, 그러나 그 어느때보다 반생태적 반민중적인 자본의 상상력과 정교한 생태학살의 기획 앞에 농촌과 농민은 이전보다 더 위험한 방식으로 포획될 위기에 처해 있다.

3. 자본주의 체제 변동에 따른 농업 체제 변화

산업자본주의에서 농업의 위치는 산업에 필요한 싼값의 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근대 자본주의 생산 체제에서 '식량 생산' 산업으로서의 농업은 '저렴한 노동력(임금)'을 떠받치는 '저렴한 식품' 조달에 그 일차적 이유가 있었다. 농촌공동체를 파괴하고, 농촌주민을 도시로 내몰아 저렴한 잉여 노동력을 만들어내고, 도시 노동자들에게 저렴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농촌 농민을 착취 수탈하는 방식이 자본이 농업을 포획하는 첫 번째 단계의 방식이었다. '저렴한 농산물 가격'과 농민의 노동에 대한 '무가치화'는 자본주의적 농업체제의 핵심 수단이다.

1945년 이후 선진국 농업은 '기계, 기술, 단작, 대규모'의 방향으로 이행한다. 이와 같은 '농업 선진화'의 핵심 목표는 노동 투입을 줄이고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저렴한 석유'가 농업의 에너지로 자리 잡고 농약과 화학비료가 대량 투입되기 시작했다. 이는 땅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농촌의 경관, 문화, 시공간성, 관계성에 근본적 변형을 가했다. 그리고 이 방식이 '발전', '근대화', '선진화'란 이름으로, 개도국의 농업 발전 모델로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이식된다.

1990년대 이후 농촌에는 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는 특히 주변부 농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마이클 우즈는 새로운 농업체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① 국제무역의 자유화와 글로벌 시장의 증진, ② 상품이 한 나라에서 생산되어 두 번째 나라에서 거래되고 세 번째 나라에서 가공되어 네 번째 나라에서 판매되는, 글로벌한 상품사슬/가치사슬의 발전, ③ 초국적 기업과 연합체들의 기업 집중 및 통합, ④ 외국인 직접투자 및 그 결과로 농촌 지역에 있는 공장의 분점들이 먼 곳에 있는 대기업의 의사결정에 취약해지는 것, ⑤ 글로벌 재산권체제의 출현" 등.⁰¹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④,⑤는 특히 2007-8년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자본의 공격적인 토지 약탈과 농촌 포획의 특징이다.

이 과정은 정치적으로도 농민의 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1995년 WTO체제가 수립되고, 농산물 시장이 개방된 이후, 국내 식량 가격을 수입 농산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자 정부 정책에서 국내 농업과 농민의 중요성이 격하되었다. 부족한 생산은 수입 농산물로, 부족한 일손은 외국인 노동자로 조달할 수 있게 되면서 농민운동의 정치적 협상력도 약화되었다. 신자유주의 농업 정책이 가져온 이와 같은 정치적 결과는 노동시장 개방이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힘을 약화시킨 과정과 동일하게 전개됐다. 1980년대까지 정권은 농촌을 지지 기반으로 포섭해야 했고, 노동자들에게 대해서도 ‘산업역군’이나 ‘수출역군’으로 추켜세우며 농촌으로부터의 식량과 노동력 동원 체제를 유지해야 했다. 45년 이후 국민국가 체제 하에서 주권국가의 영토적 한계는 자본과 권력에게 ‘억압의 한계’를 설정했지만, ‘세계화’는 자본-권력이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만들었다. 농민운동은 폭력적으로 분쇄되었고, 급격히 쇠락해갔다.

이후 신자유주의적 농업 체제 재편 과정에서, 농업은 1차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었고 이러한 맥락에서 ‘6차 산업’으로서의 농업 개념이 등장했다. 1차적인 식량수급과 2차적인 제조업의 원료조달 산업으로 인식되던 농업은 ‘창조경제’로 빨려 들어간다. 창조경제는 농민들에게 환금성 높은 작물로의 전환을 유도했고, 작물 생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파생상품을 창조하도록 요구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 생산 농가는, 수확량 증대나 품질 향상이 아니라 블루베리 가공과 유통, 판매를 통해 시장경쟁력을 높일 것을 요구 받고, 나아가 블루베리 체험, 오락, 관광, 축제 등 농촌 문화 콘텐츠 생산자가 될 것까지 요구받는다. 블루베리 식초나 와인, 비누, 사탕, 기념품, 농촌문화체험, 경관 개발, 여가 상품, 패키지와 브랜드, 스토리 개발은 창조경제가 끝없이 요구하는 ‘농업 파생상품’의 사례이다. 이 과정은 농촌의 자급기반을 파괴하였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도 파괴했다. 농사가 아니라 농사가 돈이 되게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해졌고, 농민이 아니라 농촌을 ‘디자인’하고, ‘메이킹’하고, ‘컨설팅’하고,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드는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 농촌 주민 구성에서 발언권 및 대표성에 영향을 미쳤다. 농촌지원사업의 많은 예산이 브랜드 개발이나 경관 리모델링에 들어갔다.

농업 부문에서 일어났던 이와 같은 변화는 자본의 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나타났던 신자유주의 기획 및 그 과정에서의 노동체제 변동 및 통치 양식 변화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하지만 새로운 자본주의의 출구였던 신자유주의체제와 그 기반이 되었던 금융자본주의는 2007-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헤게모니를 상실한다. 90년대 신자유주의가 도래하며 부르짖었던 시장의 능력과 조절역량을 이제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 사이 농촌의 상황도 점점 악화되었다. 인구위기와 농촌소멸론이 대두되었고, 팬데믹을 겪으면서 돌봄 위기와 먹거리 위기가 동시에 드러났다. 기후위기와 에너지위기, 전쟁위기, 식량위기가 맞물리고 있으며, ‘6차 산업’으로 억지로 만들어냈던 농업 부문 시장 팽창도 모순과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자본이 성장의 출구를 다시 찾아내야 하는 상황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 및 대응의 필요성이

‘녹색자본주의’를 다시 부활시켰다. 자본의 새로운 농업 전략은 ‘녹색자본주의’안에 재배치되고 있다. 오늘날 녹색자본주의가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두었던 녹색혁명이나 90년대 환경운동의 영향 속에서 생태적 현대화론을 기반으로 나타났던 2000년대 초반의 녹색성장론과 구별되는 지점이 있다. 하나는 그 사이 놀랍게 발전한 인공지능 기술과 디지털 기술이 농업 부분에 도입되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을 금융의 회로 안에 집어넣으면서 생명-금융 혼성체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자연의 상품화’를 넘어서 ‘자연의 자본화’는 농업 체제 전환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이다. 자연의 상품화와 자본화는 쉽게 구분하기 어렵지만 물을 생수로 상품화하는 것과 수자원을 증권화해서 금융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방식의 가치 추출이다.*

농업이 금융투자의 회로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금융자본주의에서는 농산물 선물 시장의 곡물-사실은 곡물이 아닌 양도계약서 - 가격이 비싸질수록 (농민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환호성을 지른다는 뜻이다.

4. 기후생태위기 속에서 농업 전환을 바라보는 관점

(1) 자본의 관점 : 생명-금융 자본주의의 새로운 기회

자본이 농업을 포획하는 방식에서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대표적 수단으로 ① 수직통합, ② 부채종속, ③ 금융화를 꼽을 수 있다. 종자부터 비료, 약제, 설비, 가공, 유통까지 식품대자본이 계열사로 장악하고 매 단계마다 계약 농가에 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수직계열화를 통한 종속’과 시설농업, 기술농업으로의 전환, 규모의 경제를 강제하여 ‘대출을 통해 부채에 종속’시키는 방식은 오늘날 자본이 농업을 포획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대규모 시설농업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것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수직통합화의 위계 속에 끌어들이고, 시설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을 빚지게 하기 위해서다. 전자에서는 자기 노동에 대한 자기 착취자가 되게 만드는 생명자본주의적 수탈이, 후자에서는 채무자로 만들어 부채를 통해 이자를 추출하는 금융자본주의적 수탈

* 리카르도 페트렐라 이탈리아의 금융 전문지에 실린 물 광고에 대해 폭로한 적이 있다. ‘일 솔레 24 오레 (Il sole 24 ore)’라는 이름의 잡지에 실린 네덜란드 국제 은행 에이비엔 암로ABN-AMRO의 광고는 물을 주식 인증서로 전환한 ‘청색 인증서 Blue Certification’를 제시하면서 예금주들에게 물에 대한 투자용이성을 설명했다. “2007년 3월에 잡지 한 면에 실린 이 광고에는 ‘나는 점점 더 갈증을 느낀다’라는 문구가 있었다. 이 문구에 전 세계에 우물이 없어 식수를 조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0억 6천만 명에 달한다는 설명이 덧붙었다. 그리고 다른 쪽에 물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문구가 이어졌다. 광고는 물에 대한 투자는 석유나 기계 산업에 대한 투자보다 26%나 더 높다는 점도 명시했다.” 여기서 물은 ‘상품화’를 넘어서 ‘증권화(금융상품화)’된다. 생수 사업나 수도 민영화는 수자원을 사유화하고 개발해서 물을 상품화 하는 방식이지만 증권화는 수자원 자체를 수익을 창출할 투자자산으로 전환시킨다. -리카르도 페트렐라, 세르주 라투슈, 엔리케 두셀, 안성현 옮김, 『탈성장』, 대장간, 2021. 32면 참고.

이 나타난다. 농업에서 수직계열화와 부채종속은 이 두 가지 권력—생명권력과 금융권력—이 어떻게 동시에 작동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생명-금융 융복합 산업인 농업은 자본의 마르지 않는 화수분으로 인식된다. 빌 게이츠 같은 금융자본가가 ‘생명에 투자하라’고 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든 인간이 인간을, 모든 생명이 생명을 낳는 한 노동으로부터만이 아니라 삶 자체로부터 계속해서 이윤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난도 자본의 관점에서선 좋은 돈벌이 기회다. 유럽에서 전후 경제 호황기를 만든 중요한 원인은 2차세계 대전으로 인한 파괴였다. 금융위기도 자본과 자본의 관계에서 한계 기업과 부실 금융을 정리하고 독점화하는 기회가 된다. 오늘날 기후위기는 생명-금융 자본주의와 재난 자본주의의 기회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1) 신세계 그룹은 2021년 ‘씨앗부터 식탁까지’ 책임지는 스마트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내세웠다. 스마트 팜이란 딸기 하우스의 컨테이너 판으로 수직형 컨테이너에서 환경을 통제하며 채소를 양액 재배하는 기술이다. 컨테이너는 하우스와 달리 이동과 적재-수직화-가 가능하다. 이런 스마트팜을 ‘가뭄에도, 홍수에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가뭄과 홍수 등 이상 기후에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선전한다. 신세계 푸드 스마트팜은 엔씽이라는 벤처 스타트업과 협업으로 (신세계 투자 + 엔씽 기술개발) 구축한 것으로, 물류 센터 옆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물류이동비용을 줄였다. 일반 농민에겐 너무 큰 자본금이 필요하다. 2023년 신세계푸드는 한 농업법인에 설비비를 선지원하고 5년간 토마토를 전량 납품 받는 직거래 계약을 맺었다. 계약재배 방식에서 흔히 사용되는 설비비 지원은 공짜가 아니라 ‘당겨쓴 돈’으로 계약기간 동안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 전환될 뿐이다. 스마트팜에 진출하고 있는 식품대기업들은 이런 문제를 지적하며 농민들을 위해 정부 지원금과 은행 대출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형태가 일반화되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컨테이너 토마토의 시장 판매 수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투자 뉴스가 기업의 주가에 반영되고,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기업의 금융자산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물론 이런 과정을 통해 소규모 토마토 농장은 차례로 망하게 될 것이고, 유통망을 장악한 대기업 물류 시스템 속에서 신선 채소 대부분은 기업이 통제하게 될 것이다.

사례2) 북미 최대 축산기업인 타이슨푸드는 네덜란드 곤충단백질 생산기업 프로틱스에 투자하여 기술합작으로 미국 최대 곤충사육시설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프로틱스의 혁신기술이란 식품 부산물(‘음식쓰레기’)을 곤충에게 먹이고, 곤충에게서 단백질을 얻는 방식으로 식품 생산과 폐기의 ‘완벽한 순환경제’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 곤충단백질을 가축사료로 대체 시 탄소배출량과 물 소비량을 크게 감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녹색기술로 분류된다. 타이슨푸드는 가축에게 곤충 사료를 먹이고, 곤충에게 축산 과정에서 나오는 가축 부산물을 먹이는 방식으로 발표했다. 이 계획의 실행이 바람직한지, 과연 실행될 수 있을지는 차치하고, 타이슨푸드는 프로틱스의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축산업 분야 탄소배출 감축 계획을 제출할 수 있었고, ‘ESG’ 평가를 비롯해서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환경 지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최근 농-테크 기업들은 그린 택소노

미(Green Taxonomy)나 홀론 아이큐(Holon IQ) 같은 녹색 산업 분류체계에 포함되어, 기후약당 기업은 그런 녹색산업에 분류된 스타트업을 지분 소유하여 그린 워싱하는데 활용하기도 한다. 빌게이츠가 2015년 설립한 기후대응 전문 투자펀드인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벤처스(BEV)는 총 23억 달러(2023.10.30.기준), 한화로 3조 1200억원 규모의 기후투자펀드 3개를 운영하는데, 투자 받은 회사들 중에는 소에서 나오는 메탄 감축을 위한 해조류 사료를 개발하는 회사도 있다. 녹색분류체계는 기본적으로 은행이나 평가사, 자산운용회사와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것이다. 포스코가 ESG 우수 평가 기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기본적으로 ESG나 RE100같은 인증제도가 지표화에 의한 평가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행점검관리 시스템이 추가된다 해도 그 역시 지표에 의해 검증된다. 탄소중립 목표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 인증, 이행의 절차 속에서 관리되는 '목표 관리주의적' 행정이다. 해썬, 친환경, 저탄소, 유기농 인증제도 마찬가지다. 취지와 목표보다 인증 결과를 위해 행위가 배치되도록 만든 관리 절차로 흡수된 대표적인 사례다,

사례3) 빌 게이츠는 농업부문 최대 투자자이자 금융자본의 농업 투자를 선도하는 대표적 인물이다. 빌 게이츠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농지를 소유한 개인으로, 미국 농지 1%를 소유한 땅부자이며, UN산하 전문연구기구인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에 2억달러를 기부하여 GMO, 생명과학기술 등 '차세대 기술' 지원에 투자하도록 하였으며, 게이츠 재단 산하 조직인 아프리카녹색혁명동맹(AGRA)를 통해 종자기업과 농화학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 각국 정부에 압력을 넣고 정책에 개입하고 있다. 국제농업연구자문그룹과 게이츠 재단 제휴기관인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국제종자은행은 전 세계에서 재배되는 다양한 작물의 종자를 스피츠베르크 섬의 암반 지하에 보관한다. 스발바르 종자은행은 파국적 상황에서 종자가 사라지지 않게끔 안전하게 보관하는 생태적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지만, 철저한 보안 하에 농민은 접근도 할 수 없도록 철저히 통제되는 공간에서, 단단한 플라스틱 상자 안에 갇혀있는 씨앗은 그 자체로 자연의 법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가 악화되고 식량위기로 인해 정말로 파국적인 국면이 도래할 때 '평화의 씨앗'은 언제든지 '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사스키아 사센은 빌 게이츠가 하고 있는 전방위적 토지 매입이 2000년대 중반부터 전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과, 이 과정에서 남반구의 숲과 경작지가 모기지론 서브프라임과 같은 방식으로 금융 도구가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사센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1년 사이에만 2억 헥타르 이상의 토지가 외국 정부 및 기업의 손에 넘어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중 대부분이 아프리카 땅이고, 남미에서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유럽과 아시아 일부 지이다. 이와 같은 토지 취득의 첫 번째 원인은 환금성이 높은 특용작물 수요로, 팜나무가 대표적인 작물이다.** 두 번째 원인은 2000년대 들어 식품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토지가 투기에 유용한 투자 대상이 된 것이다. 특히 “2007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토지는 물적 자원으로서의 물론, 원자재(식량, 특용작물, 희토류, 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수단으로서 자본의 투자대상으로 부상”했다. 그리고 나서는 토지 자체가 ‘땅’이라고 불리는 원자재로 재창조되고 토지의 금융화로 이어진다.⁰² 국내에선 팜농장 대신 인삼밭이 토지 가격과 농지 임대료를 높이는 원인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직접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지 않더라도 자산운용사들이 여러 가지 파생상품을 섞어 만든 펀드를 통해, 어떤 경우에는 녹색펀드라는 이름으로, 이와 같은 자본의 토지 약탈에 공모하게 될 수도 있다.

사례4) 식량과 토지가 금융회로 속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가장 치명적인 것은 2008년과 2011년의 식량위기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루퍼트 러셀은 『빈곤의 가격』에서 금융위기와 식량위기의 얽힘이 우연이 아니며, 실제로 원자재 선물 시장의 가격 변동이 어떤 파급적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보여준다. 2011년 ‘유럽 난민위기’라 불린 사태를 초래한 아프리카와 중

*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는 주택거래를 금융화하는 과정에서 만든 금융파생상품이 문제였다. 이 방식은 주택을 ‘계약(모기지)’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계약서가 입증하는 담보 가치를 증권 형태로 전환한다. 2000년대 미국에서 개발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모기지 계약을 “조각조각 분해해 각각의 요소를 고등급 부채와 섞은 다음,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발행해 이를 금융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새로운 금융 기술이었다. 이 금융상품의 매매를 위해 “필요한 것은 자산(주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은행과 주택구매자 사이의 계약서뿐”이었다. 주택담보대출은 작은 구성요소로 분해되어 다른 부채와 섞인 뒤 고도의 금융회로를 통해 매매되었다. 실제로 존재하는 주택과 주택담보대출 위에, 그 대출계약을 가지고 만들어낸 또 다른 금융파생상품이 자산담보부증권이었고, 금융시장에 더 많은 ABS금융상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대량의 주택매매계약서다. 은행의 주택대출상품이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해서가 아니라 금융회로 내에서 필요한 도구, 자산담보증권을 구축하는데 이용되었다. 즉 주택 수요가 금융 수요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금융 수요가 주택 수요(매매계약)를 창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채는 금융상품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투기 자본에는 속도와 물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시장의 요구는 주택 건설과 매매가 빠른 속도와 엄청난 물량으로 이루어졌다. ‘빛내서 집 사라’던 시대의 배경이다. 농산물의 금융화도 주택담보계약으로부터 파생된 금융상품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주택을 할부 대출로 구매하는 대출 거래가 있고, 그와 별도로 대출 계약으로 만드는 금융상품이 있듯이 농산물을 직접 거래하는 농산물 시장이 있고, 선물 계약 형태로 만들어 그 계약을 증권화해서 사고 파는 금융상품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다.

** 대우는 마다가스카르에서 농지의 절반을 99년간 무상임대하는 계약을 추진하다 발각되었는데, 이는 마다가스카르에서 반정부 혁명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남반구의 가난한 나라를 대상으로 초국적 기업이 벌이는 이런 유형의 식민주의적 토지약탈에 대해서는, 스테파노 리베르티, 유강은 옮김, 『땅뺏기』, 레디앙, 2014. 참고.

동 지역으로부터 대규모 난민 탈출은 그 기원에 농산물 선물 시장의 가격 폭등이 자리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과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던 투기 자본은 보다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아 '식량'과 '원자재' 시장으로 몰렸다. 곡물을 직접 매입한 것이 아니라 선물거래시장에서 농산물 파생상품을 구매한 것이다. 곡물 선물거래로 돈이 몰리자 금융공학 프로그램에 따라 빅데이터에 기반한 추세 투자가 이어졌고 선물시장에서 밀 가격이 폭등했으며, 이는 다시 실제 밀 가격을 상승시켰다. 2010년 아프리카의 자스민 혁명과 아랍의 봄으로 불린 대규모 반정부 시위는 빵값 폭등이 시작이었고, '빵과 자유'가 혁명의 구호였다. 반정부 시위는 정권교체나 혁명을 통해 순조롭게 체제전환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내전과 학살로 점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난민이 발생했고, 빵과 물과 안전을 찾아 지중해를 건너 유럽 국가들의 문을 두드렸다. 선물 거래는 농산물 금융화의 대표적 수단이다.

(2) 자유주의적 관점 : 계급타협을 통한 체제관리와 체제유지

빌 게이츠를 위시한 녹색 자본주의 전도사들이 생명과 금융의 복합 산업으로 만들고자 하는 지배계급의 의지와 관점을 노골적으로 보여준다면, 기후위기와 식량위기를 다루는 자유주의 답론은 이런 구조적 문제들을 회피하며,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 연결되어 나타나는 문제로 포착하지 않고, 개별 사안에 대해 개별적 대안/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을 취한다. 구조와 역사를 외면하면서 '원 프로블럼, 원 솔루션', '문제가 있는 곳에 해결(기술)이 있다'고 말하는 '솔루션 자본주의'는 사회 문제를 기업이나 기술전문가가 내놓는 해결책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신자유주의 문법이다. 여러 연구소와 싱크탱크, 스타트업을 동원하여 해결책을 만들어내지만, 그 해결책이 하나를 해결하는 대신 또다른 문제를 야기하면, 그 문제에 대한 또다른 해결책을 발명한다. 축산업 메탄 배출을 줄이기 위해 소에게 해조류를 먹이거나 입에 가스 흡수 마스크를 씌우는 방안을 내놓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빌게이츠 재단은 해조류 사료 개발회사에도 투자, 이 회사도 그린텍소노미에 친환경 기업으로 분류되어 인증)

농업 문제도 마찬가지다. 농업 혁신과 농촌 개발, 농민에 대한 지원을 따로따로 생각한다. 재생 에너지를 둘러싼 주민 저항을 '입지 갈등'으로 바라보고 '보상 체계'를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정부 지원금을 주고 시설비, 운영비 등을 보조 하면서 기피 시설을 유치하도록 하는 것이나 (인제에는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시설 -음식폐기물과 축분 처리장이 들어옴) 에너지 산업 사유화 방식은 은폐하고, 대규모 태양광 발전 민간 에너지 기업을 유치 하고, 지자체가 지분을 투자하여 향후 투자배당금을 주민에게 배당하는 방식을 '원원', '주민상생' 등으로 포장하는 사례도 빈번하다.(신안군 민자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지자체 투자 주민 배당 사례) 농민을 보상과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토지약탈과 생태학살을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 조정과 중재의 문제로 치환한다. CPTPP와 메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농민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논물

빼기 등 해결 방안을 농민에게 가르치는 방식으로 대응했던 것도 그런 사례다. 오염에 대해 보상으로 상쇄하는 방법은 배출을 흡수로 상쇄하는 ‘탄소중립’ 계산법에서 최고에 달한다.

자유주의적 관점은 기본적으로 자본의 관점, 체제전환이 아닌 체제유지 관점에서 서있지만 따로 분류한 것은 지구와 사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사익만을 추구하며 재난도 기회라고 생각하는 자본의 관점과 달리 중간층 관리계급은 어느 정도 체제관리적 입장에서 ‘관리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촌에 대한 시혜적 관점에서 접근, 조정과 중재의 과정을 만들어 그 안에서 자기 권력을 만들고(중재권력, 거버넌스 권력), 당장의 대안이나 정책을 제시하며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해결을 영구적으로 지연시키고, 그 과정에서 지배체제를 약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농업을 생태적, 공공적, 민주적 전환에 더 해로운 요소로 작용한다.

(3) 기후정의, 체제전환운동은 농에 대한 어떤 전환의 상을 가지고 있는가

운동이 마주한 곤경들은 운동 속에서는 실천적 해답을 찾아나갈 수밖에 없다. 기후정의운동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와 탈석탄 활동가가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함께 기후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장을 만들었고,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고 배제되는 농민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함께 싸우며 ‘생태 파괴, 농지 약탈, 공동체 파괴’의 원인이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 사유화’에 있으며 근본적인 문제가 자본주의 체제에 있음을 알리며 함께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가 될 수 있었다. 네덜란드 농민당은 동물당과 적대적 관계가 되었지만 노랑진 수산시장에서 샤프터와 일터를 빼앗긴 시장 상인들과 연대하는 활동가들 중에는 비건 동물권 활동가들도 많다. 기후정의동맹에도 동물권을 대변하는 활동가와 축산 농가를 대표하는 농민이 함께 참여하고, 축산농가와 경종농가, 관행농과 생태농이 함께 있다. 외형상 대립하고 갈등하는 관계로 보이는 주체와 운동들이 함께 마주하고, 교차하며, 서로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적에 함께 맞서는 연대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후정의운동의 중요한 과제이자 조금씩 축적되고 있는 경험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정의, 체제전환 운동 안에서 ‘농’ 중심의 관점과 대안은 여전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농촌은 기후불평등의 대표적 사례로 늘 언급되지만 불평등의 구체적 실태는 제대로 폭로하지 못하고, 주로 농촌이 실상을 알리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무엇보다 농민을 저항의 주체, 변혁의 주체로서 인식하지 못한다. ‘농업, 농민, 농촌’ 문제는 한편으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없는 문제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잘 몰라도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되어버렸다.

반자본주의 농민운동, 국제 소농운동, 토종씨앗을 지키는 지역공동체 및 여성 농민 운동, 농촌의 노동자와 도시의 농민이 연결될 수 있는 실천의 지점들을 만들고 이 운동들과 더 강력하게 결합하는 기후정의운동을 펼쳐나가야 하고, 기후정의운동과 체제전환운동 속에서 농촌 농민 운동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지금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기존 체제로부터의 전환은 전 계급적 과제가 되고 있다. 지배계급 내부에서도 체제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이때의 체제전환은 체제전환운동에서 말하는 자본주의 철폐와 대안 체제로의 전환이 아닌 대안 자본주의적 전환을 뜻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각 계급의 체제 전환 속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위치다. 현재 현 상황을 탈피하려는 각 계급의 전망 속에서 농업 전환을 가장 비중 있게 두고 있는 것이 자본의 관점이고, 생명자본주의와 금융자본주의의 교차 영역에, 생명-금융자본주의의 하위 체제로 농업이 재편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농업 체제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를 둘러싼 투쟁은 체제전환운동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5. 왜 체제전환운동에서 ‘농’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농업 체제의 변동은 -노동체제 변동과 달리- 체제전환운동 내에서도 정확히 인식 공유되고 있지 못하다.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농업의 역사적 시간은 흔재되어 있고, 농촌은 문화적 정치적 공간으로 표상되지 못한다. 미디어가 만들어 낸 양극의 이미지—벤처 타는 청년 농부, 허리가 흰 할머니—는 농촌 대상화의 전형이다. 이런 이미지들이 강화될수록 농촌은 문화적으로 획일화되고, 그 안에서 작동하는 계급변동과 내부정치, 다양한 역동성과 가능성은 제대로 포착되지 못한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농업은 일차적으로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이자, 각 산업 부문의 원재료를 생산하는 산업이다. 목화 농장은 의류 산업의 원자재를 생산하며, 팜 나무 농장은 식품, 의료, 미용, 거의 모든 산업에 들어가는 기초 원료인 팜유를 추출하고, 거위 농장은 구스 다운을 위한 재료를, 돼지 농장은 스패의 원료를, 생산한다. 물론 자본주의 체제에서 농업은 다양한 산업 생산 체계의 하위에 위치한다. 현대 단계에서 농업은 공업과 제조업을 떠받치는 부수적 산업을 넘어서 생명-금융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포스트 신자유주의 핵심 산업이 되고 있다. 한편에서 농업은 자본주의 초기와 같은 플랜테이션 노예 농업으로 돌아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 금융, 인공지능 분야의 최첨단 기술이 결합된 융복합 산업으로 나아가고 있다. 여전히 전자는 남반구에 위치하고 후자는 북반구의 농식품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둘은 상호 연결되어 있고, 한국의 농업에는 두 개의 그림자가 모두 드리워져 있다. 농촌은 반자본주의 투쟁의 숨은 최전선이다.

오늘날 금융자본은 자연의 생명활동을 자산화 수단으로 재발견하고 재가치화 하려고 노력한다. ‘생태계 서비스’ 계산이나 강이나 산림에 대한 가치 평가는, 자연의 활동을 무상으로 전유했던 것을 반성하고 가치를 부여하며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 노동력에 대한 가치 평가처럼, 모든 생명들의 공동의 활동을 각각의 가치로 분리해서 화폐 가치를 매기고, 계산 가능한 것으로 만들

어 지표화 하는 이유에는 기후·환경 리스크에 대응하는 보험업계와 법률적으로 보상/배상의 기준 및 재산권 체제를 재수립하기 위한 법·제도적 대응이 작동하고 있다. 오염을 권리로 전환하는 계산 법(코스의 정리)이나 나무의 호흡을 탄소크레딧(탄소배출권)으로 금융화하는 기술, 탄소배출을 흡수와 교환하는 기만적인 탄소중립 셈법도 자연의 자산화, 자본화 사례다. 금융기술 자본의 전략은 자연의 무상화, 무가치화에서 자연의 자본화, 재가치화로 변모하였다. 자본화된 자연은 금융시장으로 투입되는 새로운 ‘판돈’이 된다. 이는 농촌을 생명산업의 채굴장으로 만들 것이다. 자본에게 ‘유정과 탄광’에 대한 장악이 ‘죽은 에너지(화석 에너지)’에서 이윤을 뽑아내고 자본주의 체제의 지배 유지에 필수적인 것이라면, ‘농’에 대한 장악은 ‘산 에너지(식량)’를 통제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체제전환 운동은 새로운 농업의 사유화 방식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농을 중심에 놓자는 것은 자본의 수탈체제에 저항하고 농을 탈환하는 의미이자 동시에, 다음 사회의 전망 속에서도 농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를 그려보자는 의미다. 낸시프레이저는 『식인자본주의』에서 생산과 재생산, 착취와 수탈, 사회와 자연 등 분리될 수 없는 것을 분리시켜 놓고 전자가 돌보고 책임져야 할 부분을 모두 후자로 전가시켜놓고 비가시화 한 것이 지금의 위기를 초래하였다고 설명한다. 나아가 이 분리와 전가가 만들어놓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컨대 생산과 재생산을 분리를 넘어 통합적 관점에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재생산을 중심으로 생산을 배치해야 한다고 말한다. 생산을 위해 재생산을 지속가능하게, 노동을 위해 돌봄이 노동을 떠받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해야 한다. 즉,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생산을 배치하고, 돌봄이 가능하도록 노동체제, 교육체제를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차원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 또한 북반구가 아니라 남반구부터 시작해야 하고, 중심부 국가들이 아니라 주변부 지역의 필요를 우선하여 착수해야 한다. 위기가 먼저 도래하는 곳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해방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의 해방이 모두의 해방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의 전환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을 체제전환운동의 중심에 놓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사회를 상상할 때,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생태적 대안사회의 미래의 상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생태사회’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지만 자본이 그려주는 ‘멋진 녹색 신세계’나 ‘그린 리바이어던’ 같은 모습이 아닌, 정말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하는 생활양식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 상상력의 큰 구멍에 ‘농생태적 상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연의 한계 안에서 못 생명과 공존하는 삶의 구체적 형태에 가장 가까운 것이 농촌에서, 농민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사람들이 농사를 고된 일로 상상하는 것은, 그리고 실제로 고되고 힘든 일이 되는 것은, 그 일 자체에 내재한 성격 때문이 아니라 자본주의 농업 체제 하에서의 착취와 수탈 때문이다. 자본의 포획으로부터 벗어난다면 상상 초월의 풍요롭고 평화롭고 건강한 삶의 양식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농생태적 삶의 양식을 기후위기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삶의 전환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다. 올리히 브란트와 마르쿠스 비센이 비판했던 ‘제국주의적 삶의 양식’을 넘어서고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삶의 양식으로서 ‘농생태적 삶의 양식’은 그에 맞선 대항 개념이자 대안 실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연과 분리된 인간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한 존재로서 인간답게 사는 방식에 대한 영감을 얻기 위해 ‘지구 절반 야생화 프로젝트’ 같은 여러 기획도 나오고 있지만 ‘지구 절반 재야생화’의 가장 좋은 수단은 ‘인간 거주지 절반을 농촌화’하는 것이다. 기후정의행진에서 농민복을 입고 시위에 나온 청년 농민들을 만난 적이 있다. 그들의 손에 들려 있던 ‘공사 말고 농사짓자’는 4대강 공사에 맞서 양수리 유기농지를 지키기 위한 두물머리 투쟁 당시 농민과 연대자들이 들었던 구호에서 따온 것이지만, 기후시위 현장에서 만난 저 말은 이제 어느 한 곳의 공사와 농사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의존해야 할 미래의 경제를 가리키는 방향 전환이자 세계관과 문명 전환의 좌표가 되기에 충분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가 ‘농촌’이라 부르는 지대의 또 다른 의미를 재발견하게 해주었다. 인간과 비인간 존재의 공동 구역이자 경계 지대로서의 농촌이다. 롭 윌러스는 자본주의적 영토의 팽창이 이 경계 지대를 무너뜨림으로서 예전에는 만날 일이 없었던 행위자들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고 부딪치면서 전에 없던 인수공통감염병이 계속 생겨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 결과 면역과 보호, 회복 지대로 역할 했던 농촌이 오히려 감염병의 발원지로 변모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도시로 전파된 감염병은 도시간 이동 경로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지구로 확산된다. 경제의 비중과 인구 구성을 볼 때도 과거에는 농촌 지대 안에 도시가 점으로 나타났다면, 지금의 비대해진 도시에 농촌이 점처럼 붙어있는 형태다. 지구에서 못생명과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 구조를 되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 농촌은 점점 더 커져야 하고 농민은 더 많아져야 한다. 이미 산업화 시대의 이촌향도와 다른 정반대의 이도향촌의 경로가 생겨나고 있다. 팬데믹 시기 세계 곳곳에서 나타났던 도시 탈출과 시골을 향한 행렬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이탈과 탈출의 경로가 난민화의 경로가 되지 않도록, 계획적이고, 공공적이고, 민주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농생태적 전환의 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미래로 가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을 현재의 목록에 놓을 수 있다. 그때 우리는 농촌에서 학교, 병원, 버스, 기차가 사라지면 안 되는 이유를 납득시킬 수 있다.

농촌 사회의 변동과 계급분화 속에서 저항의 주체인 농민이 해체되어가는 모습과 함께, 새로운 주체들이 등장하는 신호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부채에 종속되고 이중 삼중의 억압에 구속된 불안정한 삶의 양태는 도시 노동자와 가난한 농민의 ‘공통성’이 되고 있다. 대공장 체제가 해체되고 노동자들이 파편화되어 뿔뿔이 흩어져 사라지고 없었던 노동자들이 전통적인 조직노동의 외곽에서, 미조직 노동자들의 모습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의 노동자로서, 노동권을 요구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사례들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인구가 줄어들고 노인 세대들이 떠나고 나면 농촌과 농민은 소멸할 것처럼 말하지만 농촌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반농·반X 노동

자들이 나타나고 있고, 농민 운동 역시 전통적인 조직 운동의 틈새와 바깥에서 새로운 얼굴의 농민들과 새로운 양식의 농촌 농민 운동들이 조금씩 출현하고 있다. 중심부에서 조금만 눈을 돌려 보면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끈질긴 저항을 해왔고, 지금도 부단히 일어나고 있는 곳이 농촌이고, 농민이다. 그 속에 담긴 가능성을 작게 보지 않았으면 한다.

농촌에서 늘어나고 있는 다양한 이주민들의 존재는 운동의 교차점이 될 수 있는 존재인지도 모른다.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농업노동자, 또는 도시의 낙오자가 되어, 또는 삶의 전환을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국내 이주민들, 다양한 형태의 '반농반X' 주체들이 있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들이 만나고 모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조직화'와 '세력화'의 방법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7-80년대 노동운동이 노동자를 만나고 조직하기 위해 '노동상담소'가 필요했다면, 금융자본주의 시대의 민중운동은 '부채상담소'를 차려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농민운동도 마찬가지다. 농촌에는 임금체불상담소, 부채상담소, 차별상담소, 의료상담소, 귀농정착상담소, 삶의 기술상담소가 필요하다.

이 글의 목적은 체제전환포럼에 온 동지들에게 왜 체제전환운동에서 농 중심의 관점이 필요하고, 왜 농 중심의 체제전환운동이 되어야 하는지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었다. 여러 이유를 말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억압의 장소가 해방의 장소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갈레아노의 말을 인용하며 끝맺으려 한다.

“라틴 아메리카는 정맥주사 장치가 달린 지역이다. 대륙의 발견부터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항상 유럽 자본이나 (이후엔) 미국 자본으로 변환되어 멀리 떨어진 권력의 중심지에 축적되었다. 흙, 흙에서 나는 열매, 미네랄이 풍부한 표토층, 주민들과 노동 및 소비와 관련된 그들의 능력, 자연자원, 인간자본 등 모든 것이 그렇게 이용되었던 것이다.(그 목적은 항상 당대 외국 대도시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각 지역에는 한 가지 기능만 부여되었으며, 끝없는 의존의 사슬이 끊임없이 펼쳐졌다. 이 사슬은 고리가 두 개 이상이었다. 라틴 아메리카 내부에 존재하는 큰 이웃나라들에 의한 작은 나라들의 억압과, 각 나라 내부 도시에 존재하는 대도시와 큰 항구들에 의한 자국의 식량과 노동 관련 자원의 착취가 또 다른 고리를 형성했던 것이다.”⁰³

지금 농촌은 라틴아메리카고, 아프리카이며, 팔레스타인이다.

참고 자료

- 01 마이클 우즈, 박경철·허남혁 옮김, 『농촌 - 지리학의 눈으로 보는 농촌의 삶, 장소 그리고 지속가능성』, 따비, 2016.
- 02 사스키아 사센, 박슬라 옮김, 『축출 자본주의-복잡한 세계경제가 낳은 잔혹한 현실』, 제2장, 글항아리, 2016.
- 03 에두아르트 갈레아노, 박광순 옮김, 『수탈된 대지: 라틴아메리카 5백년사』, 범우사, 2009.

귀농 청년이 본 자본에 포획된 3농(농업, 농촌, 농민)

연어 | 향꾸네 협동조합

0011grace@naver.com

저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농민은 아닙니다. 현재 국가에서 인정하는 농업인이란 300평 이상 규모의 농사를 100일 이상 꾸준히 짓는 사람,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둘에 해당하지 않아 농부라고 말하기 어려운 감정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 마을 음악회에서 다른 지역에서 농사지으며 노래 부르는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친구는 우리 모두 조건 없이 농부가 될 수 있다는 가사가 담긴 자작곡을 불러주었습니다. 이후 저도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땅을 만지고 생명을 키우는 일이 농사라면 나도 농부이다. 마치 가사 노동이 노동으로써 공식적인 가치가 매겨지지 않음에도 삶의 근간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번 발제는 제 위치에서 바라본 3농(농업, 농촌, 농민)이 얼마나 자본에 포획되어 있는지를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청년창업농과 스마트팜과 같은 기술 대응형 접근은 진정 농업 혁신인가

최근에 본 영상에서 스마트팜으로 딸기를 재배하는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직접 농사를 짓지만, 손을 그을릴 일도, 손에 흙을 문힐 일도 없습니다.” “농업은 창업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에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가만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청창농’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제 주변에는 청창농 지원을 받는 친구가 몇 있는데요. ‘청창농’은 청년창업농의 줄임말로,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입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 구조를 개

선하는 것이 사업 목적입니다. 창업의 뜻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이나 법인회사를 새로 만드는 일' 또는 '사업 아이디어와 자원을 결합하여 사업 활동을 시작하는 일'입니다. 즉, 단순히 농사짓는 것만으로는 돈을 벌기 어려우니 다양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올려 농사로 '사업'을 하라고 청년들에게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업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도 어떻게 이윤을 창출해낼지 써야 합니다. 자연에 해를 덜 끼치는 방식으로 자급하는 소농이 되고자 하는 저나 제 친구들은 정체를 감추고 소설을 써내야만 심사에 통과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농업 혁신으로 창업농과 함께 언급되는 것이 바로 스마트팜, AI농업과 같은 기술대응형 접근입니다. 어려운 일을 하는 농민이 아니라 스마트팜을 경영하는 경영자의 이미지를 내세워 청년들을 유입하려는 것입니다. 기술은 언제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스마트팜은 초반에 거액의 자본이 필요하며 일반인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적 환경을 통제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게다가 제조, 가공, 유통, 판매를 결합함으로 대규모 자본의 투자처가 됩니다. 결국, 더욱 자본에 예속되는 것입니다.

농사는 어느 새부터가 '돈 안 되고 고단한 일'이 되었습니다. 농업의 이 불안정한 토대는 농업을 혁신시켜야 한다는 명분이 되었습니다. 이 '혁신'이라는 단어는 자본가와 기득권 세력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혁신이란 말은 낡은 것을 허물며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진보적 의미를 내포한 것 같은 이 단어는 언제나 파괴를 기반으로 하기에 절대 선일 수 없으며, 계속해서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나가도록 경쟁을 부추깁니다.

이로 인해 파괴되는 것은 땅과 노동을 기반으로 한 농사, 농민의 삶, 그리고 먹거리의 공공성 아닐까요? 혁신이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언급되는 청년창업농과 스마트팜 첨단농업은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와 불안정한 구조는 보지 못하게 하고 개인에게 성공과 실패의 몫을 짊어지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점점 심화되는 농촌의 개별화/파편화

반다나 시바가 <이 세계의 식탁은 누가 차리는가?>에서 말하듯이 전 세계 식량의 약 70%는 소농이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산물 시장 개방 이후 동아시아적 소농 구조로는 농업에 미래가 없다며 대농 및 기업농 육성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농촌 내 양극화는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청년창업농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같은 사업은 농촌사회를 경쟁 공간으로 만들어 농민 간 갈등을 부추깁니다.

흔히 농촌을 생각하면 논, 밭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 농지 중 상당수는 부재지주의 땅입니다. 부재지주란, 이익이 나는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지주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부재지주는 현재 농지의 약 50% 정도 되며, 고령 농민이 사망할 경우 외지에 사는 자식이 토지를 상속받는 현실을 볼 때 15년 안에 부재지주가 전체 농지의 84%를 소유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들이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이유는 직불금 때문입니다. 직불금은 '농사를 짓는 농민'이 소득보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인데, 부재지주들은 가끔 와서 기계로 몇 번 땅을 갈거나, 과수 묘목을 심어두는 요령을 쓰거나 농사짓기 희망하는 이에게 농지를 빌려주고 임대차서류를 써주지 않는 편법으로 직불금을 탑니다. 결국,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은 땅을 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임대차서류 없는 농지에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흑여 운이 좋아 농지를 임대하더라도 재계약을 할 수 있을지 노심초사하며 지내게 됩니다.

농촌에는 농지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화 이후 농촌 곳곳에는 지역균형발전의 명분으로 농공단지, 공장, 관광시설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읍면 소재지는 아파트와 각종 프랜차이즈가 들어서며 도시적인 생활양식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의 물결을 농촌도 피해갈 수 없었으며 농촌 사회는 이전의 체계와는 다른 형태로 재편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농촌 사회는 점점 동질성을 잃어가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별화/파편화는 심화됩니다.

농과 식의 분절, 이는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가?

자본주의는 여러 요소를 분절시킴으로써 이득을 취합니다. 먹거리가 저렴해야 임금노동자들은 자신이 노동한 것보다 적은 임금을 받더라도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농과 식의 관계가 분리되어야만 합니다. 자본은 이 분절로 인해 만들어진 틈을 자신들의 이윤을 얻기 위한 사업 영역으로 확대해 나갔습니다.

농과 식의 분리는 농업과 먹거리와 관련한 중요한 권력을 기존에 농업의 주체였던 농민이나 먹거리 소비의 주체인 소비자에게 한 줌의 권력도 주지 않으면서, 농업/식량 관련 기업에 몰아주는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제 먹거리가 생산되고, 유통되고, 판매되는 방식은 모두 기업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농식품의 이러한 기업 집중화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이후 가속화되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부채를 감면하기 위해 수입 및 외국인 투자를 허용해나갔습니다. 그로 인해 장벽이 낮아지고 1994년의 농업협정으로 WTO회원국들의 관세가 낮아짐에 따라 전세계 농식품 무역의 절대적인 가치와 규모는 꾸준히 성장했고, 세계 식품 기업들은 규모와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농·식품 판매는 이제 대부분 슈퍼마켓이나 마트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곳에 경제적 집중이 이루어지면서 식품 소매기업들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마트와 슈퍼마켓의 거대한 규모는 이윤 증대를 위해 상품의 대량 구매를 추구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형화된 공급자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대량 구매 관행을 통해 단위 가격을 낮출 수 있으며, 이는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매출액 증대로 이어집니다. 거대 마트 같은 경우에는 도매 부분과 거래하는 것을 완전히 기피하고 가공 기업과 직접 거래하는데, 이때 자신의 막강한 힘을 이용해 최저가격을 확보합니다. 그러면 가공 기업은 다시 농민을 쥐어짜거나 해외로부터 더 값싼 상품을 수입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소수의 구매자와 다수의 판매자의 불균등한 힘의 위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규모 생산성과 값싼 가격에 대한 요구는 농민들에게 농약, 화학비료를 쓰도록 하며 기계화와 규모화를 촉진시킵니다. 이로 인해 영세농이나 영세공급자는 주변화되거나 퇴출되고 농촌의 지역 공동체가 약화됩니다. 요즘에는 마트나 슈퍼마켓이 환경적 도전에 반응해 비건, 유기농, 무농약, 친환경, 탄소중립, 무항생제로 브랜딩 된 제품들을 내세우지만 이는 또 다른 기업의 홍보마케팅으로 역할할 뿐입니다. 이에 대항하여 나타난 생협 운동은 대안적인 소비자 운동을 만들어내며 유기농업 확산에 큰 영향을 끼치긴 했으나, 대중적이기보다는 ‘틈새’시장으로 여겨지며, 생산자-소비자의 분절된 구조를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앞서 말한 관행 농업의 보급은 전통적 농업과 달리 품종개량, 화학비료, 농약 같은 과학기술을 농업에 적극 적용함으로써 식량 생산량의 획기적 증가를 일으킨 ‘녹색혁명’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생산량이 너무 늘어나 전 세계 농민들은 울상을 지었다면 높아진 식량 생산량과 재고량을 통해 곡물 기업들의 거래 규모는 몇 배에서 몇 십 배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토착 곡물 회사를 인수합병하고, 화학비료와 농약을 생산하는 화학 회사, 종자 회사까지 자신의 영역을 확장시켜나갔습니다. 농민들은 점점 투입재 기업에 의존하는 농사를 지을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녹색혁명’을 통해 생산량은 늘었지만 여전히 굶주리는 사람들의 비율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즉 이 생산량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분배된 것이 아니라 이윤을 위한 도구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7~2008년 식량 위기가 생기면서 “제 2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 증산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정부는 기업친화정책을 펼쳤습니다. 초국적 대기업이 직접 해외식량기지를 개발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로 2008년 대우로지스틱스 자회사는 마다가스카르 전체 경작지의 절반인 130만ha를 99년간 무상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해 논란이 됐었습니다. 만성적 영양실조가 2명 중 1명꼴인 나라에서 농지를 점유한 것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녹색혁명일까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먹거리가 편리하게 공급되는 구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트에 항상 넘쳐나는 식량을 보며 우리는 식량 위기를 체감하지 못합니다. 농과 식의 분절은 그 식량 너머에 농민, 농촌, 자연과 못 생명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배를 불리는 농 기업, 농업 투입재 산업, 식품 소매 기업, 유통기업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분절은 어떻게 타 존재를 타자화는가 1: 이주노동자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행되면서 한국은 농업에서 공업 중심 사회로 바뀌어왔습니다. 이 변화를 위해서는 저임금, 저가 농산물 가격정책, 농축산물 수입 등의 정책이 전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삶은 궁핍해졌고, 부채는 누적되었습니다. 그 결과 농촌에서 도시로의 대량 이주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후 농산물이 대거 수입

될 수 있는 문이 열리며 심화되었습니다.

농촌에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없습니다.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60%가 넘었던 농민 비율이 이제는 4%를 웃돕니다. 그중에서도 65세 이상이 절반입니다. 아무도 오고 싶어 하지 않는 농촌에서 이제 부족한 인력을 이주노동자로 채웁니다. 우리의 풍요로운 식탁을 책임지기 위해 착취당하는 농민 밑에 또다시 착취당하는 이주노동자가 있는 것입니다.

농업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에 이주노동자의 근로환경은 특히나 열악합니다. 그들은 휴게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며, 일한 만큼의 임금도 받지 못합니다. 임금체불신고액만 1억원이 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뿐 아니라 농촌은 편의 시설이나 생활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에 농업 분야의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고립되어 살아갑니다. 2020년 12월 20일에 돌아가신 이주노동자의 죽음으로 그들의 열악한 거주환경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여러 개선 조치가 있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거주 비용, 거주 시설로 비닐하우스 안 컨테이너는 금지하나 비닐하우스 밖 컨테이너는 허용하는 등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을 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계의 말단에서 자신의 권한을 주장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직접 사업주의 위반 사항을 입증해야 되며, 사업주가 무단이탈로 신고할 경우 체류 허가가 취소되어 추방당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즉 사실상 사업장 변경의 권한은 노동자가 아닌 고용주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낳은 불균등한 발전으로 국가를 넘어서 오는 이주 노동자들이 대거 생겨났고, 이로 인해 산업국들은 더욱 더 자신의 부를 팽창시킬 수 있었습니다. 반면, 더 가난한 나라는 자신의 노동력이 더 부유한 나라로 유출되면서 경제적·사회적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예컨대 몰도바의 경우 인구의 26퍼센트가 외국에서 고용돼 있습니다. 한 때 서독과 일본 등 여러 나라들로 이주 노동을 하러 갔던 우리나라는 이제는 이주노동자들을 유입하는 상황입니다.

이주노동자는 농촌에서의 농민들과 함께 농업의 착취당하는 구조를 같이 경험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농민이면서 프롤레타리아로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농업의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은 해결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 이주노동자는 이런 당부를 하였습니다. “사장님들은 돈만 생각해요. 한국사회는 돈만 우선시합니다. 옆에 있는 이주노동자가 사람이라는 것을 까먹나봐요. ... 우리가 인간으로서 평등하다는 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 한국 사람이 일하기 싫어하는 곳에 미등록 노동자들이 가서 일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불법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주노동자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들의 권리를 되찾게 하는 것이 농업의 해방과 맞닿아 있을 것입니다.

분절은 어떻게 타 존재를 타자화하는가 2 : 농촌의 식민지화

타자화는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 그리고 그 공간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도 타자화됩니다. 예전 세대는 농촌과 관계성이 조금이라도 있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도시에서 태어나고 한평생 도시에 살다 보니, 농촌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대다수의 사람은 알기 힘듭니다. 농촌은 도시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966m 거리에는 폐기물 처리 공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도시의 페비닐, 페타이어, 폐플라스틱 등을 고품질 폐기물 연료로 가공하고 악취가 극심한 하수 슬러지 오니 건조 사업을 주민 동의 없이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주민의 삶과 환경을 파괴하는 폐기물 처리장이나 토석 채취장 같은 경우에는 마을 주민이 함께 힘을 모아 반대하지만, 요즘 자본이 농촌을 잠식하는 방법이 교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바로 녹색 전환과 재생에너지의 탈을 쓴 것입니다. 녹색으로 포장된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 '보조금 지원', '관광 사업 개발' 등 사탕 발린 말로 농촌 사회를 분열시킵니다.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생산하려면 막대한 규모의 토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산업적, 기술적 재생에너지 인프라 건설에는 자연 훼손이 불가피하며, 이때 활용되는 에너지는 대부분 재생에너지가 아닙니다.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생산하겠다고 막대한 양의 숲을 파괴하고 그 숲에 깃들여 사는 모든 생명을 학살한다면 우리 삶의 터전은 안전할까요?

제가 사는 곡성에도 양수 발전과 풍력 발전이 들어서려 합니다. 폐기물 처리장이나 토석 채취장과는 다르게 이러한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은 반대하는 목소리를 조직화하기 어려움을 느낍니다. 녹색 전환으로 불리는 현재의 재생에너지 사업은 토건사업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배를 불릴 뿐입니다. 물론 재생에너지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난개발은 안 됩니다. 앞으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줄일 것인지, 어떻게 중앙집중 에너지 정책이 아닌 지역적이고 분산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지 구상하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민영화된 에너지는 다시 공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앞의 경우와 같이 민도가 낮아 저항이 적은 농촌만을 식민지화하는 일도 있으나, 도시와 농촌이 모두 식민지화되는 일도 있습니다. 농식품 대기업은 도시뿐 아니라 농촌까지 장악했습니다. 이제 농촌에서도 베스킨라빈스, BBQ, 파리바게트 같은 프랜차이즈점을 읍면 소재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뿐더러, 농협 하나로마트와 같은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작은 슈퍼도 농심, CJ, 코카콜라와 같은 거대 기업들이 침투해 있습니다. 이들은 식량 생산에 힘쓴다고 스스로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윤 추구만을 목표로 삼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하자 국내 식품업계는 우유, 아이스크림, 라면, 과자, 빵 가격을 줄줄이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곡물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입한 라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식품 가격은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 빙그레 영업이익은 65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53.9%나 늘었고, 삼양식품과 농심도 100% 이상 증가한 영업이익을 챙겼습니다. 오뚜기와 매일유업, 풀무원, 대상 역시 50% 이상의 실적을 냈습니다. 즉, 우리의 식량 생산·가공·유통 구조는 농식품기업이 자본을 독

식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 분절을 이겨내고 다시 관계성을 쌓아나가야 한다.

저는 농을 우리의 몸과 삶과 사회 건강성의 뿌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시민 중심으로 전개되는 운동이나 정치적 의제에 '농'과 관련된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 항상 아쉬웠습니다. 이는 농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먹거리의 공공성이 회복된다면 노동문제, 생태문제와 함께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이 변화할 것입니다. 또한, 농은 자연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사회적 노동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농을 빼놓고는 체제 전환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제 삶에서 전환이 일어남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 줄 알았는데, 돈 없이도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에, 소비가 아니라 내 삶의 먹거리는 내가 스스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에, 노동은 내가 원하는 시간 만큼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새를 관찰하는 등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 삶에 주체성이 훨씬 늘어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식량이 저에게 상품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임을 몸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서 몇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농업, 농민, 농사, 농촌의 개념부터 재정립하자.

자본주의 경제에서 농업은 수지를 맞춰야 하는 산업이 되었습니다. 수지를 맞춘다는 말은, 물건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돈보다 물건을 팔아 생긴 돈이 많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농업이 산업이 되면서 농업의 목표도 이윤 창출이 된 것이죠. 그러나 농업은 산업이 되어서 안 됩니다. 먹거리는 공공의 영역이니까요. 농민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야 합니다. 귀농했다고 하면 다들 대단하다며 농사짓는 규모를 묻습니다. 대답하면 다들 '에이~그건 농사도 아니지. 텃밭이네.'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농민은 규모가 있는 땅을 경작하고, 작물을 출하해 수익을 내는, 농업이라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앞에서 말했듯이 땅을 경작하고 생태적인 방식으로 작물을 기르는 모두를 농민의 개념에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학비료, 농약을 쓰는 관행농 뿐만 아니라 유기농 또한 문제입니다. 유기농은 본래 유기적인 생태계의 원리에 기반한 농사법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친환경 농업육성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오직 유기농인증에 중심을 두고, 단순 농자재 지원에 예산을 집중하며 유기농업은 '유기적인 농업'이 아닌 '유기자재를 사용한 농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즉 유기 살충제나 유기 비료를 과도하게 쓰더라도 기준을 충족시켰기에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농기업들도 기준에 맞는 유기자재에 투자하면 이윤을 쓸쓸히 얻을 수 있고요.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것의 폐해의 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 친구는 유기농 인증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유기농 인증을 받으려면 농약이 조금이라도 검

출되면 안됩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잔류농약 검출 기준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아무리 농생태적 방식으로 농을 짓더라도 옆 사람이 농약을 투입해서 농사를 지어 친구의 밭에 농약이 검출되면 유기농 인증이 취소되어 인증을 위해 투입한 노력이 헛수고가 될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정보다는 결과, 인증만을 중시한 제도는 유기농이든 친환경농이든 아무리 개념이 좋더라도 그 개념을 변질시킵니다. 앞으로의 농사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시하며 자연에 해를 덜 끼치는 농생태학에 입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먹거리 공급 뿐만 아니라 토지 회복, 탄소 흡수를 한다는 점에서 소중한 사회적 노동으로 여겨져야 할 것입니다.

농촌도 마찬가지로 식량 생산원, 에너지 공급원, 쓰레기 폐기장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연결될 수 있으며,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다원적 기능이 인정받고 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치적인 세력을 결성해 싸움에 함께 연대하자.

작년 11월 11일 농민의 날, 열린 전국농민대회에 저도 곡성군 농민회와 상경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위는 관련 기사도 얼마 없고, 대중의 관심도 받지 못했습니다. 농민들은 농민기본소득, 농지개혁, 농산물 수입 저지 등의 요구를 하지만 정부는 꺾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힘이, 세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연대해서 세력을 키워야 합니다.

정치적인 세력을 키워나가는 방법으로는 예전에 꽤나 보편적이었지만 지금은 희미해진 농활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농활이 그저 며칠간 농사 일손을 돕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발제를 준비하며 새롭게 알게 된 점은 농활이 농민과 학생 또는 대중의 연대를 일으키는 정치적 활동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중적 농활에 위협을 느낀 당국은 농민과 학생의 연대를 차단하기 위해 물리적 탄압과 이데올로기 공세를 가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농활로 인해 농민회는 회원이 점점 늘어났고 학생회와 정치적, 조직적 연대를 가능케 했습니다. 현재도 농활이 남아 있긴 하나, 정치적인 기능보다는 그저 봉사 활동이나 학점 취득 등의 형식으로 그 역할이 축소되었습니다. 다시 농활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성화해보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우리는 함께 WTO, FTA와 같은 농산물 개방화 정책에 맞서야 합니다. 우리의 먹거리가 어떻게 식탁에 오르는지 감추는 복잡한 유통구조에 맞서야 합니다. 우리는 코카콜라, 맥도날드, 하림, 농심과 같이 자본을 독식하며 식량을 상품화하는 농식품기업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농업의 불의한 구조는 해결하려 하지 않은 채 자본, 기술과 합작해 대농/기업농/스마트농 활성화하려는 정부 정책과 싸워야 합니다.

셋째, 소농이 주를 이루는 사회를 꿈꾸며, 농을 곁에 둔 사람이 많아지도록 하자.

이전에는 40%를 넘었던 농가가 이제는 4.3%입니다. 근대사회 이전에는 농민의 비율이 세계적으로 80%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줄어든 농가만큼 소수의 사람이 대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농을 곁에 둘 수 있도록, 농을 중심으로 둔 체제전환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도시에서의 농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택가, 가로수가 늘어선 도로, 옥상, 지붕 등 곳곳에 텃밭을 일굴 수도 있으며, 주말 농장 등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도시에도 녹지는 더 필요하며 충분히 가능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접근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농은 최대한 퍼질수록 좋습니다. 여름 동안 채소를 키워보고 경험한 사람은 식량에 대해 또 다른 가치를 갖고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소비할 것입니다. 또한 슈퍼마켓에 진열된 게 아니라 자연에서 자라는 형태에 익숙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넷째, 혼란을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내자.

쿠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카리브 해에 있는 섬나라 쿠바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1958년에 혁명군이 독재 정부를 몰아내고 사회주의 정부를 세우자 미국과 동맹국들은 쿠바와의 교역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경제 봉쇄로 쿠바를 말려죽이겠다는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쿠바는 다른 사회주의 나라들과 교역함으로써 경제 봉쇄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설탕을 팔고 석유를 사오는 교역 구조였습니다. 이 나라들은 미국과 맞서 싸우는 쿠바를 지원하기 위해 설탕은 후하게 사고, 석유는 싸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말에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지고 1991년에는 소련이 해체됩니다. 그러자 쿠바 정부도 커다란 위기에 빠집니다. 설탕 값은 곤두박질쳤고, 수출량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설탕 수출로 번 돈으로는 석유를 예전의 4분의 1도 못 사게 되었고요. 결국 쿠바 정부는 1991년 9월에 전쟁 때에나 선포하는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석유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 국방과 운송, 발전 같은 데에 우선 배분하고, 민간용으로는 거의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화학비료나 농약은 석유를 가공해 만들기 때문에 화학비료도 농약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작물 수확량이 줄어들 것이 뻔하니 농민들은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쿠바 정부와 과학자들 농민들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화학비료와 농약 없이 땅의 힘을 복돋고 병충해를 막을지 고민했고 전통 방식 그대로 농사짓는 것으로 그 해법을 찾았습니다. 1992년부터 쿠바는 온 농촌에서 화학비료와 농약 없이 가축 분뇨와 음식 찌꺼기를 섞어 만든 퇴비와 지렁이 분변토를 이용해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쉽지 않았고 수확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방법으로 지었습니다. 3년째인 1994년 전 세계는 쿠바가 거둔 수확량에 깜짝 놀랐습니다. 화학비료와 농약을 써서 농사짓던 1991년 수확량과 비슷한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시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몇 해 수확량이 부족해지자 도시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자투리 공터에 텃밭을 일궈 옥수수나 채소를 기르기 시작하고 도시 주민들 사이에 텃밭 가꾸기 열풍이 불니다. 쿠바 정부도 도시 주민들이 농사짓는 것을 적극 장려했습니다. 이렇게 1990년 43%였던 쿠바의 식량 자급률은 단기간에 무려 95%로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현재 식량 자급률은 대략 23%이며, 쌀을 빼면 3%일 것입니다. 농을 중심으로 한 사

회를 일궈나가는 것 그리고 농생태적인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것은 쿠바에서 그랬듯이 처음에는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인내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아이디어들을 떠올린다면 분명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자주 여러 위기에 봉착하겠지만, 쿠바의 이 혁명 같은 전환을 생각하며, 우리도 농을 중심으로 한 체제 전환에 함께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자료

- 01 서경석, 위기의 밥상, 농업, 미래생각발전소, 2013.5.
- 02 알렉산드로 보나노, 로런스 부시 외, 세계 농업과 먹거리의 정치경제학, 따비, 2016.9.
- 03 반다나 시바, 이 세계의 식탁을 차리는 이는 누구인가, 책세상, 2020.12.
- 04 제니퍼 클랩, 식량의 제국: 세계식량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음모 그리고 그 대안, 2013.1.
- 05 맥스 아일, 민중을 위한 그린 뉴딜, 두 번째 테제, 2023.6.
- 06 우춘희, 깃잎 투쟁기, Kyobobook MCP, 2022
- 07 제인 하디, 이주, 이주노동자 그리고 자본주의, 마르크스21, 2020
- 08 윤병선, 흔들리는 유기농업의 정체성, 2016
- 09 이창한, 1970~80년대의 농민운동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창립, 기억과 전망 여름호
- 10 윤병선, 최민영 논설위원, "이번 식량위기는 쉽게 진정 안 될 것...지금은 농업을 보호할 때", 경향신문, 2022.6.
- 11 이오성,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2021 농촌 리포트, 시사 IN, 2021.11.
- 12 작은 것이 아름답다 278호 <지구농사>, 2023

농을 중심으로 한 체제전환 운동,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

농업·먹거리 기후운동의 시작점에 대한 모색

송원규 |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wksong1978@gmail.com

효정님의 현재 농업 체제의 지배적 권력으로서 생명-금융자본주의에 대한 분석, 연어님의 3농과 먹거리 문제의 개별화, 분절화에 대한 진단에 큰 틀에서 공감한다. 현장에 기반한 운동과 체제 내의 정책·제도의 연결자로서 연구와 활동을 병행하는 연구활동가로서 발제의 세부 내용보다는 농을 중심으로 한 체제전환 운동 혹은 농업·먹거리 운동과 체제전환 운동 간의 관계 형성과 관련한 고민을 중심으로 토론하고자 한다.

농을 중심으로 한 체제전환 운동의 주체 형성,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체제전환 운동, 좀 더 폭넓게는 기후운동* 내에서 농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문제와 기존의 농민 운동, 먹거리 운동 내에서 기후정의에 대한 충분한 담론 형성이 되지 않은 문제가 맞물리며 최근 급속하게 확대되는 기후운동 내에서 농의 입지는 정체되어 있다. 기후운동의 주체를 기존 한국의 민중운동, 시민사회운동의 틀 내로 한정할 필요는 없지만 농민, 시민이 있는 현장에 발을 딛고 농업·농촌·먹거리의 현안을 풀기 위한 운동을 하는 이들과의 관계 형성 문제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존의 농민운동, 먹거리 운동 내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지만 난제가 되고 있는 이주노동자, 반농반X를 지향하거나 될 수밖에 없는 귀농·귀촌인과의 관계 형성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는 기후운동이 기존의 운동들과 함께 고민할 중요한 의제다. 농업·농촌의 사회경제에서 중요한 주체이지만 이질적인 집단으로 인식되고 기존의 운동과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농을 중심으로 한 체제전환의 방향성이 온전하게 제시될 수 없다.

* 기후위기의 문제의 본질은 자본주의 축적 체제의 문제라는 점에서 '체제전환 운동'이라는 용어에 동의하지만 대중 운동과의 소통과 연대를 위해서는 '기후운동'이라는 용어 사용이 낫다고 생각한다. 결국 용어는 운동 대중화의 과정에서 결정이 될 문제이지만 이 글에서는 기후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우선 효정님이 제시한 ‘조직화’의 과제 모색(임금체불상담소, 차별상담소, 노인상담소, 의료상담소 등), 운동의 근거지가 될 집단을 형성하기 위한 플랫폼, 논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 구성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기존의 대중운동, 조직운동 단체와 현장의 다양한 운동(이주노동 운동, 귀농귀촌 운동 등)이 함께 논의하는 구조는 기존 운동의 관행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열려진 형태의 논의 구조 형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초기에는 기존의 조직운동과 다양한 운동이 각기 기후운동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정리한 내용으로 소통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농을 중심으로 한 체제전환 운동의 내용은 무엇인가?

기후위기의 근본적 원인으로서는 자본주의 축적 체제와 농식품 체계의 문제를 진단하고 체제전환의 방향성을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대중적 운동의 의제가 되기는 어렵다. 농민운동이 기후재해로 인한 피해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생협운동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식단을 중심에 두는 식생활운동에 주력하는 것은 대중적 참여가 가능한 의제이기 때문이다. 생명-금융자본주의의 작동 방식 분석, 농민의 존재 양식 변화를 고려한 계급 운동의 방향 설정이라는 운동 중심 집단의 인식 형성이 토대가 되어야겠지만 대중적 참여가 없다면 농을 중심으로 한 체제전환 운동이 힘을 갖기는 어렵다. 정의로운 전환을 지향하는 농업·먹거리 운동의 의제와 방식에 대한 많은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효정님, 연어님의 발제문에서 제시된 한국 농업 현장, 생명-금융자본주의의 현장 사례에 대한 풍부한 수집과 분석이 운동과 연구의 협력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스마트농업, 디지털농업 등 첨단 기술의 기능에 대한 미사여구로 포장된 기업의 홍보물과 정부의 정책 문서 이면에 숨겨진 본질을 드러내지 못하고 비판만 하는 방식은 파급력이 없다. 기술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그 기술이 농업 현장에서 무엇을 하는지 한국의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이와 함께 기후재해, 재난의 영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와 시대에 맞는 언어로 정리되어야 한다. ‘피해’의 관점에 갇히는 것을 분명 경계해야 하지만 내년에도 농사지을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 마련, 정책 방안에 대한 제시 없이 기후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동력 형성의 측면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생태적 전환을 통한 재생산의 관점에서 소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런 체제 내에서의 단기적 재생산을 고려한 제도권 정책 개선의 접근은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도 항상 상기해야 한다.

농업·먹거리 기후운동의 지역 거점으로서의 지역먹거리 운동

제도화의 과정에서 체제 내로 포섭된, 틈새 시장으로서의 한계가 명확하지만 지역먹거리계획(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은 농식품 체계의 생태적 전환과 관

련된 지역 단위의 시도가 가능한 공간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좀처럼 접점이 생기지 않는 농민 운동과 먹거리 운동의 연대가 가능한 공간이기도 하다. 또한 먹거리와 관련한 정책적 반응과 시도가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는 영역이다.

생산에서 제도화된 친환경농업과 농약 검출의 논리보다 생태적 실천의 확대를 존중하고, 가공·유통에서 기업 중심의 체계에서 좀 더 벗어난 경로를 찾고, 이러한 먹거리의 소비가 시민들의 실천으로 인식되는 기후운동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현실에서 작동하는 지역먹거리계획의 제도(지역 인증제 등)와 실천(학교·공공급식, 먹거리 돌봄 등)이 기존 체제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계는 분명하다. 하지만 현장의 활동가들이 구체적인 실천을 시도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모든 농업·먹거리 운동이 연대하자!

서유럽 농민들의 질소 제한, 보조금 삭감(면세유) 등 기후정책에 대한 반발과 극우 포퓰리즘 정당의 이용, 채식과 육식의 대립 구도 등 기후위기에 대한 운동의 대응은 많은 갈등의 요소를 극복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먹거리의 산업화·세계화 속에서 단절되었던 농업과 먹거리의 관계를 다시 모색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기후운동은 좀처럼 연대의 흐름을 형성하지 못했던 다양한 농업·먹거리 운동이 연대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이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고민하고 연대를 모색하자.

한 손에는 투쟁을 한 손에는 대안을 세상을 바꾸는 여성농민

박미정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들어가며

블랙베리의 눈물을 아시나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몰아친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에 살아남기 위해 농민들은 점점더 규모를 늘리거나 다른 농민들이 짓지않는 새로운 품종을 짓거나, 다른 농민들보다 수확시기를 앞당겨 출하를 하는 등 끊임없는 농민들간의 경쟁속에 살아남기 위해 노력해왔다.

블랙베리가 그러했다. 아무도 짓지않는 블랙베리를 심었지만 몇 년뒤 수확시기에는 너무나 많은 블랙베리가 시장에 쏟아져나오면서 결국 눈물을 머금고 나무를 베어낼 수밖에 없었다, 현재 샤인 머스캣또한 그러하다. 가속화되는 수입개방의 물결속에서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는 농산물값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고 해마다 가속화되는 기후위기는 농민들의 기반자체를 흔들고 있다.

우리는 지금의 농업생산방식으로는 더 이상 내일을 기대할수 없다고 본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을 같이 고민하고 내일의 농업 농촌 농민 삶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현재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의 결정판이 규모화로 인한 각종폐해와 그 결정타로 기후재난 폭풍속 한 가운데 서있는 농민들의 모습이고 기후재난속에서 농업 농촌 농민의 대안을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새로운 세상을 고민하는 우리의 작은 실천과정이라 생각된다.

1. 기후재난과 농업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아닌 지구열대화로 진입, 2023년 7월 27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가 아닌 지구열대화(globalboiling) 시대에 진입했다고 경고●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는 2023년 6월 평균기온이 1979년 6월 최고기온보

다 1℃ 높다고 경고했으며, 미 항공우주국(NASA)은 엘니뇨의 영향으로 2024년에는 더 무덥다고 전망했다. 이는 전 세계가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난시대로 들어섰음을 의미하며 기상이변은 앞으로 더 잦고 강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라 글로벌 농식품 공급망이 붕괴하면서 특히 아프리카·중동의 식량안보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전쟁보다 더 주목하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 쪽으로, 실제로 가뭄, 홍수, 열해와 같은 기상이변이 빈번해지면서 아프리카 및 중동 내 식량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2년 1월 북아프리카에서는 가뭄이 심화되면서 대외 곡물 수입량이 늘어났으며 최근 몇 년 사이 동아프리카에서는 가뭄 발생이 빈번해져 작황이 악화되었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범분야 및 범국가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기후 회복력이 부족한 아프리카·중동의 개발도상국은 농업 및 식량 분야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국도 해마다 폭우, 폭설, 풍수해, 병충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기후 위기로 인한 날씨 변화, 기온 변화 등으로 평소와 비교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0년의 경우 전례 없이 긴 장마와 병충해로 인해 농작물의 직접적인 피해가 심각했다. 곡물, 과수, 채소 모두 수확량이 급감했고 씨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었다. 지난 7월 9일 이후 집중호우로 3만 6천ha의 농작물이 침수되고, 96만 9천 마리에 달하는 가축이 폐사하였다.(농식품부 보도자료.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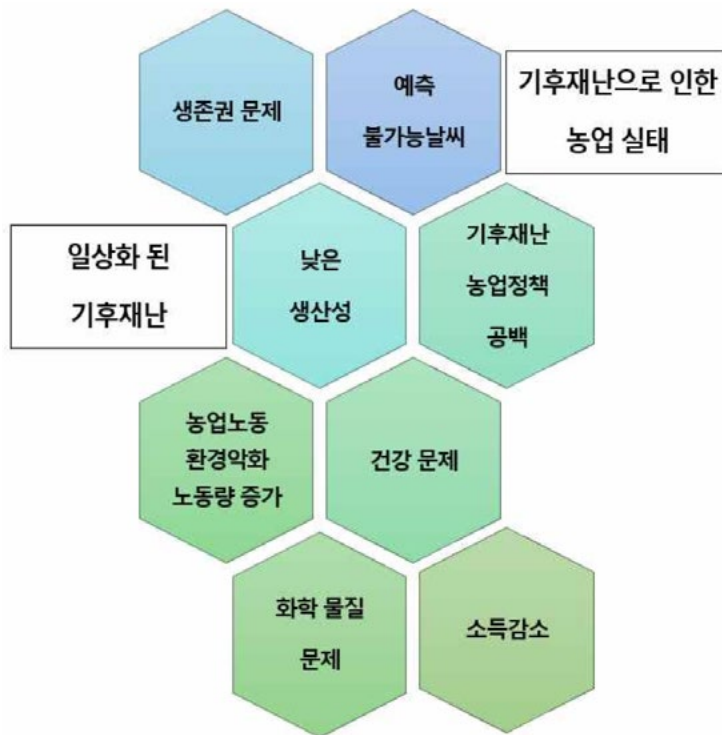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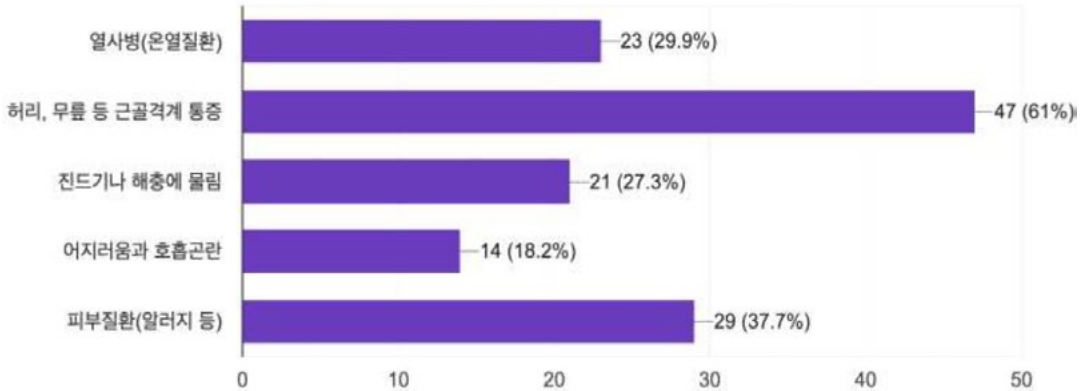
이로 인해 시장의 농작물 가격은 급증했고 정부는 이를 수입 확대로 급하게 해결하려 했다.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 농산물 단가가 떨어지면서 농민들은 생계를 위해 농사 규모를 늘렸고, 이 과정에서 많은 농민들이 기계화, 화학 농법 등에 의지하게 되었다. 농지와 기계 모두 고가여서 농가 대출은 증가하고 소득 구조는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2. 여성농민이 겪는 기후재난

기후변화로 인해서 경험한 건강 문제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질문한 결과는 [그림11]과 같다. 허리, 무릎 등 근골격계 통증(61%)이라고 답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알레르기 등 피부 질환(37.7%)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열사병 등 온열 질환(29.9%)과 진드기, 해충에 의한 외상(27.3) 또한 응답 비율이 높은 편에 속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1-2018년 농림어업 종사자의 온열 질환 발생률 평균은 5.4명으로, 전기, 가스, 수도사업 종사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본 사례연구에서도 한 농민이 진드기와 외래 해충이 이전보다 훨씬 증가했다며, 실외에서 오랜 시간 노동해야 하는 농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농민의 건강 문제

[그림 11]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의 어려움(중복 응답)



여성농민이 겪는 기후재난의 주요 내용

- 2022년 농업소득 년평균 949만원,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업 소득으로 열악한 농업 노동환경에 내던져진 여성농민
- 일상화된 기후재난이 극단적인 날씨와 해충의 증가로 농업노동 환경을 악화시키며 농업노동 증가 새벽, 늦은 저녁 귀가 반복으로 노동시간 증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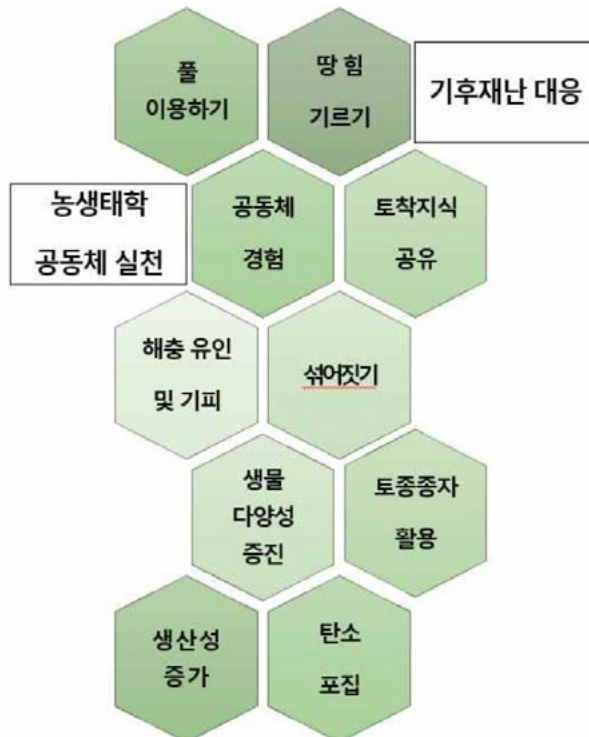
\* <2023 한살림 생명협동연구 결과보고서- 기후재난과 땅의 회복 : 여성농민 공동체의 저항과 농생태학 실천 : 김신 효정, 홍자경 인용>

- 농기계를 다루는 남성과 달리 논,밭에서 농기구를 주로 사용하며 장시간하루종일 퇴약별에 노출된 여성농민, 각종 온열질환,피부질환 등 농작업 근 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며 건강권 약화
- 기후변화로 처음 보는 각종 벌레들의 등장으로 병충해 방제 어려움. 잦은 냉해,가뭄,폭우,폭염 등으로 병충해 심각, 농약 등 건강권 노출 심각
- 폭등한 생산비와 기후재난, 수입농산물로 인한 농산물값 하락으로 농업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 겸업을 하며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업의 주체로, 농민으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 3. 여성농민들이 이야기 하는 기후재난 대응 실천사례

#### 1) 전여농 언니네텃밭 생산자 농생태학 공동체 실천

전여농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토종 종자 운동을 한국 사회에서 처음 시작하고 운동의 확산에도 크게 기여했다. 전여농은 1회원 1토종 씨앗 지키기 운동을 통해 식량 주권 운동으로서 토종 종자 운동을 전개해왔다. 토종 종자 운동은 여성농민 이 1품종 이상 토종 씨앗을 심어서 보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 먹거리 소비자 교육 과 채종포 사업, 토종 씨앗 나눔, 토종 농산물 보존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농생태학 실습소 운영 등 다양한 활동으로 확대되어 왔다.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공동체의 농생태학 실천내용



## 2)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대안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 가는 전여농.언니네텃밭

언니네텃밭의 여성농민 생산자 공동체들이 무제초, 토종 농사를 비롯한 농 생태학 실천을 중요한 농사 방식으로 정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는 대안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대안 먹거리체계는 푸드 마일리지 가 긴 기존의 대형 먹거리 유통과는 달리 탄소배출을 줄인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농생태학을 하는 소농 공동체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의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안적인 먹거리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대안 먹거리 체계는 기후 재난 상황에서 탄소 감축을 위한 주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결국 지속가능한 대안 먹거리 체계 역시 현재의 기후 문제에 해결이 동시에 요구되는 것이다. 실제로 언니네텃밭 설립 초기에 연대 단체이자 소비자인 전국여성연대, 행복중심생협, 서울여성회 등 여성단체들과의 연대가 큰 힘이 되었다. 소비자가 만 원을 기부하면 토종 씨앗으로 돌려받는 소비자와 생산자 간 연대에 기반한 만든 만원의 행복이라는 토종 종자 운동을 비롯해 언니네텃밭 제철 꾸러미, 직거래 장터 운영에서도 소비자는 농생태학 실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작동하고 있다.

## 4.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정책제언

### 1) 기후재난을 겪고 있는 농민에 대한 실태 조사가 시급하다.

현재 기후 재난의 수준과 피해 규모에 대한 전국 단위 농가 실태 조사가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농민들이 경험하고 있는 기후재난 상황이 어떠한지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 또한 기후재난이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성인지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 2) 여성농민을 농업의 주체로, 기후재난 해결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농업경영체법 개정 및 장기적으로 농민기본법 제정 필요

농업.농촌의 고질적인 가부장적 문화, 사회로 인해 여성농민들은 농업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생계를 위한 겸업, 지역, 마을 활동으로 이중삼중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농가중심 정책으로 인하여 여성농민들의 노동은 여전히 무급노동자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경영주 중심으로 농민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여성 농민은 본인 명의의 농지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 증명에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농민수당, 여성농업인바우처, 직불금 등의 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부부 공동 경작의 경우에도 경영주는 남성인 경우가 대부분 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2016년 '공동경영주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경영주' 중심으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더라도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여성 농민은 실제 농업에 종사하더라도 농업인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민이 농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농가 단위의 정책이 아닌 개인 농민을 기본으로 인정하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농민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 **3)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의 불안정한 수급을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외국농산물에 맡길것이 아니라 국내 식량자급율을 높혀 식량주권을 실현하여야 한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인구 약 80억 명 중 10% 이상이 만성적인 식량부족과 영양 결핍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 1970년, 80.5%에 달하던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021년, 18.5%까지 추락하였고, 세계식량안보지수는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인 39위로 낮아졌다(2022년).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점점 심각해지기후재난에 국제곡물 가격 또한 폭등하는 상황에서 전 세계, 지구가 기후위기로 식량수급이 불안정 할 시 수출을 금지했던 사례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낮은 식량자급률이 알려주는 또 다른 사실은 높은 '푸드 마일리지다.\*' 수입의존도가 높을수록 먹거리 생산지에서 우리의 식탁에 오르기 까지 운반 및 유통되는 과정과 거리는 증가한다. 이동량이 증가할수록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한 증가한다. 이는 또 다시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식량수입국인 한국은 자국의 식량자급율(사료포함)을 높이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추세 속에서 농촌인구는 급감하고 있고, 이를 위해 적정 농지확보 또한 필수적이며, 식량주권 실현을 위해 식량자급율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4) 종자 수출입 작년 951억원 수지 적자, 식량은 결국 '씨앗'에서 나온다.**

**그 씨앗을 지키는 것이 식량주권을 지키는 것이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재배하는 생물다양성과 토종종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종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한국은 쌀을 제외한 콩, 옥수수 등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이 GMO(유전자 변형 식품) 곡물이며, 1인당 연간 GMO 소비량은 45kg으로 세계 최대 수준이다. 한국바이오안전 정보센터(LMO)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GMO 총수입량은 1,164만 톤으로 2017년 960만 톤, 2018년 1,021만 톤을 넘어 매년 대폭 늘어나고 있다. 상업적 농업 경작에서도 GMO

\* 푸드 마일(Food Miles)은 먹거리가 생산지에서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이동 거리를 뜻하며, 푸드 마일리지는 곡물과 축산물, 수산물 등 아홉 개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식품 수송량(톤)에 수송 거리(km)를 곱해 계산한다. 푸드 마일리지는 식재료가 생산, 운송, 소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폭증하는 수입 GMO", 한국농정신문, 2020. 10.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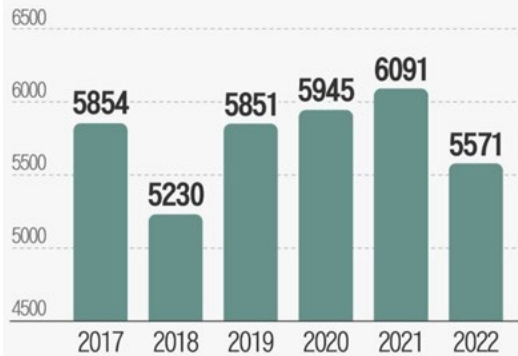
### 세계 주요 종자기업 순위 [단위: 달러, 2017년 매출기준]

순위 종자기업(국가)

|    |                                 |         |
|----|---------------------------------|---------|
| 1  | 몬산토(미국)                         | 109억    |
| 2  | 코르테바 아그리사이언스<br>(다우듀폰의 자회사, 미국) | 81억     |
| 3  | 신젠타(켄 차이나, 중국)                  | 28억     |
| 4  | 리마그레인(프랑스)                      | 19억     |
| 5  | 바이엘(독일)                         | 18억     |
| 6  | KWS(독일)                         | 16억     |
| 7  | 사카타 시드(일본)                      | 5억6000만 |
| 8  | DLF(덴마크)                        | 5억4000만 |
| 9  | 둥핑 하이테크(중국)                     | 4억9000만 |
| 10 | 라익 즈완(네덜란드)                     | 4억8000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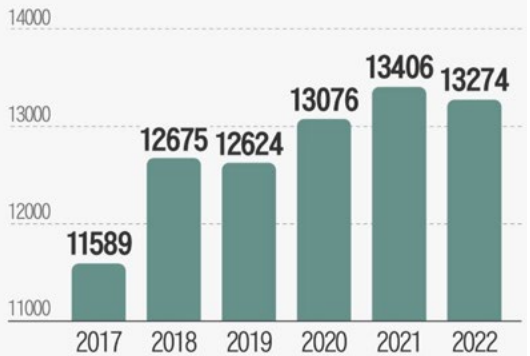
### 2017~2022년 종자 수출입 현황

**수출액** 단위: 만달러



\* 주요수출국(2021): 중국 미국 인도 일본 파키스탄

**수입액** 단위: 만달러



\* 주요수입국(2021): 미국 중국 칠레 일본 뉴질랜드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종자수입 및 사용이 많은 상황이다. GMO 종자를 쓰지 않는 농민들도 대부분 스스로 씨를 받지 않고 다국적 기업의 종자를 사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소수의 다국적기업이 종자산업을 독점하고 있고, 경제성이 높은 작물을 중심으로 수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물다양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 한다.

토종은 종자주권과 종 다양성 보존의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종자 보존은 '식물신품종보호법'에 근거하여 신품종, 개량종자만 정책적으로 보호받고 있고, 재래종 보호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종농산물 육성지원 조례 제정으로 여성농민들이 요구하여 받는 정도이다. 토종 농사는 주로 고령 여성농민들과 일부 귀농인들이 짓고 있다. 고령 농민

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많은 재래종이 사라지고 있다. 1980년대 초~2000년에 약 32,000여 점의 재래종과 자생종이 수집되었으나, 2001년 이후 10년 동안 수집된 자원은 약 8,000여 점으로 10년간 재배 식물의 재래종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멸종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소농의 토종씨앗 보존과 토종 농사를 장려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종자 주권을 지킬 수 있는 정책을 종합적이고 책임있게 만들어야 한다.

종자 주권 문제는 식량주권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정부와 농업 기업, 농민들의 종자 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요청 되는 부분이다.

### **5)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기후재난 시대 먹거리를 생산하는 직접적 지원, 탄소배출을 장려하는 화석연료 의존 농업에서 농사방식을 바꾸는 농생태학을 확산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농업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중요한 일이다. 농지는 먹거리 생산을 위해 미래세대가 이어가야 할 공공자원이다. 또한, 땅과 식물은 탄소를 흡수하는 주요한 탄소흡수원 중 하나이다. 그렇기에 농업, 농민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판단해서는 안 되며,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는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농생태학은 기후재난에 대응해 농사에 있어 순환가능한 영양과 에너지를 사용하여 기존의 기업중심, 산업중심의 농업시스템을 전환하는 운동이다.

하지만 현재의 수급 위주 정책에서는 목표 생산량 달성을 최우선 순위로 두며, 농민의 권리와 생산자인 농민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주요 논의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의 안정화를 위해선 농민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는 농민에게 직접적인 생산비 지원보다는 농기계, 비료, 농약 등 물품 지원이 주된 지원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은 물품을 공급하는 대기업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정책이지 농민의 직접적인 생계유지를 돕는 정책은 아니다. 농민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정책적 기반 마련은 농업인구의 감소를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이자 나아가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해 농생태학을 실천하는 농민들과 공동체 지원, 농민 생계보장을 위해 농민들에게 농민수당, 공익직불금, 바우처 등 직접지불 형태의 소득지원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생태농업을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이자, 먹거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이다.

### **6)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대안 지역먹거리 체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

현재 농촌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거의 서울로 향한다. 그렇기에 오히려 농산물의 최대 소비처인 서울보다 농촌지역의 농산물 가격이 더 비싸다고 한다. 생산지인 농촌에서 서울로 향하는

가운데 탄소가 발생하며 비용이 많이 발생된다. 현재는 지역에서 대량으로 생산한 농작물을 대도시의 도매시장에 판매하고, 다시 전국의 판매처로 유통하는 대도시 중심의 유통구조에서 먹거리가 오간다. 같은 지역에서 생산-판매되는 먹거리도 대규모 유통구조를 통해 재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유통 거리가 늘어날수록 탄소배출량은 증가하고, 또한 지역경제가 비활성화된다.

지역먹거리, 푸드플랜에서 핵심 내용은 '지역'의 활성화이다. 특정 지역에서 생산한 자원을 지역의 유통망을 이용해 그 지역에 보급해 소비함으로써 이동 거리는 줄이고 지역의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소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소비가 발생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 내 생산자-소비자-노동자-소상공인의 관계를 더 공고하게 재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식량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고려하고 소비자의 식생활 교육까지 포함하는 푸드플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푸드 플랜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 **7) 모든 농업정책을 기후재난에 맞게 전면 재 검토하고 농업재해는 농업재해보험법으로 민간에 맡길것이 아니라 농업재해 보상법 제정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의 보험료율은 시군단위로 산정되고 있으며, 그 지역의 보험가입 실적, 보험금 지급 실적, 손해율 등이 고려되어 산정된다. 즉, 보험사업자가 그 지역에 지급한 누적 보험금(누적 손해액)이 많을수록 손해율이 증가하고, 위험률도 높아지게 되는 구조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대파대, 농약대 지원 수준으로는 재해를 입은 농가의 재생산활동이나 생계 대책으로 너무나 미흡하다. 정책보험으로 농업재해보험이 존재하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민이 상당수이고 보험이 갖고 있는 문제로 여전히 제도에 회의적인 농민이 많다.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하나의 예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상황에 자기부담비율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현장의 문제제기이다.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피해가 본인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만큼 자기부담비율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현행 재해보험의 보장성 강화, 재해대책의 생산비 보장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마치며**

한국은 과거 농업국가에서 소위 선진국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저곡가 정책으로 농민을 희생시켜 대규모 영농 중심의 정책을 펼쳐 왔다. 그 결과 현재 농민 수는 급감했고, 농민의 노령화, 소수의 대농 중심 정책, 생산 중심이 아닌 수급을 맞추는 수급 위주의 정책을 펼쳐왔다. 또한 농지 가격 상승 및 고가의 대형 농기계(트랙터, 콤파인, 이앙기) 등은 탄소배출에 막대한 기여를 해왔으

며, 새로운 농민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농사를 짓지만 자기 농지를 갖지 못하는 임차농이 발생했다.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 농산물 단가가 떨어지면서 농민들은 생계를 위해 농사 규모를 늘렸고, 이 과정에서 많은 농민들이 기계화, 화학 농법 등에 의지하게 되었다. 농지와 기계 모두 고가여서 농가 대출은 증가하고 소득 구조는 악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스마트 팜, 푸드테크, 대체작물 전환이 기후위기 극복 대안이 결코 아니다. 기후위기는 사람들이 만들어 낸 인류대재앙이다. 결자해지라고 이걸 극복해나가는 주체 또한 사람들이 해야 한다. 농민들도 탄소 배출을 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탄소배출을 줄이는데도 일정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함에도 그 피해는 농민들이 더 많이 받고 있다. 이제 정의로운 기후재난 극복을 위해 여성농민들이 먼저 나서자!

## 참고 자료

- 01 『2021년 여성 기후 보고서』, 여성환경연대, 2021.
- 02 김신효정, 홍자경, 「기후재난과 땅의 회복: 여성농민 공동체의 저항과 농생태학 실천」, 『2023 한살림 생명협동 연구 결과보고서』, 모심과살림연구소, 2023. 11.

# 모두를 살리는 길 '농생태'

## 보아야 할 지점과 걸어야 할 지점에 대하여

문영규 | 곡성농민·향꾸네협동조합

### 1. 방향성에 대하여 '농생태적 삶의 양식을 받아 안기'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가 불러온 지금의 복합적 위기를 분석하여 원인을 찾고 문제를 밝히는 데에는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혁명과도 같이 새로운 질서를 만든 경험이 없고,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며, 자본을 넘어서는 '체제전환'을 하려니 방향성을 찾고 방법을 찾는 데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할 지 찾는 길에 전환을 쫓는 한 농민의 목소리가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최근 에콰도르에서 '수막카우사이'를 기본 원리로 최초로 '자연권'을 반영한 헌법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대부분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막카우사이'(좋은삶, 충만한 삶이라는 뜻)는 안데스 지역 원주민의 오래된 삶의 철학으로 인간과 자연의 일치, 공존, 공생을 의미하지요. 국가 공동체의 가치를 명문화 하는 헌법에 '자연권'이라는 단어를 새겨넣었다는 것에 대해서 체제전환을 모색하는 이 자리에 중심적인 화두로 놓을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농생태학'에 기반한 사회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우리의 전환 방향이다'라는 남반구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행성인 지구생태계에서 살아가야 할 대안, 대항의 체제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 방식처럼 찾아질 수 있을까요? 자본의 태동기에서는 인클로저와 같은 폭력으로 농생태와 결별을 했습니다. 자본은 지금까지 줄곧 이윤을 위해 자연생태계는 파헤쳐지는 것이 당연한 대상으로 여겨져 지속가능한 지구시스템을 무너뜨려왔고, 삶과 농생태간에도 단절을 강제하며 민중은 생산과 소비의 체제에서 눈이 가려진 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지구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자본의 역사보다 더 오래된 못생명들의 지속가능한 생태적 존재 방식, 그 원리를 기억해 내어 현대에 맞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 체제전환의 길임을 주제로 삼고 싶어, 그렇게 하고 있는 남아메리카 민중의 결정을 우선적으로 꺼내는 것입니다.

자연과 인간을 타자화시키고 자원과 노동을 추출하여 유지되는 추출자본주의 방식을 탈피하는

대안은, 역으로 개인이든 사회공동체든 지구생태계가 유지되고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농생태는 다시 호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먹는 것, 입는 것, 누리는 것 모두가 자본주의 체제에 의존하거나 묶여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즐겨 먹는 고기와 유제품을 위해 숲이 밀어 없어지고 전 세계 농지의 70%가 쓰이고 있습니다. 라면, 과자, 화장품에 쓰여지는 팜유를 생산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밀림 절반 이상이 불태워졌고, 새우를 양식하여 팔기 위해 망그로브 숲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연으로부터 생태적인 농사와 멀어지고, 파괴와 추출을 일삼는 자본의 방식에 의해 먹거리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먹거리 상품이 다양해지고 달콤함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자연은 사라지고 민중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농업노동자는 수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환경적인 먹거리 소비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유통과 폐기, 쓰레기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소비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체제에 여전히 묶여있어야 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쥐어짜기 방식'(가격은 억제되고 비용은 늘어나는 자본주의 농업 체제)으로 농민은 착취되고, 살아남고자 하는 농업인은 대규모화 기계를 동반한 산업농 체제에 대응하여 화학비료와 농약 투입, 과도한 경운의 농업 방식에 편입되고, 그런 농사를 선진국 농업이라고 따라하라는 농업정책에 농업의 생태계는 파괴는 관행화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을 이어갈 먹거리를 어떻게 구하는 사회가 되어야 할까요? 농생태적 삶의 양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로컬푸드도 좋습니다만 최선의 로컬푸드는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내가 생태적인 방식으로 얻는 것입니다. 모든 걸 자급할 수는 없습니다만, 할 수 있는 만큼 모두가 농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인구 4%의 농민 구조에서 농생태 방식으로 모든 농산물을 공급받는 체계가 가능할까요? 식량자급률 20% 사회에서 자본의 먹거리 체계에서 벗어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정에서도 도시에서도 농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현대인은 안 하는 것입니다. 새가 먹이를 구하듯 먹거리를 구하는 농이라는 행위는 당연한 몫이지만, 당장 모두가 할 수 없습니다. 못하는 사람들은 나를 대신해 먹거리를 공급해주는 농민을 돌보고 지지하는 체계로 가야 합니다. 농민은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신해 농사 노동으로 돌보는 역할자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농사는 흙의 건강함을 생각하고 생명의 자람을 돌보는 것이기에 '살림노동'입니다. 농생태적인 삶은 자본주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체제전환이라는 점에서도, 자연과 생태적 관계를 회복하는 점에서도, 돌봄과 연대라는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기후재난의 시대에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자급의 방식으로든 필요한 대안의 방식이고 추구가치입니다.

저는 토론자로서 참여기회가 주어진 마당에 꼭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체제전환의 방향에서 농을 바라볼 때 농을 농업이라는 직업군으로, 나와 다른 계급의 피해 당사자로만 생각하는 사고를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다 본격적인 전업농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농



과 떨어지지 않는 농생태적 삶, 또는 그런 체제를 떠나없이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영국에서 독립한 인도의 모습을 그리며 ‘마을 스와라지(자치 공동체)’를 주창하고 몇 가지 원칙을 제시했는데, 식량을 얻기 위한 노동을 우선으로 언급했습니다. ‘육체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먹을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 살기 위해서 남녀 누구나 일을 해야 한다……. 즉 모든 건강한 개인은 자신의 음식을 얻기 위해 충분한 노동을 해야 하며, 그의 지적 능력은 생계수단을 얻거나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인류에 봉사하는 데에 쓰여야 한다……. 내가 고집하는 것은 육체노동의 필요성이다. 누구도 그런 의무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나는 주장한다.’(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中)고 했고, 톨스토이는 단지 식량 소비자로만 머무는 것은 ‘누군가의 등에 올라타 살아가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물론 100년 전 인도의 상황과 다르고, 이미 농과 단절된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는 여건에서 쉽지 않은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 앞에 놓인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자연생태계의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자본주의 체제의 악순환 사슬을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일까? 마리아 미즈가 얘기하는 자급의 삶은 정말 가능한가? 그 선상에서 ‘모두가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이라도 농사를 짓고 자급하는 삶’이 공통된 추구가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제안합니다.

## 2. 무엇을 할 것인가? - 농생태적 전환의 공간 만들기

체제전환은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요? 켄로치 감독의 영화 <지미스홀(2014)>은 1930년대 북아일랜드의 지미 그랄튼과 마을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지미스홀은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춤도 추고 글을 배우고 그림을 배우는 마을회관 같은 커먼스였고, 이러한 공간이 만들어준 공동체성은 탄압에 대한 저항성으로 발현됩니다. 서로에게 놓인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서 우리는 마을에서, 지역에서 사람이 모이는 공간(커먼스, 커뮤니티)을 만들고 ‘다른 삶’ 나아가 ‘좋은 삶’의 대안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서로를 북돋우는 힘이 되고, 나아가 체제전환을 만들 힘이 됩니다. 저는 에릭 올린 라이트가 언급한 ‘자본주의 잠식하기’로서 틈새 전략에 많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낡은 세계의 찢터미 위가 아니라 그 세계의 틈새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대안적 삶을 모색하는 실천으로 협동하거나 연대하는 유무형의 공간이 지역 단위에서 많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기후생태위기를 극복하는 체제전환의 길은 각자의 위치에서 사람이 모이는 공간을 만들고, ‘신념의 공동체’도 늘어나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3년 담양에서 있었던 채효정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오래 기억되는 단어는 ‘헤게모니’, ‘힘’이었습니다. 헤게모니는 그럴싸한 전국조직의 구성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도처에서 작은 힘들

이 모여져 만들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사례1) 새로운 농민의 거점 공간 '항OO협동조합'

곡성에 2013년에 설립된 항OO협동조합은 생태적 삶을 지향하며 귀농한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만든 조합입니다. 이웃한 귀농인 7~8명이 모여 시작했는데 마을공방, 마을카페 겸 작은 도서관, 다목적공방(직조, 제빵)과 공유부엌, 귀농청년을 위한 쉼어하우스를 직접 짓고 마을공동체에 필요한 일을 조금씩 늘려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비슷한 삶을 지향하는 귀농인과 청년들이 모여들고 정착해서 서로 돕고 연대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조합원도 50명 가까이 늘었고 특히 귀농한 청년들 18명도 함께 합니다. 곡성군에서도 인구증대를 위한 여러 정책을 세우는데, 항OO 구청원이 늘어나는 것을 보며 도와줄 것을 찾기도 합니다. 구성원들은 일상적으로 토종씨앗도 나누고 벼농사 품앗이도 합니다. 필요에 따라 공동농사를 짓기도 합니다. 작은도서관에서는 필요 도서 구매는 물론 각종 강연과 배움강좌를 열고 함께 생각을 나누고 키워갑니다.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동아리나 소모임으로 바느질모임, 책모임, 제철요리모임, 탐조모임, 수제맥주만들기 모임, 수선모임 등등이 있고 지난해부터는 기후정의 체제전환을 위한 지역활동모임으로 '틈'이라는 모임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농촌과 생태를 파괴한 지역현안(채석장설립, 폐기물처리장 증축, 양수발전소반대) 등 지역대책모임에도 앞장서서 투쟁하고, 군단위 곡성환경연대 준비위와 곡성농민회에도 주축으로 활동합니다. 문화활동으로 농민영화제, 마을음악회, 마을운동회를 해마다 열기도 하고 풍물패를 만들어 농문화를 복원하는 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청년자자공'(자연,자립,공유공생)이라는 프로그램을 두어 농생태적 삶을 지향하는 도시청년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농사와 자립기술, 시골음식만들기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하면서 삶의 전환과 정착을 7년째 돕고 있습니다. 지역학교에 제안하여 곡성군에 처음으로 학교텃밭 수업을 시작했고, 교육농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농을 준비하여 이제는 지역의 학교(12곳)에서 학교텃밭수업을 열고 일상적으로 학생들과 텃밭을 일구며 생태전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다른 삶을 사니 행복한데, 좀 바쁘니다^^.

항OO협동조합은 인근 서너 마을에 산개하여 정착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곡성군 전체 지역에서 연대와 활동의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곡성에서 자본의 잠식으로 인한 농의 소멸을 막아내어 소농이 많아지고 다양하게 협력하며 즐겁게 사는 지역이 되도록 전환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항OO협동조합 사례는, 공간(틈)이 마련되면 생각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모이면 이런저런 작당들을 하고 지역의 힘이 되는 경우를 보여줍니다. 농생태적 삶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거주할 공간과 농사 지을 수 있는 여건 마련해주고, 이를 지지하고 돕는 이웃(공동체)이 있으니 청년들이 계속 모이고, 결과적으로 지역을 바꾸어내는 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소모임이든 조직이든 지역마다 사람이 모이는 신념의 공동체와 공간을 마련합시다. 그 공간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지역을 바꾸는 역량이 될 것입니

다.

## 사례2) 도시의 생태적 삶의 거점 공간 '도시텃밭'

도시텃밭운동은, 전국귀농운동본부에서 귀농하지 못하는 도시민의 농생태적 삶을 위한 방편으로 '텃밭보급소'를 구성하고 조직적으로 활동하면서 본격적인 생태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도시농업은 300만 명의 도시농업인을 양성했는데, 지금의 기후생태위기의 국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계획하며 전환운동과 맥을 같이 하려 합니다.

도시농업은 생물다양성 확보 및 탄소흡수 활동, 도시의 회복탄력성을 돕는 활동이며, 토종씨앗, 자원순환, 유기순환 농법, 먹거리 공동체, 생태시민성, 퍼머컬처, 적정기술 등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활 양식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도시에서의 생태적 전환의 거점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생태적 도시텃밭농사는 공동체 회복과 연대의 공간이 되어 도시를 바꾸는 전환의 세력으로서 체제를 바꾸는 도시전환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15분 도시' 공약으로 알려진 프랑스 파리의 앤 이달고 시장은 여러 에콜로지 정책 플랜을 제시했는데, 그중 하나가 '파리시민의 식량주권 확보'입니다. 사실 프랑스는 농업수출국가로서 자급률이 130%입니다. 당시 파리는 도시로서 자급률이 10% 정도였는데, 기후재난의 시대에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파리식량자급률 100% 달성을 위한 정책 플랜을 제시했습니다. 수도권 녹지 54%를 활용하고 모든 공공건물 옥상을 텃밭으로 바꾸며, 16%를 차지하는 축산의 탄소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공공급식의 채식공급을 늘리고, 대안적 가축사육을 장려하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앤 이달고 시장만의 아이디어나 의지가 아닙니다. 시장 2선 선거를 준비하며, 파리의 시민 500명과 정책팀을 구성하여 공약을 검토하고 세운 녹색시민의 정치적 플랜입니다. 도시의 생태적 전환을 이끄는 길에 농생태적 삶을 추구하는 시민이 있었던 것이고, 그들의 정치적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도시에서 농생태적 삶으로 참여하는 것은 개인적 삶의 전환을 넘어서 사회적 전환의 물꼬가 됩니다.

어느 도시에서든 생태적 삶의 체제를 준비하는 공간으로서 도시텃밭 공동체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도시텃밭이라고 모두 생태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도시텃밭 활동가들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사례가 있습니다. 도시텃밭은 체제전환의 의미 있는 '틈', '공간'이 될 것입니다.

## 3. 사라져가는 소농을 살리는 제도적 틈 '농민기본소득'

농민에게 직접 소득 지원을 하는 제도인 '농민기본소득'을 바라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이고, 오랜 기간 찬반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번 체제전환 포럼에서 다시 거론하는 것은 농촌에서 새로운 농민을 받아들이고 돕는 일을 해온 입장에서, 규모화된 농사가 아닌 생태농으로 살며 농촌에 버티내

기 위해 부부 중 누군가는 하기 싫은 농업 외 일을 해야 하는 당사자로서, 또는 이웃으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처방이 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소농으로서 힘이 닿는 대로 땅을 살리고, 다양한 작물을 키워 자급하고, 여유 농산물을 수확하여 지역에서 혹은 직거래로 공급하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문화와 배움과 공동체 활동을 하거나 휴식을 갖고 싶어도, 우리 농촌사회에서 소농의 '조화로운 삶'은 불가능합니다. 20년 동안 농업소득은 연간 1천만 원 내외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노동자 임금의 저렴화를 위해 먹거리 가격을 계속 억제하고,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는 자본이 이윤을 남겨야 하니 가격을 끊임없이 올립니다. 플루흐 저자는 자본의 '쥐어짜기'라고 표현합니다. 농민 본인의 인건비를 포함한 소득이 1천만 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소농의 탈농민화는 당연합니다.

WTO체제 이후 신자유주의 농산업 체계에 편입되어 경쟁에 밀리는 국내 농가 중 일부는 축산을 비롯한 몇몇 작물에 집중되거나 대규모화를 택하게 되었고, 또 이를 조장하는 직불금 제도를 비롯한 관련 농업정책은 소수의 대농을 육성하고 농민 간 소득 양극화를 키워 왔습니다. 이제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20배나 된다고 합니다. 대농으로 살아가는 극소수 농가를 제외하고는, 중소농의 자식은 절대 고향에 돌아와 농사를 짓지 않는 현실입니다. 귀향해서 농사를 짓는 것은 이른바 루저가 되어 하는 수 없이 낙향하는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선진농업을 언급하는 농학자들은 유럽의 농민 비중이 1%라며 한국 농민의 수가 너무 많고 규모화되지 못했기에 농민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농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노동입니다.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산업으로 보아서 안 되는데, 철없는 농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부족한 품목은 저렴하게 수입하면 된다는 논리를 피력합니다. 산업농 형태는 그 자체로 지구 자연을 파괴하고 타국의 농민이나 농업노동자를 착취하는 방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재난이 잦은 시대에 지구 여러 곳에서 수입에 의존하는 방식은 식량위기를 불러온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OECD 국가중 식량자급률 최하위에서, 이미 식량자급을 확보한 선진국의 농업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 터인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자체들은 지역소멸을 얘기합니다만 우리는 '소농'의 소멸에 주목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한 살림 생협에서 수입 참깨 참기름을 파는 것에 대해 의견조사를 했다가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소농들이 지었던 참깨 농사가 줄어들어 국내 공급이 안 되니 한 살림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대안을 찾으려 했던 것이겠지요. 소농의 소멸은 생태적 농사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생물 다양성 농사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농생태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은 소농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구생태계를 회복하는 농사가 아니라, 자연생태계의 질서 안에서 인류가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농사가 아니라, 기후생태위기를 키우는 악순환에 헤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소농을 버티게 하는 역할로서, 그리고 새롭게 농민으로 살기로 각오하고 비농민이 농민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지하는 의미로서, 제도적 스텔트로 저는 적절한 규모의 농민기본소득 지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 공익월급제 월 50만원-전농' '농민수당 월 20만원 □전농,진보정

당' '농민수당 년 60만원-전농,민중당' '농민기본소득 월30만원 -정의당' 등 소득지원 정책 도입안은 2007년부터 농민운동 단체와 소위 진보정당에서 줄곧 제시되었습니다. 광역지자체에서 매년 60만원 지급하는 현재의 농민수당제도(년 60만원)는 도움은 되긴 하나 현실적으로 소농을 버티게 하는 힘으로까지 작동하지 않습니다. 월급제든 농민기본소득이든 논의가 중단된 데에는 정파적 입장차이에 기인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소농의 생태적 역할을 존중하고 소멸을 막아야 한다면, 명칭이 무엇이 되었든 새롭게 논의하여 적절한 규모의 소득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도입해야 합니다. 농산물가격 보장과 농업 비용지원도 필요하겠으나 생태농사를 짓는 중소농을 살리는 체제전환 방향에서는 농민소득보장 정책과 생태순환농사(농생태학)를 지지하는 선택형 직불제의 보강이 전환기에서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농민기본소득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열쇠는 아닙니다만 생태농과 소농에게 버팀목이 되고, 새로운 농민에게는 기댈 언덕이 되는 숨통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힘을 모으고 협력하여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 4. 더 이상의 파괴와 추출을 막자! '자연권 투쟁' '농지확보 투쟁'

### 사례) 양수발전소를 바라보는 시각들

양수발전 -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양수발전 1.75GW 확보 목표로 건설후보지 신청을 받았다. 양수발전은 핵발전과 태양광 등의 발전 유휴 전력을 이용해 하부댐의 물을 상부댐으로 양수하여(올려) 두었다가, 전기가 모자랄 때 하부댐으로 급속히 낙하시켜 전기의 간헐성을 극복하는 배터리 기능이라 설명한다. 양수발전소 건설은 평균적으로 축구장 면적의 150배 정도의 규모로 산지 개발을 하여, 댐을 상하부에 만들고 양수와 발전시설을 갖추는 것이다. 건설예산은 발전소당 평균 1조에서 1조5천억, 건설 기간 10년의 초대형 개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이 과열되어, 신청한 모든 지자체를 10차, 11차(아직 세우지도 않은 수급계획) 후보지로 선정했다.

### <양수발전소를 바라보는 각 당사자의 입장>

**지자체** | 지난해 영양군(인구 1만5천 명)은 1만 명이 모인 군민대회를 하면서까지 영양군 유치 희망 의지를 피력했다. 대부분 지자체는 건설 기간 동안 누적 1만 명의 고용효과와 인구유입, 지방세수 확보, 지역개발(관광지조성)로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 | 지역 주민 역시 지역발전이라는 대세에 편승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개발지역 주민들은, 보상에 따른 이익을 기대하는 주민과 농사피해와 농지와 삶의 터전을 잃어야 하는 것에 반감을 갖고 반대하는 주민들로 나뉘고 있다.

**농민단체** | 어차피 필요한 것이라면 공론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과, 주민 피해 없이 진행되고 보상도 잘 받도록 주민의 이익을 위해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기후진영** | 양수발전소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에 피해 없이 개발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과, 무자비한 자연파괴가 동반되는 개발이며 물질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사회적 논의나 대안 검토가 없이 자연을 대규모 파괴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으로 갈린다.

여전히 논란이 많은 사안인데 공통의 문제는 모두 인간 중심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권리와 자연생태계 존속의 필요성은 빠져 있습니다. 지구생태계는 인간의 개발로 의해 남은 야생지가 100년 만에 66%에서 34%로 줄었습니다. 지구생태계의 순환과 균형을 유지할 수 없는 형국입니다. 자연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보다는 이런저런 이유로 대규모로 개발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하고 막아야 합니다. 에콰도르 신헌법에 새겨진 자연권은, 「생명이 번성하고 존재하는 자연(혹은 파차마마, 어머니 지구)은 존재하고 지속하며 그 생명의 주기, 구조, 기능, 진화 과정을 유지하고 재생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 민족, 공동체 혹은 국가는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자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국가별 생태발자국 개념에서 한국은 지구 3.3개가 필요한 수준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생산과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선부르게 재생에너지가 이야기되는 것은 탈동조화 논리가 숨어 있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기 수요의 절반은 산업용입니다. 일반용(상업용, 공공용 등)까지 생각해 보면 재생에너지 대부분의 사용처는 도시와 산업자본입니다. 이러한 상황까지 고려할 때 양수발전소는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자원공사와 발전 자회사들의 일정에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고용효과와 인구증대, 지역발전이라는 거짓 논리는 4대강 개발과 닮았습니다. 이미 양수발전소가 설치된 지역에서도 고용효과와 인구증대, 지역발전 효과는 없었습니다. 지역 유치를 현혹하는 논리입니다.

양수발전소가 아닌 태양광단지, 풍력단지 개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 수준의 편리 수준을 위한 재생에너지 대체가 가능한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라는 명목으로 농촌과 산지를 훼손하고 난개발하는 민간자본의 입장에서 자연과 농민은 항상 '타자화' 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허용하는 생산과 소비의 적절한 지점을 고려하고, 공동체적 과제로서 에너지전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매년 여의도 면적의 50배 규모인 1만5천ha 농지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농지는 158만 ha입니다. 1인당 약 90평에 가깝습니다. 가까운 일본은 1인당 100평 규모인데 식량자급의 관점에서 농지구모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식량자급률 최하위 국가인 우리나라는 국가공동체 관점에서 농지를 관리하지 않아 쉽게 자본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농산업단지, 도로개설로, 태양광 개발로, 각종 토목개발로, 쉽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농지는 농생태적인 방법으로 자연으로부터 먹

거리를 구해야 하는 자연과의 직접적인 관계 맺기의 장소입니다. 생태순환의 장소로 소위 탄소를 흡수하는 장소이어야 합니다.

농촌엔 절반이 65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면 단위 마을은 더욱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값싼 농촌을 손쉽게 장악하고 돈벌이하려는 모습은 기후위기라는 이름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대부분 초고령화를 넘어서 농촌은 이를 막아낼 힘이 부족합니다. 정보도 없고 보상의 유혹에 쉽게 무너집니다. 기후개발에 따른 문제는 해당 농촌 지역주민들의 힘으로만 막을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검토와 합의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연권에 대한, 농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는 투쟁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5. 마무리하며

과거를 극복하고 전환 운동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두고, 우리의 생각마저 전환해야 할 지점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문제야!’라는 판단 근거, ‘이렇게 해야 돼!’라는 주장에 대해서 겸허하게 생각해보고 계속해서 수정하는 싸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 있는 곳마다 보이는 풍경은 다르다고 하지요? 한 번도 가지 못한 길! 자본주의를 넘어 생태사회로 전환하는 운동은 가보지 않은 길을 찾는 것이기에, 자본주의 체제 안에 서 있는 우리는 착오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 따라서 진중한 검토와 과감한 반성과 토론과 각성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기후위기비상행동을 요구하던 시간들, 2022년부터가 본격화적으로 기후정의 관점을 얘기하고 문제점들을 찾아가던 시간들, 그리고 오늘 체제전환의 밑그림을 그려보고 방향성을 타진하는 시간을 지나면서 빠르게 교정되고 변화하는 “나”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북반구 운동진영의 익숙한 주장들만 듣다가, 코차밤바에 모인 남반구 국가의 입장을 들어보면서 생각을 교정하게도 됩니다.

기조 발제를 해주신 채효정님의 제목에 표현된 대로, 체제전환에서 농생태가 주요한 위치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에 격한 공감을 하면서 한마디 보태야겠다는 생각으로 발표자로 참여했습니다. 아울러 곡성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새농민 청년들의 건강함이 모두가 전환방향을 찾는 데 시사점이 되길 바라면서 현장의 농민으로서 참여하여 대안을 찾는 길에 보탬이되고자 했습니다. 때로는 방법보다 방향성이 중요하게 거론되어야 하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체제전환 운동은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농생태가 거론되면서, 소화 안 되던 고구마가 사이다를 만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체제전환 운동에서 기후정의가 필요조건이라면, 농생태는 충분조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운동의 경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고 싶은 것은, 요구투쟁으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요구할 대상도 없습니다. 누가 들어주는 문제가 아니고 이웃을 설득하고 공간을 열어가고 대안을 만들어가면서 낡은 체제와는 저항하는 싸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상상력에선 틈(공간)을 만

드는 전략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건설하며 투쟁하고 투쟁하며 건설하는 운동이 전환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뜨겁게 상상하고 단단하게 연결되는 포럼이 되길 희망합니다.



# 농과 새롭게 관계 맺기

김진아 | 한살림연합회

농사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2012년이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여름, 농활을 갔습니다. 봉사활동 혹은 체험활동이라고 생각하고 농활 사전 교육을 들었는데 농활은 봉사도 체험도 아닌 ‘농민학 생연대활동’이었습니다. 자유무역과 농산물 가격이 어떻게 농민들을 소외시키고 착취하는지를 들으며 농활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느 해 농민회 어르신들과 함께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니 전국 많은 농민들이 모여 있었고, 그렇게 아스팔트 농사\*를 처음 경험했습니다. 뜨거운 여름, 도시의 한가운데 더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에 엎드려 느꼈던 감정은 분노였습니다.

## 분노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

상경 투쟁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분노는 일상을 살아가는 대학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쌀 값을 보장하라는 농민들의 말이, 학내 청소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말이 돈의 논리에 의해 ‘염치없는 것’이 되었고, 그들의 존재와 상징을 드러내는 시위는 불법이 되었습니다. 제가 숨 쉬듯 당연하게 여겨왔던 돈의 논리가 농민과 노동자의 주도성을 빼앗아 버리고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목격하고 분노했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삶의 모든 게 돈으로 환원되는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 농

우리 사회는 농민을 도와줘야 하는 사람들, 농촌은 체험하는 곳 정도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과 농촌을 ‘지원’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고, 농업을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으로 규정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성장’시켜야 하는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먹거리는 자유무역 체계에서 수입하면 그만이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에 대한 규제는 한없이 완화하면서 양곡의 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

\* 아스팔트 농사는 아스팔트가 깔린 도시에서 열리는 집회입니다. 이는 농민의 권리를 위한 직접적인 투쟁인 집회/시위가 본업이자 생계수단인 농사만큼이나 농민의 삶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도 이와 맞닿아있습니다. 또 선거 때가 되면 시민의 부담을 완화한다며, 식탁 물가를 잡겠다고 농산물을 수입해야 한다고 난리를 칩니다. 언제까지 농민이, 농촌이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할까요.

그렇게 쓸모없는 취급을 받고 있는 농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기후위기 때문입니다. 이상기후로 농사짓는 일이 더 힘들어지는 와중에 한살림 생산자 한 분이 ‘농업생산의 어려움을 왜 농민들에게만 부담을 지우냐’고 했습니다. 도시의 소비자들은 도시 생활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에는 침묵하면서, 농사짓기 위해 사용하는 화석연료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이상기후로 인해 고온다습해지면서 균 발생 빈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농약 한 방울 치지 않지만 깨끗하고 예쁜 과일을 먹고 싶어 합니다. 기후위기 속에서 무너져가는 농민들의 삶을 이해하는 대신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도 더 건강하고 예쁜 농산물을 찾는 것이 당연시되는 상황에서 ‘친환경 농업’은 농민들을 부담을 가중시키는 또 다른 수단이 됩니다.

## 자본에 포섭된 언어

예전에 한 친구에게 한살림에서 일한다고 하니 ‘거기 고급 마트 아니야? 유기농 그거 돈 많은 사람들이 먹는 거잖아’라는 말을 했습니다. 친구의 말을 들으니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 땅과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일이라고 설명하는데, 그런 생산자의 노동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유기농은 ‘부유한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고급 먹거리’를 생산하는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살림운동이 시작할 때 ‘유기농’은 그 자체만으로도 변혁적인 언어였다지만 현재 유기농은 ‘비싸고 좋은 먹거리’ 정도로 소비됩니다. 유기농이라는 운동의 언어가 ‘부유한 사람들의 것’으로 향유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산업문명을 반대하고, 생명농업을 통해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한살림도 자의든 타의든 산업문명에 적극적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 돈이 안 되는 일

농의 또 다른 어려움은 ‘돈이 안 되는 일’일 때 발생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토박이씨앗살림운동(토종종자 지키기) 의제를 담당하게 되어 토박이씨앗을 지키는 농부들을 만났습니다. 농부들에게 가장 애정 있는 작물이 무엇인지 여쭙보니 ‘자식들 중에 누가 제일 예쁘냐고 물어보는 것은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며 난처해하는 모습이 재미있기도 했고, 지금 사회에 자신의 노동의 결과물을 진실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노동이 있다는 것은 어쩐지 생소하고, 어색했지만 늘 동경하던 ‘주체적인 삶’의 모습에 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씨앗마저도 사고파는 상품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토종씨앗으로 작물을 길러 나누고, 또다시 씨앗을 채종하여 보관하고 나누는 일은 저에게는 매우 생소한 것이었지만 이런 노력이

참 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10년 이상을 우리 땅에서 자라온 씨앗은 아무 대가 없이 나누어져 누군가의 먹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노력이 시장을 만나면 '돈이 안 되는 일'로 치부됩니다. 자연의 섭리대로 농사짓고 씨앗을 거두고 이듬해 다시 심는 과정은 시장에 적합한 상품을 만드는 데에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토박이씨앗을 지키는 일이 점차 생계를 위한 농사에 밀려나고 있다며 더 이상 이어가기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시던 농부의 모습이 내내 마음에 남습니다. 또 다른 여성 농민은 토박이씨앗을 나누고 싶어서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꾸러미를 전달하는 사업을 진행했는데 1차 농산물이 소비자들의 식생활과 맞지 않아서 그만두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 **결국 시장으로 향하는 대안**

한살림은 2012년부터 인도의 농촌인 칸치푸람 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 농민들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가촉천민이라는 '닿아서도 안 되는' 천민으로 분류되어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칸치푸람 지역의 여성들은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 '토지 되찾기 운동'을 진행했고, 그렇게 되찾은 토지에 유기농업과 공동체 농업의 방식으로 삶의 터전을 가꾸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치적 자립을 위해 지방 의회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초 그들의 마을에 방문했는데, 자신들이 가꾸는 땅과 작물, 종자를 모아둔 종자은행, 공동체원이 함께 만든 천연비료를 보여주시면서 환히 웃던 모습에서 자부심과 단단함을 느꼈습니다. 유기 농사를 지으면서 화학비료가 가득한 농산물로 인해 위험에 노출되었던 아이들이 건강을 되찾았고, 늘 남성의 그늘 아래 있어야 했던 여성들이 주체적인 노동을 통해 가부장제의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이 살아가는 농촌에는 병원이나 학교 같은 인프라가 없어서 아이들을 도시에 보내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자부심과 단단함이, 화폐 가치로 치환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결국 그들의 대안을 일구기 위한 노동과 삶의 맥락은 모두 소거된 채 생계를 위해 시장을 향하게 됩니다.

### **자본에 포섭된 관계**

'그래도 돈이 있어야 먹고살지'라는 말은 아마 평생에 가장 많이 들은 말일 것입니다. 그쯤 들었으니 머리로는 알겠지만 심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안 되는 일은 쓸모없는 일로 치부되고, 결국 인간의 삶의 방향을 시장을 향하게 합니다. 시장에서 농민들은 '안전한 먹거리', '윤리적 소비' 등 소비자들의 선호에 맞는 생산 활동을 할 것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이 또 다른 농민에 대한 착취의 기제가 되듯 돈이 되어야 생계가 유지되는 세상에서 생산자들은 너무나도 쉽게 소비자의 언어에 종속됩니다. 한편 시장

에서 소비자는 적극적으로 주체적인 행위자로 보이지만 실상은 쏟아지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 속에서 내가 먹는 것이 어떻게 생산되었는지, 누군가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자기 주도권을 잃은 소비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렇게 생산자, 소비자 그 누구도 주체적일 수 없는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살림은 '생산과 소비는 하나'라는 가치를 지향하며 산업문명으로 인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가 분리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가 서로 다른 이해 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관계 맺음 혹은 종속된 관계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소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이용하는 고객으로, 생산자는 고객의 요구를 수행하는 수동적인 공급자로 여겨집니다.

### 안전한 먹거리 너머의 삶

생산과 소비가 하나가 되려면 농의 가치를 단순히 내가 소비할 먹거리에서만 찾지 말고, '안전한 먹거리' 그 너머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농촌에 사람이 보이면 우리가 그동안 먹거리를 위해 농민을 어떻게 억압해 왔는지, 도시에서의 안락한 삶을 위해 농촌을 어떻게 착취해 왔는지 보일 것입니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를 단일한 정체성으로 가두지 않고, 먹거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과정이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인식해야 합니다.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농민으로 대표되던 한국인 고령 남성만이 아닌 여성, 이주노동자, 청년의 존재도 드러날 것입니다. 가부장적인 농촌 문화에서 소외된 여성농민과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문제가 종종 언론을 통해 드러납니다. 생명의 공동체를 일구어 나가고자 하는 한살림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전업농이 아닌 반농반X라고 불리는 새로운 삶의 형태를 살아가는, 때로는 철없다 규정되는 청년들의 삶도 보일 것입니다. 농촌이 소비자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공간을 넘어 삶의 공동체로 인식될 때 우리는 그 안에 존재들을 인식하게 되고, 소외된 노동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에 저항하는 언어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안에 이런 논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 먹고사는 일로, 체제전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직접적인 관계 맺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만들어주는 관계, 누가 대신 해주는 관계가 아니라 삶의 필수적 요소인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농'을 소재로 여러 공동체에서 주체적인 관계들을 맺어나간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체제전환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먹고사는 일이 꼭 돈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사라져 가는 토종 종자를 지키며 먹거리를 나누는 농민이 있고, 삶의 자립을 위해 마을 공동체의 땅을 가꾸는 인도의 소농들이 있습니다. 시장의 기준에 미달되어 버려지는 농산물의 가치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고 먹거리를 나누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사례가 '쓸모 없는 일'이 되지 않고 당연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본의 논리가 자연과 가장 가까운 농촌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농민들의 삶을 집어삼키기 전에 지금의 정치의 언어, 자본의 언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삶의 주체로 살아가고자 하는 농민이 외롭게 시장을 향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농은 우리 삶에 가장 기본이 되는 먹고사는 일, 산업문명이 망쳐놓은 자연과 생태계를 복원하고 가꾸는 일을 합니다. 그렇기에 농의 위기는 우리 삶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삶이 우리가 바라는 체제전환의 모습이라면 땅과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가꾸는 농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마음을 모으는 일이 체제전환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 지금 여기, 체제전환 페미니즘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선언은 ‘젠더갈등’의 격화를 통해  
한국사회 젠더 모순을 봉합하고

차별과 억압의 구조를 삭제하려는 정치의 자원이 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년 간 이어진 신자유주의 시기

가족-여성노동력 육성 정책이었던 ‘양성평등’, ‘일-가정양립’ 구도 속에서

젠더불평등에도 생산-재생산, 남성-여성, 계급-정체성 등 이분화된 분할통치의 양상에도  
효과적으로 개입·도전해오지 못한 운동의 곤경이기도 하다.

지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여성’ 정체성의 복원 혹은 소수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개별화를 넘어

신자유주의 국가의 통치전략가 만들어내는 차별과 억압을 정치화하고,

차별철폐로 나아가는 페미니즘 운동의 전망과 실천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이다.



가로지르길4~5  
문자통역 QR코드

## 세션 진행

사회 : 류민희 (플랫폼c)

발제 : **편입과 분할의 정치를 넘어 구조적 차별에 맞서기** -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토론1. 닷별 (한국성폭력상담소)

토론2.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토론3. 정은희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준비팀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장애여성공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플랫폼c, 한국성폭력상담소



# 편입과 분할의 정치를 넘어 구조적 차별에 맞서기

몽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canicular67@gmail.com

## 1. 무력감을 강제하는 시대, 지금 여기를 돌아보기

한국사회에도 여성운동에도 중요한 분기점을 시사하는 2015년 ‘페미니즘 리부트’는 곧잘 ‘페미니즘 대중화’라는 분석과 동의어로 사용되곤 한다. ‘대중화’라는 의미망 속에 자리한 페미니스트 주체 및 집단은 온라인을 중요한 정치적 거점으로 삼았던 1990년대 영페미니스트의 계보를 잇는, 여성 대중운동의 새로운 활력이자 첨예한 정치적 전선으로 여겨졌다. 이후의 페미니스트 요구의 흐름을 떠올려본다면 이러한 진단이 틀린 것만은 아니다. 촛불과 함께 등장한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라는 외침은 87체제가 남긴 ‘젠더 없는 민주주의’를 갱신할 것을 요구했다. 2016년 강남역 여성살해사건을 지나 ‘페미니스트 대통령’ 시대의 허상 속에서 폭발한 #미투(Me Too) 운동, 혜화역 시위는 여성 혐오를 방치·허용한 국가에 도전했다. 2019년 낙태죄 폐지 투쟁에서 ‘이제 우리는 결코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다짐은 국가의 젠더화된 인구 통치의 종식을 예고하기도 했다. 성평등(gender equality)은 압축적인 사회적 요구로 등장했고, 20대 대선을 경유하며 ‘젠더’는 최초로 제도정치의 전면에 등장했다.

이 모든 것 이후에 갑자기 당도한 곳이 ‘백래시’(Backlash)일까. 여성들의 노동과 삶을 위협하는 ‘페미 색출’은 불공정에 분노하는 정치적 소비자 운동으로 탈색되고, 안티페미니즘으로 무장한 정치권은 그 어느 때보다 페미니즘에 대한 왜곡과 폄훼, 공격을 일상적인 풍경으로 만든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선언은 '젠더 갈등'의 격화를 통해 한국사회 젠더 모순을 봉합하고 차별과 억압의 구조를 삭제하고 있다. 성차별에 대한 분노는 새로운 정치의 재구성을 향한 공동의 토대로 수용되기보다 혐오와 적대의 범람으로 표지된 채 '페미니스트 번아웃'(이정연, 2023)이라는 사회화되지 못한 고통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페미니즘과 여성운동은 이제 보수주의의 회귀라는 정치적 지형과 맞물리면서 신가부장적 가치로 무장한 남성들, 사회적 약자로 전화한 청년세대들 그리고 페미니즘을 혐오하거나 관심 없는 여성들, 새로 부상하는 견고한 보수주의적 여성 집단들과의 대치 국면에 놓여 있다. 이들과 다시 싸워나가기 위해 자기 방어를 넘어서는 진정한 성찰과 미래 지향적 대안 제시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에 봉착해 있다.”(강이수, 2013: 236)

위 문단은 '페미니즘의 위기 징후'가 놓인 2013년의 사회상을 짚은 10여 년 전 글이다. '페미니즘의 위기'라는 진단은 언제나 끊임없이 갱신되어온 페미니즘·운동의 역사 속에서 등장했다는 점을 떠올린다면 변화에 대한 기대를 내포한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이 2013년과 얼마나 다른 모습인가를 떠올려보기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무력감을 동반하기도 한다. 지난 10년 사이 우리가 무엇을 함께 진전시켜왔는지, 지난한 고군부투 속에서도 무엇에 도전해오지 못했는지를 고통스럽게 성찰할 시간이라는 점을 감각할 뿐이다. 이런 현실에서 지금 여기, '체제전환 페미니즘'은 우리에게 가능성과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말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다시 '페미니즘 리부트'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손희정은 2015년 '#나는페미니스트입니다'로 가시화된 대중화의 흐름을 “각자도생의 시대에 '편'을 조직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으로서 등장했던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질문”한 바 있다(손희정, 2015: 46). 그리고 이는 '공동의 것'(common)을 기대할 수 없는 사회, 사회집합체는커녕 '결'이 파괴된 개인화 속에서 서로를 연결하려 했던 주체들이 놓인 역사적 경로를 다시 질문하게 한다.

1997년 IMF 외환위기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맞물려 한국사회가 신자유주의적 구조 개편을 본격화하면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된 기점이다. 80년대 정치적 민주화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여성의 시민권을 제기하며 여성운동은 '평생평등노동권' 및 성평등 입법에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는 여성 우선해고와 여성 비정규직화, 여성 가정주부화라는 젠더화된 형태로 구조화되었다. 1990년대 중반 영페미니스트들은 제도적·절차적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소비자본주의가 급속하게 성장한 시기에 등장했다. 이 집단은 운동의 초점을 법제화를 통한 여성의 시민권 확보에서 문화정치로 이동시키며 여성운동 내부의 차이와 다양성을 가시화했다.

하지만 이 시기는 또한 경제성장과 대중문화의 호황 속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와 시장 매커니즘이 '경제'를 넘어 모든 영역과 관계를 규제하는 지배력을 넓혀간 때이기도 하다. 그리고 2008년 미국에서 시작해 세계를 휩쓴 새로운 금융위기는 한국사회의 노동시장 위기를 20~30대 여성

들에게 집중시키며 완충되었다(배은경, 2009). 일면 성평등해 보이는 맞벌이 이성에 핵가족규범 속에서 신자유주의 시대 경쟁력을 갖춘 '노동자 되기'는 당대 실업과 고용불안의 타격을 껴안은 젊은 여성들의 불안정한 생애경로를 보여준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극심해진 양극화와 삶 전반의 불안정성이 더 크게 찾아왔다. 전 지구적으로 경제위기를 몰고 온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와 함께 포스트-신자유주의 시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이명박 정부의 '공생발전'이나 조선일보의 '따뜻한 자본주의'는 시장질서의 지속가능성을 연장시키면서 불평등에 대한 대중의 문제제기를 진압하고 개별화하는 신자유주의 '관리자'로서 국가와 자본의 변화를 대변한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반페미니즘적 선동이나 백래시, 젠더 갈등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언제나 평등을 둘러싸고 '페미니즘의 목표는 시효를 만료했다'는 포스트-페미니즘의 전유과 함께 출몰했다. 대규모 구조조정을 가져온 IMF 경제위기는 '남편 기살리기'와 '주부 전문직 되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했지만, '부권상실'을 강조하는 가족담론 하에서 위기는 남성화되었다(박혜경, 2011). 세계 금융자본주의의 위기는 가족·계층·학력자본을 통해 불안정성을 돌파할 수 있었던 일부 여성들의 생애경로를 '알파걸' 담론을 통해 이상화했고, 젠더 불평등을 젠더 갈등으로 만들면서 동시에 여성 내부의 격차를 비가시화할 수 있었다.

세계 금융자본주의의 위기는 가족·계층·학력자본을 통해 불안정성을 돌파할 수 있었던 일부 여성들의 생애경로를 '알파걸' 담론을 통해 이상화했고, 젠더 불평등을 젠더 갈등으로 만들면서 동시에 여성 내부의 격차를 비가시화할 수 있었다. 바로 이러한 신자유주의 젠더·가족 질서의 변동 속에서 또 다른 여성 주체들이 부상했다. 노동시장과 일자리, 가족이나 사랑, 정치·경제·문화적 지위 등 그 어떤 곳에서도 희망이 없는, 피할 곳이라곤 연애·섹스·결혼·출산 남아 있지 않은, 무한경쟁과 '자기 경영'의 압박 속에서 주체적인 선택을 강요받는 여성들이 '편'(여성)을 만드는 것은 일종의 저항이자 적응과 생존의 자구책이었다. 페미니즘 리부트가 "신자유주의 시대 포스트-페미니즘이라는 판타지의 실패가 가져온 아주 현실적인 조건으로부터 등장한 운동"이라는 분석은 포스트-페미니즘이 약속하는 '개인'으로서의 성공과 행복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현실의 불평등과 위험을 대체하는데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여성과 '함께' 싸울 수 있는 공동체로서 페미니스트 정치학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다. 체제전환 페미니즘은 바로 그 기대를 부상하게 만든 역사적 조건, 즉 자본주의 체제와 그 작동에 대항하는 담론과 실천을 제대로 형성해오지 못했다는 성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여성'의 이름으로 싸운다는 것의 전망은 페미니즘 운동에서 우회할 수 없는 가장 첨예한 쟁점을 마주하게 한다. '젠더'가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체계 하에서 '여성' 정체성이 다시금 강화되고, 그래서 성평등이 남성과의 관계에서 '동등대우'라는 자유주의 질서로 구축되어 있는 현재, 페미니즘은 '피해자로서 여성의 몫'에 대한 요구를 넘어설 수 있을까?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는 우리가 페미니즘이 가리키는 ‘평등’, ‘사회정의’, ‘해방’을 이해하는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우리는 자본주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한 그 착취의 대상에는 ‘차별’이 없다는 자본주의의 오랜 신화 속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쟁에 의한 선택과 도태를 전제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유일하게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파이’라는 권력과 자원을 차지할 기회를 얻는 것이 ‘평등’이라는 신자유주의 환상에 놓여 있다. 남성이 가진 자원과 권력을 여성이 차지하는 것이 성평등 전략으로 채택되고 여성의 이해(interests)에 부합하지 않거나 방해한다고 여겨지는 다른 소수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성평등과 양립할 수 있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젠더가 남성과 여성이라는 ‘양성’의 실재로 여겨질 때 이러한 인식은 힘을 더욱 얻는다. 또한 권리 실현을 비교집단 간 ‘동일한 처우’를 중심에 두고 특정 집단을 본래 구분되는 것으로, 대립하는 관계로 설정하는 자유주의적 평등 개념의 한계 또한 영향을 미쳐왔다(김지혜, 2018). 한국사회의 법체계에도 녹아들어 있는 전통적인 ‘평등’ 개념은 차별의 합리성을 판단하기 위해 비교집단을 설정하도록 하고, 이는 차별과 불평등을 다양한 차원에서 포착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그것의 구조적 한계를 은폐한다. 차별과 불평등의 ‘구조’는 소거된 채 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이 부각되는 현재의 지형은 우리가 살아가는 체제의 신화와 환상 사이에 갇힌 페미니즘 기획의 질곡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체제전환 페미니즘의 필요성은 (체제전환을 ‘위한’ 페미니즘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나 올바른 차원에 국한될 수 없다. 지금의 체제는 여성과 결부된 ‘타자들’의 삶을 방탄으로 두르면서 모두를 ‘타자’로 만들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현재의 질곡을 벗어나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의 해방 기획을 다시 세움으로써 이러한 착취와 폭력을 끝내야 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 페미니즘의 갈급하고 긴요한 과제이다.

\* 니나 파워는 이윤이 창출되고 가치가 축적되는 한 노동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여성·흑인·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것이 실익이 없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신화라는 점을 짚고 있다(니나 파워, 2018). 신고전주의 경제학이 전제하는 것처럼 자본주의 경쟁체제가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합리적인 대우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는 신화이며, 오히려 자본주의는 ‘사회적 지위’를 계속 분할하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통해 지속되어왔다. 이러한 신화는 한국사회에서도 ‘구조적 성차별’이 부정되는 강력한 조건이다. 한 예로 20년 이상 대리 직급에 머물렀던 여성노동자의 성별·학력 차별 경험은 ‘인사평가, 교육내역, 승진시험 점수, 외국어 성적 및 상위직급 업무 수행 가능성, 중장기 성장 가능성, 업무성과 및 역량 등’이라는 중립적·합리적 승진 평가 기준에 의해 부정당했다. 하지만 이러한 ‘합리성’이 바로 ‘자본주의 정산’임은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성이나 고졸이라는 점은 능력과 달리 승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합리적인’ 요소로 여겨지지만, 성별·학력과 능력을 등치시키며 저임금 구조에 배치하는 것은 노동시장 통치 전략의 핵심이다. 해당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극심한 성차별 관행’으로 판단해 적극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의견표명 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 2. 지금 여기, 체제전환 페미니즘의 문제설정 : 반자본주의·반체제 운동으로서 페미니즘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재)쟁점화된 페미니즘의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여성 안전’과 ‘권력’(혹은 젠더 권력관계에서의 주체성)으로, 둘은 독립적이기보다 상호 밀접하게 연관된다. 국가가 최소한의 안전마저도 보장하지 않을 때 젠더 권력관계 하에서 개별적이면서도 집단화되어 나타난 주체성은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는 전략이며, 이때 안전 확보는 자신의 자아 혹은 삶을 통치하는 ‘관리자’가 되어 젠더 권력관계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미투, 동일노동 동일임금, 탈코르셋, 4B(비연애·비섹스·비혼·비출산) 수행, 유리천장 깨뜨리기(자기계발과 자아실현을 통한 경제적 성공) 등 주요 흐름은 익숙하면서도 낯설다. 이는 전통적인 페미니즘의 성평등 의제의 연속선 상에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정의를 향하는 성평등 기획과 긴장 혹은 경합 관계에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적으로 재구성된 ‘여성’과 페미니즘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라면, 지금의 문제설정 혹은 의제들이 폭로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인지, 또 바꿔내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를 짚을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이래로 신자유주의 경제 원리를 사회 모든 영역에서 관철시키고 재구조화 하려는 흐름은 한국사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서구에서는 전후 복지국가 체제와 이상을 통해 이와 경쟁하는 구도를 가지기도 했다면, 또한 탈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동반된 사회·경제적인 변동으로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에 대응하는 재편 논의 또한 계속 이어졌다면, 한국사회는 전혀 다른 토대 위에 있는 듯하다.\*\* 하지만 현재 자본주의 체제에서 한국사회의 ‘사회적 위험’ 역시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가족체제 및 젠더라는 키워드를 빼놓고 분석할 수 없으며, 여기에서 페미니즘이 봉착한 딜레마이기도 한 ‘탈시장화와 탈가족화가 동시에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주요하게 등장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부분에서는 거칠게나마 크게 사회재생산 위기, 양성평등의 실현불가능성, 젠더폭력의 프레임라는 세 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체제전환의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 1) 사회재생산 위기 : 생산-재생산 체제의 재편을 페미니스트 사회정의로 구체화하기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에 다시금 회자되었던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선언은 (단순히 섹슈얼리티에 대한 문제제기만이 아니라) 젠더를 고려하지 않는 정치경제학을 비판하며 등장했다.

~~~~~  
** 물론 서구에서도 ‘완전한 복지국가’, ‘평등한 복지국가’의 이상은 제대로 실현된 적 없으며 복지국가 체제의 비효율성 (개인의 국가 의존)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 하에 신자유주의가 더 심화되었다는 평가도 가능할 테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한국사회가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추진된 경제노동 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의 모순으로 인해 복지국가의 경험을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는 점, 그 속에서 ‘평등’이나 ‘정의’가 국가 차원의 이상으로 설정되고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방향으로 인식되지 못했다는 점을 차이로 규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성의 노동을 정채경제학의 틀에 위치시키고 사회불평등을 부정의로 해석하면서 ‘정의’로 확장시킨 페미니즘의 역사를 압축하고 있다. 이는 가사노동에서 시작해 섹슈얼리티, 출산과 양육, 돌봄과 사회화, 세대의 연결 등 삶의 전반을 조직하는 노동으로서 사회재생산 노동을 주변화해 온 체제를 비판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또한 공사영역 분리와 함께 사회재생산 노동이 가족이라는 자연화된 ‘사적 영역’의 여성에게 전가되면서 비가시화·평가절하 되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재생산 관련한 페미니스트 비판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가족을 통해 생산-재생산을 결합시키면서 성별분업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 경제적 생산이 의존하고 있는 사회재생산은 자본주의 작동에 필수적인 축임을 밝혀 왔다. 이는 남성 생계부양자를 중심으로 한 가족임금 체계에서 젠더 불평등이 분배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의 격차와 시민적 권리의 제약 및 박탈이라는 차원에서 경제·사회문화·정치적 불평등이자 부정의임을 밝히는 작업이기도 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의 ‘돌봄 긴장’이 자본주의에 내재한 생산-재생산의 모순을 첨예하게 드러내는 현상이며, 신자유주의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가 변혁되어야 한다는 낸시 프레이저(2023)의 지적은 정확하다. 하지만 현재 한국사회에서 사회재생산 위기에 대한 대응은 가족체제에 기반한 자본주의의 착취와 노동의 ‘여성화’에도, 사회정치적 권리의 박탈에도, 삶의 유지를 개인화하는 위험에도 적절히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에 사회재생산 위기가 두드러지고 이에 대한 개입이 강조되는 배경은 대대적인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과 고령화, 그에 따른 돌봄 공백과 돌봄 긴장의 증가다(황정미, 2010).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언제나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의 결과로 말해지지만,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증가한 노동의 유연화, 비정규직화, 노동력의 지구적 이동이라는 거시적 흐름은 비가시화된 채다. 이는 단순히 여성의 노동이 증가한다거나 여성이 임금노동과 재생산노동이라는 이중과업의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체제가 ‘여성화’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남성이 유급노동을 담당하고 여성이 가사·돌봄노동을 전담하는 성별분업의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의 약화나 성평등의 진전을 의미할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의 환상이 깨지면서 확대됐고, 이제 여성의 경제활동은 가구소득을 떠받치는 필수적인 기반이 되었다.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오래 전부터 여성 노동인구 내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이라는 특징으로 짚어진 바 있다(신광영, 2013). 저소득층 여성의 소득은 가구소득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지만, 적절한 가구소득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고소득 계층의 맞벌이 동질혼은 가구 간 소득불평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의 연구는 이러한 경향이 크게 나아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제위기 이후에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고소득 계층의 맞벌이 비중 증가, 계층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 확대는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양상·의미·성과가 계층에 따라 이질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그리고 이는 돌봄을 둘러싼 가족 변동이 ‘가장 근대

적인 불평등의 요소'가 될 것임을 예고한다(박중서 외, 2020). 경제위기 이후 남녀임금격차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소득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남녀임금격차의 감소는 여성 약진이 아니라 남성 노동계급 몰락의 결과였다는 점(김영미, 2009)을 왜 기억해야 할까. 저임금 노동시장의 확대는 여성 내 계층화와 양극화, 가구별 소득불평등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수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여성의 생애경로에서 불가피한 임금노동과 돌봄노동의 지속과 이중부담을 증가시키고, 여성의 지위는 더 취약해지는 결과를 낳는다. 그동안 사회재생산 위기에 개입하기 위한 국가 정책은 주로 유급노동 여성이 국가나 시장의 서비스를 통해 돌봄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탈가족화'를 향해 왔다. 하지만 탈가족화가 자연스럽게 '성평등'을 향할 것이라는 기대는 사실 착시에 불과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재생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탈시장화'가 주요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시장을 통하지 않고서, 지불한 만큼 재화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는 시장원리에 구속되지 않고서, 돌봄과 같이 삶의 유지에 핵심적인 권리를 사회권으로서 확보할 수 있는가? 기존의 가족 기능들을 시장에서 재화서비스로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외주화 할 수 있는 계층은 한정적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방침을 표방한 바 있고, 이러한 기초가 비단 현 정부만이 아니라는 점 또한 문제다. 이미 가사노동이 각종 플랫폼으로 시장화·외주화되어 있다면, 돌봄노동은 거대한 시설화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이 유급노동을 통해 남성생계부양자의 피부양자가 아닌 독립적인 시민으로서 노동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을까? 돌봄을 위한 노동형태 및 노동시간 조절은 특히 저소득층 남성에게 급여손실로 인한 가구소득 하락의 부담이 큰데, 남성의 돌봄권이 보편적으로 확보되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은 '한남' 개인의 문제인가? 저임금 노동자들은 임신·양육·출산에 매우 적대적인 노동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가족 돌봄 시간, 업무 조정 등에서 남녀 모두 돌봄 책임과 관련한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또한 돌봄 역할을 수행하는 남성들에 대한 적대성과 성희롱 역시 높게 나타난다(김영미, 2020). 게다가 저소득층 여성은 돌봄으로 인해 다시 가족 내로 회귀하는 '가족화'의 효과가 뚜렷하고, 일방향의 탈가족화는 기존의 계층화를 유지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황은정, 2023). 이는 사회재생산 위기에 대응하는 제도가 기존의 성별분업 이데올로기, 불안정 노동시장 구조를 그대로 승인하면서 젠더와 계층이 교차하는 불평등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가는 가족제도가 자본 축적의 도구로 충실히 활용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고 있다. 시민 개개인들이 겪는 사회재생산 위기의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가족 개념과 가족제도의 재정립이 필수적이다. 가족을 인구통치와 경제성장의 도구가 아니라 시민들의 보편적인 친밀성과 돌봄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고서 현재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이성애-핵가족을 중심의 가족제도는 일하는 여성의 증가에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는, 그래서 늘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가족정책을 고수해왔다. 동일노동 동일임

금이러는 요구는 더 이상 대다수의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불안정 노동시장의 구조를 보지 못해서일까. 초저출생 사회를 만든 4B의 수행은 자본주의-가족체계의 모순을 직감한 여성들이 친밀성을 포기하며 개인화의 위험을 감수하는 생존전략에 가깝다.* 게다가 자본주의 하에서 국가가 가족의 위계를 구성하고 가족구성원들에게 역할을 강제하며 위기의 책임을 가족과 개인에게 떠넘겨왔다는 점을 제기한 것은 근래 일부 여성 집단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족이 사회구조적인 불평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바로 가족실천과 시민적 유대를 가로막는 가족 규범과 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가족을 구성할 권리’라는 틀 속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했다(김순남, 2022).

장시간·저임금·불안정 노동구조를 유지시키는 자본주의 체제, 이를 떠받치는 이성애-핵가족 체제를 전환해야 한다는 페미니즘의 요구가 사회재생산 위기에 대한 개입으로서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재생산의 문제를 가족에게서 개인으로 이동시키는 ‘가족 없는 자본주의’^{**}는 돌봄 공백의 차원이 아니라 생존이 불가능해진 시대에 사회구성원 개개인들의 고통을 한계까지 밀어붙일 것이다. 사회재생산 위기에 개입할 긴급한 필요는 결국 생산-재생산 관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페미니즘의 요구를 세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 불안정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대다수 여성과 주변화된 사람들은 중첩된 부담 속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삶을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노동·돌봄의 권리를 제기하고 사회적으로 획득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하는 것은 중요한 경로이다. 또한 재생산 활동을 보편적인 권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친밀성과 돌봄이 허용된 유일한 장소로서 가족을 넘어서려는 운동과의 결합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 젠더, 계층, 인종과 무관하게 누구나 안정적인 노동을 지속하면서도(거부나 파업으로 유예시키지 않고) 재생산 활동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차별과 배제 없는 새로운 ‘의존’ 관계를 구상하고 배치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2) 양성평등의 실현불가능성 : ‘위치’를 체제전환 운동의 정치적 토대로 급진화하기

그동안 페미니즘의 목표로 설정해 온 ‘성평등’이 왜곡되고 있다는 진단은 낯설지 않다. 적어도 ‘양성평등’을 필두로 한 국가정책 차원에서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의 이해를 동등하게 또한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며, 국가와 행정의 역할은 양성 간의 형식적인 균형을 조율하는 것으로 의미화되

* 장임다혜(2007)는 국가가 사회재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중의 전략을 활용해 왔음을 밝힌 바 있다. 하나의 축은 호주제 폐지나 친양자제도 신설 등과 같이 실제 가족의 변화에 따라 가족제도·정책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이며, 다른 축은 이혼숙려제와 같이 변화하고 있는 가족을 기존의 형태로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하지만 생활공동체가 아니라 가부장적 부계혈통주의 가족제도는 근본적인 모순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 조은주(2022)는 자본주의의 조직 원리에서 가족을 삭제한 후기 자본주의의 속성을 ‘가족 없는 자본주의’로 칭한다. 이는 가족의 소멸 혹은 해체가 아닌 “사회를 어떻게 재생산할 것인가”, “사회는 어떻게 재생산되는가”라는 문제 자체를 삭제시킨 자본주의로, 한국의 저출생 현상을 이러한 자본주의의 결과로 본다.

어 있다. 이에 따라 ‘공정’이 주요한 관점으로 등장한 이래 성평등은 여성의 이익에 부합할 뿐 남성에게는 차별적이므로 불공정하다는 주장, 그래서 성평등을 주창하는 페미니즘은 여성우월주의에 다름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바라보는 이른바 한국형 페미니즘으로서 ‘젠더 이퀄리즘’이 남성계(manosphere)에서 창조된 배경이다. 호모소셜 하에서의 젠더는 마찬가지로 여성 집단을 경유해서 왜곡되었고,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본질주의적 토대가 다시금 등장하기도 했다. 반페미니즘 정치활동의 증가는 여성정책의 목표와 대상을 남성으로 복원시키는 관료적 반동으로 이어졌고(백미록, 2023), 타자를 적대 관계로 설정하는 ‘여성’ 정체성은 억압 올림픽(oppression olympics) 하에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권리 체계가 여성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극우 보수개신교와 접촉했다.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 차이를 초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관계 하에 규명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원적 젠더 구조를 강화하며 ‘젠더 갈등의’ 진원지가 되었다.

성평등이 반동과 질곡의 지원지가 된 것은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애초에 성평등을 의미하는 Gener Equality의 ‘젠더’가 페미니즘 운동의 법제도와 과정에서 또 국가와의 협상 속에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원적 구도의 ‘양성평등’으로 설정되면서 이어진 문제의 한 양상이기도 하다.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는 젠더 관점을 통해서 주류 관점에 녹아 있는 중심-주변의 위계를 바꾸기 위한 변혁적 전략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정책’으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특히 세계화 시대에 자본의 경영혁신을 위한 도구로서 ‘가족친화정책’이 등장하고, 저출생-고령화라는 사회재생산 위기에 대한 개입으로서 일-가족 양립 정책이 확대되며 여성정책의 내용이 가족기능 강화 정책으로 흡수되기 시작했다. 출산·양육이 사회적 책임 강화는 ‘가족친화 양성평등’ 구호 아래 여성과 재생산노동을 다시금 연결하고, ‘일-가정 양립 가능한 사회시스템 구축’을 통해 여성의 이중과업을 비가시화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성주류화, 양성평등, 일-가정 양립이 결합되는 과정을 통해 발생한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그 정책의 대상으로 설정된 대문자 ‘여성’(Women)이 자본주의-가족질서 변동에 따라 지배적이고 규범적인 여성 지위로 대표되었다는 점이다.*** 일-가정 ‘양립’은 도달 가능한 여성의 현실이 아니라 언제나 도시 거주, 고소득·중산층, 이성에 핵가족, 내국인이라는 특권화된 소수 집단이 실현할 수 있는 이상에 가까웠다. 사회재생산 위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는 여성 내부의 차이, 즉 다층적인 억압의 체계와 형식을 비가시화하고 억압하면서 젠더 정의의 급진적 전망과 가능성을 축소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의도치 않은, 하지만 매우 경로의존적인 과정은 다시금 중심-주변의 위계를 구성하며 페미니스트 정치의 모순적 지형을 만들었다.

*** 이 글에서는 ‘양성’으로서 설정된 젠더의 문제를 ‘여성’이라는 추상적 정체성의 재현-대표성 문제, 이로 인한 여성 내부의 차이를 억압하면서 오히려 젠더 정의를 축소하는 결과에 집중해서 다룬다. 섹스-젠더-섹슈얼리티로서의 ‘성’ 범주와 그 구체적인 이데올로기적 효과에 대한 논의는 나영, 수수(2019), 나영, 나영정(2021)을 참고하면 좋겠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최근에 쟁점이 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이슈다(몽, 2023). 돌봄노동이 보다 가난한 국가 출신의 이주 여성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상을 미국의 사회학자 흑실드는 ‘전지구적 돌봄 사슬’(Global Care Chain)로 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사회학자 오가와 레이코(2014)는 동아시아의 경우 지역 및 국내의 젠더, 계급, 민족에 따라 돌봄 사슬이 구성되는 독자적인 전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이를 ‘지역적 돌봄 사슬’(Regional Care Chain)로 바라본다. 한국사회 역시 돌봄 공백의 시기마다 주변화된 특정 여성 집단에 돌봄노동이 외주화되었지만, 동아시아 자본주의 흐름 하에서 성별분업체계는 고착되거나 새로운 형태로 강화되어 왔다. 이 과정은 정확히 국가가 농촌-도시 격차, 빈곤층-중산층 계층화, 노동시장-가족 갈등 사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했던 흐름과 맞닿아 있다.

1960~70년대 산업화 시기의 ‘식모’, 1980년대 중년의 도시 빈곤층 기혼여성이 담당했던 ‘파출부’라는 비공식 가사노동자를 통해 일반 가정의 여성은 유급노동 시장에 참여하고, 남성은 가족 내 성별노동분업 압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는 ‘돌봄의 젠더화’가 구조적으로 자리 잡는다. 특히 ‘파출부’ 노동을 담당했던 여성들은 1990년대 외환위기를 겪으며 돌봄을 포함한 저임금·불안정 일자리로 대거 진입함과 동시에 불안정해진 가족 내에서 증가한 재생산노동을 이중으로 감당해야 했다. 게다가 이주여성의 이동과 함께 재생산노동이 ‘외국인’에게 외주화된 형태로 확장된 1990년대 중반 이후, 결혼이주여성은 가족경제 내에서, 재중동포는 비공식 돌봄시장 내에 자리를 잡아 갔다. 2002년 재외동포 취업관리제와 2007년 방문취업제 시행, 2010년 재외동포 취업 제한 완화까지 돌봄서비스 시장에 ‘의사소통 가능’한 ‘조선족 이모’들이 대거 자리한 배경에는 비자 정책을 통해 외국인 인력을 수급·배치·관리해 온 정부 정책이 있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보육 및 노인 돌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회서비스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돌봄시장에서 보조적인 노동력이 더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내국인·빈곤층·중장년 여성들은 저임금 돌봄시장에, 같은 민족이지만 내국인과 차별화된 ‘외국인’으로서 재중동포는 보다 더 주변화된 돌봄시장에 배치된다. 그리고 대다수의 내국인 여성들이 이들의 돌봄노동에 의존하며 여성 내부의 ‘계층화’ 또한 재구성되고 구조화되었다.

돌봄 사슬이 구축되어 온 과정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필요한 여성이 누구인지를 묻기보다, 자연스럽게 ‘여성’의 ‘사회적 요구’로 탈바꿈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게 해준다. 일-가정 양립을 모든 여성의 보편적인 문제로, 타자화된 돌봄노동을 모든 사회구성원의 보편적인 욕구가 된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노동시장 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및 지위 향상이라는 ‘성평등 가치’와 성별분업체계의 재생산 및 강화라는 ‘돌봄 부정의’를 동시에 옹호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이게 할 뿐이다.

지난 수십 년 간 가족-여성노동력 육성 정책이 양성평등과 일-가족 양립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성평등’의 이상을 채워왔다면, 이제 그 성평등의 이상은 다시 채워져야 한다. 이때 체제전환 페미

니즘의 자원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권력구조의 작동 양식에 우리의 시야를 돌리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다. 여성 내부의 ‘차이’ 혹은 ‘다양성’은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삭제할 때 ‘트랜드’ 혹은 ‘틈새시장’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언어가 되지만, 역사적으로 구조화되고 축적된 위계 구조를 폭로하는 위치로 바라볼 때 주체화의 거점이 될 수 있다. 그 위치를 함께 구체적으로 해석하려 할 때 자본주의 체제가 여성 내부의 격차를 체계적인 방식으로 발명하고, 분할하고 또 동시에 결합하면서 유지해온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위치를 함께 변화시켜나가고자 할 때 공통의 정치적 요구들을 모으고 집단적인 움직임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위치도 조정되고 갱신될 수 있다. 이는 위계를 대칭으로 위장하면서 역압을 은폐하지 않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페미니즘이 때로는 기존 체제의 질서와 규범을 강화하는 체제의 일부 일 수 있다는 성찰과 긴장이 페미니즘의 변혁적인 전망을 더 넓고 깊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한다.

3) 젠더폭력의 프레임 :

차별철폐, 자본주의 젠더체제에 저항하는 투쟁으로 가시화하고 조직하기

페미니즘 리부트에서 ‘여성 혐오’에 기반한 젠더폭력이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젠더 질서, 젠더 권력관계에 대한 도전은 ‘젠더폭력’을 중심으로 가시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젠더폭력에 대한 분노는 피해자인 여성의 위치를 고정시키는 ‘안전’에 대한 요구로 수렴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전에 대한 요구를 정치적 쟁점에서 탈각시킨 채 정치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국가권력과 한국사회의 지배 규범에 대한 분노였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

한국사회에서 여성 혐오와 젠더폭력의 해소방안이 ‘성평등’으로 구축된 데에는 #미투 운동이 일터에서의 성적 괴롭힘과 착취, 폭력에 대한 투쟁으로 시작되었다는 조건이 있다. 흔히 갑질로 알려진 ‘직장 내 괴롭힘’은 여성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 또는 굴욕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노동자 모두에게 치명적이다. 하지만 위계적 조직구조가 성차별을 발생시키는 주요 기반이라는 관점은 그 공간이 젠더와 섹슈얼리티로부터 애초에 중립적인 공간인 것처럼 여겨지게 한다. 오히려 노동환경으로서 조직구조는 이미 여성의 노동과 여성노동자를 관리하는 성별화 과정(gendering process)이 진행 중인 장소이며, 섹슈얼리티를 통해 위계를 확인시키는 과정이 지속되는 장소이다. 적지 않은 여성들이 젠더폭력과 정치경제적 불평등을 연결하고 간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노동체제를 탈젠더화된 것으로, 차별과 억압이 없는 합리성의 공간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노동체제가 구조적 성차별을 유지해온 전략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지금 젠더폭력 대응의 중요한 과제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젠더폭력은 ‘차별에서 비롯되며 다시 차별을 공고히 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점’이 평등과 인권의 관점에서 제기되어야 한다는 것과는 같은 의미이다(김정혜, 2021). ‘젠더에 기반한 폭

력'(gender-based violenc)은 여러 투쟁들을 통해 가시적이고 대중적인 언어가 되었지만, 젠더폭력이 '성차별적 폭력'(gender-motivated violence)라는 핵심적인 토대는 그만큼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ILO(국제노동기구, 2019) 190호「일의 세계에서 폭력과 괴롭힘」협약에서 주요하게 짚고 있는 평등과 반차별의 권리는 존엄성의 훼손이 개별 노동자에 한정되지 않으며, 존엄성의 훼손을 가능하게 하는 차별의 구조 및 사회문화적 규범(인간의 가치에 대해 위계를 세우려는 모든 시도를 포함)을 주요하게 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차별과 불평등을 폭력과 괴롭힘의 주요 요인이자 배경으로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역사적으로 확립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차별과 불평등의 조건에 더 편중되어 있는 취약한 집단을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차별과 불평등을 유지시키고 재생산하는 구조(젠더 고정관념, 다층적 형태의 차별, 불평등한 젠더 권력관계)와 같은 근본적인 원인을 포괄적·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준다.

하지만 젠더폭력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개입된 당대의 지배 규범과 국가권력은 한국사회에서 폭력과 차별의 관계가 연결되기 어렵게 결정적인 요인이다. 성폭력특례법(2010), 여성폭력방지법(2018)은 젠더폭력의 구조적 특징보다 '성'적 폭력 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 관점이 담론의 중심에 섰다. 가정폭력방지법(1997)에서 확연히 드러나듯이 젠더폭력의 문제설정은 여성의 시민적 평등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보호 및 유지'를 중심으로 관철되었다(가정폭력이 본격 의제화된 1980년대 이를 지칭하는 언어는 '아내구타'였다). 2015년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재탄생하고, 여성부의 차별시정정책은 통합적 차별시정 정책을 수립한다는 명분하에 국가인권위원회로 통합·이관되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기약도 없이 사라졌다. 2015년 여성부-여성가족부의 개편은 부처 존립의 이유를 '차별시정'에서 '평등가족'으로 대체하면서 성평등의 지향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후 우리는 동성애를 허용하면서 정상가족을 해체하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보수개신교의 주장, '젠더폭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으면서도 여성들의 선명한 목소리를 분산·왜곡시킨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했던 일부 여성 집단의 주장이 조우하는 현실을 목격했다. 이는 젠더 본질주의와 이성애 규범성에 근거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한국사회 성평등이 왜곡되는 지형에 얼마나 뿌리깊게 박혀 있는지를 보여준다.

기존의 젠더폭력에 저항하는 투쟁의 성과는 '사적'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젠더폭력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강제하며 '공적'인 것으로서 위치시킨 것이었다. 이러한 성과 위에서 지금 현재에 넘어서야 하는 것은 젠더폭력이 정치경제적 불평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젠더폭력에 대항하는 성평등 실천이 사회 전체의 공공성과 연결될 수 있는지 그 대항담론을 재구성하고 그 담론을 생산하는 정치적 실천을 병행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젠더폭력의 해결이 사회구조적인 불평등과의 연관성이 흐릿해지고, '불안정 사회' 혹은 '위험 사회'를 관리하는 국가의 치안 유지·통치 역할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조건은 더 많은 고민을 필요로 한다. 젠더폭력의 원인이 바로 사회구조적 문제에 있으며 사회가 함께 책임

저야할 차별과 불평등이라는 문제설정을 '개인으로, '위험 관리'로 이동시키기 때문이다. 차별과 폭력을 근절(stop violence)하려는 운동이 폭력을 다루는(managing violence) 국가의 관리서비스나 형사사법화로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구조적 성차별과 폭력의 연결고리를 전면화하는 것은 페미니즘의 시급한 과제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담론적·실천적 자원과 토대가 있다는 점 또한 함께 기억해야 한다. 젠더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요구할 때 흔히 제기되는 우려는 바로 처벌강화를 중심으로 한 '엄벌주의'의 역효과다. 특히 미국에서 엄벌주의의 파괴적인 영향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1994년 '여성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한 오랜 투쟁의 결과로 통과되었지만,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 인종적 통치를 강화하려 했던 국가의 기조와 맞물려 '강력범죄 처벌 강화법'과 동시에 추진되었다. '교도소 페미니즘'(carceral feminism)이라는 비판적 명명은 체계적인 유색인종에 대한 '대량 투옥'(mass incarceration)이라는 결과에 반성폭력 페미니즘 운동이 어떻게 동원될 수 있는지, 또 사회적 약자의 범죄화에 조응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이창무, 2004; 신나래, 박언주, 2022).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강력처벌은 젠더폭력의 처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통합적인 대책 속에서 등장했으며, 국가의 엄벌주의 강화 시도에도 끊임없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것은 반성폭력 여성운동이기도 했다는 점이 중요하다(최김하나, 2018). 젠더폭력의 원인을 '여성이어서'라는 진단으로 수렴시키는 것은 폭력의 구조보다 여성 정체성을 지목하기 쉽지만, 국가의 지배 권력이 어디를 향하는지에 대한 긴장은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서 구조적 차별을 입체적으로 가시화하는 힘이 된다.

정치경제적 분배에 대한 접근, 평등에 대한 권리를 통해 인간 존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성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인정 등 다양한 요구를 대립적인 것으로 만들거나 어느 것 하나를 삭제하려는 시도는 여성을 비롯한 특정 성별 집단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불평등을 강화한다. 젠더폭력에 대항하는 투쟁은 차별철폐 투쟁이고, 위험을 통치전략으로 만들고 상품화하는 자본주의 젠더체제를 겨냥하는 투쟁이기도 하다. 젠더폭력이 노동구조, 젠더화된 억압, 자본축적 및 지배 질서 작동과 얽힌 문제라는 점을 계속 가시화하는 방향으로 운동을 움직여보자.

3. 나가며 : 스스로를 갱신하며 서로를 조직하는 운동으로

국가의 분할 통치전략이 만들어내는 차별과 억압이 구조화되는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페미니스트 사회정의와 해방 전략이 이를 돌파하기보다 오히려 자본주의 축적의 엔진이 되어왔다는 비판은 페미니스트 정치 내부로부터 가장 격렬하게 제기되어왔다. 체제전환 페미니즘의 전망을 그려나

가는 일은 막막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역사를 함께 기억하는 것의 의미를 떠올리게 한다.

소수자의 위치로부터 출발한 정치로서, 소수자 대중운동으로서, 페미니즘은 모든 것을 아우르려는 욕망이 아니라 역사적 패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갱신해온 실천이다. 그리고 그러한 실천을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기획으로 만들기 위해 경주해온 실천이기도 하다. 지금 이 시대 세대가 페미니즘의 역사를 분절할 때, 적대가 연대를 구축할 운동의 에너지를 빼앗아갈 때, 우리 스스로 무력감이 들 때, 페미니즘의 문제설정은 언제나 “다른 누군가가 해방시켜 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는 선언 “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점을 떠올리고 싶다. ‘지금 여기’에서 해방과 민주주의의 실천을 실천하는 것이라면, 자본과 국가권력이 분리시켜놓은 편린들을 쥐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서로를 조직하며 체제전환의 주체로 세우는 운동을 함께 해 나가고 싶다.

오늘날 페미니즘이 다양한 위기에 불구하고 자본주의와 억압 체제를 넘어설 저항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평등이 가속화된 신자우주의 경쟁체제 속에서도 해방과 정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체제를 유지하려는 세력이 공정과 적대가 전세계적인 트렌드인 것처럼 현실을 오도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담론을 만드는 것이며, 우리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 연대와 투쟁의 장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존재 기반을 파괴하는 것에 저항하는 가장 적극적인 운동의 일부로서, 신자우주의적 ‘신흥’ 평등의 의미를 다시 탈취하도록 이끄는 체제전환 페미니즘을 함께 시작하자.

참고 자료

- 01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Eliminating Violence and Harassment in the World of Work: ILO Convention No. 190, Recommendation No. 206, and the accompanying Resolution』, 2019.
- 02 강이수, 「여성주의 연구를 돌아보다: 여성운동, 노동, 가족 연구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100호, 2013, 236.
- 03 국가인권위원회, 2019. 10. 29자 결정 「승진 등에서의 성차별 관행에 관한 개선 의견표명」
- 04 김순남, 『가족을 구성할 권리』, 오월의봄, 2022.
- 05 김영미, 「분포적 접근으로 본 한국 성별임금격차의 변화, 1982년-2004년」, 『경제와 사회』 84호, 2009.
- 06 김영미, 「오래된 문제, 새로운 전략: 가족돌봄 차별금지 개념 도입을 위한 시론」, 『한국여성학』 36권 1호, 2020.
- 07 김정혜, 「평등정책으로서 젠더폭력 예방정책의 방향 전환」, 『KWDI 이슈페이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7. 30.
- 08 김지혜, 「모두를 위한 평등」, 『민주법학』 66권, 2018.
- 09 나영, 나영정, 「국가권력과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대항하는 섹슈얼리티-인권-운동」, 『인권운동』 3호, 2021.
- 10 나영, 이수, 「젠더와 다시 만나기: 구조를 전복하는 인권운동을 위하여」, 『인권운동』 2호, 2019.
- 11 낸시 프라이저 저, 장석준 역, 『좌파의 길 - 식인 자본주의에 반대한다』, 서해문집, 2023.
- 12 니나 파워 저, 김성준 역, 『도둑맞은 페미니즘』, 에디투스, 2018.
- 13 몽, 「정치가 왜곡한 돌봄 부정의 -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쟁에 부쳐」, 『비마이너』, 2023. 6. 12.
- 14 박종서 외, 『한국 가족의 변동 특성과 정책적 함의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
- 15 박혜경, 「경제위기시 가족주의 담론의 재구성고 성평등 담론의 한계」, 『한국여성학』 27권 3호, 2011.
- 16 배은경, 「경제 위기와 한국 여성: 여성의 생애전망과 젠더/계급의 교차」, 『페미니즘 연구』 9권 2호, 2009.
- 17 백미륵,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후퇴 과정 분석」, 『한국여성학』 39권 2호, 2023.
- 18 손희정, 「페미니즘 리부트: 한국영화를 통해 본 포스트페미니즘과 그 이후」, 『문화/과학』 83호, 2015, 46.
- 19 신광영, 『한국 사회 불평등 연구』, 후마니타스, 2013.
- 20 신나라, 박언주, 「피해자 의사존중과 강제개입의 논쟁을 통해 살펴본 가정폭력 대응정책의 한계 및 변화의 방향」, 『여성연구』 114권 3호, 2022.
- 21 오가와 레이코, 「동아시아의 글로벌화하는 돌봄노동: 일본, 한국과 리저널 케어 체인」, 『日本社会学会』, 2014.
- 22 이정연, 「'안전'한 페미니즘이라는 기대의 역설: 페미니스트 '변아웃」, 『한국여성학』 39권 4호, 2023.
- 23 이창무,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 시행의 영향 및 효과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16권 1호, 2004.
- 24 장임다혜, 「혈통 중심에서 생활공동체로의 가족 개념 변화에 대한 모색 - 가족법, 건강가정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기본계획」, 『공익과 인권』 4권 1호, 2007
- 25 조은주, 「2차 인구학적 전환과 '가족 없는 자본주의': 저출산의 정치경제학」, 『자본주의 전환과 돌봄』, 비판사회학회 2022년도 가을학술대회, 2022.
- 26 최김하나, 「Anti-sexual violence movement against punitive measures: The feminist activism of Korean WomenLink」,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VOL. 24, NO. 2, 2018.
- 27 황은정, 「(탈)가족화 정책의 굴절: 교차성 관점에서 본 성별화와 계층화」, 『비판사회정책』 79호, 2023.
- 28 황정미, 「젠더와 민주주의」, 『민주주의 강의 4 - 현대적 흐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0.

체제를 전복하는 반성폭력운동을 위하여*

닷별 | 한국성폭력상담소

anchorstar@sisters.or.kr

1. 젠더폭력과 체제전환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상담소에서 직접적인 성폭력 사건 외의 이슈를 다루거나, 연대성명등을 게재하면 종종 왜 상담소의 활동과 무관한 것에 참여하느냐는 의구심 어린 질문을 받는다. 누군가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왜 '체제전환운동'에 함께 하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질 것이다. 이 질문에는 젠더폭력이 무엇인지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젠더폭력은 성폭력, 가정폭력, 인신매매 등 여성에게 가해자는 폭력과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젠더폭력은 단순히 강력범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한 아주 오래된 폭력이다. 성폭력의 역사를 개괄했던 수잔 브라운 밀러는 인류사의 아주 초기에서부터 강간이 남성이 권력과 지배를 위한 수단이었음을 밝혔다. 반성폭력운동 또한 성폭력이 '남성의 성욕으로 인한 개인화된 문제가 아니라, 권력관계에 기반하여 작동하는 성적인 폭력'이라는 점을 드러냈다.

권력관계는 단순히 일대일의 여성과 남성의 권력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생산과 재생산의 가치를 다르게 판단하는 사회문화, 가정과 직장을 망라하여 작동하는 성별분업체계, 노동구조에서의 불평등 등이 성별화된 권력관계를 만들어낸다. 직장내성희롱은 이러한 권력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단편적인 예시 중 하나다. 직장내성희롱 사건 대다수는 사업주 혹은 상사인 남성이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일어난다. 가해자들은 낮은 지위의 여성 하급자가 자신이 가하는 성적인 폭력, 위협, 희롱(가해자의 언어)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들은 때로 여성들이 자

* 이 토론문은 “지금 여기, 체제전환 페미니즘” 세션 준비팀에서 세미나와 토론을 거쳐 작성되었다. 토론문은 호랑(한국성폭력상담소, tiger@sisters.or.kr)과 함께 작성하였다.

신에게 맞설 수 없게 만들기 위해 성폭력을 가한다. 이는 꼭 직접적인 위계관계(한 사업장에서의 문제로 좁혀지지 않는다. 특정한 업계에 존재하는 남성 중심의 인적 네트워크의 문제이며 더 넓게는 여성이 성적 자율성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가로막는 교육과 문화의 문제이다.

2018년 미투운동이 촉발된 성폭력 말하기는 이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줬다. 정치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등 전 분야에 걸쳐 말하기를 시작한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은 공고한 권력관계로 인해 오랫동안 침묵해왔다. 사회에 만연한 강간문화 또한 생존자들을 침묵시켰다. 강간문화는 “성공한 강간은 본질적으로 섹스와 같다”고 설파한다. 성폭력에 내포된 권력관계를 가리고 ‘너도 동의한 것이 아니냐’고 피해자를 탓하게 만든다. 차별은 현재의 권력체제를 유지하는 기제이고, 성폭력은 ‘성별분업’ 혹은 ‘성역할’로 포장된 차별 속에서 발현되는 문제이다.

지금의 사회체제는 폭력이 발생하는 구조 자체는 문제 삼지 않는다. 젠더폭력의 바탕이 되는 성차별과 성별분업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용불안정성이 높은 비정규직 여성은 직장에서 벌어지는 폭력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정규직 여성이 겪는 성폭력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의 불안정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가사도우미나 요양보호사, 콜센터노동자 등 여성이 다수인 돌봄·서비스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희롱을 막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성화된 직군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더 많은 자율권, 임금향상 등) 노동에서의 성별분업을 완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폭력을 없애기 위해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라는 요구는 지금 이 사회에선 허무맹랑한 요구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여성화된 직군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성별분업을 완화하는 것은 너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가로막힐 것이다.** 국가와 사회가 젠더폭력의 근본적 원인인 성차별과 불평등한 현실을 바로잡지 않는 것은 그것이 바로 현재 시스템이 유지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국가제도는 젠더폭력을 ‘관리’할 뿐이다.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로 구분된 젠더폭력의 체계 속에서 여성들은 ‘피해자’로 명명될 때에만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국가는 구조를 바꾸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 폭력이 발생한 다음 법조문에 정확히 부합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지원책을 제시할 뿐이다. 현행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 경우에만 성폭력을 인정한다.

복잡하고 젠더화된 권력관계와 구조 속에서 폭행·협박 없이 이루어지는 성폭력은 법적 처벌이 쉽지 않다. 피해자가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

** 오히려 지금의 한국사회는 중층의 국제적인 차별의 구조를 활용하여 여성화된 직종, 재생산 분야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월 100만원)으로 고용하게 하는 것을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한 것은 국가간의 격차/차별을 바탕으로 돌봄/재생산에 대한 차별을 더욱 심화시키는 정책에 불과하다.

되어야 한다.”(수원고등법원 2022. 9. 15. 선고 2021노713 판결)는 이유로 성폭력 사건에 무죄가 선고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복잡하고 젠더화된 권력관계와 구조 속에서 명백하게 거부의사를 밝히기 어려워 일어나는 성적인 폭력도 잦다. 친밀한 관계에서 협상력을 빼앗기거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감에서 이루어지는 섹스, 욕망이 배제된 섹스 각본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위계’ 및 ‘업무상 위력’으로 인한 성폭력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며, 모든 권력적 관계를 포괄하지 못한다. 또한 ‘순결 이데올로기’가 법조문에서 사라진 이후에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법제도 속에서 ‘진정한 피해자’의 자격을 의심받는다. 성매매 여성이 구매자로부터 경험한 성폭력 피해는 성매매의 일환으로 치부되거나,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기 이전에 성판매 여성이라는 것에 대한 낙인과 편견이 먼저 작동하여 피의자로 전환된다. 현재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이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오늘날 국가가 가해자 처벌을 통한 피해자의 독립보다 정상가족의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젠더폭력의 문제는 경제와 산업의 문제이기도 하다. 불법촬영물의 끊임없는 유포, 웹하드 카르텔, 다크웹 사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이르기까지 지난 몇 년 간 발생한 디지털성폭력 사건들은 모두 성착취물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는 산업의 양상을 지녔다. 성매매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여성의 몸’은 수익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담보물로 간주되어 합법적인 대출상품의 근거가 된다. 담보가 된 여성의 몸은 합법적인 금융경제와 맞물려 성매매와 연결된 온갖 산업을 ‘부양’한다(김주희, 2020). 성폭력 사건은 누군가에게 적극적으로 진입해야 할 시장이 되기도 한다. 가해자들의 감형과 피해자에 대한 역고소를 전담으로 맡아주는 일명 ‘가해자 전담 변호사’들이 출현이 그 증거다. 이 모든 현상들은 오늘날 무엇이든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자본주의의 세계가 ‘젠더폭력’마저 시장의 상품으로 전락시켰음을 보여준다(김보화, 2023).

지금의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외치면서 성폭력 사건을 ‘강력범죄’의 하나로 치부하고 엄벌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고위험 성폭력 가해자를 국가시설에 거주하게 하자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도입과 같은 엄벌주의는 성폭력의 근원적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잇달아 벌어진 흥기난동사건과 여성대상 흉악범죄의 가해자들을 마치 소수의 악마같은 존재로 보이게 만들 뿐이다. 물론 모든 남성들이 ‘여자가 왜 머리가 짧냐’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로 폭행하거나, ‘여자들이 나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공공장소에서 만난 여성을 살해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성이 ‘여성스럽지 않은 것’을 도드라지게 만들고, 여성을 폭력성의 손쉬운 표출 대상이 되도록 만든 것은 성차별과 여성혐오를 부추기고 방관해온 사회이다. 성차별의 원인이 되는 사회구조는 그대로 둔 채, ‘강력 범죄’에 대한 중형과 보호만을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일상에 만연한 먼지같은 강간문화와 ‘강력범죄가 아닌’ 젠더폭력을 부추기는 꼴일 수 있다.

2. 젠더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착각

매일같이 젠더폭력에 관한 뉴스가 보도되는 가운데, 폭력으로부터 주도권을 찾고 싶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성공하는 것이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혹은 ‘같은 여성은 여성의 마음을 더 잘 알 것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이번 장에서는 이에 관해 파헤쳐보고자 한다.

1) 여성이 성공하면 젠더폭력에서 자유로워질까?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신화

여성 개인이 성공하면 젠더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거라는 믿음이 있다. 과연 정말일까? 젠더폭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대안이 ‘여성의 성공’은 아니라는 점을 한국 #미투운동의 시작점이 어디인가를 보면 알 수 있다. 한국의 미투운동은 엘리트 집단인 검찰 내부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오래 전 경험한 성폭력을 내부 인트라넷에 공론화하며 검찰 내부의 성차별적 문화를 고발한 서지현 씨는 남성의 얼굴로 그려지는 검찰의 보수성을 용감하게 드러냈다. 이후 다양한 위치의 ‘성공한 여성’들이 자신이 경험한 성폭력을 직/간접적으로 고백하기도 했다. 개인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지위에 올라간들 젠더 자체에서 비롯되는 공고한 성차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여성은 성공하기 위해 여성성을 가리거나, 혹은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받는다. 어린 자녀와 함께 국회로 출근한 용혜인 의원의 모습은 ‘정치인’답지 않은 모습으로 충격을 선사하지만, 동시에 어떤 여성 정치인은 ‘정치인’으로 살아남기 위해 ‘엄마 정치인’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활용하기도 한다. 이는 남성에게는 요구되지 않는다. 사회가 노동자-시민의 기본값을 비장애인 성인 남성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요구되는 육아와 양육을 배제하고 온전히 직업적 성공에 몰두하는 여성만이 ‘정상적’인 노동자-시민으로 살아남아 고위직으로 승진할 기회를 얻는다. 돌봄이 여성과 개인에게 떠넘겨지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여성은 이중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 많은 여성이 고위직에 올라간다면 공고한 성차별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리천장지수가 11년째 꼴찌인 나라로 여전히 유리천장이 공고한 사회이다. 그런 한국사회에서 더 많은 여성이 고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현 시점에서 남성적인 네트워크와 권력에 포섭한 소수의 여성만이 ‘권력자’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모 여성의원이 여성할당제에 대한 질문에 “무언가 성취했을 때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혜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고 대답하거나 육아휴직 직후 퇴사한 직원이 이기적이라며 ‘임신 계획이 있는 여성은 나라도 뽑지 않겠다’는 여초 커뮤니티의 발화에서 드러나듯, 여성 역시 남성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에 흡수되어 ‘남성화’된다. 다른 여성들이 착취되거나 폭력의 구조는 그대로인

채 본인만 구조의 강자로 올라가려는 페미니즘을 페미니즘이라 부를 수 있을까? 차별과 불평등을 존속하는 체제를 그대로 둔 채 더 많은 여성이 사회의 중심부로 진입하는 것은 결단코 우리의 해답이 될 수 없다.

2)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동질성, 성별분리의 함정

피해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경찰의 수사 속도가 달라지는 현실을 목격한 여성들의 분노는 '불법 촬영 편파수사'에 문제제기하며 해화역 '불편한용기' 시위로 이어졌다. 이 당시 주요 요구사항으로 등장한 것 중 여성 경찰관 비율 확대가 있었다. 경찰 내 여성 경찰관이 더 많아지면 젠더폭력 사건이 피해자의 시선으로 다뤄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 등장한 요구사항이었다. 결집된 여성들의 분노는 경찰청으로부터 '▶ 22년까지 여성경찰관 비율 15%로 확대 ▶ 향후 10년 후 20% 이상의 여성 경찰관 비율 확보'를 목표로, 매년 채용규모의 25~30% 이상을 여성으로 채용할 계획이라는 약속을 받아내는 데에 성공했다. 미투운동 이후 법적 해결을 선택한 피해자들 역시 비슷한 기대를 안고 여성 수사관을 배치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연, 같은 '여성'은 성폭력을 더 잘 이해하고 있을까?

경찰 직군 역시 대표적인 남초직군으로, 경찰 내 성평등을 위해 더 많은 여성 경찰관이 채용되어야 한다는 점은 주요한 과제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의 여성 경찰이 남성 경찰관에 비해 성폭력의 매커니즘을 더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는 말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아무런 수치심 없이, 당당하게 진술하는 피해자를 바라보며 남성 가해자의 시선으로 피해자를 바라보고 있었다"(주명희 외 22인, 2022:104)는 어느 경찰의 용감한 자기고백에서 엿볼 수 있듯 성차별적인 사회에서 성장한 개인이라면 누구나 가부장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꾸준히 훈련하지 않으면 평등한 관점과 시선을 잃기 쉽다. 하물며 남성동질성이 강한 경찰 사회라면 더더욱 그렇다. 또한 여성 경찰이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여성·청소년계에 많아지는 것은 경찰 내부의 성별직무 분리를 더 공고히 하고, 성폭력 문제를 '여자 문제'로 단순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여성의 경험은 단일하지 않다. 계급·인종·지역 등 다양한 정체성에 따라 성폭력 피해의 양상도 천차만별이다. 동성 간 성폭력을 공적으로 해결하려면 커밍아웃을 하고도 '같은 성별끼리는 성폭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고한 편견이 작동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을 각오해야 하고, 이주여성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비자 연장 여부를 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신고는커녕 말하는 것조차 어렵다. 그래서 '같은 여성은 여성이 겪는 성폭력 문제를 더 잘 알 것이다'라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안전한 여성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 역시 여성 대상 젠더폭력이 증가한 이후 눈에 띄게 많이 보인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생물학적 여성'만 출입 가능한 공간을 꾸리는 것이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다. 여성만 출입 가능한 술집, 헬스장의 여성전용코너 등 여성만 이용 가능한 공간과 '남성이 여성 공간에 침입할 것이라'는 공포감이 여성전용 공간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있다. 안전한 여성공

간은 어떻게 가능할까.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안전을 위한 수많은 초과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폭력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여성 공간이란 존재할 수 없다. 1985년부터 1996년까지 무려 12년간 이어진 고려대 학생들의 이화여대 난동 사건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속되는 여대 침입시도,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이 그 증거다. 불평등한 사회에서 여성만의 안전 공간은 단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다.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생물학적 여성'만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 여성이 어디에서든 안전을 위협받지 않는 자유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지난 8월 24일 신림동 공원성폭력사건 집회에서 목놓아 외쳤듯,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장갑차'로 대표되는 더 큰 힘의 억제력이 아니라 성평등한 사회다.

3. 체제전환적 관점에서 본 반성폭력운동의 현재와 미래

피해자가 용감한 말하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반성폭력운동은 시작 이래부터 가열차게 싸워왔다. 성폭력특별법 제정으로부터 30년, 반성폭력운동은 '훼손된 정조'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고려하던 기존의 패러다임을 깨부수며 성폭력특별법 제정 등 법 제·개정 운동에 힘써왔다. 반성폭력운동이 '차별'의 의무를 국가에게 부여한 것은 성폭력이 부차적인 문제, 사소화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었다. 이후 성폭력이 악마같은 개인이 일탈적으로 벌이는 범죄가 아니라 젠더화된 폭력, 사회구조적 불평등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을 선명히 하며 구조의 문제를 지적해왔다.

그러나 반성폭력 운동은 성폭력과 구조의 연결성에 대해 충분히 깊지 못했다. 폭력은 태생적으로 매우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조건이 얽혀서 발생한다. 복잡한 조건에서 비롯된 불평등의 문제가 얽혀있는 가운데 성별 역시 차별의 조건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반성폭력 운동의 취지와는 달리 젠더폭력을 '관리'만 하는 국가적 흐름과 엄벌주의, 정체성 정치를 강화하는 신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의 확산 등의 배경 속에서 성차별의 조건이 '남성' 대 '여성'이라는 권력구조의 문제로 납작하게 이해되기도 했다. 성차별을 근간으로 작동하는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페미니즘, 국제적 분쟁과 국가간 폭력의 문제를 지우고 남성 난민들이 성폭력 가해자가 될 것이라는 공포를 근거삼아 예멘 난민 입국 거부 청원을 올린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체제전환을 지향하는 반성폭력운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적어도 교차적 관점을 지향하는 모습이어야 할 것이다. 교차적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성별이 다른 정체성 혹은 사회적 범주들(장애, 계급, 인종, 성적지향 등)과 중첩되었을 때 하나의 범주로는 드러나지 않는 공백지점들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페미니즘 대중화 당시 이른바 '쓰까페미'라는 비하적 용어와 함께

교차성이 마치 성별의 문제를 다른 사회문제와 뒤섞는 것으로 오인되었으나, 교차성은 성별의 문제를 보다 명확히 보기 위한 인식틀에 가깝다. 우리가 여성 내부의 다층적인 차이를 보지 않으면 채 이야기하게 될 경우, 일부 여성(주로 비장애, 시스템더, 이성애, 원주민, 중산층 여성)의 목소리만이 대변될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이 점을 먼저 밝혀두며, 교차적 관점에서 본 반성폭력운동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고자 한다.

성폭력을 경험하는 피해자들은 어디에든 존재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배경과 성폭력을 둘러싼 외부 조건들이 성폭력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피해자가 직장을 다니는지, 직장의 규모가 어떤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는지, 연령대가 어떤지 등에 따라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해결의 방법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슬픈 현실이지만, 더 많은 자원을 가진 피해자가 사건 해결 과정에서 시도할 수 있는 방법도 더 많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에 필요한 자원을 더욱 잘 획득할 수 있다. 이를테면 직장내성희롱 사안의 경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는 직장내성희롱 관련 매뉴얼이 형식이나마 갖추고 있고 고충처리담당관이 지정되어있어 공적 절차를 진행할 때의 부담도 적은 편이다. 그러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안 발생 비율은 6.8%로 가장 높지만 내부 규정이나 절차가 미비하거나 전무하고 조직에서 관련 처리를 제대로 해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공적 절차를 이용하려면 규정과 절차부터 새로 쌓아야 하는 고난을 겪는다. 공적 절차를 밟는다고 한들, 사업성과와 기업이윤이 최우선순위에 있는 대기업 특성상 성폭력은 부차적 문제로 취급되어 제대로 진행조차 되지 않는 것이 부지기수다.

요양보호사와 가사노동자와 같은 돌봄노동자가 경험하는 성폭력을 살펴보자. 요양보호사의 58.7%, 가사노동자의 14.3%가 성폭력을 경험한다. 두 직군은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직업군으로, 현실의 돌봄이 평가절하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임금-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을 경험한 요양보호사들의 36.6%는 '참고 넘어감'을 선택한다. 왜 성폭력을 경험하고도 본인의 경험을 말하지 않는 것일까? 고객에게 성폭력을 경험하는 직업 특성상 성폭력 문제제기를 했다가 고객을 잃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돌봄노동자의 대부분은 경력단절을 경험한 중-노년층 여성으로, 돌봄노동 이외의 전문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이들이 경험하는 전방위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그간 평가절하당해왔던 돌봄노동의 가치를 원래 계산해야 할 값만큼 지불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폭력 관련 법을 계속 개정한다고 한들, 현실의 요양보호사와 가사노동자가 처한 일터에서의 성폭력 문제가 해결될까? 이 점에서 반성폭력 운동은 노동과 돌봄의 영역과 맞닿아있다.

성폭력 가해 행위를 국가가 처벌하게 된 것은 국가의 책임성을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승인한 시스템 내에서만 움직이게 되는 한계점도 있다. 시대의 변화는 언제나 빠르기에 가장 보수적이고 느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벌 가능한 사건은 한정적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선택했을 때 지원자의 상상력 역시 좁아질 수밖에 없다. 작년 2월 14일 검찰은 “위증·무고 등 사법방

해 사범 업정 대응” 방침을 밝히며 전방위적 무고죄 인지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성폭력 피해자가 고소했다가 무혐의로 종결된 건 중 일부를 무고죄로 송치하고 있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피해자의 경험이 “진짜 성폭력인지” 적극적으로 선별하겠다는 국가의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환경에서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선택할 때, 법의 요건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먼저 고려하는 등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

반성폭력운동을 비롯한 여성운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젠더폭력 지원의 통합적 모델을 요구한 바 있다. 작년 12월 27일, 정부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종합적 방침이나 장기적 시야 없이 증구난방으로 세워진 국가의 지원체계에서 혼란과 소외를 경험하는 폭력 피해자들이 국가의 지원체계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통합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 이 방안은 법적 과정을 진두지휘하는 검사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밀착마크하여 ‘사례’를 관리하겠다는 포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빠진 것이 있다.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를 비롯, 정부의 정책과 관점은 모두 사후대응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는 성폭력 처벌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성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인 성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책임주체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는 스스로의 책임성은 배제한 채 가해자 엄벌, 피해자 지원이라는 냉혹한 처벌자의 포지션을 자처하며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이야기도 해보자.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에는 주로 친족성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이 입소하고 있다. 생애주기상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기 어렵고, 원가정에서 지속적인 재피해가 예상되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원가정을 떠나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주거공간이다. 그러나 현행 한국의 지원체계는 이들에게 실효성 없는 임대주택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언젠가 떠나야 할 쉼터만을 대안으로 제시하여 주거불안정을 가속화하고 있다.

성폭력피해자가 피해를 경험하고 치유-회복을 과정을 지나는 데에는 결국 자원이 필요하다. 이 자원은 흔히 사람들이 떠올리는 법적 조력, 의료비 지원 등 ‘지원’의 이름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주변의 격려와 지지, 피해자의 말하기가 왜곡 없이 받아들여질 사회적 분위기 등... 성폭력 피해자가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성폭력을 감내하거나, 성폭력을 말한 다음 통념 섞인 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닌 성폭력을 더 쉽게 말할 수 있는 사회, 성폭력을 털 참아도 되는 사회로 만드는 것이 반성폭력 운동이 지향해야 할 모습이라면, 반성폭력운동은 기존의 ‘여성운동의 영역’이라 일컫어지는 부문을 넘어 더 많은 영역과 만나야 한다. 성폭력 피해가 가능케 하는 노동의 구조, ‘남성’을 중심으로 설계된 생계부양자모델에 대한 비판, 자본이 되어버린 ‘집’이 안정적인 거주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되찾는 주거권의 영역까지. 그런 고민을 담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등 다양한 연대체 활동을 열심히 이어가고 있지만, 체제전환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페미니즘과 여성운동이 한계에 다다른 한국 사회를 뒤엎는 변혁의 운동이 되기 위

해, 이 기회를 빌어 더 많은 논의와 연대의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

참고 자료

- 01 수잔 브라운 밀러(2018),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 박소영 옮김, 오월의 봄.
- 02 UN Women, "16 ways you can stand against rape culture", UN Women, 2019. 11. 19.<https://www.unwomen.org/en/news/stories/2019/11/compilation-ways-you-can-stand-against-rape-culture>
원문: Rape culture is the social environment that allows sexual violence to be normalized and justified, fueled by the persistent gender inequalities and attitudes about gender and sexuality. Naming it is the first step to dismantling rape culture.
- 03 한국성폭력상담소(2023), 『동의를 질문하며, 위험 너머 나아가기』 자료집
- 04 김주희(2020), 『레이디 크레딧』, 현실문화
- 05 김보화(2023), 『시장으로 간 성폭력』, 휴머니스트
- 06 박상혁. (2023. 3. 8.), "[3·8 세계여성의 날] 한국, 유리천장지수 11년째 '꼴찌'", 여성신문.<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732>
- 07 신현보. (2023. 12. 5.), "허은아 "끓아 터진 남녀 갈등...저결혼·저출산으로" [인터뷰]", 한국경제.<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0539827>
- 08 불편한용기. [@womyn_protesting] (2018. 10. 25.), 10월 17일, 불편한용기는 정부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p/BpXBJrinYJQ/?utm_source=ig_web_copy_link
- 09 주명희 외 여성 경찰 22인(2022), 『여성, 경찰하는 마음』, 생각정원
- 10 서울시위드유센터(2020),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내 성희롱·성폭력 현황 분석 연구』
- 11 류호. (2023. 6. 2.), "와서 키스나 해주고 가" 성추행·폭행 시달려도 혼자 삭이는 요양보호사들, 한국일보.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52921230005417>
- 12 윤기은·김세훈. (2023. 3. 7.), "여성 가사도우미는 '그 집'이 두렵다", 경향신문.<https://m.khan.co.kr/national/gender/article/202303072115005#c2b>
- 13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2019), 『보호의 쉼터에서 삶의 기반을 만드는 공간으로』 자료집

체제와 불화하는 돌봄의 정치

진은선 | 장애여성공감

wdc214@gmail.com

장애와 젠더, 교차성을 관통하는 나의 경험과 장애여성운동

체제전환 회의를 시작하며 페미니즘 운동에서 체제전환 논의를 어떻게 제안할지 어렵게 느껴졌다. 논의를 할수록 체제전환의 관점에서 내가 해온 장애여성운동을 다시 보는 것과 서로의 운동을 교차하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는 나답게 인정받는 것이 아닌 사회가 인정하는 생산능력의 증명을 요구받는다. 장애여성인 나는 노동자로도 '여성'으로도 호명되지 않고 장애의 취약성을 강요하는 복지 지원대상으로만 존재했다. 내가 씻고,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집을 나와 공감에 오는 매일의 일상을 만들기 위해 돌봄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삶을 이어가기 위한 돌봄은 권리가 아닌 돌봄이 필요한 몸을 증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내가 받는 질문들은 나의 필요가 아닌 국가재정의 예산 논리로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취약한 상태에 있는지를 드러내는 자격 기준을 묻는다.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이들은, 밥을 혼자 먹을 수 있는지 등 몸의 기능을 평가당한다. 아무런 결정을 할 수 없는 존재로서 소통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시설사회는 의존과 돌봄을 받는 장애여성의 몸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며 시설과 집에 가두어 왔다. 돌봄을 받아야 하기에 무능력하다는 낙인이 찍혀 시설에 갇혔으며, 장애가 있는 여성이기에 성과 재생산권리는 마치 없는 것으로 취급받아왔다. 장애여성이 사회에 등장하는 순간은 폭력사건의 피해자이거나 성적 과잉행동 등 문제행동이라 규정되는 상황의 당사자일 때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극단적인 프레임에 갇혀 장애여성으로서 내 삶의 다양한 서사는 드러날 수 없었고, 주체로서의 나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내가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이유는 나의 삶을 교차하며 관통했던 장애와 젠더가 사회가 요구하는 프레임에 갇힐 수 밖에 없는 어떤 것이 아닌 차별의 문제임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장애여성운동은, 장애여성이라는 나의 위치성은 인권운동 사회 내에서 어떻게? 장애운동에서는 '장애인' 정체성만으로 모든 경험이 수렴되어 그 안의 교차적인 다양한 차이를 말하기 어렵다. 그러한 상황에서 장애여성의 의제는 들어갈 틈이 없다. 그리고 페미니즘 운동에서 장애여성의 경험은 다양한 여성의 삶을 교차하는 보편적인 경험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닌 '장애' 여성의 특

수한 위치, ‘차별’의 서사로만 이야기되기도 한다. 월경지원을 꺼려하는 활동지원사와의 갈등과 관계의 복잡성을 젠더차별로 설명할 수 있을까? 장애여성으로서 겪는 나의 몸, 차별의 경험은 장애인운동, 페미니즘 운동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질 수 있을까? 어디에도 딱 들어맞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들어맞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들어맞을 수 없는 ‘교차성’이 장애여성운동이 지향해왔던 관점이자 실천이다. 장애여성운동은 장애와 젠더가 교차하는 장애여성의 삶의 경험을 억압과 차별의 구조로 분석하며 시설사회의 문제를 제기해왔다. 따라서 체제전환의 논의에서 젠더, 섹슈얼리티, 계급 등이 교차하는 삶을 주요한 관점으로 보며 사회재생산의 가치를 절하해왔던 자본주의 체제가 실은 사회재생산에 의존했으며 시설사회를 어떻게 강화해왔는지, 돌봄의 정의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자 한다.

사회재생산 위기와 시설 강화

1950년대 이후 국가는 경제성장에 생산/노동능력이 없는 장애인, 부랑인 등을 집단시설에 수용했다. 국가는 정상과 비정상의 인구를 선별하여 통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설 정책을 강화해왔다. 국가의 통치기제에 따라 시설은 보호, 재활, 사회복귀라는 명목으로 관리와 통제를 정당화했다. 장애인, 부랑인 등의 낙인된 자들은 시민의 권리가 박탈된 채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왔다. 국가는 돌봄 공백에 대한 역할과 대안을 요구할 때 특히 가족과 여성에게 돌봄노동을 내맡기며 책임을 전가해왔다.⁰¹ 2000년대 전후로 가족기능 및 형태의 다양화, 저출산 고령화 등이 진행되면서 전통적으로 가족이 담당해온 사회재생산이 위기를 맞게 되었고,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돌봄시설이 확장되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 58조(장애인복지시설) 정의 또한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규정되었다. ‘시설과 가정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며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시설이 가족을 대리하는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돌봄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지 않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할 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일반가정에서 생활’한다는 전제를 근거로 시설이 확대된다. 시설이 가정의 형태를 유지하는 ‘보호자’의 역할로서 당사자의 ‘입소-퇴소-사망’에 이르는 전 생애에 걸친 권리를 대리/대행한다. 시설 정책에서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체계는 전무하며 가부장적 위계질서에서 ‘시설장’은 가부장의 역할로서 당사자에 대한 모든 결정권한을 위임받는다.

‘시설화’는 지배권력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보호/관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사회와 분리하여 권리와 자원을 차단함으로써 ‘불능화/무력화’된 존재로 만들며,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제한하여 주체성을 상실시킨다.⁰² 나이가 어리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보호의 대상으로 만들고 이들을 대상으로 보호자가 친권을 행사할 때, 소수자들의 시민권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보호자, 후견인의 의해 자발적인 퇴소가 불가능한 시설의 구조는 가족과 시설 외에 다른 대안을 가질 수 없다. 장애여성이 독립/탈시설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결혼을 선택하는 이유기도 하다. 이때 사회 재생산의 탈가족화·사회화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도 가족 책임으로 강제된 돌봄 문제를 국가 책임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당위적 주장에 그쳤을 뿐, 돌봄대상자로 상정된 이들의 상당수가 시설 돌봄에 맡겨지는 현실은 문제 삼지 않았다. 탈시설화 논의와 운동은 젠더 정치학과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생산성과 효율성 중심의 정치경제를 떠 반쳐온 체계로서 가족과 시설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온 역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⁰³ 따라서 탈시설 운동에서 가족을 구성할 권리는 또 다시 ‘가족’에게만 의존되는 또 다른 고립된 삶이 아니라 온전한 삶의 자립이 가능한 사회적인 토대를 요청하는 것이며, 상호적 돌봄과 관계성이 불가능한 ‘무력하고’, ‘순응적인’ 존재로서의 낙인에 개입하는 과정⁰⁴이다. 탈시설 운동에서 이 관계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젠더, 섹슈얼리티 논의에 주목하고 가족구성권, 돌봄 문제를 중요하게 논의해야 한다.

생산/능력중심의 시설화된 노동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생산/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노동을 수행하거나, 드러나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부정의한 형태의 ‘시설화’된 노동을 하고 있다. 시설 내 보호작업장 노동은 수세미 포장이나 박스를 접는 단순노동의 형태이다. 이와 같은 노동은 ‘훈련, 보호’ 고용이라 불리며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애인이 복지관 등이 운영하는 보호작업장에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이 노동자로서의 위치를 부여받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당한 처우로 이뤄지는 노동은 장애인들의 일상의 삶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실제로 장애여성공감이 회원활동을 제안했을 때 활동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기 위해 출근을 하지 않으면 ‘월급이 깎이고 (시설)외부 취업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로 시설에 남을 것을 강요한다. 탈시설을 하고 싶어서 돈을 모으지만 통장을 직접 관리할 수 없고 시설운영에 따라 개인의 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결국 탈시설은 기약없이 유예된다.

국가는 자본주의 생산구조에서 예산의 효율성과 시설의 ‘전문화된 돌봄서비스’의 역할로서 시설 권력을 유지했다. 최근 서울시는 “시설장애인이 탈시설 이후 자립정착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연 1억 4,100만원인 반면, 시설거주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비용은 연 6,100만원 수준으로 탈시설한 장애인에게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실정”⁰⁵이라며 ‘거주시설연계사

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해당 예산은 거주시설의 ‘자립생활 강화’ 예산으로 신규 반영되어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폐기했다. 국가와 시설이 주장하는 ‘전문화’ 된 돌봄은 실제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관점과 정보, 역량강화 등의 방향과는 무관하게 효율성을 중심으로 평가 및 진행되고 있다. 돌봄의 공공성 확대를 요구하며 노동자-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었지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회가 예산을 삭감하면서 운영의 어려움으로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있다. 시설 노동, 돌봄 노동, 무급/불법 노동 등 시설화된 노동의 구조에서 어떤 이들이 노동의 가치가 절하되고 관계가 단절되는가. 시설화된 구조에서 불합리한 조건/관행을 협상할 수 없거나 차별을 묵인하는 것, 조직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일을 그만두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고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체계가 없는 등 노동현장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은 어떻게 무력화 되는가,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불합리한 노동을 겪고 있는 이들의 경험으로부터 ‘시설화’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 아닌 장애, 젠더, 계급, 불평 등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단지 취약계층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⁰⁶ 결국 돌봄 노동자와 돌봄대상자의 권리를 축소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탈시설 운동과 페미니즘 운동이 돌봄 노동의 문제를 어떻게 제기할 지 논의해야 한다.

욕망을 찾고 실천하는 상호 돌봄의 관계

사회적으로 여성의 성적 권리는 안전을 이유로 금기시된다. 장애인의 경우 ‘보호와 예방’으로 통제되어야 할 문제행동이 된다. 그러나 사회재생산의 가치에서 성과 재생산권리를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외부의 관계가 차단된 시설의 폐쇄적인 구조에서 학대 피해의 62%가 발생하지만⁰⁷ 성과 재생산권리 침해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1970년대 전후에는 국가가 인구 제한정책을 강화하면서 피임/불임, 임신·출산 과정에 개입했으며 여성의 의사결정권은 통제되고 재생산 권리가 박탈되었다. 모자보건법 제14조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임신중절허용사유를 근거로 시설 내 강제불임수술이 시행되었다.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우생학을 기반으로 하는 장애 차별이자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임을 제기하였으며 2019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해당 의미를 상실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안의 완전 폐지와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를 마련하지 않는 것에 대해 투쟁하고 있다.

* 2009년,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의 폐쇄성과 학대, 비리, 인권침해 문제를 고발하는 ‘마로니에 8인’의 투쟁으로 탈시설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탈시설 정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거주시설 연계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진행,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과 IL센터를 연계하여 탈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설은 당사자의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없는 문제뿐만 아니라 욕망은 숨겨야 하는 일로서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질 기회는 부재하다. 매 순간 관리/종사자로부터 감시되어 욕망은 문제행동이 된다. 나 또한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안전을 위해서는 계속 집에 갇혀있는 방법 밖엔 없었다. 당사자의 삶의 조건에서 돌봄 받는 관계의 역전이 가능해야만 성적 권리를 실천하는 것이 가능하다. 장애여성이 자신의 월경경험을 말할 때 “생리대 교체를 누군가 도와주어야 하는데(시설에 계시는) 선생님도 도와주어야 할 아이들이 많아서 자세히 생리에 대해 알려 줄 시간이 없었고 나 역시 알아봤자 뭐할까 싶었다. 선생님이 화장실 갈 때만 생리대를 교체해주었는데, 보통 하루에 화장실을 2-3회 갔는데 생리 때는 (불편하고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생리대 교체를 해야해서) 더 안 갔다.”⁰⁸, “생리 후 성기를 닦는 보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활동지원사는 ‘보지를 손으로 만지는 것이 이상하고 불편하다’고 말했다. ‘그럼 제가 하겠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치스러움과 위축되는 마음이 들었다. 장애여성이 생리를 하는 것이 번거로운데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묻는 것은 생리혈이 주는 더러움 때문일까?”⁰⁹라고 말했다. 장애여성을 재생산할 수 없는 대상으로 여겨지는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은 돌봄 관계에서도 그대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욕망과 사회적 억압이 뒤엉켜 있는 공간의 몸, 더럽고 수치스럽다고 여겨지던 것들이 실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돌봄을 받는 몸이 수치심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긍정하며 욕망을 실현할 것인가, 제도를 넘어서서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차별의 문제, 일상적·관행적으로 반복되어 온 행위가 당사자의 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 드러내기 위해 운동은 어떤 실천이 필요할까. 이 때 장애여성공감은 피해로만 호명되지 않고 폭력/피해로만 규정되는 제도의 협소한 기준을 넘어 권리로서 요구하기 위해 투쟁해왔다. ‘무능’과 ‘무력’의 입증이라는 제도에 맞서 ‘시설화’에 저항하는 운동이 되기 위해서¹⁰ 제도가 설명하지 않는 장애여성의 삶의 맥락을 차별의 구조로 해석하고자 고민해왔다. 이 때 해석과 이동은 일상에서 부단히 상호의존적 관계를 실험하면서 갈등을 겪을 때 가능해진다. 이 과정을 통해 ‘지원·조력·보호’의 성격이 강한 돌봄 실천을 지지·연대·공동작업’으로 확장하며 돌봄의 겹을¹¹ 구성해나가야 한다. 반성폭력 운동 현장에서도 ‘상호돌봄’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고민을 기반으로 피해자의 취약성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하기가 성평등한 사회로 가는 변화에 영향력을 미치며 피해자의 ‘치료회복’이 아닌 ‘공동의 관계역량’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¹² 욕망을 탐색하고, 성적 권리를 지지하고 실천하는 과정 전반에서 상호돌봄의 관계 맺기를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돌봄 정의를 체제전환 운동에서 고민해가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프고 장애가 있는 몸들은 의존적이고 폐를 끼치는 사람으로 구분되어 골

방이나 시설에 가뒀졌다. 그러나 장애의 경험은 성장과 개발이 보편인 시대에 저항할 수 있는 남다른 감각이다. 온전히 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누구나 돌봄에 기대 살아간다는 진실을 몸으로 보여주며, 건강하고 젊은 사람이 아프고 늙은 사람을 돌볼 것이라는 믿음에 도전한다.”¹³ 모두 고립되지 않기 위한 연대를 만들어간다. 사회적으로 의존과 돌봄이 필요한 이들은 독립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독립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다. 독립이란 어느 특정 시기가 되면 도달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며 매순간 시도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장애여성독립생활운동(Independent Living)에서 ‘독립’이란 모든 일을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의존과 돌봄을 주고받으며 잘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 어느 누구도 의존과 돌봄 없이 살아왔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사회에서 어떤 이들의 의존과 돌봄의 권리는 독립의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지, 성공의 가능성을 증명해야 하는지 드러내야 한다. 독립의 자격을 묻는 것은 사회에서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자격을 묻는 것과 같다.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 ‘개인 공간’을 보장하는 지원주택으로 몸을 이동했지만 여전히 고립된 삶을 마주하기도 한다. 물리적인 공간을 바꿔더라도 시설에서 종일 일을 하는 일상이 그대로 이어지고, 서비스 지원자-대상자의 관계가 변화할 수 없는 나에 대한 모든 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가 시설 밖에서도 적용된다면 당사자의 삶은 시설화될 수 밖에 없다. 주거권은 다양한 시민이 함께 정주하는 중요한 기반이다.¹⁴ 이 때 주거는 머물 수 있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관계를 맺는 곳이다. 주거권을 보장하는 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관계와 자원을 찾고 주도해보는 경험을 조력, 지지해야 한다.¹⁵ ‘돌봄 관계에서 사생활과 친밀한 관계가 통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하며 동의와 자기결정 권리에 대한 논의 속에서 탈시설 권리가 연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돌봄이란 돌봄 지원자-대상자가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가 아닌 내 일상에 다른 사람 들어와있고 나도 들어갈 수 있는 상호적 관계, 독점하지 않는 관계, 결정과 책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를 조직하고, 자원이 없는 서로의 삶을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다양한 형태의 돌봄이 가능해야 한다.¹⁶ 따라서 체제전환의 관점에서 사회재생산의 가치를 자본주의 체제의 생산의 가치로서 돌봄 정의를 함께 고민해나갈 때 모두의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 01 황지성, 「장애여성의 시설화 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부녀보호지도소 사례를 중심으로, 1961~2010」,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 02 조미경, 「장애인 탈시설 운동에서 이뤄질 '불구의 정치' 간 연대를 기대하며, 시설사회, 장애여성공감. 와온, 2020.
- 03 황지성, 앞의 글,
- 04 김순남, 「강제된 장소, 강제된 관계를 질문하는 탈시설 운동」, 시설사회, 장애여성공감, 와온, 2020.
- 05 서울시 복지정책실 보도자료, 「서울시,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과 시설거주 장애인 모두 행복한 장애인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 2023. 7. 20,
- 06 진은선, 「시설사회에서 '노동'은 무엇인가, 2020년 IL과 젠더포럼, <일 할수록 힘든 사람들-시설사회에 도전하는 동료관계를 상상하며> 자료집, 장애여성공감, 2020.
- 07 2019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통계
- 08 김동기 외, 「중증장애여성의 성·재생산 영역에서 차별 경험과 인권증진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2.
- 09 진은선, 「아무것도 오염되지 않은 깔끔한 관계는 불가능하다」, 〈팀우프〉, 2022.
- 10 나무, 「피해자는 어떻게 동료시민이 될 수 있을까」, 2021년 IL과 젠더포럼 〈시설사회, 제도화 이후에 무엇이 오는가: 장애인 탈시설 운동의 현재와 미래〉 자료집, 장애여성공감, 2021.
- 11 이진희, 「불구의 몸들이 서로 돌보는 정치」, 문화과학 2023년 가을호 (통권 제 115호), 2023.
- 12 이진희, 위의 글
- 13 장애여성공감 20주년 기념선언문, 「시대와 불화하는 불구의 정치」, 2018.
- 14 김순남, 《가족을 구성할 권리》, 오월의 봄, 2022.
- 15 조경미, 「탈시설 정책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가」, 2022년 IL과 젠더 라운드테이블 〈자기결정권, 돌봄, 섹슈얼리티를 통합적으로 고민하기〉 자료집, 장애여성공감, 2022.
- 16 이진희, 국가권력을 가해하는 불안과 즐거움을 욕망할 권리를 고민하며, 숙명인문학연구소 HK+ 국제학술대회, 2022.

노동자계급 정치로서 페미니즘 운동의 방향

정은희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einroterapfel@gmail.com

시몬 드 보부아르는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했다. 그런 여성의 위치는 오늘날 어떠할까?

여성 10명 중 6명 이상은 임금 노동자로 살고 있고 그 경향은 늘어나고 있다.* 그와 함께 전업 주부의 수는 줄어들고 있다.** 임금 노동자 2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이며, 최저임금을 받는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70% 이상은 여성이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다수도, 실업자 다수의 성별도 여성이다. 시간당 임금은 남성 정규직 > 남성 비정규직 > 여성 정규직 > 여성 비정규직 순이다. 여성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남성 정규직의 38.8%일 뿐이다. 청소, 콜센터, 톨게이트, 가스검침, 요양을 비롯해 여성 노동자가 다수인 직장은 모두 최저임금 사업장이다. 이러한 성별 직종분리 추세는 확대돼 왔으며, 여성 비율이 많은 직종일수록 임금이 낮다. OECD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해 온 성별 임금 격차는 31.1%로 2022년 더욱 벌어졌다. 여성 연금 수급액 수준은 남성의 5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즉, 여성 다수의 경제적 조건은 임금 노동자며, 더 불평등한 조건에서 일한다.

여성은 경제적 차별을 겪지만, 구조적 젠더폭력 역시 경제적 조건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 여성 3명 중 1명(35.2%) 이상은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하며,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이 수는 5명 중 2명으로 늘어난다. 즉,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성폭력 경험률이 증가한다. 매년 수만 건이 신고되는 가정폭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저소득 가구의 여성은 부유한 가구의 여성보다 가정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3.5배 더 높다. 또 빈곤은 여성이 가해자로부터 떠날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켜 폭력에 노출되는 시간을 연장하기 때문에 학대를 악화한다. 성폭력 발생률 역시 소득이 감소할수록 급격하게 증가한다. 미국 법무부 통계국에 따르면, 가구 소득이 7,500달러(약 1천만원)

* 15~64세 사이 여성 고용률은 61.9%(2023년 10월)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 올 1월 기준 육아가사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 인구는 698만1000명으로 1년 전 709만6000명에서 11만5000명(1.6%) 감소했으며, 이 수치는 2013년부터 계속 내림세다.

미만인 사람은 가구 소득이 75,000달러(약 1억원) 이상인 사람보다 성폭력이나 강간 사례를 보고할 가능성이 12배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여성억압과 차별은 경제적 조건과는 상관없는 여성 일반의 문제로 여겨져 왔지만, 사실 그것은 경제적 지위와 정확히 반비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 이유는 바로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가 성과 계급적 위계로 노동자계급 여성의 지위를 끌어내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성억압과 착취는 자본주의 본연의 속성이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란 생산수단 소유 여부로 계급이 나누어지는 계급사회다. 이 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는 노동력밖에 소유하지 않은 노동자를 착취한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모두 동일한 형태로 착취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는 가부장제와 인종주의와 결합하여 노동자의 고유한 성별과 신체와 출신에 등급을 매겨 서로를 경쟁시킨다. 그래서 어떤 노동에는 고가가 매겨지지만, 구조적으로 저임금 일자리로 떠밀리는 사람들이 있으며, 노동력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거나 노동을 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존재한다. 이 같은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가 가장 먼저 임금을 깎는 대상은 여성이다. 그리고 성소수자의 존재는 지워진다. 그러나 남성에게는 당연시되는 노동강도를 비롯해 남성 노동자 역시 성별을 이유로 억압된다. 그리고 그러한 억압을 통한 이득은 이 자본주의 체제가 비호하는 한 줌의 자본가들에게 돌아간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임금은 왜 가장 먼저 깎이는 것일까?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 리즈 보겔에 따르면, 그것은 자본가계급이 노동자계급을 세대에 걸쳐 착취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계속해서 재생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본은 생산영역과 재생산영역을 분리하고 가부장적 성별분업을 토대로 생산영역은 남성 중심으로, 재생산영역은 사적으로 여성에게 떠맡겨 가사돌봄 노동을 무급으로 수탈한다. 여성의 성은 혼인에 구속되며 임신출산은 국가 인구정책의 대상이 되고, 물론 임신출산과 가사돌봄을 사적으로 떠맡은 여성은 불완전한 노동자로 전락하여 채용에서부터 임금과 승진승급, 해고(사내 부부 중 여성 해고), 불안정한 고용형태까지 다양한 차별을 받는다.

이는 여성억압과 차별의 원인이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에 있다는 점을 가리킨다. 즉, 여성을 옹호할 이중의 굴레를 철폐하기 위해서는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맞선 싸움을 우회할 수 없다. 그러면 이 같은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의 여성억압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의 동맹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 운동의 동맹을 제안한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노동자계급에 토대를 둔 페미니즘 운동이며, 여성과 성소수자 노동자들이 일궈가는 반자본주의의 계급투쟁이자 사회주의 페미니즘 운동이다. “페미니스트가 아닌 사회주의자는 시각이 좁고, 사회주의자가 아닌 페미니스트에게는 전략이 결여돼 있다.”(루이스 닐랜드)

우리는 여성억압과 착취를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에 따른 결과로 직시한다. 따라서 여성 억압과 착취를 철폐하기 위해서는 계급투쟁이 필요하다. 신당역에서 여성노동자의 죽음 전 일어난 수많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수 있었다면, 아니 살해된 뒤에도 산재 적용도 하지 않는 공사를 규탄하며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수 있었다면, 벅슨의 페미니즘 사상검증에 게임 디자이너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노동자로서 자본에 맞설 실제적인 힘을 조직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노동자계급의 성과 재생산 문제에 계급투쟁의 수단을 채택하고, 고안하고 연대한다면, 잉여가치에 굶주린 자본을 타격하고 그들의 질서에 맞설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는 페미니즘을 문제로 계급투쟁을 벌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아르헨티나 크라프트란 공장에서는 한 여성 노동자가 관리자에게 성적 괴롭힘을 당하자, 여성위원회가 파업을 조직해 가해자를 쫓아냈다. 남성만 고용했던 마디그라프의 한 공장에서선 성별전환을 이유로 해고된 트랜스여성의 복직을 위해 파업이 조직됐다. 미국 맥도날드 여성 노동자들도 직장 내 성폭력에 항의하며 파업을 일으켰다. 지난해 U세대(유니온 세대) 대표주자 중 하나인 스타벅스노조(SBWU)는 성소수자 지지 장식품 금지에 맞서, 또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자긍심 파업(Strike with Pride)'을 벌여 150여 매장을 멈춰 세웠다.

더구나 전국적인 여성파업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올해만 해도 3개 지역이 여성파업을 일으켰는데, 지난 6월 14일 스위스에서는 여성파업이 일어나 30만 명이 전국적 파업 시위에 참여했다. 지난 10월 24일에는 아이슬란드에서 다시 대규모 여성파업이 일어났다. 지난 11월 30일에는 스페인 바스크 지방에서 페미니스트 단체와 여러 노조가 연합해 '공공 공동체 돌봄 시스템'을 요구하며 '페미니스트 총파업'이라는 이름의 여성파업을 일으켰다.

여성은 더 이상 피해자로서 남을 수 없다. 여성은 이 사회를 생산하는 절반의 주체이자 재생산하는 주체다. 따라서 이 체제가 여성을 계속 차별하고 피해를 입힌다면, 우리는 다른 세상을 위해 현존하는 세상의 생산을 중단할 필요가 있고, 자본가계급에 맞선 위력을 조직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다른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 2016년부터 여성살해에 맞서 대대적으로 조직된 아르헨티나 니우나메노스 여성파업에 대해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파올라 바렐라도 "2015년의 핵심은 인권운동의 시각에서 여성을 성폭력의 희생자로 본 것이었다면, 2016년에는 여성을 일하고 생산하는 주체로 정립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

자유주의와 분리주의, 교차성과 계급

때문에 우리에게 90년 중반 이후 성주류화라는 이름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떠받들어 온 정치세력에 편입해 들어간 자유주의, 또는 체제 내 제도화된 페미니즘도, 초역사적 가부장제를 신봉하며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성을 구분하고 여성억압의 원인을 가부장제로 '환원'할 뿐 자본주의 체제

와는 불화하지 않는 분리주의 페미니즘도 대안이 될 수 없다.*

교차성**은 터프 등 분리주의나 전체주의 세력에 반하여 다양한 주체가 겪는 억압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었지만, 역설적으로 자본주의 체제 변혁 운동을 조직하는 데에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를테면 교차성은 여러 정체성 중의 하나로 계급을 취급하는 경향이 있으며, 인종이나 성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두지만 계급은 평가절하된다. 애초 1970년대 사회주의 레즈비언 페미니스트 단체 콤바이 리버 콜렉티브(CRC)는 정체성에 대한 자기 인식부터 이후 다른 해방 운동과의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순간으로 여기며, 모순이 ‘교차’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했다. 그러나 동구 붕괴 뒤 포스트 모더니즘의 유행 속에서 콤바히 리버 콜렉티브가 제기한 정체성에 관한 문제의식은 탈계급화한다.

물론 여성과 성소수자를 억압하는 모든 문제가 계급으로 ‘환원’되지는 않지만, 억압과 착취의 범주를 명확히 하지 않고는 설명될 수 없다. 계급은 착취 관계이며, 성과 인종 등 이른바 정체성은 억압관계다. 자본은 다양한 생물학적, 또는 자연적 차이를 위계화하고 억압하여 착취를 정당화한다. 해방적 관점에서 보면, 피부색이나 출생지, 생물학적 성별 또는 성적 지향의 차이는 인정돼야 하지만, 계급적 차이의 경우, 문제는 계급을 폐지하는 것이 된다. 이는 억압의 위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억압과 착취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부는 마르크스주의가 ‘계급 환원주의’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계급 분석’의 중심성을 옹호한다고 해서 이를 임금 투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20세기 스탈린주의 공산당과 노동조합 관료의 상당수가 편협한 경제주의 정치를 펼치면서 ‘계급 정치’와 억압에 맞선 운동 사이의 분열을 심화시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스탈린주의와 마르크스주의를 동일시하는 잘못된 가정 하에서만 마르크스주의가 계급 착취와 젠더 억압, 인종주의, 식민지 억압 또는 섹슈얼리티의 ‘교차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오히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초기부터 자본주의의 여성억압에 주목하며 여성과 성소수자, 유색인종의 해방이 사회주의 운동의 핵심 과제 중 하나라고 여겼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도 “검은 피부의 노동력이 뜨거운 철로 낙인찍히는 한, 흰 피부의 노동력은 스스로 해방될 수 없다”라고 기록했다.

* 반면,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역사적 가부장제를 말한다. 즉, 가부장제란 사유재산 축적에 따라 역사적으로 형성된 기제이자 노예제와 봉건제, 자본주의 등 각 시대에 걸쳐서도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 예를 들면, 봉건제에서는 남성가장 농노에 아내와 아이들이 귀속되었더라도 공동노동과 공동육아를 수행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케인스주의와 신자유주의 시기에서의 여성억압이 상이하다. 케인스주의 시기에는 남성양양모델이 지배적이었으나, 신자유주의 시기에는 그렇지 않다. 즉, 자본주의보다 수천 년 전에 등장한 가부장제와 인종차별은 비역사적인 실체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 관계의 틀 안에서 새로운 형태와 구체적인 사회적 내용을 획득했다.

** 교차성에 대한 입장은 스페인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호세피마 L. 마르티네스의 “페미니즘, 교차성, 마르크스주의: 젠더, 인종, 계급에 대한 논쟁”을 주로 참조한 것임을 밝힌다.

***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신성가족에서, 역사의 시대적 변화는 “자유를 향한 여성의 진보와 비례하며, 여성해방이 이루어진 정도가 인간의 보편적 해방을 측정하는 자연적 척도”라는 공상적 사회주의자, ‘샤를 푸리에’의 말을 인용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않으면 누구도 자유롭게 않다”

빵과장미* 이론가 중 한 명인 스페인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호세피마 L. 마르티네스가 “페미니즘, 교차성, 마르크스주의: 젠더, 인종, 계급에 대한 논쟁”에서 밝힌 것처럼, “계급 분석은 자본 축적을 위한 잉여가치 추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여성 재생산 노동의 전유, 거대 독점 자본의 집중, 금융자본의 팽창과 전쟁과 세계적 약탈로 이어지는 제국주의 국가 간의 경쟁으로 전개된다. 이는 또한 자본이 노동자계급 내에서 착취를 극대화하고 분열을 유발하기 위해 인종차별, 여성혐오, 외국인 혐오 이데올로기를 조장하면서 ‘차이’를 사용하고 수정하는 방식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계급 분석은 ‘경제 환원주의’가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요소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며 인종주의, 가부장제 또는 이성애주의와의 계급 관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성별, 인종, 섹슈얼리티 등 타고난 차이를 억압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를 변혁하기 위해서는 계급투쟁을 우회할 수 없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 운동의 반자본주의의 계급동맹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 운동은 함께 여성억압, 성소수자 혐오, 인종차별에 맞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양자의 연대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노동자계급 자체의 요구이며, 체제 변혁을 위한 전략이다.

* ‘빵과장미’는 아르헨티나 사회주의 페미니즘 단체로 페미니즘 제도화에 반대하며 노동자계급이 주도하는 여성 운동을 지향한다. 이러한 빵과장미는 2000년대 초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후 ‘사장 없는 기업’을 내건 자주관리 운동의 급속한 성장을 배경으로 한다. 빵과장미는 현지 사회주의노동자당(PTS) 연관 단체이기도 하다. 현재는 세계 14개국에 국제 빵과장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참고 자료

- 01 이원배, “[종합]여성 고용률, 역대 최고...자녀 있는 여성 취업률 상승 영향”, 브리짓경제, 2023.11.21.
- 02 조현숙, “아빠가 살림해요...전업주부 남성 21만명 돌파”, 중앙일보, 2023.2.23.
- 03 배지현, “비정규직 여성 5명 중 2명 꼴로 직장 내 성희롱 경험”, KBS, 2023.9.3.
- 04 Sara Reis, “DOMESTIC ABUSE IS AN ECONOMIC ISSUE – FOR ITS VICTIMS AND FOR SOCIETY”, Child Poverty Action Group, 2019. 12.6
- 05 Leah Fessler, “The poorest Americans are 12 times as likely to be sexually assaulted as the wealthiest”, QZ, 2018.1.3.
- 06 배예주, “성소수자 권리의 전진과 후퇴, 2023년에 벌어진 일들”,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4.01.03.
- 07 호세피마 L. 마르티네스, “페미니즘, 교차성, 마르크스주의: 젠더, 인종, 계급에 대한 논쟁”, 일간좌파, 2019.2.24.
- 08 2024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제안서

기후위기 시대, 공공재생에너지로 체제전환운동을!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영역’은 체제전환의 방향과 경로를 가늠하는 가장 핵심적인 쟁투의 영역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전환 자체가 지체될 뿐 아니라,

그나마 작동하는 힘도 자본의 배를 불리며

‘모두의 부’를 약탈하는 방향에 맞춰져 있을 뿐이다.

기후정의운동이 제기하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전환운동’의 전략과 경로에 대해서

사회운동 차원의 폭넓은 토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에너지 영역’에서 우리는 체제전환운동의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하고

사회 변화/전환의 계기들을 조직해야 한다.



가로지르길4~5
문자통역 QR코드

세션 진행

사회 : 류민 (충남노동권익센터)

발제1. 기후위기 시대 국가/공공의 역할은 무엇인가 - 서영표 (제주대 사회학과)

발제2. 공공재생에너지운동, 어떻게 대중운동으로 만들 것인가? -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토론1.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토론2. 황인철 (녹색연합)

토론3. 조진 (공공운수노조)

토론4. 부순정 (제주녹색당)

토론5. 손솔 (진보당)

토론6. 이재백 (정의로운에너지전환을위한태안화력발전노동자모임)

준비팀

공공운수노조, 기후정의동맹,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후위기 시대 국가/공공의 역할은 무엇인가

서영표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1. 거대한 위기, 협소한 시야

지금 기후위기는 재난에 근접하고 있다. 이미 재난상태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기후위기를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은 현격히 줄었지만, 여전히 기술적 해결책과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재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사람들 대부분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착되어 생존을 위해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생활양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의 경우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수준은 처참할 정도 낮아 제대로 된 감축과 적응 노력조차 없다.

기후운동 진영도 문제가 없지는 않다. 물론 기후운동만 탓할 수는 없다. 사회운동 진영 전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부문 운동으로 쪼개져 사회-경제-정치-생태의 다중 위기를 총체적으로 분석할 역량이 부족하다. 거대서사에 대한 두려움 또는 자기검열이 지금 절실하게 요구되는 체계 차원의 비판을 회피하게 한다. 모든 것을 경제적인 문제로 환원하는 지배적 이데올로기 앞에서, 정작 그러한 환원주의를 비판했던 사상을 '경제주의'라고 비난하면서 내던져 버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총체적 인식의 부족은 환원주의를 초래한다. 우선 사회-경제적 위기와 생태적 위기가 분리되어 국지적 쟁점으로 논의된다. 그리고 생태적 위기는 기후문제로, 기후는 에너지 전환으로, 에너지는 비용문제가 환원된다. 비용문제가 되면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고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쟁점이 된다.⁰¹ 녹색뉴딜의 여러 판본이 제기되고,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전개되지만, 거기서 '가능성'은 위기의 원인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논리에 갇혀 자원 마련과 성장동력 사이에 맴돌다. 현 체제의 지속 불가능성이 지적되고, 거기로부터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야 하는 낡은 체제 안에서 타협 가능한 길을 찾으려는 시도의 한계다.

물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일 변할 수는 없다. 급진적 판본의 이행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지금 당장 자본주의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이 에너지원의 전환과 거기에 드는 비용으로 국한되면 이행은 에너지 산업 재편으로 좁혀지고, 결과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이행은 멀어진다. 현실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상상력을 가로막아, 실현 가능성 판정 기준이 될 때 전환은 '불가능'하다.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의로운 전환은 전환비용 부담이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정의로운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국가일 수밖에 없다. 국가 수준의 장기 계획과 투자 전략, 산업 재편 계획, 조세제도의 변화, 국가와 기업의 회계원칙 변화 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도 '정의'의 주제가 일자리와 소득의 문제로 좁게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에너지 전환은 생산과 소비, 이동과 거주 양식의 자체의 전환을 포함할 때에만 의미가 있다. 경제와 정치의 패러다임 자체의 변화가 추구되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은 성장-이후(post-growth) 사회로의 이행의 부분일 뿐이다.

이쯤에서 반론이 제기된다. 지금 당장에 에너지 전환이 절실한데, 이런 전반적인 사회전환 요구는 현실성이 없는 유토피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생산과 소비, 이동과 거주 양식의 근본적인 삶의 양식 변화가 가져오는 의식 변화 없이는 사람들은 일상의 관행에 고착되어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말만 요란할 뿐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없는 현실을 보라. 기후위기는 근대성 비판, 그리고 근대성의 근저에 놓여 있는 실증주의적 과학 패러다임의 비판으로부터, 경제학 비판으로 나갈 때만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학 비판의 핵심은 경제의 목표를 다시 정의하는 것이어야 한다.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질적인 만족과 자기실현의 목표 말이다. 일상의 용어로 말하면 이 목표는 '행복'이다. 지금의 체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론적 비판과 일상의 감정 상태가 만날 때 정치가 출현한다. 정치는 만족을 향한 집합적 행동이다. 케이트 소퍼(Kate Soper)가 대안적 쾌락(alternative hedonism)이라고 불렀던 그런 만족을 향한 정치가 실현할 길을 찾아야 한다.⁰²

이제 기후위기 운동은 기후위기를 사회위기와 경제위기 바깥에서 논의할 수 없다.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가 기후위기를 사회 재생산 위기와 결합해서 설명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⁰³ 기후운동이 케이트 레이워스(Kate Raworth)가 지적하는 환경적 한계(environmental ceiling)에 기울어, 사회적 기초(social foundation)를 이행계획에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할 수 있다.⁰⁴ 생태계의 위기를 초래하는 자연적 한계(natural limits)라는 외적 한계와 함께 현대적 기준의 인간 삶의 한계, 즉 내적 한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외적 위기가 내적 위기로 체험될 때 정치적 행동이 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사람들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는 쟁점은 불평등이다. 사회운동 진영에서조차 거의 논

의되고 있지 않은 ‘계급’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 또는 유사한 경제적 조건을 공유하고 있는 객관적 위치로서의 계급이 당장 중요한 쟁점은 아니다. 자신이 소득과 자산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노동하는 계급을 경멸의 눈으로 본다. 끝없는 경쟁에 내몰리면서 불로소득 추구 기회에 끼어들기 위해 노력하는 노동하는 다수는 정체성에 상처를 받고 굴욕감을 느낀다. 계급이 갖는 도덕적 의미(moral significance)가 중요한 정치적 주제인 것이다.⁰⁵ 승자들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소비에 빠진다. 그런데 상처받은 노동계급은 상층계급의 소비를 모방하는 것으로 만회하려 한다.⁰⁶

인간 생존과 필요(needs) 만족을 훨씬 초과하는 욕구(wants)와 욕망(desire)이 광고산업과 부채 경제로 팽창한다. 이런 감정 상태 앞에서 잘 계획된 에너지 이행전략은 무력하다. 경쟁과 실력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누군가를 이겨서 얻는 승자독식의 만족에 익숙하다. 그것이 인간이 진화과정에서 얻게 된 역사적 역량인 상호의존과 연대를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면서 그렇게 한다. 이런 사회에서 삶은 오직 타자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얻어질 수밖에 없는 데, 이것은 사회를 지탱하는 토대를 허무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다. 이런 무한경쟁이 금융과 부채에 의해 뒷받침되어 팽창할 때 지구생태계를 위협에 빠진다는 사실은 매일의 경쟁에 치진 사람들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다. 그런데 지금 언급된 사실들은 소수에게만 허락된 부와 권력을 지탱하기 위해 대다수를 굴욕과 좌절로 몰아넣고 생존을 조건 자체를 박탈하고 있다. 이런 박탈을 감정과 정서의 세계에서 이해하고 정치의 소재로 삼는 체제전환의 길이 모색되어야만 한다.

2. 비판과 이행의 근거

1) 이론적 기초-인권과 필요

생태적 위기를 경제-사회위기와 결합하고 외적 한계를 내적 한계로 체험함으로써 출현하는 정치적 행동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규범적 근거를 찾아야 한다.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규범적 근거는 인권이다. <UN 인권선언> 25조 1항은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태적 위기 시대에 이 조항을 새롭게 해석하면,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만 하는 사회적 기초를 토대로 삼아 환경적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구간 안에서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인권보장은 단순히 ‘생존’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적합한 생활수준’은 겨우겨우 연명하는 것이 아니다. 인권이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규범적 기초가 된다면, 이윤과 자본축적의 논리가 인간

의 생존조차 침해하는 경제체제는 용인되기 어렵다.⁰⁷ 주류경제학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기 어렵지만, 인권에 기초해 젠더 평등을 추구하는 경제모델을 기획한다면 정부는 노동현장에서 젠더 격차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과 돌봄노동 분담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입해야 한다.⁰⁸ 출생률 저하에 따른 인구단절을 걱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은 논리적으로 공존하기 어렵다. 주류경제학의 논리는 그것의 근저에 놓인 인권의 개념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현재 직면하고 있는 사회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경제체제를 추동한다.

하지만 인권 담론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인권 담론은 인권의 주체인 개인이 모두 동등하다고 가정하는데, 여기서 인간은 관념론적으로 정의된 '가상의 인간'이다. 사회적 행위 이전에 이미 가설적으로 완결된 자기 정체성을 가진 주체가 전제되는 것이다. 인간은 육체적 존재이며 신체적·문화적·사회적인 한계 안에서 구성되는 존재이다. 그렇기에 개인은 협동적·상호의존적인 존재다. 그리고 인간은 자연적 존재로 동물과 많은 것을 공유한다. 둘째, 권리 담론은 추상적이고 형식적이다. 내용(선한 것, 좋은 것)이 빠진 절차적 권리(옳은 것)에 그친다. 현실에서 절차적 권리를 행사하기에는 지식과 자원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있으나 마나 하다. 셋째, 개인주의적인 자유주의 권리 담론은 권리의 침해가 개인이 아닌 구조적 원인으로부터 발생할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 환경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 의한 권리침해, 국가권력의 구조적 폭력에 의한 권리침해는 책임 소재는 개인에게서 찾아질 수 없다. 넷째, 자유주의 권리이론은 합리적 주체들의 의도된 행위만을 대상으로 구성되지만, 구체적 현실에서는 다수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드러나는 권리침해가 나타난다. 이렇듯 의도하지 않는 결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길 또한 고립된 개인을 넘어서는 집단적 토의과정을 찾아야 한다.⁰⁹

이언 고프(Ian Gough)는 인권 개념이 기후위기 시대 지속 가능한 복지(sustainable welfare) 개념을 기초로 한 체제전환 계획의 규범적 기초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한다.¹⁰ 국제관계에서 인권은 대부분 정치적 수사에 그친다. 추상적이어서 정치적으로 무력하다. 더구나 다음 세대의 권리와 비-인간 동물종의 권리를 포괄할 수 없기에 생태적 위기를 제대로 포착할 수 없다.¹¹

인권은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짝이 되기에는 부족하다.¹² 고프가 제시하는 대안은 필요(needs) 개념이다. 그는 필요가 지속가능성과 짝이 되어 인권 정치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¹³ 우선 필요개념은 '객관적'이다. 인간 생존과 자기실현을 위해 요청되는 생리학적이고 심리적인 조건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실재에 비추어 현재의 상태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필요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과 정의를 인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합리적 토론과 숙의의 사실적 근거를 제시한다. 그리고 필요는 다른 항목으로 대체될 수 없다. 주류경제학이 주장하는 소비자 욕구는 선호(preference)로 정의되고, 이러한 선호는 다른 재화와 서비스로 대체될 수 있다. 종종 화폐적 양으로 서로 교환 가능한 것으로 가정된다(약한 지속가능성). 하지만 인간 생존에 필요한 항목들

은 그렇게 대체될 수 없다(강한 지속가능성). 소비주의적 욕망은 결코 충족될 수 없지만, 필요는 (비록 상대주의적으로 정의될 수밖에 없을지라도) 충족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객관적이고 충족의 정도를 속의 과정으로 판단할 수 있기에 세대 간의 필요 충족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¹⁴

고프는 기본적 필요(basic needs)를 원리적 차원에서 정의한다. 인간 생존의 최저선으로 정의하지 않고 추상적 수준에서 정의한다. 여기에는 자기 삶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결정 과정에의 '참여'(participation), '신체적 건강'(physical health), 그리고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변화를 추구할 '자율성'(autonomy)이 포함된다. 이러한 기본적 필요는 적합한 영양분과 식수, 적합한 주택, 위험하지 않은 주거환경과 노동조건, 적절한 보건의료, 아동기의 안전, 일차적 관계의 보장, 물리적 안전, 경제적 안전, 안전한 출산과 육아, 기초 교육을 포함하는 보편적 필요 충족 수단으로 구체화 된다. 그리고 이러한 보편적인 충족 수단이 문화와 역사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것은 필요 충족의 사회적 선행 조건을 가리킨다. 모두가 경제정책의 토대가 되어 정치적 논의의 주제가 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정의된 필요의 충족은 생태적 한계라는 천정과 인간 생존의 최소 조건이라는 바닥 사이의 지속 가능한 생산-소비 구간을 확정하는 기초다.

2) 일상과 도덕 감정과 기후위기

생태적 지속가능성이 정치적 쟁점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도덕 감정에 호소해야 한다고 했다. 필요개념은 불평등과 빈곤 문제를 검토하는 기준이 되어 당장 무엇이 문제인지 객관적 지표로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필요가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의 목록으로 제시될 때, 그것의 위배는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러한 도덕 감정은 종종 비과학적인 것으로 폄하되어 주목받지 못하지만, 현실의 불평등과 빈곤이 사람들의 도덕 감정과 만날 때, 과학의 이름으로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옹호했던 낡은 과학 패러다임을 근본에서부터 비판하는 힘이 생긴다. 사회전환의 힘은 대중에서 나오고, 대중은 규범적 세계에서의 도덕적-정서적 체험을 경유했을 때 정치적 주체가 된다. 주류경제학은 이제 과학적 지위를 의심받게 된다. 이윤과 축적이 아니라 필요 충족이 경제학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여기에서 국가의 공적 개입 방향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생긴다. 국가(권력)는 스스로 전환의 길에 나서지 않는다. 힘으로 강제될 때만 조금씩 권력과 자원을 내어준다. 국가는 그 자체로 민주적이지 않고, 언제나 사회의 힘으로 강제될 때 조금씩 민주화된다. 근본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근대 민주주의가 갖는 장점은 국가권력이 태생적으로 계급 권력과 민주적 원리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에 있다. 국가는 원리적으로는 민주적이지

* 고프의 기본 필요의 정의는 필자와 다르다. 필자는 기본 필요를 동물과 공유하는 기초적 필요로 정의하고 문화적 차원과 역사적 차원으로 필요목록의 확장 and 충족 수단이 변화하는 것을 인간적 필요로 설명했다. 서영표, 2012

만, 실제로는 계급적이다.

정치의 문법이 일상에서 얻어진 실천적 세계 인식 사이의 소통, 토론, 숙의를 잠정적 합의로 이끄는 것이라면, 정치의 목적은 그런 합의로 도달한 시장과 국가의 한계 인식에서 사람들의 윤리의식과 배치되고 필요 충족을 방해하는 물질성을 제거하는 경제체계 전환의 기획을 끌어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환은 시장과 국가의 작은 틈새의 예시적 실험만으로 실현할 수 없다. 물론 그런 실험들로부터 역량이 축적되어야만 가능하겠지만, 전환은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는 자본주의 이후 사회의 윤곽이 없이는 생각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행은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다른 이해관계들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불확실한 과정일 텐데, 많은 사람은 이런 불확실성에 자신의 미래를 걸지 않을 것이다. 윤리적으로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다수의 복지를 보장하는 더 좋은 사회로 이행이라는 근거는 그 자체로 사람들을 설득하기에 부족하다.

하지만 기후위기라는 지구적 규모의 위기를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오랫동안 기후위기 부정론자들과의 투쟁이 있었지만, 2024년 겨울의 극단적 기후 현상을 목격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은 더는 방관할 수만은 없는 위기를 감지하고 있다. 기후 운동 진영에서는 보수적이라고 비판받는 IPCC 보고서조차, 현행의 생산과 소비 방식으로는 재난을 막지 못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최근의 IPCC 보고서는 시장을 매개로 한 온실가스 저감이 아닌 충족 경제로의 이행을 제시하기 시작했다.¹⁵ 불필요한 사치품, 필요충족과 무관한 금융산업과 관련된 투자와 소비, 소비를 유혹하는 엄청난 광고비용, 확대재생산을 촉진할 수밖에 없는 부채경제는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넘어선다. 이제 생산양식과 소비양식은 기본적 필요충족이라는 바닥(floor)과 기후위기 시대에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초과(excess) 생산/소비의 천정(ceiling) 사이에 있어야만 한다. 사이(in-between) 경제, 또는 도넛(donut) 경제라고 불리는 모델이다.¹⁶ 지구-공학적(geo-engineering)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녹색성장-녹색 자본주의를 꿈꾼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 추세와 인류세로 지칭되는 인위적 생태파괴의 추세는 공학적-자본주의의 위기 해결의 시간을 허락하고 있지 않다. 지금 우리는 2030년, 그리고 2050년의 파국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다.¹⁷

분명 기후위기와 3년 동안 겪었던 팬데믹은 거대한 전환의 시기를 예고하고 있다. 단기적이고 협소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생존의 조건 자체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기후위기와 팬데믹이 필요충족과 만족을 어렵게 하는 현상이라면, 우리의 과제는 그러한 현상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찾아 제거하는 것이다. 원인은 필요충족과 무관한 경제의 금융적 팽창과 그것을 지탱하는 불로소득 추구 경제에 있다. 이러한 원인진단은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윤리적 비판과 겹친다. 국가의 물질적 장치는 매우 공고하고, 습관화된 우리의 의식은 관행을 따르고 있지만, 생태적 위기는 기후운동에게 이론적, 도덕적, 과학적 정당성을 주고 있다.

3) 자연주의와 인간주의

근대적 계몽주의는 미신을 몰아내고 인간을 세계의 중심이 놓았다. 휴머니즘의 승리였다. 그런데 근대의 휴머니즘은 인간을 자연에서 분리해서 예외적인 위치에 놓았다. 자연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특징이 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안에서만 존재하는 인간의 역사적-공간적 특징도 거세되어 관념론적으로 정의되었다. 의무론적이든 공리주의적이든 인간은 시간과 공간 바깥에서 추상적으로 정의되었다. 그렇게 정의된 인간이 바라본 세계는 평면적이어서 감각 경험으로 얻어진 데이터로부터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체계였다.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구조주의의 근본적 비판은 이런 근대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이제 기후위기와 팬데믹의 시대, 인류는 인간의 예외적 존재가 아니며 자연/사물과의 관계로만 존재하는 잡종(hybridity)임을 깨닫는다. 잡종임을 인정하는 순간 인간의 취약성과 불안은 회피할 수 없다. 그러나 잡종임을 깨닫는 것,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자기 안에서와 자기 바깥에서 모두 관-개체적(trans-individual) 존재임을 깨닫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¹⁸ 근대를 벗어난 지식 패러다임 안에서, 그리고 기후위기와 팬데믹의 체험을 통해서 얻은 새로운 지식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기에 이러한 인식 전환은 포스트구조주의적이다. 그런데 인간이 자연적 존재임을 인정하기에 (철학적 실재론에 근거한)자연주의를 수용한다. 그러나 자연주의적 존재는 잡종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잡종은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에 열려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인간의 역사적 역량 발전을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¹⁹ 인간의 역사는 자연으로 환원될 수 없다. 비-환원론적 자연주의(non-reductionist naturalism)의 단계의 휴머니즘이라는 역설적 조합이 가능하지 않을까?

비-환원론적 자연주의 단계의 휴머니즘은 현재의 위기에 대응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삶의 양식을 만드는, 공진화(co-evolution) 과정의 현 단계에서의 (인간의) 집합적 역량의 표현이다. 인간은 더 나뉘질 수 없는 존재로서의 개체가 아니라는 철학적 인간학(philosophical anthropology)의 통찰이 우리를 일깨운다. 우리 안에 이미 사물과 타자가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타자와 사물 안에 우리가 있다. 바깥의 타자와 대상이 언제나 우리를 구성하는 요소라면, 그것을 깨달은 근대 이후의 휴머니즘은 타자와 사물, 자연을 함께 고려하는 삶의 양식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곧 인간의 생존조건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후위기와 팬데믹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는 학습의 체험이다.

이제 성장-이후(post-growth)의 삶, 더 강하게 표현하면 탈-성장(de-growth)의 삶을 실현해야 한다.²⁰ 우리가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는 이런 인식의 전환과 역사적 인간역량의 전환이 아직 시작 단계에 있다는 것에 있다. 생산의 관점에서 바닥과 천정 사이의 도넛 경제를 기획하고,²¹ 소비의 관점에서 소비주의적 쾌락과는 다른 타원의, 제고된 인간역량에 부합하는 대안적 쾌락(alternative hedonism)의 기회를 제공하며,²² 소득의 관점에서 노동을 폄훼하는 불로소득 추구 비판함으로써

다른 삶의 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 때로는 더 많은 국가의 공적 역할을 요구해야 한다. 국가의 공적 권력은 시장의 힘을 사회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지적했듯이 국가는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사회로부터의 조직된 저항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사회의 압력에 의해 민주화된 국가의 공적 개입의 핵심은 대중에게 권력을 나누어주고 민주적으로 시장과 국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회의 역량을 길러내는 것이다. 시장이 완전히 부정될 이유는 없다. 시장의 힘은 사회적으로 관리되지만, 사람들의 기호, 욕구, 필요가 표현되는 표현 체계로서의 시장이 탈-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라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공적(public)인 감시 아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민주화된 국가와 사회화된 시장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자율적 공동체와 결사가 번성해야 한다. 커먼즈가 번성하는 탈-성장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

3. 녹색전환과 국가의 공적 개입

1) 녹색전환과 일자리-노동자의 권리와 사회적 재생산

전환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완전히 탈-탄소화 한 전력생산이다. 하지만 전력생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전력산업에만 국한된 대안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스웨덴과 프랑스가 원자력에 기대어 저탄소 전력부문을 달성했지만, 이 나라들의 소비 배출은 그대로다. 따라서 전력과 에너지를 넘어 건축, 산업, 교통까지 탈-탄소화 할 수 있는 계획 필요하다.

탈-탄소화를 핵심으로 하는 녹색전환은 사회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시장은 이러한 사회적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회적 충격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적 개입이 계획되어야 한다. 충격을 감내해야 하는 주체가 노동자들이라면 이러한 공적 계획에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녹색전환과 무관하게 현재 고용조건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고용은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상대적 박탈과 빈곤도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고용위기에 겹쳐져 시장에 맡겨진 탈-탄소화 과정이 진행된다면 노동자들이 겪게 될 고통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현재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산업부문에 고용된 노동자들을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환은 정의로워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탈-시장적 공적 개입이 있어야 한다.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에너지 전환은 공정한 사회로 전환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사회적 재생산 노동을 확장하고 노동조합의 힘을 강화할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전환은 재교육과 재고용으로 현재의 숙련기술을 녹색에너지 기술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에너지 체계의 재편, 건물개량, 엄청나게 확대될 녹색 교통, 지속 가능한 농업부문 모두 탈산업화와

신자유주의의 공격으로 약해진 지역들이 되살아날 기회가 될 수 있다.*

교통 분야에서 전기/수소차 확대에 따른 전기와 수소공급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당연히 새로운 종류의 자동차 생산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녹색전환에 따른 교통인프라 변화도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녹색전환이 자가용 중심에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을 포함할 때 버스와 철도부문의 고용 창출이 유도될 수 있다.

녹색전환이 더 좋은 일자리와 더 공정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회가 된다는 것은 전환이 위기관리와 대응에 멈추지 않고 경제의 새로운 모델 추구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경제의 새로운 모델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노동조합 활성화는 당연한 전제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다면, 기술적 진보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노동 강도를 강화하는 현재의 추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노동자들은 기술진보에 따른 생산성 향상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 이것은 노동시간 단축과 여가 확대의 방향으로 노동 패턴의 변화를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술과 과학은 중립적이지 않으며, 정치적 주제가 되어야 한다.

녹색전환이 사회 전체의 정의로운 전환을 포함한다는 것은 노동에 대한 가치 평가의 틀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성적 분업에 따라 여성, 가족, 지역공동체의 무상노동으로 취급되었던 '사회적 재생산'(social reproduction) 분야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보건, 사회적 돌봄, 공적 서비스 같은 사회적 재생산 부문에의 의미 있는 투자를 확장되어야 한다. 필수적이지만 시장의 원리에 따라 비생산적인 노동으로 취급받았던 사회적 재생산노동에 주목하는 것 자체가 현행의 경제체계를 변화시키는 사회적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²³

2) 녹색전환과 소유형태

녹색 사회로의 전환이 에너지원의 전환을 넘어선 생산, 유통, 소비 방식의 전환을 의미한다면 다양한 소유형태가 정치적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자연마저도 자본으로 간주하고 가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위기를 겪고 있는 현재 조건도 새로운 소유형태에 대한 논의를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게 했다. 신자유주의는 사적 소유, 가치 추출(착취), 이윤 극대화를 사회의 기본원리로 강제했으며 그 결과는 참혹하다.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는 무성했지만,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은 요원하다.

새로운 에너지 체계와 소유형태를 관련지어 논의할 수 있다. 우선 에너지 전환의 핵심인 재생

*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배치, 전력공급의 확장, 녹색 교통체계의 발전에는 철강, 시멘트, 화학산업제품이 필요하다. 전환은 이런 분야의 탈-탄소화 계획을 촉구하고 있다. 중공업 분야가 탈-탄소화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계획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산업계에 혁신을 자극할 수 있는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연히 정부의 공적 개입의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

에너지(특히 태양광과 풍력)는 화석연료와는 다르게 지역적으로 분산된 에너지원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당연히 분산된 민주적 소유형태가 실험될 수 있다. 스마트그리드는 지역공동체에 의해 소유되고 관리되는 재생에너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여유 전력이 판매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에 의한 전기 저장기술, 지역공동체 소유의 저탄소 수소에너지와 대규모 에너지 저장시설의 개발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지역공동체는 산업에서 발생하는 열을 포집해서 난방에 사용할 수 있고, 공공건물에서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에너지체제의 전환은 연료 빈곤을 줄이고, 탄력성을 향상하며, 송전과 배전비용을 절감하고, 양질의 녹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분산된 에너지 체계는 지역사회의 결정과 자율성 보장해야 한다.

지역의 결정과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연료 빈곤을 종식하고 탄소 없는 안전한 에너지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에너지 믹스(energy mix)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계획일 수밖에 없다. 전국적 차원의 에너지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는 이유다. 지역적으로 분산된 재생에너지가 공동자원(common)의 성격을 부여받는다면 전국적인 에너지 전략이 포괄하는 에너지 믹스와 공급망은 에너지를 공공재(public goods)로 정의한다. 공동자원의 분산성과 공공재의 계획은 원리상 서로 충돌하지만, 공존할 수 있다. 공동자원과 공공재는 시장에 힘에 대항하는 두 가지 통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경제구조와 경제운영원리는 공적 소유(public ownership)와 지역공동체 소유(local community ownership)라는 새롭고 대안적인 형태를 통해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 여기서 핵심적인 원리는 시장이 제시하는 일원론적인(monist) 접근에 저항하여 다원주의(pluralism)를 실현하는 것이다. 시장 맹신주의는 자유주의의 실현을 내세우지만, 자유주의의 핵심원리 중 하나인 다원주의가 시장의 힘으로 무력화되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시장 맹신주의를 넘어선 녹색전환은 시장에 대항하는 다양한 소유형태가 변성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지역공동체 소유는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순수한 지역공동체 소유가 존재할 수 있지만, 지방 행정단위의 계획과 개입 아래 공적 소유와 시장의 사적 소유형태와 어떤 종류, 어떤 정도의 관계는 맺느냐에 따라 다양한 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도시 수준 행정단위의 경제활동이 이윤추구가 아니라 필요 충족이라는 사회적 기준에 따를 때 다양한 선택지들이 출현할 수 있다. 이러한 재편은 '무'에서 출발할 수 없다. 기존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도, 결사, 조직들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방 행정단위, 노동조합, 지역 기업, 다양한 결사들, 시민단체들의 잠재력이 실현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양한 조직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데서도 공적 계획과 개입은 필수적이다. 지방 자치 정부는 구매력을 활용해 재화와 용역의 주문과 조달을 통해 지역 순환경제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이 사회적 필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지속적인 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실제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노동자는 곧 소비자이기도 하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공적 소유, 공동체 소유와 더불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사적 소유 기업의 활동에 개입하는 방식은 정부의 공적 개입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노동자들의 기업경영 참여를 통한 사회적 책임 강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역경제의 전환은 공적 소유 아래 있는 토지와 자산이 민영화되거나 난개발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이용되었던 경향을 역전시켜야 한다. 지역공동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적 토지와 재산권 소유를 확장하고 노동자/시민의 이해관계와는 무관하게 금융시장에 투자되는 연금금(pension)의 공적 활용까지 고려해야 한다.

국가에 의한 공적 소유도 지방 행정단위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다. 지방 행정단위의 공적 소유형태는 시장을 사회적 통제 아래 두고 지역공동체 소유를 보호하면서 보편적인 필요 충족을 위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필요 충족은 보편적 기본서비스(Universal Basic Services)로 구체화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초경제(foundational economy)는 녹색전환에서 핵심적이다. 보편적 기본서비스가 충족되지 못해 발생하는 불평등은 기후변화의 위기와 함께 실패한 경제체계의 결과다. 더 나아가 사회적 불평등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생존 자체가 문제일 때 기후변화는 일상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의 문제로 인식될 뿐이다. 따라서 녹색전환은 탈-탄소화에 멈추지 않는 자본주의 이후 사회를 향한 계획이어야 한다. 당연하게도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확장은 공적 부분 확장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윤 동기와 상반되는 필요 충족의 원리는 모두가 받아들이고 있는 보편적 인권에 호소한다. 교육, 보건과 사회적 돌봄, 에너지, 물, 주택, 교통, 정보통신기술, 식량은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공적 소유는 국가 소유형태를 의미한다. 녹색전환이 시민의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고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공적 서비스와 재화의 국가적 소유가 요구된다. 역사적으로 국가 소유형태는 매우 관료적이어서 대중의 필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신자유주의적 시장 맹신주의가 득세할 수 있었던 것은 1945년 이후 서구의 복지 국가와 동유럽의 사회주의국가 모두에서 국가의 개입이 모두 비민주적인 관료주의로 전락했다는 역사적 조건에 기인했다. 그렇다면 녹색전환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국가 소유 기업은 과거의 관료주의와 달라야만 한다.

우선 국가 소유가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에너지와 물, 철도처럼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이 불가피한 분야는 국가 소유형태 아래 있어야 한다. 생산과 공급에서 전국적인 망과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연독점 부문은 기본서비스에 속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접근과 제공 모두에서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사적 소유는 적합하지 않다.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전환처럼) 핵심적 정책 목표 설정했을 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입에 필수적인 분야도 국가 소유로 남아 있어야만 한다. 이윤 동기에 의해 운영되는 사적인 기업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없다. 시장의 힘이 강하게 작동할 때 공동체적 소유도 에너지 전환과 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공동체 소유형태의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스스로 이윤 동기와 경쟁 기제에 포획됨으로써 자원을 낭비하는 과잉경쟁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또한, 핵심 부문의 공적 소유를 기반으로 한 공적 개입이 없는 공동체 소유형태의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거대자본에 쉽게 흡수된다. 국가의 개입으로 보호되고 육성되어야만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가의 공적 소유는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전국적 차원, 광역 자치정부 차원, 기초자치정부 차원의 공적 소유 관계들은 서로 보완적이다. 전국적인 차원의 공적 소유는 표준을 제시하고 광역 자치정부 차원의 공적 소유는 일관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초자치정부 수준의 공적 기업은 각자의 조건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고 상황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실험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위에서 아래로(top-down) 정책이 강요되는 관료적 형태는 타파되어야만 한다.

국가 공적 소유와 계획, 개입은 녹색전환 기금을 마련하는 데서 강점을 가진다. 국가 차원의 공적 투자 은행을 설립하고 전환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소유의 공기업에서 창출되는 이윤은 주주의 배당금으로 불로소득의 원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전환비용으로 전환될 수 있기도 하다. 그리고 국가 소유부문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정부보증으로 금융시장에서 저리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다.

정부(지방 행정단위와 중앙정부 모두)의 직접적인 소유와 운영은 이해당사자(stakeholder) 모두의 민주적 참여를 통해 감시되고 통제되어야 한다. 정부에 의한 시장의 통제와 시민역량 제고는 역으로 시민에 의해 감시됨으로써 민주화되어야 한다.

대안적 소유형태가 가지는 중요성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비시장적 소유 형태들은 이윤추구의 원리가 아닌, 필요 충족의 원리에 따라 경제를 다시 정의하는 실천과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다. 경제의 운용이 소수의 전문가와 정치인의 영역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와 책임성을 통해 노동자와 시민의 참여영역으로 확장되면 시민적 역량을 길러질 수 있는 학습이 기회가 열린다.

4. 경제학 패러다임의 전환

국가의 공적 개입의 근거를 필요 충족 모델에서 찾았다. 이제 필요 충족 모델과 비교해서, 현재 국가정책 수립의 기초인 주류경제학의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녹색전환의 당위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효용/편익의 극대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시장의 최적화/균형에 대한 부당한 믿음은 경제학

을 현실로부터 동떨어진 관념적 체계로 전락시켰다. 이러한 관념성은 생태적 위기를 설명하지 못하는 데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실재를 평면적으로 이해하고 단위로 쪼개서 계산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모든 단위가 교환 될 수 있고 하나의 단위를 다른 단위로 보살할 수 있게 하는 경제학적 기법은 생태위기를 설명하고 대응하기보다는 그것의 양상을 축소하게 한다. 기껏해야 환경적 충격을 전통적인 가격과 시장 체계 안으로 통합하는 것에 멈춘다.²⁴ 사실 우리는 일상에서 생태적 위기 현상에 의해 나타나는 수많은 위험신호를 체험하고 있다. 그런데 일상을 위협하는 수많은 위험은 신고전파경제학이 고려할 수 있는 특정 단위로 표현될 수 없기에 무시되기 일쑤다.²⁵ 기후변화, 먹을거리 안전성, 물 부족, 미세먼지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 위험신호는 경제학적 패러다임에 의해 계속 무시당하고 있다.²⁶

경제학적 패러다임이 위험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재가 가지는 불확실성(uncertainty)과 다중성(multiplicity)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확실성과 다중성, 즉 실재의 복잡성을 받아들인다면 정당성을 가진 관점은 여러 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²⁷ 하나의 기준으로 환원하여 측정할 수 있다는 관념적 전제를 버려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입장에서 인식하는 다양한 가치판단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제 과학은 그렇게 다양한 가치판단들을 ‘합리적으로’ 모아낼 방법을 찾는 것으로 향해야 한다. 과학적 지식은 중립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standpoints)으로부터의 현실 인식이 합리적 절차를 통해 논의됨으로 도달하게 되는 잠정적 합의(provisional consensus)로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적’ 과학관 또는 지식관은 다양한 분과과학들 사이에도 적용될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토 노이라스(Otto Neurath)의 표현을 빌자면, ‘과학들 사이의 협력’(orchestration of the sciences)인 것이다.²⁸ 과학적 실천이 일상의 학습과정과 깊숙이 연루되는 것은 이러한 속의 과정을 통해서이다. 비판적 실재론의 길을 따라 일군의 생태 제학자들의 주장을 따라가 보자.

1) 지식/과학 패러다임의 전환

생태경제학자들은 넓고 협소한 경제학적 패러다임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그것이 터하고 있는 오래된 과학적 지식의 기준을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지적 도구가 필요한 것이다.²⁹ 그리고 비판적 실재론과 유사한 입장에서 생태경제학은 인간 삶을 틀 지우는 복잡한 체계들이 가지는 불확실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간사회의 문화, 경제, 정치, 그리고 생태계는 복잡하게 얽혀 공진화(co-evolution)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공진화의 과정에서 우발성을 통해 드러나는 현상들은 절차적 합리성(procedural rationality)에 근거한 속의 제도에 의해서만 지식의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생태경제학에서 사회는 복잡계(complex system)로 제시된다. 모든 체계는 근본적으로 불확실성을 띠고 있다.³⁰ 단순한 체계는 결정론적이고 선형적인 인과 분석으로 설명될 수 있다.³¹ 문제는 경제학이 복잡한 실재를 단순한 체계로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써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 여기서 지적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이러한 체계는 일련의 현상에 대한 인간의 지적 구성물이라는 것이다.³² 인간 지식이 가지는 이중의 불확실성(대상이 가지는 복잡성과 대상을 향한 관점의 다중성)은 과학적 지식의 커다란 장애물처럼 보이지만 직면한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과학적 견해들을 공존하게 하는 긍정적 조건으로 해석된다.³³

이렇게 관점을 뒤집으면 과학적 실천은 평면에서 점을 찾아 직선으로 연결하는, 현실을 왜곡하는 단순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process)이 과학의 객관성을 보장하는 핵심으로 대두된다. 과학적 실천은 ‘문제해결 과정’(problem-solving process)인 것이다.³⁴ 문제해결 과정은 과학적 논의와 학습,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정책 결정을 포괄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확장된 참여의 여지가 주어진다. 서로 다른 가치판단에 따른 다양한 견해들이 반영된다면 문제해결 과정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인정하면서도 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의 질을 보증할 수 있다.³⁵ 과학의 역할은 포기되지 않고 여전히 핵심적이지만 “자연적 체계의 불확실성”과 “인간 가치의 관련성”의 맥락에서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³⁶ 과학적 지식의 생산과 교육에서 유일하게 올바른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과학자는 “타협의 해결책”(compromise solutions)을 추구해야만 한다.³⁷ 그리고 과학의 기준을 단순화된 평면의 명증성에서 복합적 체계에 대한 다면적 이해와 민주적 합의 과정으로 변경하게 되면 과학적 발견의 과정은 학습 과정(learning process)과 중첩된다.³⁸ 이제 과학적 실천은 가치를 담고 있는 다양한 견해들의 ‘두꺼운’ 내용이 다소 ‘정제된’ 형태로 공유되고 토론될 수 있는 방향과 틀을 제공하는 것에 맞추어져야 한다.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실재론적 근거를 가져야 하지만 인식론적인 상대주의를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상대주의가 지적 허무주의로 치우치지 않는 것은 실천적 지식의 두터움과 그것에 기반한 민주적 토론이 있기 때문이다. 과학은 이러한 지식의 공유와 토론이 생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과학적 실천은 문제해결의 과정이자 학습의 과정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 전문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펀토위츠와 레베트가 이름 붙인 탈-정상과학(post-normal science)은 실증주의적 정상과학에 도전하면서 전문가의 역할도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이 그 자체로 공인된 전문가의 위치를 공격하는 것은 아니다.³⁹ 전문가의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전문가는 촉진자(facilitator) 또는 촉매(catalyst)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식의 자동적 차원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가치로 충만한 특정한 관점들로부터만 인식된다. 부분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문가는 특정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빠지기 쉬운 독단적 태도를 넘어, 다양한 생각들이 어떤 대상을 향한 것인지, 그리고 그 대상을 토론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지의 규칙을 제공해야 한다. 다양성과 갈등은 우월한 과학에 의해 제거될 수 있는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조건이며, 더 풍부하고 두꺼운 과학적 지식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기도 하다.⁴⁰ 우리는 산비탈의 특정한 지점에서 산을 내려다보고 있다. 그래서 부분만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이 환영은 아니다. 각자의

시점에서 산의 윤곽을 이야기하고, 결코 완벽한 그림을 그릴 수는 없겠지만, 퍼즐을 맞추어 가는 논의를 발전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⁴¹

2) 방법론적 다원주의

다양한 형태의 지표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생태경제학적 기법으로 제안된 다중기준 분석(multi-criteria analysis)을 통해 앞의 이야기를 조금 더 진전시켜 보자. 다중기준 분석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여러 관점에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해당사자들에게 여러 대안적 가능성을 숙의할 수 있게 한다. 다중기준 분석은 신고전파 경제학처럼 깔끔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사태의 갈등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고 다양한 입장들 사이의 논의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⁴² 이러한 “방법론적 다원주의”(methodological pluralism)⁴³는 대화의 맥락(context of dialogue)에서 의미를 얻는다.⁴⁴

경제적 문제에 대한 분석과 이해는 전문가들에 의해 확정되어 통보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대화와 토론을 거치면서 신뢰와 객관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만큼 이러한 숙의 과정은 동시에 학습의 과정이기도 하다.⁴⁵

다중기준 분석의 철학적 토대는 공약가능성(commensurability)과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에 대한 논의로부터 도출된다. 전통적인 경제학은 공약가능성을 전제한다. 강한 공약가능성은 공통의 기준으로 행위의 결과들을 측정하여 순위를 매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수적 등급(cardinal scale)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A, B, C 세 명의 성적을 90, 85, 83점으로 점수 매기는 것이 강한 공약가능성의 표현이다. 이에 반해 약한 공약가능성은 서수적 등급(ordinal scale)만을 나타낼 수 있다. 점수로 표시할 수는 없지만, A, B, C 세 명을 1등, 2등, 3등으로 순위 매기는 것이 약한 공약가능성의 표현방식이다. 약한 공약가능성과 강한 공약가능성은 모두 강한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으로 분류될 수 있다. 강한 비교가능성은 서로 다른 행위들의 순위를 매길 수 있는 하나의 비교항(comparative term)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약한 비교가능성은 환원 불가능한 가치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만 실천적 판단을 포함하는 합리적 판단은 인정한다.⁴⁶

논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듯이 생태경제학은 공약가능성을 기각한다. 그리고 강한 비교가능성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직 약한 비교가능성만이 생태경제학이 표방하는 다중기준 분석과 충돌하지 않는다.⁴⁷

다중기준 기법에 근거한 평가 기법은 “건설적인 합리성”(constructive rationality)에 토대를 두고 갈등하는 서로 공약 불가능한, 그래서 다차원적일 수밖에 없는 결정들의 효과들을 모두 고려하게 하기 때문이다.⁴⁸

주류경제학이 비판에 직면하여 제기하는 반론은 사회가 지탱되기 위해 요구되는 수많은 결정

이 짧은 시간에 서로 충돌하는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데, 다차원성을 고려하는 속의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비효율적 방법이라는 것이다. 직면한 문제가 논쟁적이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데다가 결정까지 긴급하게 요구된다면 화폐적 양으로 표현된 선호의 계산을 통해 결정에 도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⁴⁹ 신고전파 경제학의 주장은 잘못된 인간관, 시간관, 공간관에 기초하고 있기에 인간과 자연의 교호 과정을 복합적 시간성 속에서 생산되는 공간적 실천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효율성이라는 기준은 경제학적 결정이 초래하는 인간성 파괴, 사회파괴, 자연생태계 파괴를 다음에 오는 분절된 시간 단위 속의 비용으로 축소함으로써 그것이 가지는 재난적 결과를 은폐하는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계산되는 시간 단위 안에서 효율적일 뿐이다. 앞에서 주장한 것처럼 과거-현재-미래의 연속성을 고려한다면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 경제학의 효율성은 기후위기 재난에 맞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만 대처하고 있지 않은가?

약한 비교가능성과 다중기준 평가 기법은 경제학 안으로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생태경제학은 공진화 과정의 인식에 따라 인간만이 아닌 생태계 전체를 경제학의 고려 대상으로 끌어들이면서, 그 조건 아래서 가치 평가와 경제학적 논의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에게 서로 겹쳐지는 다양한 관점을 되돌려 줄 수 있다. 우리는 단지 효용을 계산하는 기계이기를 멈추게 된다.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자신의 다양한 목소리를 돌려받은 사람들이 이해당사자(stakeholder)로 경제적 지식구성과 학습,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적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결정은 언제나 “확장된 동료공동체”(extended peer community)의 토론을 거쳐서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지금의 이익과 이윤을 넘어 장기적 안목에서 사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현재의 이해관계를 넘어 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통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⁵⁰

경제학의 전통적인 접근이 생산된 지식의 질을 보증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 지금 확장된 동료공동체를 통한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속의 과정의 출현은 과거에도 여러 번 경험했던 것처럼 정치적 참여의 권리, 그리고 정책과 관련된 지식생산의 과정이 확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 노동조합에 관한 노동자의 권리와 여성의 선거권이 확장되었던 것처럼 사람들의 누려야 하는 권리를 확장하는 것이다.⁵¹ 민주적 참여의 과정은 학습의 과정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는 참여라는 학습을 통해 시민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을 때만 온전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생태경제학이 주장하는 확장된 동료공동체를 통한 속의 과정은 전문가들에 의해서는 파악되기 어려운 보통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갈등 해결 방식을 정식화하는 통로이기도 하다.⁵²

이러한 학습의 과정은 모든 사람을 모든 영역에 정통한 행위자로 키워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목표다. 생태경제학이 표방하는 학습과정으로서의 참여는 행위자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전문가 지식이 가지는 진실성을 회의하고 평가하고, 때로는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지식이 가지는 권위가 무조건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론의 장에서 비판되고 검증되어 수용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신고전파 경제학이

옹호하는 시장의 원리와는 공존하기 어렵다.⁵³ 생태경제학이 제시하는 사회 속에서 전문가들의 지식은 지방적(local)이고 구체적인(concrete) 체험으로부터 나오는 지식과 나란히 중요성을 얻는다. 전문가들의 지식은 구체적, 실천적 지식이 개인의 욕구를 넘어 타자와의 대화를 가능하게 돕는 것이다. 이제 지식은 시장에서 고립된 개인들의 선택이나 전문가의 독단적 지식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과학적 지식과 사람들의 실천적 지식의 결합되고(수직적 축), 개인이 아닌 모두의 지식이 논증을 통해 수렴되는 것(수평적 축)으로 도약한다. 이제 지식은 민주적 과정을 통해 집합적으로 생산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⁵⁴

경제적 정책 결정 과정이 동료공동체의 확장을 통한 민주주의의 심화라면 경제학은 정치로부터 분리된 중립적 과정이기를 멈춘다. 경제는 그 자체로 정치적 성격을 띠며 경제적 정책 결정은 정치적 과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자체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중립적 관점이 존재하지 않는 한 문제해결은 언제나 타협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서로 갈등하는 가치들을 중재할 중립적 입장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⁵⁵ 그러나 타협적 해결이 단순한 협상(negotiation)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타협적 협상은 합의된 판단(judgement)에 이르는 논증의 과정을 생략한 채 서로의 입장을 절충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생태경제학이 주장하는 타협적 해결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상대주의적 태도를 비판해야 한다. 직면한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가치들이 충돌하지만, 비록 잠정적일지라도 해당 문제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는 합리적인 논증 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증 과정이 없는 협상은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굴복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형식적으로만 주어지는 대화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다.⁵⁶ 이런 맥락에서 생태경제학이 추구하는 문제해결 방식은 타협보다는 판단에서의 수렴(convergence in judgements)이라고 할 수 있다.⁵⁷

5. 마치며[요약]

많은 이들이 경제적 불평등에 도덕적으로 분노한다. 그리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대의제도를 불신한다. 사회적 불만이 팽배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일상의 습관, 생존하기 위한 매일의 실천은 우리를 낡은 관행에 붙잡아 둔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는 개인인 자신을 돌아볼 때 좌절한다. 불만은 조직화된 저항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고립되어 경쟁하는 개인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통치성(governmentality)은 신자유주의가 남긴 강력한 문화적 흔적이다. 습관/관행과 어긋나는 경험은 불가피하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체험되는 탈구(dislocation)의 계기가 도처에 널려 있다. 하지만 탈구는 연대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이기주의와 경쟁주의에 포로가 되어 특정한 대상(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기와 혐오의 감정으로 전락한다. 만연

하는 포퓰리즘 정치의 연료가 되고 있다. 더는 대의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정치 정당들이 연대를 가로막고, 가연성 높은 불만에 혐오의 불쏘시개를 던져 놓고 있다.

그러나 만연한 탈구의 계기들이 인간적 필요뿐만 아니라 기본 필요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자본주의 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게 될 때, 그리고 국가권력이 자본의 이해와 구조적 선택성(structural selectivity)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불만은 자유주의가 허용한 규범적 세계 안에서 도덕적 비판으로 정치적 힘을 얻는다. 과학적 비판과 도덕적 비판이 만날 때, 불만은 연대가 되고, 연대는 저항이 되어 국가권력이 행사되는 국가장치 안의 빈틈에서 물질적 변화를 실현하는 운동이 연료가 된다. 여기에 기후위기와 팬데믹의 엄중함이 더해질 때, 전환의 요구는 더 절박해진다. 지금 당장의 혁명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불만이 연대-저항으로 발전하여 전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체계는 고착성에 갇혀 효과적인 위기 대응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관념적 혁명성과 현실 추종의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진동하고 있다. 전환 과정에서 현재의 물질적 조건, 특히 국가(장치)는 이미 존재하는 행위자가 아니라 전환의 정치에 의해 변형-구성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그리고 그러한 변형-구성은 충족되지 못한 필요-도덕적 불만-탈구-연대-저항으로 출현하는 일시적인 틈새를 국가장치의 물질성을 변형하는 실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현재의 관행이 기대고 있는 효율성도 과학적-규범적 비판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현재의 관행은 사회적 재난과 고통을 예방하기보다, 그 결과를 대상으로 개입한다. 이것은 불필요한 비용을 만든다. 보건의료가 보편적 사회서비스로 제공된다면, 질병의 예방과 질병을 초래하는 삶의 조건과 노동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막대한 세금이 지원되지만, 자본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의료산업의 이윤추구는 필요 충족이라는 도덕적 기준과 효율성이라는 경제적 원칙과 충돌한다. 불필요한 비용(사회적 낭비)은 자본에게 이윤을 창출의 기회다. 생산은 만족/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금융팽창에 맞추어져 있다. 소비는 번창하는 광고산업에 기대어 상층계급의 낭비적 소비를 사회적 기준으로 만들었다. 금융자본주의 생산과 축적은 낭비적 소비와 짝을 이루고 있다. 금융팽창과 낭비적 소비주의는 이자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확대재생산을 향할 수밖에 없는 부채경제 위에 서 있다. 이런 경제체제에서 사람들은 '자기를 실현하는 노동' 따위의 혼계를 잇는다. 노동을 폄훼하고 불로소득을 추구 대열에 동참한다. 대개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한다. 불로소득은 타인 노동의 결실을 흡치는 것이기에, 사회적 불평등은 강화되고, 이기주의를 조장하며, 따라서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의 힘을 침식한다. 사회적 불평등의 비용은 혐오와 적대의 감정을 키워, 토론과 합의를 어렵게 하고 이에 따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지불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힘으로 강제해야 하는 전환 과정에서의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 우선 좁은 의미의 국가 정책적 개입은 지속가능성과 필요 충족, 그리고 예방의 원칙에 근거한 규제, 가격과 인센티브 부여, 공적 투자계획이다. 이것은 생산-소비의 전환에 맞추어진 중-단기적 정

책적 개입이다. 기후위기에 맞서 생산의 천정과 소비의 바닥을 설정하고, 돌봄/사회 재생산노동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로의 이행을 기획해야 한다. 노동시간의 단축과 녹색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돌봄은 이제 경제 바깥에 있지 않아야 한다.

다음으로 주택, 의료, 교육, 교통, 물, 에너지, 통신의 기초서비스 영역에 대한 공적 지원 계획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영역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적 시장에 맡겨졌을 때보다 공적 서비스로 제공될 때 감축 효과가 높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물론 기초서비스 모두를 공적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여러 형태의 소유관계가 공존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존 조건의 창출이 국가의 공적 개입의 목표인 것이다.

여기에 더해 대중의 역량을 길러주는 권력, 자원, 정보, 지식의 분배를 추구해야만 한다. 이 경우 국가가 현재보다 더 강력하게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는 자각에 근거한다. 생명/생존과 직결되지만, '나'의 의사와 무관한 결정, 나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권력의 행사를 '똑똑한' 포스트모던 시민이 방관할 이유가 없다. 자원/정보/지식의 급진적 재분배는 시민의 정치역량을 높여 민주주의가 확장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시민의 정치적 역량이 높아지면, 민주적 논의 과정의 비용이 줄고 사회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이 쉬어질 것이다. 이 또한 사회 전체의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참고 자료

- 01 서영표, 「기후변화 인식을 둘러싼 담론 투쟁: 새로운 축적의 기회인가 체계 전환의 계기인가」, 『경제와 사회』 112호, 2016.
- 02 케이트 소퍼, 『성장 이후의 삶 - 지속가능한 삶과 환경을 위한 '대안적 소비'에 관하여』, 한문화, 2021.
- 03 낸시 프리에저, 『좌파의 길 - 식인 자본주의에 반대한다』, 서해문집, 2023.
- 04 케이트 레이워스, 『도넛 경제학』, 학교재, 2018과 Ian Gough, Heat, Greed and Human Need: Climate Change, Capitalism and Sustainable Wellbeing, Edward Elgar Publishing, 2017.
- 05 Andrew Sayer, The Moral Significance of Class,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06 Ian Gough, "Recomposing Consumption: Defining Necessities for Sustainable and Equitable Well-Be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A, Volume 375, Issue 2095, p. 10.
- 07 Radhika Balakrishnan, James Heintz, Diane Elson, Rethinking Economic Policy for Social Justice: The Radical Potential of Human Rights, Routledge, 2016.
- 08 Diane Elson, "Recognize, Reduce, and Redistribute Unpaid Care Work: How to Close the Gender Gap," New Labor Forum 26(2), 2016.
- 09 서영표, 「도시적인 것, 그리고 인권? - 도시에 대한 권리' 논의에 대한 비판적 개입」, 『마르크스주의 연구』 9(4)2012.
- 10 Ian Gough,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welfare: the centrality of human need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39, 2015, p. 1205.
- 11 고프는 다음 세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 세대의 권리문제는 동물의 권리와 무관하지 않다. 동물의 권리로의 확장은 Ted Benton, Natural Relations: Ecology, Animal Rights and Social Justice, Verso 1993에 의해 뒷받침된다. 서영표, 2023을 보라.
- 12 Gough, 앞의 논문, p. 1208.
- 13 p. 1210.
- 14 Ian Gough, Heat, Greed and Human Need: Climate Change, Capitalism and Sustainable Wellbeing. Edward Elgar Publishing, 2017, pp. 45-46
- 15 Richard Bärnthaler & Ian Gough, "Provisioning for Sufficiency: Envisaging Production Corridors," Sustainability: Science, Practice and Policy 19(1), 2023, p. 3.
- 16 Gough, 2017 앞의 책과 케이트 레이워스, 『도넛 경제학』, 학교재, 2018을 보라.
- 17 인류세에 관한 책이 많이 출간되었다. Ian Angus, Facing the Anthropocene, Monthly Review Press, 2016을 참고하라.
- 18 관-개체적 존재는 스피노자에 철학에 대한 엔티엔 발리바르(Etienne Balibar)의 해석에 근거한다. 이에 대한 사회학적 해석은 서영표, 「현대사회의 공포와 불안, 그리고 혐오」, 『탐라문화』 65, 2020 V장을 참고하라.
- 19 서영표, 「자연과 사회의 관계 다시 생각하기: 인간주의, 포스트휴머니즘, 자연주의 논쟁」, 『안과 밖』, 2022.
- 20 케이트 소퍼, 『성장 이후의 삶』, 한문화, 2021.
- 21 Gough, 2017, 앞의 책, 레이워스 앞의 책.
- 22 소퍼, 앞의 책.
- 23 Bhattacharya et al eds., Social Reproduction Theory, Pluto, 2017을 참고하라.
- 24 B. Özkaynak, P. Devine and F. Adman, "The Identity of Ecological Economics: Retrospects and Prospect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36, 2012, p. 1136.

- 25 서영표, 「위험평가에 대한 현장노동자의 인식연구 : 가스안전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서강대 생명문화연구소, 『생명연구』 29호, 2013.
- 26 Özkaynak et al, 앞의 글, p. 1136.
- 27 S. O. Funtowicz, J. Martinez-Alier, G. Munda and J. R. Ravetz, Information Tools for Environmental Policy under Conditions of Complexity. European Environmental Agency. Environmental Issues Series No. 9, 1999, p. 7.
- 28 Joan Martinez-Alier, Giuseppe Munda and John O'Neill, "Theories and Methods in Ecological Economics: A Tentative Classification", Cutler J. Cleveland et al. eds. The Economics of Nature and the Nature of Economics. Edward Elgar, 2001, p. 35. 이러한 태도는 Bhaskar et al, eds, 2010과 Bhaskar et al, 2018의 주장과 일치한다.
- 29 Funtowicz at al, 앞의 글 p. 5.
- 30 같은 쪽.
- 31 앞의 글, p. 6.
- 32 같은 쪽.
- 33 앞의 글, p. 7.
- 34 Özkaynak et al, 앞의 글, p. 1127.
- 35 Funtowicz at al, 앞의 글, p. 5.
- 36 앞의 글, p. 11.
- 37 앞의 글, p. 16,
- 38 앞의 글, p. 14.
- 39 앞의 글, p. 11.
- 40 앞의 글, pp. 7-8.
- 41 앞의 글, p. 7.
- 42 Özkaynak et al, 앞의 글, p. 1128.
- 43 Martinez-Alier et al, 앞의 글, p. 34.
- 44 Funtowicz at al, 앞의 글, p. 12.
- 45 Özkaynak et al, 앞의 글, p. 1130.
- 46 Martinez-Alier et al, 앞의 글, p. 35, Funtowicz at al, 앞의 글, p. 14, John O'Neill, 1993 앞의 책.
- 47 Martinez-Alier et al, 앞의 글, p. 53.
- 48 Martinez-Alier et al, 앞의 글, p. 53.
- 49 Funtowicz at al, 앞의 글, p. 8.
- 50 Özkaynak et al, 앞의 글, p. 1132.
- 51 Funtowicz at al, 앞의 글, p. 10.
- 52 앞의 글, p. 10.
- 53 John O'Neill, "Value Pluralism, Incommensurability and Institutions", John Foster ed. Valuing Nature: Economics, Ethics and Environment, Routledge, 1997, p. 86.
- 54 John O'Neill, 1993, 앞의 책, pp. 140-141.
- 55 Funtowicz at al, 앞의 글, p. 17.
- 56 O'Neill, 1997, 앞의 글, p. 84.
- 57 앞의 글, p. 85.

공공재생에너지운동, 어떻게 대중운동으로 만들 것인가*

한재각 |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hanck@hanmail.net

1. 들어가며_두개의 시간 그리고 약탈적 전환

우리 앞에 두 개의 시간이 놓여 있다. 하나는 절박한 기후위기의 시간이다. 현상유지의 시간이 맥없이 흐르면서, 국제사회가 정한 전지구 기온 상승 제안 목표인 1.5도를 지키기 위해 넘지 말아야 할 ‘탄소예산’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이미 누군가는 그 시간이 이미 지나버렸다고 말하기도 한다. 전지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후재난들과 그로 인해서 빚어진 수많은 비극들을 지켜보면서, 온실가스를 과감하게 줄여야 할 긴박한 이유를 상기한다. 불충분하다고 이미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전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빠른 온실가스 감축은 지지부진하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부와 권력을 쌓은 자들이 굳건히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도 국제사회에 2030년 감축 목표를 약속했었다. 즉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이지만,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한국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여전히 10%조차 넘어서지 못하고 있지만, 민간발전사들은 새로운 석탄발전소까지 짓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이전 정부들이 그랬던 것처럼 차기 정부로 감축 부담을 최대한 미루며, 핵발전에만 매달리고 있다. 시간은 위기를 넘어 재난으로 빠르게 흐르고 있다.

또 하나의 시간도 흐르고 있다. 느려터지고 기울어진 발걸음이지만,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과

* 이 글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전략>(구준모 외, 2023)에 실린 발표자의 글(10장),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운동 전략 제안’을 기본으로 하며, 이 보고서에 실린 다른 글들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구준모 외(2023),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전략>,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청소년기후행동, 사회공공연구원.

정책은 민중들의 삶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이미 노후된 석탄발전소 10기가 폐쇄되면서, 누군가는 오랜 시간을 뒤로 두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했지만 아예 일자리를 잃은 이보다는 나았다. 지역 사회는 인구와 세수 감소로 휘청이기도 했다. 당연히 여기서 끝은 아니다. 정부는 최신(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서 2036년까지 28기의 석탄발전소를 폐쇄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대신 그것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절반 정도에 불과한 LNG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많이 알려진 바대로, 석탄발전소를 대신하여 건설될 LNG발전소의 일자리는 대략 절반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또 LNG발전소도 석탄발전소와 함께 차츰 줄어들 전망이다. 석탄발전소를 폐지할 시간은 다가오고 있지만, 발전 노동자와 석탄발전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계획과 준비는 더디고 불충분하다. 석탄발전소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에게 불안과 절망만 쌓여가는 시간이 흐르고 있다.

비관적인 두 개의 시간이 흘러 들어가는 곳, 너머에서 우리는 ‘약탈적 전환’을 목격하게 된다. 2000년대 초반에 자유화된 발전산업이 민간 발전사들이 점차 비중을 늘려 가면서, 최근에는 발전 용량 비중으로 40%, 발전량 비중으로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미 상당한 수준의 ‘에너지 민영화’가 이루어졌다. 이대로 흘러간다면, 주로 LNG발전을 중심으로 발전용량을 확대하고 있는 민간발전사들은 주로 (폐쇄 예정인) 석탄발전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폐쇄를 해야 할 발전공기업들을 앞질러 발전 부문의 에너지 민영화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상황이 민중들의 삶에 얼마나 위협적이며 또 부정의한지를 가늠할 수 있는 사건을 이미 경험했다. 최근 민간발전사들은 가스 직도입제도와 발전시장의 가격결정 제도(SMP 제도)을 활용하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 속에서 엄청난 초과 이익을 누렸다. 시민들은 인산된 전기요금에 직면하고 ‘에너지 빈곤층’은 추위와 더위에 내몰리는 반면, 한전은 더욱 심각해진 적자를 떠안야 하는 상황 속에서 약탈해간 이익이었다.

‘약탈적 전환’은 재생에너지 발전부문에서도 나타난다.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지만, 그 대부분은 발전공기업 등의 공공 부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자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다. 민간 발전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설비는 전체의 90%에 해당한다. 국가와 발전공기업이 재생에너지 투자를 제약하고 또 주저하는 반면, 정부는 FIT와 RPS 제도를 통해서 민간에 의한 재생에너지 개발을 지원한 결과다. 시민들이 낸 전기요금의 일부가 이들 민간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이윤을 보장하는데 쓰였다. 초기에는 개인이나 협동조합 등과 같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앞장서면서 ‘에너지 민주주의’와 ‘에너지분권’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점차 대기업과 금융자본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뛰어들면서 상황은 ‘약탈적 전환’으로 변하고 있다. 특히 인천, 제주도, 울산 앞바다에 해외 기업과 자본들이 추진하는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보라. 현재의 에너지전환 양상이 계속된다면, 공유재인 재생에너지를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삼아서 ‘우리 모두의 부’를 약탈하는 불공정한 게임이 펼쳐질 것이다. 특히 농민과 어민,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하면

서 곳곳에서 저항도 벌어지고 있다. 또한 해외 기업과 자본에 의한 에너지 주권도 걱정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약탈적 전환’이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미래인가. 절박한 기후위기에 맞서 에너지전환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정의로와야 하며 그래야 신속한 전환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현재의 에너지전환 양상이 유일한 길은 아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에너지전환의 여러 경로가 경합하고 있으며, 기후(정의)운동에 연결된 여러 흐름들이 다양한 경로 사이에 복잡하게 산재해 있다(2절). 이 글은 ‘약탈적 전환’에 맞서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의 경로로 ‘공공재생에너지’를 제시하며 그 필요성과 전략을 토론한다. 특히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이 체제전환운동의 예시적 싸움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짚어볼 것이다(3절). 여기에 머물지 않고, 마지막으로 이 공공재생에너지운동을 대중운동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오늘부터 해볼 수 있는(혹은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제안할 것이다(4절).

2. 왜 공공재생에너지 전략이 필요한가

가. 한국 에너지전환의 다양한 경로

이제 우리는 에너지전환이 다양한 경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 단지 석탄발전소를 끄고 재생에너지를 늘린다는 설명만으로 에너지전환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에너지(전력) 수요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는 점을 기본적인 요소를 재차 강조할 필요가 있지만, 공급 부문에만 초점을 맞춰 보더라도 여러 경로들이 경합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공급 부문에 한정하여, 다양한 에너지전환 경로들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토론하기 위해서 아래 그림 1과 같은 사분면의 분석틀을 활용해볼 수 있다.

현재 한국 발전산업의 중심적 위치에 2사분면 즉, 화석연료와 핵에너지에 기반을 둔 발전기업들이 있다. 그로부터 벗어나는 변화의 중심적 흐름은 3사분면으로 이동하는, 즉 주로 가스발전에 기반한 민간 발전사들의 증가다. 최근에는 민간 석탄발전사도 등장하고, 심지어 민간 핵발전소(SMR; 소규모핵발전) 구상도 거론되고 있다. 석탄 대신 가스라는 임시방편적 접근은 탄소고착만 확대할 뿐만 아니라, 앞서 비판한 민간 발전사에 의한 &약탈적 전환&을 가능케 한다. 여기에 대해서 민간 발전사들의 가스 직도입 능력과 연결하여 천연가스로부터 얻어낸 수소와 암모니아의 혼소/전소 발전도 모색되고 있다. 정부는 핵에너지와 (천연가스와 연결된)수소/암모니아 발전을 묶어서 &무탄소 발전&으로 명명하여 이의 확대를 추진하면서, 이런 흐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전환 경로는 ‘민영화된 탄소고착 경로’라고 이름붙여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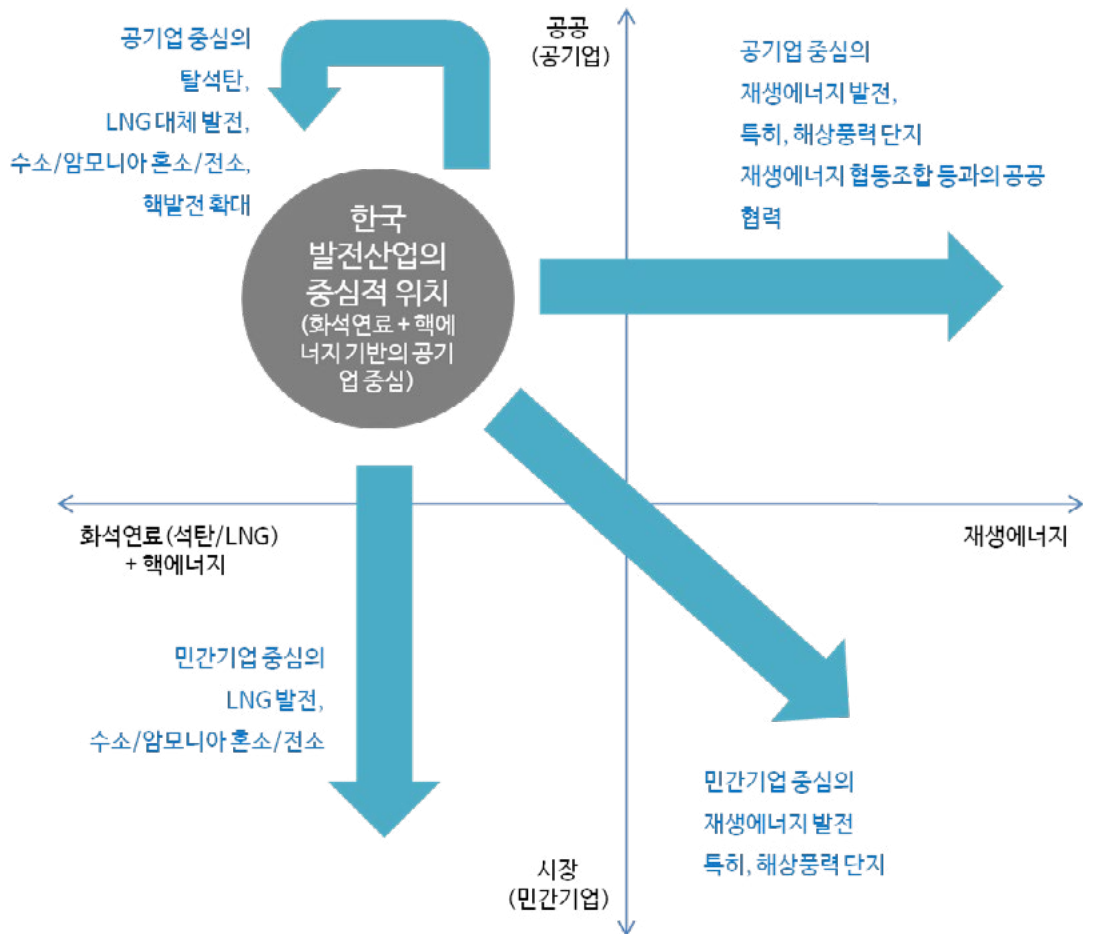


그림1. 발전산업의 다양한 전환경로 *출처: 한재각(2023)⁰¹

에너지전환과 관련하여 주목받는 통상적인 경로는 2사분면에서 4사분면으로의 이동이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드는, ‘민영화된 재생에너지 경로’라고 이름붙여 볼 수 있다. 이미 지적한 대로, 아직 재생에너지(태양광과 풍력) 발전설비가 충분히 늘어나 있지는 않지만 그 대부분은 민간 발전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다. 발전공기업을 포함하여 여러 공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직접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발전설비를 소유하는 비중은 대단히 작다. 발전공기업이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때도, 민간 기업이나 금융 자본들과 함께 특수목적기업(SPC)를 구성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주류적인 에너지전환론은 재생에너지 발전이 증가하기만 하면 공공이든 민간이든 가릴 필요가 없다거나, 오히려 경직된 공공 부문에서 발전사업이 해방되어야 시장의 역동성을 활용해야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런 경로를 용인하거나 부추기고 있다.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는 다른 경로도 존재한다. 우선 두드러지는 것은 2사분면 내에서의 변화다. 현재 정부가 발전공기업들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면서 대신하여 LNG발전소를 건설하겠

다고 한 계획이 이 경로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발전공기업들도 천연가스에 기반한 수소 및 암모니아 전소/혼소 발전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민간발전사들과 비슷한 기술적 경로를 탐색하고 있다. 이를 ‘공공적 탄소고착 경로’라고 이름붙일 수 있다. 이 경로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 그리고 에너지 기본권의 보장 가능성이라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에너지 공공성의 유지에 도움이 되겠지만, 기후위기 시대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여전히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중국에는 포기되어야 할 발전원일 뿐만 아니라, 현행 대체 건설 계획으로 현재 석탄발전소와 동일 규모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은 가장 미약한 경로이지만, 이 글에서 강조하는 경로는 2사분면에서 1사분면으로 이동하는 ‘공공재생에너지 경로’다. 국가의 대규모 투자와 공기업의 소유에 기반을 두고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건설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정부에 의한 발전공기업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겠지만, 지자체의 에너지 공기업 그리고 시민참여 기반의 에너지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조직도 참여하며 &공공협력&을 추구하면서 구체적인 경로가 형성될 것이다. 이 글은 이 공공재생에너지 경로를 어떻게 개척하고 확대할 것인지, 그래서 한국 발전산업의 중심적 위치를 1사분면으로 가능하면 신속히 이동시켜서 사회적 공공성과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조화시키고 상호 지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전환 경로의 다양성 분석과 바람직한 경로 설정에 대한 토론을 마무리하기 전에 두 가지 쟁점에 대해 더 토론해보자. 위의 사분면 그림은 전환 경로의 지리적 스케일과 국가 대 민간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 전환 주체의 다양성을 포착하기 어렵다. 전통적인 에너지전환론은 개발주의 국가에 의해 전력의 안정적 공급 목적으로 비민주적으로 핵발전소와 초고압 송전선로 등의 대규모 중앙집중화된 시스템을 확대해 온 것을 비판하면서 이를 소규모 분산적인 방식으로 변화시킬 것을 주장해왔다. 분산적이고 소규모 발전이 가능한 재생에너지의 기술적 특성과 분권적 통제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지역 스케일의 에너지 자립과 분권을 강조하는 &지역에너지전환 경로&를 제안했다. 또한 그런 전환의 주요 주체로서 지자체들과 에너지시민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 경로는 개발주의에 매몰된 중앙집권적 국가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통해 전통적인 &에너지 공공성&을 재구성하려 시도하기 보다는, 그것에 거리를 두는 것에 머물렀다. 대중들의 에너지 민영화 반대론을 에너지전환과 결합시키려는 노력은 치열하지 않았다. 반대로 민영화된 재생에너지 경로와는 뚜렷한 경계를 짓지 못한채 뒤섞인 모습을 드러냈다.

나. 한국 에너지(전환) 운동의 지형

한국 에너지(전환) 운동의 참여자와 지형은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과거 1990년대 에너지운동이라고 하면 대부분 국가의 핵발전소나 핵폐기장 건설에 맞선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저항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기에 국가가 소유, 운영하던 전력/가스산업을 분할하고 민

영화하려는 시도에 맞서는 (발전)노동자들과 시민사회의 저항이 추가되고, 이들 운동 사이의 긴장과 함께 연대가 모색되면서 복잡한 양상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어 2010년대에는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에 부활된 탈핵운동과 함께 탈송전탑운동 등 지역주민 저항이 거세지고 이에 기반하면서 에너지전환 담론이 본격화되고 정부의 정책으로 일부 수용되면서, 에너지운동은 더욱 확대되고 분화되었다. 녹색당의 등장이 상징하듯 에너지전환이 비교적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지역에너지(전환)운동이 대두되고 에너지협동조합들이 결성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해 에너지 공공성 방어 혹은 에너지 민영화 비판 담론으로부터 벗어나 시장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거나 그에 우호적인 에너지운동들도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했다. 2020년대에 기후운동이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기후정의운동도 분화/급진화되면서, 에너지운동의 장은 더욱 넓어졌다. 예를 들어 반빈곤운동과 주거운동이 에너지빈곤 의제를 경유하여 등장하고 있으며,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발전소 폐쇄 이후의 일자리 보장을 요구하면서 등장하고 있다.

에너지운동의 복잡한 지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앞에서 제시한 다양한 전환 경로의 구분을 활용해볼 수 있다. 민영화된 탄소고착 경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에너지운동 진영이 망설임없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에너지기업과 이를 지원하는 국가를 비판/저항하는 에너지운동의 지형은 비교적 간명하며, 운동의 여러 흐름들 사이에도 연대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민영화된 재생에너지 경로나 공공적 탄소고착 경로에 대한 운동 지형은 매우 복잡하다.

우선 민영화된 재생에너지 경로부터 살펴보자. 에너지전환론이 국가에 의한 대규모 중앙집중적인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비판과 저항에서 출발하다보니, 에너지운동 안에 핵발전이나 석탄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라면 뭐든지 좋다는 신화가 자리잡고 있다. 게다가 독일이 선진적인 사례로 반복적으로 학습되면서, 유럽 지역의 에너지시장 자유화와 FIT와 같은 제도에 대한 지지가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었다. 그래도 (대)기업/자본에 대한 비판과 경계가 존재했기 때문에, 개인 및 에너지협동조합 등에 의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선호,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민간 재생에너지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국가의 경직성 대 시장의 활력이라는 구도가 강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힘을 활용한 (국내외) 민간기업/자본의 재생에너지 사업의 불가피성 나아가 필요성을 주장하거나 호응하는 운동들이 등장했다(특히, 최근에 등장한 에너지전환포럼, 기후솔루션, 그린피스 등). 기존 에너지운동 상당수도 그 방향으로 기울어지거나 방관하기도 했다. 국가/공공에게 에너지전환 정책을 요구할 때도, 민간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런 맥락에서 RE100 캠페인이나 민간PPA 제도화 운동이 등장했다. 한편 에너지협동조합 진영은 스스로를 국가와 기업의 이분법 밖의 제3의 행위자로 위치짓기보다는, &민간&이라는 이름 하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이윤 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재생에너지기업 나아가 민간 LNG발전사와 함께 하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이런 흐름을 경계하고 비판하면서, 주로 노조 기반의 에너지공공성 진영(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등)이 반대편에서

있다.

공공적 탄소고착 경로 역시 복잡하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전력) 공급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에너지공공성 진영도, 기후위기를 인식하며 현재의 석탄발전(나아가 핵발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석탄발전에서 곧바로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넘어가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또한 그것을 통해 현행 일자리도 상당수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이 현저히 적은 LNG 발전을 징검다리로서 삼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여기며, 따라서 발전공기업이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는 대신 LNG 발전소를 대체 건설한다는 현행 정책의 방향을 지지하고 있다. 속도 조절과 고용 보장을 위한 쟁점은 별도로지만, 발전설비들이 공공 부문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한다. 하지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에너지운동은 (비록 발전공기업일자리도) 가스발전의 징검다리론에 대해 경계하고 비판적이다. 오히려 빠른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대체하는 신규 가스발전은 물론이고 현행 가스발전 설비까지도 폐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석탄발전소 폐쇄 대신에 대체 건설하려는 발전공기업의 LNG 발전소 부지 확정을 두고 (경남과 같은) 지역 단체들의 저항도 나타나고 있어, 발전산업의 노조들과의 긴장감도 형성되어 있다.

지역에너지전환 및 에너지협동조합 경로의 운동 지형은 완벽하게 조망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하고 복잡하다. 지역에너지전환 경로는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개혁적인& 지자체장의 등장을 기회로 삼아 지역의 다양한 사회운동이 지자체의 지원과 협력 속에서 개척해내고 있다. 그러나 서울처럼 지역에너지공사를 만들어낸 경우도 있지만, 이조차도 중앙집권적 법제도와 지자체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한계에 직면해 있었다. 지역 주민들이 에너지자립마을이나 에너지협동조합 등을 통해서 조직화되기는 했지만, 주로 지자체의 지원과 &민관협력& 틀 속에서 위치지어졌다. 그러나 이런 대다수의 흐름과 구분되는 제주의 사례도 주목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산업의 틈새 역할을 하던 제주도에 (일찍이 미래를 예고하듯 벌어진) 주민갈등에 직면하면서 &공공화&라는 혁신을 빚어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법 속의 틈새로 제도화되면서, &공공재생에너지&를 상상할 수 있는 다른 길을 개척해왔다. 제주 공공화 운동은 울산의 흐름과 대비하면 더욱 차이가 두드러진다. 울산 에너지운동의 일부 진영은 기후위기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요구하고 있지만, 초국적 기업들이 주도하는 개발 흐름에 대한 경계와 저항은 뚜렷하지 않다. 최근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역에너지운동이 주장해온 바를 상당히 반영하고 있지만, 소규모 핵발전(SMR)까지 분산에너지로 포함된다는 점에서부터 지역 수준에서 에너지 민영화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석까지 다양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다. 다른 에너지전환 경로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전환 경로와 운동 지형에 대한 분석 위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속하

면서도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의 경로를 탐색하여 밝히고 이를 지지하는 사회적 힘을 결집시키는 운동 방향에 대해서 토론해보자. 이를 위해 (1)전환의 속도와 방식, (2)전환 비용 부담, (3)이익 향유의 형평성, (4)민주적 통제 가능성의 측면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타당한 것인지를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전환의 속도와 방식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투자 전략을 마련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신뢰 구축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방식에서의 민주적 절차 훼손, 환경 파괴, 주민/공동체 갈등 유발 등으로 인한 신속한 사업 진행을 가로막는 일을 피해야 한다.

둘째, 전환 비용의 부담 :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조달 가능해야 한다. 또한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에게 해고나 지역경제 쇠퇴와 같은 부담이 전가되어서는 안된다.

셋째, 이익 향유의 형평성 : 재생에너지의 공유재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면서, 재생에너지 이용의 이익을 특정 계층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이익을 사회화하여 사회 전체에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민주적 통제 가능성 : 전환의 속도와 방식, 전환 비용의 부담, 이익 향유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이런 기준에 입각해 보았을 때, 민영화된 재생에너지 경로보다 공공재생에너지 경로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책임에 따라서 과세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이에 기반하여 체계적이고 대규모 재정을 투자하며,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발전공기업이 중심이 되어서 지자체와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협력하여,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며 정의롭게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방법이다. 이는 운동전략 차원에서 볼때도 민영화된 탄소고착 경로 뿐만 아니라 민영화된 재생에너지 경로에 대해서도 맞서고 공공적 탄소고착 경로의 한계에 갇히지 않는 이 경로를 통해서, 기후정의를 향해 흐르는 모든 사회적 힘을 최대한 넓게 결집시킬 수 있다. 절박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다급한 열망을 분출하는 사회적 힘, &노동자와 지역주민까지 폐쇄할 수 없다&는 말에 공감하며 보편적인 공적 서비스 확대를 요구하는 사회적 힘, 중앙집권적이고 비민주적인 에너지 시스템에 대해서 비판하고 저항해온 사회적 힘까지 결집하여, 가장 큰 동맹(=공공재생에너지동맹)을 만들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 될 것이다.

3. 공공재생에너지 전략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실현해야 하나?

가. 공공재생에너지 전략이란?

공공재생에너지란 대규모 공적 투자로 공적 기관에 의해서 개발되고 소유, 운영되는 재생에너지(특히 태양광과 풍력) 발전시설이라고 간략하게 정의할 수 있다. 이때 &공공(公共)&이란 국가에 의해서 설립되고 운영되는 (발전)공기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의미하지만(公), 이외에도 지자체에 의한 공기업과 (시민참여형) 협동조합 등과 같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도 포함하여(共) 이들 사이의 ‘공공(公共)협력’을 강조한다. 또한 공공재생에너지 전략은 민간 기업/자본의 재생에너지 개발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공공협력에 의한 재생에너지 개발이 국가 전체의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만 민간 기업/자본의 재생에너지 개발의 경우, &우리 모두의 것&인 재생에너지의 이익을 독점하지 않도록 그 일부를 사회적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한다.

공공재생에너지를 주장하는 (헌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는 국민들의 생존과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가장 주요한 수단인 재생에너지 확대에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헌법 조항 및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등). 현재 정부는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의 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그나마의 목표 달성도 국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민간 기업/자본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 민영화를 부추기면서 국가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공유재로서의 재생에너지&를 의미하는 헌법 제120조 1항도 핵심적인 근거가 된다. 이 조항을 재생에너지를 공공이 개발,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규정으로 해석하며, 재생에너지 개발 또는 이용 사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하는 것이 규정의 취지에 가장 잘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바람직한 보존과 권리 및 이용은 지역 공동체의 자율적, 자치적 관리를 통해서 가능성도 인정한다.*

여기서 주장하는 공공재생에너지는 정부가 제시하는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같은 유사한 용어를 쓰는 접근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는 계획, 금융 조달, 사업 수행의 세 측면에서 그렇다. 우선,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서의 공공 역할을 논의하면서 자주 언급되는 소위 &마중물론&(혹은 &위험제거 국가론&)과 다르다. 즉, 민간자본의 위험을 제거하고 공공이 비용을 떠안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 둘째, 공공이 계획하고 민간이 수행하는 제주도의 사례와도 구분된다. 제주도

* 헌법 제120조 1항: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의 글을 참조: 이치선, 한재각(2023),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 제안”, 구준모 외, 앞의 보고서(9장).

의 풍력의 공공적 관리 제도는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선도적 사례이기는 하지만, 공공이 계획한 사업을 민간이 민간 금융을 중심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추진하는 방식은 공공성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다. 셋째, 발전공기업이 소유·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공공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이윤 추구를 우선시하여 사기업과 다를 바 없이 운영되는 발전공기업이 현재의 재생에너지 산업 구조와 정책 속에서 사업하는 것으로는 공공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나. 공공재생에너지 전략의 추진 방식

공공재생에너지의 추진 방식은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에 따라서 부과하는 조세(=탄소 소득세)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조성하고 조달한 자금을 투자하여, 발전공기업 및 이와 협력하는 지자체와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개발하여 그 발전설비를 소유, 운영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두 가지 사항—추진 주체와 투자 재원 마련과 운영—에 대해서 좀더 토론해본다.

우선 공공재생에너지전략을 중심적인 추진 주체로서 발전공기업을 제시하였는데, 이때 분할되어 있는 발전공기업의 통합에 대해서 토론이 필요하다.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발전공기업의 역량을 집중하고 효율화하기 위해서 발전공기업을 통합해야 한다. 현재 발전공기업들은 2000년대 초반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결과 법적으로는 한전 자회사 형태로 6개로 분할되어 경쟁하고 있다. 정부는 수익성을 기준으로 경쟁을 시키면서 발전공기업들은 에너지 공공성을 지키는데 무관심해지고 있으며 외주화 등으로 노동자 위험을 방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개발 등의 에너지전환에도 소극적이다. 분할 경쟁 체제가 야기하는 역설적인 비효율성과 수동성을 넘어서, 통합된 발전공기업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조직의 목표로 설정하며, 그 과정에서 생태적, 인권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민과 노동자들에 의한 민주적 통제와 참여를 중요한 과제로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지역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꿈꾸는 지자체들과 에너지협동조합들도 공공재생에너지 전략의 주요 주체로서 발전공기업과의 공공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 통합된 발전공기업도 적극 호응하고 기술과 자금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둘째, 절박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빠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대규모 자금이 투자되어야 한다. 기존 연구에 기반하여 2050년까지 640GW의 재생에너지 등의 발전설비를 건설한다고 하였을 때의 비용**을 추산해보면, 2050년까지 531조원 정도, 2024년부터 연간 20조원 정도가

** 이 투자액 추산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기초해서 만든 100% 재생에너지 안을 기준하여 하였다. 2050년까지 태양광 422.7GW, 육상풍력 36.3GW, 해상풍력 86.9GW 및 (그린 수소 기반의) 수소터빈 94.6GW를 추가 건설한다는 안이다. 이상에 대한 전체 비용은 대략 340조원이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발전의 간헐성 등을 보완하기 위한 에너지저장장치 확보 비용(167조원)도 추가시켰다. 이외에 산업전환 및 고용창출 비용(15조원), 에너지 부문 재공영화 비용(10조원)도 포함시켰다.

필요하다. 이 막대한 자금을 누가 투자해야 하는가? 공공재생에너지 전략은 이윤 추구 논리에 따라서 자본과업도 불사하곤 하는 민간 투자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공적 투자를 강조한다. 그렇다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공적 투자이기 때문에 조세를 통한 재원 확보가 중심적인 방안이 된다. 이때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기후정의에 부합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거론하는 ‘탄소세’가 아니라 ‘탄소 소득세’를 새로 제안한다. 이 제안은 프랑스의 노란조끼 운동에 보았던 것처럼 간접세인 탄소세가 불평등을 심화하여 사회적 저항을 야기했던 경험을 참조했으며, 또한 소득불평등이 탄소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안하는 탄소 소득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누진율을 상향하는 것으로 부유층의 소득과 대기업의 이윤에 직접 과세하여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이로써 연간 11조원 이상을 조달할 수 있다. 그외 국민연금 기금 투자(5조원)와 기후대응기금(1조원)과 전력기금(2조원)의 전입금과 일부 민간금융 채권 투자(1.5조원)도 활용하여 연간 20조원의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국가 재생에너지투자은행을 설립하여 운영관리하도록 한다.⁰²

다. 공공재생에너지 전략의 효과

공공재생에너지의 확대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질 것이다.

첫째, 신속하고 계획적으로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이윤 추구를 우선시 하면서 재생에너지 투자를 결정하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대신하여, 국가가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대 계획을 세우고 직접 자금을 조성하고 투자하여 소유, 운영 하면서 확실성을 부여할 수 있다.

둘째,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파괴와 인권 침해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민간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개발 현장에서 환경단체들과 지역주민의 비판과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 공적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공기업의 재생에너지 개발에서는 ‘인권 실사’ 등의 제도 도입과 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를 통해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갈등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⁰³

셋째, 국가가 직접 자금을 조성하고 투자하기 때문에 저렴한 자본 비용으로 재생에너지 개발할 수 있으며 이윤 최대화 논리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전력을 비싸지 않게 공급할 수 있다. 또한 공유재로서의 재생에너지 이용 이익을 환수하고 공적으로 관리하여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탄소 소득세’는 단순히 오염자 책임 원칙에 대한 전환 비용의 부담이라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부유층들의 과다한 소득을 감소시켜서 과시적 소비를 방지하고 사회 전체의 소비주의 문화를 변화시킴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는 전략으로서도 의미를 가진다. 이 글은 에너지(전력) 공급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에너지(전력) 소비 감소(혹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전략으로서의 소득 불평등 완화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별도로 필요할 것이다.

넷째, 석탄발전소를 포함하여 화석연료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장 등, 정의로운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발전공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여기에 폐쇄되는 석탄발전소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아가 기후를 보호하는 일에서 생계수단을 얻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은 헌법적 원리로서 (1)공유재로서의 재생에너지 + (2)기후위기 대응의 국가 책임을 근거로 하여, (3)국가의 대규모 투자 + (4)공적 소유와 공공협력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업 + (5)발전공기업들의 통합과 민주적인 통제의 추진 방식을 통해서, (6)신속하고 계획적인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 (7)재생에너지의 생태적/인권적 개발 + (8)재생에너지 이익의 공유(에너지기본권 보장) + (9)노동자의 일자리 보장과 전환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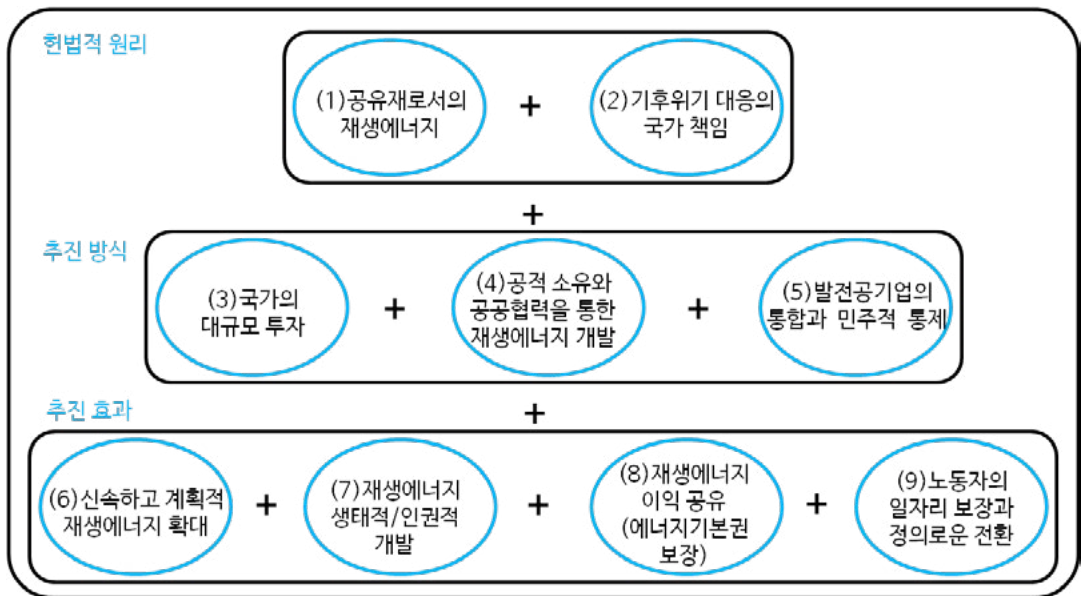


그림 2. 공공재생에너지 전략 요약 *출처: 필자 작성

라. 사회적 조건의 형성: 공공재생에너지 동맹

이런 공공재생에너지 전략은 단지 몇몇 정책 전문가들이 논평하고 국회의 입법자들과 정부 관료들 사이의 토론과 몇몇 활동가들의 로비와 압박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는 그럴듯한 정책 패키지로만 간주될 수 있을까. 현재의 정치사회적 조건 속에서는 그런 대접마저도 과분한 기대일지 모른다. 그조차도 엄청난 사회운동적 역동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이 전략이 가시화되고 실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는 순간부터, 거대한 정치사회적 투쟁과 대결의 소용돌이가 몰아칠 것이다.

생각해보자. 기업과 부유층에게 기후위기의 책임을 묻고 정의로운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일에서부터, 신자유주의 합의 속에서 정권들의 이어가며 지속된 에너지 민영화 정책을 되돌려 발전공기업들을 통합시켜 대규모 재정 투자를 진행하여 신속하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재생에너지를 &우리 모두의& 공유재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민간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 자원 이용료를 부담시키는 공공재생에너지 전략은 기득권 세력들(우선 기후불평등 세력이라고 불러본다)의 강력한 반발과 저항을 야기하지 않을리가 없다. 긴급한 기후 위기와 심각한 불평등 위기를 배경으로 현상유지적이지자 파멸적인 기후불평등 세력과 안전과 존엄을 요구하는 기후정의 세력들 사이의 격렬한 대결을 예고하는, 거대한 사회적 힘들의 결집과 동원을 필요로 하는 전략임을 부정할 수 없다. 누군가는 바로 이런 이유때문에 이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에 동참할지라도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합류하기를 꺼려할지도 모른다. 기후불평등 세력에 맞서는 거대한 사회적 힘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공공재생에너지동맹을 건설하자고 제안한다. 우선 각자의 운동과 전망 속에서 공공재생에너지 전략에 공감하는 다양한 운동 단체와 조직들 즉, 시민사회운동, 노동조합, 진보정당 등이 힘을 모아서, 공공재생에너지동맹의 출발점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첫째, 시민사회운동의 지지와 참여 :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공유물로서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의 공적 투자, 공공적 소유와 관리, 이용의 이익 공유 등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를 조직하고 강화한다. 이때, 공공적 소유, 관리, 이용 주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발전)노동자의 동의와 참여 : 발전노동자들의 석탄발전소의 폐쇄의 불가피성과 재생에너지의 확대 등의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수용과 함께, 기후위기 시대에 재생에너지의 공적 확대가 일자리 보장의 가장 확실한 경로라는 점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제고한다. 또한 폭넓게는 정의로운 전환을 지지하는 노동운동과 노동자들의 지지를 조직한다.

셋째, 진보정당의 협력과 보수정당의 견인: 본래적 의미의 &아래로부터의 그린뉴딜& 접근으로서 공공재생에너지 전략에 대한 의미와 필요성을 공유하며, 이를 정치 의제화 및 입법화하기 위해서 진보정당들과 협력한다. 특히 제도 정치 내에서의 입법 전략을 수립/이행하면서, 사회운동/노동조합과 함께 보수정당(민주당의 일부)를 견인한다.

하지만 공공재생에너지동맹은 이런 단체와 조직 사이의 연대기구에 머물지 않고, 거대한 대중운동으로 발전하는 전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동맹에 참여하는 각 단체와 조직들이 아직 조직하지 못한 여러 노동자와 시민, 수많은 사회 주체들을 조직하고 또 결집시키는 과제를 가진다.

마. 예시적 체제전환운동으로서의 의미

이상의 공공재생에너지 전략과 운동의 제안과 구상들은 기후보호와 불평등 해소와 같은 다중

의 정책 목표를 가진 해외의 ‘그린뉴딜’을 연상하게 할 수 있다. 한국에서 &그린뉴딜&은 이미 민주당 정권에 의해서 한때의 정책 아이টে으로 소비되고 정권 교체와 함께 버려진 용어다. 또한 그린 뉴딜에서 기득권 세력에 맞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들의 특권을 제거하고 &대중권력&을 강화하며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차원은 제거된 채, 기후위기 해결을 명분삼아 기업을 지원하고 경제성장을 지속하려는 정부의 녹색산업 투자 프로그램 정도로 간주되었을 될 뿐이다. 따라서 대중운동을 조직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다시 꺼내드는 것은 현명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아래로부터의 대중권력을 형성하여 국가권력을 탈환하고 재구성하여, 긴박한 기후위기와 심각한 불평등의 해결을 위해서 활용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어 생태사회주의에서부터 탈성장론까지 폭넓게 논의하고 있는, 유럽과 북미 사회운동들의 &그린뉴딜& 구상을 거부할 일은 아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며 생존과 삶을 위협하고 있는 상호 연결된 다중 위기들——기후생태 위기, 공중보건의 위기, 불평등 위기, 전쟁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등——은 기존에 확립된 범주의 개별 정책들의 처방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 위기들이 끊임없는 이윤 추구하고 자본 축적을 위해서 자연과 사회를 착취하는 자본주의 성장체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그 체제 자체를 변혁하려는 운동까지 필요하다. 이런 체제전환운동은 국가권력을 어떻게 획득하고 또 활용한 것인지, 또 이를 위해서 어떻게 거대한 사회적 힘을 결집하고 대중권력을 형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실천해야 한다. 공공재생에너지 전략과 운동은 그 자체의 목표를 가지지만, 동시에 이러한 체제전환운동이 풀어가야 할 과제(의 일부)를 앞서 도전하는 실험하는 것일수도 있다. 현실화되기 시작한 기후재난을 목격하면서 커져가는 기후위기에 대한 불안과 불평등에 대한 불안과 불안을 배경으로, 안전과 존엄을 지켜내고 싶다는 정동을 조직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기후정의운동을 목격하고 있다. 이 운동 안으로 고이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힘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대중권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 전망을 실험해볼 구체적인 계기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 고민의 끝에 공공재생에너지운동이 자리잡고 있다.

4. 공공재생에너지 운동 전략과 전술 제안

가. 운동 전략의 주요 내용

공공재생에너지운동은 공공재생에너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기후보호, 에너지기본권, 생태/인권적 개발, 일자리 보장/창출의 동시 추구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간명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

“공공재생에너지는 기후를 보호하고 깨끗하며 안전한 재생에너지의 공적인 확대는 에너지 기본권과 재생에너지의 생태적/인권적 개발을 보장할 수 있으며,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지키는 최선

이를 통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빠른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요구하는 기후운동, 에너지 기본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사회운동, 재생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며 공적 개발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 그리고 석탄발전소 폐쇄로 인해서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노동자들과 노조 등을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공동의 요구로 결집시켜서, 보다 큰 사회적 힘을 확보하고 법제도화를 시도한다. 구체적인 법제도의 내용으로 <공공재생에너지법>과 <한국발전공사법>을 제안하고 있다.⁰⁴ 그리고 이를 자신들의 핵심적인 정치적 프로그램으로 하는 진보정당운동(및 연대체)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형성한다. 이런 동맹을 추구하고 공동 행동을 조정하기 위해서 연대기구(예: 공공재생에너지동맹)를 결성한다.

한편 재생에너지 공유화 운동의 출발점이 되어준 제주도의 선진적인 경험과 사례를 전국화하고, 제주도의 공평화 운동을 계속 진전시키면서 구체적인 &현장&과 &역동성&을 형성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하면서 전남 지역 주민들과 이들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재생에너지 공영화 혹은 재생에너지의 공적 개발을 요구하는 흐름과 연계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구상과 주장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이 진행되는 현실적 주장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향후 일련의 정치 일정(총선, 대선, 지선) 속에서 <공공재생에너지법>과 <한국발전공사법>의 제정을 기후정의운동의 핵심적 요구로 등장시켜서 본격적으로 정치/사회 의제화한다. 이미 414 기후정의파업과 923 기후정의행진의 주요 요구로 &공공 중심 재생에너지 확대&가 포함되기도 했다. 한편 제시한 두 법안을 입법화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에서, 단계적 제도화의 목표를 설정하여 관철시킬 필요도 있다.

나. 정세 개입과 중간 목표의 설정

두 법안의 입법화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에서, 중간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할 필요도 있다. 이때 현재의 조건에서 발전공기업들이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하고, 여기에 폐쇄를 앞두고 있는 석탄발전 노동자들을 전환 배치와 직접 고용을 중간 목표로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중간 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현재 떠오르는 정세와 관련된 대중투쟁과 연결하거나 조직하는 계획을 세울 필요도 있다.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예비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 첫째, 현재 후퇴하고 있는 제주도의 풍력 자원 공공적 관리 정책/제도를 유지,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제주에너지공사와 발전공기업 사이의 공공협력(공적 계획(제주에너지공사)과 공적 개발(발전공기업))의 사례를 창출해낼 필요가 있다. 둘째, 한전 및 발전6개사가 참여하는 한국해상풍력의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의 2, 3단

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즉, 3단계의 민간기업/자본 참여 계획을 폐기하고), 이의 건설 및 운영에 폐쇄되는 석탄발전소 노동자를 우선 전환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석탄발전소 폐쇄 지역인 태안, 보령 등의 지자체가 추진하는 해상풍력 사업에 국가의 재정 투자를 진행하고 이를 발전 공기업이 진행하면서, 발전노동자들의 전환 배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추자도, 인천, 울산 등지에서 외국 자본/자본 등에 의해서 추진되는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서 &에너지주권& 참여에서 비판하고 이를 공적 개발로 전환을 요구하는 운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전략의 단계적 접근

운동 전략을 몇가지 단계로 나누고,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때 향후의 정치사회적 주요 계기점을 잘 활용한다. 우선 2024년 4월 22대 총선, 2026년 6월 9회 치선, 2027년 7월 22대 대선, 그리고 2025년 말부터 본격화되는 석탄발전소 폐쇄 일정 등을 주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의제화 및 조직 기반 구축 시기 : 2024년 4월 총선을 경유하면서 향후 대략 1년간, 공공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한 선전과 교육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맹을 건설하기 위해서, 잠재적인 운동 참여 단체와 집단들과 간담회 혹은 설명회 등의 방법을 통해서 조직 기반을 형성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운동의 논리와 근거를 수정보완해가며, 요구하는 입법안도 보다 세밀히 다듬을 필요가 있다. 한편 총선을 앞두고 노동조합, 기후환경단체, 진보정당이 공동으로 공공재생 에너지법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의제화를 시도하면 좋을 것이다. 한편 3월 말 태안에서 개최 예정인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노동자정의&, 9월에 개최될 것으로 전망되는 기후정의행진 등을 통해서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에 대한 대중적 인식과 지지를 확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둘째, 동맹의 구축 및 본격적인 캠페인 시기 : 2024년 하반기 혹은 2025년 상반기 즈음에 연대 기구를 결성하면서, 공공재생에너지법의 입법화 요구를 본격화한다. 총선을 위해서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지형을 분석하며, 제도 정치와 협력/견인할 정치 전략을 수립한다. 이때 2025년 석탄 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 해고&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이 법의 필요성을 예각화하여 부각시킨다. 또한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연차별 계획 등과 실적을 비교 분석하며,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에 대한 국가에 의한 직접인 투자의 필요성도 부각시킨다. 특히, 2025년 9월의 기후정의행진의 핵심적 의제와 슬로건으로서 공공재생에너지 요구가 자리잡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연대기구를 결성하고 난 이후에 &공공재생에너지 활동가 학교&, &공공재생에너지 선언& 등의 사업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법제도화의 도전 시기 : 석탄발전소 폐쇄를 앞둔 2025년 하반기를 첫번째 입법 운동 시

기로 설정하고, 법안 발의와 통과를 압박하는 집중 캠페인을 기획한다. 아마도 첫번째 시도로 공장 입법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어지는 선거들을 통해서 계속 이슈화하면서 입법화를 시도한다. 우선 2026년 지선을 앞두고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주도, 충남, 경남, 전남 등에 공공 재생에너지 관련한 지역별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요구하는 선거 캠페인도 기획한다. 또한 2026년 중반부터 본격화될 22대 대선 레이스에서 핵심적인 선거 의제가 되도록 기획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늦어도 2026년 가을 정기국회에서는 이 법 통과를 목표로 삼는다. 아마도 현재 제안하는 법안 전부가 일시에 입법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분 입법에 대한 판단과 입장이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입법 시도는 커다란 정치사회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회 밖의 강력한 대중투쟁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전략과 준비도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법제도의 실행 시기 : 입법 이후, 세부적 의사결정 및 실행 과정에서 참여하고 감시한다. 이를 위한 방안을 미리 준비하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소위 &거버넌스 참여&에 대비하기 위해서, 참여 전략, 전문 역량, 협력과 견제의 구조 등을 사전에 논의하고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법 시행 이후에도 반개혁적인 저항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전략도 필요하다.

라. 의제화 및 동맹 형성 시기의 전술

여기에서는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전략의 첫번째 단계로서 제안한 '의제화 및 동맹 형성 시기'의 전술에 대해서 집중하여 몇 가지 제안해보겠다.

1) (가칭)<공공재생에너지 캠페인단> 구성

운동전략의 첫번째 단계인 &의제화 및 동맹 형성& 시기의 캠페인의 기획/실행을 목적으로 하여, 공동 사업을 기획하고 소통, 조율하는 네트워크로서 (가칭)<공공재생에너지 캠페인단>을 최근 구성하였다. 이 네트워크는 <공공재생에너지 전략> 연구모임에 참여했던 단위/조직 및 기타 희망/제안 단체로 우선 구성하였다. 즉, 연구를 제안하고 지원한 단위인, 기후정의동맹, 에노사,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청소년기후행동과 함께, 연구모임에 참여했던 단위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녹색연합과 함께, 4개 진보정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이 참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 연구과정에서 소통을 하였던 단체들 그리고 공공재생에너지 전략에 동의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들에게도 개방되어 있다.

2) 캠페인단의 주요 활동 계획(안)

공공재생에너지 부문 및 지역 간담회 추진

공공재생에너지 전략과 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에 대한 지지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동조합, 환경/기후/에너지 단체, 지역 단체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폭넓게 추진한다. 민주노동기후특위,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발전비정규직대표자회 뿐만 아니라, 현장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지역 순회 간담회도 조직한다. 기후위기비상행동(및 소속 단체), 환경/에너지단체, 에너지협동조합 진영 등과도 간담회를 제안한다. 또한 공평화 운동을 시작한 제주와 재생에너지공영화포럼을 조직한 전남, 그리고 석탄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경남, 충남, 인천,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이 예고되어 있는 부산과 울산 등의 지역에서 간담회를 추진한다. 그리고 공공재생에너지 전략과 운동이 여러 쟁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점검하고 토론하는 연속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다. 이때 해외 모범 사례(미국 뉴욕 공공재생에너지법)에 대한 국제 세미나도 준비한다.

언론/선전 캠페인

공공재생에너지 전략에 대한 알리고 사회적 지지를 조직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몇가지 엄선된 쟁점을 중심으로 언론/선전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 기후위기, 국가가 하는게 뭐냐? 재생에너지 투자 늘려라! [언론/선전 캠페인 1]

발전공기업의 재생에너지 설비 과소와 투자 확대 노력의 부족을 비판하고, 민간 기업/자본에게 맡겨 놓았을때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우려를 부각시키면서,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직접 투자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라고 요구하는 언론 및 선전 캠페인을 조직한다.

(코로나 재난 시기에 국가/공공의 역할을 상기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산의 시급성과 국가/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의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동감과 지지를 조직하고 또 활용한다.

윤석열 정부가 기후위기에 국가 책임을 방기하고 핵발전 목표와 투자를 강화하는 반면 재생에너지 목표와 투자를 약화시키는 것을 비판하고, 해외 기업과 자본에 의한 (특히 해상풍력사업) 재생에너지 사업의 투자/수행이 &국부 유출&과 &에너지 주권&의 약화를 가지고 올 것이라는 점도 비판한다.

■ “석탄발전소를 폐쇄한다고, 노동자까지 폐쇄할 수 없다!” [언론/선전 캠페인 2]

2025년 태안1,2호기를 시작으로 연이어지는 석탄발전소 폐쇄,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규모 국가 투자로 발전공기업이 직접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고용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나아가 일자리가 부족한 청년들에게도 녹색일자리를 새로 제공할 수 있다는 언론 및 선전 캠페인을 조직한다.

특히, 이 캠페인은 노동조합과 기후/환경단체들이 공동으로 요구한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즉, 캠페인 주체의 변화, 그에 따른 스토리의 다양화를 만들어내어서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킨다. 예를 들어서, 발전노동자와 (청소년)기후활동가의 대화로 공동의 목표(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간담회, 토크쇼, 언론의 공동 인터뷰 등).

■ 난개발 막고 이익도 공유하는 제주의 풍력 공유화, 육지에도 가능하다

[토론회 + 언론/선전 캠페인]

재생에너지 난개발과 &주민갈등&에 대한 대응으로서 제주의 풍력 공유화 운동의 성과와 한계, 전남 등지에서 재생에너지 난개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는 &풍력 공유화& 노력 등을 소개하고 이를 전국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서 재생에너지 난개발을 막고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으로서 공공재생에너지 전략의 필요성을 부각한다.

3) 총선 공동 토론회 및 기자회견

총선은 종종 새로운 의제를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의 창 역할을 한다. 이 시기에 맞춘 특별 사업으로, 공공재생에너지 전략을 핵심적인 정치사회적 요구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공동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준비중이다. 공공재생에너지를 요구하는 노조와 기후운동 등이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여, 4개 진보정당을 포함하여 주요 정당들을 초대하여 정책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이 결과에 기반을 두고 기후정의운동, 노조, (진보)정당의 공동 기자회견을 추진한다.

참고 자료

- 01 “발전산업의 탈탄소 전환과 노동조합의 대응”, 이정희 외, <기후위기 대응 산업전환과 노동조합의 전략>, 노동연구원, 근간.
- 02 공적 투자 자원 조달 방안 및 국가재생에너지투자은행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홍석만(2023),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재정 규모 및 공공 투자 방안”, 기준모 외, 앞의 보고서(2장).
- 03 ‘인권 실사’ 등의 제도와 그 활용에 대해서는 김종철(2023), “인권에 기반한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공공성: 지역 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권 영향을 중심으로”, 기준모 외, 앞의 보고서(2장).
- 04 제안된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이치선, 한재각(2023),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 제안”, 기준모 외, 앞의 보고서(9장).

2024~2030년 새로운 국가로 이행할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정필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scmaru3440@hanmail.net

녹색전환/체제전환 운동을 위한 두 발표문, “기후위기 시대 국가/공공의 역할은 무엇인가”(서영표)와 “공공재생에너지운동, 어떻게 대중운동으로 만들 것인가”(한재각)의 문제의식과 전환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전략과 방법 등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 보완적인 논의를 위해 토론문을 작성한다. 새로운 국가로 이행할 에너지는 사회를 움직이는 힘을 포괄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2024년, 2030년 그리고 그 이후의 기후정치

기후위기의 원인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겠지만, 정치위기를 빼놓고 말할 수 없다. 권력관계가 응집되어 있는 국가를 무대로 하는 정치가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를 예방하지 못했고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나라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한국은 정치적 의지도 찾아보기 어렵고 국가의 능력도 없어 보인다. 올해 4월 10일,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윤석열 정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주류 정당 간 상호 심판론과 그 자장 안에서 반복되는 이합집산의 정치 동학(제3지대론)에서 기후가 설 자리가 있을까 싶다. 한국 사회의 복합적 균열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 실패와 제도적 제약 때문에, 그렇게 낡은 판이 유지되고 있다는 진단이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이 지나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21대 총선이 실시된 4년 전으로 거슬러 가보자. 당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후 국회'에 대한 관심이 제법이 컸다. 그러나 '위성정당' 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기후 이슈는 빨려 들어갔다. 선거는 결국 '기후 침묵'을 강요했다. 문재인 정권의 후반기를 뒷받침하는 거대 여당은 이렇게 탄생했다. 임기 4년 동안 여당과 야당을 차례로 경험한 더불어민주당은 결과적으로 기후 국회를 만들지 못했다. 여러 나라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넷제로(탄소중립)와 그린뉴딜이 추진되고 있지만, 제22대 총선을 맞이한 한국은 여전히 퇴행적인 선거정치에 매몰되어 있다. 기후 국회로의 전환이 실패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단기 선거 국면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기후운동과 기후정치가 만나는 접점을 기후

시간 속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파리협정 1차 NDC('21~'30)					파리협정 2차 NDC('26~'35)							
19대 대통령(문재인)					20대 대통령(윤석열)					21대 대통령							
20대 국회				21대 국회				22대 국회(★)				23대 국회					
민선7기 지자체					민선8기 지자체					민선9기 지자체							
◀◀◀ 구 체제(6공화국)													신 체제(★★★) ▶▶▶				

2030 체제전환 시간대(이정필, 2024)

우리는 이런 시간대를 염두에 두고 '87년 체제'와 '97년 체제'의 한계를 주목하면서 사회-생태적 체제전환을 민주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정확하게는 이미 지나쳤다. 2021년 본격적으로 출범한 파리협정 신기후체제와 장기 지속될 저성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자유주의와 개발주의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생태사회계약을 맺고 그에 부합하는 국가개조를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2030년까지의 선거 일정을 4~5년 동안 정치권력을 위임하는 입법부와 행정부 구성의 문제로 좁혀서는 곤란하다. 정권 유지나 교체냐의 정치공학적 접근이 아니라, 2030년, 나아가 2050년의 미래를 결정하는, 국가와 사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치축제가 되어야 한다.

녹색전환/체제전환론의 과거와 현재

기후위기, 코로나19, 저성장 및 사회양극화 등 복합위기에 처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전환 정치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미래지향적인 학습과 실험의 공간을 구상하고 실천해야 한다. 기후 관련 배출 격차·생산 격차 이외 다양한 수준의 전환 격차를 확인하고, 전환 과학, 전환 운동, 전환 정치 사이의 격차를 극복해야 한다.

'기후정의포럼'이 제시한 '기후정의선언 2021'의 20가지 테제는 국내 기후정의 운동과 정치를 논의하는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2011년 '기후정의연대' 결성 이후 2019년 '기후위기비상행동'과 2022년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등을 통해 기후정의운동이 조직화·대중화·다양화되고, 직접행동·비폭력 시민불복종이 활성화되고 있다. 국내외 정세 변화에 조용하면서 기후대응이 제도화·보수화되는 가운데 운동의 분화 및 급진화도 동시 진행 중이다. 기후정의운동에서 제기하는 체제전환은 '화석연료 문명에서 벗어나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전환',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탈성장사회로의 전환', '자본주의 임금노동 관계에서 벗어나 탈자본주의로의 전환'까지 포괄한다. 그러나 담론과 실제 정책 사이의 간극 극복,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기후 거버넌스 구축, 사회운동의 작동 방식 혁신, 그리고 기후정책 역행과 잘못된 해결책(그린워싱)에 저항, 공공 부문 탈환 및 활용(생태적 공공성), 대중적·급진적 기후정의운동 형성, 탈성장·포스트성장 경제로의 전환 탐색 등이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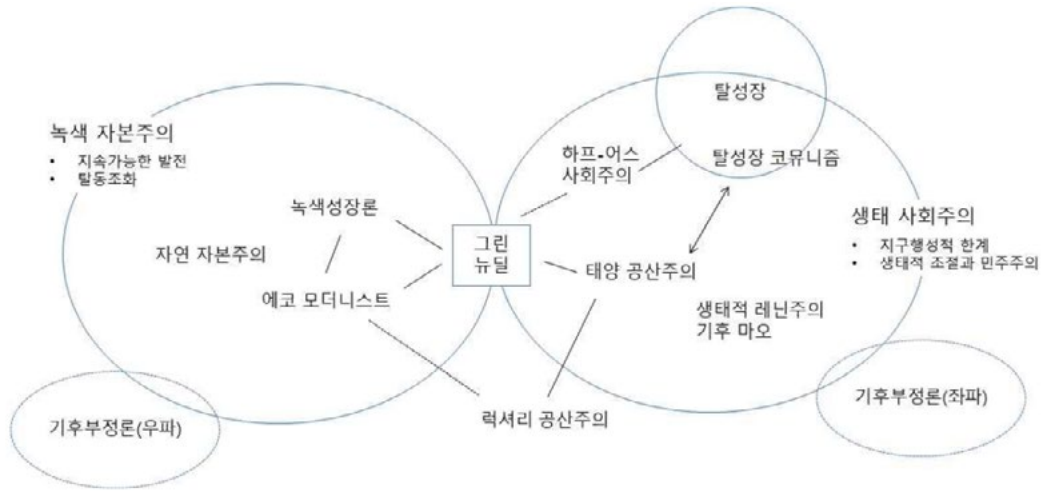
제로 남아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녹색복지, 녹색국가, 녹색복지국가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검토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생태진영-복지진영, 국가 중심-지방·공동체 중심, 녹색자본주의-녹색사회주의 등을 둘러싼 쟁점이 있지만, 최근 ‘회복탄력적 복지국가’ 등 생태위기 시대에 복지국가의 전면적 재구성과 녹색전환을 이끄는 녹색복지국가 비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편적 기본 정책’에 해당하는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지속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녹색 헌법’, ‘자연의 권리’, ‘기후 소송’과 ‘생태학살 범죄’ 등 법률적 접근, 나아가 ‘새로운 생태사회계약’으로 녹색전환의 외연이 확대되고 있다.

2010년대 후반 재점화된 그린뉴딜은 탈성장과 생태사회주의 등의 다양한 사상적 조류와 교차하면서 녹색전환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다. 특히 생태경제학, 탈성장·포스트성장과 생태사회주의 등 주류적 입장에서 벗어나 있던 대안적 제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태경제학은 지속가능한 한계선 내에서, 즉 에너지·물질 총량 제한을 전제하거나 목표로 하는 생산, 소비, 분배, 노동, 조세, 재정, 금융 분야에서 대대적인 개혁을 추구한다. 탈성장·포스트성장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간 웰빙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경제시스템을 생활세계와의 균형을 맞추도록 설계하여 에너지와 자원 사용을 계획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탈성장 계획 및 계획적 전환의 목표는 한계선과 우선순위 설정, 민주적 참여 보장, 노동의 재조직화와 노동시장 개편, 생산방식과 경제구조 개편, 사회적·경제적 불안정 관리이며, 이를 통해 사회-생태적 조정이 강조된다. 그리고 체제전환의 대안으로서 생태사회주의나 ‘생태사회주의적 탈성장’도 검토되고 있다. 이렇듯 탈성장론과 생태사회주의가 추구하는 이론과 실천의 연대는 기존의 범주를 단순히 연결하는 것을 넘어서 상호 교차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창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념 지형도와 잠정적 미래 선택지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 등 소수정당의 적극적인 정책공약은 현행 선거제도와 정당체계의 한계 속에서 주류 정당에 위협적이지 않다. 보수적 성향의 주류 정당 간의 선거경쟁에서 기후위기 이슈는 정체된 상태이며, 탈성장은 커녕 생태적 현대화나 지속가능한 발전보다 경제성장이 강조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과 정당체계 개편 등을 통해 기후위기 공약이 다양한 이념 지향의 정당 간 정책경쟁 이슈로 제기될 수 있을 때,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을 일부나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국내외 ‘탈성장 지향 그린뉴딜’ 종합구상과 ‘추출경제에서 생성경제로의 전환’, 그리고 ‘정의로운 도시전환’이나 ‘도시 커먼즈 전환’ 등의 개념과 사례를 통해 전환의 다중 스케일 접근을 접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인류세 또는 자본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기후 파시즘·녹색자본주의·그린뉴딜·탈성장·생태사회주의 등 잠정적 미래 선택지와 이념 지형도를 그려볼 수 있게 된다.



기후위기와 자본주의에 대한 입장(김현우, 2023: 67)

이 지점에서 ‘이론과 현실의 간극’과 ‘운동과 정치의 격차’를 해결하고 전환 동맹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틈새적 변혁, 공생적 변혁, 단절적 변혁 등 녹색전환의 경로와 전략을 통해 자율적 공간과 대안적 실험, 비개혁주의적 개혁, 대항 헤게모니 형성 등 다층적 기획이 필요하다. ‘심층 녹색전환 국가’라는 새로운 공화국은 복합위기 시대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민주적, 참여적 계획과 정의로운 전환 관리를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 질서를 의미한다. 경제성장주의 생산-분배 시스템의 역사적 모델인 전통적 복지국가의 지속불가능성을 인정하고, 동시에 전환적·생태적 공공성과 자율성의 원칙을 갱신해야 한다. 심층 녹색전환 국가는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권력관계의 적대와 경합 속에서 전환의 비전과 전략의 다양성을 전제·상정하는 공유비전과 공통지반을 추구한다.

공공재생에너지 운동 전략 이어받기

국가의 공적 개입을 통한 대안적 소유관계 및 운영형태, 국가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의 녹색전환(서영표)은 공공재생에너지 운동 전략과 전술(한재각)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한다. 이 중간 지대에서 전환정책(transition policy)의 전략과제가 추가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첫째, 탈탄소·탈핵은 녹색국가와 녹색사회의 원칙이자 전제이며, 전환 프로젝트에서는 시스템 해체적 관점(destruction functions)에서 전략과제를 검토한다(탈화석연료, 탈핵, 탈내연기관차 등). 둘째, 그린뉴딜은 녹색전환 전 분야에 대한 인프라스트럭처의 전환(infrastructuring과 commoning)에 초점을 맞춰 전략과제를 강구한다. 셋째, 에너지전환은 창조적 관점(creation functions)에서 양질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그 범위로 해서 연성에너지시스템 전환을 위한 전략과제를 제안한다. 넷째,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향에서 에너지·기후 대응 및 전환의 자치·분권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전략과제를 종합한다. 다섯째, 정의로운 전환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전환과정에서 필수적인, 사회적으로, 생태적으로 유용하고 타당한 전환정책의 틀을 구상하고 그에 따른 전략과제를 설계한다.

이런 맥락에서 공공재생에너지 운동 전략은 앞으로 사회적 토론 과정을 거쳐 에너지전환 로드맵 및 시나리오에 대한 합의 과정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재생에너지 공급 측면만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수요 측면과 관련되는 온실가스 다배출·에너지 다소비 산업·업종 및 취약 산업·업종의 전환전략으로 의제와 외연을 확장하려는 의식적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외 탈탄소 에너지전환 시나리오 요약(녹색연합·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23)

제목	주요 내용
기후국회·녹색사회 5대 전환 프로젝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 탈석탄 • 2030 내연차 생산·판매 금지 • 2035 탈핵 • 2050 광역·기초의 재생에너지 자립(RE100)
정의당 대선 정책공약(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 탈석탄 • 2030 내연차 생산·판매 금지 • 2040 탈핵
녹색당 지선 정책공약(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8 내연차 생산·판매 금지, 2040 내연차 운행 금지 • 2030 탈석탄 • 2030 탈핵 • 2030 탈LNG • 광역단위 재생에너지 자립 2030 50% 이상, 2050 100%
탈탄소/섹터커플링 시나리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40 탈석탄(* LNG 백업용 발전 옵션 검토) • 2040 내연차 퇴출(대체)
K-MAP 시나리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외,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5 탈석탄 • 2040 내연차 판매 금지 • 2045 탈LNG(* 수소터빈 전환)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녹색연합·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년 탈석탄 • 2035년 탈핵 • 2040년 탈가스 • 2040년 탈내연차(생산·판매 중지 2030년, 운행 중지 2040년) • 9개 에너지권역 에너지자립 목표 설정
Net Zero by 2050 A Roadmap for the Global Energy Sector (IEA,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5 발전부문 탄소중립(OECD)
Powering Past Coal Alliance(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 발전] 2030 탈석탄(선진국)
Beyond Oil and Gas Alliance(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가스 탐사·개발·생산] 명확한 입장은 없음. 회원국에 따라, 석유·가스 상류단계 생산 금지 시점을 2040, 2045, 2050 등으로 설정함
Calverley & Anderson(2022); Oil Change International(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가스 탐사·개발·생산] 2034 석유·가스 상류단계 생산 금지(선진국)
Global Coal to Clean Power Transition Statement(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년대 탄소저감 장치 없는 탈석탄발전 전환(선진국)
Cop26 Declaration On Accelerating The Transition To 100% Zero Emission Cars And Vans(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5 내연차 판매 금지(선진국)

참고 자료

- 01 구준모 외(2023),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전략」,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청소년기후행동, 사회공공연구원.
- 02 김현우(2023), “기후위기가 생태사회주의 논의에 가져온 영향과 함의”, 맑스꼬뮤날레 집행위원회 <제11회 맑스꼬뮤날레: 위기와 비판>, 2023. 5. 25~28.
- 03 녹색연합·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2023),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 04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2020), “기후국회·녹색사회 5대 전환 프로젝트”, 이슈페이퍼 2020년 1호.
- 05 이정필(2023), “기후위기 시대, 녹색전환의 비전과 전략”, 노회찬 5주기 추모심포지엄 <복합위기의 시대, 우리가 마주한 질문'들'>, 2023. 7. 5~6.
- 06 이정필(2024), “다가오는 총선, '기후선거' 가능할까”, 프레시안, 2024. 1. 16.

기후위기 시대,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의 의미와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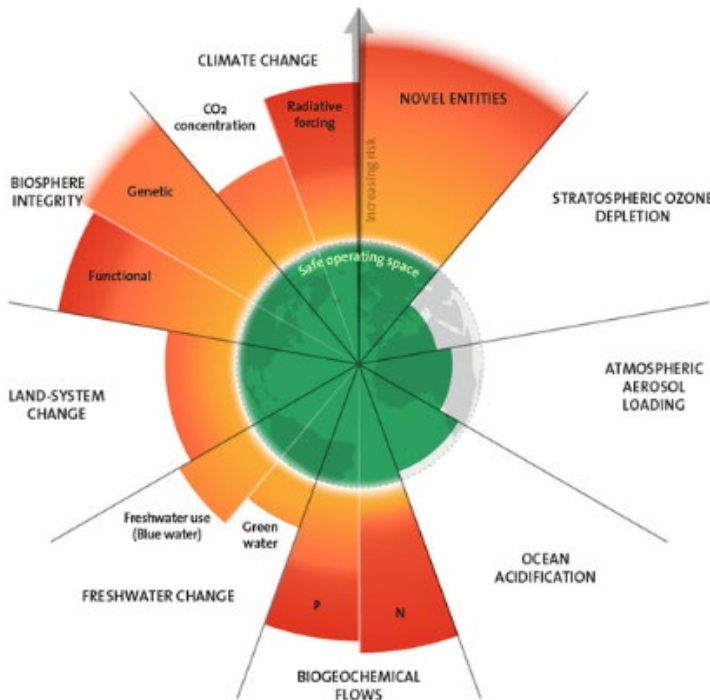
황인철 |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hic7478@greenkorea.org

두 발표문은 기후위기 시대, 국가/공공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체제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재생에너지의 필요성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두 발제문의 취지와 문제의식, 방향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며, 공공재생에너지운동이 체제전환이라는 전망과 연결되어 대중의 지지와 참여를 받는 운동으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고려할 점을 몇가지 말하고자 한다.

1. 기후위기 시대, 왜 '체제'가 문제인가?

우리가 전환하고자 하는 '체제'는 매우 복잡적이고 다층적인 구조(system)다. 그 중심에는 자본주의가 놓여 있다. 기후위기 시대, 왜 자본주의 체제가 문제가 되는가? 계급간의 불평등, 자본의 이



Stockholm Resilience Centre, Planetary boundaries, 2023

윤추구가 낳은 상품화, 노동착취와 공공성 훼손 등은 기후위기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지적되어온 문제다. 그렇다면 이전과 다르게 기후위기의 맥락에서 주목해야 하는 자본주의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성장주의 속성일 것이다. 자본축적과 이윤창출을 위해 자본주의는 ‘성장하라’는 명령에 지배받는다. ‘무한한 성장’이라는 가정 하에 돌아가는 경제시스템이 바로 자본주의다. 그런데 무한한 성장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에너지와 자원 소비가 필요한데, 이것이 지구생태시스템의 한계 때문에 불가능하다.

1970년대부터 <성장의 한계>와 같은 선구적인 연구가 있었다. 최근의 지구생태한계선 관련 연구(Stockholm Resilience Centre, Planetary boundaries, 2023)에 따르면, 기후변화(이산화탄소 농도 등), 생물권, 토지변화, 담수변화 등 9개의 지표 가운데, 6가지 지표가 인류가 지속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나온다. ‘1.5도 지구평균온도 상승제한’, ‘탄소예산’ 등의 기후변화 관련 개념이 말하는 바도 결국 ‘한계’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한계’가 존재하는 세상에서는 ‘정의’의 문제가 더욱 중요해진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는 더 많은 성장을 통한 소위 ‘낙수효과’에서 해결책을 찾았다. 하지만, 더 이상 파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 파이를 어떻게 정의롭고 공정하게 나누는가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도넛경제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산양식과 소비양식은 기본적 필요충족이라는 바닥(floor)과 기후위기 시대에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초과(excess) 생산/소비의 천정(ceiling) 사이”(서명표)에 있어야 한다. ‘한계’ 속 ‘정의’가 관건이 된다. 생태정의와 사회정의가 함께 가야하는 이유다.

2. 왜 공공재생에너지인가

생태정의(기후위기 대응)와 사회정의(불평등완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데 있어서 공공재생에너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공공재생에너지는, “대규모 공적 투자로 공적 기관에 의해서 개발되고 소유, 운영되는 재생에너지(특히 태양광과 풍력) 발전시설”로서, “공공(公共)”이란 국가에 의해서 설립되고 운영되는 (발전)공기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의미하지만(公), 이외에도 지자체에 의한 공기업과 (시민 참여형) 협동조합 등과 같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도 포함하여(共) 이들 사이의 ‘공공(公共)협력’을 강조”한다 (한재각).

‘공공재생에너지’는 어떤 ‘에너지원’이나와 함께 그 에너지원의 소유, 투자, 운영하는 ‘주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께 담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급하지만 지체되고 있는 화석연료/핵에너지로부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너지원), 그리고 민간자본에 의한 ‘약탈적전환’(한재각) 형태가 아닌 국가, 공기업, 지자체, 협동조합 등의 ‘공공협력’ 형태로 전환을 이루는 방식이다. 발제문(한재각)은 이러한 공공재생에너지의 장점/효과를, 신속한 재생에너지 확대, 환경과 인권 침해가능성 회피, 경제성과 에너지 기본권, 석탄발전 노동자의 일자리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견해에 동의하면서, 추가로 몇가지 견해를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재생에너지가 매우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야 한다. 녹색연합의 2023년 대안에너지시나리오에 따르면, 탈석탄, 탈가스, 탈핵, 탈집단에너지를 모두 전제할 경우, 2050년까지 약 1,054GW 용량의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규모의 용량은 재생에너지 '기술적' 잠재력 이내에 해당하나, '시장적' 잠재량은 초과한다. 이 말은 곧, 시장의 경제성에만 의존해서는 충분한 재생에너지 확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대신하여, 국가가 직접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세우고 직접 자금을 조성하고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대규모 석탄발전 폐쇄를 앞둔 상황을 고려할 때 노동자의 일자리 보장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기존의 발전공기업이 재생에너지공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지금과 같이 공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축소하고 그 빈 자리를 민간자본이 차지할 때, 재생에너지 발전에서 공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히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발전공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주도함으로써 석탄발전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재생에너지확대는 에너지수요감축, 화석연료산업감축, 비에너지산업전환 등 전체 에너지전환과 산업전환과의 연관 속에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전 세계에서 2000년 대비 연간 80억메가와트시 이상의 청정에너지가 생산되는 동안, 같은 기간에 경제성장은 에너지 수요를 480억메가와트시로 증가시켰다. 이는 비유하자면 “점점 커지는 구멍이에 삽으로 모래를 퍼넣는 것과 같다” (제이슨 히켈, <적을수록 풍요롭다> 190쪽 참조). 한국에서도 에쓰오일이 진행한 야헌프로젝트, 삼성이 추진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대규모 에너지소비 산업시설이 온실가스 감축정책이나 에너지 공급 정책과는 아무런 상관 없이 입지하면서, 전체 에너지 수요와 탄소배출을 증가시키고 화석연료 발전시설 확대 계획을 야기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체 에너지/산업 '계획' 안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이는 국가/공공이 주도해야지 시장이나 민간자본에 맡겨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3. 국가/공공의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그런데 국가/공기업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자동으로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다.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는 각종 개발사업과 에너지관련 사업 과정에서 국가/공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경험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심각한 인권침해와 지역갈등을 낳았던 밀양에서의 765 송전탑 건설사업이 그 단적인 예다. HVDC 송전선 건설을 둘러싼 지역에서의 갈등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최근에는 시민사회의 반대와 경제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해외 석탄발전사업을 결정한 바 있다. 핵발전 건설을 둘러싼 갈등도 물론이다. 4대강사업, 국립공원개발사업 등도 정부, 공기업, 지자체에서 추진하였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해당 공기업만의 문제라기보다 공기업을 좌우하는 정부/정치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이 새롭게 부각되

대안 에너지 시나리오 구성

구분	전력공급 전환 및 재생에너지 확대 시나리오					최종에너지수요 감축 및 전기화 시나리오		
	정부s	S1	S2	S3	S4	D1	D2	D3
석탄	일부 폐지 가스 대체	2030년 탈석탄발전						
원전	노수원전 수명 연장 및 건설 중 원전 확대	2035년 탈핵발전						
LNG	유지 혹은 확대			2040년 탈가스발전				
집단	유지				2045년 탈집단에너지			
태양광(50년)	250GW	323GW	450GW	800GW	900GW	900GW	750GW	635GW
풍력(50년)	65GW	65GW	100GW	150GW	150GW	150GW	150GW	150GW
재생E(50년)	319GW	392GW	554GW	954GW	1,054GW	1,054GW	904GW	789GW
전력 자립률	고려x	지역별/권역별 재생에너지 전력 자립률 달성 적극 고려						
최종E 수요	기존 정부 전망치 고려						30% 감축	50% 감축
최종E 전기화	전기화 고려x					최종에너지수요의 단계별 전기화		

녹색연합, 예정연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2023 참조

기도 했으나, 실제로 시민들의 요구만큼 충분한 역할을 했는지는 회의적이다. 코로나를 계기로 그동안의 경제성장중심주의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했지만 3년 후 세계 각국은 코로나 이전으로 회귀했다.

이러한 한계를 어떻게 넘어서서 시민들이 민주적 개입과 통제를 이룰 수 있을지가 향후 논의되어야 한다. 발제문(서영표)처럼, “녹색전환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국가 소유 기업은 과거의 관료주의와 달라야만 한다.” 그리고 “국가의 공적 권력은 시장의 힘을 사회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지적했듯이 국가는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사회로부터의 조직된 저항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사회의 압력에 의해 민주화된 국가의 공적 개입의 핵심은 대중에게 권력을 나누어주고 민주적으로 시장과 국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회의 역량을 길러내는 것이다.” 공공재생에너지운동은 국가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전략을 요구한다.

4.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략

발제문(한재각)이 헌법적원리, 추진방식, 추진효과 차원에서 요약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에 공감한다. 발제문은 오염자부담을 통한 자원조달, 에너지 민영화 정책을 중단, 발전공기업 통

합, 공유재라는 인식 확대 등의 운동이 '정치사회적 투쟁'으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생각해 볼 점을 몇가지 남긴다.

첫째, 공공재생에너지가 '체제전환'이라는 보다 큰 전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에릭 올린 라이트는, 자본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전략을 자본주의 분쇄하기, 자본주의 해체하기, 자본주의 저항하기, 자본주의 벗어나기로 분류한다. 그리고 그는 아래로부터의 상향식 기획(저항하기, 벗어나기)과 국가 중심적 하향식 전략(길들이기, 해체하기)을 결합하는 자본주의 '잠식하기'라는 전략을 제안한다. 현실의 경제체제는 자본주의적 요소와 비자본주의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데, 자본주의가 지배적인 구실을 할 때 그것을 '자본주의 체제'라고 부른다. 라이트는 "자본주의에 도전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이 복잡한 체제 내부의 여러 공간과 틈새에서 가능한 곳마다 더 민주적이고 평등하며 참여적인 경제 관계를 건설하는 길이다. 자본주의 잠식하기라는 개념은 이 대안들이 장기적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서 충분히 두드러지게 돼 결국 이 체제에서 자본주의의 지배적 구실을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상상한다"고 밝힌다 (에릭 올린 라이트, <21세기를 살아가는 반자본주의자를 위한 안내서> 101쪽 참조). 공공재생에너지가 자본주의 체제를 잠식하기 위한 송곳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둘째, 신자유주의의 영향 등으로 시장중심, 민간기업중심의 논리가 사회 전반을 광범위하게 지배하고 있다. 온갖 재화와 사회서비스의 공급이 민간자본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는 현실에 익숙한 이들에게 국가/공공의 역할에 대한 발표문의 입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시장과 민간자본으로부터 사회공공서비스를 국가와 공공이 탈환하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사회적 설득력을 높이는 것이,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다. 특히 공공재생에너지가 평범한 시민들의 삶에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 편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튀카 샹셀은, 선진국이든 저소득국가든 에너지, 상하수도, 대중교통 등의 공공서비스 개선이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빈곤층의 생활수준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그는 스웨덴의 사례를 들면서, 스웨덴 정부가 1970년대부터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도시 난방 네트워크를 개발하여, 가계 소비를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감소시켰는데, 빈곤층이 가장 큰 수혜자였다고 밝힌다. 오늘날 스웨덴이 난방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에너지가 재생에너지이고, 지자체와 연계된 공공기구가 소유 관리하고 있다고 밝힌다. (튀카 샹셀, <지속 불가능한 불평등> 212-3 참조) 이러한 사례나 근거를 더욱 다양하고 풍부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셋째, 공공재생에너지의 중간목표 중 하나로 현재의 정부/공기업이 왜 재생에너지 확대를 안/못하는지에 대한 평가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도록 하는게 필요하다. 핵발전예 매달려 재생에너지 목표는 오히려 축소하고 있는 현 정부의 문제점과 함께, 현재 공기업들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과 그를 타파하기 위한 것도 중간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발전공사법이나 공공재생에너지법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서도, 공기업들이 재생에너지에 적극적으로 나

설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넷째, 다양한 운동주체들(환경단체, 노조, 에너지기본권 운동단위, 조세개혁 등)이 공공재생에너지운동을 중심으로 연대하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사회공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운동 내에 에너지를 위치시키고 연대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원확보를 위한 오염자부담의 조세개혁은 그 자체가 치열한 싸움의 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재생에너지를 위한 자원만이 아니라, 보건의료, 공공교통, 주거 등 다른 여타의 사회공공서비스를 확보하는데도 반드시 전제가 되는 일이다. 특히 감세를 외치는 현 정부에 맞서서, 시민의 기본적 삶을 지키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자원마련과 조세개편 자체를 위해 다양한 운동이 연대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에너지민영화 흐름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체제전환은 민영화를 막아내는 일로부터

조진 |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

윤석열정부 이전부터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민영화·시장화 흐름은 지속되어왔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철도, 전기, 가스산업 민영화 시도와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 90년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통신 민영화시도와 한국통신노동자들의 투쟁, 이명박-박근혜정부를 거치며 펼쳐진 의료 및 철도민영화 시도와 이에 맞선 전 사회적 민영화 반대 촛불 등 이윤을 하락을 만회하려는 자본은 늘 필수재인 기간산업에 대한 시장화를 노렸고, 노동자들은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고 사회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정부 집권 이후 각 공공분야의 시장화 흐름은 전례 없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겉으로는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좋지 않음을 의식하고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있지만, 대중들은 과연 공공기관의 사업 집행이 공공성 확대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명쾌한 확신이 없어 미심쩍음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경쟁 속 이윤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에 대한 불신과 노동권을 지켜줄 노동조합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으로, 정부가 '모범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잃은 지 오래이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 공기업들이 이미 독점시장에서 독점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잃고 개방된 시장에서 민간사업자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 그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다.

이런 현실을 뒤집고 전진하는 체제전환의 발걸음은, 지금 노동운동이 수행하는 민영화 반대 투쟁과, 민영화된 기업들을 재공영화하는 것을 넘어, 필수공공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생산하고 소비하는 다른 세상을 상상하는 곳에서 시작될 것이다. 오늘이 그 자리이다. '바람은 주인이 없다'와 같은 멋진 구호가 우리 운동의 중심이 되는 상상을 해본다. 동시에 사회를 바꿔낼 큰 투쟁의 시작은 지금 닦친 민영화 광풍을 함께 막아내며 성장할 것이라 믿는다. 그래서 오늘은 에너지부문 내 민영화 움직임에 대해 짧게 소개하고자 한다.

직접(기업)PPA

PPA(Power Purchase Agreement)는 전기사용자와 발전사업자간 계약기간동안 사전협의를 한 가

격으로 하는 전력구매계약체결을 의미한다. 즉,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제3자PPA의 경우 한전이 중개) 기업 간 재생에너지를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RE100에 따른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사용하자는 캠페인으로부터 시작됐다. 다수의 다국적기업이 이에 참여함에 따라, 한국의 수출대기업들도 재생에너지 수급에 힘을 쏟고 있다. 문제는 한국의 전력소매의 55%가 산업용이라는 점이다. 즉, 그간 상대적으로 낮은 단가로 전기요금 특혜를 누려왔던 대기업들이 전력거래관계에서 이탈할 경우, 향후 장기적으로 저렴한 전원을 활용할 방법이 사라진 일반 국민들의 전기요금 인상이 우려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PPA를 통해 기업에 부족전력을 공급해주는 한전이 기업의 압력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재생에너지발전 초기 단계로, 발전단가 및 판매가가 아직 높은 편이기에 재생에너지로 전력 전체를 공급받지 못하는 대기업은 부득이 한전으로부터 부족 전력을 공급 받아야 한다. 이에 전력공급설비를 제공한 한전이 체리피킹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상대적 높은 요금을 부과하자 대한상의를 비롯해 기업들의 반발이 일었다. 결국 22년 말, SK E&S와 제3자PPA 계약을 체결한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한전은 ‘울며 겨자먹기’로 다른 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값싼 단가로 부족전력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다. 이처럼 자본의 압력은 자신의 이윤을 위해 공기업인 한전의 적자 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움직였다. 이는 곧장 한국전력의 구조조정과 민영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의원의 주도로 작년 6월 통과된 후, 올 6월 시행령 공표를 통해 기능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법이 사실상 지역부터 시작하는 전력민영화라는 점이다. 법 제정 취지는 중앙집중형 전력생산-공급 시스템을 벗어나,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하며, 이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다는 것이다. 발전소나 송전탑 인근 지역주민의 반발로 더이상 신규석탄화력발전소를 지어도 이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어렵게 되자, 신재생에너지로 지역의 에너지자립을 도모하고, 차등요금제를 도입해 전력생산지역은 저렴한 전기요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민의힘> 압력으로 법 제정 막판에 중소형원자로(SMR)가 분산에너지사업자 범주에 포함된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행정구역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혈안인 점을 비춰 볼 때, 안전성과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자력발전소가 전국 방방곡곡에 분산하여 설치될 우려가 있다. 이를 무탄소전원이라고 말하며 핵발전 확대를 추진하는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원전마피아와 다를 바 없다. 두 번째는 법이 규정하고 있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지역 내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판매가 가능하다. 즉, 민간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소매자에게 개별전기요금을 책정해 소매판매가 가능해진다. 거꾸로 말하자면, 전기사용자가 전기공급자 선택권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전력민영

화로서, 발전사업자는 전력생산을 매개로 한 다양한 사업활로를 창출하겠지만, 통신사업에서 보듯 결국 기간산업의 과점은 전 사회의 복리 증진보다 몇몇 대기업의 이윤 확대에 집중되어, 다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재앙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기후정의운동은 공공성이 결여된 재생에너지 확대가 결코 정의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전력민영화에 저항하는 지역별 대중운동 건설에 앞장서야 한다.

송전 민영화

한전은 작년 12월 발표한 '전력계통 혁신대책'에서 송전사업자인 한전의 전력망 건설 방식 다양화를 위해 민간투자를 받겠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도 지난 10월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두 제도는 대동소이하다. 기존까지 송전망 건설은 한전이 자금을 조달하고, 민간건설사가 하청을 받아 건설하는 것이 주였다. 그러나 이제는 한전만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자금투자를 하고 송전망 건설을 총괄하는 것이다. 이후 투입된 자본은 준공 이후 한전의 수익을 통해 회수하거나 국가 전력망설비를 민간송전사업자에게 아예 귀속시키게 된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첫째, 한전의 막대한 적자로 투자여력이 없다. 두 번째, 정부가 사활을 걸고 2036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 중인 '서해안해저전력고속도로' 사업 집행을 위한 송전망 추가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RE100을 염두에 둔 삼성전자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로 재생에너지를 끌어오기 위해선,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남으로부터 안정적 전력을 공급할 고압선로 확보가 필수적이다. 추후 수도권에 집중될 데이터센터까지 감안한다면, 더 많은 재생에너지 전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동안 송전사업은 기간산업으로 소위 '돈이 되지 않는 사업' 취급을 받았다. 막대한 건설 및 투자비용에 비해 수익이 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력산업 민영화 방법에서도 가장 마지막 단계였다. 전력이 민영화된 일부 국가에서도 송전망은 국가가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나 송전망 사업이 민간에 개방될 시, 민간기업의 사업비용은 물론 투자비용까지 회수를 시도해, 전기사용자의 요금 부담은 커질 것이다. 심지어 송전망 투자 및 건설을 민간기업에 오롯이 맡길 시, 돈이 되는 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 중심 우선으로 송전망 건설 추진이 예상되기에, 상대적으로 멀거나 소규모지역의 경우 전력공급과 소비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에 더해 송전망 건설을 민간기업에 맡길 경우, 공기업에 비해 과도한 건설비용 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일례로 16-17년 발전공기업이 건설한 석탄발전소의 공사비가 평균 1조 4천억원 수준인데 반해, SK플랜트, 삼성물산, 포스코건설이 건설한 석탄발전소의 공사비는 평균 2조 5천억원을 상회했다. 이처럼 송전부문의 민영화는 재생에너지를 생산에 전유하려는 재벌대기업의 생산관계, 송전망 민영화시 도서산간 등 낙후지역의 전력수급 문제, 그리고 건설비용 그 자체의 문제 등 문제점은 복합적이며 파괴적이다.

자원안보특별법

자원안보특별법은 에너지수급에 대한 불안한 정세를 이유로 석유, 천연가스, 광물, 신재생에너지 부품 등을 국가핵심자원으로 삼고, 이에 대한 비축과 공급, 긴급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도시가스사업법으로 보장했던 한국가스공사의 공급 독점권을 훼손해 제3자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이란 점이다. 이 법은 민간에너지재벌에게 비축의무를 부과하고(이마저도 한국가스공사와 합의를 통해 의무를 면할 수 있다), 민간재벌들이 비축잉여분에 대해 한국가스공사에 우선 처분을 실시하지만, 이마저 어려울 경우 국내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즉, 민간재벌에게 제3자 판매를 공식화하여 가스민영화의 첫 틈이 열린 것이다.



자원안보특별법 기능시 가스도매수급 흐름도

이는 LNG직수입자인 에너지재벌의 요구를 오롯이 반영한 명백한 가스민영화 법안이다. 이미 에너지재벌은 국내법망을 피하고자 해외트레이딩 자회사를 통하여 우회도매판매를 지속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단속하기는커녕, 이제는 대놓고 가스민영화를 열어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작년 말, 에너지재벌의 체리피킹 행위와 불안한 가스수급 상황 속 천연가스 가격상승으로, 전년대비 2배가 넘는 5만명의 에너지 취약계층이 급증하여 한파 속 추위를 감내해야 했고,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전기료 체납액은 10%나 급증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에너지재벌은 역대급 호황 속 22년 한 해만 2조3천억의 천문학적 영업이익을 올렸다. 값이 쌀 때만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비쌀 때는 모든 책임을 가스공사에 전가한 에너지재벌 탓에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2조원을 넘어섰다.

노동계급이 함께하는 기후정의운동

오늘 다 담지 못했지만, 공공교통, 공공철도 확대를 통한 기후정의실현, 각급 학교와 병원, 공공기관의 녹색단협 체결 등 공공부문 노동운동도 기후정의를 위한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미 기후정의운동은 노동운동과 만나기 시작했다. 정의로운 전환의 이름으로 각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발전노동자들과 기후활동가들은 발전소 폐쇄와 일자리 문제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넘어 공동행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가을에는 <공공철도가 곧 기후정의>라는 이름으로 철도민영화 반대파업과 9.23 기후정의행진을 묶어냈다. 서로의 투쟁이 점점 없는 확연히 다른 운동이 아니라 계급적 이해의 끝에 서로의 요구가 맞닿아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의 길은 더 크게 열릴 것이다. 공공철도 없는 철도민영화의 미래에 모두가 평등한 이동권을 보장받는 저탄소 이동수단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 재생에너지 전력산업이 완전히 민영화된 세상은 과연 기후‘정의’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운동 앞에 더 큰 미래를 함께 그리자.

'대한민국 에너지전환 1번지 제주'는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의 연료가 될 수 있을까

부순정 |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과학적 비판과 도덕적 비판이 만날 때, 불만은 연대가 되고, 연대는 저항이 되어 국가권력이 행사되는 국가장치 안의 빈틈에서 물질적 변화를 실현하는 운동이 연료가 된다.
- 발제1. '기후위기 시대, 국가/공공의 역할은 무엇인가(서영표) 내용 중에서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는 대한민국 에너지전환 1번지로 꼽힌다.⁰¹ 제주가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선포(2012년 5월 2일)하고 핵심사업인 해상풍력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제주에너지공사가 출범(2012년 7월 4일)한 지 10년이 넘었다. 지금 제주에서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라는 공공주도 풍력개발의 원칙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제주가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모범사례로 손꼽힐 수 있을지 살펴보고 발제문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의 길에 제주의 경험이 긍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들여다보려고 한다.

1. 아이디어의 출발_제주도 '공공화'(풍력자원 공유화) 운동

1975년 3kW급 독립형 소형풍력발전기 1기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가동된 이후 50년 가까이 제주도는 한국을 대표하는 풍력발전 시험대가 되었다. 1980년 풍력발전 등 청정에너지 이용 문화 복지마을 육성 기본지침 수립(제주도), 1981년 한·독 태양-풍력 복합발전시스템 개발시범도 지정(과학기술처), 1991년 클린 에너지피아 제주 계획 구상(정부) 등 1990년대 초반까지 국가주도 뿐만 아니라 제주도 차원에서의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1998년 제주도가 직접 개발한 제

* 2012년 5월 우근민 도정은 '탄소없는 섬 2030 비전'을 발표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전기자동차로의 전환과 화석 연료 발전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실행하는 것이 핵심사업이다. 전기자동차는 2023년 9월 말 35,206대(전체의 8.5%)로 2030년까지 377,000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에 한참 못 미친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은 2022년 기준 19.2%로 정부가 2030년까지 목표로 잡고있는 21.6%에 근사한 수치로 전국 최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육해상 풍력발전 2,345MW와 태양광 1.411MW 등을 설치하여 전력공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자 한다. 안재홍 (2023) '비틀거리는 제주 바람에너지: 공공성의 사유화'에서 발췌

주시 구좌읍 행원풍력발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단지용 풍력발전으로 이후 풍력발전 개발사업은 본격화되었다.⁰²

그러나 2000년대 초반 들어 민간 상업용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제주도내 곳곳에 확대되기 시작하자(2006년~2007년 난산풍력, 성산풍력, 삼달풍력, 삼무해상풍력), 인근 마을 주민들과 토지주들은 소음과 경관 피해를 주장하며 전도적인 반대운동에 나서기도 했고, 실제 한 민간풍력발전사업자는 획득한 사업허가를 포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을 때,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제주도내 환경단체는 에너지전환을 위해 지역의 자연에너지 자원을 공유화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운동의 전략은 이미 시행 중이었던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에서 차용하여 ①먹는샘물 '삼다수'처럼 제주도가 소유한 지방공기업이 지역의 자연자원을 독점 개발하여 그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것, ②이미 가동·운영 중이거나 예정인 민간풍력발전사업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바람자원 사용료를 받는 것이었다.⁰³

그러나 지하수(삼다수)의 '공수화(公水化)**'라는 맥락에서 출발한 '공풍화(公風化)' 운동은 공수화 운동과는 다른 몇몇 차이점에서 한계가 지적될 수 있다. (이미지 설명)



* 제주특별법 제377조(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등)

① 제주자치도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관리와 오염예방, 용수의 안정적 공급, 지하수의 기초조사 및 관측, 대체수 자원의 개발 및 이용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제주자치도의 지하수 보전·관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하수의 보전·관리와 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1.>

** 2006년 7월부터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이전 특별법상의 공개념적 관리를 한 단계 뛰어넘어 제주생명수인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규정하는 공수(公水) 개념을 도입했다.

80년 중반 한진그룹에 대한 지하수 취수 허가 이후*** 제주 사회에서는 생명수 지하수의 사유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며 공공자원을 개발한 수익을 외부로 유출시키는 문제에 대해 도민들이 민감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지하수를 둘러싼 공유화 논의는 도민사회에 폭넓게 자리 잡고 있었고, 2013년 3월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제주지하수를 결코 내줄 수 없도록 망치를 든 사람이 되겠다’며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량 증산 동의안 본회의 상정을 직권으로 보류하기도 했다.

이런 지하수 공수화 운동의 경험이 바탕으로 일어난 공영화 운동은 ‘환경단체의 선거기간 입법 제안, 보도자료, 논평, 의견서제출 등 적극적 활동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정당-환경단체 등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김동주, 2012)하며 풍력의 공공적 관리를 빠르게 제도화하였으나, 공수화 운동처럼 지역사회의 폭넓은 논쟁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사회적 토론이 없다 보니 ‘공공’이 무엇인지 ‘풍력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등 가장 중요한 논의들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법제화 등 행정의 경로는 만들어졌으나 만들어진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누가,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지 못했던 것이다.

2.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새로운 실험과 한계

① 제주특별법 중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조항(304조) 신설(2011년)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2011년) 및 개정(2013년)

2011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가 법제화되었다.*** 산업부 장관이 갖고 있던 육·해상 풍력발전사업 허가권한이 제주도지사로 이양되었고, 제주도지사는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체계적인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근거로 그해 12월, "도지사는 풍력자원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을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가 담긴 풍력발전 사업허

***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은 대한항공 기내용 생수 공급을 목적으로 지난 1984년 제주도로부터 하루 200t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았다. 이후 한국공항은 1993년부터는 2년마다 이용 기간을 연장했고, 1996년에는 제주도가 실제 사용량을 고려해 허가량을 100t으로 감축했다. 지하수 개발을 통한 먹는샘물의 개발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만이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공항은 제주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먹는샘물 생산 허가를 받아 제주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황이다. 한국공항이 최근 3년(2020~2022년)간 납부한 지하수 원수대금 및 수질개선부담금은 7억1490만원인 반면 먹는샘물을 판매해 올린 매출은 1년에 100억원을 육박한다. (출처: 매일경제. 2023.9.21.)

**** 제주특별법 제304조(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풍력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다.

가 및 지구 지정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리고 2012년 삼무해상풍력발전*이 탐라해상풍력(두산중공업과 포스코파워가 투자)으로 사업권을 양도.양수하는 일이 벌어지며 기술력과 자금력을 토대로 한 외부 대자본이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을 사유화한다는 신호탄으로 여겨지며, 2013년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예정발전사업자가 허가권만을 양수하거나 분할합병할 경우 그 허가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되기에 이른다. 또한 도지사의 지구지정 전에 도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개정했다.

㉔ 제주에너지공사 출범(2012년)

제주에너지공사 출범 이후 2015년 9월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활성화 계획(공공주도1.0 풍력개발정책)이 발표되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는 제주에너지공사를 '육.해상풍력발전 사업 시행 예정자'로 지정하여 사업규모 835MW(육상 151MW, 해상 702MW)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주도는 공공주도1.0의 추진 성과로 제주에너지공사 주도로 최적입지를 발굴하고 민간 주도의 무분별한 사업난립 방지 및 환경훼손을 차단한 공공의 지구지정과 후보지 공모 시행, 운영기업 선정 전까지 주민소통 역할 수행으로 주민수용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사업추진의 신속성 저하, 공모선정 절차와 사업추진 지체에 따른 사업자의 불확실성 증가로 제주 풍력산업이 저해된다고 평가하며, 공공주도2.0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구체화한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에 이른다(2023년 9월).

기존에는 에너지공사가 개발지역 선정, 지구지정, 인허가 권한을 갖고 환경영향평가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한 뒤 사업자를 공모했다. 즉, 마지막 단계에 가서야 사업자가 들어오게 되는 구조였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풍력발전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제주도가 풍력자원 개발 입지를 발굴하고 에너지공사가 사업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 사업자를 공모할 수 있게 되어, 사업자 입장에

* 삼무해상풍력발전은 2006년 8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해상풍력발전 사업허가를 받았다. (이후 NCE(주)로 변경)

**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풍력발전지구의 지정 및 취소)
㉔ 도지사는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3.7.10., 2015.10.6., 2017.3.8., 2023. 10. 12.>

***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풍력발전지구의 지정 및 취소)
㉔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은 고시일부터 20년으로 하되, 발전사업자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제정 이전에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는 향후의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작성하여 연장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0., 2015.10.6., 2023. 10. 12.>

서는 입지가 발굴되고 사업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공모를 통해 곧바로 ‘풍력개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문제는 사업개발계획을 수립하기도 전부터 입지, 즉 시장을 만들어 내기 위한 사업자들의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점이다.

개정 조례안의 가장 큰 문제는 사업자가 지구지정 이전 단계에서 개입하는 부분이다. 추라도 해상풍력개발 사례처럼 사업 신청 이전 단계에 행해진 금품 살포 등의 향응 제공, 주민 갈등 초래 등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잡아낼 수 있는 것인가다. 현재의 계획이 추진되면 사업자가 후보 신청 이전 단계에서 주민수용성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공공성을 훼손하고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활동을 집중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런데 후보 신청이 이뤄지기 이전 단계에서 벌어진 일을 과연 제주에너지공사가 제대로 알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사실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모호하다.⁰⁴

제주도는 공공주도2.0 계획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한다는 지역사회의 비판을 무시한 채 정책변경을 강행하며 그동안 어렵게 쌓아 올린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

㉓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제정(2016년)

제주도의회는 1000여 건의 조례 중 제주도민의 삶을 바꾼 조례 50선에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조례’를 선정했다.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은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을 개발한 이익을 도민들에게 환원하여 지역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지사업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6년 7월 제주도의회가 의원발의를 통해 제정한 조례를 근거로 2017년 설치되었다.

사업자는 조례에 따라 2017년 이후 매출의 7%를 기금으로 내야 하는데, 2017년부터 3년간 190억6,000만 원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전체 기금 중 제주도가 운영하는 풍력발전소 전력판매대금이 전체의 50%인 96억 원을 차지하는 반면 민간풍력발전사업자의 기부금은 69억 원(36%)에 불과했다. 특히 사업자 기부금 중 제주에너지공사가 출연한 기부금 23억5,000만 원을 제외하면, 실제 민간풍력발전사업자 기금은 46억 원에 그쳤다.⁰⁵

기금사용액 측면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전체 기금액 중 149억 원(78%)을 사용하며 ‘기금’(적립하여 준비하여 두는 자금)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고 기금 사용액 중 대부분인 101억 원을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으로 지출해 결과적으로 폭증하고 있는 풍력발전 출력제한****에 기여하고 말았다.

**** 제주도 풍력발전 출력제한: 2020년 77회/ 2021년 64회/ 2022년 104회/ 2023년 90회

3.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에서 제주의 경험이 긍정적으로 자리매김할 방법은?

└먼저지는 질문들

제주 사례에서 배울 점은 '먼저' 공공주도를 선언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제도를 운영하는 도정을 견제할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공공주도 풍력발전'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독보적인 선두주자'가 되는 것보다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견제할 사회적 세력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질문1> 국가라는 공공이 관리하면 좋은 것인가?

<질문2> 국가 혹은 지방권력이 제도를 올바르게 운영하게 '견제의 힘'은 어디서 비롯되나?

제주의 공공화 운동은 선거기간 입법제안 등을 통해 풍력의 공공적 관리를 빠르게 제도화하였으나, 지역사회 의 폭넓은 논쟁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사회적 토론이 없다 보니 '공공'이 무엇인지 '풍력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등 가장 중요한 논의들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질문3>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총선에서 의제화할 수는 있으나 끊임없이 싸울 힘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더 고민해야지 않을까?

<질문4> 사회적 논의의 힘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총선에서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

제주의 풍력자원 공유화 운동에서 빠진 지역주민들과의 연대는 어떻게 이루어야 했을까?

- '바람만 우리 모두의 것이냐?'고 되묻는 주민들 (바람, 흙 등 모든 것에 공유세를 내야지!)
-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에서 '우리'는 누구? 지역주민, 어선주협회, 해녀협회만의 이익공유
- 무너진 마을 민주주의 하에서 정의로운 이익 공유가 가능할까? (1인 1투표에서 1가구 1투표로 후퇴)

<질문5> 어떻게 다양한 연대를 이루어갈 것인가? 발전노조 등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를 안은 노동자들의 연대의 힘 외에 보태질 다른 힘이 없다면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

<질문6> 현재 에너지 운동은 노동자, 환경, 빈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을 함께 주장하며 펴 갈 수 있는지도 검토해봐야

대한민국 에너지전환 1번지 제주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육·해상 풍력 발전 2,345MW와 태양광 1,411MW 등을 설치하여 전력공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자 한다. 이 문장을 현실로 가져와 보면, 2020년 풍력발전 설치 수준의 8배 이상, 태양광발전 설치 수준의 3배 이상을 10년 내 완료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더 많이 더 빠르게 추진되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치명적 문제들(환경적 피해, 주민갈등, 생존권 박탈, 공공성 후퇴에 따른 문제 등등)에 대한 대안은 마련될 수 있을까?

<질문7> '2030년까지 뭐 안하면 안되고.. 넷제로 사회 빨리 가야되고.. 인간의 절멸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시간이 없다 빨리 나서서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현실이긴 하나 타임테이블을 만들어놓고 '운동의 시간'을 맞춰 끌고가다보니 답이 뻔하게 나오는건 아닐까? ('풍력 100GW를 지어야 한다' 이것이 절대선인양 강박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닌가?)

<질문8> 에너지전환이 기후위기 대처의 모든 것은 아니지 않나? 제주의 예를 보듯이 에너지 전환을 '조속히 이루자'는 것은 신성장주의와 닮아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서영표의 발제를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해.

참고 자료

- 01 김동주 (2022), 「전환사회의 새로운 힘, 재생에너지를 공유하라」
- 02 김동주 (2017),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 03 제주 풍력발전이 가야 할 길은 공유화 (김동주, 프레시안, 2021.8.6)
- 04 환경운동연합 논평 '공공주도 풍력개발 2.0계획 여전히 불안하다' (2023.9.22.)
- 05 "제주 바람으로 돈 벌면서...강제 규정 없으니 기금은 외면" (한국일보, 2021.3.25.)

공공재생에너지운동 입구전략 제안

전 국민 <필수에너지 이용권> 도입으로

손슬 | 진보당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기후위기 자각을 넘어 체제전환의 방향, 방법, 전략을 토론하는 것은 절실한 과제이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진보당에는 전남 장흥 박형대 도의원이 있는데, 전남 지역 재생에너지 난개발에 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제기하며 대안을 제시했고, 박형대 도의원은 재생에너지 공영화 조례를 의정 활동 첫 조례로 발의하기도 했다. 전남 장흥의 사례처럼 에너지 전환이 긴급하게 요청되는 현실에서 민간기업이 절차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개발하는 현실에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고, 그런 점에서 현재의 재생에너지 전환이 ‘약탈적 전환’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발제에서의 지적에 크게 공감되었다. 기후위기 시대에서 긴급한 전환은 질서 있고도 정의롭게 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공적 책임하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남의 사례를 통해 배웠다.

진보당은 우선 공공재생에너지운동을 대중운동으로 키워나갈 필요에 크게 공감하며, 발표 2에서 제안 주신 <공공재생에너지법>, <한국발전공사법> 제정 등을 정치 의제화할 필요성에 동의하며, 연대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공공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공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다양한 방안은 특히나 인상적이었으며, 전략의 현실화 측면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만한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해당 부분을 입법화하기 위해 진보정당의 역할을 다해나가겠다.

현시점은 발제에서 언급한 대로 에너지 정책뿐 아니라, 발제에서 말씀하신 탈성장 담론 등까지 새로운 질서들이 모색되어야 할 때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영역에서는 굵직한 패러다임의 전환까지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 아니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 원자력을 더 늘리려는 역행을 계속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전환 논의를 왜곡시키고 있다. 이에 맞서는 진보정치의 영역은 협소해 윤석열 정부를 제자리에 멈춰 세우기도 버거운 게 현실이다. 기후위기 대응에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2024년 현재, 곧 앞둔 총선이라는 장에 어떤 이야기를 던질지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진보당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설 진보의 대안’으로 ‘물·전기·가스 전 국민 <필수에너지 이용권> 도입’ 정책을 새로 구성했다. 짙짙 인상되는 것으로 포장된 전기요금은 2022년 초에 비해 2023년 6월까지 39.6%나 올랐다. 한전 적자를 핑계로 ‘전기요금 정상화’라는 논리로 공

공요금에 대해서는 공적 책임보다는 가격 인상 압박이 더 거세다. 전기요금, 난방비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현안이 존재하는 만큼 이번 총선에서 에너지정책의 공공성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당면 정책 과제로 <필수에너지 이용권>을 마련했다. 후술하겠지만 지금의 정책은 개인적·가정적 용도에 한정되어 있기도 하고, 법안 성안을 주요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추가 재정 지원방안 등을 다루지 못한 한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발제에서 달성하고 자하는 커다란 질서의 전환을 모두 포괄하는 정책으로서는 부족할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는 기본권’, ‘에너지는 공공재’라는 감각을 높이고, 선별적 에너지복지 정책을 보편적 에너지기본권 정책으로 전환하자는 중대한 변화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계기로 <필수에너지 이용권>이 논의될 수 있고, 그렇기에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의 입구전략으로 이 정책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1. 물·전기·가스 전 국민 필수에너지 이용권

진보당에서 마련한 <전 국민 필수에너지 이용권>의 설계는 이러하다. 전기위원회 등의 거버넌스를 통해 개인적·가정적 용도에서의 필수에너지량을 산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만큼은 무상에 가깝게 공급하자는 것이다. 필수에너지량은 최저광열·수도량 이상으로 국민이 최저 수준 이상의 에너지량은 공공의 책임하에 공급되어야 한다. 필수에너지량만큼은 무상으로, 필수량이 넘는 부분에서는 가파른 비례제나 누진제를 도입해 전체 에너지 요금 총수입에는 변화가 없도록 에너지요금제를 개편한다.

필수에너지량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참고할 자료조차 없을 정도로 부족하다. 필수에너지를 산정해 볼 만한 자료조차도 공개는커녕 정돈되어 있지 않아 시민사회 차원에서 가늠해 본 경험조차도 없다. 이에 부득이하게 최저광열비 자료를 참고할 수밖에 없었다. 공공재생에너지운동이나 필수에너지 이용권 도입을 위한 과정에서 필수에너지량의 수준에 관해 토론하고 판단할 자료 공개·작성을 정부 기관에 요청하고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대중운동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

필수에너지량에 해당하는 구간을 무상에 가깝게 설정하고 해당 구간 이상에 가격 비례만 적용해도 에너지 저소비층에는 한계 구간이 설정되어 ‘아껴 쓰면 0원’이 적용될 수 있다. 구간 안에 들기 위해서라도 에너지 사용량이 절제하거나 통제하려는 노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필수에너지를 무상 공급하더라도 에너지를 평평 쓸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 또한 필수 사용량 구간을 넘어서면 일정 정도까지는 기존 가격보다 적은 가격을 납부할 수도 있으나 비례제의 적용이 가파르므로 한 지점 이상이 되면 기존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낼 수밖에 없게 된다. 이 역시도 에너지 사용량 억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기존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내야 하는 구간은 명백한 에너지 과소비층이기에 추가 가격의 부담을 지게 된다. 필수에너지량까지를 무상 구간으로 설정하고 비례제를 적용하더라도 전체 에너지량 수요를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이에 더해 누진 구간을 설정한

다면 전체 에너지 수요를 줄여나가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2. 공공재생에너지운동 대중화를 위한 조건_대중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

체제전환은 복합적이며 거대한 질서를 바꾸는 문제다. 특히 에너지정책은 그간 에너지원의 전환이나 전력공급 구조의 개편 등 시스템 측면의 논의가 많았다. 필요한 논의이나 그 특성상 어렵고 복잡한 논의로 여겨져 대중 다수와 함께 지속해서 논의를 이어가기 쉽지가 않다.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말할 때, 그래서 에너지이용자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는지가 함께 이야기되어야만 운동의 대중화가 가능하다. 즉 ‘내 삶에 생기는 변화’에 대한 설득력 있는 스토리가 함께 있어야만 한다. 에너지 공급 측면의 시스템적 논의와 함께 에너지 이용 측면의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설계되어야만 공공재생에너지운동에 필요를 확산하고 대중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다.

3. 에너지 ‘요금’이 아닌 ‘권리’로 인식 전환

녹색 전환의 논의에서도 ‘전기요금을 높여서 에너지 수요를 낮춰야 기후위기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레토릭이 많다.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요금 인상으로 ‘에너지 절약’을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기초해 있다. 가격에 의해 수요량이 결정되는 것이 시장 경제의 기본원리인 만큼, 낮은 전기요금으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일 수 없으며 기후변화에도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⁰¹

이는 공공이 책임져야 하는 ‘에너지’에 가격을 매겨 시장원리로 통제하자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런 전체에서 논의를 지속한다면 전기 등 에너지 민영화를 저지할 명분을 잃게 된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는 개개인이 요금의 부담으로 극도로 절약해야 한다’는 생각이 대중들에게 주되게 자리 잡게 되는 것으로 녹색 전환이 더 나은 사회를 이끌 수 있다는 상상력을 제한하게 된다.

요금에 한정해서 논의해야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에너지 요금을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의 에너지 요금을 올려야 하는가’다. 에너지 다소비 계층에 대한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전체 대중, 특히나 빈곤층에 부담을 지우는 형식이라면 기후정의에 부합하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이용에 있어 요금 책정만 논의하는 방식은 에너지 공공성 측면을 위축시키고 정의롭지 않은 전환을 부추길 수 있다.

‘요금’보다 ‘권리’를 먼저 말하자. 에너지 이용에 있어 어디까지가 권리로 보장되어야 하는지가 정해진다면 그 이상의 이용에 대해서는 요금의 형태이든, 또 다른 방식으로든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 국민 다수가 살아가는 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에너지에 대한 이용 권리를 상정하는 게 우선으로 필요하다.

진보당에서는 <물·전기·가스 전 국민 필수에너지 이용권>을 제안하며 에너지 기본권 중 에너지 이용에 관한 권리를 이렇게 정리했다.

① 개인과 가족의 생존과 인간다운 생활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에너지(‘필수 에너지’)를 경제적 부담 없이 무상으로 이용할 권리,

② 생산과 여가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절한 가격으로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권리,

③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우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능력향상을 위해 생산과 여가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권리로 나뉘볼 수 있다.

생존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모든 사람에게 일정량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하는 것은 에너지 기본권의 핵심 내용으로 규정했다. 필수에너지 이용권은 먼 미래가 아니라 즉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로 설명이 가능하다. 각자의 형편과 처지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에너지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필수에너지 무상공급이다.

4. 에너지 선별 복지에서 에너지기본권 보편 보장으로

<전 국민 필수에너지 이용권>에서 제안하는 것은 선별적 에너지복지 정책을 보편적인 에너지 기본권 정책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는 에너지는 권리라는 인식을 강화하며, 불평등과 빈곤의 악순환을 끊는 공공책임을 실현하고자 제출됐다. 우선 현재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에너지복지 제도의 문제부터 살펴보자.

현행 에너지 복지 제도의 문제는 첫째로, 빈곤을 증명해야만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며 둘째, 에너지빈곤층은 기초생활 수급권자 중에서도 일부일 정도로 그 기준이 몹시 제한적이라 에너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셋째 책정된 에너지바우처 예산마저도 다 쓰이지 못하고 있으며, 넷째 에너지 복지 예산은 남아돌고 공과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까지 공과금을 남긴 2014년 송파 세 모녀, 2019년 관악구 탈북 모자, 2022년 창신동 모자의 비극적인 소식에 이어, 2022. 8. 21. 수원에서는 병과 빛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세상을 떠났다. 2023. 9. 8.에는 전주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이 사망한 채 아들과 함께 발견되었다. 사망원인은 동맥경화로 추정되었다. 옆에는 3~4살로 추정되는 아들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는데,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⁰² 우편함에는 21만 원이 넘는 전기요금 납부 독촉장이 꽂혀 있었다.⁰³

이들이 에너지 복지도 받지 못할만큼 충분히 가난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빈곤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이들이 경험했던 빈곤 사각지대는 세상을 포기하게 하는 절망의 공간이다. 이제는 사각지대 없는 복지사회를 만들고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할 때가 되지 않았다.

에너지 요금 지원이나 에너지 바우처만으로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어렵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도 못한다. 필수에너지 이용권 보장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하여 더 필요하다.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는 비용 부담 없이 쓸 수 있게 보장하고, 에너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발표 1 발제문에서 ‘현실의 불평등과 빈곤이 사람들의 도덕 감정과 만날 때, 과학의 이름으로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옹호했던 낡은 과학 패러다임을 근본에서 비판하는 힘이 생긴다’ 말했듯이 에너지 정책을 보편의 권리로 바로 세우는 것은 비극을 막고 체제전환의 힘을 키우는 일이다.

5. 필수에너지 이용권, 재생에너지 전환과 함께 주거 문제도 논의돼야

기후변화에 적응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불평등을 완화하며 에너지에 대한 개인적·가정적 필요를 충족시켜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 ① 모든 사람이 재생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며 주택 냉난방 효율을 높여 전체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
- ② 모든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필수량의 에너지를 무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필수량을 넘는 에너지를 소득 부족으로 충분히 구매할 수 없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절전용 가전제품 대체 비용 및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이 요소들을 모두 담으면서도, 기후변화가 불평등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만큼,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 대기업에 유리한 산업용전기 할인 시정, 누진제 강화 등도 당연히 병행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재생에너지 전환을 더 빨리 추진해야 한다. 냉난방 효율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도 더 늘려야 한다. 그래야 에너지 소비도 줄이고 비용 부담도 덜 수 있다. 몸으로 느껴지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비추면, 재생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소비 절감 속도가 너무 더디다. 단열 개선 사업과 태양광 보급 지원이 크게 늘어야 함은 물론이다.

기후변화에 따라 냉난방 비용이 늘면 가난할수록 에너지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되고, 저소득층은 에너지 사용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다.⁰⁴

현 상황에서는 냉난방 효율 개선 사업 등은 임대 용도로 사용되는 도심 노후 주택에 대해서는 불평등 문제와 연결되어 에너지 취약계층의 곤란을 해소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 효과가 에너지 취약계층에까지 닿게 하려면 주택임대차 관련 법제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에너지 빈곤의 뿌리에 주거 빈곤이 있는 현실에서, 주거 빈곤 대책과 동떨어진 에너지 빈곤 대책은 공허하다.⁰⁵

주거에 대해 주거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이 있지만, 주거복지정책이나 건설 인허가에 활용될 뿐 기준 미달 주택의 임대를 막는 용도가 아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임차주택의 품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⁰⁶ 임차 주택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 전환이나 주택 냉난방 효

을 개선을 앞당기려면, 최저주거기준에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폭염과 한파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더하고, 주택소유자에게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려면 적어도 최저주거기준만큼은 충족할 만큼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전환-임차 주택 최저주거기준 강제-필수량 무상 공급은 무엇 하나가 먼저 되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특히나 저소득층에게는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추진해야 세 가지 다룰 성공시킬 수 있다. 필수량 무상 공급은 재생에너지 전환과 냉난방 효율 개선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에너지 낭비를 막고 절감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6. 마무리하며

전 국민 물·전기·가스 <필수에너지 이용권>은 제도적 설계를 우선으로 제출된 정책이다. 그렇기에 아직 충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다. 그러나 바로 앞둔 4월 총선에서라도 에너지 전환, 공공의 역할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화두로, 민생현안에 천착해 국민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의제로 거론되길 바라며 정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책은 정책일 뿐이다. 정책은 결국 실행하고자 하는 이들의 의지와 조직된 힘으로만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의 출발을 이야기하는 오늘의 자리에서도 <필수에너지 이용권>이 진보당의 것이 아니라, 다양한 토론으로 재구성되고, 새로운 방안들이 덧대져 결국 공공재생에너지운동의 전략으로 활용되길 바란다.

참고 자료

- 01 민정희(2019), 「기후붕괴에 대비하는 전기요금 제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전기요금, 무엇을 위해, 어떻게, 책 정되어야 하나?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한 시민사회 토론회, 30쪽.
- 02 한겨레 2023. 9. 11., 「전주 빌라 사망 여성 7월에 '위기의심' 감시망 포착...연락 안 됐다」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108072.html>
- 03 노컷뉴스, 2023. 9. 12., 「수원 세모녀' 1년만에 또 드러난 복지 허점...정부 "개선 속도"」
<https://www.nocutnews.co.kr/news/6010848>
- 04 윤석진(2018),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30쪽.
- 05 오마이뉴스, 2023. 2. 1., 「지지울에 놀라셨나요? 주먹구구식 난방지원, 답이 아닙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98404
- 06 내일신문, 2023. 9. 12., 윤성진, 「주택임대를 위한 최소 품질기준이 필요하다」
https://m.naeil.com/m_news_view.php?id_art=473352

노동자 투쟁으로 기후문제 해결과 정의로운 전환 쟁취를

이재백 | 정의로운에너지전환을위한태안화력발전노동자모임

1. 석탄발전소 폐쇄와 발전노동자

1) 석탄발전소폐쇄 일정

▷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년)에 따라 2036년까지 전국의 석탄발전소 59기 중 28기가 폐지될 예정이다.

표1 석탄발전소 폐쇄 일정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연도	폐쇄 호기	비고
2025년	태안1,2호기	
2026년	보령5,6호기 / 하동1호기 / 삼천포3,4호기	
2027년	삼천포5호기 / 하동2,3호기	
2028년	삼천포6호기 / 하동4호기 / 태안3호기	
2029년	태안4호기 / 당진1,2호기 / 동해1,2호기	
2030년	당진3,4호기	
2031년	하동5,6호기	
2032년	태안5,6호기	
2033년	-	
2034년	영흥1,2호기	
2035년	-	
2036년	당진5,6호기	

2)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변화

▷ 발전소 노동자 총 25,440명(정규직 13,846명 + 비정규직 11,594명)

▷ 2021년 산자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폐지 석탄발전소 활용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 “(2034년까지) 폐지되는 30기 인원 모두가 일자리 전환이 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최대 7935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 7,935명 중 정규직인 발전본부 소속 노동자는 2,625명, 비정규직인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는 5,310명.

☞ 폐쇄되는 석탄발전소 30기 중 24기는 LNG 발전으로 전환되면 7,935명 중 LNG 발전소 필요한 인원은 3,024명에 불과. “일대일 전환을 가정했을 때, 전환불가 인원은 4,911명”

☞ LNG 발전소로 전환불가 추정인원 4,911명 중 발전본부 소속은 1,221명, 협력업체 소속은 3,690명이었다.

표2. 발전소 노동자 인원 현황

구분	경상정비	연료환경 운전	자회사 (청소,경비,시설)	비정규직 소계	정규직	합계
남동발전	1,029	848	611	2,488	2,894	5,382
남부발전	1,141	361	480	1,982	2,697	4,679
동서발전	1,328	694	460	2,482	2,647	5,129
서부발전	1,066	463	525	2,054	2,774	4,828
중부발전	1,369	617	602	2,588	2,834	5,422
합계	5,933	2,983	2,678	11,594	13,846	25,440

▷ 폐쇄된 발전소 실태 : 서천 1·2호기, 영동 1·2호기, 보령 1·2호기, 삼천포 1·2호기 등 이미 폐기한 석탄발전 8기에서 일하던 발전사 정규직 601명은 전원 재배치됐다. 그러나 하청업체 노동자 667명은 재배치 606명, 정년 22명, 감축 39명이었다.

표3. 폐쇄 석탄발전소 노동자 이직, 전직 실태

연도	사업소	발전사		협력사	
		폐지 전	폐지 후	폐지 전	폐지 후
2017	서천 1,2	139명	전원 재배치	218명	197명 재배치 8명 정년 / 13명 감축
2017	영동 1,2	213명	전원 재배치	158명	148명 재배치 10명 감축
2020	보령 1,2	139명	전원 재배치	146명	124명 재배치 6명 정년 / 16명 감축
2021	삼천포 1,2	110명	전원 재배치	145명	137명 재배치 8명 정년
합계		601명	전원 재배치	667명	606명 재배치 22명 정년 / 39명 감축

▷ 이후에는 고용면에서 더 심각 상황이 예상된다. 석탄발전소 폐쇄 속도가 이전보다 빨라지고 있고 신규석탄발전소 건설도 더 이상 없다. 보령 1·2호기와 삼천포 1·2호기를 폐쇄할 때는 신규 발전소(신서천 1호기, 고성하이 1,2호기, 강릉안인 1,2호기) 가동과 맞물려서 진행되면서 폐쇄발전소의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여건지만 앞으로는 석탄발전소 폐쇄와 신규 석탄발전소 가동이 동시에 벌어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고용 측면에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 대응

석탄발전소 폐쇄 2막이 시작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은 무에 가깝다. 지난 10월 6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전환법은 석탄발전소 노동자를 위한 대책인양 포장하지만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표현도 담지 못한 전형적인 생색내기 법안이다.

지자체도 이런저런 '포럼'과 '토론회'를 개최되고 있지만 이는 자신들이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알리바이에 불과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노동자의 투쟁이 없기 때문이다. 2020년~2021년 보령1,2호기, 삼천포1,2호기, 호남1,2호기 등 6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될 때도 노동자의 저항은 없었다. 곧 시작될 석탄발전소 폐지 2막에서도 발전소 노동자가 위력적인 투쟁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정부와 지자체의 무대책은 지속될 것이다.

또 이런 암울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발전소 노동자는 체념적인 상황에 빠져들고 순차적인 해고를 받아들이면서 각자도생의 길을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정부가 석탄발전소에 SMR(소형원자로) 도입 등을 밀어붙인다면 최악의 경우 발전소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갈등하고 환경운동과 대립하는 양상으로 흐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기후위기를 막는 대책과 충고용보장 등 정의로운 전환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문제다. 폐쇄를 앞둔 발전소 노동자를 투쟁의 길로 모아낸다면 그 힘과 가능성을 보면서 더 많은 노동자민중이 합류하면서 기후위기를 막고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는 획기적인 변화를 이룰 것이다.

3. 독일 메가파업

1) 기후운동과 노동운동의 만남

2020년,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의 전략적 공백과 퇴조가 나타난다. '시스템 변화(System change)'라는 슬로건이 유행하였으나 실제로 이 운동은 시민 불복종이라는 상징적인 행동이나 정치 결정권자를 향한 몇 차례 집회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 한다. 대중적 관심과 호응도 줄어들던 추세였다.

이에 기후정의운동에 더 많은 노동계급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기후 문제를 일터로 가져오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한다. 물론 초창기에 대다수의 대중교통 노동자들에게 기후 파업은 현실적이지 않았다.

대중교통 노동자들은 장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급여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퇴직률이 높아 이미 수만 명의 운전자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교통요금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 지역의 여객 운송 시스템은 점점 더 축소되는 상황이었다.

2020년부터 '미래를 위한 금요일'과 노동조합이 함께 언론 성명 등을 통해 대중교통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그 결과 일부 운송 회사에서 기후 운동이 정당성을 확보해갔다.

2) 기후파업과 동시에 노동자 파업

2023년 3월 3일,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 세계 기후파업에 맞추어 대중교통 노동자들이 함께 파업했다. 최소 30개 도시, 20만 명 이상이 파업 참여했다. 독일 고용주 연맹(BDA)의 CEO 슈테판 캄페터는 파업에 대해 “노조가 정치파업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자본 스스로 이 두려워할만한 기후파업을 조직해 낸 것이라고 평가.

노동조합은 '미래를 위한 금요일'의 참여를 통해 단체교섭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더 많이 알리고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기후운동은 노동자와의 연대를 통해 더 폭넓은 사회적 지지와 힘을 확보할 수 있었다.

'미래를 위한 금요일' 활동가들은 파업 중인 노동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연대를 조직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승객들로부터 연대 성명서를 수집하고 정치인들을 만나 노동자들의 요구를 전달하거나 시민들과 함께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임을 조직했다. 나아가 활동가들이 직접 노동자들에게 파업에 나서도록 설득하기도 했다.

3월 27일, 파업은 전체 운송부문 확장됐다. 대중교통 노동자뿐만 아니라 항공, 철도, 수상 운송 노동자들도 파업에 참여했다.

4. 노동자 투쟁으로 기후문제 해결과 정의로운 전환 쟁취를!

1)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태안화력노동자모임(정태모) 활동

▷ 2022년 10월 26일 태안화력발전소 내에 있는 6개의 민주노조가 폐쇄되는 석탄발전소 노동자 당사자로서 우리 목소리를 내고 공동 활동을 하자는 취지에서 결성

▷ 정기모임 : 발전소 내에서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2주에 1회

▷ 매월 1회 소식지를 발행하고 태안화력정문에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출근선전전 진행(현재

까지 13호 발행)

▷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태안시내 선전전을 시행.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발전소 폐쇄로 발생할 노동자 해고 문제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 문제 등을 알림. 지역주민 대상으로 설문 조사 병행. 많은 주민들이 발전소 폐쇄를 우려하지만 정확한 폐쇄 일정은 모르고 있었다

▷ 7.28에는 정의로운에너지전환 태안화력노동자 결의대회 개최. 100여 명 참석.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제안서] 군청에 전달

▷ 2023. 8. 26 KBS 프로그램 '다큐온'에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정태모의 활동 일부 방영.

▷ 태안군 정의로운에너지 전환 민관협의회에 노동자 위원으로 4명이 참여

▷ 2022년 924기후정의행진, 414 세종기후정의행진, 923기후정의행진 참여 조직

▷ N개의 기후정의선언대회, 서산시생명안전걷기대회 등 공동주체

2) 정의로운에너지전환을 위한 충남노동자행진(이하 충남행진)

▷ 정부 스스로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기후 위기 대책도 자본의 이윤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다. 석탄발전소가 폐쇄되는 와중에도 민간의 석탄발전소는 건설되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한전은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민간발전사는 정부가 허용한 LNG 직수입제로 폐돈을 벌고 있다. 또 기후위기를 막겠다고 도입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 포스코 등 대기업에 지급한 보조금에 지나지 않았다. 한전의 적자를 털고 민간발전의 이윤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했던 SMP 상한제는 겨우 몇 달 유지되다가 결국 폐지됐고 한전 민영화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전 사장이 민영화 모델로 삼는 곳은 민영화 후 전기요금이 폭등한 이탈리아 에넬사다. 이들은 공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사기업의 부당한 폭리는 제어하지 않고 오히려 전기요금 폭등으로 노동자민중이 고통이 뻔한데도 그 길을 택한다. 이런 정부가 발전소 폐쇄로 인한 노동자의 해고 문제를 단순히 제시하겠는가? 노동자의 투쟁이 아니고서는 정부의 자본의 이윤에 봉사하는 대책은 전혀 바뀌지 않을 것이다.

▷ 석탄발전소 폐쇄로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나서서 정부 정책에 맞선 투쟁을 벌여야 한다. 특히 충남은 석탄발전소 폐쇄로 인한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의 석탄발전소 총 59기 중 절반에 해당하는 29기가 충남에 위치하고 있고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폐쇄되는 석탄발전소 28기 중 14기가 충남에 있다. (태안 1~6호기, 당진 1~6호기, 보령 5,6호기)

▷ 충남행진은 태안(3월), 당진(4월), 보령(5월)과 8월 중에 종합하는 투쟁으로 기획하고 있다. 작년 11월 충남행진 초동모임을 시작으로 12월 28일 충남행진 제안서가 공개 제안됐고 올 1월 20일 충남행진 추진위 전체모임을 통해 공동대표 및 집행위원장 선출을 마치고 천 단위 이상의 참여를

목표 힘차게 준비하고 있다. 석탄발전소 폐쇄로 인한 노동자 해고 문제는 발전소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태안 1,2호기가 폐쇄된다면 뒤이어 폐쇄되는 발전소도 자본의 의도대로 조용히 폐쇄될 수 있다. 발전소 노동자를 조직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국의 노동자와 기후운동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수천명이 작은 소도시를 가득 메운 모습은 노동자에게 커다란 자신감을 심어주고 지역주민을 분기시킬 것이다. 또 정부와 지자체에게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줄 것이다. 이 성공을 바탕으로 다음의 투쟁은 더욱 힘차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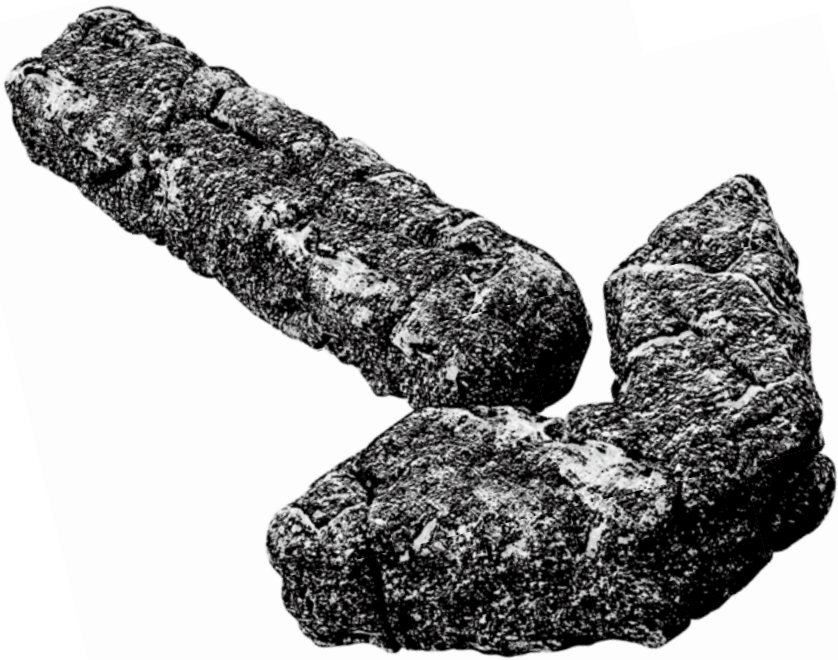
■ 충남행진 경과

- 2023. 11. 5 (일) 17:00 (가칭)충남기후정의행진 초동모임
- 2023. 11. 19 (일) 14:00 충남행진 제안팀 1차 회의
- 2023. 12. 10 (일) 14:00 충남행진 제안팀 2차 회의
- 2023. 12. 23 (토) 12:00 충남행진 초동모임 2차
- 2023. 12. 28 (목) 정의로운전환을위한 충남노동자행진 공개 제안
- 2024. 1. 20 (토) 14:00 충남행진 추진위원 전체모임

▷ 그동안 단 한명의 해고도 없는 정의로운 전환을 외치며 투쟁했지만 구체적인 요구와 경로가 빠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물론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 해고 대책은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정부에게 이를 기대하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다.

현장노동자를 조직해서 투쟁으로 나서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쟁취하고자 하는 구체적 요구와 경로를 현장조합원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재생에너지운동은 정의로운 전환 위한 노동자 투쟁에 구체적 경로와 요구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체제전환을 향한 노동/운동의 도전

한국 노동운동은 자본의 분할구도와 자본주의적 성장 담론에 갇혀 있다.
이러한 상황에 갇혀서는 자본주의가 야기한 복합위기에 맞설 수 없고,
위기를 전가하는 차별과 배제에 나도 모르게 공모하게 되거나,
사측과 이해관계를 공유/배분하는 이익집단에 머물게 된다.
가장 주요한 대중운동이자 물질 토대를 지닌 노동운동이 체제의 일부가 아니라
‘체제전환운동’의 중요한 흐름이 되기 위한 가능성과 전망모색이 필요하다.
지금 여기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체제에 균열을 내는 대중운동의 조직이 필요하다.



가로지르길6
문자통역 QR코드

세션 진행

사회 : 임용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발제1. 우리가 아직-다시 노동을 말하는 이유

- 장진범 (플랫폼c)

발제2. 노동/운동이 간혀있는 선을 넘는 활동을 시작하자

- 김하늬 (민주노총 서울본부)

발제3. 삶의 시공간을 반영하는 노동의 전환, 체제의 전환

-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준비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진보 3.0, 플랫폼c,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우리가 아직-다시 노동을 말하는 이유

장진범 | 플랫폼c

aporia96@gmail.com

1. 왜 노동인가?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역설 중 하나는, 세계 절대다수 나라의 정치체제가 민주와 평등의 이념을 공식 표방하고 있으나, 정작 이들 나라의 '주권자' 상당수는 전적으로 비민주적이고 불평등한 조직, 즉 (일방적 경영권과 '1주 1표'의 금권주의plutocracy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기업의 노동자로 일상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Deranty & Renault, 2022: 150). 민주주의가 '속 빈 강정' 신세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를 설명하고 전환을 모색함에 있어, “실패한 민주주의 대다수의 책임은 민주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의 등치에 있”으며, “산업민주주의가 실현된 이후라야 명실상부한 민주주의”라고 단언한 미국의 철학자 존 듀이는 중요한 지적 자원이 된다(Dejours et al., 2018: 203). 이런 주장의 근거에는 민주주의를 '삶의 방식' 또는 '습관'으로 보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이에 따르면 정치적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민주적 습관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들 습관은 정치 제도만의 힘으로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없는바, 습관이 형성되는 장인 일상적 관행 전반이 (관용과 연대, 정의와 집단적 심의 등) 민주적 덕목에 부합하도록 조직되고, 이 일상적 관행과 정치 제도가 선순환을 이룰 때라야 민주주의가 실체를 가질 수 있다(Dejours et al., 2018: 203).

이상의 민주주의관에서 산업민주주의 특히 일터workplace 민주주의가 중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일터는 시민들 상당수가 일과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으로, 습관 형성의 특권적 장소이기 때

문이다(Deranty & Renault, 2022: 163).* 일터가 노동자 각자의 업무 경험 및 숙련에 대한 존중에 기초하여, ‘일이 되게 하는’ 방식에 관해 견해를 달리 하는 동료노동자들과의 소통·경합을 통해 성공적 협업을 조직하는 반복적 경험의 장이 된다면, 일터는 민주적 습관의 보고가 되고 정치적·제도적 민주주의는 이에 힘입어 공고화될 수 있다. 반면 일터가 관리자의 일방적 지시와 노동자의 무비판적 복종 이외의 노동 경험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일터는 비민주적 습관의 온상이 되고 정치적·제도적 민주주의는 외화내빈에 시달리거나 더 나쁘게는 일터의 비민주적 습관에 힘입은 권위주의적 정치·제도에 밀려 무력화될 수 있다(Deranty & Renault, 2022: 162).

그렇다면 오늘날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기는 후자 같은 악순환의 결과가 아니냐고 물을 수 있다. 실제로 정치적·제도적 민주주의가 ‘탈민주화’ 경향에 의해 체계적으로 ‘공동화空洞化’되던 시기가, 노사관계 영역에서 사용자 재량권 확대라는 신자유주의적 기치하에 일찍이 맑스가 포착한 ‘공장전제정’이 복원·강화되던 시기이기도 했다는 사실은 이 같은 해석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바카로 & 하월, 2020: 10~49). 여기서 요점은 그간 민주주의 관련 담론에서 좀체 언급되지 않던 습관과 일상, 그 중심적 시공간인 일터를 전면에 내세우면, 민주주의의 위기와 전환을 새롭게 사고할 수 있는 시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의 노동, 즉 유연화·유동화·개별화 등의 원리에 따라 조직되는 신자유주의적 노동의 문제점은 비민주성에만 있지 않다.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은 노동의 정신역학psychodynamics of work 및 그 영향을 받은 논의들은, 오늘날의 노동이 노동자들의 심리구조를 직접적으로 압박하여 막대한 공포와 불안 등 사회적 고통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강한 ‘병리성’을 띤다고 주장한다(Deranty, 2008: 456~457).** 이 분석은 두 가지 중요한 전제와 관련되는데, 첫 번째 전제는 고용과 노동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전제는 노동과 주체성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Dejours et al., 2018: 23~41; Deranty, 2008: 450~455).

첫 번째 전제의 필요성은 역설적이게도 고용 관련 불안정성의 극단적 형태, 즉 실업노동자들에 대한 연구에서 적극 제기되었다. 이들에 따르면 실업상태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은 임금 수취 기회 배제로 인한 물질적 박탈로 환원되지 않으며, 소득 상실은 실업이 유발하는 고통의 일부에 불

* 물론 민주적 습관을 학습하는 장소가 일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역사적 증거가 보여주듯 혁명적 사건, 더 일반적으로는 정치적 동원 역시 이런 학습 과정이 될 수 있다. 정치적 민주주의 제도 역시 습관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가령 총선에서 갈등적인 기획이 발본적으로 대결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두는 예외적인 사건이다. 길게 보았을 때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인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과정이 다른 사회화 과정들에서 비해 민주적 사회의 조건들에 더 깊은 효과를 남긴다(Dejours et al., 2018: 203).

** 신자유주의적 노동의 병리성은 노동 경험이 주체성의 구조화에서 여전히 중심적 역할을 차지한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증명한다. (오늘날 유행하는 다양한 판본의 ‘노동의 종말’ 담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노동이 사람들의 중심적 경험이 더는 아니라면, 노동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왜 이토록 강렬한 사회적 고통을 야기하는지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Deranty, 2008: 450).

과하다(Dejours et al., 2018: 31~32; 야호다 외, 2021). 특히 오스트리아 출신 사회심리학자 마리 야호다는 고용과 노동, 또는 고용의 ‘명시적’ 기능과 ‘잠재적’ 귀결을 구별하면서, 고용의 본래 의도는 아니나 고용이 되어 노동을 하면 고유한 심리적 욕구·필요, 또는 ‘경험의 범주들’이 충족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Dejours et al., 2018: 29~34).*** 따라서 실업상태에 처한 노동자는 물질적 박탈을 겪을 뿐 아니라 노동과 결부된 이 같은 경험의 박탈을 겪게 되는데, 후자의 고통은 고용과 노동을 구별하지 않으면 주변화·비가시화되기 쉽다. 즉 고용과 노동의 구별에서 요점은 물질적 박탈로 환원되지 않는 노동 관련 고통을 부각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된 노동이 이야기하는 사회적 고통, 특히 불안정성 역시 고용 관련 불안정성과 노동 관련 불안정성으로 구분할 때 그 전모가 제대로 포착된다. 고용 관련 불안정성은 고용, 즉 임금 수취의 기회·수단이 노동시장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나, 충분하더라도 지속적인·안정적이지 않은 상황, 고용을 통해 확보하는 임금이 충분치 않은 상황 등을 가리킨다. 반면 노동 관련 불안정성은 위험성 수준이 높은 노동 환경, 미비한 숙련 재생산·인정 체계, 이른바 ‘기능적 유연성’에 종속된 노동과정 등과 연관이 있다(Dejours et al., 2018: 37~38). 여기에 이른바 ‘워라밸’이 충족되지 않는 장시간노동, ‘직장갑질’이 만연한 일터, 이른바 ‘불싯잡’ 등 무의미하고 불필요하며 해로운 업무 등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Dejours et al., 2018: 42~66; 그레이버, 2021). 양자는 연결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현상인데, 이는 고용 관련 불안정성을 축소한다고 해서 노동 관련 불안정성이 자동으로 축소되지 않는 데서 잘 드러난다. 심지어 고용 관련 안정성은 노동 관련 불안정성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노동 관련 불안정성 및 고통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희소재’인 고용 안정을 누리는 특권적 개인이라면 마땅히 치러야 하는 대가(‘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로 간주되어 비가시화의 압박을 받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자신이 겪는 불안정성 및 고통이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추가적 고통이 된다.

요컨대 신자유주의적 노동이 이야기하는 사회적 고통은 비단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고용 관련 불안정성을 겪는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었지만 노동 관련 불안정성을 모면할 수 없는 노동자들, 결국 모든 노동자에게 미친다. 고용과 노동을 구별하는 첫 번째 전제가 신자유주의 시대 사회적 고통의 이처럼 광범위한 외연을 포착하게 해 준다면, 노동과 주체성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설정하는 두 번째 전제는 이 고통의 기제를 제시한다. 여기서 주체성은, 페미니즘과 장애학 등이 분명히 해 준 것처럼, 취약성과 의존성, 시달림suffering이 부재한 자기충족적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주체성의 본질은 오히려 취약성과 의존성, 시달림에 대한 행위자의 특정한 태도, 즉 이것들에 수동적으로 압도되지 않고 다양한 주관적 자원과 숙련으로써 성공적으로 대

*** 야호다는 시간 경험, 가족 외 사람들과의 정기적인 경험 공유 및 접촉, 자신을 초월하는 목적과의 연결, 집단적 목적에 참여할 때 유발되는 개인적 정체성의 감각 및 지위, 현실감을 제공하는 활동 이상 다섯 가지를 경험의 범주들로 제시하였다.

처하는 경험이자, 그 경험에 기초를 둔 희망적 기대와 예상이다(Deranty, 2008: 446~452). 그런데 이 같은 경험의 전형적 사례가 바로 노동이다. 왜냐하면 노동은, 지시·규정prescription의 제약하에서 이루어지는(이 같은 제약이 없다면 그것은 노동이 아니라 놀이일 것이다), 그러나 지시·규정이 예상하고 통제하지 못한 다양한 우연성과 돌발상황 앞에서 취약성을 드러내며 실패할 때, 이에 대처하여 과업을 완수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노동이 지시·규정과 과업 완수 사이의 실재적 간극에 대처하는 활동인 한에서, 지시·규정을 기계적·수동적으로 적용하는 노동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이 늘 긴장과 스트레스, 어려움과 실패 위험으로 가득한, 따라서 고통스러운 과정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같은 노동의 고통은 제거될 수 없고 다만 보상되고 승화될 수 있을 뿐인데,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작업집단work collective이다. 작업집단은 한편으로 실재적 간극을 성공적으로 넘어서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숙련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실재적 간극을 감안할 때 과업 완수에 필수불가결한 노동자의 주체적 고투와 기여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자신의 노력과 작업집단의 조력에 힘입은 성공한 노동 경험은, 노동자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반면 실패한 노동경험, 즉 실재적 간극 앞에서 끝내 좌절하거나, 간극을 극복하였더라도 작업집단의 해체 등으로 인해 이 주체적 고투와 기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험은 노동을 보상과 승화 없는 고통의 과정으로 만들고 노동자의 주체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Deranty, 2008: 451~455; Deranty, 2009: 79~85).

신자유주의적 노동은 후자의 경험을 일관되게 강화하고, 그런 한에서 사회적 고통을 체계적으로 양산한다. 앞서 말했듯 노사관계 영역에서 신자유주의의 기조는 사용자 재량권의 확대인데, 이는 지시·규정에 대한 노동자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약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노동의 실패 가능성을 높인다. 물론 신자유주의의 수사 중 하나는 노동자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이면은 노동자의 주체적 대처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조건과 자원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다. 우선 신자유주의의 고용 불안정은,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한 노동자들의 전문성과 심리적 몰입을 저해한다(Dejours et al., 2018: 39~40). 또한 신자유주의의 개별적 업무평가와 노동자간 경쟁의 강화는 강력한 작업집단을 해체하는데(더 정확히 말하면 강력한 작업집단을 해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별적 업무평가와 노동자간 경쟁 강화를 사용하는데),* 앞서 언급했듯 작업집단은 성공적 노동 및 노동 관련 고통의 보상·승화 모두에서 결정적 자원 노릇을 한다(Deranty & Renault, 2022: 162). 아울러 업무시간과

* “[승자독식] 시스템 아래서 노동자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안전부절못한다. 물론 모든 경쟁에는 스트레스가 따른다. 그러나 도박판이 그러하듯 승자독식의 경쟁 아래선 불안과 기대라는 판돈이 커진다. 내부의 경쟁구도는 누가 적인지, 누가 동료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불안감이 증폭된다. (...) 한 하이테크회사에서 내 인터뷰에 응했던 여성은 회사의 내부 경쟁에서 승리했지만 자기 팀이 자신의 약점을 이용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자기는 어린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찍 퇴근해야 했는데 이를 팀 간 경쟁의 제물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녀의 팀원들은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면 그녀더러 일찍 퇴근하러면 더 열심히 일하도록 했다는 얘기가. 이런 팀원들을 과연 동료라고 볼 수 있겠냐는 게 그녀의 불만이다.” (세넷, 2009: 67~68)

업무외시간의 경계를 무너뜨림으로써, 노동 내 지배의 강화에 맞서 노동자가 동원할 수 있는 노동 외부의 자원 역시 취약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이다(Renault, 2017: 136~137). 이렇듯 주관적 자원 및 사회적 지지대의 약화를 동반하는 개인적 주체성의 수사적 강조, 프랑스의 사회학자 로베르 카스텔의 표현에 따르면 ‘부정적 개인주의’는 노동자의 주체성을 강화하기보다 발생한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요컨대 신자유주의하 노동 경험은 실패와 좌절, 보상·인정 없는 고투, 자원·지지·권한 없는 책임 압박, 불안과 무력감 등으로 점철되고, 결국 노동자의 주체성을 침식하고 사회적 고통을 가중시킨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 사회 구성원 다수가 일과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 일터이고, 일터의 노동 경험이 이렇듯 부정적이고 병리적이라면, 사람들의 나머지 일상 역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Dejours et al., 2018: 201). 즉 일터에서 강화되는 지배와 소외, 불안정화 경향은 일터 바깥의 사회에서도 강한 ‘파급효과’를 갖는다. 가령 많은 학자가 포착하고 분석한 사회의 불안정화, 상호불신과 혐오, 공포와 불안,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감각과 연대문화 쇠퇴 등 다양한 반사회적 병리현상은 앞서 지적한 일터의 ‘탈민주화’의 파급효과일 수 있다(Deranty, 2008: 456). 아울러 사회적 불평등 강화 역시 대표적 파급효과 중 하나이다. 일터에서 사용자에 대한 노동자의 집단적·주체적 대항력 약화는 사용자와 노동자간 부의 격차를 극심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부의 측면에서는 어떤 시민도 다른 시민을 살 수 있을 만큼 부유하지 않고 누구도 자신을 팔아야 할 만큼 가난하지 않다는”(루소, 2018: 66~67) 의미의 평등은 파괴되고 있고, 민주공화정 자체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렇듯 신자유주의가 장악한 일터와 노동은 비/반민주적 습관 및 사회적 병리현상의 온상이 되고 있고, 그 일상성과 파급효과로 말미암아 사회 전체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체제전환을 지향하는 사회운동이 노동의 문제를 우회할 수 없는 까닭이다. 따지고 보면 오늘날 자본가들이 이렇듯 강고한 지배력을 갖추게 된 것도, 1970년대 이래 수십 년에 걸친 꾸준한 신자유주의 공세를 통해,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의 목표와 지향을 ‘주주와 채권자’ 등 자산계급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설정하고, 그에 방해가 되는 강력한 노동자 집단 및 그들의 동맹세력을 와해시킴으로써, ‘자본주의 내 체제전환’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더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체제전환을 이루려는 사회운동 역시, 그에 맞게 노동의 목표와 지향을 재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노동 내외의 세력을 형성·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앞서 언급한 고용과 노동의 구별에서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이 같은 구별은 고용의 의미를 반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가한다. 만일 고용에서 노동의 차원이 사상된다면, 고용은 (보편성·충분성·정기성을 갖춘) 이상적인 기본소득 등으로 대체가

** 스웨덴의 정치생태학자 안드레아스 말름은 이른바 오늘날의 기후위기 역시 노동자의 힘을 무력화하려는 일터-에너지 재편의 파급효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말름, 2023).

능할 것이다. 하지만 고용을 현대 사회의 개인들에게 노동의 경험을 제공하는 가장 유력한 제도로 이해한다면, 고용은 다양한 구매력 보충 수단으로 환원불가능한 고유한 가치를 갖게 된다(Dejours et al., 2018: 31). 즉 고용에서 핵심은 노동 즉 활동과 경험의 차원이고, 따라서 이 활동과 경험을 최대한 많은 사람이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둘째, 그렇다고 이 같은 구별이 현재의 고용을 절대화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재의 고용을 평가하고 전환할 수 있는 규범적 입각점을 제시해 준다. 가령 고용 관련 불안정성이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고용관계 하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이 야호다가 말하는 경험의 범주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불안정한 노동이라면, 그 고용은 비판과 전환의 대상이 된다. 다만 노동이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하려면, 야호다가 포착한 다섯 가지 범주를 넘어 확장되어야 한다. 가령 페미니즘에서는 인간 본연의 취약성과 의존성에 대한 돌봄의 경험을 중시하면서, 이 같은 돌봄의 차원을 체계적으로 배제한 결과 만들어진 ‘마초적’ 노동문화가 여성노동자들을 일터에 어울리지 않는 ‘이등노동자’로 차별·모욕했을 뿐 아니라, 적대적인 노동 환경이 초래하는 위험과 고통에 눈감는 집단적 방어 기제를 야기함으로써 결국 남성노동자들의 고통을 문제화하는 것도 가로막는 자멸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한다. 생태주의에서도 자연환경 및 동물과 맺는 호혜적 경험을 강조하면서, 이 경험을 배제한 노동·생산방식이 자연환경의 파괴 및 동물의 무용한 고통을 초래하고, 중국에는 인류의 멸종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한다(Dejours et al., 2018: 15; Deranty, 2008: 457). 노동 개념은 페미니즘과 생태주의 등이 제기하는 경험의 범주들을 수용하여 확장되는 한에서만, 현재의 지배적 고용(에 상응하는 노동)의 병리적 차원을 포착하고 그 전환의 방향을 제시하는 규범적 입각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럴 때에만 우리는 지난 20여 년간 노동운동의 주된 요구로 균림한 (불가피했지만 충분찮은) ‘고용안정’ 이전의 가치, 즉 ‘노동해방’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다. 그 출발점에 고용과 노동의 구별이 있다.

셋째, 이상이 고용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는 가운데 그를 내부로부터 비판·전환하는 기획이라면, 고용과 노동의 구별은 현재의 고용제도를 넘어서는 노동을 모색하는 시도, 또는 이미 고용제도 너머/외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을 가시화·인정·보상하는 노력으로 이어져, ‘고용에 의한 노동의 독점’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일례로 한국에서 장애인들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형태로 시도되고 있는 ‘공공시민노동’을 들 수 있다(김도현, 2023: 89~111). 공공시민노동의 문제의식은 기본소득의 표준적 지표 중 무조건성을 거부하는 ‘조건적 기본소득’ 또는 ‘참여소득’과 상통하는 바가 있는데, 참여소득은 소득지원의 대가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단 이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은 고용 즉 노동시장의 유급노동으로 환원되지 않는 돌봄과 지적 활동, 자원봉사과 사회운동 등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근로연계복지’와 뚜렷이 구별된다(정용택, 2022: 200~211). 아울러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은 나라들에서 재출현하고 있는 자주관리 운동도 이 범주에 포함될 것이다(Cukier, 2023: 137~154).

요컨대 오늘날 다시 노동을 말하는 것은, 한편으로 고용의 현실적·제도적 중요성에 대한 평가 절하, 다른 한편으로 고용의 절대화 양자와 선을 긋는 것이다. 즉 한편으로 고용의 형태로 제도화된 노동 경험을 만인에게 최대한 평등하게 배분함과 동시에 노동의 문제적 측면들을 비판·전환하는 일, 다른 한편으로 고용 너머/외부의 노동을 진지하게 주목·실험하는 일을 동시에 진행하고자 제안하는 것이다. 또는 각자 초점과 현장은 다를지라도 신자유주의적 노동의 비판·전환이라는 지향을 공약수로 삼고, 서로의 고민과 시도를 활발히 교류하며, 때에 따라 공동의 사업을 기획·집행·평가해 보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2. 87년 이후 한국노동운동의 전개와 주요 특징

: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

1)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핵심 구성 요소

: 작업장 민주주의, 전투적 조합주의, '위임받지 않은 위임자' 전략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하 노동자대투쟁)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당시 제기된 요구는 크게 네 가지였다. 첫째 임금 인상 및 제반 임금 차별 개혁, 둘째 억압적·병영적 노무관리 철폐, 셋째 어용노조 반대 및 민주노조 인정, 넷째 생산직·사무직, 남성·여성간 일상적 차별 등 근로조건 관련 각종 차별 타파가 그것이었다. 이를 감안하면 노동자대투쟁의 핵심 기치는 '작업장/일터 민주주의 workplace democracy'로 요약할 수 있다(노종기, 2008: 61~64).

노동자대투쟁에서 대전기를 맞은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에서 제시한 민주화 요구를 일터에서 재생산·확장하려는 시도이면서, 정치적 민주주의의 일정한 제도화로 동력을 잃기 시작한 1990년대 민주화 운동에 새로운 의제와 주체('민주주의의 전위투사'), 전망을 제시하는 대중운동이었다.

노동자대투쟁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전술적 특징으로 흔히 거론되는 것은 '전투적 조합주의'이다. 전투적 조합주의란, 기업 수준에서 임금·단체협약으로 상징되는 노사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근로계약관계상의 사용자 및 이들을 비호하는 정부를 표적 삼아, 일터 민주화와 임금극대화 등을 요구하고, 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으로 대표되는 전술에 호소하는, 요구-표적-전술의 결합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전투적 조합주의는 제조업 대공장 노동자들의 전유물은 아니었으나 그들의 손에서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였는데, 6월항쟁으로 인해 정치적 공간이 일정하게 열렸지만 일터 수준의 통제는 존속하는 상황에서, 이를 돌파하려면 고용형태나 노동과정상 특성, 규모 등에 힘입어 일터 수준에서 결사적 힘을 동원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노종기, 2008: 59).

전투적 조합주의에 기반하여 대공장 노조는, 이전까지 공무원이나 사무직에 국한되어 있다가

1980년대 초 들어 대기업 생산직에게도 일부 확대되던 ‘내부노동시장’, 또는 ‘정규직’ 고용 관행을 확립하였다. 아울러 평등주의 정신에 따라 내부노동시장에서 직종별, 학력별 임금격차 축소를 추동하였고 실제로 성공하였다(정이환, 2013: 286~288; 유형근, 2014: 37~38). 작업장 수준에서 임금극대화와 임금평준화를 동시에 추구한 것이다. 그 결과 저임금에 기반한 축적 체제는 위기에 직면하였다.

정부는 1990년대 들어 반격에 나섰다. 경기후퇴를 기화로 경제위기론과 노조책임론을 널리 유포하였고, 1990~1991년 10% 일 더하기 운동, 한 자릿수 임금인상정책, ‘임금교섭 선도부문’의 집중 감독을 통한 임금억제 정책 등을 실시하였으며, 1992년 들어서는 총액임금정책을 전개하였다(김영수 외, 2013: 221~222). 이렇듯 저임금 기반 축적 체제의 복원을 꾀하는 정부의 전국적 공세 앞에서 개별 사업장의 노조는 역부족이었다. 중소기업장의 노조는 말할 것도 없고 대공장 노조도 마찬가지였다.

1990년 1월 출범한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노협)는 저임금 기반 축적 체제를 복원하려는 정부와 자본에 맞서는 동시에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임투’ 전술을 구사하였다. 공동요구안에 기초한 시기집중투쟁을 전개하는 가운데, 임금교섭 선도부문으로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대공장 등 주요 사업장 노조에서부터 임금 억제 정책을 무력화하여 이를 다른 사업장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었다(김진균, 1995: 218; 김영수 외, 2013: 169). 전노협의 공동 임투 전술로 인해 정부가 주도한 임금억제정책은 실패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1987년 노동체제 하에서는 공동 임투 전술 하에 선도교섭자로 배치된 대공장 노조의 임금극대화 전략이 위로부터 강제되는 저임금 기조를 깨뜨림으로써 미조직부문 전반으로 확산되는 전반적인 임금(상향)평준화 효과를 냈다는 점이다. 그 결과 민주노조운동은 법외노조 및 작은 조직규모라는 주관적 한계, 그리고 낮은 제도적 포괄성이라는 객관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위임받지 않은 위임자’로 인정받으며 계급대표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임영일, 2003: 68~69).

임금극대화와 임금(상향)평준화의 선순환을 뒷받침한 중요한 조건은, 노동시장에서 (특히 제조업 생산직) 노동력 부족이었다. 공급 측면에서는 무제한으로 공급되던 이농 인구가 1970년대 중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요코타, 2020: 62~65). 또 다른 중요한 노동력 공급원이던 미혼여성 역시, 여성 학령기 연장 및 서비스산업 성장 등의 영향을 받아 예전 같지 않았다(허은, 2016: 46~47). 반면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경기호황이 계속돼 노동력 수요는 증가하였다. 그 결과 1965년에 13.5%에 달하던 비농가 실업률은 1978년 4.7%까지 떨어졌으며, ‘3저 호황’이 시작된

* 이에 따라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1993년부터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대신 경총과 한국노총이 임금인상률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임금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 역시 공동 임투에 의해 무력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노총 내부의 이탈과 반발을 불러일으켜 한국노총의 조직적 위기 및 민주노조운동의 세 확장을 초래하였다(김영수 외, 2013: 245~247; 임영일, 1998: 196).

1986년 이후에는 4%선 아래로 내려갔다(요코타, 2020: 63).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같은 노동력 부족이 노동시장 불평등을 억제하였다는 점이다. 가령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는 1987년을 계기로 확대되었다가 1990년대 들어 다시 축소되었는데, 이는 1980년대 초부터 노동력 정착화 정책을 펼친 대공장에 비해 노동력 부족이 더 심각했던 중소기업이 노동력 확보를 위해 임금을 올려야 했기 때문이다(정이환, 2013: 256; 286~289). 이처럼 노동자의 계급 내 격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음에 따라, 계급적 동질성도 유지될 수 있었다. 대공장 노동자들의 임금 및 노동조건이 상대적으로 낮긴 했지만, 대공장 노동자들의 ‘임금극대화 전략’이 노동력 부족이라는 노동시장 상황을 매개로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임금(상향)평준화’ 효과를 냈기 때문에, 대공장 노동자들은 ‘선도교섭자pattern-setter’로서 계급 대표성을 인정·지지받을 수 있었다(임영일, 2003: 68~69).

이렇듯 1987년 노동체제의 노동시장은 민주노조운동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물론 이는 민주노조운동에 외재적인 요인이었고 경기순환에 좌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민주노조운동이 통제하기 어려운 취약한 요인이었다(정이환, 2003: 307~308).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노동시장 상황은 20년 가까이 지속했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것은 아니었고, 1987년 노동체제를 뒷받침하는 주요한 경제적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2) 자본의 반격: 신경영전략과 균열화를 중심으로

저임금에 기반한 축적 체제를 복원하려는 정부의 거듭된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자본은 자구책을 마련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신경영전략’이었다. 신경영전략의 기본 목표는 작업장 민주주의를 중심에 놓은 민주노조운동으로 인해 축소된 사용자·관리자의 재량권을 탈환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생산공정 ‘합리화’, 작업조직 재편, 신인사제도, 고용조정, 기업문화운동, 반노조공세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다(조돈문 외, 1999).

이와 함께 기업구조를 ‘균열화fissuring’**하는 조직 재편이 나타났는데, 그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비정규직 등 다양한 형태의 불안정노동의 확산이었다(와일, 2015: 26~28; Tucker, 2020: 373).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균열화 이전과 이후 그들이 수행하는 작업 자체는 거의 바뀌지 않고, 사내 하청의 경우 심지어 작업장 위치마저 그대로이지만, 그들의 신분은 대기업의 피고용자에서 하청업

** 균열화란 기업의 경계를 이전보다 더 내향적으로 이동하여, 사용자가 판단하기에 이른바 ‘핵심역량’에 해당하는 노동자들만을 기업 내부에 존속시키고, 나머지 업무 및 노동자들은 내부노동시장 바깥으로 ‘털어내는shedding’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외부화된 업무 및 노동력의 사용은 이제 ‘고용관계’가 아니라, 프랜차이징, 하청, 공급사슬 등 다양한 ‘접착’ 기법을 통한 ‘계약관계’의 소관이 된다. 그 결과 기업의 조직구조는 하나의 기업 안에 ‘고용주’와 ‘사용자’, 또는 ‘근로계약관계’와 ‘사용종속관계’가 통합되어 있는 ‘단일 사용자 모델’에서, 고용주와 사용자, 근로계약관계와 사용종속관계가 분화하는 동시에 접착되는 ‘공동 사용자 모델’로 전환된다(윤애림, 2022: 109~115).

체의 피고용자,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바뀌게 되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균열화로써 외부화된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노동법상 사용자책임은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때 훼손되는 것은 ‘고용과 사용의 일치’라는 근대 노동법의 기본 전제, 나아가 ‘이익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어야 한다(Ubi emolumentum ibi onus)’는 법 일반의 기본 정신이었다.

균열화는 민주노조운동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기초짓던 두 가지 차원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 것이었다. 우선 균열화는 임금극대화가 임금평준화로 이어지는 고리를 약화시킬 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 복지와 법, 단체교섭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 집단의 체계적 양산과 노동시장의 분할, 이들 간의 경쟁을 통한 노동자 집단 전체의 교섭력 약화가 나타날 수 있었다.

아울러 전투적 조합주의의 효과성 역시 크게 약화될 수 있었다. 균열화의 결과 중 하나는 노동3권의 수범자, 즉 노동3권 요구에 응낙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불분명해지는 것이다. 과거에는 개별 기업의 고용주를 겨냥하는 것이 곧 사용자를 겨냥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개별 기업의 고용주를 겨냥하는 것으로는 개별 기업 너머에 있는 사용자를 사정권 안에 둘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확립된 전투적 조합주의의 위력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가령 파업의 표적이 (외주·하청·파견 등) 간접고용업체의 사장일 경우, 실질적 지배력의 부족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고, 설령 성과가 있더라도 원청업체의 계약해지 등으로 인해 무력화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진짜 사장’을 향해 파업을 벌이는 것은 실정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파업’이라는 이데올로기 공세, 공권력 투입, 손배가압류 등 그 위험부담이 막대했다. 즉 형식적·실질적으로 간접고용노동자의 성격을 강하게 띠는 불안정노동자들은 합법적이지만 무의미한 전술을 택할 것인가, 유의미하지만 불법적인(따라서 참여 비용이 높고, 가뜩이나 열악한 처지의 불안정노동자들이 쉽사리 감당하기 어려운) 전술을 택할 것인가 하는 전술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렇듯 1987년 노동체제하에서 사용자가 펼친 신경영전략과 균열화는 노조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7년 노동체제는 1990년대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균열화로 인해 규모가 다소 줄었다고는 하나 전투적 조합주의로 무장한 대공장 노조는 아직 건재하였고, 이 때문에 사용자는 노사관계 안정화를 해칠 과도한 공세를 자제하였다. 비정규직이 늘어났지만 그 증가 추세는 완만하였다. 무엇보다 노동력 부족 상황이 지속되면서, 제도적 파편성에도 불구하고 대공장에서의 임금극대화가 노동시장 전반의 임금(상향)평준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계속되었으므로, 조직물의 다소간 하락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조운동의 계급대표성은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정이환, 2013: 307).

3) 외환위기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위기와 이후 전개

하지만 1987년 노동체제는 포괄적 제도에 의해 지지되지 않고 경기호황과 노동력 부족이라는 순환적 요인에 힘입은 바 크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취약한 체제였다. 이 취약성은 1998년 외환 위기를 계기로 극적인 방식으로 드러날 것이었다. 문제상황의 진원지는 노동시장이었다. 수십 년 간 지속되던 노동력 부족은 일거에 노동력 과잉으로 역전됐는데, 이는 일차적으로 대량실업으로 표현되었지만 그것으로 한정되지 않았다. 앞서 살펴보았듯 민주노조운동이 범외노조 및 작은 조직 규모, 낮은 제도적 포괄성 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계급대표성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대공장노조를 앞세운 사업장에서의 임금극대화 전략이 노동력 부족 상황을 매개로 노동시장 전반의 임금(상향)평준화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환위기 과정에서 노동시장 상황이 근본적으로 뒤바뀌면서, 이제 노동시장 분절화는 노동시장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사실 외환위기 이전부터 이 같은 조짐은 나타났었다. 가령 1995년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다시 확대되기 시작했는데, 경기후퇴로 인해 경영이 악화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임금상승 추세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다(정이환, 2013: 289~290). 즉 외환위기 이전부터 금이 가기 시작한 임금극대화와 임금평준화의 선순환은, 외환위기를 계기로 완전히 깨져나갔다. 아울러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균열화와 그 산물인 다양한 형태의 불안정노동자 역시 외환위기 상황에서 급증하여, 1999년 전체 노동자 중 임시직·일용직 비율이 52%로 과반을 돌파하였다. 기업규모 및 고용형태에 따른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위임받지 않은 위임자 전략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공장·정규직 노동자를 주력군으로 하는 민주노총의 계급대표성은 크게 추락하였다(임영일 외, 2013: 340~343). 1987년 노동체제도 와해되었다.

아울러 외환위기를 계기로 실업과 정리해고, 비정규직 고용이 크게 확대되면서, 민주노조운동의 중심 의제는 고용안정으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을 특징짓던 작업장 민주주의 의제는 부차화되었다. 물론 노동안전 의제를 중심으로 작업장 민주주의 의제의 전통을 이어가려는 시도는 면면히 이어졌다. 하지만 대세는 다양한 판본의 고용안정 투쟁이었다.

외환위기 이후의 불리한 조건 속에서 민주노조운동은 (산별노조 건설과 산별교섭 쟁취를 두 축으로 한) 산별적 노사관계 형성, 노동자 정치세력화, 그리고 비정규직 전략조직화를 통한 계급대표성 제고라는 세 가지 전략적 방향을 추구하였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이 세 가지 모두 '반시대적'인 방향이었다.

우선 수십 년간 산별교섭과 중앙교섭이 제도화되어 있던 유럽 나라들에서도 신자유주의와 함께 단체교섭과 노사관계의 분권화 경향이 강화되면서, 중앙교섭에서 산별교섭으로, 산별교섭으로 기업별교섭으로 후퇴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은 노사관계의 초기업화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산별노조 건설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문제는 산별교섭이었다. 교섭은 결국 사용자라는 상대방이 있는 것인데, 세계적 분권화 흐름

을 등에 업고 산별교섭을 완강히 거부하는 사용자들에게 산별교섭을 관철시킬 수 있는 힘과 자원을 민주노조운동은 갖고 있지 못했다. 산별교섭의 본령이 임금평준화에 있다는 점에서, 산별교섭의 지체는 노동자간 격차 확대로 이어졌고, 이는 민주노조운동을 '귀족노조'로 비난하는 이데올로기 공세의 물질적 근거로 작용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노조운동은 2000년대 초반부터 비정규직 투쟁 및 조직화에 적극 나섰다. 10여 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쳐 2010년대부터 조직화 성과가 나기 시작했다. 2010년 9.8%까지 떨어진 노조조직률은 2010년대 들어 회복세로 돌아서 2016년 10.3%(1,966,881명)를 기록하였는데, 촛불집회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탄핵된 2017년 0.4%p(121,659명)가 증가하더니,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1%p(243,092명)가 증가한 11.8%(2,331,632명)를 기록하였다. 2018~2020년 3년간 증가한 조합원 수만 716,093명인데, 한국에서 조합원 수가 가장 가파르게 늘어난 1987~1989년 3년간 증가한 조합원 수가 896,000명이었으니, 증가한 조합원 수로만 놓고 보면 두 시기는 서로 어깨를 견줄 수 있을 정도이다. 그 결과 2021년 현재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4.2%(2,932,672명)로, 최저점이었던 2010년에 비해 4.4%p(1,289,559명)가 증가하였다(고용노동부, 2021; 2022). 2010년 총 조합원 수를 100명으로 환산하면, 불과 11년 만에 78명이 노조에 새로 합류해 178명이 된 셈이다. 2010년대 들어 OECD 36개국 중 노조 조직률이 상승한 나라는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칠레, 한국 이상 4곳뿐이다(이주환, 2021: 6).

해외 사례들과 비교할 때 한국 비정규직 조직화 사례들의 중요한 전술적 특징 중 하나는 파업 전술을 적극적으로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미국 등에서는 비정규직이나 불안정노동자들의 전술 목록에서 파업의 비중이 줄거나 상징적인 수준으로 변화하고, 그 대신 기업 캠페인과 노조-지역 동맹 등 조합원의 직접 참여 이외의 자원을 동원하여 사측을 압박하는 전술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Voss & Gastón, 2020). 그 원인으로는 목표물이 되는 자본 및 기업의 변화가 지목되기도 하고, 노조의 초점이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보다는 조합원의 양적 증가에 있으면서 기업에 강력한 타격을 가하는 파업 전술을 상대화하고 기업에 실질적인 타격이 없는 노조 인정 정도를 강제하는 전술 쪽으로 이동하는 노조 지도부의 판단이 언급되기도 한다(McAlevy, 2018). 하지만 그 이유가 어디에 있건, 파업 전술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노조로 하여금 민주적 딜레마를 겪게 만든다. 파업으로 상징되는 조합원 직접 참여에 근거한 전술이 주된 권력의 원천인 노조의 경우 조합원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데 이해관계를 갖는 데 반해, 조합원 직접참여 이외의 전술을 통해 사용자를 압박할 수 있는 별도의 전술, 가령 사측에 대한 전문적인 경영분석을 통한 기업캠페인이나, 지역 유지들의 영향력 동원을 통해 사측을 압박하는 방식을 취하는 노조의 경우 조합원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데 소홀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노조의 외적 권력 행사와 내적 민

* 이하는 민주노총, 2023: 685~688을 전재한 것이다.

주주의 사이의 관계라는 문제를 둘러싼 그간의 입장 차이를 종합한다. 즉 노조의 내적 민주주의는 '특정한' 형태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과는 긍정적으로 관련되지만, 다른 형태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과는 부정적으로 관련된다는 것이다(Voss & Gaston, 2020: 100). 그리고 후자의 방식을 취하는 노조의 경우 전자의 방식을 취하는 노조에 비해 민주적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기업캠페인과 지역동맹 등 새로운 전술을 통해 기업을 압박하는 데 성공했던 노조들이 최근 그 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의 최근 조직화 사례들은 이 같은 딜레마를 크게 겪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의 조직화에서는 파업으로 대표되는 조합원의 직접참여에 근거한 전술 목록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파업 이외의 다양한 전술이 함께 구사되지만, 파업을 대체하는 양상은 관찰되지 않고, 오히려 파업을 비롯한 조합원 직접참여에 근거한 전술이 다른 전술들의 조건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대를 동원하기 위해서라도 조합원들이 분명하게 가시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 조직화 및 전술 목록의 특징이자, 한국의 조직화가 노조 민주주의와 선순환을 그릴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1987년 민주대항쟁으로 만들어진 민주노조운동의 전통, 그리고 전투적 조합주의 전술은, 여러 변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투적 조합주의 전술의 이런저런 변형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적 특징 중 하나는, 자본을 향한 외부적 권력 행사와 내부적 민주주의 사이의 선순환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투적 조합주의 전술은 민주적 딜레마와 다른 문제, 곧 사회적 정당성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조합원 직접참여가 가장 중요한 자원일 경우, 만일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매몰될 경우, 노조가 사회적 정당성을 훼손당할 수 있고 그 결과 연대의 자원을 동원하는 데 곤란을 겪을 수 있다. 한국의 대공장 노조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반면, 적어도 현재까지, 한국의 비정규직 조직화 사례에서는 그런 점이 강하게 관찰되지는 않는다. 파업 전술을 중심에 놓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사용자를 압박하는 데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자원들을 함께 동원하고,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역시 함께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새로운 전술 목록에 힘입어 이루어진 비정규직의 조직화는 비단 해당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그치지 않고, 민주노조운동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우선 제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 중심이었던 민주노총의 조직 구성을 일정 부분 변화시켰고, 이는 민주노총의 계급대표성을 제고하는 한편, 내부 리더십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여성이 다수를 이루는바, 민주노총의 편중된 성별 구조를 일부 개선하였다. 이는 1990년대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민주노조운동에서 주변화된 여성노동자들을 다시 민주노조운동의 중심으로 귀환시키는 효과 역시 발휘하였다.

아울러 이들 노동자의 조직화 과정은 전통적인 전투적 조합주의 전술 목록으로 환원되지 않는

새로운 전술 목록의 발명을 동반하였지만, 동시에 파업 등 전통적인 전술 목록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들은 보존·계승함으로써, 19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일컬어지는 전투성과 민주성을 재생산하였다. 이들 새롭게 조직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15년 민주노총 총파업 및 민중총궐기 등 노동개악을 비롯한 정부의 정책에 맞선 민주노총의 투쟁에서 핵심 동력 노릇을 하였던 것, 2016년 말부터 본격화된 박근혜 퇴진 투쟁에서도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비정규직 조직화 사례들은, 비정규직 조직화의 성패는 기업별 노사관계를 넘어서는 초기업적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느냐, 그리고 기업별 노사관계에 기초한 전통적 노동법의 경계를 확장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 역시 보여주고 있다.

2010년대 조직화를 크게 진전시킨 이상의 주요 사례들은, 하지만 현재 새로운 문제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 이 문제 상황의 궁극적 원천은 작업장 바깥의 경제 체계, 계급적·젠더적 차별, 문화 및 이데올로기 등에 있다. 예를 들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6년 교육공무직법 제정 투쟁에서 실패하였는데, 그 근원에는 능력주의와 공정성 이데올로기가 있었다. 건설노조에 대해서는 정부가 건설산업의 노사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기존 실정법에 근거하여 공갈·협박 등의 혐의로 대대적인 탄압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 2000년대 초반 비정규직의 자생적 조직화가 봉착한 문제 상황은 새로운 대응양식, 곧 새로운 전술 목록에 힘입어 해결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현재 비정규직들이 맞닥뜨린 문제 상황 역시 새로운 대응양식, 특히 작업장 바깥에 소재하면서도 작업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힘들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전술 목록을 요청하는 것일 수 있다. 다만 이때 민주적 딜레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 민주화를 통한 작업장 민주화, 작업장 민주화에 기반한 사회 민주화라는 새로운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3. 단체교섭의 재구성을 위한 모색들: BCG를 중심으로

노조를 위시한 노동운동의 위기는 비단 한국만의 얘기는 아니다. 특히 세계화, 자동화, 규제완화, 금융화, 균열화 등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사회변동은 세계 모든 노조의 교섭력을 근본적으로 침식하고 있다. 이렇듯 거시적·구조적 사회변동으로 인한 노조 교섭력의 약화가 노조 위기의 근본적 원인인 한에서, 교섭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이 조직화를 위한 이런저런 주제적 노력보다 더 절실하다는 게 중론이다.

2008년 금융위기 등의 정세는 가뜰이나 위기 상황이었던 노조를 더 위기에 빠뜨렸다. 미국의 예를 들자면, 민간부문이 이끄는 노조 조직률 하락 추세를 다소나마 완화하던 공공부문 노조마저

직격탄을 맞았다. 경제위기와 뒤이은 불황 상황 속에서 보수·우익 세력이 집권하고, 이들이 긴축정책을 펴면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다. 긴축에 맞선 공공부문 노조의 투쟁이 ‘납세자들의 고향로 자기 배를 불리는 특권세력의 집단이기주의’로 공격받고 있으며, 이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사용자인 주정부 등이 단체교섭 자체에 응하지 않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교섭력의 부족으로 단체교섭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단체교섭 자체가 무력화되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McCartin, 2018: 173).

이는 비단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문제는 아니며, 저성장과 긴축정책, 그리고 반노조 이데올로기가 정상적 조건이 된 상황에서 노조의 전통적 전략과 관행이 지속가능한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이라는 접근은 포기할 수 없다는 논의들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단체교섭은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힘있는 엘리트에 도전하기 위해 보유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거대한 기업과 막대한 부의 권력에 필적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여전히 유력한 조직이기 때문이다 (McAlevy, 2020: 1). 여기에는 정세적인 고려도 있는데, 노조를 통한 단체교섭과 다른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방식인 소송이나 법적 접근, 캠페인 방식의 권리옹호방식들이, 보수 세력의 집권과 맞물린 사법부 보수화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없는 전술적 수단의 부재·미흡으로 말미암아 유력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McAlevy, 2020: 2~3).

아울러 조합원들이 노조 활동에 가장 열심히 참여하는 것은 단체교섭 외중에서라는 것이 공통적인 경험적 사실인바, 조합원들의 일상을 바꾸고 대중운동을 조직하려면 단체교섭이라는 계기를 우회할 수 없다는 것이다(Sneiderman & McCartin, 2018: 223).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데, 가뜰이나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체교섭은 그대로 둔 채 그와 별도의 위력 있는 활동을 벌인다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단체교섭이라는 노조의 본질적 기능을 발판으로 삼아, 이 본질적 기능을 더 광범위하고 운동건설적인 전략으로 활용하고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Sneiderman & McCartin, 2018: 229).

하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단체교섭 자체도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 아닌가? 단체교섭 이외의 대안이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기존의 단체교섭으로 과연 돌파구를 열 수 있는가? 결국 중요한 것은 단체교섭의 ‘재구성’인데, 이 점에서 2010년대 들어 미국에서 출현하고 있는 공공재를 위한 교섭Bargaining for Common Good(이하 BCG)는 흥미로운 시사점을 주는 사례이다.

* 여기서 말하는 단체교섭은 단결권 및 특히 단체행동권과 유기적 일부를 이루는 것이다. 왜냐하면 단체행동권 없는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은 ‘단체구걸collective begging’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Ewing et al., 2016: 2).

그 기원에는 2008년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대 초 미국에서 부활한 교사노조운동이 있다. 이들의 경우 전통적인 단체교섭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요구를 단체교섭에 제시하였는데, 학교시설 확충, 영유아시설 확대, 간호·상담·사서·사회복지 노동자 고용 확대, 지역 저소득 유색 노동자 채용 및 훈련 프로그램 창설, 이주자 관련 행정집행에 대한 학교당국의 협조 거부, 학령기 아동이 있는 가구의 주택을 압류한 은행과의 거래 중단, 은행의 비밀 투자로 발생한 교사연금 손해액 관련 주 차원의 소송, 주 시민들에 대한 은행의 갈취에 대한 대대적 조사 등이 그 예이다(McCartin, 2018: 174; Smiley, 2018: 239).

이는 통상적인 단체교섭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긴축 정책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요구였다. 이에 교사노조는 (대부분의 주에서 교사 파업이 불법인 상황에서) ‘불법파업’에 돌입하였으며, 조직력과 시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상당 수 요구를 관철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이 경험은 큰 주목을 받았고, 그 성공조건 및 장래성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면서, 이들의 투쟁이 BCG로 명명되었다. BCG는 9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교섭 범위의 확대, 지역사회와의 교섭장 참여, 정체성 통일, 체계적/인종적 불의와의 대결, 내적 조직화와 조합원 참여 강화, 경제 엘리트를 식별·폭로하여 수범자로 삼기, 부의 불평등에 대한 도전, 자본을 공공의 이익에 사용하기, 조직노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 구축이 그것이다(Sneiderman & McCartin, 2018: 222~224)

특히 단체교섭과 관련해서 보자면, 참여자, 과정, 목적이라는 세 가지 근본 요소를 수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McCartin, 2018: 175).

우선 참여자 측면에서 보자면 핵심은 교섭장에서 대표되는 이해당사자를 확장하는 것이었다(McCartin, 2018: 175). 전통적인 단체교섭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단순한 양자교섭에 기초한 데 반해, BCG는 지역사회에게 교섭장에서의 발언권을 부여하였다. 그 방식은 기본적으로 교섭요구안을 함께 만드는 것이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사회 대표자가 교섭장에 직접 참가하기도 하였다(McCartin, 2018: 175). 아울러 교섭상대 역시 확장되었다. BCG 캠페인 과정에서, 공공정책을 지배하는 강력한 경제적 행위자들이 교섭장에 호출되었다. 가령 긴축 정책은 결국 채권자의 채무 상환을 최우선시하는 재정운영 기조에서 비롯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금융산업과 정부가 관계를 교섭의 제로 삼음으로써 ‘월스트리트와의 교섭’을 시도하였다(McCartin, 2018: 175). 즉 단체교섭의 양자(사용자-노조) 모델이 이미 균열화와 간접고용 증대 등으로 인해 와해되고 있고, 노동자와 사회의 요구를 실현하는 데 부족하다는 점을 직시하면서, 전통적인 노동법과 교섭 관행에서는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넓은 범위의 당사자들을 교섭주체와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한편으로 노조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동맹을 확대하고, 다른 한편으로 ‘실질적 지배력’을 갖는 권력에게 노동법상 수범의무와 사회의 복리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자 한 것이다(McCartin, 2014: 45~46).

이는 물론 전통적인 단체교섭에는 매우 낮은 것이며, 따라서 이는 단체교섭 과정의 전환을 동

반하지 않을 수 없다(McCartin, 2018: 175). 우선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보면, 전통적으로는 노조가 자체적으로 요구를 만든 후 지역사회의 도움을 요청하고, 단체교섭이 끝나고 나면 관계가 중단되는 식이었다. 반면 BCG에서는 단체교섭 이전 요구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사회를 참여시켰고, 이렇듯 공동의 요구안으로 단체교섭에 공동대응한 후, 단체교섭 이후에도 관철되지 못한 요구안을 중심으로 후속작업으로 진행하여, 이 요구가 다음 번 단체교섭에서 논의되고 관철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여론과 조합원의 내부조직화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교섭 전후 과정을 전반적으로 재구성하였다(McCartin, 2018: 175~176). 아울러 본격적인 단체교섭에 들어가기 전 지역사회와 노조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공동캠페인 등을 진행하여, 기존의 단체교섭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요구와 안전이 논의될 수 있게 하는 여론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적어도 몇 가지 주요 의제 면에서는 사전·사후 공동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투쟁 방법 면에서 보면, BCG는 파업(과 파업 위협), 도로 점거 등 전투적인 전술을 적극 구사하였다. 즉 전투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성은 유지하되 그것을 수단으로써 쟁취하려는 목표를 바꾸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이들은 시민들의 지지를 좌우하는 것이 수단 자체가 아니라 그 수단을 통해 쟁취하려는 목표이며, 그런 목표의 수단으로 사용된 전투적 전술은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대중적 지지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다(McCartin, 2018: 176).

요컨대 결국 관건은 단체교섭의 목적이었다. BCG는 단체교섭의 목적을 확대하였고, 이로써 납세자와 노동자의 제로섬 게임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제약을 돌파하였다. 이들의 투쟁은 경제투쟁/정치투쟁이라는 이분법에 따라 이해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한 것은 정치투쟁 없는 경제투쟁도, 경제투쟁을 도외시한 정치투쟁도 아니었기 때문이다(Sneiderman & McCartin, 2018: 222). 오히려 BCG는 (굳이 경제투쟁/정치투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면) 경제투쟁을 정치화·보편화하려는 기획이었고, 단체교섭과 별개의 사회(정의)운동을 벌인 것이 아니라 단체교섭을 사회(정의)운동의 수단으로 재구성·전환하려는 기획이었다. 아울러 이 운동은 어떤 당위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경제위기와 긴축 상황에서 노조의 교섭력을 제고하려는 현실적인 시도였다.

참고 자료

- 01 김도현, 「노동해방의 '잠정적 유토피아, 기본소득인가 공공시민노동인가?」, 『문화과학』 115, 2023.
- 02 김영수, 김원, 유경순, 정경원, 『전노협 1990~1995』, 한내, 2013.
- 03 김진균,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구조와 특징.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의 전개과정과 주요활동을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1(2), 1995.
- 04 노중기, 『한국의 노동체제와 사회적 합의』, 후마니타스, 2008.
- 05 데이비드 그레이버, 『불빛 잡: 왜 무의미한 일자리가 계속 유지되는가?』, 민음사, 2021.
- 06 데이비드 와일, 『균열일터, 당신을 위한 회사는 없다』, 황소자리, 2015.
- 07 루초 바카로, 크리스 하월, 『유럽 노사관계의 신자유주의적 변형: 1970년대 이후의 궤적』, 한울아카데미, 2020.
- 08 리처드 세넷, 『뉴캐피털리즘: 표류하는 개인과 소멸하는 열정』, 위즈덤하우스, 2009.
- 09 마리 야호다, 파울 라차르스펠트, 한스 차이젤, 『실업자 도시 마리엔탈』, 이매진, 2021.
- 10 안드레아스 말름, 『화석자본: 증기력의 발흥과 지구온난화의 기원』, 두번째테제, 2023.
- 11 요코타 노부코, 『한국 노동시장의 해부: 도시 하층과 비정규직 노동의 역사』, 그린비, 2020.
- 12 유형근, 「노동조합 임금정책의 점진적 변형: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8(4), 2014.
- 13 윤애림,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 실현을 위한 '사용자' 찾기」, 『노동법연구』 53, 2022.
- 14 이주환, 「2010년대 한국의 노동조합 조합원. 누가 더 많이 가입하나, 누가 더 많이 덕을 보나」, KLSI Issue Paper 151호, 2021.
- 15 임영일, 『한국의 노동운동과 계급정치(1987-1995): 변화를 위한 투쟁, 협상을 위한 투쟁』, 경남대학교출판부, 1998.
- 16 임영일,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체제 전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운동: 1997-2001』, 한울아카데미, 2003.
- 17 임영일, 지주형, 장석준, 노중기, 권두섭, 이상호, 이종래, 현광훈, 윤애림, 정일부, 『한국의 신자유주의와 노동체제: 노동운동의 고민과 길찾기』, 노동의지평, 2013.
- 18 장-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후마니타스, 2018.
- 19 장진범, 「전략조직화 평가: 조직화 전술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20년 평가와 전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23.
- 20 정용택, 「보편적 기본소득의 바울신학적 정당화: 참여소득 이론을 중심으로」, 『신학논단』 109, 2022.
- 21 정이환, 『한국 고용체제론』, 후마니타스, 2013.
- 22 조돈문, 박준식, 이병훈, 장홍근, 이민영, 『신경영전략과 노동조합의 대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999.
- 23 허은, 『노동계급 가구와 지역노동시장: 마산-창원지역 구조조정과 여성 노동 유연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 24 Alexis Cukier, 『Democratic Work. Radical Democracy and the Future of Labour』, Palgrave Macmillan, 2023.
- 25 Christophe Dejours, Jean-Philippe Deranty, Emmanuel Renault, Nicholas H. Smith, 『The Return of Work in Critical Theory: Self, Society, Politics』,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8.
- 26 Emmanuel Renault, 『Social Suffering. Sociology, Psychology, Politics』, Rowman&Littlefield, 2017.
- 27 Erica Smiley, 「A Primer on 21st-Century Bargaining」, 『No One Size Fits All: Worker Organization, Policy, and Movement in a New Economic Age』, Labor and Employment Research Association,

- 2018.
- 28 Erik Tucker, 'Migrant workers and fissured workforces: CS Wind and the dilemmas of organizing intra-company transfers in Canada', *Economic and Industrial Democracy* 41(2), 2020.
 - 29 Jane F. McAlevey, 'The Strike as the Ultimate Structure Test', *Catalyst* 2(3), 2018.
 - 30 Jane F. McAlevey, 'A Collective Bargain. Unions, Organizing, and the Fight for Democracy', CCCO, 2020.
 - 31 Jean-Philippe Deranty, 'Work and the Precarisation of Existence', *European Journal of Social Theory* 11(4), 2008.
 - 32 Jean-Philippe Deranty, 'What is Work? Key Insights from the Psychodynamics of Work', Thesis Eleven 98, 2009.
 - 33 Jean-Philippe Deranty, Emmanuel Renault, 'Democratizing Workplaces from Below. Beyond workplace republicanism', 'The Politics and Ethics of Contemporary Work. Whither Work?', Routledge, 2022.
 - 34 Jean-Philippe Deranty, 'Work and the Precarisation of Existence', *European Journal of Social Theory* 11(4), 2008.
 - 35 Joseph A. McCartin, 'Bargaining for the Future: Rethinking Labor's Recent Past and Planning Strategically for Its Future', Kalmanovitz Initiative for Labor and the Working Poor, 2014.
 - 36 Joseph A. McCartin, 'Innovative Union Strategies and the Struggle to Reinvent Collective Bargaining', 'No One Size Fits All: Worker Organization, Policy, and Movement in a New Economic Age', Labor and Employment Research Association, 2018.
 - 37 Kim Voss, Pablo Gastón. 'Been Down So Long, It Looks Like Up to Me: Targets, Repertoires, and Democracy in the U.S. Labor Movement', 'Protestors and their Targets', Temple University Press, 2020.
 - 38 Marilyn Sneiderman, Joseph A. McCartin, 'Bargaining for the Common Good: An Emerging Tool for Rebuilding Worker Power', 'No One Size Fits All: Worker Organization, Policy, and Movement in a New Economic Age', Labor and Employment Research Association, 2018.

노동/운동이 갇혀있는 선을 넘는 활동을 시작하자

김하늬 | 민주노총 서울본부

clockwow@gmail.com

노동운동, 체제전환, 노동해방

노동운동에서 체제전환의 지향은 ‘노동해방’이라는 표현으로 대중적으로 표현되어왔다. 물론 이는 학술적으로 엄밀한 개념도 아니고 의미에 대한 보편적 합의가 형성된 것도 아니다. 다만 이 표현이 쓰이는 맥락으로 보아 철학적으로 ‘소외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경제학적으로 ‘이윤을 목적으로 착취당하는 임금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한 마디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의미로, ‘혁명’이나 ‘변혁’이라는 단어를 공개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시대에 이를 대체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넘어서는 것이 필요조건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충분조건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해방된 노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노동인가? 이를 몇 마디로 정리하거나 어느 한두 가지 요소로 환원해 설명하기는 어렵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적절한 대가와 가치를 인정받으며 평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노동,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는 노동, 노동자가 존엄성을 보장받는 노동, 자본의 이윤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필요에 기여하고 의미를 인정받는 노동, 사회적 필요를 위해 규율에 따라 수행하는 노동은 최소화하고 창의적 자기 실현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노동, 노동자 스스로가 기획하고 통제하는 노동과정, 동료들과 민주적·평화적·협력적으로 서로 돌보며 배우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노동, 생산과정 중 일부만을 수행하더라도 전체에 대해 조망하고 개입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조성되는 노동, 나의 노동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할 수 있는 노동, … 이밖에도 많은 상상이 가능하고 더 적극적으로 상상할 필요

* 이 글은 글쓰기가 속해있는 조직의 입장과 무관한 개인의 의견입니다. 이 글에서 소개되는 사례들도 인용된 것을 제외하고는 글쓴이 개인의 직간접적 경험과 의견으로, 해당 조직의 공식적 자료나 평가와 무관합니다.

가 있다.

체제전환 또는 노동해방의 지향을 현실화시킨다는 것은 이런 노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현실의 노동운동은 그런 지향을 분명히 하고 있는가?

노동운동, 체제전환인가 체제진입인가

노동과 자본은 착취-이윤의 측면에서 적대적 관계이면서도 노동이 생산수단(자본)으로부터 분리되기 어렵다는 점(노동자가 먹고 살기 위해 고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호의존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운동은 당장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혁파할 게 아니라면 자본에 맞서 싸우면서도 동시에 자본의 존속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자본의 입장에서 노동자의 사망·질병·사고 등으로 인해 노동력 손실이 커지는 것이 곤란하기는 매한가지여서 지나친 착취를 자제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투쟁과 이런 이해관계가 맞물려 대부분의 사회에서 노동3권이 법과 제도로 확립되어왔다.

상식에 해당하는 내용을 새삼 다시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노동과 자본 양쪽의 필요를 절충해 제도화된 노동조합이 노동운동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몇몇 활동가들의 조직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감수성이 대체로 비슷하게 체화되어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대중조직이다. 게다가 노동조합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은 '타협(타결)'을 목표로 하는 단체교섭이다. 교섭은 요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협상 상대방(사용자)과 상호작용하면서 불만족을 수용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런 조건에서 노동운동은 체제전환운동보다 오히려 체제진입운동의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현실적으로 노동운동의 많은 요구와 성취에 대해서도 그렇게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 구조와 관련된 많은 노동자들의 요구는 정규직화, 직접고용, 일정 시간 이상의 노동시간 보장, 노동자성 인정, 정년 보장(또는 연장)이다. 정기적·규칙적으로, 일정 시간 이상, 가능하면 자기 생애의 오랜 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착취당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요구다. 임금노동 외에 소득과 생계, 그리고 의료·주거·돌봄·노후 등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고 불안정한 고용(생계)을 무기로 노동자를 협박하는 사용자를 제어할 다른 방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지가 먹고 살기 위해 거의 평생을 매일 8시간씩 비슷한 일을 반복하며 사는 것과 취업·실업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소득으로 고통 받는 것 밖에 없어야 하는가? 한때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연대하며 인권감수성과 권리의식을 키워가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쟁취한 후 현 체제가 제공하는 이런저런 이득을 늘려가는 데 집중하는 운동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혹은 전속적 근로관계에서 오는 타이트한 근태관리와 통제보다 자유로운 계약관계가 좋아 프리랜서가 되었다는 이유로 불안정한 생계와 존엄성에 대한 위협을 감수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노동운동이 이런 모든 성취와 그 과정에서 외쳤던 요구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필요하다면 노동자, 노동권, 노동조합 등 많은 것들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거나 논리 정합적으로 정리하기엔 필자의 능력이 부족하다. 화두를 던지는 것만이라도 잘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선의의 노력이 왜 문제를 낳는가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운동의 가장 큰 성취는 뭐니 뭐니 해도 노조할 권리와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다. 노동시간과 노동강도, 휴게·휴일·휴가, 일터의 안전, 임금의 규모와 체계, 복직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단지 그 노동조건을 수준을 높이는 데 머무르지 않았다. 노동환경 결정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 위험 발생 시 작업중지권이나 업무배정에 대한 협의·합의·동의권, 상벌 결정에 대한 노동자의 발언권이나 공동결정권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제도화되기도 했고 그렇지 않더라도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대응역량을 바탕으로 구현되기도 했다. 이는 권위주의적·폭력적 조직문화를 민주적·수평적인 방향으로 바꾸고 권력관계에서 자본의 일방적 우위를 조금이나마 제어하거나 부당함에 맞설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었다.

이는 그 자체로 대단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을 일구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축적해왔을 단결과 연대의 경험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이다. 뿐만 아니라 꽤 많은 경우 산업과 지역에 대한 영향력과 제도화를 통해 전체 노동자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과 성취가 사업장 담벼락을 넘는 것이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 조합원의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이 행하는 ‘선의의’ 노력들이 담벼락을 더 높이 쌓아 그 성 밖 노동자들에 대한 배제와 차별로 귀결될 수도 있다. 이는 일터와 삶터에서 모두 나타난다.

많이 거론되는 사례들은 이를테면 이런 내용이다. 노동조합이 안전한 일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합원(노동자)들에 대한 위험업무 배정을 거부한 경우, 그 업무가 외주화되거나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해 그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그 일차적인 책임은 회사측에 있다.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설비투자나 공정 개선, 안전장비 지급, 인력 확충과 노동강도 완화 등의 노력을 하지 않고 비용 절감을 위해 손쉽게 외주화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끝까지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일단 우리 조합원은 안전하도록’이라는 명분으로 회사의 외주화를 방기하거나 용인했다면, 이 문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책임은 없는가? 혹은 만약 노동조합이 최선을 다해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싸웠지만 투쟁력이 부족하거나 그밖에 여러 이유로 그것을 관철하지 못했다면, 이 경우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업무배정 금지’를 선택한 노동조합에게는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는가? 노동조합이 의도했던 그렇지 않은 위험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말이다.

흔히 다뤄지는 또 다른 사례의 종류는 이렇다. 원청 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쳐 꽤 많은 인상을 해냈다. 회사는 이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하청업체의 납품단가를 대폭 낮춘다(여기서 특정 기업이나 노동조합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일은 생각보다 빈번하다). 혹은 제품의 품질 저하나 소비자의 잠재적 위험을 감수하면서 저렴한 부품을 사용한다. 이 경우 노동조합은 하청업체의 지불능력 저하와 그 소속 노동자(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 여력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가?

‘이해관계’에 갇힌 ‘가치’, ‘강한 투쟁’ 뒤에 가려진 ‘허약한 동의’

이런 문제는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노동(조합)운동이 어디에 서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업장 밖 집회나 기자회견에서 외치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 요구나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비판이 현장에서 조합원의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연관될 때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당위와 원칙보다는 이해관계를 선택하곤 한다. 반대로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다룰 때는 노동조합 밖, 사업장 밖 다른 노동자나 소비자를 포함한 사회구성원들의 권리, 그들과 노동을 통해 형성하고 있는 관계가 고려되지 않는다. 당장 대안이 없어서, 조합원들의 반발이 심해 조직력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를 상대로 싸워봤지만 역부족이어서, 다른 쟁점이 많아 비중있게 다루기 어렵다는 이유로, ... 대체로 불가피한 이유와 핑계가 모순적으로 공존한다. 구체적 조건과 맥락을 잘 모른 채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선택을 비난만 하기도 어렵다.

다만 한 가지 확인할 것은 노동해방의 지향이나 반차별·인권·안전 등의 가치가 조합원의 이해관계와 부딪치는 곳에서 멈춰서는 모습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 한계를 넘지 못하면 노동조합의 공식적·대외적 주장과 조합원들의 요구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다가, 결국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수도 있다. 자극적이고 강해 보이는 구호와 전투적인 투쟁으로 허약한 동의지반을 숨기기는 어렵다.

그런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대중적 신뢰가 심각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 노골적 반노동 성향의 정권과 보수언론의 주장이 음해에 가깝다 하더라도, 그 공격을 방어할 사회적 지지여론을 형성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노동조합은 조합조직으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한 것뿐이지만, 그것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권리를 전반적으로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런 문제는 계속되고 결국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게도 부메랑이 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이 이런 노동운동의 약점을 너무 정곡으로 찌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 특히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조합원들이 탈퇴해 다른 노조로 이동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대표교섭노조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더욱 심각하게 느껴진다. 정부가 노동조합이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작년 하반기에 개정했다.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공시된 자료가 추가적인 탄압에 이용될 수 있으니 회계공시를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과 세액공제라는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노동조합이 저해해서는 안 되니(또는 세액공제를 못 받은 조합원들의 반발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 공시해야 한다는 입장이 모두 나왔다. 그리고 이미 알려졌 다시피 회계공시를하기로 결정했다.

그 시점에 그 조건에서 타당한 결정이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떠나 계속 뒤돌아보며 곱씹게 된다.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과 윤석열 정권 임기 동안 세액공제혜택을 포기하고 저항하지는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 중 정부의 노동탄압에 더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 무엇일까?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 정도의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이 얼마나 힘이 있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노동운동이 노동자의 삶의 문제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고민은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들로 국한되지 않는다. 일례로 주거문제에 대해 노동운동이 어떻게 대응해왔는지를 살펴보자.

1980년대 3저(저유가·저금리·저환율) 호황과 86아시안게임·88올림픽을 앞둔 개발 광풍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폭등했다.* 전세대란으로 정권에 대한 분노가 비등했다.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지만 이듬해 봄 전셋값을 마련하지 못해 비판한 세입자 가족의 집단 자살이 잇따라 벌어졌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이제 막 대중적으로 확산되던 노동운동도 이에 대응했다.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은 1990년 주거안정화대책으로 임대료 동결, 임대차보호법 개정, 공공부문에서 서민용주택 대량 건설 및 공급,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하지만 주된 사업은 단위사업장 입단협에 주택문제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특히 주거비 상승분을 반영한 기본급 인상이나 주택수당 신설, 주택건립기금 적립, 주택용자제도, 사원주택 확대 등 임금과 기업복지 확대 요구로 집중되었다.** 집값 폭등에 대한 사회적 여론, 민자당 독재정권에 대한 정치적 불만과 사회개혁 요구가 분출하는 것을 막으려는 정부의 대응, 노동자들의 투쟁력 등이 바탕이 되어 상당한 수준으로 관철해냈다.

* 1987년부터 1990년까지 전셋값이 전국 평균 86% 폭등했다. 지역별 상승률은 서울이 82%, 경기도 108%, 6대 광역시 93%였다.

** 당시 전노협은 주거안정화를 위한 정책 요구와 사업장별 교섭 요구에 관해 이런 내용의 지침을 수립해 추진했다.

노동조합으로서는 주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주거 안정에 대한 조합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투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주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임금 소득을 통한 구매력 향상과 개별적 자가 소유 실현으로 모아졌다. 당시 주거를 둘러싼 구조적·제도적 문제 해결 요구의 폭발력이 잦아들고 주택정책에 대한 주도권은 정부와 건설자본이 계속 쥐었다. 사회주택 공급이나 주거공공성 강화 운동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고임금과 기업복지에 접근할 수 있는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간극이 생겼고, 대기업의 교섭 결과가 지역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대폭 줄어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이후 한국사회에서 주거문제가 어떻게 전개되어왔는지는 잘 알려져 있다. 임금소득은 물론 금융과 개인적 관계망을 동원한 주택 소유 노력이 이어졌고, 노동자들에게 삶의 안정성과 노후를 위한 공적 자원이 풍족하지 않은 조건에서 집이 거의 유일하게 미래와 만약의 위험에 대비할 자산이 되었다. 경제상황에 따라 노동자들도 주택을 이용한 투기 열풍에 휩쓸려가기 좋은 조건이 형성된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전적으로 노동운동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당시 가장 강력한 힘과 규모를 갖고 있던 운동집단으로서 노동(조합)운동의 영향이 작지는 않았으리라 짐작한다.

노동운동은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해법을 찾았다. 전두환 군부정권의 1980년 이른바 ‘7.30 교육개혁 조치’로 시작된 ‘과외 금지’가 1989년 방학 중 학원 수강 허용으로 완화되었고 1991년 학기 중 수강까지 허용된 후 2000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완전히 막을 내렸다. 곧바로 사교육시장이 급격히 팽창했다. 경쟁과 서열화의 교육시스템과 입시제도, 외환위기 이후 안정적 일자리 감소 등 노동시장의 변화와 맞물려 노동자들도 자신의 아이를 사교육 대열에 밀어 넣지 않으면 뒤쳐질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리고 임금요구안을 마련할 때 근거로 사용하는 표준생계비모델 등에 사교육비 항목이 포함되기 시작했다.^{***} 서울시의 생활임금 산정 기준에도 사교육비가 포함되는 방식으로 제도화되기도 했다.^{****}

노동운동이 서열화와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체제에 저항하고 때때로 일제고사 실시 등 정부의

*** 양대노총의 표준생계비 산출 모형은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조금씩 개정돼왔고 사교육비에 포함되는 비목도 그에 따라 변화되어왔다. 2018년 민주노총은 표준생계비 산출 모형에서 교육비를 ①공교육비 및 대학 학비, ②사교육비로 구성하고, 이중 자녀 사교육비는 학령에 따라 유치원, 예체능학원과 학습지, 보습학원비, 참고서비, 그 외 과외활동비, 성인교육비(자기계발비 등)를 포함했다(2018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산출결과 보고서). 한국노총도 이와 비슷한데, 2021년 표준생계비 중 사교육비에 교재비, 학용품비, 학원비, 과외비(조합원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월평균 사교육비), 단체활동비, 급식비를 포함했다(2021년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 서울시는 2014년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면서 생활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에 ‘서울 평균 사교육비의 50%’를 반영하였다. 다만, 2023년 생활임금에는 ‘사교육 조장 우려’를 이유로 사교육비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이는 실제로는 생활임금제도의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기조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굵직한 교육정책을 저지해내기도 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으로 뭉쳐 집회에 참여할 때는 ‘교육서열화 반대! 일제고사 저지!’를 외쳤지만, 자신의 일상 속에서는 임금 인상으로 사교육비를 확보해 자녀들의 경쟁우위 확보를 지원하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조합원의 구매력 높이기’와는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이와 비슷하게 고물가, 의료비, 보험료, 공공요금 등 거의 모든 사회·경제적 문제가 임금 인상과 기업복지에 대한 요구로 수렴되곤 했다. 이는 비단 비용만이 아니라 차별·안전·사회적 관계·민주주의·인권 등과 깊은 관련이 있는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소득을 높여 각자의 구매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한 것이다. 사업장 단위의 투쟁에서 성공한 경험은 꽤 있고 공적 시스템은 취약한 현실에서 그런 선택은 어찌면 당연하다.

이는 임금소득으로 생계에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고 부분적으로는 그 이상의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대체로 고임금/정규직/대공장/남성/중장년에 속하는 노동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밖에 다른 노동자들도 결국 그것 말고 삶의 다른 대안을 엿볼 수 없다면, 노동자들은 더욱 깊숙이 체제 안으로 진입해 그 안에서 신분 상승을 이루기 위해 경쟁하게 될 것이다. 자본이 제시하는 ‘더 착취당할 수 있는 기회’들을 수용하고 각자도생과 차별을 내재화하거나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주체가 되기도 한다. 여성, 비정규직, 장애인, 청년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노동자들이 용인·가담하거나 재내화하는 것도 이런 맥락과 다르지 않다. 정부가 이주노동자 쿼터와 허용 업종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상황에서, 앞으로는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사이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조금 비판적으로 정리하자면, 지금 노동운동이 간혀있는 지점은 대략 여기다. 노동현장에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요구와 투쟁은 다른 노동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진다. 다른 노동자들을 포함한 모두의 권리를 위한 투쟁은 우리 조합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업장 문 밖에서 멈춰선다. 노동자의 삶을 둘러싼 문제들은 거의 다뤄지지 않거나, 다뤄진다고 해도 임금과 기업복지를 높여 노동자 각각의 구매력을 높이는 방식에 집중된다.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 노동자들의 동의를 구하고 다양한 노동/삶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사회운동과 결합하려는 진득한 노력보다는 ‘(정부/국회/자본 등에)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몇 가지 구호와 슬로건을 내세워 몇 시간 또는 며칠간 동원하는 손쉬운 방법을 택해왔다.

* 2008년 이명박 정권 초기에 전국적으로 일제고사를 실시하려는 정부에 맞서 전교조를 비롯한 노동운동·교육운동 조직들이 적극적으로 맞서 싸웠다. 서울에서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주도로 ‘서울지역 사회공공성 연대회의’가 구성되어 활동했는데, 교육서열화 정책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조합원 1만 명 교육 등 대대적으로 사업을 전개했다.

변화를 위한 노력, 나의 노동이 사회적으로 값지게 쓰이기를 바라는 ...

다른 방향의 운동을 일구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노동조합들이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제도와 정책을 바꾸기 위해, 나(우리 사업장 조합원) 외에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함께 진전시키기 위해 투쟁하고 연대한다. 특히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은 ‘철밥통’이라는 보수언론의 비아냥과 음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동을 통해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가 공공재로서 충분한 의미를 갖도록 공공성 강화 운동을 전개해왔다.

예를 들면,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은 이동권, 안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철도·지하철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입과 인력 확충을 요구하거나 민영화·효율화를 위한 노선 폐지나 축소에 반대해왔다. 보건의료노동자들은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대,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 간병비 부담 완화 등을 요구해왔고, 특히 팬데믹을 거치며 높아진 사회적 공감대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조직한 투쟁으로 2021년 9.2노정합의를 이루기도 했다. 언론·미디어 노동자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방송장악·언론장악 시도를 멈춰세우기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과 신문법 등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투쟁을 했다(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건설노조는 몇 십 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만연해있던 비리와 부실공사를 없애고 안전한 건물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금융노동자들은 관치금융 근절, 금융소비자 보호,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꾸준히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다. 돌봄노동자들은 공공돌봄기관 확대와 예산 확충,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의 비용 부담 완화 등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노동운동의 각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종류의 노력은 사실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름의 치열한 고민을 통해 이루어진다. 모두가 자신이 노동을 통해 관계 맺고 있는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에 대한 책임감이나 자기 노동이 사회적으로 더 값진 노동이 되기를 바라는 욕구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들이다.

‘공급자/노동자/노동조합’ 입장의 한계

하지만 여기에도 여러 한계와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그 어려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노동자가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 앞서 말한 것처럼 ‘개별기업 단위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임금과 복지를 높여 생계수단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노동(조합)운동은 그것을 더 많이 높은 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욕망을 자극하고 일부는 실제로 달성해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정치적으로 올바른’ 요구와 투쟁들은 결국 임금·복지·고용을 비롯한 몇 가지 처우 개선 합의

~~~~~  
\*\*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권이 건설노조에 대해 ‘건폭’, ‘채용장사’ 운운하며 악랄하게 탄압한 것은 건설자본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옹호한 것이자 동시에 노동운동과 시민사회 전반에 대한 공격이었다.

를 이루는 순간 찾아들고, 심지어 때로는(또는 자주) 그런 처우 개선을 위한 명분으로 활용되는 데 그치기도 한다.

한 발 더 나가보자면, 노동자/조합원 개개인이 수행하는 노동의 내용과 방식에 관한 문제를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 속에서 '운동'의 주제로 다루는 데 한계를 보인다는 점을 짚고 싶다. 이 지점에서 노동권과 시민의 권리 간에 충돌과 반목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보자. 모든 시민의 이동권과 안전을 위해 투쟁해온 지하철 노동자들 중 일부가 최근 전장연의 시위와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쫓아내는 노동에 꾸준히 동원되고 있다. 평상시에도 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노동은 귀찮거나 피하고 싶은 노동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서비스 제공의 수준과 내용이 노동강도와 직결되는 공급자이자 업무지시 불이행이 일자리/소득에 대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노동자 입장의 한계이다. 개별 노동자가 뛰어넘기 어려운 그런 한계를 집단적 힘으로 넘어서기 위한 운동으로 일구는 데 실패해온 노동조합의 한계이기도 하다.

물론 이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이 대거 징계 대상 명단에 오르는 등 극심한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 사업장 내에 더 실리주의적이고 조합비가 낮은 다른 노동조합들과 조합원 규모를 두고 경합하고 있다는 점, 역무노동자 수는 여전히 매우 적고 굉장히 넓은 범위의 업무를 커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른 예를 하나 더 생각해보자. 금융권 노동자들도 비슷한 고민을 한다. 노조에서는 민주노총의 녹색단협 사례발표에 참여해 '금융회사의 석탄투자 축소'를 요구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했지만, 현장의 노동자들은 당장 회사의 먹거리가 줄어들고 영업실적이 악화되면 그렇잖아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금융권 구조조정에 희생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어 말도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한다. 삶의 안정성과 노후를 위한 공적 연금·기금·보험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민간 금융사 노동자들은 자신의 일자리와 임금소득을 지키기 위해 보수적으로 반응하거나 저항하기도 한다.

조금 더 구체적인 문제를 언급해보자면, 모든 노동자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퇴직연금은 47개 금융회사가 총 300조원 규모로 유치해 운영하고 있고 수수료 수입만 해도 약 1조원에 달한다. 수익률은 국민연금(2021년말 기준 10.77%)에 비해 턱없이 낮은 1~2%대에 그치고, 국민연금의 스튜어트십과 같은 공적 기능을 수행하지도 못한다. 공공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 퇴직연금을 공적 연·기금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금융회사 노동자들이 선뜻 이 제안에 동의할 수 있을까?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이 조직되는 방식과 '정의로운 전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풀리기 어려운 문제다. 에너지, 자동차, 의료, 통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런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밖에도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비슷한 한계와 딜레마를 겪는다.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최근 팬데믹을 거치는 동안 위대한 노동과 투쟁을 전개해왔지만, 여전히 노숙인·장애인·성소수자 등의 의

료접근권 제한이나 의료노동자들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는 심각하다. 공무원노동자들은 노점상 단속과 강제철거로 생존권 이슈에서 부딪힌다. 언론노동자들은 권력에 의한 방송장악에 맞서지만, 방송 뉴스 프로그램 화면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과 수어통역을 포함하는 것을 꺼리거나 정부의 건설노조 비방을 거의 받아쓰기 하듯 보도하기도 한다.\*

이런 문제들이 조합조직으로서 노동조합이 갖는 태생적 한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말 ‘태생적’ 한계인 것일까?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불가능할까? 넘어서기 위해 노동조합이 성찰하고 노력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고 그 과정에서 사회운동이 어떻게 결합 또는 개입해야 할까?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가능성을 가늠해보자.

### **루카스항공 노동자들의 프로젝트\*\* : 사회적으로 유용한 노동을 할 권리**

1960년대 후반 설립된 루카스항공 노동자들이 회사의 구조조정에 맞서 시행한 프로젝트(협동 계획)는 이제 꽤 널리 알려져 있다. 루카스항공 노동조합은 구조조정 대응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으로 만든 생산물이 사회적으로 가치나 쓸모를 인정받지 못할 때 매우 급격히 사기가 떨어진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 일할 권리”를 위한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작업능력·나이·기능·훈련과정과 사용가능한 공작기계·장비·연구실, 그리고 과학연구진의 특성 및 설계능력에 대하여 상세하게 서술하고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상품 중에서 우리의 설비와 능력으로 제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편지를 작성해 학회·대학·노동조합·사회단체 등 180여 곳에 보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답을 준 사람은 4명 밖에 없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방향을 선회해 조합원들에게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이때 노동조합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노동자가 생산자이자 소비자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노동하는 국민과 집이나 공동체 내에서 살아가는 완전히 다른 국민이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도록 만드는 불합리한 구분을 넘어서기 위해 노력했다.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작업이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갖는 의미, 즉 사용가치에 대해서도 생각하도록 설문지를 만들었다.

그 결과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유용한 상품 아이디어 150여 가지

---

\* 노동자의 양심으로, 자신이 수행하는 노동이 공동체에 파괴적 기능을 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 용기를 냈다가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언론노동자들이 권력의 방송장악 시도에 맞서다가 이른바 ‘유배지’로 발령이 나가거나 업무에서 배제되는 일이 지금도 비일비재하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에 대해 지질과학연구원의 김이태 박사가 자기 노동(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가 해고된 일이 있었다.

\*\* 이 사례는 Mike Cooley(1980), Drawing Up the Corporate Plan at Lucas Aerospace의 내용의 일부를 요약 발췌하되 ‘우리에게 기술이란 무엇인가(송성수 편역, 1995)’에 실린 번역을 참고하였다.

를 찾아낼 수 있었다. 이 제안들은 6개의 주요 생산 범위로 나눈 후 기술적 세부사항과 경제적 계산, 심지어 공학적 도면까지 포함해 200페이지 가량의 책 6권으로 구체화되었다. 그 결과 콩코드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노동자들이 어린이들의 이동을 돕는 차량(합카트), 심장마비 환자 응급구조장치, 수술환자의 혈액 온도와 흐름을 유지해주는 장치,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부품, 하이브리드 자동차 동력체계, 가정용 투석기, 도로·철도 겸용 차량 등을 만들어냈다.

이 사례는 과학기술학 분야에서 많이 소개되었고 최근에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맥락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서는 노동운동과 관련하여 이런 프로젝트가 가능했던 요인과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보자.

### 생산자-소비자(노동운동-사회운동)가 함께 발견하는 '유용한 노동'

이에 대한 필자의 의견은 첫째, 루카스항공 노동조합은 회사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기 1년여 전에 영국 노동조합운동사상 처음으로 연구개발직의 과학기술노동자들과 생산직의 반숙련 노동자들을 묶어 연합위원회를 발족했다. 회사가 다른 계열사에서 노무관리 기법으로 시행한 노노갈등 유발을 막기 위해서였다. 결과적으로 그런 목적을 달성했을 뿐 아니라 기술과 현장에 대한 상호 이해와 침투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냈다. 직종·사업장·업종을 넘어 다른 노동자들과 일상적으로 교류함으로써 서로 연결되어있음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정보와 시야가 넓어질 수 있다.

둘째, 구조조정 대응 투쟁과 무관하게 평소에 다른 노동조합, 지역사회, 대학, 정당 등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연대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이 누구에게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더 잘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어린이의 이동을 돕는 '합카트(Hobcart)'라는 차량은 노동조합이 방문한 어린이단체에서 몸을 이리저리 옮기기 위해 마룻바닥을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만났던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셋째, 노동운동이 '노동'과 관련해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노동자들과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해준다. '어떤 노동을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어떻게 일자리를 지키고 처우 개선을 할 것인가' 하는 고민보다 힘이 더 강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노동자 자신이 성취감과 해방감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노동의 결과물을 통해 그 일자리가 필요함을 응변할 수 있다. 나아가 이윤을 위한 노동을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공동체 구성원들의 편의·권리·안전에 기여하고 자연과 공존하기 위한 노동으로 전환할 동력이 된다. 노동조합이 노동조건을 둘러싼 조합원들의 이해관계 못지않게, 또는 그보다 더 역량을 투여해서, 어떤 노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나의 노동이 다른 노동

---

\* 위의 합카트를 설계한 노동자는 "내가 합카트를 가지고 가서 아이들의 얼굴에서 기쁨을 보았을 때가 나의 삶에서 가장 풍부한 경험을 했을 때", "어떤 설계활동보다도 이 일이 더 큰 의미를 주었다"고 말했다. (Mike Cooley, 1980)

자의 노동, 사회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들, 비인간 자연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를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만든다면 어떨까? 이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운동과 결합하고, 사회적 소수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집단과 만난다면 어떨까?

##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의 연대는 어떻게 구축되었는가-노동, 관계, 운동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반드시 50년 전 해외의 사례만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구 희망연대노동조합)의 사례는 다양한 측면에서 자주 거론된다. 비정규직 조직화와 정규직 전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노사공동사회공헌기금 조성과 나눔연대·지역연대사업, ... 여기서는 글의 주제와 관련해 몇 가지만 강조하고 싶다.\*\*

딜라이브(구 씨앤엠) 정규직 노동자들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에 나서기까지 논의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비정규직 조직화와 노동조합 사수에 실패할 경우 운영 사이클도 정착되지 않은 정규직 노조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컸다. 무엇보다 노동과정에서 원청(정규직) 노동자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에 형성된 관계가 문제였다.

원청노동자들 중 상당수는 하청노동자들에 대해 업무지시나 관리 역할을 수행하면서 상대적 기득권과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었다. 노동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더라도 문화적·정서적으로 그러했다. 특히 검수업무 담당자들은 하청노동자들의 작업 결과에서 하자를 찾아내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업무였고, 페널티를 많이 부과할수록 좋은 업무평가를 받았다. 여기서 '페널티'란 원청이 하청에 지급하는 수수료 삭감을 의미했고, 이는 고스란히 하청 노동자의 임금 삭감으로 이어졌다. 그러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의 검수 담당 노동자들에 대한 적개심이 컸고, 비정규직 조직화를 시작하자고 했을 때 정규직 검수 담당 조합원들은 매우 당혹스러워했다.

노동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분업이 노동의 특성과 노동조건에 따라 노동자 간의 위계나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는 다반사다. 노동조합 내에서도 직종 간 갈등 중 상당 부분은 여기서 비롯된다. 정규직이 비정규직 조직화와 연대에 나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각 지역별로 정규직-비정규직 간담회를 공들여 추진했다. 지역별로 원하청 노동자가 만나는 간담회를 각각 두세 번씩 열었다. 때로는 노조가 꾸준히 교류하면서 비정규직 조직화 현황을 공유해 왔던 지역단체도 함께 했다.

첫 간담회는 무엇이든 솔직하고 편안하게 이야기하되, 아무리 화가 나도 간담회를 한두 번 더 하자는 약속을 하고 시작했다. 서로를 향한 불만과 갈등적 관계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

---

\*\* 필자는 희망연대노조 설립 초기부터 2016년 초까지 희망연대노조에서 활동했다. 따라서 이 부분에는 당시의 경험이 다소 주관적인 평가와 함께 포함되었다.

스를 성토하는 자리였다.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그 다음에는 여전히 오가는 성토와 고성 속에서 간혹 ‘그래, 당신이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 ‘왜 우리끼리 이렇게 싸워야 해?’ 등의 이야기가 나왔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회사의 평가시스템과 수수료 지급 방식에 문제가 있다, 검수 업무가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거라면 그 후속 작업은 페널티 부과가 아니라 작업 시정 요청이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전액지급원칙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기 노동이 무엇에 기여해야 하는지, 노동자들 간의 위계와 갈등은 노동과정과 어떻게 연관되어있는지, 거기에 자본은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 어떻게 관계가 재정립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노동의 내용과 노무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토론하고 합의해 가는 과정이었다. 그 합의사항은 이후 교섭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통된 요구로 이어졌다. 만약 조합원들 스스로의 합의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방침으로 이런 내용이 결정되었다면, 그만큼 탄탄한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는 불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밖에도 자기 노동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논의를 비교적 활발하게 꾸준히 했다. 지역채널을 운영하는 케이블방송사로서 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성, 서비스의 안정성·지속성이 강조되었다. 지역별로 방송권역이 구분되어있는 케이블TV산업의 제도적 특성과 동 단위로 담당구역을 나누어 가가호호 방문하는 설치·AS 업무 방식을 근거로 스스로를 ‘동네 노동자’로 규정했다.

자본의 입장에서는 이 ‘동네 노동자’가 지역 특성과 가가호호 사정을 잘 아는, 그래서 케이블 TV 설치하러 간 집에 정수기나 건강보조기구 영업도 하면 좋은 인력들이다. 하지만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동네의 크고 작은 일들을 보도하고 동네의 어려운 이웃의 사정을 알려 도움을 청하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이다. 각 동네의 특성을 파악해 저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아동·청소년 심리정서지원, 지역아동센터 간식 배달, 이주민-정주민 또는 장애인-비장애인의 교류모임 구성, 지역사회단체들의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공동의 활동을 모도하는 일 등을 하기 좋은 조건이다. 그런 일들은 결국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연대의 감수성을 높이고 딜라이브라는 회사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는 것이었다.

조합원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만나면 당연히 어떤 운동이 필요한지를 생각하게 된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주거권운동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운영과 사업 방향에 대한 여러 의견과 논쟁이 있어왔고, 여느 조직과 마찬가지로 크고 작은 문제들은 계속 있겠지만, 적어도 사회연대위원회를 전국적-지역별로 구성하고 꾸준히 논의와 실천을 이어갈 수 있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시도와 고민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2021년 임기를 시작한 집행부가 ‘사업장 담벼락을 넘어 지역사회’, ‘노동자의 삶의 문제에 응답하는 노동조합’, ‘지역사회운동노조의 센터로서 지역본부’ 등의 기치를 내걸었다. 기존 노조운동에서 일반적으로 다뤄지지 않았거나 머리로만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몸은 그 쪽으로 향하지 못했던 과제였다. 노조활동가들 눈에는 낯설고 그 외의 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는 반가운 사업들이 추진되기도 했다.

대부분은 아직 노동조합 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더라도 주체를 발굴하며 역량과 경험이 있는 사회운동조직들과 결합하는 수준이다. 앞으로 몇 년은 더 해나가야 거스르기 어려운 노동조합의 운동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중 어떤 것은 의미와 성과를 확인해왔고, 어떤 것은 방향 선회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서는 몇 가지만 다뤄보기로 하자.

### 노동자의 주거권운동, ‘노동조합다운’ 주거권운동?

하나는 앞서 언급한 주거문제에 관한 것이다. 2021년은 부동산 기반 부채와 경제버블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청년 노동자들이 영끌과 갭투자로 휩쓸려들어갔다. LH 간부들의 비리가 대대적으로 터져나왔고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건물주들의 반발이 그치지 않았다.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 노숙인, 쪽방주민, 청년 등의 안전한 주거 문제는 곧 생명권과 직결되는 상황이었다. 그 와중에 저임금·불안정·청년 노동자들은 대부분 세입자이고 주거불안정에 시달리는 집단이다. 한국사회 만약의 근원이 되다시피 한 부동산/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노동조합이 주거권운동에 나서고 노동자이자 세입자로서 조직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주거권운동단체들과 만났고 서울지역 노동자 주거실태조사를 해서 증언대회와 함께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선거에서 서울지역 주거권 정책과제를 함께 논의해 발표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해마다 하는 ‘차별없는서울대행진’ 프로그램에 ‘주거권의 날’을 포함해 동자동 쪽방촌을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용산참사현장 등을 방문하거나 주거권과 노동권을 상징하는 곳들을 엮어서 ‘서울시티투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주거운동단체들이 꾸준히 함께 해왔던 세계주거의날, 빈곤철폐의날, 홈리스추모제 등에 결합했다. 재작년 8월 폭우로 인한 반지하가구 참사 희생자 추모행동에 결합했다. 정치사회공공성위원회, 지역지부, 가능한 노동조합들을 대상으로 주거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주거권학교라는 기획교육을 실시했다. 무엇보다 주거권운동을 계속해나갈 노동자들을 발굴하고 규합하기 위해 ‘서울지역 노동자 주거권 실천단’을 구성했다. 이제 민주노총 차원에서 중앙-전국적인 사업으로 주거권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대의원대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업들을 결정해 집행했고, 6개 권역의 지역지부와 희망연대본부 등 사회연대에 조금 더 적극적인 노동조합들이 참여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 이 모든 과정에 주거권운동단체들이 결합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이 단체들의 지원을 받거나 그 단체들의 사업에 결합했다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한 표현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조합답게' 주거권운동을 해나가는 방식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려운 과제다. 물론 노동자들이 사회운동으로서 주거권운동에 결합하며 참여의 경험을 쌓아가는 것도 그 자체로 중요하다. '임금소득으로 주택을 마련하고 그것을 자산으로 활용해 노후를 준비하는' 노동자의 삶에 대해 성찰하고 그것을 강제하는 사회구조를 함께 바꿔나가기를 바라고 때문이다. 하지만 개별 기업단위 교섭 구조에서 단체교섭 요구로 주택과 관련해 어떤 것을 제기해도 기업복지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이 전 조직적인 논의로 방침을 정해 '모든 사업장에서\* 영업이익의 1% 이상 노동자 사회주택 건립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단체교섭에서 쟁취하자고 한다면 좋을까?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까? 어쨌든, 30~40년 전 노동운동이 대응했던 것과는 다른 길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 노동의 재발견은 노동현장 밖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는 '생활문화연대사업' 또는 '나눔연대사업'이 꽤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예산 규모도 크고 별도의 위원회 조직을 꾸리고 있으며 사단법인 희망씨, 우분투재단 등이 함께 집행력을 구성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사업은 자립준비청소년 지원사업\*\*과 서울지역 노동자 김장나눔사업, 그리고 산별노조와 단위사업장 노조에 나눔연대사업과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마다 4월 경에 나눔연대사업 사례발표회를 하고 있다. 해가 거듭될수록 참여가 늘고 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는 단체교섭에서 노사 공동 사회공헌기금을 요구해 확보했다. 라이더 유니온은 배달노동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저소득층, 독거노인, 지역아동센터 등에 과일 배달을 하고 있다.

필자가 흥미롭게 접한 사례는 화학섬유식품노조 봉제인지회의 이야기다. 서울지역의 봉제노동자들은 주로 계절적 실업과 사회보험료 사각지대, 수십 년째 그대로인 공임(납품단가)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자,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정형 노동자 비중도 높다. 개별사업장 단위의 지불능력은 매우 낮고 그러다 보니 기업복지는 남의 일이다. 그 와중에 서울시의 패션산업 정책에 목소리를 내고 지역단위의 노동복지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또 노동자들 스스로가 서로를 돌보기 위해 공제회를 조직해 노동조합 활동과 병행하고 있다.

봉제인지회는 최근 몇 년 동안 네팔 산간지역의 학교 아이들이 입을 교복을 만들어 보내고 있

\* 초기기업단위 교섭구조를 확보해 산업이나 지역에서 하면 더 좋다.

\*\* 만 18세가 되어 아동청소년 보호시설에서 독립해 자립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금융, 노동, 주택 등에 관한 정보 제공과 교육, 멘토링, 캠프 등의 활동을 한다.

다. 희망연대노조와 사단법인희망씨가 오래 전부터 함께 해온 네팔 아이들 학교 보내기 운동에 자신들이 평생 해온 노동을 통해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봉제인지회장이 전한 조합원들의 소감은 대략 이런 취지였다. “평생 옷을 만들었지만 돈도 많이 못 벌었고 옷 만드는 일이 지겨웠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다. 내가 만든 옷을 누가 입는지 알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까 신이 나서 하루 종일 재봉틀을 돌렸다.”

우리나라 봉제산업은 사양화의 길로 달리고 있다고들 한다. 때때로 봉제·제화 노동자들 중에는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옷이나 신발의 양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인력 유입이 안 돼 소공인들의 숙련이 사장될 것을 우려하면서도, 이들의 처우를 개선할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노동이 왜 누구에게 여전히 필요한가를 네팔의 어린이들과 연결되자 비로소 재발견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에서 지역본부는 임단협 교섭을 직접 하는 조직이 아니다. 그렇다 보니 다양한 운동 의제를 다루면서도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 활동인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거나 실행하는 데 한계를 갖는다. 하지만 노동자가 어떤 노동을 해야 하는가, 노동하는 과정에서 다른 노동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그 노동의 결과물이 누구를 위해 쓰일 수 있는가를 논의하거나, 그 논의에 참여할 노동조합·사회운동조직·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에 좀 더 많은 역량을 투여할 수 있다. 노동조합과 그밖의 사회운동에서 모두 그런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 함께 상상해보자

서울교통공사 노동자가 전장연의 집회를 방해하라는 회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동조합이 나서서 모습을 상상해보자. 노동조합이 탄압받고 있을 때 장애인단체에서 회사측과 서울시의 노동탄압을 비판하고 노동권과 이동권이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연대하자고 제안한다면 어떨까? 아예 처음부터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노동을 거부할 권리를 교섭에서 요구해 반영된 단체협약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까?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는 노동을 거부할 권리’가 헌법 상의 노동기본권으로 인정되고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 반영되는 법체계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의 야간노동을 폐지하고 임금 하락 없이 주간노동으로 전환할 것을 노동자와 지역단체가 함께 요구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쓰레기정책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민주노총 소속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조합들이 일제히 단체교섭을 시작할 때 ‘수익의 1%를 사회주택기금으로 적립하자’는 요구와 ‘지역 저소득층 가구 친환경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노사 공동 사회공헌사업을 하자’는 요구를 제시하는 모습을. 서울시에 봉제·제화 노동자들이 저소득층과 복지단체에 의류·신발을 제공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적 서비스 체계를 만들자고 요구하는 것은 어떨까?

실제로 사업으로 추진하기에 타당한가를 따지기 이전에 상상해보는 것이다. 지금과는 다른 노동, 그것을 통한 다른 관계, 다른 사회구조와 시민의 권리를. 그러다 보면 그건 이해관계에 갇힌 노동조합만으로도 가능하지 않고,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을 떠나서도 가능하지 않다.

## 참고 자료

- 01 민주노총, 2018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산출결과 보고서, 2018.2
- 02 한국노총, 2021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2021.3.4.
- 03 송성수 편역, 우리에게 기술이란 무엇인가, 녹두, 1995
- 04 Mike Cooley, Drawing Up the Corporate Plan at Lucas Aerospace, Architect or Bee? : The Human/Technology Relationship, 1980
- 05 김은선·차재민(2016), 마을과 노동, 희망으로 엮다 : 희망연대노조 연대와 나눔의 기록, 매일노동뉴스
- 06 이원호, 한국사회 부동산문제와 주거의 권리(민주노총 서울본부 정치사회공공성위원회 교육자료), 2021.10.28.
- 07 김명수, “한국의 주거정치의 계층화 : 자원동원형 사회서비스 공급과 생존주의 주거전략의 탄생, 1970~2015”, 2018.
- 08 MBC 뉴스데스크, 1990.4.10., 전세금 문제로 일가족 비관 자살  
[https://imnews.imbc.com/replay/1990/nwdesk/article/1832790\\_30435.html](https://imnews.imbc.com/replay/1990/nwdesk/article/1832790_30435.html)
- 09 시사저널, 1990.4.29., “셋방가난 자식에게 물릴 수 없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503>
- 10 서울시 보도자료, 2014.9.2., “서울시, 2015년 생활임금제 도입 ...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 11 김경수, 2022.7.1., 금융기관만 좋은 현 퇴직연금, '대 전환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70110154667338>
- 12 전국노동조합협의회, 폭등하는 임대료 즉각 동결하라!(주거생활 안정화를 위한 대응 지침 공문), 1990.2.2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 삶의 시공간을 반영하는 노동의 전환, 체제의 전환

나영 |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 SHARE

share.srhr@gmail.com

##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체제전환을 위한 논의에서 현재의 체제를 무엇이라 부를 것인지 질문한다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망설임 없이 “자본주의 체제”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나를 포함한 일부의 사람들은 ‘자본주의 체제’라는 말이 현 체제의 모순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그 간 자본주의 체제를 규정하고 이에 맞서 온 투쟁과 요구에서도 무언가 중요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부차화되거나 탈각되어 왔다는 데에도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현 시기 자본주의의 양상은 계속해서 새로운 분석과 투쟁을 요구한다. 한때 투쟁하는 계급의 요구였던 것들은 자본이 위기에 대응해 오는 과정에서 모종의 변형을 거쳐 체제에 흡수되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과거에 체제의 속성으로서 적극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더욱 노골적이고 전면적인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기도 하다. 그중에서도 ‘재생산’과 ‘재생산노동’의 영역은 현재 자본주의의 위기 대응에서도, 체제 전환을 위한 논의에 있어서도 가장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영역이며 그만큼 이에 대한 논의와 투쟁 역시 유례없이 활발하고 강렬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재생산과 재생산노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범주는 어디까지인지,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나아가 생산과 재생산의 특정한 가치 위계 하에서 ‘생산’으로 인정해야 함에도 어떤 일들은 굳이 ‘재생산’이라고만 전제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들 속에서 재생산, 재생산노동은 생산, 생산노동과 별개의 영역으로 다뤄

지거나, 재생산이 곧 ‘돌봄’으로 한정되어 논의되기도 하고, 재생산노동을 협소하게 이해하는 경우 주로 불평등, 차별, 피해에 관한 문제로 이해되거나 개별적인 인권 문제의 차원으로만 취급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재생산은 생산과 별개의 영역이 아니며 생산과 재생산은 모든 일에 맞물려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은 그것에 선행하는 모든 생산과정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물질적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들 조건은 또한 동시에 개인들이 자신들의 생활을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맺는 일정한 사회적 관계의 담지자이기도 하다. 이들 관계와 마찬가지로 그들 조건도,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전제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생산과정의 결과물이자 소산이다. 그것들은 이 생산과정에 의해서 생산되고 재생산된다. (칼 마르크스, 『자본 III』)

재생산이 지속되지 않으면 생산은 멈춘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는 상품생산을 통한 이윤의 확대에 필요한 최적의 조건을 찾아 계속해서 생산과 재생산을 분할하고 가치를 위계화해 왔으며, 생산과 재생산의 영역, 이를 수행하는 주체의 역할을 분리해왔다.

페미니스트들은 오랫동안 자본주의 체제가 재생산과 재생산노동을 어떻게 체제 유지의 근간으로서 활용하고 관리·통제해 왔는지를 분석해왔다. 마리아 미즈는 여성에 대한 억압은 ‘가부장제’에 기인하고 사무실이나 공장에서 노동자로 착취당하는 것은 자본주의에 기인한다는 방식으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작동을 분리해서 설명하면 특정한 방식으로 노동에서의 성역할을 구분하고 그 가치를 분할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온 자본주의적 발전과정의 패러다임을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성과 여성, 남성과 자연 사이에서 착취적인 가부장적 생산양식이 구축되었고, 자본주의는 이를 가장 정교하고 보편화된 형태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이를 ‘자본주의적 가부장제’라고 부른다.

고정갑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자본주의에서의 상품 생산양식뿐만 아니라 성적 생산양식이 존재하며, 이와 함께 자연·동식물의 노동과 생산을 전유하는 시스템으로서의 성-종-계급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자본주의 가부장체제’라고 명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에 따라 상품 생산과 성적 생산, 자연의 생산을 함께 고려하는 ‘적녹보라적 생산’의 개념으로 노동을 재구성하고자 제안한다.

낸시 프레이저는 현재의 자본주의가 시장화된 영역을 작동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비시장화 된 영역-가족, 공동체, 생활 터전, 생태계-의 피와 살을 빨아먹고 있는 체제라는 의미에서 이를 ‘식인 자본주의 Cannibal Capitalism’라고 부른다. 그리고 오늘날 자본주의에 관한 이해를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사회적 재생산, 지구 생태계, 정치 권력, 인종적 피억압자로부터의 수탈이라는 네 가지의 중요한 배경 조건을 과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사회적 재생산’이란 상품생산의 필수 배경 조건이 되는 것으로, “인간 존재와 사회적 유대를 생산하고 지탱하는 상호작용, 필수재

공급, 돌봄 제공의 형태들을 뜻한다.” 자본주의는 사회적 재생산과 상품생산을 분리하고 사회적 재생산을 젠더화 된 영역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사회적 재생산과 재생산노동을 유평시키고 무급 또는 저임금으로 착취한다. 또한 자본주의는 자연을 ‘원자재’를 무한정 무상 공급하는 자원으로, 경제는 인간에 의해 생산되는 가치의 영역으로 분할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무한한 전용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만들었다. 낸시 프레이저는 현재의 자본주의는 자연을 경제의 영역에 보다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면서 자연 자체의 상품화, 자본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심지어 환경주의마저도 시장화하여 ‘탄소 배출권’과 같은 ‘환경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등 지속 불가능한 삶의 형태를 바꾸는 대신 자연적 조건을 자본주의 위기 대응의 교차점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은 논의들은 모두 흔히 ‘생산’과 ‘노동’의 영역으로 전제되는 상품생산 노동, 그중에서도 임금노동은 체제의 일부일 뿐이며 사실상 이 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근간은 자연의 모든 존재와 비인간 동물의 생산과 재생산, 임금노동보다 훨씬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비임금노동, 자본주의의 효율을 위해 끊임없이 비가치화 해온 사회적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지금의 체제는 바로 이 영역을 전면적으로 시장화, 금융화의 대상으로 전환하면서, 동시에 그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그 위기를 다시금 자본의 이익으로 전환하기 위해 끊임없이 삶의 자원을 고갈시키는 악순환의 대응책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재생산을 자본의 것으로 전유하고, 수탈하고, 끝내 지구상 수많은 존재들의 삶으로부터 공동화(空洞化)하는 과정을 지속시키면서 그들이 강탈한 자리와 그 비용을 부채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시 전가하며 채워가고 있다.

2012년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Occupy Wall Street)의 실무그룹인 부채 파업(Strike Debt)은 학생들의 빚을 공동으로 싸게 사서 갚고 탕감시키는 ‘롤링 주빌리(Rolling Jubilee)’라는 프로젝트를 전개했는데 이들의 파업 매뉴얼 리플렛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

세계의 금융 기관에 대해 우리가 말할 것은 단 하나이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빚진 것이 없다. 우리는 우리의 친구, 가족, 동료들에게,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지역사회와 인류, 자연에 모든 것을 빚지고 있다. 우리가 사기성 서브프라임 모기지 투기꾼에게서 받는 모든 달러와 추심 대행사로부터 보류하는 모든 달러는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지역사회에 돌려줄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삶과 자유의 아주 작은 조각일 뿐이다. 이는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위한 투쟁, 압류된 주택으로부터의 퇴거 방지, 더 높은 임금에 대한 요구, 상호지원 실천에 대한 요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부채 저항 행위이다. Strike Debt, CHAPTER ONE Credit Scores and Consumer Reporting Agencies: Surveillance and the Vicious Cycle of Debt, The Debt Resisters' Operations Manual, 2014.5.

체제전환을 위한 노동운동의 과제는 더 이상 임금노동의 영역에만 머물 수 없으며, 노동운동과 다른 사회운동이 각자의 운동 영역과 그 범주를 유지한 채 연대하는 방식으로는 새로운 운동의 방



향과 주체의 조직을 모색하기 어렵다. 임금노동과 상품생산의 영역을 넘어 이 체제의 작동 방식과 연관된 모든 생산과 재생산의 패러다임을 연결하고 이를 통해 삶의 자원과 시공간에 대한 요구를 새로운 노동운동의 요구로서 전면적으로 함께 재조직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 삶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분할하는 악순환 속에서의 노동, 그리고 부채

산업구조에 맞추어 임금노동과 사회적 재생산노동을 관리·통제하는 다양한 법·정책과 국가와 자본의 전략은 한국 사회에서도 매 시기마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가령 산업화와 함께 진행된 70년대의 “뒤편 놓고 낡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적게 낡아 잘 기르자” 같은 가족계획 캠페인은 가족계획을 통해 적은 수의 자녀를 낳고 자식의 성공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남성 가부장과 남편의 임금소득으로 가족 경제를 알뜰하게 꾸리는 여성 가정주부로 구성된, ‘근대화된 가족’과 그에 따른 성역할 모델을 만들었다. 자녀를 학벌 좋은 노동자로 만드는 일이 부를 약속해주는 일일 때, 사람들은 기회비용이 큰 아들을 중심으로 대학 공부를 시키고 딸들은 이른 나이에 취직을 시켜 가족 내 남성 자녀를 위한 비용을 보태게 한 후 적당한 때에 결혼하게 하는 것이 가족 전체가 이 새로운 시민 모델에 빠르게 진입하는 길이라고 믿었다. 이 시기에 한국 경제에 큰 수입을 가져다준 것은 남성 임금노동자의 상품생산 노동만이 아니라, 이러한 가족 모델에 맞춰지는 과정에서 일찍 취업 현장으로 보내진 여성 임금노동자들의 상품생산 노동과, 원가정을 포함하여 이후 자신이 혼인하여 이룬 가정, 산업 현장 내에서 두루 돌봄 노동과 성적 노동, 출산 노동을 했던 여성들의 노동의 결과였다. 그러므로 당시 여성 임금노동자의 파업 투쟁은 임금노동자로서 기업과 국가에 맞서는 투쟁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을 동시에 착취하며 기대어 있는 남성 가부장 중심의 가족 경제에도 타격을 입히는 투쟁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이 새로운 가족 모델을 통한 생산-재생산의 라인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그 기준에서 어긋난 이들은 사회에서 배제, 추방당하거나 시설로 보내졌다. 국가는 가부장제 가족구조의 관행을 유지시키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산업구조에 따른 가족모델과 성역할 모델을 부여하고, 젠더 위계와 섹슈얼리티의 통제를 통해 여성노동자들의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을 활용했다. 그리고 이 모델에 맞지 않는 ‘비생산적’ 인구 출산의 통제와 관리, 비규범적 섹슈얼리티에 대한 억압과 단속, 빈곤과 가족 부양 등의 이유로 성노동에 유입되는 여성들에 대한 단속 및 관리, 가족계획 프로젝트 등을 통해 생산 시스템에 적합한 노동력의 재생산을 관리하고, 이와 동시에 각종 보호소, 훈련원, 복지원 등의 시설화를 통해 또다시 규율과 훈육을 동원하여 무상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경제 시스템을 유지했다. 이 시기 국제적 인구통제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산아제한 정책에 유입된

막대한 해외 원조, 해외 입양과 성산업을 통한 외화 수입은 국가 경제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수입원이었으나 이는 철저히 비가시화 되었다.

IMF 시기를 거쳐 2000년대를 지나면서는 대규모의 구조조정과 함께 여성 비정규·불안정노동 일자리의 확대, 일·가정 양립 정책이 본격화 되었으며, 결혼이주와 다문화 정책이 제도화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성부의 설립과 저출산 정책이 맞물려 왔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IMF 시기의 대대적인 산업재편과 구조조정은 여성 임금노동자의 유연성을 증대시키는 고용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이는 기혼 여성과 비혼 여성의 활용방식을 달리함으로써 (기혼여성은 일·가정 양립과 퍼플잡을 통해, 비혼 여성은 신자유주의 자기개발 경쟁으로 고스펙을 유도하고 고용시장에서는 비정규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통해) 효과적으로 성취될 수 있었다.

지금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저임금의 이주 가사노동자의 도입, 여성가족부 폐지, 각종 수당이나 주거 지원 등을 매개로 시행되는 출산 유도 정책, 여성 및 이주 관련 예산 삭감과 관련 지원 기관 통폐합, 공공 돌봄서비스 영역의 예산 삭감과 민간 위탁화가 의도하는 바, 그리고 이 일들이 노동과 삶의 여건 전반에 미치게 될 영향은 단지 여성 노동자들의 지위를 하락시키는 문제에 머물지 않는다.

이와 맞물려 중요하게 파악해야 할 문제는 지금은 상품생산을 통한 이윤보다 금융자본과 생물 자원 특허, 각종 지식 재산을 통한 자본의 창출이 더 큰 이윤을 가져다주는 세계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노동의 시공간 또한 과거와는 크게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생활공간과 분리된 현장으로서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일정 시간 동안 특정한 공간에 모여 일을 하는 임금노동 현장이 노동운동의 주된 현장이었다면, 상품생산·임금노동의 가치가 하락한 지금은 노동의 시간과 공간이 일상 속에 파고들어 있고, 한 개인이 임금노동에 머무는 기간 또한 장기적이거나 고정되어 있지 않다. 노동의 시공간과 소득구조가 달라지면서 가부장제 가족 단위 또한 이전처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다. ‘밖에 나가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일정 금액의 임금 소득을 가져다주는 아با와, ‘집 안에서’ 그 소득을 가지고 가정 살림을 꾸리는 엄마, 일정 연령이 될 때까지 부모의 가계 아래 머물다가 독립하여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자녀로 구성된 소위 ‘중산층 4인 가족’ 모델을 유지한다는 것조차 지금은 쉽지 않은 미션이다.

또한 자산가치가 근로소득의 가치를 크게 상회하게 되면서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021년 7월에 발표한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집값과 주식 등의 자산 가치는 크게 증가한 반면 소득 증가율은 자산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2020년 기준으로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순자산과 부동산 자산 규모는 근로소득을 전혀 쓰지 않고 약 7~10년간 모아야 하는 수준이고, 수도권에서 집을 마련하려면 8년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야 하는 수준에 달했다. 이는 많은 이들의 삶이 임금소득이 아닌 부채로 충당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저소득층은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고용 환경에 놓이고, 불안정

한 고용환경과 근로소득의 가치하락이 지속될수록 부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청년층과 중장년층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노동자가 영혼까지 끌어모아 자산 투자에 운명을 걸거나, 주거와 교육을 비롯하여 삶의 대부분의 여건을 부채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다. 지금 국가가 '저출산 위기'라고 부르는 상황의 실체가 여기에 있다. 더 이상 임금노동으로는 삶을 꾸려갈 수 없고, 가족이란 곧 더 많은 부채를 의미하며, 자신의 삶을 재생산해 내기에도 버거운 세상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이 세계로 초대하는 일 자체가 두려운 일이 되어버린 현실이 곧 누군가는 '저출산 위기'라고 부르는 실제 '삶의 위기'의 현실인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계속해서 이를 더 많은 재생산노동의 착취와 재생산 영역의 자본화, 시장화를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방식은 1) 재생산의 위기를 더 취약한 외부 자원을 통해 해결하려 하거나 2) 기업에 각종 형태의 장려금,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또는 기업의 새로운 고용 정책이나 수당, 보상 체계 등을 통해 기업이 해결하게 하는 것 3) 삶의 기본자원을 부채로 충당하게 하는 방식을 통해 이 위기를 개인의 능력과 책임의 영역으로 전가하는 것이다.

### 1) 재생산의 위기를 더 취약한 외부 자원을 통해 해결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저임금의 이주 노동자를 통해 재생산노동을 대체하게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노골적인 결혼이주 정책에 이어 이제 최저임금 수준으로 가사노동과 양육·돌봄 노동을 모두 수행할 이주 가사노동자를 도입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 일을 추진하는 명분으로 등장한 것은 다름아닌 '저출산 대책'이다. 이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사례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주 가사노동자가 저임금의 착취적인 노동 환경을 감당하게 만들고, 이주 과정에서의 빚을 떠안게 만



든다는 점\*에서도 큰 문제가 있지만 더 나아가 재생산노동의 글로벌 이주화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여성 노동자의 실질임금과 가사, 돌봄, 육아에 관련된 노동의 가치를 저임금으로 치환하여 계속해서 하락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 이러한 정책 도입을 명분으로 전체 노동자가 불안정한 노동과 임금 수준으로 인해 겪고 있는 문제를 다시 개인의 가사노동자 고용을 통한 비용 전가로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다.

“최저임금 적용을 없애면 월 100만 원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의 가사 해방이 저출산 문제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 본다”

지난해 3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이주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한 말이다. 실제 가사 이주노동자의 도입을 통한 출산율의 상승은 전혀 기대할 바가 없는 반면\*\* 사실상 '저출산 대책'을 명분으로 이들이 의도하고 있는 효과는 가사, 육아 노동 비용을 이주 가사노동자 고용을 통해 적당히 충당하면서 맞벌이 부부의 노동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국가는 공적 자원을 투여하는 대신 저임금으로 돌봄 노동의 비용을 해결함으로써 임금소득의 하락과 공적 자원의 축소, 부채 부담 등으로 인해 불안정한 저임금 구조에 매달릴 수밖에

\* 홍콩의 가사노동자이자 전 세계 30여개국 조직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이민자연합(IMA, International Migrants Alliance) 의장인 에니 레스타리(Eni Lestari)는 2000년 인도네시아에서 홍콩으로 이주하여 가사노동자로 취업했을 당시 1,800홍콩달러밖에 받지 못했고, 2년 동안 하루도 쉴 수 없었으며, 고용주의 허락 없이는 외출을 할 수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고용주의 집을 떠날 수 없는 법적 조건 때문에 많은 가사노동자들이 학대와 착취에 매우 취약한 조건에 있다. 더구나 대부분의 고용주 집에는 가사노동자가 따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개인 공간이 없어서 많은 가사노동자들이 바닥, 캐비닛, 소파에서 잠을 잔다. 이들의 최저임금은 월 4,630홍콩달러로 홍콩 노동자 최저임금의 절반에 불과하다. 홍콩 이주노동자선교단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가사노동자 5명 중 2명은 쉴 수 있는 개인실이 없다고 보고했다. 자세한 내용과 사진은 아래 보고서에서 볼 수 있다. MISSION FOR MIGRANT WORKERS, 『BETWEEN A TOILET BOWL AND A WALL』, 2021.6.

싱가포르의 경우, 싱가포르 법에 따라 이주 가사노동자는 고용주가 선택한 알선업체를 통해 고용이 되기 때문에 알선업체가 취업을 원하는 이주 가사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많은 이주 가사노동자들이 고용 전 알선업체를 통한 훈련 기간과 취업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폭력을 경험한다. 이 단계에서 알선업체들은 노동자들에게 복종을 가르치고, 항공료를 포함한 초기비용과 소개비 등을 취업 후 수입에서 갚아나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착취나 학대에 취약하게 만든다. 이런 상황들로 인해 싱가포르 노동부는 2019년부터 고용주가 급여 지급을 보류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여전히 알선업체에 들인 사전 고용 비용을 이유로 6개월씩 급여 지급을 보류하는 일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싱가포르 이주 가사노동자의 3분의 1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취업 과정에서의 빚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법이나 계약 조건 등을 잘 알지 못해 저임금과 빚에 시달리다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더 빌리게 되는 노동자들도 많다. 최서리, 『싱가포르 정부의 이주가사노동자 도입과 관리방식』, 『IOM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No. 2017-04. 3-4쪽 참고.

\*\* 홍콩의 출산율은 2010년을 기점으로 점점 더 하락하여 2021년 인구 1,000명당 10.9명으로 전년 대비 -0.520%가 하락했고, 2022년과 2023년에는 모두 전년 대비 -0.530%가 하락했다. 싱가포르 역시 2021년 인구 1,000명당 8.5명으로 2020년에 비해 -0.960% 하락했고, 2022년에는 전년 대비 -0.980%, 2023년에는 0.99%가 하락했다. macrotrends <https://www.macrotrends.net/countries/SGP/singapore/birth-rate>

없는 노동의 구조를 글로벌 차원에서 계속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 2) 기업에 각종 형태의 장려금,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 또는 기업의 새로운 고용 정책이나 수당, 보상 체계 등을 통해 기업이 해결하게 하기

기업에 장애인고용장려금이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대체인력 지원금 같은 제공하는 것은 일면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위해 어느 정도의 공적 자금을 간접적으로 투여한다는 점에서 좋은 정책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노동을 그 자체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기업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을 '장려'하는 것은 어떤 효과를 가지는가.

돈 떼먹은 것은 그렇다 치고, 저희들은 그랬어요. 인격적 대우라도 해줘라. 직접 들은 건 아닌데 모 직원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장애인 직원들끼리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싸우고 다 나가버렸는데, 사장이 사람 구하기 힘들고 뭣하고 하니깐 속된 말로 "병신들 데려다 쓰니까 그런다" 그런 말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를 돈으로만 보는거잖아요. -박정숙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법제도가 장애인의 노동권으로 확립되지 않고, 사업주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도입될 때 언제 어디서나 이러한 양상이 드러날 수 있다. 노동자들은 어떻게 공기업에서도 이럴 수가 있는지 분통을 터트렸지만 공기업 또한 이유를 내는 방식으로 실적이 계산되는 국가 기조 아래에서 노동자의 권리는 쉽게 파괴되고 있다. 장애인의 노동권은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큰 편차가 있다. 정창조는 장애인 운동가들이 80년대 생존권 요구를 하면서 장애인의 의무 고용 제도를 쟁취해 냈으나 임금노동 시장에 편입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고려하지 못했던 한계를 지적한다. 그는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기존 임금노동이 요구해 온 생산성 기준이나 규율이 적용되지 않는 일자리에 대한 상상을 실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타리

결국 이러한 방식은 자본이 원하는 생산성을 국가의 보조를 통해 맞춰주기 위해 기업에게 저임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와 비용을 마련해 주는 것이며, 그 대상이 되는 이들은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열악한 고용환경과 노동조건을 감수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에 더해, 직장에서는 동료 노동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타인에게 불편함을 감수하게 만드는 '특혜'를 받는 존재로 여겨지게 만든다.

이는 장애인 고용뿐 아니라 월경, 출산, 육아와 관련된 유급휴가 등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국가와 기업이 여성 노동자의 월경, 피임, 임신, 출산, 양육에 관한 문제들을 노동자에게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노동권이자 건강권, 재생산권의 문제로 인정하지 않고 그저 국가의 일·가정 양

\*\*\* 타리, 박정숙 씨 구술기록, 「고분고분한 복지카드가 될 수는 없죠: 장애를 가진 임금노동자로서 투쟁으로 그리는 미래」, 『캐노피에 매달린 말들』, 한겨레출판, 2023. 203쪽, 218-219쪽.

립정책이나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인센티브 수준에 맞추어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른 ‘개인적 사정’을 ‘뱉주는 문제’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을 때, 이러한 상황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런 종류의 장려금과 대체인력 지원금이 맞물리면서 더 많은 단기 계약직 일자리와 열악한 노동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다. 자본에게는 임금 노동자를 좀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국가로서는 재생산 비용을 대체할 수 있는 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글로벌 대기업의 경우 또다른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여성노동자들에게 임신출산의 시간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상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기업들은 고향, 고임금 여성 노동자들에게 1만 달러 수준의 난자 동결 비용을 지급한다. 한국의 기업들은 출산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출산을 유예하게 하든 출산을 장려하든 이는 여성인력을 유지하는 쪽이 유리할 때 내리는 선택이다.

반면에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국가의 각종 장려금과 지원금을 통해 일부 비용을 해소하거나 그나마도 하지 않음으로서 권리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방식으로 고용/노동환경이 유지된다.

### 3) 삶의 기본자원을 부채로 충당하게 하는 방식

마지막으로, 사회적 재생산 비용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또 하나의 방식은 부채를 양산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주거를 위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소상공인은 희망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출을 잘 받고, 갚는 것이 곧 능력이고 신용 수준으로 여겨지는 세상, 생활비는 거의 대부분이 대출과 카드 할부로 충당되는 세상이 된 지 오래다. 월급을 받자마자 줄줄이 돈이 빠져나가 “퍼가요~”가 웃픈 밈이 된 세상에서 임금을 받아도 대출금을 갚고 나면 잔고가 없어 또 대출로 살아가는 악순환으로 모두가 빚에 얽매어 살아가고 있다. 임금소득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대출금을 갚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굴레를 벗어나기가 어렵다 보니 부동산, 주식, 코인에 매달리는데 자본금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위해 또 대출을 받고 있다. 결국 대출의 늪에 빠져 도저히 상환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도 어디선가 더 고금리의 대출이 계속 손을 내민다. 삶에서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이 될수록 공적 지원체계보다 부채가 더 가까이에 있다.

이러한 부채경제는 ▶임금노동의 가치를 계속해서 하락시키고 ▶불안정 노동의 상태에 있거나 비임금 노동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 자기 소유의 자산이나 자원을 가지기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더욱 부채에 의존하게 만든다. 이로 인해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에 꼭 필요한 자원과 대부분의 비용을 부채에 의존하게 만들며 ▶이를 상환하는 능력을 개인의 가치와 능력으로, 상환하지 못하는 개인은 비윤리적이고 무능력한 존재로 만들어 수치심과 죄책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무력한 존재로 만들고 있다. 부채는 정치적 저항의 가능성을 무력화한다. 열악한 노동조건을 어쩔 수 없이 견디게 만든다. 폭력적인 가족 상황을 참게 만든다.

이웃의 문제보다 집값을 걱정하게 만들고, 이런 악순환을 계속해서 양산하는 정치적 부정의에 저항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전 사회적인 부채 부담의 상승은 사회 구성원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삶의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국가의 정치적 책임에 관한 문제이지만 부채가 삶을 장악한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개인의 능력이거나 윤리적 책임의 문제로만 전가되기 때문에 정치적 저항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돌봄 공공성과 돌봄 노동자의 노동 여건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는 중이다. 지난 해에는 보건복지부가 지자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예산 148억원을 전액 삭감했다가 국회 보건복지위에 의해 133억원이 겨우 복구된 바 있다. 서울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을 삭감하고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돌봄을 위한 시간과 자원, 관계망이 부족한 사람들을 역시 돌봄 비용 마련을 위한 생활고와 부채에 시달리게 만들 수 있다. 반면, ‘저출산 대책’을 명분으로 공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삶의 자원들은 출산 여부에 따른 조건부의 자원이 되고 그조차 부채의 형태로 지원되는 방식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이 신혼부부, 출산 중심의 주택공급이다. 대부분이 대출을 받아야 임대료를 마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출산을 해야 국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임대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주택공급의 중심이 되는 상황은 결혼을 할 자원이거나 여건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한 제도적 차별이고, 섹슈얼리티에 대한 심각한 통제이다. 심지어 최근 민주당은 거의 ‘자녀 담보 대출’ 수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결혼-출산-양육드림(dream)’이라는 공약을 내놓았다. 결혼 시 모든 신혼부부에게 소득이나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저출생 대책과 연계해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준다는 것이다. 한 자녀인 경우 무이자 전환, 두 자녀는 무이자+원금 50% 감면, 3자녀는 ‘무이자+원금 전액 감면’이 적용된다.

이제 노동운동은 노동을 무력하게 만들고, 우리의 섹슈얼리티와 재생산을 국가의 의도대로 통제하며, 삶의 재생산을 갈수록 부채에 의존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정책과 부채경제에 맞선 정치적 저항을 조직해야 한다.

## 연대를 넘어, 삶의 시공간을 반영하는 전환을 위한 몇 가지 제안

그간 국가와 자본은 산업 생산과 사회적 재생산을 동시에 전략적으로 변화시켜온 반면, 운동은 그렇게 대응해 오지 못했다. 노동운동은 사회적 재생산과 재생산노동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정부와 기업의 전략 변화가 임금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상당 부분 무뎠고, 사회적 재생산의 관리와 통제를 목적으로 정부와 기업이 시도하는 다양한 보상 체계에 관한 내용들이 임금노동 현장에 적용될 때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거나 제기할 역량을 다져오지 못했다. 한편 사회적 재생산에 대한 공격

자원으로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서비스, 돌봄서비스 영역의 경우 민간 위탁, 구조조정, 임금 삭감, 인력 감축, 노동 여건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때 노동조합의 요구로서 중요한 사회적 의제들이 함께 제기되기도 했지만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여러 사회운동의 관심은 그와 같은 현장에 미치지 못하거나, 연대의 방식 또한 이를 공동의 의제로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데에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이제는 공동의 대응전략과 의제를 만들어볼 것을 제안한다. 노동운동과 다른 사회운동의 연대라는 틀을 넘어, 임금노동과 비임금노동 모두의 생산과 재생산을 연결하고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삶의 시공간을 새롭게 조직할 수 있는 요구를 함께 만들어보자.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우리 삶의 통제 권력을 가져오기 위한 공동의 투쟁을 조직하고 사회적 힘을 모으는 과정의 경험을 만들어보자. 이를 위한 몇 개의 주제를 제안해 본다.

### 1) 성·재생산 권리, 재생산정의에 관한 의제와 요구를 함께 만들기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투쟁을 시작으로 만들어낸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은 소위 ‘태아산재법’이라고 불렸지만 사실 더 많은 쟁점과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점들을 지니고 있다.

왜 여성노동자가 임신 중인 상태에서 미친 유해 노동환경만이 자녀의 산재를 인정할 수 있는 노동환경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일까. 당연하게도 임신 중에 영향을 미친 유해 노동환경이라면 임신 전부터 노동자의 성건강과 재생산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왔을 것이다. 이는 여성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친 노동환경 뿐 아니라 남성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친 노동환경도 마찬가지다. 또한 난자와 정자,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작업장의 물리적 환경이나 유해 물질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정신적 스트레스 등 훨씬 더 광범위할 수 있으며, 임신출산 뿐만 아니라 월경, 피임, 임신중지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에 따른 건강지표도 장기적으로는 별개의 요인으로만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임신 중 유해 노동환경으로 인해 건강권이 침해된 여성노동자와 자녀에 대한 산재 인정을 넘어 모든 노동자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한 요구로 확장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동안 한국은 성·재생산 건강을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로서 보장하는 법·정책·제도와 인식이 거의 부재한 상태에 있었다. 그나마 모성보호, 난임지원, 유·사산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생리휴가 등이 있지만 이는 사실 국가의 인구정책 목표에 맞추기 위한 것이거나 여성노동자의 임신·출산·양육에 따른 노동력 관리 차원의 목적이 더 우선하여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관점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혼인이나 임신출산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성·재생산 건강



과 권리가 당연한 권리로서 인정되도록 해야 한다.\* 성·재생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노동 환경에 대한 조사, 노동시간과 노동환경의 문제들을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관한 의제와 요구로 연결하는 활동, 화장실이나 탈의실, 휴게실 등에 대한 문제제기, 혼인·임신·출산 중심의 차별적 수당 체계, 시스젠더·이성에 중심의 고용·노동 환경 등에 관한 활동을 함께 만들어볼 수 있을 것이다. 돌봄에 관한 지원 역시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가족관계 외에도 다양한 돌봄 관계를 더 폭넓게 인정하도록 요구하고, 가사노동과 돌봄노동 시간에 대한 보장이 모든 노동자의 임금노동 시간에서 보편적으로 반영되도록 요구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의제와 요구를 함께 만들어 단체협상의 요구에 반영하고, 기업과 정부, 지자체가 기업과 지역사회에서 이를 보장할 수 있는 공적 보장 체계를 만들도록 요구해보자.

## 2) '일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정치적 투쟁을 조직하기

파업 투쟁의 중요한 의미는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는 자본가의 요구에 전면적으로 저항하는 데에 있다. 파업이 노동자가 멈추면 기계도 멈추고 세상도 멈춘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투쟁이듯, 임금노동 현장의 밖에서도 그 사실이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임금노동의 현장 밖에서도 계속해서 수많은 사회적 노동과 재생산노동을 하고 있다. 심지어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수많은 경제 활동을 만들어낸다.

임금노동을 중심으로 생산 활동과 그에 관련된 경제적 가치를 환산하는 자본주의의 셈법을 이 세계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인식하도록 만들기 위해 국가와 자본은 ‘일하는 사람’의 기준을 계속해서 분류하고 누군가를 그 기준에서 탈락시켜 왔다. ‘집안일’의 영역에 우선적으로 배치된 여성들의 수많은 임신·출산/가사/돌봄 노동, 성적 대상이거나 국가의 자격 심사에 맞춰 일부만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뿐 결코 노동자로는 인정받을 수 없었던 성노동자들, 고용 상태와 실업 상태를 오가는 수많은 노동자들, 임금노동 현장에서 똑같이 일을 할 때조차도 결코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었던 청소년 노동자와 장애인 노동자들, 결혼이주로 한국에 와서 가사, 돌봄노동과 다양한 임금노동을 하고 있지만 다문화 가정의 아내나 엄마일 뿐 노동자로 여겨지지 않는 이주 여성들, 이주 노동을 위해 와서 살다가 산재를 당하거나 실업 상태가 된 후 한국에서 머물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거주 자격이나 노동할 자격을 얻지 못했지만 살아가기 위해 여러 일을 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난민들, 생애 과정에서 수많은 임금, 비임금 노동을 했으나 홈리스 상태에 놓인 많은 빈민들이 모두 이 사회에서는 ‘일하지 않는다’ 사람의 범주에 들어간다.

---

\*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는 이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만들어 제안했다.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 해설집』 참고. <https://srhr.kr/policy/?bmode=view&idx=6142616&t=board>

노동운동이 체제전환을 위한 운동으로 확장될 수 있으려면 이들이 자신의 삶의 조건을 요구로 삼아 제기하는 운동도 ‘노동운동’일 수 있어야 한다.

**실업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변화시키자.** 갈수록 더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과 실업 상태를 짧은 기간에, 불안정하게 오가고 있다. 실업 상태가 노동상태와 반대의 의미로 여겨질수록 실업은 개인의 무능력과 책임에 관한 문제로 전가되며, 삶의 재생산을 위한 공적 비용은 축소되고 이와 관련된 예산과 각종 공적 자원을 삭감하는 조치들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실업을 ‘노는 상태’이거나 단지 다음의 임금노동을 예비해야 하는 상태로 여기는 게 아니라, 임금노동 영역의 밖에서도 사회적 생산과 재생산을 지속하는 노동이 이어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삶의 조건을 이어나갈 수 있는 자원과 권리를 당연히 보장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사회적 관계를 바꾸는 노동 공간을 만들자.** 2001년 아르헨티나의 실업자 운동은 협동조합, 지역 공동주방, 의료센터, 학교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재생산 활동 등을 직접 만들어내면서 국가에 이러한 사회적 노동에 대한 임금과 비용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Lucí Cavallero-Verónica Gago, Translator’s Note, 『Feminist Reading of Debt』, PLUTO PRESS, 2021. xiii.) 기업 안에서만의 노동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자급과 상호 돌봄, 생태적 노동을 하는 활동이 사회적 노동으로서 인정되고 국가가 그 비용을 지급하도록 새로운 사회적 노동 공간을 만들어나가는 운동도 모색해볼 수 있다. 이는 사회적 기업 같은 모델이라기 보다는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와 같은 방식에 가깝다. 이에 대한 요구를 더 급진적으로 조직하고 이러한 시도들을 사회적으로 더 확대해보는 것은 어떨까.

**교섭/쟁의/파업/단체협상을 할 수 있는 노동자 조직을 확대하자.** 그간 알바노조, 청소년유니온, 노년유니온 등의 활동이 있었고, 2022년에는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가 출범하기도 했지만 ‘노동으로 여겨지지 않는’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더 많은 노동자 조직, 노동조합 조직이 가능하도록 함께 지원하고 조직화의 토양을 만들어나가는 활동이 필요하다.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단속과 범죄화, 이주 노동의 분할 관리 방식에 함께 대응하자.** 사회적 소수자 집단과 이주 관리에 동원되는 단속과 범죄화는 노동 통제에 유용한 방식으로 활용된다. 국가는 자본에 대해서는 수많은 규제 완화 조치들을 취하고, 법적 규제 장치들마저 무력화시키면서 노동자에게는 다양한 방식으로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나누고 이를 잣대로 끊임없이 노동자로서의 지위와 사회적 권리를 분할하고 있다. 국가가 불법으로 규정하는 행위를 통해 투쟁하는 것은 노동운동의 중요한 전략이자 빼앗길 수 없는 가치이기도 하다. 이제는 그 투쟁의 의미가 ‘불법’으로 취

급되는 우리 사회의 많은 노동자들에게도 더 크게 이어져야 한다. 가령 성노동자들의 경우 오래 전부터 성노동자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한 시도를 해왔지만 노동운동에서조차 이를 지원하지 못해 노동조합 조직이 어려움에 부딪혀 왔다. 성노동자의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지원한다는 것은 성노동자들이 불법화된 존재이거나 구제받아야 할 존재로서의 위치를 넘어, 성산업을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서 활용하고 기업이 그 경계를 활용할 수 있게 해온 노동구조의 부조리함과, 가부장적 경제 구조에서 여성들이 처한 노동과 빈곤의 문제, 성산업을의 수많은 문제에 직접 목소리를 내고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함께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난민에 대한 단속과 추방에 대응하여 함께 싸우는 것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어서는 노동의 자리를 만들고 국경을 넘어선 정치적 연대의 힘을 키우는 투쟁이기도 하다. 특히 이 발제에서는 한국의 이주노동자 관리 정책은 매우 적나라한 재생산 관리 정책이기도 하다는 점을 환기하고 싶다. 한국 정부는 노동할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비자 체계를 국적에 따라, 업종에 따라 매우 세분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에서 정주하며 본국의 가족을 초대하거나 한국에서 다른 파트너와 관계를 맺고, 가족을 이루고, 임신출산을 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조건들이 크게 달라진다.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의 경우 정주를 막기 위해 한국에서의 가족 구성과 임신출산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많은 한국에서 태어난 많은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들이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거나 브로커를 통해 부모의 본국으로 보내지고 있다. 반면에 결혼이주를 통해 온 이주 여성들은 한국인 남성과의 혼인 생활뿐만 아니라 출산 여부가 귀화 자격 심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모든 정책이 출산 양육 중심의 지원 정책으로만 맞춰져 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어 이주노동자의 노동 여건과 거주 지위의 분할, 재생산노동의 이용과 통제, 이들에게 가해지는 단속과 추방에 대응하는 투쟁이 수많은 노동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노동자의 공동의 요구와 투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고민되고 깊이 있게 확장될 필요가 있다.

### **3) 부채경제에 대한 정치적 요구와 투쟁을 조직하자**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모든 자원을 부채에 의존하게 만드는 상황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한 투쟁을 조직할 것을 제안한다.

그 한 축은 삶에 있어 필수적으로 중요한 자원들에 대해 조건 없는 공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일이다. 출산을 조건부 전제로 하여 주거 임대 자격이나 임대료 및 대출 상환 조건이 좌우되는 주거 정책에 대한 반대를 조직하는 일에서부터, 사회서비스 민영화를 막고 돌봄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공적 자원을 통해 양질의 노동조건으로 만드는 일도 이와 관련된 투쟁이 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돌봄 관계가 인정되고, 지역사회에서 돌봄의 관계망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제도와 공공의 인프라, 공적 자원을 요구하자. 이러한 일들을 조직하는 것은 삶의 자원이 부족하고 어디에서도 지원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을수록 더욱 부채밖에 기댈 수 있는 자원이 없는 상태로 내몰리게 되는 상황을 막아내기 위해 중요하다.

또 다른 한 축은 부채경제에 맞서는 정치적 투쟁을 조직하는 일이다. 앞서 예를 들었던 ‘부채 파업’과 같은 운동, 학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를 탕감하라는 운동, 부채로 인해 홈리스 상태에 놓인 이들에 대한 부채 탕감 운동, 긴축정책에 저항하는 운동을 모색해볼 수 있다. 2020년 아르헨티나, 칠레, 스페인 등 여러 국가에서 열린 페미니스트 파업은 부채에 맞서는 투쟁을 중요한 의제와 요구로 내걸었다. 이 투쟁은 다양한 임금노동과 비임금 노동, 재생산노동, 성노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 비혼 여성,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여성, 레즈비언, 중노년의 여성,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인 사람들이 노동에서의 젠더위계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통제, 공적 자원의 축소가 부채경제로 이어지는 상황이 자신에게 어떠한 폭력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나누고 이를 투쟁의 의제로 연결하는 과정을 통해 큰 힘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요구들은 모두 단기간에 조직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노동운동과 여러 영역의 전체 사회운동 간에 긴밀하고 장기적인 공동의 의제화와 조직화, 연대의 전략을 구축해 나가야 하는 일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체제전환을 위해 모인만큼 이러한 시도들을 시작해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치적 무력감과 저항의 의제에 대한 갇힌 생각의 틀을 깨고 새로운 투쟁의 현장들을 만들어보자. 아울러 이것이 제도권 정치를 넘어 체제전환의 길을 함께 만들어야 할 진보정치의 새로운 장으로도 연결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 참고 자료

(단행본 및 발간자료)

- 01 Lucí Cavallero-Verónica Gago, 『Feminist Reading of Debt』, PLUTO PRESS, 2021.
- 02 Strike Debt, 『The Debt Resisters' Operations Manual』, 2014.
- 03 MISSION FOR MIGRANT WORKERS, 『BETWEEN A TOILET BOWL AND A WALL』, 2021.6.
- 04 마리아 미즈,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여성, 자연, 식민지와 세계적 규모의 자본축적』, 갈무리, 2014.
- 05 고정갑희, 『가부장체제론과 적녹보라 패러다임』, 액티비즘, 2017.
- 06 낸시 프레이저, 『좌파의 길: 식인 자본주의에 반대한다』, 서해문집, 2023.
- 07 마리아로사 달라코스타, 『집안의 노동자』, 갈무리, 2017.
- 08 J. K. 김슨-그레엄, 『그 따위 자본주의는 벌써 끝났다』, 알트, 2013.
- 09 기선·랑희·슬기·이호연·타리·희정·전주희, 『캐노피에 매달린 말들』, 한겨레출판, 2023.
- 10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 해설집』, 2019.

(논문)

- 11 백승욱(2019), 『마르크스에게서 재생산 개념의 형성과 체계의 사고』, 『마르크스주의 연구』, 16( 2), 12- 53.
- 12 최서리, 『싱가포르 정부의 이주가사노동자 도입과 관리방식』, 『IOM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No. 2017-04.

(기사 및 온라인 자료)

- 13 macrotrends <https://www.macrotrends.net/countries/SGP/singapore/birth-rate>
- 14 한국은행, 2021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보도자료. 2021.7.21.
- 15 임해원 기자, 『자산 거품 시대, 하락하는 '노동'의 가치』, 뉴스로드, 2021.12.7.일자 기사 (최종검색일 2024.1.26.)  
<https://www.newsroa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91>
- 16 권준용 기자, 『[단독] 조정훈 "최저임금 적용 없앤 月 100만원 외국인 도우미 도입"』, 《디지털타임스》, 2023.3.20.
- 17 맹성규 기자, 『셋째 출산하면 대출 원금 1억 전액 감면...민주, 저출생 공약 내놴』, 매일경제, 2024. 1.18일자 (최종검색일 2024. 1. 26.)



# 도래하는 전쟁위기에 맞서 사회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등에서 전쟁/학살이 발발하고,

미중갈등이 고조되고 북한 핵 고도화가 진행되면서

동아시아 긴장고조와 군비증강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의 전쟁위기는 한반도를 넘어 광범위하게 퍼져가고 있으며,

이는 국제질서의 변동과 연동되는 구조적 위기이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극우보수진영은 한미일 안보동맹에 사활을 걸며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민주당/통일운동 진영은 과거의 경협-한반도 비핵화 프레임을 반복할 뿐이다.

반전평화운동의 궤적을 복기하고 현 정세에서 되짚어볼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반전평화운동의 재생을 도모하기 위한 실천적 과제를 확인한다.



가로지르길7  
문자통역 QR코드

## 세션 진행

사회 :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발제1. 국제질서 변동에 관한 지배 담론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 - 박기형 (서교인문사회연구실)

발제2. 오늘날 제국주의와 진영론에 맞선 반제반전평화운동 - 양동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발제3. 통일 담론의 한계를 넘어 한반도 평화체제로 - 홍명교 (플랫폼c)

발제4. 반전평화운동의 어제와 오늘 - 임재성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발제5. 동북아 군비 증강과 무장 갈등 위험에 맞선 과제 - 김한민영 (피스모모)

## 준비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 플랫폼c



# 국제질서 변동에 관한 지배 담론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

박기형 | 서교인문사회연구소

knightwill@naver.com

## 21세기 국제질서의 변동,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변화하는 국제질서를 마주하는 사회운동의 곤경: 양자택일의 문제?

최근 국제질서의 변동 속에서 우리 사회운동은 어떤 곤경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 미-중 갈등 속에서 어떤 외교 노선을 따를 것인가 갈팡질팡하는 한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사회운동도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를 정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한다는 의미에서 말이다. 신장 위구르나 홍콩에 관해 얘기하면서 중국 정부의 탄압을 비판하는 이들은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질서를 재수립해야 한다고 보기도 하고, 미국의 달러 패권이나 군사 개입 등 각종 행태를 비판하는 이들은 중국을 필두로 하여 서구 선진국의 지배 질서에 대항하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한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그리고 러시아냐)는 두 선택지만이 우리 앞에 주어졌다고 본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양자택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전부일까? “누구의 편을 들래?”라는 물음에서 벗어나서 다르게 물어볼 수는 없을까? 중국에 대한 비판이 미국에 대한 옹호가 되고, 미국에 대한 비판이 중국에 대한 옹호가 되는 이 구도를 어떻게 탈피할 수 있을까?

국제질서의 변화를 평가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기존의 담론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국제질서를 국가 간 경쟁의 무대로 보고 국가를 최소 단위의 행위자로 본다는 점이다. 물론 일찍이 이러한 국가중심적 태도에 관한 이론적, 경험적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요즘엔 국제기구나 다국적 기업, ISIS와 같은 단체 등 비국가 행위자들을 국제정치의 주요 행위자로 포함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확대되는 국제질서의 변동에 관한 담론은 이러한 비판적 관점을 잃어버린 채 국가중심적 태도에 기초한 지정학적 틀에 갇혀 있다. 그로

인해 국제질서의 변동과 관련해 유효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는 국가뿐이라고 본다. 즉 행위성(agency)을 지닌 유일한 존재로 여긴다. 이 때문에 국제질서의 변화가 펼쳐지는 공간, 그러한 변화에 영향을 받거나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행위들이 일어나는 공간은 국가 간 경쟁의 무대로 국한된다. 나머지 현실 속 공간들은 은폐되고, 국제질서 변동에 관한 담론에서 배제된다.

그러면서 사회운동의 주체들 또한 국제질서의 변동과 관련해서는 자신들이 별다른 역할을 맡을 수 없다고 여긴다. 국제질서에 관해 고민한 건 너무 큰 얘기만을 반복할 뿐이기에 무용하고, 당면한 현실을 바꾸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그런 건 외교의 영역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폭력에 맞서 연대하자는 움직임이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그때도 저들의 문제와 우리의 문제가 어떻게 긴밀히 연관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감각하기란 쉽지 않다. 저들의 아픔에 공감하거나 도덕적 명제에 호소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다. 국제질서의 변동은 단지 저곳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곳과 저곳을 가로지르며 작동하는 것이다. 이를 날카롭게 포착하여 저곳에서의 저항에 연대하고 이곳에서의 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질서의 변동 속 사회운동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사유하며 창출해나가야 한다.

### 국제질서 변동에 관한 지배 담론의 전제: 국가중심적 관점과 지정학적 사고

현재 변동하고 있는 국제질서에 관한 담론은 국가중심적 관점과 지정학적 사고에 기초한다. 여기서 사회운동의 공간은 인식의 지평에서 사라진다. 분명 현실에서 존재하지만, 그 의미와 역할을 박탈당한다. 이러한 국가중심적 담론의 한계는 국제정치학에서 통용되는 국제질서와 안보라는 두 가지 개념적 요인과 긴밀히 연관된다.

미국 엘리트가 주도하는 주류 국제정치학, 특히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에서는 국제질서를 무정부 상태로 간주한다. 국가들 사이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진다고 본다. 이렇게 국제질서를 무한경쟁 그 자체로 보는 태도는 다음 요인인 안보라는 독특한 국제정치학적 개념과 연결된다. 안보를 규정하는 다양한 입장이 있지만, 전통적인 현실주의 패러다임에서는 안보를 '국가'의 생존과 안전의 문제로 규정한다. 이 패러다임에 따르면, 국가는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유무형의 위협, 언제 어디서 생겨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위협을 제거하고자 한다. 그 결과, 국제질서 변동이 제기하는 과제는 생존과 경쟁의 문제로 왜곡된다.

물론 안보 개념에 관한 비판적 연구들 덕분에, 최근 들어서는 안보를 국제적 차원에서 확대해서 국제질서의 안정을 회복하는 과제로 설정하기도 하고, 식량안보와 같이 기아나 빈곤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확대하기도 한다. 다만, 그럴 때도 여전히 안보에 대응하는 주체는 국가이고, 안보 개념은 국가 내외부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확실한 위협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을 전

제한다. 잠재적 위협을 가정하고 그것을 준-전시상황이나 전쟁과 같은 형태로 실현함으로써 국가가 통제하는 (이른바 베티 리어든(Betty A. Reardon)이 '전쟁 체제'라고 명명한) 경쟁적인 사회 질서를 재생산한다(리어든 2020).

## 안보를 사회운동의 몫으로 재전유하기

그렇다면, 국제질서 변동 속 사회운동의 공간은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가? 우리의 인식 지평에 나타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제질서와 안보를 기각해버리는 건 국가중심적 태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안보를 여전히 국가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에 불과하다. 대신 우리는 국제질서와 안보를 다르게 개념화해야 한다. 우리의 몫으로 그것들을 새롭게 전유해야 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안보라는 개념을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표적으로 샤탈 무페(Chantal Mouffe)는 안보를 엘리트나 우파의 전유물로 남겨두지 말고 좌파들만의 관점에서 재전유할 것을 제안한다(무페 2022). 다양한 의제가 안보 이슈로 규정되는 경향 자체를 거부하기보다는 그러한 경향이 생겨나는 현재의 조건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조건을 말하는 걸까?

오늘날 안보라는 개념이 겨냥하는 문제들을 돌아쳐보자. 그것들은 생명의 위협과 긴밀히 연관된다. 안보 개념은 군사적 위협에서부터 가난과 빈곤 그리고 여러 경제적 불평등, 나아가 재난과 전염병, 심지어 기후위기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확장 경향은 생명에의 위협이 국가의 생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걸 함의한다. 예컨대, 기후정의에 대한 요구는 국경을 가로지른다. 전 지구의 생명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는 인간공동체로서의 세계(World)와 환경적 조건으로서의 지구(Earth)라는 이분법을 넘어선, 이른바 행성적(Planetary)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과제다(박명림·조소현 2022). 나아가 전쟁과 재난, 전염병 등의 위험은 더 낮은 계층으로 더 쉽게 향한다. 그렇기에 국가 그 자체의 생존이 아니라 어떤 계층과 집단의 생명이 위협받는지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안보를 사회운동의 몫으로 전유하는 것은 두 가지 정치적 효과를 가져온다.

첫째, 위협에 맞서자는 요구가 국가의 생명정치(Biopolitics)적 권력의 강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다. 국가는 특정 집단의 불공정한 삶의 조건을 그대로 내버려 두기도 하고, 그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철폐해 위협에 처하도록 하기도 한다. 또는 사회를 보호하겠는 명목으로 자신에게 저항하는 세력을 탄압 및 처벌하고, 특정 집단을 위험군으로 분류해 격리할 수도 있다. 현 체제를 신자유주의라 부르든 전쟁 체제라 부르든, 지금 이 체제는 법과 제도를 통해 이미 불평등한 위치에 놓인 존재들에게 취약성이 불평등하게 재분배하고 있다(Spade 2011). 그것도 국가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선 불가피한 일이라는 이유로 말이다. 이를 내버려 둘 경우, 폭력과 재난의 폭증에 힘입어 국가폭력이 강화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차별과 죽음이 증식하는 악순환에 빠져들 수 있다. 안보 이슈는 취약성의 불평등한 재분배라는 쟁점을 함축한다. 이러한 쟁점을 드러내고 그에 관한 사회

적 요구를 조직해내는 것을 통해 우리는 국가의 생명정치적 권력에 맞선 대항적 흐름을 구성할 수 있다.

둘째,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배와 위협에 맞서 싸우도록 할 수 있다. 도덕적 명령이나 추상적 관념에 기대는 건 이론의 정교한 발전에는 도움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사람들을 행동에 나서도록 하고 결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치적 실천은 대중의 일상 경험과 구체적 열망을 토대로 공통의 감각을 형성하는 것에 출발하며 지속해서 그것을 자신의 기초로 삼는다. 따라서 우리 사회운동은 안보로 지칭되는 다양한 일상 속의 위협과 그로 인해 촉발되는 정념과 요구를 국가나 외교 및 행정 관료의 몫으로 남겨두기보다는 어떻게 자신의 과제로 삼을지 고민해야 한다. 이는 위협이 특정 집단에 가중되거나 전가되는, 이른바 위협의 불평등에 맞설 정치적 연대를 구축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 국가중심적 시각의 해체와 상호교차성에 기초한 국제질서의 재개념화

이러한 실천이 가능하기 위해선 변화하는 국제질서를 다르게 바라보아야 한다. 그동안 사회운동은 신자유주의에 맞서 개인주의가 상정하는 개인이 실재하는가를 되물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국제질서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로서의 국가, 국경이라는 닫힌 테두리로 둘러싸인 어떤 몸을 지닌 실체로서의 국가라는 관념 또한 물음에 부칠 수 있다. 물질적 영토와 수적인 인구로 실제화된 국가들만이 국제질서를 구성하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 국제질서의 공간은 국가를 비롯하여 국제기구, 기업과 재단, NGO나 사회운동단체, 여러 조직이나 집단, 개인과 심지어 비인간 행위자인 동물과 식물, 미생물과 바이러스 등으로 가득하다. 이러한 행위자(actor), 행위소(actant) 모두가 나름의 행위성을 띠고서 국가와 함께 국제질서를 이루고 있다.

그중에 사회운동의 공간도 분명히 존재한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사회운동은 역사적으로도 국제질서의 변화를 추동하는 동력 중 하나였다. 때론 제1차 세계대전 전후로 유럽의 노동조합운동이 제국주의적 수탈에 조력했던 것처럼 부정적인 방향으로 활동하기도 했고, 때론 냉전 이후 핵무기 위협과 냉전적 군사 대결 구도에 맞서 군축 및 평화 운동을 펼치거나 제3세계를 중심으로 식민지 해방 이후 정치적, 경제적 주권을 쟁취하는 데 힘을 보태는 사회운동이 존재했다.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팔레스타인의 해방과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요구하고, 동북아시아에서 고조되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는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국제질서의 공간을 다양한 행위자, 행위소로 구성된 것으로 사유하는 것 외에 다른 식의 접근도 가능하다. 국가를 의인화되 국가가 행동할 때 준거하는 국제 윤리의 판단 기준과 행동 규범을 세우는 작업이 대표적이다. 즉 국제정치에서의 윤리(학)을 설정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여기엔 크

\* 이에 관한 논의는 구갑우의 『국제관계학비판』(2008, 후마니타스)을 참고하길 바란다.

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국가들 사이에서 도덕이 존재할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세계시민사회 논의 또는 코스모폴리탄한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로 환원할 수 없는 국가 내외의 다양한 사회집단들의 연대와 연합을 통한 윤리적 실천을 구상해보는 시도다. 전자는 주권이나 자유·평등, 평화와 같은 가치를 국제규범으로 삼으면서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각 국가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들 사이의 민주주의를 고취하는 데 방점을 둔다. 그러므로써 세계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진력해야 할 목표, 이를테면 기후정의나 경제적 평등 등을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가장 이상적 버전이 세계정부에 대한 구상이다.\*\* 후자는 앞선 국가중심적 시각의 해체와 안보 이슈의 재전유와 직접 연관된다.

현존하는 사회운동의 공간은 국제질서의 변동을 논하는 담론의 장에서 끊임없이 지워지고 있다. 심지어 세계시민사회라 할 수 있는 공간도 존재하지 않는 걸로 무시되거나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명목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이러한 두 공간 모두 국제 정세를 인식하는 지평에서 배제되고 은폐되고 있다. 대신 국가와 이념의 대결이라는 구도, 자유주의에 기반한 국가들의 다자주의적 협력 질서와 그것의 붕괴라는 틀이 전제하는 국가중심적 시각으로 국제 질서를 구성하는 다양한 존재들을 환원해버린다.

### 국제질서 변동에 관한 담론 투쟁을 위해

이에 맞서 사회운동의 공간을 중심에 둔 새로운 인식 지평을 어떻게 열어젖힐 것인가? 사회운동이 바라보는 국제질서의 변동에 관한 담론을 어떻게 재구성해낼 것인가? 이 물음은 인식의 문제를 넘어선다.

어떤 변화에 관한 담론은 추상적인 관념 속 얘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건 현실에서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힘을 갖는다. 현 상황에 이르게 된 원인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 기반해 무엇을 요구할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법제도적 수준에서든 구조적 수준에서든 특정 담론에 근거해서 재편이 이뤄진다. 요컨대, 현 상황을 어떠한 인식의 틀로 바라보는가에 따라 물질적인 효과가 달라진다.

담론 구성에서부터 이미 지배와 피지배 사이의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 주류 국제정치학, 지정학적 틀, 국가중심적 접근은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집단에 의해 현 정세가 규정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대응하게 되는 경향을 충분히 견제할 수가 없다. 누구의 시선에서 현 정세를 규정할 것

---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하에서의 위협을 마주하면서 강대국 주도의 질서가 아닌 세계시민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1950년대 이후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특히 에롤 E. 해리스는 『파멸의 묵시록 - 과학적 패러다임과 일상의 사유양식』(이현휘 옮김, 2009, 산지니)에서 기계적 유물론과 원자론적 개인주의에 기반한 근대적 사유양식이 국제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새로운 과학적 패러다임에 근거해서 현대 문명의 회복을 위한 국제질서의 재구성을 요구한다.

인가는 체제 전환을 지향하는 진보적 사회운동의 주된 과제다. 지구적, 행정적 변화가 제기하는 각종 안보 이슈를 행정 관료나 정치 엘리트들이 좌우하기 쉬운 정책적 차원의 문제로 남겨두어선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운동은 어느 지점에서 어느 정도로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까? 우선은 국가 중심적 시각을 벗어나는 것에서 출발해보자. 그래야 누구의 편에 서서 국가의 생존과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냐는 질문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우리만의 물음과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

## 전후 질서 붕괴론과 신냉전론

아래에서는 현재 우리의 인식을 규정하는 기존 담론을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질서의 변동을 설명하는 논의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전후 질서 붕괴론이고, 다른 하나는 신냉전론이다. 각각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이들은 어디서 결을 달리하거나 같이 하는지를 살펴본다. 그럼으로써 현재 국제질서 변동에 관한 주류 담론은 국가중심적 시각을 공통된 기반으로 삼고 있음을 밝힌다. 나아가 현 담론 지형의 공통 기반이 어떤 한계를 노정할 수 밖에 없는지, 그러한 기반을 흔든다면 무엇을 달리 얘기할 수 있을지 따져보려 한다.

## 신냉전론 되짚기

먼저 신냉전론을 살펴보자. 신냉전론은 탈냉전 이후 다시금 냉전과 유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련 붕괴 이후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미국 주도의 단극 질서가 수립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진전되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1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2010년대와 2020년대에는 국가들 사이에서 보호무역주의가 증대하거나 산업과 무역 경쟁이 격화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등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다극 질서로 전환하고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본다. 특히, 미-중 경쟁 또는 미-러 경쟁이 강화되는 것에 주목한다. 흥미롭게도 신냉전론은 해당 논의가 전제하는 대결 구도의 양측 모두에서 제기된다. 바이든 행정부부터

---

\* 신냉전론과 전후 질서 붕괴론을 구분하는 방식은 이해정(중앙대 정치국제학과)이 <동향과 전망> 116호에 발표한 2022년 논문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 바이든의 민주주의 기획, 그리고 새로운 국제 (무)질서”를 따랐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까지 현 정세를 신냉전으로 규정한다.\*\*

## 미국의 주류 외교·안보 엘리트들의 신냉전론

먼저 미국의 주류 외교·안보 엘리트들의 신냉전론을 보자. 여기엔 일말의 진실과 일말의 획책이 담겨있다. 그들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면서도 해당 사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여긴다. 러시아가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주권이라는 규범을 위반했다고 규탄하고 잠재적으로 중국과 이란 등의 국가들이 다른 국가의 주권을 침탈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한다. 그럼으로써 반(反)러시아 나아가 반중국을 내건 국제 여론을 조성하고자 한다. 미국으로 표상되는 민주주의와 러시아와 중국으로 표상되는 권위주의의 대결 구도로 판을 짜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냉전시절의 자유세계를 수호하자는 수사를 소환하여 나토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제압하려는 전략적 판단하에 이뤄지고 있다. 또한, 미국 주류 엘리트들은 신냉전이 도래했기에 앞으로 미-중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유사시에 전쟁이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냉전에서처럼 자유주의 국가들의 동맹과 군사 안보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바이든 행정부가 상정하는 신냉전의 구도는 정말 현실에 부합하는 걸까? 과거 냉전과 오늘날에는 분명 다른 점이 있다. 이데올로기 대결의 유효성이 과거에 비해 약화했고, 경제적 상호의존이 유례없는 정도로 심화했다. 미국 주류 엘리트들의 신냉전 담론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나름의 논리를 펼친다. 그들에 따르면, 세계화가 이뤄지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등이 경제적으로 성장하였고, 그 결과 미국의 지위를 위협하게 되었다. 아직까진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확고하므로 이를 활용해서 중국과 러시아 등 신흥국들을 견제하는 한편, 미국의 부흥을 다시 한번 꾀할 수 있도록 정치적, 경제적 질서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내건 '더 나은 재건'의 가치에 정확히 반영되어 있다. 미국 주류 엘리트들의 신냉전 담론은 일정 부분 현재 벌어진 사태에 발 딛고 있다. 바로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 내 제조업이 쇠락하였고 중산층이 붕괴했으며, 그 결과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사실이다. <그림1>과 같이 세계화 이후 선진국 내 불평등의 심화는 통계적으로도 확인된다.

~~~~~

** 2022년 12월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국제관계구도가 《신냉전》 체계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된다”라는 세계정세 인식을 피력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진영 대결 논리를 토대로 자신들의 핵 보유를 정당화한다. 상세한 분석은 <동아시아 연구원>에서 2023년 2월에 연재한 [북한 신냉전 담론 시리즈]를 참고하길 바란다. https://www.eai.or.kr/new/ko/pub/view.asp?intSeq=21750&board=kor_issuebriefing&keyword_option=&keyword=&m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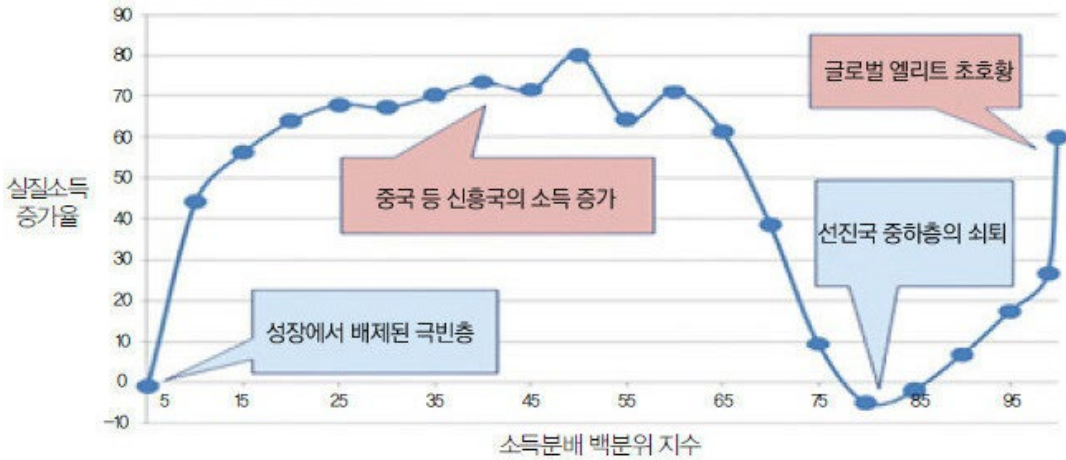


그림1. 1988~2008년 전 세계 소득 수준별 1인당 실질소득의 상대적 증가율

언뜻 보기엔 바이든과 트럼프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 보인다. 한 명은 예측 불가능의 포퓰리스트고, 다른 한 명은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춘 노련한 정치인이라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국제질서를 대하는 전략적 태도에 있어서는 둘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물론 트럼프와 바이든의 외교 전략에서 주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다. 그건 미국이 국제질서의 조정자로서 나서야 한다는 기조가 다시금 전면에서 등장했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미군의 해외기지를 축소하고자 했다. 현 미국 엘리트들이 보기에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행태는 1823년 먼로 독트린 이전으로 되돌아간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퇴행적이었다. 오히려 그들은 위대한 미국을 재건하는 일은 곧 미국의 전 지구적 리더십을 복원하는 일이었다. 2008년은 미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에서도 하나의 분기점이라 할 수 있다. 2008년 이후 오바마 행정부 시절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주도로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Pivot to Asia)을 추진했다. 이를 계기로 민주당 계열의 자유주의 매파와 과거 부시 행정부 시절 공화당에서 활동했던 네오콘은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 네트워크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베네치알레 2022).

정리하자면,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국제질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국내 경제를 부흥시켜 미국 내 중산층을 안정시키려 한다.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추진한 리쇼어링(reshoring)과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지속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복지 증진이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산업 재편과 자국 경제 활성화의 의도도 포함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으로 그러한 기조는 더욱 큰 힘을 얻고 있다.

*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 국가 간 불평등, 국가 내 불평등의 변화에 관한 상세한 분석은 브랑코 밀라노비치의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정희은 옮김, 2011. 파이카), 『왜 우리는 불평등해졌는가』(서정아 옮김, 2017. 21세기북스)를 참고하길 바란다.

미국의 신냉전 전략에 제기되는 의문

하지만 과연 미국이 국내적 이익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리더십을 안정화할 수 있을까? 여기엔 의문이 제기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과 산업 관련 규제 및 보조금 정책 등을 시행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무부와 FED 사이의 국제 사고팔기를 통해 막대한 돈을 시중에 풀고 있다. 통화량 팽창에 따른 여파를 조절하려고 이자율을 인상하거나 테이퍼링(tapering)과 양적 긴축을 시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사회복지부터 산업 유치까지 국고 보조금을 더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를 줄일 경우,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통화량 팽창으로 되려 심화하고 있는 자산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상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 국내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근본적으로도 유의해야 할 문제가 있다. 통화 팽창에 따른 이득과 손실은 언제나 차등적이다. 자산과 소득에서 상위 계층일수록 통화량 증대에 따른 이득이 더 크며, 통화량 감소에 따른 손실은 더 적다. 이는 사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다. 이런 부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신자유주의 세계화 국면에서 신흥국의 소득 증가로 인한 선진국 중하층의 쇠퇴를 만회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자신들의 경제를 재건하려는 기조를 놓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적자 재정과 양적 완화 등 각종 정책 수단으로 동원해 지속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것이다. 그러나 타국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면서까지 중산층을 회복시킬 수 있을지 불확실하며, 오히려 금융 부문과 자산 소유 계급, 특정 대기업 집단의 배만 불리는 건 아닌지도 우려된다. 만약 미국 내의 경제적 안정을 높였다 하더라도, 국내외 여건상 이러한 방식이 지속 가능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더욱이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데 상당한 재정을 사용하고 있다. 그 규모는 당분간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선 미국 내 불평등 완화에 필요한 자원 분배를 저해하거나 군수업체 등 미국 내 특정 집단의 이윤만 키워줄 뿐 정작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라도 바이든 행정부가 목표로 하는 중국과 러

** 최근 인플레이션의 원인에 관해선 논쟁이 진행 중이다. 주류 언론이나 주류 경제학계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임금을 주로 꼽는다.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이나 현대화폐이론(MMT)를 따르는 학자들은 이에 반대하며, 임금이 아닌 기업의 이윤 추구가 문제라고 비판한다. 이사벨라 베버(Isabella M. Weber)를 비롯한 몇몇 경제학자들은 Sellers' inflation, Greedflation이라는 신조어를 통해, 기업이 고물가 기조를 틈타 상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물가 상승을 더욱 부채질했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그와 유사하게 대기업이나 대규모 투자자들의 시장 독점과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한 차등적 축적에 주목하는 정치경제학자 샌디 하거(Sandy Hager)나 요셉 베인스(Joseph Baines)의 연구도 있다. 본 글에서는 물가상승의 근인(近因)을 두고서 임금이나 기업 이윤이나를 다루는 논의는 잠시 미뤄두고,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통화 환경을 조성한 미 재무부와 미국 연방준비은행(FED)의 통화 정책에 주목한다. 물론 미 재무부와 FED 사이의 채권 발행과 매입을 통한 화폐 발행을 문제시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부분준비금은행제도가 만들어내는 통화팽창을 비판하고 정부가 직접 주권통화를 발행해야 한다는 주권통화론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정부가 직접 발행하는 화폐는 부분준비금에 기초한 은행들의 대출과 달리, 인플레이션과 부의 불평등과 같은 부정적 효과를 낳기보다 오히려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해선 더 많은 논쟁과 연구가 필요하다.

시아에 대한 견제 등이 충분히 달성된다면 다행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동안의 간접적, 직접적 개입이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효할지는 불확실하다. 이미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직접적인 방식의 군사적 개입에는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미국 정책 당국자들도 우크라이나에 2014년 유로 마이단 혁명 이후 군수물자 지원과 군사 고문단 파견 등의 형태로 간접적으로 개입해왔고, 전쟁 발발 이후에는 러시아를 상대로 SWIFT 제재, 해외 자산 동결 등 각종 경제제재를 시행하는 걸로 전략을 바꿨다.* 그럼에도 미국의 이러한 개입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지는 못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념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확실히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들은 자신의 군사동맹에 속한 서구의 유럽과 아시아 몇몇 국가들이다. 서구 유럽은 나토 가입국들이 주를 이루며 아시아에서는 일본, 호주, 한국이 해당한다.** 그에 반해, 다른 수많은 국가가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의 대결 구도 사이에서 양 진영의 경계에 자리하고 있다. 결국, 광범위한 반러, 반중 전선 또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로 뿔뿔 뭉친 연합이 결성되지 않고 있다. 미국이 내건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공세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걸 함의하는 건 아닐까?

좌파 버전의 신냉전론과 그 한계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으로 표상되는 진영의 경계 사이에는 여러 국가가 자리하고 있다. 이들은 군사적 긴장의 고조와 경제 불안정의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남미와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등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주류 엘리트들이 설정한 신냉전 담론에 맞서 또 다른 버전의 신냉전 담론을 제기한다. 이는 신냉전을 통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재편을 반대하려는 움직임에 해당한다. 이들 지역의 사회운동들은 신냉전 하에서 심화할 군사주의를 견제하고 핵무기 사용의 위협을 낮추며 국가 간 경쟁 속에서 기후·생태 위기에 맞선 지구적 연대가 무력해질 가능성을 피하고자 한다. 그렇기에 신냉전 구도로 진입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서, 신냉전을 막아설 과거 냉전 시절의 비동맹 운동과 같은 제3세계 운동을 새롭게 시도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신냉전 담론을 좌파 버전으로 전유하는 과정에서 미국 제국주의만을 비판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적으로 성찰하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나기도 한다. 중국을 금융자본주의에 맞서는 산업자본주의 국가로 설정해서 대안적 체제로 간주하고 중국 내의 경제불평등이나 구조적 위험을 무시하거나,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에 대항할 주요 거점이기에 이들과의 연대해야

* 2014년 유로마이단 혁명 전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개입에 관해서는 『당신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모른다』(메데아 벤자민, 니컬러스 J. S. 데이비스 지음. 이준태 옮김. 2023. 오월의봄)를 참고하길 바란다.

** 그리고 미국은 자신의 군사동맹에 속한 우방국들에 한해서 상시적 통화스와프 또는 비상시적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다. 이는 미국의 재무부나 FED가 확장적 통화·재정 정책을 시행할 경우 동맹국들에게 미칠 경제적 여파를 상쇄할 수 있도록 미국이 제공하는 일종의 특혜이자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다고 하면서 정작 중국과 러시아의 권위주의적이거나 반인권적 행태에 눈감아버릴 위험이 있다. 여전히 국제질서를 국가 대 국가의 대결 구도로 바라보기 때문에 생겨난 한계라 할 수 있다.

좌파의 신냉전(반대)론이 가리키는 진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비서구 국가들과 일부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 가치를 내건 좌파들에서 제기하는 신냉전론(또는 신냉전 반대론)은 현 국제질서 변동에 관한 또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다. 먼저 세계 곳곳에서, 심지어 유럽과 미국에서도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더 이상 정답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되묻고 있다. 과거 냉전에서처럼 독재가 아니면 민주주의라는 식의 부정적 규정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재발명해야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미국 자신조차 자유주의나 민주주의 또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범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비서구 국가들은 핵군축과 기후위기 대응, 주권 보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미국 행정부의 행동에 의문과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미국과 대치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또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얘기다.

다음으로 이미 경제적으로 국가 간 상호의존이 증대한 상황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등과의 경쟁이 격화되어서 에너지와 식량, 광물 등의 수출입 등에 제약이 생길 경우, 많은 국가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우려 또한 만만치 않다. 반면, 미국은 FED의 단계적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2022년 3분기 3.2%로 회복한 데 이어 민간 소비, 재고 투자, 정부 지출 등에 힘입어 2023년 3분기에는 4.9%를 기록했다. 이를 가리켜 ‘나홀로 호황이냐’는 얘기도 있다. 지난 경험에 비춰볼 때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경제적 여파는 언제나 개발도상국과 빈곤국에 먼저 영향을 미치고 주변부의 경제가 악화한 이후에야 비로소 선진국 경제에 다다르며 가장 마지막에 미국 경제에 타격이 가해지는 식이었다. 그 와중에 미국 사회 내에서도 가장 불평등한 사회집단에서부터 경제적 타격을 입는다.*** 덧붙여,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를 지켜보면서 언젠가 우리도 경제제재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도 높아졌다.

신냉전 구도에 대한 서구 내 우려와 반발

바이든 행정부가 재편하려는 신냉전 구도에 관해 서구 진영 내에서도 균열이 포착된다. 유럽

*** 2008년 이후 미국이 시행한 양적 완화와 최근 FED와 재무부 간 국채 사고팔기를 통해 경제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은 김종철(서강대 정치외교학과)의 논문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제국주의: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정치사회학적 의미”(2022. 경제와사회), 발표문 “화폐팽창과 제국주의”(웹진 인-무브, <https://en-movement.net/412>)를 참고하길 바란다.

내부에서 현재 미국의 행태를 비난하며 반발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 탈냉전 이후 유럽의 국가들은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지역 내 정치적, 경제적 질서를 새롭게 구성하고자 했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경제 전략은 러시아의 노드스트림,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내 에너지 공급망과 생산-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던 계획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전복되었다.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유로화는 기축 통화 또는 대안 통화로서의 전망과 역량을 잃어버렸다. 그런 일이 다시 한번 반복된 것이다. 한 마디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은 지정학적으로 재편되었다. 유럽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과 중국이 탈동조화(decoupling)되기 시작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삼아 독일-러시아-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네트워크 구축을 견제하고자 했다. 돌아보면, 나토의 장기적 확대 경향은 유럽연합을 미국의 영향력 아래로 옹매는 결과를 낳았다. 러시아를 배제하고 독일을 통제하며 유럽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제도화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러시아의 군사적 침공 위협이 실질화하면서 독일을 비롯한 국가들에서 군축이 아닌 군비 증강 기조로 전환되었으며, 미국을 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분담하면서 자국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였다. 그에 반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해 에너지 전환을 시도하려는 기획은 무산되었다. 미국과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중동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나아가 중국과의 교역을 위한 여러 경로로 이전에 비해 전망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유럽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나토에서의 군사적 역할 강화와 기존 정책 노선의 전환이 강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유럽에서 전쟁과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면서 국제적으로도 핵무기 레짐(비확산, 핵군축, 핵역지 등을 포함하는)에 대한 지지가 약화하는 등 국제질서의 안정을 위한 여러 노력이 퇴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신냉전론의 한계를 넘어: 국제질서 공간의 다차원성과 불평등의 구조에 주목하기

요컨대, 신냉전론은 일말의 진실과 일말의 희책을 담고 있다. 이를 면밀하게 구분함으로써 우리는 미국의 정치 엘리트와 바이든 행정부가 그리는 국제질서 재편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또한, 유럽과 비서구 국가들에 제기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문제들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신냉전론은 분명한 한계를 안고 있다.

신냉전론의 여러 버전 중 이념 대결과 진영 대결에 초점을 두는 주장의 경우, 가치 외교나 이념 논쟁을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 가치 외교에 반대하면 실용주의 외교 노선을 취해야 한다는 쪽도 마찬가지다. 그러한 주장은 누구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지를 구체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오직 ‘국익’이라는 말로 포장해버리기 일쑤다. 몇몇 비서구 국가나 일부 좌파들은 신냉전론이 제기하는 미국과 중국(또는 러시아)의 갈등이라는 구도를 수용하면서도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태를 주로 비판한

다. 대신 미국의 경쟁 상대인 중국과 러시아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는 비동맹 운동을 고민하는 측에서 종종 빠질 수 있는 함정이다. 물론 무비판적 긍정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연대의 성격을 띠는 것이라고 반론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의 시진핑 체제와 러시아 푸틴 정권의 문제점을 은폐해버릴 수 있다.

무엇보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좌든 우든, 신냉전론은 편을 가르는 이분법적 틀에 갇혀 있다. 물론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와 같은 대결 구도는 어떤 측면에서는 실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현실을 왜곡하는 것과 다름없다. 우선, 신냉전론이 전제하는 각 진영의 대표 주자들은 국제질서에서 강대국으로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강대국들의 대결이 곧 경제적, 정치적 불평등에 처한 다른 국가들의 문제로 치환될 수 없다. 오히려 강대국들의 대결이 어떻게 다른 국가들을 향한 착취와 억압에 기반하고 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념에 기초한 가치 외교나 실용주의적 태도로는 포착할 수 없는 쟁점이다. 비동맹 운동을 지향하는 목소리는 강대국들의 대결로 환원되지 않는 제3세계의 공간을 드러내 준다. 그러한 대항적 움직임이 어느 한 강대국의 편들기로 귀결되지 않으려면, 강대국들의 무대 밖에 존재하는 다른 국가들에 주목하듯이 국가들로 환원되지 않는 국제질서 속 또 다른 공간들에도 주목해야 한다.

신냉전론 중 국가 외 다른 행위자들에 주목하는 연구들도 있다. 금융과 생산 부문 내 행위자들에 주목하는 홍호평(Hung Ho-fung)의 작업(홍호평 2022)이 대표적이다. 그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미국과 중국의 금융 기관, 투자자와 은행, 기업들은 국경을 가로지르며 이해관계를 공유했다. 그러나 ‘차이아메리카’라 불리던 이들의 공생 관계가 최근 들어 경쟁 관계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가리켜, 신냉전으로 이행하는 것이라 평가하는 게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예컨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디커플링(decoupling)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과거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만큼의 경제적 단절에 이르게 될까? 경제적으로만 봐도 에너지와 원료 공급 및 가치 사슬 내 분업, 금융상의 채권-채무 관계 등의 얽힘은 상당하다. 이를 고려할 때, 냉전 시기와 같은 정도로 둘 사이가 단절되리라 단언하긴 어렵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건 공생과 대결의 진자운동 속에서 부와 권력을 지속해서 독점하고 축적해 나가는 상위 계층의 존재가 아닐까.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국내외적으로 불평등한 체제를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국가 간 불평등과 국가 내 불평등의 구조를 재생산하는 문제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불평등의 재생산이라는 맥락을 고려해야 체제 전환을 위한 비판적 정세 인식이 가능해질 것이다.

전후 질서 붕괴론 되짚기

전후 질서 붕괴론의 주장과 논거

전후 질서 붕괴론은 냉전논에 반론을 제기한다. 특히 최근 한국에서는 백승욱을 중심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립한 국제질서와 그 규범이 무너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백승욱은 현 국제 정세가 냉전이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 전후와 더 유사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교훈을 바탕으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성립되었다고 보며, 이 질서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한다. 강대국들의 대립이 격화하여 제1차 세계대전으로 귀결되는 시기와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주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적 팬데믹의 발생이다. 이러한 전염병의 대유행은 19세기 말에 진행된 세계화와 21세기 초에 진행된 세계화의 결과다. 둘째, 자유주의의 위기다. 19세기 말에 고전적 자유주의가 위기에 봉착했다. 국가 간 블록화가 심화하며 제국주의적 대결로 격화했다. 마찬가지로 21세기 초에는 신자유주의가 위기에 직면했는데, 조금 다른 점은 금융적 통합의 결과로 사회가 해체되고 양극화가 심화했다는 게 특징적이다. 셋째, 자기조정적 시장경제의 신화가 붕괴하고 자유주의 제도가 쇠락하며 파시즘이 부상한다는 점이다. 칼 폴라니식으로 말하면, 사회의 자기 보호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포퓰리즘이 창궐하고 극우 정당이 융성하며 권위주의 체제가 경쟁적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시자본주의의 등장이다. 과거에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3가지의 길, 즉 뉴딜, 사회주의, 파시즘으로 분기했다. 백승욱은 중국을 대표적 예로 삼아 국가의 통제가 강화되고 전시자본주의적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여기서 백승욱은 과거와 현재 가장 분명한 차이점을 보이는 건 사회운동의 대응이라고 평가한다. 제1차 세계대전 전후로 사회주의 운동이 고조되고 노동조합 기반 정당의 제도 진출이 확대하며 광범위한 반식민지 투쟁과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던 시기와 달리, 현재는 미래지향적인 사회주의 운동이 부재하고 각종 극단주의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그러한 정세 속에서 전후 전 지구적 뉴딜과 소련식 사회주의의 불충분한 역사적 타협이 이뤄진 데 반해, 오늘날에는 새로운 전망이 제시되고 실현될 수 있을 것이냐는 물음을 던진다.

전후질서붕괴론의 대전제에 제기되는 물음들

백승욱을 비롯한 전후 질서 붕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전제는 다음과 같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주조한 규범 혹은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냉전과 탈냉전기를 관통하여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백승욱은 자신의 저서에서 전 지구적 뉴딜과 소련식 사회주의의 역사적 타협을 설명하

면서 프랭클린 D. 루스벨트의 정세 인식과 미래 비전에 주목한다. 책의 서문에서 사회운동의 동력을 언급하지만 정작 전후 질서의 형성에 있어서 서구 또는 비서구의 사회운동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들의 전망과 요구가 어떻게 실현되었거나 좌절되었는지 분석하지 않는다. 대신 본문에서 미국의 다자주의와 자유주의 이념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데 그친다.

이러한 분석상의 아쉬움을 차치하고서라도, 역사적 경험에 비춰볼 때 전후 질서 붕괴론의 대전제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주권 국가에 대한 존중과 다자주의에 기반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제대로 실현된 적이 있는가? 그러한 규범이 존재했으나 실제로 그 규범을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기자고 요구한 이들은 미국이나 서구 선진국이 아닌 과거 식민지를 경험했던 비서구 국가들이었지 않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전후 수립되었고 작동되었다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냉전 이후 미국 주도의 단극 질서, 미국의 패권이 자유롭게 행사되던 시기를 냉전 시대에 투영한 ‘회고적 상상’의 담론(Poter 2018)*은 아닐까?

미국이 주도하는 전후 질서에 대한 회의와 비판은 전후 합의가 이뤄진 직후인 195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다. 1955년 반동회의를 계기로 추진되었던 비동맹 운동, GATT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며 더욱 공정하고 평등한 경제질서를 만들자며 1964년 발족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와 유엔에서 제3세계주의가 강화되면서 1974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신국제경제질서 수립 선언」 등이 존재했다. 이러한 비동맹 운동을 이끌었던 제3세계 국가와 사회운동의 흐름은 1970년대 이후 서구에서 시작되어 주변부를 휩쓴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으로 인해 좌초되었다.* 오일쇼크 이후 스태그플레이션과 미국의 금태환 정치 선언, 폴 볼커가 주도한 기준 금리의 급격한 인상 등은 1980년대 일련의 외환위기를 일으켰고 이를 계기로 IMF의 주도하에 신자유주의적 처방에 따라 제3세계 경제가 재편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세계 곳곳에 개입하였다. 이에 맞서 그러한 미국의 행보가 군사적 일방주의이며, 오히려 해당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파괴자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반복해서 거론되는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사회운동이 제기한 비판을 떠올려보라.

2008년 이후 월스트리트의 손실을 막아주기 위해 시행한 양적 완화는 2010년과 2011년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의 식량 위기로 이어졌고, 이를 계기로 중동의 재스민 혁명이 촉발되었다. 당시 미국 오바마 정부는 경제 지원을 약속하며 튀니지와 이집트 등에서 정권 교체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사회적 혼란과 빈곤은 더욱 심해졌고, 결국 ISIS와 같은 극단적 이슬람

* 덧붙여, 비동맹 운동 스스로도 내셔널리즘에 입각한 근대 국가 건설에 자신들의 전망을 제한함으로써 제3세계에서의 연대를 침식하는 경향도 존재했다. 제3세계의 시각으로 냉전을 재조명하는 작업을 보려면, 『갈색의 세계사』(비자이 프리사드 지음. 박소현 옮김. 2015. 뿌리와이파리), 『비동맹 독본』(서동진·박소현 엮음. 2020. 현실문화)를 참고하길 바란다.

원리주의가 힘을 얻는 결과를 낳았다. 당시 양적 완화로 풀린 돈을 활용해 식량 위기에 편승하여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한 월스트리트 투자자들만 이득을 챙겼을 뿐이다.

한 마디로 주권 규범에 대한 존중이 결여한 건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마찬가지 아니었나 하는 회의가 제기될 수 있다. 나아가 근본적으로 전후 국제질서가 과연 국제적이고 자유주의적이었으며 질서정연하고 안정적이었는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덧붙여,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전후 국제질서가 붕괴하고 있다는 평가는 러시아가 영토를 정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잠재적으로 중국도 마찬가지로) 전후 질서의 핵심인 주권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전제하는데, 그러한 전제가 그간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다른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했던 사례에는 눈감도록 해주는 것은 아닌지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전후 질서 붕괴론은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와 외교 엘리트들이 설정하려는 신냉전 구도에서 자유주의 진영의 수사에 부합하게 될 위험도 존재한다. 어쩌면, 신냉전을 반박하는 것을 내세우지만 실은 신냉전론의 구도를 은연중에 (또는 의도적으로) 변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전후 질서 붕괴론이 제기하는 쟁점: 국제규범과 국제제도

그럼에도 전후 질서 붕괴론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 하나 있다. 그건 국제규범의 중요성이다.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이뤄진 몇 차례의 합의와 전후 수립 및 제정된 국제기구와 국제법은 지금도 중요한 참조점이다. 그것들을 통해 연성 수준에서 국제규범이 확립되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물론 명문화된 조약이나 국제법부터 느슨한 수준의 국제규범까지 어떤 것도 현실에서 온전히 실현된 적이 있냐고 물을 순 있다. 그렇게 완벽히 실현된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국제규범의 존재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 국가들의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말이다.

마치 자유-평등 명제와 같다. 그것들 또한 완벽히 실현된 적이 없다. 그렇지만 자유-평등 명제는 항상 저항과 혁명의 준거점이었다. 자유-평등을 반복해서 불러냄으로써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고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자고 요구할 수 있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제국주의적 행태를 비판하거나 초국적 기업과 금융의 극단적 이윤 추구를 규탄하는 등 국제규범에 근거한 윤리적 행동에의 요구는 지금도 유효하고 정당하다.

최근 주목할 만한 사례가 하나 있다. 2023년 12월 29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에 대해 '국제 제노사이드 협약'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이스라엘을 제소하였다. 그 이전인 2023년 11월 남아공은 방글라데시 등과 함께 가자지구 내에서 자행되는 전쟁범죄를 멈춰달라는 수사의뢰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출하였다. 이어 멕시코와 칠레도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규탄하며 ICC에 해당 혐의에 관한 수사를 요

구했다.

이 재판 과정에 주목해야 하는 건 세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앞서 언급한 대로 국제규범과 국제 제도가 지닌 정치적 가능성이다. 그 둘은 비판의 근거이자 변화의 지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강대국들이 아닌 이념과 진영 대결 사이에 낀 여러 국가에서 그러한 가능성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니 단순히 작동하지 않는다고 폐기하는 건 손쉽지만 어리석은 방법이다. 그보다는 (분명 어려운 일이지만) 강대국 주도의 질서에 맞서 규범과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둘째, 제노사이드의 대명사인 남아공이 제소의 주체라는 점이다. 과거 남아공은 인종적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소수의 백인 지배 세력이 다수의 유색인종 피지배 세력을 착취·억압하는 구조를 구축했다. 1948년 이전 시기에는 이주민인 백인이 원주민인 흑인을 비롯한 비백인을 지배하기 위한 법과 제도,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졌고, 이를 근거 삼아 국가권력은 비백인을 차별하고 탄압했다. 1948년부터 1994년 사이에는 아파르트헤이트 인종차별정책을 실시하여 인종, 종족 집단 간 갈등이 더욱 격화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남아공에선 하나의 공동체로의 회복과 지역 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탈아파르트헤이트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상호의존과 공존에 뿌리를 둔 우분투(Ubuntu)의 가치체계를 정립하고 진실과화해위원회(TRC)를 통해 과거를 반성하고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가고 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이 충분한가, 제대로 된 방향인가에 대해선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강조하고 싶은 건 인종학살의 공간이자 인종청소를 자행했던 주체인 남아공이 최근 벌어진 가자지구에서의 제노사이드를 비판하는 데 앞장섰다는 것이다. 과거 제노사이드를 당했던 유대인들이 현재 다른 제노사이드를 행하는 이가 되었다는 역설과 대비시켜 볼 때, 이 재판의 구도는 더욱 의미심장하다.

따라서 근본적인 차원에서 국제규범을 다시금 재확인하고 그에 근거해 현재 국제질서의 변동을 평가하는 것 또한 중요한 또 하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누구에게 어느 정도로 보장되고 있는가를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현 정세가 사회운동에 제기하는 과제들

국제질서 변동에 관한 지배 담론의 문제점

이상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냉전과 전후 질서 붕괴론에는 공통 전제가 있다. 바로 국가중심적 시각이다. 이 때문에 신냉전과 전후 질서 붕괴론 모두 일정한 한계에 부딪힌다.

첫째, 안보에 관한 여러 쟁점을 국가의 생존이라는 하나의 쟁점으로 환원해 버린다. 그러나 국

경을 가로지르는 계급, 젠더와 퀴어, 장애, 생태 등의 수많은 갈래는 결코 국가의 안위나 이익으로 치환될 수 없다.

둘째, 국가 간 불평등한 권력 구조를 배제하고 강대국 간의 게임으로 바라본다. 물론 약소국들 사이의 연합을 통한 제3의 가능성을 찾으려는 움직임도 생겨날 순 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여전히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따지게 된다. 이는 앞선 첫 번째 한계와 연관되어 결국 국가 대 국가의 틀로 나머지 쟁점을 흐릿하게 해버린다. 강대국들의 경쟁과 공생의 모순적 구조를 타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구조 속에서 재생산되는 불평등이 문제 또한 제대로 대처할 수 없게 된다.

다르게 말해,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현재 담론 지형의 가장 큰 문제는 국제질서의 변동이 단지 세계적 차원에만 논의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국제질서의 변동은 세계와 지역, 지역과 사회를 가로지르며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상호교차성을 형성하는 여러 항의 역임을 국내질서에서 파악하듯이, 국제질서의 변동에서도 그것들이 상호작용하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

체제 전환 운동의 세력화로 전쟁 체제와 군사주의 강화에 맞서야

만약 국제질서가 신냉전론의 구도대로 변화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강대국들의 군사적 대치가 더욱 격화할 것이다. 그럴 때,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앞서 언급한 비어든의 표현을 빌리면, 전쟁 체제가 더욱 강해질 수 있다. 군사주의 경향이 강화되는 것이다. 다양한 수준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그 자체로 막대한 에너지를 소진함으로써 기후위기를 가속화한다. 이뿐만 아니라 기후정의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국제적 연대를 불가능하게 한다. 그 와중에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내전, 각종 국지전과 테러는 사회를 붕괴시키고 자연을 황폐화한다.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에서 멸종을 거듭해 온 온갖 생물종들은 군사적 갈등이라는 또 다른 방식을 통해 다시금 멸종으로 내몰린다. 세계와 지구 모두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든다. 사회가 불안정해지면서 극우화가 더욱 진전되고 정치적 대립은 더욱 격화된다.

증오에서는 아무것도 태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증오의 연쇄는 쉬이 끊어지지 않는다. 현 체제가 어떻게 증오를 만들어 내는지 묻지 않은 채, 증오를 불확실한 위협, 본질적 위협으로 둔갑시키며 대처와 경쟁 나아가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정당화하는 주장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중심적 시각과 강대국 결정론에서 벗어나서 국제질서의 경계에 서면, 국제규범을 온전히 실현하길 바라는 수많은 요구 □ 이미 존재하는 요구들이 우리 눈앞에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 목소리를 더욱더 드러내고 그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듣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국가를 가로질러 작동하는 상호교차의 선들을 포착할 날카로운 관점과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낼 연합의 기획

* 우라사와 나오키의 그래픽노블 『플루토』에서 안드로이드 형사 게지히트가 죽기 직전에 남긴 말을 인용한 것이다.

과 실천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시진핑 체제의 신장 위구르와 홍콩에 대한 탄압, 바이든 행정부의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방관, 유럽 각국에서의 이슬람에 대한 혐오와 중동 이주민·난민 차별 등은 비단 다른 나라의 안타까운 일로 남겨질 수 없다.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지난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불평등 심화, 다국적 기업과 국제 은행 및 금융가들의 중국에 대한 투자 감소, 미국 정부의 각종 제재 등이 시진핑 체제가 더 권위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행동에 나서도록 한다. 그러한 역사적 조건의 형성은 국제질서 변동의 한 결과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대일로에 맞서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등을 엮어서 새로운 물류·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IMEC 기획, 석유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노력,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란의 핵 협상 무산 등은 중동의 정치경제적 여건을 변화시켜 지금과 같은 팔레스타인 학살 사태로 이어졌다.

작년 국군의 날을 맞이해 윤석열 정부에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사열식을 하는 장면은 뭘 보여주는 걸까? 핵무장론의 실현 가능성이 힘을 얻고 있는 한국의 상황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각종 의제와 투쟁들은 어떤 조건과 상황에 놓여 있는 걸까? 국제질서는 곳곳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국제질서의 안정과 회복, 평화를 향한 동력은 단지 지도자의 리더십이나 국가 전략과 정책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단순하게 말한다면, 역사는 우리에게 아래로부터의 압력 없이는 자유롭고 평등한 방향으로 세상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었다. 국내외 사회세력의 분출하는 정념과 요구, 변화하는 정세가 만들어 내는 역사적 조건이 복합적으로 변화의 동력을 구성하고 그 방향을 뒷받침한다. 우리 사회운동이 마주하는 한국 사회의 여러 투쟁 현장을 어떻게 재구성할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때다.

국제질서 변동을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① : 공존을 지향하기

그렇다면, 국제질서의 변동을 우리는 어떤 시야를 갖고서 마주해야 할까? 우리가 그리는 다른 세계는 도대체 어떤 세계일까? 국제질서를 규정하는 주요 원리는 주권(sov^ereignty)이다. 주권은 한 국가가 자신이 관할하는 국경으로 구획된 영토 안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니고서 통치를 할 수 있는 최상위 권리를 가리킨다. 주권에 대한 존중과 실현은 전후 질서가 내세운 핵심 가치다. 그러나 과연 주권을 담보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우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보편적이지 않다. 국가에 한정해서 보더라도, 국가들은 서로 불평등하다. 더 많은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가진 국가가 그렇지 못한 국가를 영토적으로든 비영토적으로든 예속시킬 수 있다. 국가 외 국제질서를 구성하는 다양한 행위자, 행위소를 놓고 보면 또 어떠한가. 이주민과 난민들은 주권을 구성하는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대표성은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다. 현 체제에서 권리는 이미 권리를 지닌 주체로 인정되는 존재들에게

만 주어진다. 그들만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자격이 없는 이들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내몰린다. 보다 근본적으로 주권이 전제하는 권리 개념은 독단적이고 고립된 개인주의에 근거한다. 그래서 주권을 위협하는 여러 안보 이슈들은 자기 자신의 안위를 확보하기 위한 과제로 여겨진다.

그럼 주권의 보장과 실현이 증오를 끊어내고 폭력을 멈추고 다른 세상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줄 수 있을까? 여기서 잠시 남아공의 이스라엘 제소 사례로 돌아가 보자.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 문제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는 차별과 억압을 해결하려는 방향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다. 이 건 재판 자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국제질서로의 이행에서 중요한 쟁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주요한 해법으로 제시되는 게 바로 2국가 방안이다. 그런데 과연 2국가 방안이 정말 타당하고 바람직한 방법인지는 되물어봐야 한다. 국경만 긋고 주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팔레스타인은 이미 이스라엘에 사회경제적으로 종속된 상태다. 팔레스타인이 온전한 하나의 사회로 기능하기 위해선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 안정적이고 평등한 사회경제적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차별과 그에 대비한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가 일거에 사라질 수 없다. 이는 지속해서 두 사회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충돌을 일으킬 것이다. 심하게는 테러가 반복될 수도 있다. 불안정이 높아지면 다시금 전쟁과 학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제기하는 이들은 1국가 방안을 새롭게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서 말하는 1국가 방안의 핵심은 '공존(coexistence)'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상호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과거를 반성하고 앞으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이스라엘의 시온주의와 같은 극단적 이데올로기나 인종차별적 정책 등을 배격하고 사회 내 다양성을 존중하는 토대를 갖추는 게 관건이다. 이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존중을 실현하는 일이자, 이스라엘 내에서 자행되는 각종 탄압을 멈추고 이스라엘 자체가 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일이다. 이 건 팔레스타인에서도 마찬가지다.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는 시온주의로부터 유대주의를 구출하려는 이론적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버틀러 2016). 거기서 버틀러는 타자를 추방하기보다는 타자와의 불가피한 동거(cohabitation)를 받아들이고 상호의존의 관계를 만들어가려는 자세를 요청한다. 이러한 버틀러의 문제의식을 참고할 때, 1국가 방안을 다시금 제기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지상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함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남아공의 탈아파르트헤이트 시도는 공존의 지향이 중요한 가치임을 시사한다. 물론 남아공은 이미 하나의 국민국가를 이룬 상태라는 점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는 조건이 완전히 다르다. 그럼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 그리고 두 사회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바

꾸지 않고서는 그 지역에서 평화가 도래하긴 어렵다는 걸 알려준다.

버틀러의 얘기를 좀 더 쫓아 가보자. 버틀러에 따르면, 취약성은 존재의 상호의존성에 항상 내재된 것이다. 우리는 상대를 지탱하고 있는 것 못지않게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여러 관계에 얽매어 있다. 서로의 삶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맞물려 있는가에 따라 우리는 상대와 협력하기도 하고 상대를 해하기도 한다. 때로는 상대를 미워하고 그 상대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생명은 의존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일상화된 구조적 폭력부터 노골적으로 자행되는 물리적 폭력은 바로 이런 존재론적 의존성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비폭력은 단지 폭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며,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라는 질문이 비폭력을 실천하는 일의 중심에 놓인다. 달리 말해, 버틀러는 돌봄은 무한히 아름답지만 한 도덕적 가치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돌봄은 취약성으로부터 비롯되는 불평등의 정치, 상호의존성에 내재한 폭력적 가능성을 다른 식으로 전유하는 정치적 실천이다.

국제질서 변동을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②: 관계를 재발명하기

한편으로 우리는 법과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우리 삶의 필요와 기회를 이전과 다르게 분배하고자 한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도덕적으로 올바름을 추구하며 타인에 대한 자선과 국가들 사이의 연대를 촉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실천은 분명 세계를 변혁하는 데 필요하다. 하지만 법제를 개혁하고 도덕에 호소하는 것만을 사회운동의 유일한 목표로 삼을 순 없다. 이것들과 더불어, 사회운동에 제기되는 과제는 지금과는 다른 관계 양식을 재발명하는 것이다.

현 체제는 불평등을 재생산하며 전쟁 위기를 고취한다. 여기서 생명들은 끊임없이 썩해지면서 누군가는 배제되고 외면받는다. 버틀러는 취약한 생명들을 애도하면서, 그러한 생명들을 서로 보살피는 돌봄의 실천이야말로 비폭력적 저항의 한 면모라 주장한다. 돌봄의 실천은 단순히 서로 돕자는 자선과는 분명히 다르다(스페이스 2022). 자선에는 현재 불평등한 사회 체제에 대한 비판이 결여되기 쉽다. 우리의 필요를 평등하게 충족하고 각자의 역량을 온전히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선 구조적 모순의 극복을 목표로 협력해야 한다.

이걸 돌봄 정치*라고 불러야 할지는 뭐라고 불러야 할지는 모르겠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시대를 안정되게 평화롭게 살아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점이다. 좋은 사

* 돌봄 정치를 오늘날의 폭력적 지배 체제 극복의 길로 제안하는 연구로 김정희원의 “반폭력으로서 돌봄 정치”(2023. 향해문화 제120호, p.130-153)을 참고하길 바란다. 돌봄 이론으로 국제관계를 새롭게 사유하려는 시도에 관해서는 『돌봄: 정의의 심장』(다니엘 잉스 지음, 김희강·나상원 옮김, 2017. 박영사)의 4장 “돌봄 이론과 국제관계”도 있다. 잉스는 돌봄을 세계시민주의의 전통에 둔다. 이 때문에 올바름을 실현하자는 도덕적 주장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며, 심지어 돌봄을 실현하는 걸 목표로 한다면 정당한 전쟁을 수행하는 것도 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엔 어느 정도 돌봄을 낭만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반해, 버틀러는 취약성과 상호성의 존재론 토대를 재정초함으로써 돌봄을 답이 아닌 하나의 질문으로 정식화한다. 돌봄이라는 질문을 풀어내기 위한 수행적 실천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람이 많은 세상이 아니라 나쁜 사람을 만나더라도 두렵지 않을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모든 생명이 평등하게 자신의 역량을 실현해나갈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때, 비로소 갖춰질 수 있다. 이를테면,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요구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다. 팔레스타인이 해방된 세계는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에 한 발짝 더 다가간 세계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운동은 '냉전의 섬' 간 연대를 잊지 말아야 한다.** 국제질서 변동에 관한 지배 담론은 지역과 국경을 가로지르는 평화 운동의 자리를 은폐한다. 냉전의 섬 간 연대는 국가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세계와 지역을 교차하는 비폭력적 실천의 주요 사례다.

동아시아에는 4.3을 겪은 제주도와 유사한 경험을 가진 냉전의 섬들이 많다. 1945년 미군이 점령한 이후 지난 70년간 미군의 해외 군사기지였던 오키나와, 국공내전의 끝에 등장해 냉전의 최전선으로 자리 잡은 뒤부터 군사적 긴장의 카나리아가 된 금문도, 탈냉전기 국지적 심리전의 무대가 된 연평도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이 섬들은 서로 다른 시기에 걸쳐 군사적 대결의 장소가 되었다. 그럼에도 세계-국가-지역 등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이 교차하는 장소로서, 이 섬들은 주민들의 삶과 국가 간 관계를 반영해왔고, 또 역으로 그것들을 변화시켰다. 그 점에서 이 섬들은 공통된다.

냉전의 섬들에 존재하는 공통성은 전쟁을 비롯한 폭력적 갈등들은 비단 국가 간 관계로 환원될 수 없다는 걸 보여준다. 즉 오키나와가 겪은 고통과 군사기지를 둘러싼 여러 문제는 일본과 미국의 대립만으로 규정될 수 없다. 일본이라는 국민국가 형성기에 오키나와와 홋카이도가 식민화되는 과정은 국가중심적 시각에선 포착할 수 없다. 군사기지를 중심으로 여성들이 겪은 착취와 억압 또한 시야에서 사라진다. 4.3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통해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거듭나도록 하고자 했던 투쟁들 또한 국가중심적 접근의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동아시아 냉전·분단 체제가 불안정해지거나 군사적 긴장이 격화될 때마다, 이 섬들은 마치 공동의 운명을 지닌 듯이 격변의 소용돌이에 함께 휩싸였다. 서로 다른 지역에 남겨진 유사한 상흔들이 이를 예증한다. 이 공통된 상흔들은 이곳에서 벌어진 폭력을 기억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출발점이 되었다. 새로운 관계 양식의 정립은 공통성을 발견 또는 발명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 제주도, 오키나와, 금문도 등 냉전의 섬 중 어느 한 곳만 평화로워질 수 없다. 어느 한 곳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다른 어느 곳에서도 결코 평화가 이룩될 수 없다. 제주도의 평화는 곧 오키나

* 청소년인권연대 지음의 소개문을 참고하였다. "우리는 좋은 어른이 많은 세상보다는 나쁜 어른을 만나더라도 두렵지 않은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 동아시아 냉전의 섬에 관한 연구로는 김민환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동아시아의 평화기념공원 형성 과정 비교연구: 오키나와, 타이페이, 제주의 사례를 중심으로(2012)", 정근식의 "동아시아 '냉전의 섬'에서의 평화사상과 연대"(2016. 아시아리뷰 제5권 제2호, p.211-232), 마이클 스조니의 『냉전의 섬, 금문도』(2020. 김민환·정영신 옮김. 진인진) 등, 동아시아 군사기지 반대운동에 관해선 정영신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동아시아 분업구조와 반기지운동에 관한 연구(2012)" 등을 참고하라.

와의 평화이자 금문도의 평화이고, 그 역도 마찬가지다.

동아시아 냉전·분단 체제라는 구조를 전환할 때 비로소 평화에 가닿을 수 있다. 국가 안보, 국가의 자기 생존 이상을 사고하는 담론과 요구를 만들어 가야 한다. 냉전의 섬을 평화의 섬으로 만들려고 했던 지난 실천들을 기억하자. 이 지역들에서 새로운 관계를 창출하고자 했던 우리의 노력을 이어가자.

나가며

체제 전환 운동의 외침은 단순히 전쟁에 반대한다는 구호에 머무를 순 없다. 현 체제가 작동하는 메커니즘, 현 체제가 발 딛고 서 있는 관념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현 국제질서 변동에 관한 담론은 오늘날 안보 이슈로 제기되는 당면 과제들을 특정 국가의 생존 여부로 치환한다. 그때 자기는 도대체 누구인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자기라는 게 존재하는가? 이를 끊임없이 되물음으로써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새로운 자세로 국제질서의 변동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 사회운동의 과제가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주권 국가는 성립할 수 없는 명제라는 걸 말이다. 거기엔 언제나 주권 국가의 성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어떤 존재가 남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안전을 빌미로 치안 권력이 강화되는 식으로 국가폭력이 정당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체제 전환을 지향하는 사회운동의 윤리적·정치적 실천은 최대주의가 아니라 최소주의에서 비로소 시작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진부하고 이미 낡아버렸을지 모를 존재론적 규범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근본적인 존재론적 토대인 상호성을 다시금 불러내는 것 말이다. 그럴 때, 오늘날 기후정의와 재생산 정의 등을 외치는 우리가 제기하는 돌봄이라는 관계 양식은 평화를 향한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돌봄은 갈등 없이 아름답기만 한 그런 게 아니다. 서로의 생명과 안녕을 지키고 보살피는 일에는 항상 일정한 공격성, 이를테면 격분과 미움과 슬픔 등이 뒤섞여 있다. 그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죽여 없애거나 죽게 내버려두지 않도록, ‘차마’ 어찌지 못하는 마음으로(김영욱·류은숙 2022) 서로의 삶을 엮어내고 돌보도록 하는 정치적 기획이 요구된다. “평화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갈등을 정의롭게 풀어가는 과정이다.”, “평화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이용석 2021).” 부단한 실천의 무수한 시도 속에서 점차 평화에 가닿을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 자료

- 01 Baines, J., & Hager, S. B. 2020. Financial crisis, inequality, and capitalist diversity: A critique of the capital as power model of the stock market. *New Political Economy*, 25(1), 122-139. <https://doi.org/10.1080/13563467.2018.1562434>
- 02 Baines, J., & Hager, S. B. 2023. Rentiership and Intellectual Monopoly in Contemporary Capitalism: Conceptual Challenges and Empirical Possibilities. *City Political Economy Research Centre Working Paper Series*, (2023-04), 1-43. <http://hdl.handle.net/10315/41164>
- 03 Hager, S. B., & Baines, J. 2020. The tax advantage of big business: how the structure of corporate taxation fuels concentration and inequality. *Politics & society*, 48(2), 275-305. <https://doi.org/10.1177/0032329220911778>
- 04 Isabella M. Weber & Evan Wasner. 2023. Sellers' inflation, profits and conflict: why can large firms hike prices in an emergency?. *Review of Keynesian Economics* 11(2), 183-213. <https://doi.org/10.4337/roke.2023.02.05>
- 05 Porter, P. 2018. A world imagined: Nostalgia and liberal order. *Cato Institute Policy Analysis*, 843, 1-24. <https://www.cato.org/policy-analysis/world-imagined-nostalgia-liberal-order>
- 06 Spade, Dean. 2011. *Normal life : administrative violence, critical trans politics, and the limits of law*. Duke University Press.
- 07 구갑우. 2008. 『국제관계학비판』. 후마니타스.
- 08 김민환. 2012. "동아시아의 평화기념공원 형성과정 비교연구: 오키나와, 타이페이, 제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09 김정희원. 2023. "반폭력으로서 돌봄 정치." 『항해문화』 제120호, 130-153.
- 10 김종철. 2022.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제국주의 :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정치사회학적 의미". 『경제와사회』 136호, 114-147.
- 11 김종철. 2022. "화폐팽창과 제국주의". 웹진 인-무브. 출처: <https://en-movement.net/412>
- 12 다니엘 잉스 지음. 김희강·나상원 옮김. 2017. 『돌봄: 정의의 심장』. 박영사.
- 13 데보라 베네치알레. "미국을 전쟁으로 이끄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 비자이 프리샤드 엮음. 심태은, 이재오, 황정은 옮김. 2022. 『신냉전에 반대한다』. 두번째테제.
- 14 동아시아 연구원. 2023. "북한 신냉전 담론 시리즈". 출처: https://www.eai.or.kr/new/ko/etc/search_list.asp?board=%27kor_special%27,%27kor_workingpaper%27,%27kor_issuebriefing%27,%27kor_book%27,%27kor_reports%27,%27kor_multimedia%27&more=1
- 15 딘 스페이스 지음. 장석준 옮김. 2022. 『21세기 상호부조론』. 니케북스.
- 16 마이클 스조니 지음. 김민환·정영신 옮김. 2020. 『냉전의 섬, 금문도』. 진인진.
- 17 메데아 벤자민, 니컬러스 J. S. 데이비스 지음. 이준태 옮김. 2023. 『당신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모른다』. 오월의 봄.
- 18 박명림·조소현. 2022. "안전하고 공정한 세계-지구시스템을 위한 행성성과 행성적 통로". 『공간과 사회』 제32권 4호, 173-210.
- 19 베티 리어든 지음. 황미요조 옮김. 2020. 『성차별주의는 전쟁을 불러온다』. 나무연필.
- 20 브랑코 밀라노비치 지음. 서정아 옮김. 2017. 『왜 우리는 불평등해졌는가』. 21세기북스.
- 21 브랑코 밀라노비치 지음. 정희은 옮김. 2011.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파이카.

- 22 비자이 프리샤드 지음. 박소현 옮김. 2015. 『갈색의 세계사』. 뿌리와이파리.
- 23 상탈 무페 지음. 이승원 옮김. 2022. 『녹색 민주주의 혁명을 향하여』. 문학세계사.
- 24 서동진·박소현 엮음. 2020. 『비동맹 독본』. 현실문화.
- 25 에롤 E. 해리스 지음. 이현휘 옮김. 2009. 『파멸의 묵시록 - 과학적 패러다임과 일상의 사유양식』. 산지니.
- 26 이용석. 2021. 『평화는 처음이라』. 빨간소금.
- 27 이해정. 2022.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 바이든의 민주주의 기획, 그리고 새로운 국제 (무)질서". 『동향과 전망』 제116호, 9-69.
- 28 정근식. 2016. "동아시아 '냉전의 섬'에서의 평화사상과 연대". 『아시아리뷰』 제5권 제2호, 211-232.
- 29 정영신. 2012. "동아시아 분업구조와 반기지운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30 주디스 버틀러 지음. 양효실 옮김. 2016. 『주디스 버틀러, 지상에서 함께 산다는 것』. 시대의창.
- 31 주디스 버틀러 지음. 김정아 옮김. 2021. 『비폭력의 힘: 윤리학-정치학 잇기』. 문학동네.
- 32 홍호평 지음. 하남석 옮김. 2022. 『제국의 충돌』. 글항아리.

오늘날 제국주의와 진영론에 맞선 반제반전 평화운동

노동자 국제연대 반전평화 운동을 조직하자

양동민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mtosocialism@gmail.com

1. 다시, 위기와 전쟁의 시대로 오기까지

신자유주의 시대 이전의 자본주의

자본주의와 자본주의 이전의 시대를 통틀어, 제국주의란 '강대국이 자신의 경제적·군사적 이익을 위해 약소국을 침략·지배·수탈하는 정책 또는 체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특히 아직 자본주의가 완전히 발달하기 전까지 제국주의는 노골적으로 군사력에 의해 타국의 영토를 침범하고 지배하는 양상을 띄었다.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뒤로 제국주의는 타국을 강제로 침략, 지배, 수탈한다는 점에서 그 본질은 같으나, 형식을 조금씩 달리했다. 20세기 말에 접어들며 영국, 프랑스 등 먼저 독점단계에 도달한 선발자본주의 국가들은 국내 과잉자본의 수출을 위해 전 세계를 식민지로 만들었다.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등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도 질세라 빠르게 식민지를 확장했다. 곧 더 이상 지구에 새로 정복할 식민지가 없어졌고, 이때부터 제국주의는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영토재분할'이라는 형태를 노골적으로 띄게 되었다. 제국주의 간 경쟁은 상대를 죽여야만 끝나는, 피할 수 없는 충돌을 의미했다. 제국주의 열강들 간의 패권대결은 1,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어마어마한 파괴를 달성한 자본주의는 다시 생명력을 얻고 전후의 폐허 위에서 새로운 성장을 시작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주의 세계질서에는 상당한 변화가 발생했다. 미국이 영국과 독일을 제치고 압도적인 세계 패권국가로 올라섰고, 기존의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은 미국의 하위파트너로 재편됐다. 한편 민족해방 투쟁의 열풍 속에 식민지 국가들 중 상당수가 제국주의 국가들로부터 독

립했다. 이런 조건 속에서 제국주의 열강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노골적인 군사적 침략과 정치적 지배 대신 경제적 종속을 주되게 활용하게 됐다.* 한편 소련은 1917년 러시아 혁명을 통해 노동자국가를 수립했으나, 1930년대 스탈린주의 반혁명으로 인해 관료적 국가자본주의로 변모했다. 1930년대 후반 대숙청으로 반혁명이 완성된 소련은 2차 세계대전 직전부터 군사적 제국주의로서 주변 국가들과 내부의 소수민족을 억압, 수탈하기 시작했다. 이 때부터 제국주의 패권대결은 이른바 서방진영 국가들을 휘하에 거느린 미국과, 이른바 동방진영 국가들을 휘하에 거느린 소련의 냉전이란 형태로 펼쳐졌다. 1950년 한국전쟁 또한 미국과 소련의 제국주의 패권대결이 낳은 하나의 대리전이였다.

2차 세계대전의 폐허 위에서 소생한 자본주의 체제는 25년여간 노동자의 구매력 향상과, 대규모 군비경제 지속에 방점을 둔 유효수요 확장정책으로 성장을 이어갔다. 그러나 자본의 왕성한 확대재생산으로 이윤율 저하경향이 다시 본격적으로 심화했다. 여기에 유효수요 확장 정책이 낳은 생산과잉의 심화, 화폐발행량 확대와 금태환 폐지, 오일쇼크가 합쳐져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자본주의는 다시 구조적 한계점에 봉착했다.

신자유주의로의 전환과 미국 단일 패권질서

자본주의는 이 구조적 한계를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으로 돌파했다. 신자유주의는 세계화를 통해 임금비용을 낮추고 새로운 시장을 형성했다. 또 금융화를 통해 부족한 산업이윤을 금융수탈로 벌충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균형추로서 중국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1972년 미국과 전격 정상회담을 갖고 소련을 고립시키는 데 협력하는 대가로 미국에게서 시장경제 전환을 지원받기로 하는 역사적 거래에 나섰다.** 소련은 관료적 국가자본주의의 비효율성과 관료성으로 인해 쇠퇴해갔고, 점차 미국의 단일패권질서가 강화되었다. 1980년대 중국의 시장경제 전환, 1989~91년 동유럽과 소련의 붕괴는 스탈린주의 진영을 소멸시키며 세계를 단일 공급망과 단일 시장으로 통합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금융화라는 한 묶음의 대책이 세계를 지배했다.

* 물론, 경제적 종속에 방해가 되는 운동과 세력의 제거를 위해 미국과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은 얼마든지 비밀리에 군사적 수단을 사용했고, 노골적인 군사적 개입도 마다하지 않았다.

** 중국은 1949년 농민이 주도하는 자체 혁명을 통해 스탈린주의 체제를 수립했다. 중국은 쿠바, 베트남처럼 '사회주의' 체제를 표방했지만, 어떤 노동자혁명도 없이 이들 나라에 수립된 스탈린주의 체제는 이미 반혁명이 완성된 소련에서와 마찬가지로 '관료적 국가자본주의'일 뿐이었다. 중국에서 관료적 명령경제에 내재된 관료적 실적주의는 1950년대 말 대규모 아사자를 발생시켰고, 이 가운데 관료적 명령경제를 고수하려는 관료집단과 시장경제로 전환하여 통상적인 자본가계급으로 변신하려는 관료집단 간의 충돌이 펼쳐지다가, 1966~73년의 이른바 문화대혁명을 통해 관료적 명령경제의 극단적 폐해가 확인된 후 관료집단 전반의 방향이 시장경제 전환으로 정리됐다.

중국의 성장과 신자유주의 시대의 종언

중국은 “도광양회”를 내세우며 1980~90년대 미국의 파트너로서 성장을 지속했다. 미국·서유럽·일본에 집중돼 있던 공장은 남미·동유럽·동아시아를 향해 빠져 나갔고 최종 귀착지로 중국을 향해 몰려들었다. 세계 자본주의는 ‘중국의 생산과 미국의 소비’라는 양대 축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911사태 이후 미국이 중동에서 전쟁을 치르는 동안 중국은 “전략적 기회의 시기”를 가졌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본격적으로 “새로운 강대국 관계 모델”을 미국에게 수용하라고 요구했고, 이후 미국에 맞선 패권 ‘추격자’로서의 지위를 본격화했다.

한편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금융화는 40여년 간의 변화발전 끝에 한계에 봉착했다. 금융화는 부족한 산업이윤을 금융수탈로 벌충하는 ‘수탈의 강화’라는 점에서 자본주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었다. 산업자본의 이윤율은 제고되지 않는 상태에서 금융화의 폭발적인 전개는 강력한 금융거품을 만들었고, 이는 2000년 닷컴버블, 2008년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2008년 금융위기에 더불어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결과로 급격한 삶의 후퇴를 경험한 선진국 노동자민중의 분노가 거대한 운동적 에너지를 공급했다. 2010년대 초반 미국의 월가점령운동, 스페인 분노한자들의 운동, 그리스 긴축반대운동, 2010년대 후반 프랑스 노란조끼 운동, 미국의 BLM 등 계급투쟁이 솟구치는 국면들이 있었고, 미국의 DSA의 부상, 그리스의 시리자, 스페인의 포데모스 집권 등의 사건이 있었다. 다른 한 편 신개량주의로부터 정치적 대안을 찾지 못한 노동자민중은 우경화된 흐름으로 빨려들었다. 미국의 트럼프, 영국의 보리스,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와 같은 보호주의, 극우 세력이 이 에너지를 발판삼아 권력을 잡았고, 독일을 위한 대안, 프랑스 국민전선 등도 성장중이다. 자국으로 공장을 다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무역관세, 이주장벽 등 보호주의와 역세계화 흐름이 본격화됐다.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해법은 모순을 더욱 폭발적으로 누적시키고 있을 뿐이다. 세계 자본주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천문학적인 양적완화에 더해 코로나 시기 또 한번 천문학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펴서 가까스로 대공황을 막아냈다. 그러나 이는 다시 한 번 천문학적인 금융거품의 축적,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 금융정책은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경제대공황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스텝을 밟고있지만, 점점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세계화는 무역전쟁, 디커플링, 블록화/진영화로 대체되었다. 신자유주의적 해법은 수명을 다했고, “중국의 생산과 미국의 소비”라는 경제적 동맹도 함께 수명을 다했다. 다시 수명이 다해가는 자본주의 체제에게 남은 해법은 상대 진영에게 위기와 고통을 전가하는 것 뿐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다시 제국주의 진영 간 패권대결, 그리고 그 최종적인 형태인 전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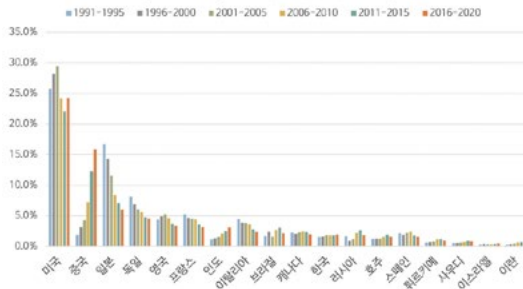
2. 오늘날 제국주의 패권대결의 양상

30년 동안 국가 간 세력관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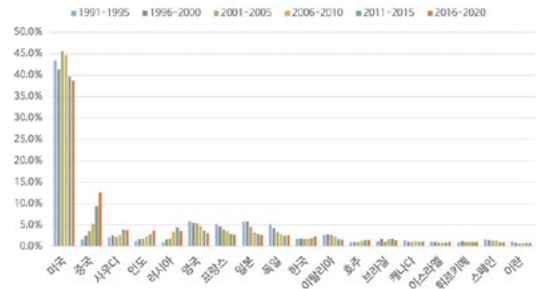
30년 간 국가 간 세력관계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19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간 세계 총 GDP에서 국가별 비중의 변화를 보면, 중국은 눈부신 상승을 하여, GDP 세계 2위가 됐다. 일본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국가들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상승하다가 2008년 금융위기로 하락한 뒤 다시 회복하고 있다. 인도, 브라질, 러시아의 추세적 상승이 관찰된다.

세계 총수출에서 국가별 비중에서도 중국은 눈부신 성장을 기록해 미국을 앞질렀다.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캐나다, 스페인 등 기존 선진국들은 공히 추세적으로 하락했다. 한국, 싱가포르, 인도, 멕시코, 러시아, 브라질, 사우디, 튀르키예 등 신흥국들은 꾸준한 성장추세를 보인다. 세계 총해외직접투자에서 국가별 비중 역시 수출에 비해 특정국가로의 쏠림이 더 크고, 기존 선진국들과 신흥국들 안에서도 흐름이 서로 다르다. 중국, 일본, 독일, 캐나다, 한국, 러시아의 성장세가 보인다. 특히 중국이 자본수출에서도 세계 1위까지 올라갔다는 점이 주목된다. 미국, 프랑스, 영국, 스위스는 하락했다. 브라질, 사우디, 인도, 튀르키예는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세계 총근비지출에서 국가별 비중은 경제력 지표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미국의 하락과 중국의 상승이 교차했지만, 여전히 그 격차가 매우 크다. 경제력 지표에서 뒤쳐져있던 사우디, 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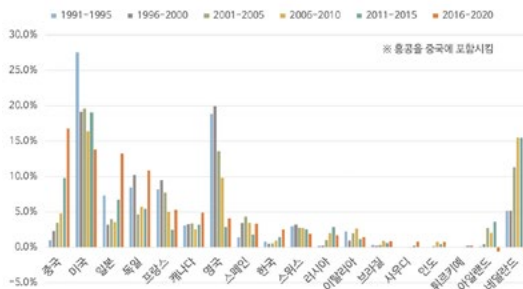
세계 총GDP에서 국가별 비중의 변화
(1991-2020, 세계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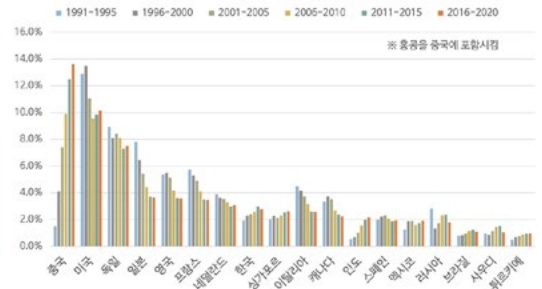
세계 총 근비지출에서 국가별 비중의 변화
(1991-2020, SIPRI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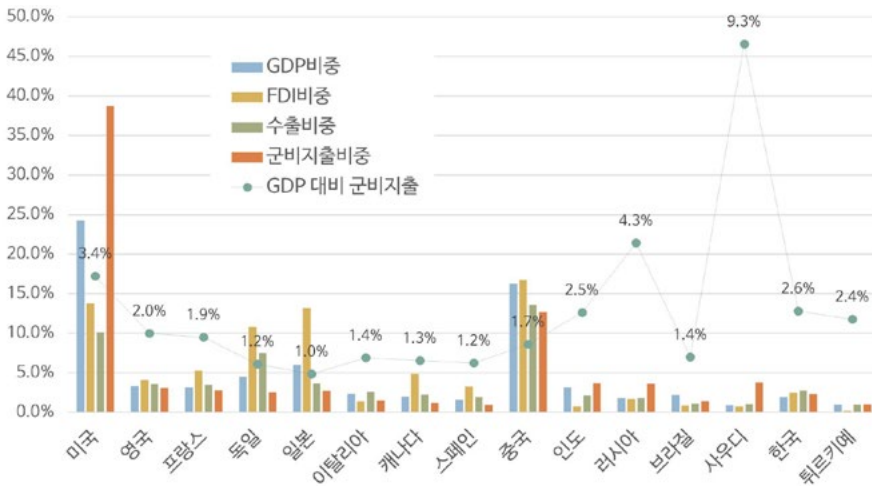
세계 총 해외직접투자에서 국가별 비중의 변화
(FDI outflows, 1991-2020, 세계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



세계 총 수출에서 국가별 비중의 변화
(상품+서비스, 1991-2020, 세계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



러시아가 3~5위를 차지했다.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은 꾸준히 하락했다. 한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 이스라엘, 튀르키예, 이란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세계 주요분야에서 국가별 비중 비교 (2016-2020, 세계은행·SIPRI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

위 그래프는 2016~2020년 세계 주요분야(GDP, FDI, 수출, 군비지출)에서의 국가별 비중을 비교해 보여준다. 마지막 그래프를 보면서, 지난 30년 간 국가 간 세력관계가 변화한 결과는 이렇게 요약 해볼 수 있다.

중국이 엄청나게 부상해서 미중 패권대결이 본격화되기에 이르렀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 대국이지만, 경제력에 비해 군사력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력에서 미국을 상당히 추격 (수출과 FDI)했지만, 군사력에서는 미국에 한참 못미친다. GDP 대비 군비지출 비중도 2022년 기준 미국은 3.5%이나 중국은 1.6%로 차이가 난다.

인도, 사우디,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군사력을 엄청 증강하며 자신의 이익을 국제사회에서 강하게 표출하려는 의도를 현실화해왔다. 이들은 경제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핵무력은 미국과 쌍벽이다. GDP대비 군비지출은 사우디 9.3%, 인도 2.5%, 러시아 4.3%이다. 튀르키예는 경제력도 군사력도 강하지 않지만 GDP대비 군비지출이 2.4%이다.

미국을 제외한 기존 선진국들(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스페인)은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그 영향력이 축소되는 과정을 거쳐왔다. 영국과 프랑스는 경제력과 비슷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NATO 요구 2% 부응),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스페인은 경제력보다 꽤 낮은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단일 패권질서를 대체하는 미중 패권대결과 다극 대립구도

이와 같은 국가 간 세력관계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중국의 급격한 추격과 미국의 견

제로 미·중 패권대결이 본격화했지만 아직 군사력에서는 중국이 한참 밀린다. 한편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미·중 패권대결은 국가 간 세력관계가 급격히 변화할 가능성을 제공하는데,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 급격히 군사력을 증강해 온 인도·러시아·사우디가 중국의 현저한 군사력 열세라는 빈 공간을 파고들며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배경과 이후 전개되는 사태들을 상당히 설명해 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나토의 동진에 대한 반발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역으로 나토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장악한다면 영향력 강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는 계산 때문이었을 것이다. 미국의 주도 아래 중국을 포위하는 쿼드에 참여해 온 인도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불참하고 오히려 에너지 수입을 늘리면서 사실상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굳건한 동맹이었던 사우디는 바이든의 요청을 거절하며 원유가격 유지를 위해 러시아와 손을 잡더니, 미래도시 건설에 미국의 제재대상 화웨이의 참여를 허용하며 중국에게도 손을 내밀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큰 틀에서 보자면, 미국의 압도적 우위가 관철돼 온 세계질서가 미·중 패권대결로 흔들리기 시작하자, 경제력에 비해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된 러시아·인도·사우디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할 기회를 붙잡기 위해 세계질서를 더욱 뒤흔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세계질서를 뒤흔드는 세 국가에게 신중하지만 분명하게 화답하고 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러시아에 대한 직접 지지는 삼가면서도 제재에 불참하고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면서 러시아를 사실상 지원하고 있다. 인도와는 ‘한 세기 동안 볼 수 없었던 중대한 변화’를 놓치지 말자며 국경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사우디에게는 다량의 원유·가스를 안정적으로 수입하는 대신 위안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달러의 기축통화 유지에서 중요한 한 축인) ‘원유 대금 달러화 유일결제’ 시스템에 균열을 시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후 세계질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대결을 중심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진영과 중국이 주도하는 진영 사이의 대립구도로 재편될 것인가?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가능성이 아직 더 커보인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대결은 그 승부가 날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겠지만, 다른 주요 열강들까지 그 패권대결의 하위 파트너가 되어 진영 간 대결구도로 포괄될 것이냐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이후 세계질서는 한편으로 미국과 중국이 패권대결을 펼치지만 이와 별개로 여러 열강들이 보호주의에 입각해 독자노선을 추구하면서 다극 대립구도가 병행하는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러시아·인도·사우디는 이미 세계질서 재편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행위자로 나서고 있다. 여기에 프랑스나 독일 같은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서 보호주의가 맹렬히 확산하거나 극우 세력이 집권한다면, 주변 지역을 이끄는 맹주로 스스로를 재정립하면서 미국 패권에서 벗어나 독자노선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아직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하지 않지만 지역의 맹주가 되고자 하는 야심을 숨기지 않는 튀르키예도 복병이 될 수 있다. 반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시아 지역에서는 지리정치적 조건 때문에 미·중 패권대결의 영향이 강력하게 미치면서 모든 나라가 그 구도 아래로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패권대결에 덧붙여 여러 열강들이 보호주의에 입각해 각자 영향력 강화를 추구하는 다극 대결구도는 신자유주의·세계화·금융화를 가능케 했던 미국 유일 패권의 '단일한 세계 질서'와는 상당히 다른 질서가 될 것이다. 만일 미국과 중국의 패권대결을 중심으로 각국이 결집하는 진영 간 대결구도로 재편된다 하더라도 역시 상당히 다른 질서가 될 것이다. 어떤 경우든, 제국주의 열강들 간의 충돌과 다양한 수준의 전쟁이 일상이 되고 나아가 점점 더 격화되는 격동의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세계 곳곳에서 드러나는 충돌과 긴장의 심화

제국주의 열강 간 전면전의 문을 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나토와 러시아의 충돌이다. 그러나 그보다 깊은 배경에는 미중 패권대결이 있다. 한동안 대적자가 없는 제국주의 패권국이었던 미국은,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압도적인 패권국이나 그간 경제적 영향력은 줄어들어 왔다. 미국은 군사적 압박을 곳곳에서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패권의 약화를 보완하려 했고, 나토의 무리한 동진의 중요한 배경이 됐다. 한편 러시아는 과거에 미국 주도의 나토가 동유럽을 가입시켜도 별다른 반격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중국의 부상과 함께 공간이 열렸고, 이에 반격을 해보려고 힘을 키워온 과정이 있었다. 중동과 아프리카 곳곳에 무기를 수출하고 내전에 개입해 군사정권을 지원하며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2014년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돈바스 지역 내전에 개입했다. 그런 과정을 거쳐 '해볼만하다'는 판단으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선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미국이라는 아주 강한 패권국이 세계를 지배하다가 힘이 줄어들고 신흥 패권국이 올라오자, 군소 패권국들의 숨쉬자리가 생긴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 전쟁은 세계 패권질서의 거대한 변화가 만든 전쟁이다. 대리전, 국지전 형태를 띄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국주의 간,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이다. 미군은 '공식적으로' 가서 싸우지 않을 뿐,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이와 같은 제국주의 열강 간의 직접적 전쟁은 없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문을 열었고, 미국과 러시아의 직접 전쟁 가능성을 올려가고 있다.

나토의 부활, 그러나 균열하는 미국 헤게모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중요한 전략적 실패를 했다. 우크라이나에 친러, 최소한 중립 정부를 세우겠다는 목표는 실패했고, 동부와 남부전선을 유지하는 데 머물렀다. 그 바람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 같은 지역을 포함해 강력한 친러정서들이 형성돼있던 지역조차 강력한 반러 분위기가 조성돼있다. 동유럽 국가들은 가장 강력한 친미 세력이 됐다.

러시아는 이 전쟁으로 얼마간의 군사적 이익을 얻든, 정치적으로는 실패한 셈이다. 주변 국가들이 강력한 반러가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방으로부터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게 됐고, 유럽과의 경제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됐다.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이 폭파되며,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에너지 공급선이 완전히 끊겨버렸다. 바그너 반란(프리고진의 반란)은 러시아의 전략적 실패와 난관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표출한 사건이었다.

반면에, 유명무실해졌던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다시 부활했다. 트럼프 시절 미국 우선주의는 중국도 공격했지만, 이른바 동맹국도 공격하며 미국 고립주의로 나아갔고, 나토도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가 됐다. 허나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나토를 새로 출세우는데 성공했다. 유럽 열강과 일본, 한국까지 포함시켜 나토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는 축으로 재정렬하고 있다. 또한 독일과 일본의 국방비 지출을 GDP 1% 수준에서 2% 수준으로 끌어올려, 미국과 중국 다음의 군사강국으로 부상하는 재무장을 시작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나토는 부활했지만, 굳건하지 않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대신 '동맹복원'을 내걸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공동대응으로 미국의 패권강화는 얼핏 성공한 듯 보였다. 그러나 이후 전쟁이 진행되는 한복판에 미국은 동맹국들의 등을 치는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전개했다. 바이든은 미국우선주의 기조에 입각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10년 동안 중국투자를 포기해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지원법, 전기차-배터리 생산시설을 북미지역으로 이전해야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을 실행했다. 또 미국 에너지 기업들은 러시아를 대신해 유럽에 가스를 수출하며 전쟁상황에 처한 유럽으로부터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 유럽은 이에 반발해 유럽 연합 차원의 반도체법, 탄소국경세법, 핵심원자재법 등을 추진하며 맞불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장기화하는 전쟁으로 미국과 유럽의 피로감이 누적된 가운데, 중동으로 서방의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데, 유가 60불 가격상한제 등 제재조치조차 온전히 관철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은 트럼프의 부상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바,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거부와 당선시 24시간 내 종전을

* 러우전쟁 발발 이후 전 세계적으로 군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유럽 군비지출 증대는 두드러지는데, 기존 나토 군비지출 2%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유럽국들은 소수였다. 2014년(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이 있던 해) 당시 GDP 대비 국방비 2%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나토 국가가 3개에 불과했음에 반해, 2023년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지출하는 국가가 11개로 급증했다.

공언했다. 심지어 트럼프 집권시 나토 탈퇴설까지 불거지는 상황*은, 그 자체로 미국 헤게모니의 심대한 균열을 드러낸다.

미국의 보호주의와 장기화하는 전쟁의 피로감은 미국과 유럽의 균열을 부르는 주요 갈등축이다. 러우전쟁은 미국의 보호주의에 대한 유럽의 불만을 '지금은 전시'라는 명분으로 억누르는 기제이나, 유럽의 침체가 깊어질 경우 미국의 수탈적 행보에 대한 불만이 폭발할 수 있다.

중러 동맹의 형성

이 전쟁의 또 하나의 중요한 결과는 러시아와 중국의 동맹적 관계 형성이다. 이는 러시아의 전략적 실패가 불러낸 뜻밖의 결과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전통적으로 안좋은 관계였다. 이른바 공산당이 지배하는 같은 스탈린주의 정권이었지만, 이미 1970년대에 중국이 미국과 손잡으며 소련을 고립시켰고, 그 이전에 중소국경분쟁이 작지만 전쟁으로까지 치달았었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그동안 진전되오긴 했지만 '동맹적 관계'가 형성된다고 말할 계제는 아니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황을 바꿔버렸다. 러시아는 이제 중국이 아니고는 버틸 수 없게됐다. 서방의 어마어마한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 추이는 2023년 2,3분기에 들어서 5% 내외를 기록했다. 이게 가능한 것은 중국이 에너지를 사주고 물자를 들여보내주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무역규모는 지난해 11월에 비해 2023년 11월 2181억 달러로 26.7% 증가했다. 양국 간 교역액이 2천억 달러를 넘어선 건 2023년이 처음이다.

다시 말해 중국이 러시아와 손을 끊으면, 러시아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2010년대를 거치며 중러관계가 개선되오긴 했으나, 과거에는 두 강대국 사이에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동맹이 형성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지금은 러시아가 납작 엎드리고 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을 우위로 중,러 동맹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이 열렸다.

여기에 인도, 사우디, 브라질, 남아공 같은 중요한 국가들이 호응하고,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전반에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세계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러시아 제재에 불참하고 있다.

이와 함께 G7에 대항하는 브릭스(BRICS)가 떠오르고 있다. BRICS는 2022년 구매력 기준 세계 GDP의 31.5%로, G7(30.7%)을 추월했다. 이 중 중국의 비중이 59%로 압도적이다. 2024년 1월을

* 최근 제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바이든을 앞서고 있다. 12월 18일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이 발표한 전국단위 여론조사 500개 평균에 따르면, 트럼프는 바이든을 2.2% 차로 이기고 있다. 2023년 12월 11일 발표된 CNN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는 주요 경합주에서도 바이든보다 우위에 있다. 트럼프가 밝히는 주요 계획(아젠다 47)은 노숙자를 도시 외곽캠프로 이주시키겠다는 계획, 공립학교 교사에게 '애국적 가치' 수용을 요구한다는 계획, 모든 수입품에 '보편적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불공정 무역국'에 대해 이를 더 인상한다는 계획, 불법 이민자 망명 신청 중 멕시코 체류, 불법 이민자 자녀 시민권 자동부여 중단, 국제원조 수천억 달러 삭감과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나토 탈퇴 검토 등을 망라한다.

기점으로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가 공식적으로 브릭스 가입국이 되며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위안화 국제화 시도 역시 추진하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과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 상품무역 시 위안화 결제액은 2020년 중반 이후 매월 두 배 이상 늘었다. 최근 사우디와 첫 위안화 대출 협정을 맺고, 중국-브라질 교역 시 위안화-헤알화 거래에 합의하는 등, 미국 주도 세계질서에 맞선 중국 행보가 확대되고 있다. 2023년 브릭스는 역내 통화 활용을 늘리고 자체 개발은행으로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을 대체하고 세계무역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사용을 줄이자는 ‘탈달러 움직임’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제국주의 세력관계의 재편

미국 패권질서에 맞선 중국과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장을 보여주는 또 다른 표현은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이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아프리카도 세계의 다른 지역들과 비슷하게 한동안 미국의 영향력이 압도적이었다. 그런데 최근 10여 년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이 급증했다. 러시아의 영향력은 주로 무기수출 분야에 집중됐고, 2020년 아프리카에 48억 달러의 무기를 수출하며 40%라는 압도적인 비중으로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의 영향력은 주로 해외직접투자(FDI)에 집중됐고, 2021년 133억 달러를 투자하며 16%로 1위를 차지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 급증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영향력 퇴조와 맞물리며 아프리카 대륙에서 제국주의 세력관계가 재편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오랜 시간 프랑스와 영국 등 미국과 결탁한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수탈당해 온 아프리카 민중들은 이러한 세력관계 재편이 불러온 힘의 공백을 활용해서 ‘서방 제국주의 축출’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서방 제국주의 축출’을 요구하는 민중의 에너지를 자신의 영향력 강화의 기회로 삼으려 한다. 러시아는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등에서 발생한 군부 쿠데타 세력에게 바그너 용병그룹을 대주며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서방 진영은 최근 나이지리아를 위시한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를 통해 니제르 쿠데타에 대한 군사개입을 경고하고 있는데, 만약 군사개입이 현실화되면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시작된 제국주의 세력들 간의 대리전이 점점 더 지구 곳곳으로 확대돼 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이스라엘의 학살이 불러온 중동위기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의 대량학살이 이어지고 있다. 가자 보건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1월 24일 현재까지 가자지구에서 25,700명 이상이 사망했고 8천 명 이상이 실종됐다. 서안지구

서도 6천 명 이상 체포되었으며 사망자와 부상자, 실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스라엘의 학살과 확산시도로 미국이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과 함께 추진해온 중동에서의 긴장완화 전략은 혼란에 빠졌다. 미국은 2020년 9월 아랍에미리트, 바레인과 이스라엘의 관계정상화에 이어,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정상화를 추진중이었으나, 하마스의 공격과 이스라엘의 전쟁선포로 미국의 계획은 어려움에 봉착했다. 미국이 그간 이스라엘을 지원해온 역사는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정당한 저항을 낳았고, 중동에서 철수하고자 했던 미국의 계획은 그간 저질러온 제국주의적 행보 때문에 발이 묶였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둘러싼 역학으로 볼때, 현 사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 네타냐후 정부는 사법재판에 대한 이스라엘 내 대중적 저항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권고조차 무시한채 학살을 지속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로, 2020년 아브라함 협정에 기반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목전에 두던 관계정상화 협정은 무력화됐다. 2018년 트럼프 정부가 일방 파기한 이란과의 핵합의 복원도 불가능해졌다. 2023년 3월 중국 중재로 이루어진 이란과 사우디 관계정상화 전망 역시 불투명하다.

최근 홍해(아랍과 아프리카 사이)와 호르무즈 해협(이란과 오만 및 아랍에미리트 사이)에서 위기가 고조하고 있다.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예멘반군 '후티'는 이스라엘로 향하는 모든 선박을 표적으로 삼겠다는 경고와 함께 2023년 11월부터 홍해를 경유하는 상선을 30여 차례 공격했고, 이란은 1월 11일 미국 유조선을 나포했다. 미국은 20여개 국가를 모아 다국적 함대를 결성했고, 1월 11일에는 예멘 30여 곳을 폭격했다. 이스라엘의 학살과 함께, 중동발 '대전'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이 그토록 철수하고 싶었던 중동지역으로 다시 끌려들어가는 상황을 환영하고 있다. 중동에서의 미군 증강, 이스라엘군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은 중국에 맞서는 아시아의 동맹국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군사적, 재정적, 외교적 자원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 중국-인도-중동-유럽 경제 회랑에 대한 미국의 계획이 좌절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허나 중국과 러시아가 팔레스타인 해방의 대의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중국은 드론, 감시기술 등 이스라엘의 군수산업과 조용한 협력을 계속해왔다.

동아시아의 전쟁위기 고조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양국 공조가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이미 10월부터 북-러 화물열차 통행량이 급증한 것으로 관측되었는데, 이는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군수물자 공급을 시사한다. 북러 정상회담에서 발표되었듯, 북은 군수물자 공급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위성 개발 협력', 즉 핵능력 고도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중국은 북러 정상회담에 대외적으로 이렇다 할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 사실상 러시아 지지 입장 등을 밝힌 경과에서 볼 때 북중러 블록화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2023년 12월 3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에서 남북이 “통일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말했다.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한 부분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이는 한미에 무언가를 기대하는 협상카드라기 보다는, 신냉전 구도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을 얻어 독자 행보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인다.

한미일 동맹 역시 강화되고 있다.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함을 명시한 8월 캠프데이비드 협정은 오커스와 쿼드에 이어 또 하나의 대중국 포위망의 등장을 뜻한다. 군사훈련 정례화에 따라 북중러와의 군사적 긴장이 확대될 것임은 자명하며, 이는 한반도 및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군비경쟁을 강화하는 핵심 축이다. 한미일 동맹에 따라, ‘자유로운 대만해협의 항해’ 등 대중국 도발은 일상화되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대리전과 마찬가지로, 한반도를 무대로 미중의 대리전이 벌어질 수 있는 정세다.

4. 우리가 만들어가야할 반제반전평화운동의 원칙

위기와 전쟁의 시대를 뒤집을 노동자 국제연대

기후재앙이 거대한 규모로 세계를 뒤덮는 가운데, 세계적인 경제파탄 위에서 권위주의, 극우, 파시즘 정권들이 벌이는 얽히고 설킨 대량파괴 전쟁들이 세계를 뒤덮으려 한다.* 1950년 미, 소의 대리전으로 3년 간의 비극적인 전쟁을 치렀던 한반도에서도, 다시 전쟁의 먹구름이 한층 더 깊이 드리우고 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세계가 점점 더 제국주의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지금, 미국과 중국을 정점으로 하는 제국주의 패권대결은, 서로 다른 자본가계급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벌이는 반동적인 전쟁일 뿐이다. 노동자계급은 그 어느 국가의 전쟁행위도 지지하지 않고, 자국

* 2024년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당장 유럽 중심과 주변을 관통해 극우파가 부상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10년 전 '유로화 반대'를 내걸며 창당한 '독일을위한대안AfD'이 최근 인플레이션, 기후-에너지위기, 이민자에 대한 불만을 토대로 지지율 2위 정당으로 급부상했다. 2023년 7월 당대회에서 당 전략가인 비온 회케의 '참다운 유럽이 살기 위해서는 이 유럽연합이 죽어야 한다'는 선언이 압축하듯, 독일을위한대안의 주요 노선은 기후변화 부정, 이민자 반대, 독일의 '미국으로부터의' '해방, 친러시아, 친중 노선을 추구한다. 프랑스에서는 국민전선 대표 마린 르펜이 부상하고 있으며, 202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프랑스는 2022년 이탈리아 멜로니 정부에 이어 극우가 집권한 주요국이 될 것이다.

의 자본가계급의 전쟁행위에 맞선 투쟁 속에 타국 노동자들과의 국제연대를 만들어가는, 즉 ‘혁명적 패배주의’의 원칙을 갖고 오늘날 전쟁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은 미국과 중국을 각각의 정점으로 하는 동맹들 간의 진영 대결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한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약소국에 대한 침략과 억압이 지속되고 있으며, 노동자계급은 (팔레스타인과 같이) 제국주의 침략과 억압에 맞선 약소국 민중의 저항을 지지해야 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주듯이) 제국주의 대 약소국 민중의 구도가 제국주의 패권대결에 빨려들어 그 부차적 요소로 전회할 경우, 노동자계급은 기본적으로 혁명적 패배주의에 입각한 노동자 국제연대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

동아시아의 제국주의 전쟁위험에 맞설 방안: 핵무장이 아니라 노동자 국제연대

한국에서 혁명적 패배주의에 입각한 노동자 국제연대는 무엇을 의미할까?

첫째로, 한미일 진영이 벌이는 일체의 전쟁행위에 맞서야 한다. 한국은 예멘내전 개입국,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개입국, 이스라엘과 같은 직접적 분쟁국을 망라해 무기 수출을 확대하며 제국주의 전쟁에 깊이 개입하고 있고, 한화와 같은 방산전문기업은 국가적 지원 아래 육해공 방산산업을 아우르는 군산복합체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오늘날 중동에서의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정세에서 한국은 미국의 요청을 받아 홍해에 군수물자 지원, 군대 파병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는 위험천만한 일이나, 다수 대중에게 이는 ‘국위선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의 군사개입, 전쟁연습, 무기생산/수출에 맞선 요구를 확대해야 한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패권을 행사하고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일체의 행위에도 반대해야 한다.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 미국은 끊임없이 북한을 상대로 제국주의적 침략위협을 가했다. 냉전 종식 이후에도 미국은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북한을 상대로 한 가공할 전쟁연습을 줄기차게 전개했다. 2002년에는 대통령의 의회 연두교서 연설에서 북한을 이란·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연히 섬멸 대상으로 삼았다. 2023년에도 미국은 일본·한국과 함께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대규모 전쟁연습을 몇 차례나 진행했다. 자국의, 그리고 자국이 속한 진영의 전쟁행위를 단호히 거부하고 맞서는 것은 한미일의 전쟁행위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북중러의 노동자민중과 연대를 건설해나가기 위해 필수적이다.

둘째, 북중러 진영의 전쟁행위에도 분명히 맞서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 등을 반대해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크라이나 민중들의 자결권을 부정하는 것이며,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탈해 무력으로 지배하려드는 제국주의 침략행위이다. 또한 러시아의 침공은 나토의 개입을 정당화해주며, 국수주의와 극우세력의 성장을 촉진한다.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 또한 마찬가지로 미국의 전쟁연습을 정당화해주며, 노동자계급이 진영 간 패권대결을 위해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도록 할 뿐이다.

또한, 반제반전 노동자 국제연대를 심각하게 방해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무장에도 반대해야 한다. 우리가 미국 제국주의에 맞서 방어하는 것은 반동적인 북한의 체제나 정권이 아니라 북한의 노동자·민중이다. 그런데 북한의 핵무장은 민간인을 상대로 한 무차별 대량살상무기라는 점에서, 한국·일본·미국의 노동자·민중에게 무차별 대량살상 위협을 가하며, 따라서 한미일 진영에서 미국 제국주의에 맞선 국제연대를 향해 북한의 노동자·민중과의 단결을 만들 가능성을 매우 크게 차단하고 있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리비아가 핵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게 초토화당한 만큼 북한의 핵무장은 미 제국주의에 맞선 불가피한 자위권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주장은 핵무기가 없는 베트남이 미국을 상대로 민족해방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사실, 또한 어마어마한 양의 핵무기를 가진 소련이 스스로 무너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 베트남이 미국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힘은 민족해방 전쟁의 정당성으로 미국의 노동자민중을 파고들고 미국 사회 전체를 뒤집어 놓음으로써 전쟁을 지속할 수 없는 위기 상태로 몰아넣은 데 있었다.

북한의 핵무장은 전쟁 명분을 극대화해 주면서 이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전쟁이 '또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장'이라고 했을 때, 북한의 핵무장은 완전히 잘못된 반동적인 정치에 기초하고 있다. 북한의 자주성을 진정으로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은 핵무기가 아니라 제국주의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국제적인 단결과 대중투쟁이며, 그것을 가능케 하는 올바른 정치이다.

특히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일본·한국 동맹이 강화되는 반대편에서 중국·러시아·북한 동맹이 가시화한 것은, 1990년대 이후 북한이 중국·러시아로부터도 고립된 채 미 제국주의에게 사실상 홀로 위협받던 시기가 끝나고 중국과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를 갖게 된 시기로 이행했음을 뜻한다. 따라서 미 제국주의 대 약소국 북한 노동자·민중의 구도는 이제 미국·일본·한국 대 중국·러시아·북한의 제국주의 진영 간 대결구도로 빨려들어 그 부차적 요소로 전화했다. 미국·일본·한국 대 중국·러시아·북한의 대결구도가 한반도를 뒤덮게 된 상황에서, 우리는 미 제국주의에 맞서 북한의 노동자·민중을 방어하는 측면보다, 미국과 중국을 정점으로 하는 제국주의 진영 간 패권대결에 맞서 혁명적 패배주의에 입각해 노동자 국제연대를 조직하는 방향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중,러 동맹이 서방 제국주의에 맞선 진보적 대안일 수 있을까?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분위기 속에, 미국과 서방 제국주의에 시달려 온 수많은, 특히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미제국주의의 압제에서 해방되어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한다. 이는 또 한편 “중국과 러시아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위기와도 연결된다. 이는 이해가 되는 심경이나, 그것이 진지한 운동적 노선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달라진다. 과연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다른 존재인가?

중국을 사회주의 또는 모종의 노동자국가로 보면서 미 제국주의에 맞선 진보적 세력으로 간주하는 일부 ‘좌파’들의 견해는 현 세계정세에 대한 심각한 오판일 뿐 아니라, 중국공산당 자본가권력에게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중국 안팎의 수많은 노동자·민중을 배척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오류다. 이들은 이런 입장에 근거해 북의 핵무장은 미 제국주의에 맞선 자위적 조치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나토 동진에 대한 러시아의 정당방위로 보는 것은 물론, 소위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시진핑 권력독점 강화, 대중억압과 감시체제 강화, ‘일대일로’로 집약되는 자본수출 제국주의에 어떤 문제도 없다고 본다. 홍콩 우산운동, 미얀마 민중항쟁, 이란 히잡시위 등 소위 ‘반제국주의 진영’ 내부에서 벌어지는 민중의 저항을 지지하지 않음은 물론, 이 운동 자체에 제국주의 세력이 개입해 있다고 본다. 물론, 이들은 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제국주의 열강과의 자유무역에 그토록 목매는지, 2000년대 초반까지 러시아가 왜 나토에 가입하고자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한다. 최근에는 니제르 쿠데타 세력 역시 프랑스 제국주의에 맞선 반제국주의 세력으로 찬양하고 있다. 제국주의 열강의 투쟁 격화에 따라, 반제국주의 진영론의 오도된 인식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한편 중국을 자본주의로 보지만 제국주의로는 규정하지 않는 일각의 견해는 미중 대결의 성격을 자본주의 위기 심화와 함께 첨예한 충돌과 전쟁을 향해 치달아 갈 수밖에 없는 제국주의 패권대결로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를 낳는다.

중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직 미국의 대등한 적수가 되지 못하지만, 경제력과 군사력 그리고 지정학적 영향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미국 다음가는 강대국으로 부상했으며, 장차 미국을 대신하여 세계 최강의 패권국으로 등극하기를 원한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중국이 하는 역할은 이미 미국을 추월했다. 티베트, 신장, 홍콩 민중들에 대한 억압, 대만을 향한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은 단지 자본수출만이 아니라 억압적인 군사적 제국주의 국가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부상과 세계패권을 향한 열망은 ‘고도의 자본축적이 필연적으로 불러오는 과잉자본 수출과 이를 위한 지정학적 팽창의 경향’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러시아는 다시 한 번 군사적 제국주의로서 자본주의적 제국주의 중심의 제국주의 패권대결에서 보조적인 (그러나 대결을 첨예화하는 점에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미국-나토 동맹과 대리전을 치름으로써 제국주의 간 충돌과 전쟁을 고조시키는 데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중러동맹에 호응하는 정권들 중엔 억압적인 성격을 가진 정권이 아주 많다는 것도 지적해야 한다. 인도는 배타적 힌두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사우디는 절대왕정국가이고, 이란은 이슬람 신정국가이고, 미얀마는 군사독재국가이며, 남아공은 부패한 신자유주의 국가고, 북한은 세습관료독재국가이다.

재작년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에 맞선 민중들의 시위가 벌어졌을 때, 중국은 군부의 인권탄압을 모르쇠하고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중국은 2022년 12월 3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얀마 군부(땃마도)의 인권 관련 결의가 통과될 때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지만 같은 상임이사국 러시아와 함께 기권했다. 비상임 이사국인 인도도 기권했다. 땃마도는 이 세 나라에 감사를 표시했다. 이란에서 여성들의 히잡시위가 터졌을 때도, 중러동맹에 소속된 흐름은 이란 당국의 가혹한 탄압을 모르쇠하거나 지지했다.

미국과 서방 제국주의에 반대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진보적인 세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중러동맹 진영은 서방 제국주의 열강들을 대체하는 또 하나의 억압적인 자본주의 국가들일 뿐이다.

서방 제국주의가 그래도 중국과 러시아 같은 전체주의 세력보다 낫지 않을까?

다른 한편, 좌파 일부는 미국 주도 세계질서의 입장에 서서 북중러 블록을 비판한다. 특히 사회진보연대의 경우 ‘규칙기반 국제질서’의 입장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는데, 이들은 미국 주도 자유주의 세계질서가 지금도 유일하게 가능한 질서라고 전제하며 그 틀 내에서 가능한 제도적 해법을 찾자는 입장이다. 마찬가지로의 시선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 대만해협 문제, 한국 강제동원피해자 문제를 포함한 제반 문제에 있어 투영된다.

미국 주도 세계질서가 유일하게 가능한 질서라는 규정에 따라, 자유주의 세계질서 현상유지가 이들의 유일한 대안으로 놓인다. 이는 사실상 미국 지배계급의 입장을 운동 내에서 대리하며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억누르는 지배계급의 하위 파트너에 불과하다. 이들은 급격히 체제내화 되어왔으며, 제국주의 열강의 투쟁 격화에 따라 앞으로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서방 제국주의는 글로벌 사우스로부터 수백년 거대한 수탈을 해왔고 오늘날 전쟁으로 치닫는 수많은 범죄를 저질러왔다. 미국과 유럽은 팔레스타인 민중을 향한 오늘날 이스라엘의 대량학살과 인종청소를 지원해왔다. 그들이야말로 자본주의를 여기까지 몰고온 주범이다.

따라서 우리의 반제반전 투쟁은 미국, 서방 제국주의 동맹과 중국, 러시아 제국주의 동맹 모두에 맞선 투쟁이어야 한다.

5. 노동자 국제연대 반전평화 운동을 조직하자

노동자민중의 참여 없이 제국주의 전쟁은 수행될 수 없다.

제국주의 패권대결은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끝없이 유지·확대하려는 자본가계급의 탐욕이 낳은 산물이다. 자본가계급은 자본주의 쇠퇴에 따른 이윤을 저하를 과잉자본 수출과 초과착취로 벌

충하고자 하며, 이러한 자본가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제국주의 열강들이 한정된 지구 안에서 세력권 강화 경쟁을 벌이다가 서로 충돌하며 결국 전쟁으로 치달아 왔다. 제국주의 패권대결이 야기하는, 자본가계급의 탐욕을 위한 충돌과 전쟁에서 노동자·민중은 총알받이가 되어 목숨을 빼앗기거나 생존의 터전을 잃으며 권리를 말살당해 왔다.

그런데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노동자·민중 없이 자본주의가 작동할 수 없듯이, 노동자·민중의 동참 없이 제국주의 전쟁은 수행될 수 없다. 자본가계급은 제국주의 전쟁에 노동자·민중을 동원하기 위해 국수주의 이데올로기를 퍼뜨리면서 상대방을 악마화한다. 자본가계급의 국수주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노동자·민중은 자신을 착취·억압하는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위해 똑같이 착취·억압당하는 자신의 자매형제들에게 충구를 겨누는 비참한 신세에 빠진다.

노동자계급이 가야 할 길은 정반대다. 자본가계급이 제국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며 전쟁 위기를 고조시킨다면, 노동자계급은 국경을 넘어 ‘노동자계급끼리’ 손잡고 반제반전 대중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전쟁 위기를 부추기는 제국주의 열강과 그 동맹국들 내부에서부터 체제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노동자계급의 저항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에 입각해 반제반전 대중투쟁을 거대한 규모로 전개함으로써 제국주의 전쟁을 차단하고 중단시키며 혁명으로 전화시켜 나가야 한다.

동아시아 반제반전 노동자 국제연대는 궁극적으로 ‘각국에서 건설된 거대한 대중운동으로서 반제반전 노동자운동들 간의 국제연대’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장에는 동아시아 지역 전반에서 노동자운동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 있는 만큼, 각국에서 반제반전 노동자운동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과 함께 각국 노동자운동 간의 교류를 확대하며 거대한 대중운동의 분출을 능동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어디서 시작할까? 팔레스타인 연대운동 조직화로부터

반제반전평화 노동자 국제연대 운동이 취약한 한국에서, 오늘날 어떻게 운동의 실마리를 열어가 수 있을까? 여러가지 단초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발제에선 그 한가지 실마리로서 노동운동 속에서의 팔레스타인 연대운동 조직화를 제기해보고자 한다.

10월 7일 이후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의 대량학살에 맞선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2024년에도 1월 13일에만 이탈리아 로마와 밀라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일랜드 더블린, 미국 워싱턴DC, 영국 런던, 브라질 상파울로, 오스트리아 비엔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룩셈부르크,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 일본 도쿄, 요르단 암만,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등 세계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이와 함께 팔레스타인 노동조합의 호소에 응답한 노동자들의 파업과 봉쇄 행동도 벌어졌다. 2023년 10월 16일, ‘가자 지역 팔레스타인 노동조합 연맹’을 포함한 팔레스타인의 노동자들은 전

세계 노동자민중에게 긴급 요청을 보냈다. 이스라엘의 무장을 중단시키고 이스라엘의 대량학살에 관한 각 국가의 모든 공모를 끝내달라는 요청이었다.

[팔레스타인의 노동자들이 전세계에 보낸 긴급요청]

1. 이스라엘로 향하는 무기 생산을 거부할 것.
2. 이스라엘로 무기를 운송하는 것을 거부할 것.
3. 노동조합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동의안을 통과시킬 것.
4. 이스라엘의 잔인하고 불법적인 포위 공격을 실행하는 데 연루된 기업, 특히 귀 기관과 계약을 맺은 기업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
5. 각국 정부에 이스라엘과의 모든 군사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미국의 경우 이스라엘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할 것.

이 응답을 받은 전세계 노동자들은 어떻게 응답했을까? 스페인에서는 14개 노조와 200개 시민 사회단체가 정부에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바르셀로나의 항만노동자들, 유럽 항만노동자 협의회(EDC)와 연계된 항만노동자들도 무기운반을 중단했다. 벨기에에선 운송노조가 조합원들에게 무기를 항공기로 운송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탈리아의 항만노동자들은 이스라엘 운송회사 Zim의 선박화물 이동을 봉쇄했다. 영국에서는 노동자들이 BAE 시스템즈 공장 입구를 막았고, 카탈루냐 노동자들은 백린탄 생산에 연계된 ICL-Iberia에 항의했다. 캐나다에서는 노동자와 지역사회 활동가들이 해밀턴, 토론토, 몬트리올, 오타와의 무기공장 4곳을 폐쇄했다. 1억 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인도의 12개 노조 연맹은 이스라엘이 노동 허가를 취소한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을 대체하기 위해 10만 명의 건설 노동자를 파견하는 협상에 강력히 반대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바이든 정부를 지지했고, 노사협조주의적이던 전미자동차노조(UAW)가 미국 자동차 빅3 자본에 맞서 파업을 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2월 1일, UAW는 휴전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미국에서 휴전을 요구한 가장 큰 노동조합이 됐다.*

나아가 집행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역사, 이스라엘과 노동조합의 경제적 관계를 연구하고, 미국 노동자들이 전쟁에서 평화로 정의로운 전환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투자 철회 및 정의로운 전환 실무 그룹’을 구성할 것을 결의했다. 또 현장활동가들로 구성된 UAWD

* UAW는 40만의 현직 조합원과 50만의 은퇴조합원을 포괄한다. 그 밖에도 10월 19일, the United Electrical, Radio and Machine Workers (UE), the United Food and Commercial Workers International Union (UFCW) Local 3000의 휴전 촉구 성명, 11월 8일 the American Postal Workers Union (APWU)의 휴전 촉구 성명 등이 있었다.

라는 현장조직은 이스라엘의 학살을 반대하고 팔레스타인과 연대해야 할 이유를 조합원들에게 교육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UAW는 팔레스타인 해방과 BDS(팔레스타인 억압에 대한 연루를 없애기 위한 비폭력 운동)를 조직적으로 지지하고, BDS를 UAW의 공식 입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또한 UAW는 UAW 조합원과 지도부들을 위한 철저한 대중 교육 활동을 조직할 것이다. 이는 BDS, 팔레스타인 해방, UAW의 반-아파트헤이트 활동의 역사, 국제 UAW 집행부의 공모에 대한 아랍 및 흑인 노동자들의 오랜 저항의 역사를 다루는 하나 이상의 교육 행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시리즈는 이메일, 슬랙, 문자/전화 뱅킹을 통해 홍보될 예정이다.

교육 행사 및 기타 조직화를 위한 홍보를 통해 UAW는 제조업 노동자, 특히 영향을 받는 무기 제조업체 노동자들의 관심(interest)을 분석하여 작업 현장에서 BDS와 팔레스타인 해방을 중심으로 조직을 확대할 것을 결의한다.

UAW는 '투자철회 및 정의로운 전환 실무그룹' 설립을 위한 UAW의 선언을 지지하며, UAW 지도부가 팔레스타인 노동자와의 연대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노동자들을 포함한 일반 조합원들을 실무그룹에 초대할 것을 촉구한다. [UAW(Unite All Workers for Democracy)의 결의문]

한국 노동자운동의 팔레스타인 연대는 현재 어떠한가? 민주노총은 2023년 11월 8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집단학살을 멈추고 즉각 휴전을 수용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2024년 1월 7일 금속노조 위원장은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집회에 참여해 “현장에서부터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출판노조에서는 팔레스타인 연대 성명서를 독자적으로 발표했고, 언론노조 조합원으로서 한국의 편향적인 언론보도에 대해 지적한 노동자도 있었다. 울산에서는 지역활동가들과 현대중공업사 내하청지회가 함께 팔레스타인평화연대를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하고, 이스라엘에 굴착기를 수출하고 있는 현대건설기계 앞에서 선전전을 벌였다. 이후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지역 노동, 사회단체들이 합세해 2주마다 울산 시내 중심가에서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선전전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은 1월 18일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투쟁문화제를 진행했다.

이 모든 활동은 매우 고무적이고 소중한 한걸음이다. 하지만 아직 민주노총이나 각 산별노조의 주요한 공식 사업으로서 힘을 동원하는 팔레스타인 연대행동은 조직되지 않고 있다. Labor for Palestine이 조직한 최근 웨비나에서 어느 활동가는 북미 지역에서 노동자운동이 “이제는 성명 발표를 넘어, 종이에 적힌 말을 실제 행동으로 조직해야한다”라고 현재의 과제를 밝혔다. 이와 비교한다면 아직 한국은 팔레스타인의 상황과 이스라엘의 강제점령의 역사, 노동조합이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 나서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한 조합원들의 인식부터 만들어나가며 각 단위노조에서 ‘성명서부터’ 조직해야하는 상황인 것 같다.

사실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노동자들에게 국제연대를 실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단지 노동조합을 지키고, 임금과 고용을 지키는 것조차 자본가들과 치열한 싸움을 필요로 하는

데, 얼핏 내 문제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로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쉬운 지름길은 없어보였지만, 최소한 국제연대를 실천하게 된 과정이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라 활동가들이 최대한 많은 노동자들과, 꾸준하고 오랫동안 관계맺고 노력했던 결과라는 점은 분명해보였다. 특히 오늘 공유하고 싶은 한가지 사례는 항만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조직했던 미국 'Block The Boat'(BTB)운동의 사례이다. BTB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해운회사인 Zim의 화물운송을 막는 캠페인 운동이었는데,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선 항만노조와의 협력적인 관계가 필수적이였다.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Block the Boat 운동의 조직가들은 2014년 LA에서, 가자지구에서의 집단학살이 벌어진 뒤 몇 달 동안 서부항만노조(ILWU)가 운영하는 직업소개소(교대근무를 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공간)에 교대근무가 이뤄지는 오전 6시와 오후 4시 때마다 매일 찾아가 유인물을 뿌렸다고 한다. '뉴욕 레이버 포 팔레스타인(Labor for Palestine)'에 속한 노동조합 활동가들 또한 많은 노동자들과 '접촉'하고 설득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많이 가는 클럽과 식당을 찾아가고, 항구에도 직접 가서 노동자들을 만나고 토론했다.

그러나 항만산업이 가지는 전략적 위치로 인해 '노동귀족'(labor aristocracy)적 성격이 강했던 항만노조 소속 노동자들로 하여금, 서구사회에 지배적으로 퍼져있는 시오니즘의 논리를 거부하고, 팔레스타인과의 연대행동을 위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선박 운행을 막아서는 활동에 동참하도록 설득하는 일은 매우 쉽지 않았다. 유인물을 들고 교대근무를 하러 기다리는 노동자들을 찾아갔을 때 팔레스타인과 쉬이 연대하겠다고 다짐하는 이는 극소수였고, 대다수는 시오니즘과 국수주의의 논리에 기반한 반문을 쏟아냈다고 한다.

그러나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처 글에서 다 포착하지 못한 수많은 활동가들의 헌신적 노력의 결과로, 2014년과 2021년 가자지구에 공습이 있을 때 성공적인 BTB 캠페인을 전개했고,* 이런 꾸준한 국제연대의 조직 경험이 쌓여 2023년 10월 7일 이후에도 미국, 호주, 캐나다, 스웨덴, 이탈리아, 남아공, 벨기에, 튀니지 항만노동자들이 이스라엘로의 무기운송을 거부하는 행동에 나설 수 있었으며, 이런 모멘텀이 쌓여 오늘날 미국우정노조, UAW 등 관료적이고 친-이스라엘적이던 노동조합들을 재편하는 데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미국의 BTB 운동이 2009 스웨덴의 남아공 아파트헤이트에 맞선 항만봉쇄 투쟁에 영감을 받았다는 점이다. 미국 서부해안에서 팔레스타인과의 연대를 건설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ILWU local 10 항만노동자들은 거슬러 올라가면 1978년 칠레 피노체트 정권을 지원하는 미국의 무기운송을 거부한 역사도 있다. 이는 한국에서도 팔레스타인 연대를 위한 노동운동의 행동을 조직하는 것이, 단지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과의 연대만이 아

* 2014년 BTB 캠페인으로 정박에 실패한 ZIM 선박은 이후 2021년이 될 때까지 오클랜드 항에 정박하지 못했다. 2021년에 ZIM이 다시 정박을 시도하려 하자 ILWU local 10을 비롯한 지역사회 활동가들은 2021년 6월 4일 금요일, 다시 한 번 ZIM 선박의 하역을 막았다.

나라 전세계의 평화를 향한 투쟁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의 경험은 다가올 동아시아의 전쟁위기에 맞서는 국제연대 운동을 건설하는 데에서 중요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

UAW가 'UAW와 이스라엘의 공모관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한국에서도 이스라엘과의 무기거래 현황, 제조업 및 여러 산업과의 연관성과 공모에 대한 더 많은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특정 산업 또는 특정 기업을 타겟으로 한 운동의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 HD현대건설기계가 굴착기 수출로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대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이 오랜 캠페인을 통해 폭로된 바 있다. 이탈리아 제노아 항구, 벨기에 운송부문 등이 대이스라엘 화물선적을 거부하듯이, 현대계열사와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비롯해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HD현대건설기계의 대이스라엘 거래행위에 맞선 캠페인을 조직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제조업 전반이 수직계열화를 통해 현대계열사와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만나고 설득하는데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BTB 운동의 조직가이자 연구자인 케이티 폭스-호데스(KATY FOX-HODESS)는 해운산업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의 노동자들이 팔레스타인 연대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예컨대 “의료 종사자라면 노동조합을 통해 가자지구의 국경을 개방하여 의료진이 입국하고 환자가 출국할 수 있도록 정치 캠페인을 벌일 수 있고, 전국작가노조는 팔레스타인 언론인들의 끔찍한 처우와 해외에서 가자지구에 대한 책임감 있는 보도의 필요성에 대해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

국제연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결의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창조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내가 속한 노동조합이 연대 성명을 발표하도록 조직하거나, 동료 조합원을 조직해 노동조합 대오를 만들어 함께 시위에 참여하거나, 팔레스타인 연대 단체를 초청해 조합원들과 함께 교육 행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모든 행동이 변화를 가져온다. 모든 산업 부문에서 반전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노동자의 파업과 행동은 사회적으로 논쟁을 촉발할 것이며, 더 큰 파업과 더 광범위한 시위로 이어질 계기점을 형성할 수 있다.

노동자 국제연대의 원칙으로, 노동운동을 재편하자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기후재난과 이에 대처하는 자본가들의 무책임함, 여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억압의 심화, 급증하는 동아시아 전쟁위기는 모두 연결되어있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가 자신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다시 익숙한 옛 방식인 야만의 시대를 호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이 모든 야만에 맞선 노동자들의 대중적인 정치투쟁을 조직하는 일이다.

오늘날 한국의 노동운동을 생각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과연 변화가 있을지 막막함부터 밀려오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한국 노동대중 다수는 반제반전 투쟁을 자기 과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사실인데, 이 현실에는 이유가 있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 지속된 국가권력의 공안탄압으로, 한국 노동운동은 반제반전 연대투쟁 등 정치투쟁을 자기 과제로 삼기 어려운 역사적 조건 아래 있었다. 국가보안법을 동원한 공안탄압과 함께, 현 노동법은 정치적 목적의 쟁의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한국노동운동의 조합주의와 경제주의는 반제반전 정치투쟁을 노동운동의 과제로 제기할 사회주의 정치운동의 취약한 상태와도 연동되며, 양자는 서로의 조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랫동안 ‘노동귀족’이자 노사협조주의의 대표주자였던 미국 UAW가 민주적이고 전투적인 지도부로 재편되고, 오랜 신자유주의 지배의 상징인 이증임금제 폐지에 이어 ‘전쟁산업에서 평화산업으로의 전환’을 언급하게 된 사례는 노동조합을 향한 새로운 관계맺기와 재편의 시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동시대에 보여주고 있다.* 비록 돌맹이로 철폐된 성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느껴질 지라도, 끈질기고 목적의식적으로 한국의 노동조합과 대화하고 반전평화운동의 대의로 그들을 설득하는 일을 지속하자. 또 작더라도 소중한 노동조합의 국제연대 사례를 만들고, 그 힘이 더 많은 노동자들을 변화시키는 모멘텀이 되게 하자.

노동자들이 반전평화 국제연대의 대의에 공감하도록 진정으로 설득할 수 있으려면, 제국주의 패권대결 속에 어느 진영의 어느 국가도 우리가 추구할 체제가 아니며, 지금의 전쟁위기는 단지 이 자본주의 국가들이 자국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 벌이는 제국주의적 패권대결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짚고, 양 진영이 벌이는 모든 전쟁행위에 반대하며 국경을 넘어선 노동자계급의 연대를 통해 자국의 자본가계급과 싸워 전쟁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편에서는 지배계급의 인식, 따라서 가장 대중적이고 지배적인 인식인, 북중러 진영을 전체주의에 기반한 악으로 규정하고, 군비증강과 한미일 전쟁연습을 자유민주세력의 정의로운 전쟁행위로 정당화하려는 논리에 맞서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또 하나의 반동적인 체제인 북한에 대한 지지, 그리고 미국 주도 질서에 맞선 북중러 동맹의 마찬가지로 반동적인 제국주의적 성격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 노동자운동의 또 다른 진영론을 극복해야 한다. 운동의 전망이 이러한 진영론에 갇혀있는 이상, 노동자들을 대중적으로 설득해낼 수 없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 제국주의적 패권대결을 벌이는 그 어떤 국가도, 착취와 억압으로 가득찬 또 하나의 자본주의 체제일 뿐이며, 이 중 어느 한쪽이 더 낫다는 주장으로는, 모든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더 나은 세계로 가는 운동에 동참하자는 확신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 그러나 안타깝게도 UAW 지도부는 2024년 1월 25일 바이든의 재선을 공식적으로 지지했다. 즉각적인 휴전과 집단학살 중단을 요구하면서, 집단학살을 가능케하고 있는 바이든을 지지하는 것은 화해할 수 없는 모순이다. 바이든 초청연설 때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들의 시위가 있었고, 이들은 UAW의 지지를 폐기시키고 팔레스타인 노동조합의 호소에 응답하기 위해 UAW 평조합원들을 조직화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참고 자료

- 01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데이터베이스 <https://www.sipri.org/>
- 02 "자본주의 시대전환 : 다시 위기-전쟁-혁명의 시대로 나아가는 세계 자본주의",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3.02.21.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334&me_id=25&me_code=60
- 03 "2023 정치캠프 '위기-전쟁-혁명'",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3.08.11.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513&me_id=25&me_code=60
- 04 "시진핑-모디, 국경분쟁 해결노력 합의..."라다크 병력 조기철수", 서울경제, 2023.08.25.
- 05 "EU 관계자들, 미국의 EU 수출 가스 가격, 무기 판매, IRA 비난", KITA 한국무역협회, 2022.11.25.
- 06 "미 하원, '이스라엘만 지원' 법안 가결...우크라 전쟁 '빨간불'", 한겨레신문, 2023.11.03.
- 07 "EU, 우크라 회원국 가입 논의 합의...헝가리 반대로 추가 지원은 '불발'", 경향신문, 2023.12.15.
- 08 "러시아 우회 전술에 효과 잃어가는 원유 가격 상한제", KITA 한국무역협회, 2023.11.08.
- 09 "중국과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사회운동 억압에 협력해왔다", 플랫폼c, 2023.11.29.
- 10 "'Unprecedented' rail traffic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suggests military transfers", politico, 2023.10.07.
- 11 "러, 중에 기록적 가스-석유 수출...푸틴 '전례 없어'", 연합뉴스, 2023.10.19.
- 12 "Share of yuan in Russia's forex transactions hits new high amid closer bilateral cooperation", 환구 시보 영문판, 2023.08.10. <https://www.globaltimes.cn/page/202308/1296008.shtml>
- 13 "아프리카 국가들이 인권 문제에서 중국 편을 드는 이유", BBCnews 코리아, 2021.05.07.
- 14 "인도양을 중국 내해로 만들 수 있다...시진핑 공들인 미얀마 항구 [채인택의 세계 속 중국]", 중앙일보, 2023.03.02.
- 15 "러시아, 이란에 디지털 감시 기술 제공...드론 받고 히잡 반대 시위대 사찰 도구 썼나", 경향신문, 2023.03.28.
- 16 Fin AI Comercio De Armas con Israel. <https://finalcomerციodearmasconisrael.org/>
- 17 "DOCKWORKERS IN BARCELONA REFUSE TO LOAD OR UNLOAD SHIPS CARRYING WAR MATERIALS FOR ISRAEL! THEY JOIN THE GLOBAL DEMAND FOR CEASEFIRE NOW.", WorkersinPalestine, 2023.11.06.
- 18 "EUROPEAN DOCKWORKERS COUNCIL ISSUES DECLARATION OF PEACE AND TAKE ACTION AGAINST ISRAELI ARMS", WorkersinPalestine, 2023.11.30.
- 19 "The US Labor Movement's Pro-Israel Consensus Is Starting to Crack", JACOBIN, 2023.11.21.
- 20 "Resolution for UAWD to Educate & Organize for BDS & Palestinian Liberation as an Official Position of the UAW", Unite All Workers for Democracy", 2023.12.10.
- 21 "Dockworkers and Labor Activists Can Block the Transport of Arms to Israel", JACOBIN, 2023.11.27.
- 22 "UAW Endorses Cease-Fire, the Largest U.S. Union to Call for an Immediate End to the Violence", INTHESETIMES, 2023.12.01.
- 23 "The UAW Has Called for a Ceasefire. It's Time for All of Labor to Stand Up.", LeftVoice, 2023.12.02.
- 24 "If Palestinian Lives Matter, the UAW Should Not Endorse Biden", LeftVoice, 2024.01.23.
- 25 uawlaborforpalestine X 계정. <https://twitter.com/uawlabor4pal>

통일 담론의 한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사회운동의 도전

홍명교 | 플랫폼c
myungkyo.hong@gmail.com

대사변이 일어나는가

북조선* 통치엘리트 집단인 조선노동당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제8기 9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올해 정책 방향을 결정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원회의 결정문에서 남북관계를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라고 규정했다. 또,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이것을 “대남사업에서의 근본적 방향 전환”이라고 자평했다. 나흘 후인 1월 4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하거나 한국을 겨냥한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조선은 이를 확증이라도 해주듯 이튿날인 5일부터 사흘 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연일 실탄사격훈련을 실시했다. 한국군은 북의 이번 훈련을 ‘9·19 합의를 위반한 도발’로 규정하고 서북도서에 배치된 해병부대가 참여하는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자 깊은 우려가 곳곳에서 쏟아져나왔다. 미국 미들

* 대한민국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양국은 서로를 향해 ‘남조선’과 ‘북한’으로 호명해왔는데 이는 서로를 통일의 대상이자 헌법상 ‘반국가 불법단체’로 보는 것에서 기인한다. 또한 이는 70년째 휴전 상태인 한반도의 불안정한 조건과 통일 담론의 공백과 연결되어 있다. 헌법상의 이와 같은 전제는 통일 담론의 모순을 드러낸다. 본고는 이와 같은 통일 담론의 한계를 짚고 사회운동의 도전 과제를 다루기 위해, 남한 사회에서 통상 ‘북한’으로 통칭하는 휴전선 이북의 사회 체제를 ‘조선’ 혹은 ‘북조선’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 이 회의에서 총 6개의 안건이 다뤄졌는데, 이번에 크게 논란이 된 안건은 1번 안건인 ‘2023년도 당 및 국가정책집행방향에 대한 총화와 2024년도 투쟁방향에 대하여’이다.

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Robert L. Carlin)과 지그프리트 해커(Siegfried S. Hecker)는 38노스 칼럼에서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며 “김정은이 1950년에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전쟁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상가상 윤석열 대통령은 강도 높은 발언으로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입니다. 전쟁이나 평화냐를 협박하는 재래의 위장 평화 전술은 더이상 통하지 않습니다.”(2024년 1월 16일 대통령실 국무회의 발언 중)

이럴 때일수록 현 상황을 냉정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앙일보가 인터뷰한 ‘군 소식통’은 “북한군 포탄이 서해 NLL 이남으로 낙하한 것은 없고, 우리측 피해도 없다”며, “우리 군의 대응 사격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북조선군 총참모부 역시 “해상실탄 사격방향은 백령도와 연평도에 간접적인 영향도 주지 않는다”며 자위권 차원의 자체 훈련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서해의 그 무슨 해상 완충 구역이라는 백령도와 연평도 북쪽 수역으로 해안포 사격을 했다는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의 주장은 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완전한 억지 주장”이라고 발표했다. 실제 연설문에서 김정은은 “우리는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고, “전쟁을 할 그 어떤 이유도 없으며 따라서 일방적으로 결행할 의도도 없지만, 일단 전쟁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온다면 절대로 피하는데 노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미국이나 한국이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면 전쟁을 할 생각이 없다는 걸 몇 차례 반복해서 밝힌 셈이다. 통일연구원의 홍민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최근 북조선의 도발적 발언들이 곧바로 “실질적 도발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최근 북의 도발이 직접적인 전쟁 준비일 것이라고 확인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남한 대중의 전쟁에 대한 공포를 부추기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두 국가의 호전적인 언사는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군비 경쟁을 심화하는 경향이 있다. 마찬가지로 남북 모두의 군비 증강을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 (의도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킨다. 그런 점에서 최근의 상황 변화는 이미 파국적으로 치달은 남북 관계의 민낯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1월 15일 조선노동당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김정은은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헌법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고 밝히고,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평양방송’과 ‘통일의 메아리 방송’ 등 대남 선전방송도 송출을 전면 중단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치달자 현 정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 ‘평화’를 향한 평범한 사람들의 열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진 이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엇갈린 해석과 혼돈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북을 향해 “미사일 도발을 당장 멈추고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옆집에서 돌맹이 던진다고 같이 더 큰 돌 던져서 더 큰 상처를 낸다 한들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며 양비론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에 반해 자민통운동 내의 극

단주의자들은 북조선의 정책 변화를 “반세기 이상 북이 추진했던 북의 평화통일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평가하고, 이러한 긴장 고조 입장에 대해 조금도 비판적 거리를 두지 않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 외 논자들 역시 북조선 당국이 평화통일 노선을 폐기하고 남한을 “괴멸대상으로 최종 규정”한 것에 대해선 비판하지 않고, “양비론이나 운동론 논쟁으로는 현 국면을 돌파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최근 북조선의 입장을 ‘신노선’으로 평가하고, 그것의 책임이 대북 적대정책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반윤석열 전선’에 복무할 논거가 될 것이다.

전문가들의 관점은 ‘신노선’ 혹은 ‘내부단속용’로 나뉜다. 신노선으로 보는 입장은 과거 북조선이 남북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 지향 특수관계”로 규정했던 ‘이중궤도’ 전략에서 단일궤도 전략으로 변화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한다. “흡수통일에 대한 김정은의 불안감이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① 북조선이 향후 대외관계를 국가 관계로 새롭게 맺고, ② 김정은이 정상국가의 통치자로 정립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 ‘신노선’ 논자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즉, 최근 북-러 시아 간 군사적 연대가 높아지면서 중국 및 러시아와의 연계만으로 생존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남한을 지렛대로 삼는 전략을 포기한 것이라는 평가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③ 북조선이 남한(문화, 사회, 이데올로기)과 철저하게 단절하기 위해 ‘민족관계’를 폐기하지 않으면 안됐고, ④ 오랜 경기 침체로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쟁위기론’을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또, ⑤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등 외부요인에 의해 체제 안정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이들이 지목하는 원인은 각기 다르지만, ‘내부단속’ 혹은 ‘내부결속’ 목적이라는 해석을 공유한다.

두 국가 체제는 1991년 유엔 동시가입 때부터 사실상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북조선의 최근 입장이 노선 대전환을 이뤘다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2016년 7차 당 대회 때도 북조선 당국은 남한의 대북 정책이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으며, 이듬해인 2017년부터는 경제 번영·국방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우리국가제일주의’를 제기해, ‘우리민족끼리’라는 구호의 지위를 축소시켜왔다. 그 때문에 ‘신노선론’ 등 다양한 시각들은 그 자체로 완결적이지 않으며, 단편적이고 탈역사적이다. 윤석열 정부의 적대 기조나 지난 문재인 정권의 결정적 과오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는 평론, 서구 시각에 의존한 해석(가령,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고, 북한의 내부 결속을 꺾으려는 포석”) 역시 현 정세의 복잡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본질적으로 지금껏 통일 담론의 한계를 인식하지 않은 채로는 무한 도돌이표에 갇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남한과 북조선으로부터의 요인, 국제 정세, 역사적 요인과 이데올로기적 요인 등에 대해 다층적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체제전환운동으로의 재구성을 도모하는 사회운동은 주류적인 지정학적 평론이 아니라, 국제주의적 지평에서 정세를 인식해야 하고, 우리 안의 이데올로기와 실천을 돌아봐야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지금껏 한국 사회 및 사회운동 주류를 점하고 있던 통일 담론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통일 담론의 작은 역사

분단 이후 70년 동안 좌우파를 막론하고 통용되어온 국가 비전이 있다면 바로 남북 통일이다. 국가 간 통일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하나의 방식일 뿐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통일’은 방법이기 보다는 ‘목표’ 그 자체로 인식되어왔다. 따라서 통일 전략을 구성하는 담론은 도전받지 않는 사회적 통념으로 존재해왔고, 그 당위성에 의문부호를 붙이는 모든 시도는 쉽게 폄훼됐다. 사회운동은 대중 이데올로기의 균열 지점을 찾아 개입함으로써 변화를 기도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통일 담론은 반전평화운동이 마주해온 메인 무대이자 과제다.

역사적으로 통일 담론은 계속해서 변화했고, 그때마다 새로운 방식으로 당위를 승인받아왔다. 한국전쟁 이후부터 1980년대 군부 독재 시기까지 통일 담론이 민족주의적이고 반공주의적인 것이었다면, 다른 한편 1970~80년대에는 민주화운동의 스펙트럼에서 민족주의 통일운동이 출현했다. 1990년대 주류적인 통일 담론 내에서 일시적으로 보편주의적 가치담론에 기대 전망이 제시됐다면, 통일운동은 탈냉전과 군부 독재 권력의 약화로 인해 다소 퇴조하기 시작했다. 외환위기를 경과하며 우리 사회가 신자유주의적으로 개조되기 시작한 후에는 자본의 이윤과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부흥을 도모하려는 욕망이 크게 불거졌고, 통일 담론 역시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한반도에서 ‘통일’이라는 화두와 평화체제로의 이행은 별도로 사고하기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시민운동의 등장 과정에서 반전평화운동과 통일운동은 영향을 주고 받았다.

통일 담론의 역사에서 가장 긴 시간, 강력하게 작동하는 기제는 좌우파를 막론하고 ‘민족주의’다. 역사적으로 군부를 등에 업은 권위주의 통치세력조차 신성화된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한 통일 국가론을 당위로 삼았고, ‘단일민족국가’를 지향했다. 진보 사학계에서조차 이는 “역사적, 필연적 과업”(강만길 외, 1997)이라는 위상을 가졌고, ‘탈식민주의적 해방’라는 부수적 과업이 보태졌을 뿐이었다. 그 때문에 대중적인 통념에서도 분단 상태를 극복하고 통일된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정치적 지향은 ‘민족’ 담론을 전제로 삼으며, 현실에서 여전히 소구력이 크다.

사회운동의 통일 담론 역시 강한 민족주의 기제를 공유한다. 자민통(자주·민주·통일)그룹은 ‘민족 모순’을 주요 모순으로 인식하고, ‘민족통일’이라는 지상 목표와 ‘미제에 의한 억압으로부터의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를 이해한다. 이에 반해 그밖의 사회운동 세력은 분단을 주요 모순으로 다루지 않았으며, 자민통 그룹이 말하는 “자주화”를 선행적 과제로 보지 않는다. 이런 차이는 1990년대 이후 더욱 두드러졌으며, 운동사회 내 문화적인 이질성을 낳아왔다. 이후 한반도 문제를 인식하는 민중운동 내 이념적·문화적 차이가 커졌다. 한편으로는 자민통 노선이 한반도 문제를 주의주의(主意主義)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심화됐고, 비자민통 사회운동 활동가들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한반도 문제를 직시하지 않거나 쟁점적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1980년대 일군의 좌파 연구자들은 남한 사회를 식민지 반봉건 체제가 아닌 신식민지 국가독점 자본주의 체제로 분석하는 입장을 개진했는데, 이는 사회운동 내에서 민족주의적인 통일 담론

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기회를 제공했다. 당시 이들의 작업은 남한 사회의 자본주의적 성격을 증명하는 데 집중하고 계급적 주체로서 ‘민중’ 개념을 제시했지만, ‘신식민’이나 ‘반봉건’ 같은 내재적이고 주체적인 개혁의 대상을 실증시켰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연광석, 2018). ‘민족 모순’을 강조하는 NL의 이론과 시각이 북조선이라는 역사적 내부이자 현실적 외부에 근거했기 때문에 양자가 서로 대칭적 관계를 형성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당시 NL과 PD가 이론적으로 대칭되지 않는 사상적 조류를 이론의 장으로 끌어와 가상적인 대칭관계를 형성했고, ‘민족해방’ 노선의 사상이나 사회운동 내의 통일 담론이 이론주의적 타자화의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한계적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는 자본주의나 계급 구성을 이론적으로 증명하는 작업에 있어서 실천과 주체를 무매개적으로 연역할 수밖에 없었다.

민족주의에 근거한 통일 담론이 시민사회 안팎에서 도전받기 시작했을 때,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통일 담론의 보완이 이뤄졌다. 학계 일부에서는 분단체제로 인해 왜곡되고 억압된 민중의 삶을 개선하고 자유와 평등이 신장된 사회로의 진보를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보다 민족주의를 더 경계하는 입장에서는 “분단과 적대적 대립으로 해서 한반도 주민들의 복지, 자유, 평화, 인권, 환경 등의 가치가 위협받기 때문에 통일이 필요한 것이지 통일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권혁범, 2001)고 역설했다. 통일 담론이 민족주의적인 당위성에 종속되지 않고,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에 근거해야 지속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물론 이런 시도는 부분적으로 민족주의적 통일 담론의 필요성을 완전히 비판하지 않았고, 때로는 결합되기도 했다. 따라서 민족주의적 통일 담론과 보편주의적 통일 담론이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순 없다. 1990년대 초에 창비그룹은 냉전 시대 이후 동아시아적 시각의 필요성으로서 ‘지적 주체성의 회복’, ‘일국적 변혁을 넘어선 대안문명의 건설’ 등을 제기하면서, 그 실천과제로 한반도 통일운동을 제기한 바 있다. 이는 사회운동 주류를 차지하던 통일운동 흐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국민국가의 불완전성이라는 동아시아 조건에 근거해 국민국가와는 다른 정치체를 모색했는데, 그것이 질적 발전과 실천과의 선순환을 이루기도 전에 동아시아 담론 자체가 쇠퇴하면서 망각됐다. 이런 시차는 주로 학계의 담론적 시도가 사회 변화 흐름과 조우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 소련 붕괴 이후 혼돈에 빠져있던 사회운동은 동아시아까지 관심을 뻗기에는 오히려 시야가 좁았고, 그 한계는 오늘날까지 계속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韓(한)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같은 국가적 비전에 대해 사회운동 주류는 별다른 의심을 품은 바 없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래 동아시아에서 이주노동이 증가하고, 이주민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5%(2023년 12월 기준 2,507,584명)를 차지하게 된 오늘날, ‘한민족의 동질성’ 따위는 현실과 한참 멀리 떨어진 레퍼토리일 뿐이다. 민족주의는 이제 의심받지 않는 통념으로 존재할 수 없다. 이처럼 오늘날 민족주의적 통일 담론이 대중적인 소구력을 상실하면서 통일에 대한 열망 역시 적지 않게 줄어들었다. 2022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서 통일의 이유와 관

련한 질문에 대해 “같은 민족이니까”라고 응답한 비중은 42.3%로,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라고 답한 31.6%보다 높았다. 하지만 통일연구원이 같은 해 실시한 ‘통일의식조사’에서 민족기반 통일인식과 분단비용 인식의 응답결과를 보면, “남북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통일할 필요는 없다”는 데에 ‘동의’(42.0%)한 비율은 ‘비동의’(20.2%)의 2배 이상이며, 이러한 추세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민족주의를 근거로 한 통일 담론의 이데올로기적 근거 역시 점차 취약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통일 담론

취약해진 민족주의 통일 담론의 공백을 매우는 것은 신자유주의적인 통일 담론이었다. 1995년 당시 김대중은 통일을 당위의 차원에서만 염원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민족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지 그 의미를 곰곰이 되새겨야 한다”고 발언했다. 대통령이 된 후 그의 대북정책 기조는 이전과 다른 것이었는데, 경제협력 정책을 통한 교류를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로 가는 메커니즘으로 삼았다. 先(先)화해-後(後)통일의 원리에 기초한 이 ‘햇볕정책’ 노선은 1970년대 동독과 소련에 대한 서독의 경제 지원이 평화 관계를 구축했고, 결국 통일로 이어졌다는 공식을 모델로 삼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냉전 시대의 군사적 대립이 탈냉전기에는 경제적인 열전으로 대체됐다고 보고, 북조선과의 경제 협력이 앞으로 미래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절대적인 요소라고 역설했다.

사회학자 박현옥은 이것이 “북한을 남한 자본을 위한 자본주의의 미개척지로 구상화한 것”(박현옥, 2023)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버전의 시장주의적 공급사슬 재편 전략이 제출되었고, 신자유주의 체제는 “민족이라는 가면을 쓰고 자본의 지구적 차원의 탈규제된 축적을 탈냉전기의 진리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그는 “1990년대 이래 자본이 남북한 통일의 트랜스내셔널 형태의 선봉장이 됐다”는 도발적인 규정과 함께, 이제 통일의 형태는 “민족이나 가족 화해의 문제라기보다 탈냉전 아시아의 새로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질서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변화는 지구적 수준의 자본주의 질서를 느슨한 국경과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재구성하고자 했던 ‘탈냉전 기획’과 연루되어 있다. 이때 자본이 추동하는 트랜스내셔널 코리아는 “통일이라는 규범화된 과제와 남한에 만연한 통일에 대한 회의 사이의 간극을 이어주는 고리”인데, 가령 박현옥은 이따금 이뤄진 이산가족 상봉 같은 이벤트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열망을 “인간적 비극의 스펙터클로 바꿔 버렸다”고 해석한다.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남북 사이의 경제교류가 본격화되자, 보수언론들은 경제협력에서 남한의 비용이 북한의 지대와 노동력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며, 이것이 일방적인 ‘퍼주기’라고 비판했다. 당시 보수정당과 언론을 중심으로 남북 경협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퍼주기’ 담론은 “신자유

주의적 한국 사회를 정확하게 읽어낸 전략”(김성경, 2023)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남북 간 경제협력 사업은 단기적으로 구체적 이득을 창출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기회를 노린 사업이었다. 그 때문에 보수언론들의 비난 공세에 대응한 민주당의 논리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충분히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는, 투자가적 논리에 조응했다.

이런 가운데 오늘날 역설적으로 고양되고 있는 통일에 대한 비호감 혹은 불안감은 남·북과 한인 디아스포라의 지구적 자본주의적 통합이 낳은 경제적 우려에서 기원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다양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아도 ‘통일비용’과 ‘경제적 부담’을 비호감의 이유로 꼽는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다. 특히 이런 추세는 남한 경기 상황에 비례하고, 시간이 갈수록 우려의 정도는 대체로 심화된다. 그러니 글로벌 자본주의 경제 상황이 악화될수록 기존의 통일 담론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거 햇볕정책을 주창한 김대중 정부는 통일 담론을 일종의 신자유주의적인 통합시장 담론으로 뒤바꿨다. 김대중 정부는 평화공존과 경제통합을 ‘사실상의 통일’로 규정하고, 장기적인 경제통합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 단계는 남북 간의 무역자유화로, 북조선을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제조업 생산기지(가공무역형 수출기지)로 전환하고, 남한 경제의 하위 파트너로 통합한다는 계획이었다. 정부와 자본은 언제나 “풍부한 저임 노동력”으로 표현되는 북조선의 조건에 한껏 기대를 가졌다. 이를 위해 김대중 정부는 한미 간의 역할 분담론과 정치-경제 분리정책을 제시했다. 즉 군사안보 대응은 미국이 주도하고, 남한은 북조선과의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를 주도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치 변화와 무관하게 남한 자본이 북조선을 통해 교역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구상은 남한의 자본주의 질서의 확장을 지지했고, 자본의 지지의 밑거름 삼을 수 있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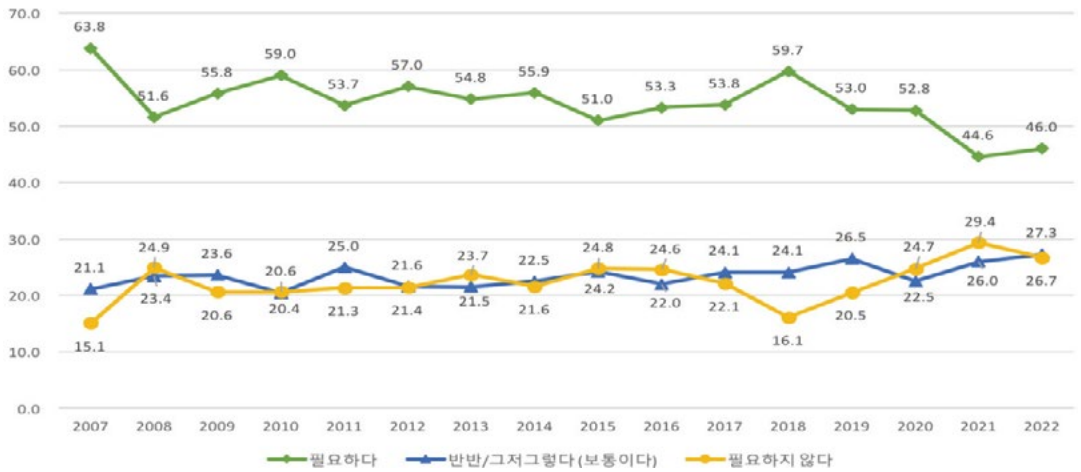
따라서 김대중 정부와 이후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지는 신자유주의화된 통일 담론, 평화공존 해법을 있는 그대로 ‘평화적인 공존을 위한 구상’이라고 지칭하기는 민망하다. ‘평화’라는 외피를 활용해 ‘2국가 1체제’라는 흡수통일 효과를 획득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영향으로 자민통 그룹에 속한 활동가들조차 통일이 “우리 민족”에게 매우 큰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선전하며 지지자들을 설득하고 동원해오지 않았던가. 지금의 국제 정세에서 통일담론이 작동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이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데올로기에 잠식된 통일 담론의 양상을 ‘한인 디아스포라’를 다루는 여러 방식들을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박현옥). 가령 조선족 이주민들이 1990년대 이후 남한으로 이주해 와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재외동포법 제정 등의 요구는 “자본주의적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배상의 정치학’이 활용되었다고 분석될 수 있다. 이를 탈북민들이 맞닥뜨린 현실에 비추어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탈북민들은 남한에서 손 쉽게 ‘반공 프로파간다’와 ‘탈북 마케팅’에 활용되며(문영심, 2021), 동시에 노동시장의 가장 열악한 위치에서 착취당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기실 누군

가에게 탈북은 사실상 “비즈니스”가 됐으며, 탈북민은 소모품 취급을 당하고 있다. 탈북민들은 누군가의 필요에 따라 “먼저 온 통일”이 되기도 하고, ‘귀순용사’가 되기도 하며, ‘거래의 대상’이나 ‘간첩’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통일은 실로 권력자들에게는 위기 극복의 방안이, 당사자들에게엔 비참한 비전이 됐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관점의 한계’가 북핵 문제 해결의 총체적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살펴야 한다.

기실 통일 담론은 반공주의적이고 보수주의적인 위치에서건, 혹은 진보적 자유주의 위치에서건 신자유주의 세계화 원리에 의해 잠식된 것이 사실이다. 어느 쪽이든 통일의 ‘경제성’ 원리가 논거로 활용되며, 양대 기득권 정치세력은 유불리에 따라 통일 담론을 활용한다. 따라서 경기의 변동에 따라 통일에 대한 지지와 반대는 요동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리는 심지어 통일운동 진영에게도 활용되었으며, 박근혜식의 ‘통일대박론’은 결코 반공 우파들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가령 통일운동진영의 여러 논자들은 “전통 제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 개성공단 방식의 남북경협에 있다고 주장한다. 저임금 노동력을 찾아 동남아 등 해외투자로 몰리는 중소기업들이 “악순환을 쉽게 극복”하고 “동남아 등 외국에서 보다 압도적으로 더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답”(김진향, 2020)이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조합원 대상으로 개발한 교재마저 이런 인식을 무비판적으로 공유한다.

김대중-노무현의 평화공존론은 동아시아 권역의 질서를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하려는 시도의 일부였고, 시민사회 전반은 이에 무비판적으로 호응했다. 이는 남한 사회운동이 해당 시기 동아시아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 혁신된 사회변혁 이념과 노선이 과소했던 것에서 기인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북조선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화려하게 시도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해결사이자 중재자를 자임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미국 매파들에 의해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나고, 그해 여름 판문점 깜짝 만남에서의 약속이 모두 위반되면서 장밋빛 약속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

* 2014년 조선일보는 “상호 화해·교류·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경제·사회적 통합을 이뤄갈 경우 2030년엔 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을 제치고 G7 국가로 뛰어오를 것”이라는 장밋빛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얼마 후 이는 “나는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는 연설로 이어졌다.



2007~2022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추세 (단위: %)

한데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모순과 과잉생산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신자유주의적 인 통일 담론의 '효용성'이 위협받으면 통일에 대한 여론의 지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통일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남북통일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거나 “반드시 통일이 돼야 한다”는 응답은 1994년 40.9%(한국갤럽 조사)에서 2014년 19.9%(조선일보·미디어리서치의 2013년 12월 조사), 2022년 16.6%(KBS공영미디어연구소의 2022년 7월 조사)로 떨어져왔으며, “통일보다는 현재대교가 낫다”거나 “(별로/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994년 7.0%(한국갤럽)에서 2014년 16.8%(조선일보), 2022년 25.1%(한국갤럽)로 증가했다. 1994~2013년 사이 통일에 대한 냉담한 태도가 늘어난 주된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혼란’에 대한 우려가 지목됐으며, 최근에는 20~30대 젊은 층 사이에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도전하는 담론적 시도와 사회운동은 매우 미미하다. 따라서 사회운동은 도전받는 통일 담론의 통념을 정면으로 마주함으로써,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서린 전쟁위기의 그늘을 극복해야 한다.

햇볕정책과 자본주의

남한의 양대 정치세력은 북조선 문제를 여전히 자신들이 역사적으로 습득하고 유지해온 관성대로 접근한다. 반공주의 우파는 내내 흡수통일을 포기하지 않은 채 북조선 경제 상황이 악화될 때마다 공허한 희망회로를 돌리고, 자유주의 우파는 신자유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통일 담론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조선에 도와주고 북조선의 군사적 위협(핵문제) 해결을 도모한다는 접근법을 추구한다. 표면적으로 양 세력은 현실 정치와 대외 정책에서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며 대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난하고 굶주리는 북한’이라는 대상을 설정해 소비하고, 강력

한 국방력과 한미동맹에 의한 안보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양자 모두 ‘과거의 북한’만 보려고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어느 쪽이든 지나친 대미 저자세와 친미주의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볼 때 전자(이명박·박근혜·윤석열)를 맹목적 친미주의로, 후자(김대중·노무현·문재인)를 공미형 친미주의라고 명명하는 것은 꽤 설득력이 있다(정육식, 2023).

문재인 정권 이후 진보적 사회운동은 대체로 진보언론들과 정권이 함께 조형한 프레임을 벗어나지 않고, 이를 수용해왔다. 그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이 완전히 좌초해버린 이후에도 독자적인 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을 철저하게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고별사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사회운동 일각에서는 현 위기의 책임을 전적으로 북조선에 돌리고, 자민통노선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개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대안적 입장이기보다는, 마찬가지로 이원론적인 담론 안에서 반공우파 대북노선의 세부항목에 동조하는 등의 양상을 보인다. “남북관계를 감성적 코드로 접근하며 국내정치용 선전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은 일리있지만, 북조선이 돌발 행동을 취할 위험성을 강조하고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외침만으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사회운동적 대안”이 무엇인지 아직 알 수 없다. 더구나 이는 자신이 비판해 마지않는 통일운동 그룹의 편향적 노선과 마찬가지로 이원론적 구도에 스스로를 가둔다. 중국의 군비 증강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에서 전개하는 군사 전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비판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통일운동 그룹의 노선을 비판하면서 후자에 대한 비판이 전무하다면 현실적으로 이는 사회운동이 아닌 지배계급의 담론으로 흡수될 것이다.

기실 한반도 문제 해법을 둘러싼 하나의 논쟁 사이클이 종료된 것처럼 보이지만, ‘낡은 것은 가고 새것은 아직 오지 않은’ 상태는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후자는 현재 국제 질서를 ‘알타체제 해체’라는 틀로 분석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동아시아 정세를 비판적으로 진단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서구적 자유주의’와 ‘중국식·러시아식 권위주의’라는 두 가지 선택지 밖에 남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한다(백승욱, 2023). 2014년 홍콩 우산운동(雨傘運動)이나 대만 해바라기운동(太陽花運動) 등의 사건들, 같은 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유로마이단(вромайдан)’이 그러했던 것처럼, ‘시진핑의 길’에 대당한 ‘서구적 자유주의 권리 지향’으로 기울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바라기운동은 신자유주의적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반대이기도 했다. 또한 2019년 6월 홍콩에서 폭발한 범죄인 송환조례 반대운동이 내재한 사회적 모순을 위와 같이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다. 당시 대중 여론의 다양한 분기를 ‘중국식이냐, 서구식이냐’로 대당시키는 것은 사태의 복잡성과 대만·홍콩 사회에 잠복한 정치경제적 모순을 감추는 효과를 발휘할 뿐이다. ‘중국식이냐, 서구식이냐’라는 이원론적 선택지에 갇힌 사회운동 내의 한 분파가 대안체제를 지향하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함정에 빠졌다고 비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홍콩과 대만 시민사회에겐 오직 두 가지 선택지 밖에 존재하지 않고, 그 너머가 존재할 수 없다고 암묵적으로 단정하는 것은 “이론적 비판

주의”보다는 자유주의적 냉소일 뿐이다. 대만에는 (한국 사회운동이 그렇듯) 노동당식의 친중좌파 노선도, 민진당식의 서구 자유주의 노선도 아닌 보다 급진적이고 사회운동적이며, 이민자들에게 열려있는 대안 사회를 지향하는 노선 역시 존재한다. 이는 2019년 홍콩 역시 마찬가지였다. 당시 홍콩에서는 홍콩민족주의에 기댄 급진적인 반중 항쟁 노선이 아니라, 전 도시적인 노동자 조직화를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평등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트랜스내셔널리즘(transnationalism)적이고 좌파적인 경향도 존재했다. 일국양제의 불안정한 조건은 더이상 이를 지탱하기 어렵게 만들었지만, 홍콩 항쟁을 이끌던 민간인권진선의 사회민주연선과 공당, 직공맹(香港職工會聯盟) 등 핵심적인 활동가 집단이 이런 지향을 갖고 양대 패권 전략 혹은 그것들에 기댄 정치적 경향에 공히 비판적이었음을 누락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지 않을 경우 모종의 ‘도미노 이론’처럼 한국 사회의 선택지 역시 ‘친중’과 ‘친미’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겁박을 강화하는 효과만 발휘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위기 현상들은 모두 국제적인 정세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위기도 상호간 연결되어 있지 않은 위기는 없다. 하지만 대중봉기에 대한 진단을 단순화시키면, 향후 정세에 대한 진단 역시 단순화시키고 정치적 선택지를 좁힐 수밖에 없다. 위기의 시대에 사회운동의 선택이 ‘어떤 야만이 좀 더 낫냐’를 두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운동과 대안에 대한 총체적 부정과 이데올로기적 기각을 드러낼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광복절 축사를 통해 ‘담대한 구상’을 내놓으면서 “북한의 비핵화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 경제의 재건을 위한 종합적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내용은 전혀 담대하지 않았다. 이전 정부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전제(비핵화)와 경제적 실익이라는 떡고물을 제안하는 내용의 재탕일 뿐이었고, 북조선 입장에선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나아가 윤석열은 비핵화를 얘기하면서 뜬금없이 “자유는 평화를 만들어 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세계 평화의 중요한 전제이고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기초가 됩니다”라며, 자신이 주창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피아구분법을 한반도 문제 해법과 연결지으려 시도했다. 한국적 맥락에서 보수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 자유와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는 정치 체제라는 의미와 더불어 반독재와 반공을 지칭한다. 그런 점에서 ‘담대한 구상’은 실현 의지 없는 내부용 구호일 뿐이다. 실제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문에서 ‘담대한 구상’이 “‘비핵·개방·3000’”의 복사판에 불과”하다며 “비핵화를 취한다면

* 도미노 이론(domino theory)은 한 국가의 민주주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도미노 효과로 주변 국가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는, 냉전 시기 미국에서 유행했던 지정학적 견해다. 도미노 이론을 제기한 냉전주의자들은 한 지역이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으면 주변 국가가 그 뒤를 따를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동아시아나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사회운동을 강하게 탄압하려는 군부 등의 방침을 지지했다. 미국이 베트남에 무리하게 개입해 침공한 것 역시 이것에 기반한 것이었다.

** 2006년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대북정책 구상. 정치안보적 상황으로 인해 핵 폐기는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최우선 명제가 되었고, ‘비핵·개방·3000’은 북한의 핵 포기 결단을 유도하기위해 제시됐다.

이라는 가정부터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알다시피 북조선은 지속적으로 미사일 개발과 시험발사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시기 여러 시도의 실패로부터의 학습이 없는 정책의 반한 귀결인 셈이다. 일각에서 대북제재 해제라는 과감한 조치가 병행됐어야 했다고 비판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결국 북조선은 “각자 갈 길 가자”는 식으로 남북관계를 정리한 듯하다. ‘담대한 구상’은 레토릭만 화려한 잣더미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대북 문제는 비단 정부 정책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대중조직과 지역사회가 한반도 질서를 인식하는 시각을 관통하며, 우리 사회 전체의 주요 쟁점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가 위협되고 남북관계가 수렁에 빠져들수록 사회운동은 보다 명민하고 성찰적으로 자신의 비전과 입장을 갖고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운동은 ‘친북이냐 반북이냐’ 혹은 ‘친중이냐 친미냐’의 선택지 안에 자신의 입장을 가두어선 안 된다. 기존의 민족주의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통일 담론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대안체제의 상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

사회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날 한반도 평화는 점차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는 동아시아 전역의 전쟁위기 국면을 놓고도 마찬가지다. 사회운동은 다시 자신의 지향을 재구성·재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통일 담론의 종언에 대한 인식, 반전평화운동의 재점화, 한반도를 넘어 권역적 사고와 실천, 북조선 사회에 대한 이해와 연대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통일 담론은 민족주의적이거나 신자유주의적인 담론에 머물렀고, 보편가치를 지향하는 담론은 자신의 정합성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 상술했다시피 과거 경협 프로젝트는 비일관적이었고, 그 한계도 명확했다. 기본적으로 경협은 경공업 저임금 노동력을 동원해 남한 자본의 비용을 감축해 이윤을 제고하는 것을 지향했다. 그런 점에서 남북 경협은 동아시아의 글로벌 가치사슬 네트워크에 딸린 갈래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에 의한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발전주의적이거나 신자유주의적인 통일 담론의 열망은 이미 시효가 만료됐다. 즉, 통일 담론은 보수파적 논리에서든 진보파적 논리에서든 모두 파국을 고했고, 지난 정권 하에서도 2020년 6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함께 파국적으로 종결됐다.

통일 담론이 종언을 고한 지금,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운동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동아시아 전쟁위기를 넘어 평화를 구축하는 일의 출발점이 ‘통일’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 통일 담론이 오히려 평화공존의 전망을 은폐하는 효과를 인식해야 한다. 본고에서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서 인정하는 의미에서 ‘북조선’이라고 호명하는 것, 역사적 통일 담론을 비판적으로 살펴본 것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비롯한다.

두 번째 과제는 반전평화운동의 재점화이다. 전쟁위기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양상이 불가역

적으로 보이는 현 상황에서 사회운동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실천해야 할까? 최근 한반도 비핵화 실패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다는 사실을 두고 한국 사회에서 가장 힘을 얻고 있는 주장은 “우리(남한)도 핵무장을 하자”는 국가주의적 논리다. 이러한 논리는 역설적으로 미국의 불허로 인해 실현되기 어렵지만, 동시에 한반도 인근에 핵무기의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 미국은 지난 2023년 4월 2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전략 무기를 한반도에 주재시키지는 않을 것”이지만, “가까운 곳으로 핵잠수함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즉, 한반도에 자신의 핵전략잠수함(SSBN)을 자주 보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동북아시아 군비경쟁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고, 자해적 조치가 될 공산이 크다. 2019년 이후 북조선 통치세력의 대외 인식은 상당히 달라졌는데, 북조선 지배세력은 이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미련을 접었고, 더이상 핵 협상을 평화협정 체결 및 경제 제재 해소의 지렛대로 삼으려 하지 않는다. 핵무력을 자신의 ‘국체’로 삼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북한’은 대북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할 과제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사회운동은 핵무기 반대와 전쟁 위기에 맞서 대중적 반전평화운동을 재건해야 한다. 잠시 뜨거웠던 남북관계의 추억을 접어두고, 한반도를 위협하는 군사적 긴장을 진정시킬 방법을 찾아야 할 시급한 과제를 풀어야 한다.

‘비핵화’는 표면적으로 누구나 지지한다고 말하는 원칙이다. 문제는 약속과 수순이다. 실제 지난 2021년 11월 북미 간에 이뤄지던 종전선언 협상에서도 ‘비핵화’ 문구는 막판까지 전개되던 이 협상을 파토낸 가장 중대한 쟁점이었다. 궁극적으로 “‘비핵화’는 물건너갔다”고 보는 게 냉정한 현실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과제를 포기해야 할까? 사회운동은 “여전히 그래선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한다. 그것을 포기한 순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영원히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북의 핵무장 완성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부심을 심어주는 일이 될진 몰라도,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에게겐 크나큰 불행일 것이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으로 내다보며 군비 감축을 도모해야 한다.

기존의 논의에서 그것은 완전히 해결 불가능한 난제가 되어버린 비핵화라는 혼란스러운 과제 대신 우리는 ‘비핵무기 시대’* 개념을 통해 핵 군축을 시도할 수 있다. 해당 지역내에서 핵무기를 배제함으로써 핵전쟁 연루 가능성을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다. 이를 한반도로 좁혀서 보면,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밖에 한반도 밖 핵보유국들이 남북에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가하지 않고 핵무기 및 그 투발수단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적 구속력을 갖춘 형태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 Nuclear Weapon Free Zone: 특정 지역내에서 국가간 조약에 의해 핵무기의 생산·보유·배치·실험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NPT상의 5개 핵 보유국들이 비핵지대 조약 당사국에게 핵무기 사용 및 위협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극적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핵 군축 방식.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핵 보유국의 NSA 제공과 검증체제가 구비되어야 한다.

물론 이런 합의 역시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쟁 방지나 긴장 완화·상호간 위협 감소 조치 등 여건을 하나씩 만들고, 군축이나 제재 해결 등 과제들을 시야에 넣은 채로 추진”(정욱식)해 나가면서 희망의 근거를 찾아야 한다. 핵심은 협상 과정에서 지나치게 꼬여버린 기존 ‘비핵화’ 담론 대신, 보다 이완된 목표를 추구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축과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운동은 실패한 프레임 안에서 악무한의 논전을 지속하기 보다는, 군축과 평화협정이라는 비전을 위해 단계적인 로드맵을 남한 사회에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삼아 군축과 평화운동의 담론을 구축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가 국제 정세와 무관한 이슈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보면 전 세계적에서 편향적으로 핵무기 개발하는 한쪽의 문제가 동반된 현 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안 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국제적 비핵 질서와 연동시켜 평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동일한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당장 핵무기를 갖나 아니냐라는 목표가 아니라, 단계적인 군축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도 있다. 이는 단순히 한반도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다.

군축과 평화체제 구축의 중요성과 맥락에 대한 설명 역시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요구는 결코 기존의 발전주의적이거나 신자유주의적인 통일 담론으로는 보편성을 담보할 수 없고, 이는 다시 국제적이고 권역적인 모순에 대한 일국적인 대응이라는 한계를 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가 아닌 동아시아로 대안과 실천의 범주를 확대하고, 동아시아 민중운동 전반의 지향으로 제시해야 설득력을 갖출 수 있다. 일본 자위대가 난세이 제도에 무제한적으로 미사일 기지를 확장하고, 중국 인민해방군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군비를 증강하고 핵무기를 1천 개까지 늘리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군축이나 남한 내 시야에 머문 평화운동 수사가 설득력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중기적으로 동아시아 평화공존 체제를 확립하는 것만이 ‘민중통일’이라는 비전과는 동떨어진 새로운 논의 틀을 통해서 전개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단계는 두 국가로의 완전한 정착 혹은 북한국가로의 전화 등으로 열린 결말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이를 ‘단일민족국가 수립’이라는 오래된 몽상에 가두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핵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통해 자위권을 행사하려 하는 대결구도를 절대적으로 평화적인 정세로 바꿀 수 있다. 한반도 핵문제를 단순히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정세 차원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한 지양을 위한 관문으로 여긴다면 말이다.

세 번째 과제는 한반도를 넘어 한반도 평화 문제의 시야를 획득하는 것이다. 북조선 체제를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통일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의 차이는 명확하다. 전자는 과거의 통일담론이 노정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아무리 진보적인 지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자본주의 현실의 권력구조가 그대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두 개의 국가 체제를 하나로 합친다는 것은 전혀 쉽지 않다. 통일 담론이 남한의 자본 침략 논리로 확대된 것이 이미

예견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둘러싼 논의가 최소한 권역적 사고틀로 확장되어야 하는가? 일군의 연구자들은 2010년대에 실천 과제에 대한 질문을 재차 제기하며 “동아시아의 핵심현장”으로 “중화제국-일본제국-미제국으로 이어지는 중심축 이동에 의해 위계지어진 동아시아 질서의 역사적 모순이 응축됐고, 식민과 냉전이 포개진 영향 아래 공간적으로 크게 분열되어 갈등이 응축된 장소”(백영서, 2013)들을 제기했었다. 오키나와(沖繩)와 진먼(金門), 개성 등을 통해 ‘이중적 주변의 시각’을 갖고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서자는 것이다. 이 세 곳 중 오키나와는 20세기 역사 내내 동아시아 질서의 얼룩처럼 존재해왔고, 이는 진먼도 역시 마찬가지다. 또 2000년대 이래 제주 해군항이 건설된 강정마을은 동아시아 평화운동의 주요한 장소로 부상한 바 있다. 이런 장소들은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실천 거점으로 여전히 유의미한 질문을 남기고 있다.

남한 사회운동은 ‘통일’이라는 틀은 민족주의 담론에 갇히고, 발전주의적 대안 제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담론의 주체를 ‘민족 변영’이라는 지향에 가두어놓고 비전을 설정하기 때문이다. ‘통일 담론’에서 동아시아 평화공존체제 담론으로 이동하고, 참고에서 지난시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펼쳐놓았던 아이디어들을 복기해야 한다. 남북 평화를 위해 전개되는 기존의 모든 실천이 통일 담론에 흡수된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 사드 배치 반대운동이나 미군기지 반대운동, 한반도 종전선언운동 등 실천들이 과거의 담론이 아니라, 다른 지평 위에 놓이도록 이동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때 ‘복합국가론’(천관우, 1972)은 중장기적 전망이 필요한 우리에게 중요한 시야를 제시한다. 복합국가는 단일국가 성립 이전에 남과 북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일정 한도 내 한 민족이 한 덩어리로 엮히는 국가 형태를 지칭한다. 즉, 국민국가와 대당되는 개념으로, 자민족중심주의와 국가주의의 폐해를 경계하면서도 선부른 반국가주의의 편향을 범하지 않도록 창안한 것이다. 이러한 복합국가론의 문제의식을 지역 차원에 확대 적용하면 한반도 변혁을 동아시아의 변화를 추동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국제정치 연구자인 하바 구미코(羽場久美子)는 2022년 5월 『주간금요일(週刊金曜日)』 기고 칼럼을 통해 “오키나와나 대만을 축으로, 비정부 기구 차원에서 환경·안전보장·평화의 문제를 고민하는 조직을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는 냉전 한복판이던 1975년 유럽의 사회단체들과 지방도시들이 선도적으로 「헬싱키 선언」을 천명하고 CSCE(유럽안전협력회의)를 설립했던 것을 사례로 들면서, 동북아시아 시민사회 역시 오키나와를 평화의 허브로 삼아 아시아 국가들과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런 제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지금 우리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사회운동의 새로운 태세를 다지고, 오키나와든 강정이든 진먼이든 국경을 넘어선 아래로부터의 반전평화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가령 체제전환운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시민사회운동 주체들과 함께 동아시아 각국 사회운동을 향해 각국의 군비 경쟁을 멈출 것과 평화체제의 수립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집회를 함께 개최하자고 제안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기존 반전평화운동이 구축해온 네트워크와 경험은 이것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각국 시민사회간 네트워크는 양국의 군비 경쟁 논리가 잠식하는 시민사회 내 논리를 비판하고, 오키나와와 대만 시민사회의 연대는 난세이 제도 일대의 군비 증강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

끝으로 사회운동은 북조선 사회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가능한한 연대를 도모해야 한다. 북조선 사회에 접근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여정이 금기시되는 분위기 속에서 사회운동이 경계를 맞대고 있는 한 사회를 이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지금까지 남한 사회 지형에서 그것은 강력한 친밀감 내지는 대상화시키는 어떤 것으로 취급됐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해와 연대란 불가능하다.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하 북조선에 대비한 남한 체제의 경제적 우월성이 증명되기 시작하면서 남한 사회는 북조선을 전근대적이고 열등한 대상으로 인식하기를 심화했다. 남한의 보수언론들은 탈북민 여성들을 야만 사회에 탈출한 불쌍한 존재로 다루면서, 심지어 성적으로 대상화해왔다. 서구 자유주의 선진국들과 동등해진 남한 체제의 위치를 근거삼아 북조선 사회와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식민주의적인 대상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에 맞서 체제전환운동은 장기적 전망과 비판적 시야 속에서 북조선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개진해야 한다. 반공주의나 민족주의로 수렴되지 않고, 대안 체제를 지향하는 논거를 확인 및 제시해야 한다. 그간 남한 사회가 탈북민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반공주의 프로파간다의 도구나, 혹은 가장 밑바닥의 저렴한 노동을 담당하는 부품으로 취급하곤 했다. 때로 탈북민들은 인종주의화된 차별의 벼랑 끝에 서기도 했다.* 그렇다고 할 때 가장 인접한 과제는 탈북민 주체들과의 조우일 것이다.

“고난의 행군”이 한창이던 시기 함흥에서 자라 열일곱 살 때부터 군 생활을 했던 한 탈북민 당사자에 따르면, 남한 주류 사회는 탈북민을 끔찍하게 도구화한다. 주류 언론들은 탈북민들을 상품화하고 반공주의적 모델로 연출해왔고, 노동시장은 극심한 경쟁주의로 얼룩져 있다. 그는 자신을 비롯한 여타의 탈북민들, 남한의 경쟁 사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남쪽도 북쪽도 선택할 수 없어 제3국으로 가 난민이 된 사람들, 또 분단 문제에 대해 치열하게 사고하다 북한에 갔다가 고통받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조난자들”이라고 일컫는다(주승현, 2018). 사회운동은 이 조난자들과 만나야 한다. 남한 사회가 탈북민과 관계를 맺는 새롭고, 평등하며, 모범적인 방식을 가시화해야 한다. 이는 미래에 남한 사회와 북조선 사회가 서로를 인정하고 교류할 수 있는 준거들이 될 수 있다.

고통이 예견되는 미래는 막연하게 현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새롭게 기억함으로써만 변화시킬 수 있다. 매우 요원해보이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도 마찬가지다. 그 과정은 매우 지난하고, 국내에서 무수히 많은 논쟁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과정에서 사회운동은 한반도 문제

* 반면 국가권력은 탈북민이라는 주체를 반공주의와 군비 경쟁 정당성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기조를 지속해왔다. 최근 한반도 군사 긴장이 고조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지시한 것 역시 그 일환이다.

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견지해야 한다. 이제 체제전환운동은 다양한 주체들과 실천의 재구성을 필요로 하는데, 한반도 문제 해법에 대한 남한 시민사회 및 대중조직에서의 복합적인 '재인식'은 이런 재구성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민중의 평화는 아래로부터의 반전평화 대중운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국가주의적 프레임이 민중의 안위를 위협할 때조차 마찬가지다. 한반도 문제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남북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그 출발이다. '민족'이라는 이름 안에 묶이지 않는 보다 다양한 주체들이 포괄되고, 노동권과 평등, 민주주의가 약속될 수 있는 '어떤 통일'의 미래는 평화체제 구축의 과정에서 양국 시민들에 의한 상호교류가 가능해질 때, 제로부터 생각해도 늦지 않다.

참고 자료

- 01 Robert L. Carlin and Siegfried S. Hecker, 「Is Kim Jong Un Preparing for War?」, 38 NORTH, 2024. January 11.
- 02 羽場久美子, 「中国の封じ込めではなく共同を 沖縄を平和のハブとしてアジアと結ぶ」, 『週刊金曜日』, 2022년5/13号
- 03 강만길 외 26인.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하여』, 심지, 1997.
- 04 권혁범, 「통일에서 탈분단으로」, 『한반도 통일논의의 쟁점과 과제』, 한신대학교 개교60주년 기획위원회, 2001.
- 05 김갑식·박주화, 「한국인의 통일인식: 시계열 추세를 중심으로」, 『KINU 통일의식조사2022』, 통일연구원, 2022. 12.
- 06 김범수, 「2022년 통일의식조사」, 『2022 한국인의 통일의식: 기로에 선 평화, 다시 묻는 통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2. 9. 27.
- 07 김범수·김병로·김성희·김학재·이성우·최은영·황수환·김민지, 「2022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2. 12.
- 08 김성경, 「한반도 평화 불/가능성과 멸망의 정동」, 『평화들 PEACES』 제2권 제2호, 강원대학교, 2023. 11.
- 09 김진형, 「개성공단, 이제는 열자!」, 『내일을여는역사』, 2020년 봄호, 재단법인 역사와책임, 2020. 3.
- 10 김혜영, 「북한 김정은, 그렇게 위협하더니 사실 이걸 두려워했다?...K드라마 본 고교생에 12년 형 선고한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SBS 기사 중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김혜영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등 인터뷰 인용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506037
- 11 문영심, 『탈북 마케팅: 누가 그들을 도구로 만드는가』, 오월의봄, 2021
- 12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 우리사회 대안과 희망찾기』, 민주노총, 2012. 5.
- 13 박원근, 토론 발언, 「남북관계 패러다임의 대전환: 특수관계에서 일반 국가관계로?」, 세종연구소 세종특별정책 포럼, 2024. 1. 23.
- 14 박현욱, 『자본의 무의식: 자본주의의 꿈과 한민족 공동체를 향한 욕망』, 천년의상상, 2023
- 15 백승욱, 『연결된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반도 핵위기까지, 알타체제의 해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의힘, 2023
- 16 백영서, 『핵심현장에서 동아시아를 다시 묻다』, 창비, 2013.
- 17 법무부 이민정보과, 「2023년 12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4. 1. 11.
- 18 사회진보연대, 「북한 정권이 문제다. 남한 사회운동은 정세를 직시해야 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북한 정권을 규탄한다.」, 『사회운동포커스』, 2020. 6. 18.
- 19 송승현, 「전쟁이 안 나면 이상한 상황... 반미반전운동 확장과 사회적 여론조성 위한 노력 뒤따라야」, 노동과세계, 2024. 1. 18.
- 20 영광석, 『사상의 분단: 아시아를 방법으로 박현채를 다시 읽다』, 나뭇잎, 2018
- 21 외교부 국제기구정책관, 「[편람] 비핵지대(NWFZ) 관련 주요 이슈」, 외교부, 2007. 10. 8. https://www.mofa.go.kr/www/brd/m_3989/view.do?seq=304148
- 22 이내영, 「한국인의 통일의식의 결정요인: 새로운 분석모델의 모색」, 『평화연구』,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2014.
- 23 이승열, 「조선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분석과 2024년 남북관계 전망」, 국회입법조사처, 2024. 1. 19.
- 24 이정훈, 「북,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엄중한 결론」, 민플러스, 2024. 1. 3.
- 25 정육식,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2023, 서해문집

- 26 천관우, 「민족통일을 위한 나의 제언」, 가톨릭종합월간지 『창조』, 1972. 9.
- 27 조선일보 인포그래픽스팀, 「잊혀진 통일의 꿈 살리자- 국민 통일의식 여론조사」, 조선일보, 2014. 1. 2.
- 28 조정훈, 「통일부, 석연찮은 '통일대박 최순실 작품설' 해명」, 통일뉴스, 2017. 3. 28.
- 29 주승현, 『조난자들 : 남과 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이들에 관하여』, 생각의힘, 2018
- 30 최은주, 「북한의 '투코리아 정책'과 남북관계의 미래」, 「남북관계 패러다임의 대전환 : 특수관계에서 일반 국가 관계로?」, 세종연구소 세종특별정책포럼, 2024. 1. 23.
- 31 최준영, 「사실.. 김정은은 기분이 좋은 상태? [북한 특별편]」, 유튜브 채널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연구소', 2024. 1. 21. <https://www.youtube.com/watch?v=RQXqaLCi8Ao>

평화운동은 무엇을 해왔나?

2003~2023년 시기 한국 평화운동 분석

임재성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beindp@hanmail.net

1. 서언: 발제문의 맥락과 전략

‘도래하는 전쟁위기에 맞서 사회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이름의 본 세션 제목을 따르다 면, 본 세션에서는 ‘현재 넘실대는 전쟁위기’의 배경과 실질을 분석하고, ‘사회운동의 과제’에 대한 실천적 제안과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발제문은 위 두 측면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는다. 두 측면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앞서, 한국 사회에서 ‘전쟁에 맞선 사회 운동’이 ‘무엇을 해왔는지’에 대한 내용이 먼저 공유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 본 발제문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닌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나’에 초점을 맞춘다. 한국이라는 지역적 범위 안에서 등장하고 이어져 온 평화운동을 사회운동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평화운동을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난제는 정의(定意)다. 1945년 이후 서구 평화 운동을 분석한 영국의 평화운동가 에이프릴 카터(April Carter)는 평화가 ‘민주주의’만큼이나 매력적인 표어이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것이 가지는 일반성으로 인해 평화운동 집단을 다른 집단과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한다(1992: 13).* 한편, 일정한 ‘정의’가 내려진다고 하

* 카터는 평화운동을 확인하는 3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 1) 집단의 독립성, 2) 자신의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과 저항, 3) 폭력에 의존하지 않는 항의 수단이었다. 특히 카터는 1945년 이후의 냉전시절 평화운동을 규정함에 있어서 해당 집단의 정치적 독립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다. 냉전이라는 자본주의진영과 사회주의진영이 대립하는 시대적 배경에서 안보와 군사문제에 대한 비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성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 군사행동에 대한 입장’ 또는 ‘비판가능성’이 한국 평화운동의 기준(원칙) 중 하나로 꼽히는 것에 비춰볼 때 시사점이 크다.

더라도, 그 정의에 해당하는 활동 모두를 평화운동으로 분류하는 것은 형식적 분석에 그칠 수 있다. 일제시기 노무자 강제동원 문제를 보자. 전쟁을 수행하는 주체가 군수물자 생산을 위해 점령지를 인적 수탈하는 것은 대표적인 전쟁범죄다. 아시아·태평양전쟁시기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해 피해자들과 조력자들은 1990년대부터 고통을 사회화하고, 전범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다. 전쟁의 고통을 현재화하고 책임을 묻는 평화운동의 전형이다. 그렇다고 해서 강제동원 관련 활동을 한국의 평화운동으로 분류하는 것이 실질에 부합하는 분석일까? ‘대일 과거사청산’이라고 하는 한국의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반영하지 못한 형식적 분류는 아닐까?*

운동의 정의하고, 범위를 특정하는 것의 곤란함에 대한 하나의 타협(전략)으로써, 본 발제는 특정 평화단체를 중심으로 ‘무엇을 했는가’를 다루고자 한다. 2003년 만들어진 참여연대 산하 ‘평화군축센터’를 중심으로 지난 20년의 한국 평화운동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20년간 국내외 평화운동 네트워크에서 중심적 활동을 해왔으며, 평화단체를 넘어 주제별로 통일운동단체-종교단체들과도 활발히 연대해왔다. 따라서 평화군축센터의 활동을 살피는 것은 당대의 평화운동단체들이 집중했던 활동을 일별하는 유력한 방식일 수 있다. 또한 평화군축센터는 ‘평화국가론’(2006년), ‘평화복지국가론’(2013년)과 같은 담론형성에서 적극 나섰다라는 특징을 가지기에 더욱 분석적 의미가 있다. 이처럼 평화군축센터 활동을 큰 줄기로 하여 한국 평화운동을 내용을 다루며, 다른 운동주체들의 활동도 일부 추가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① 평화운동에 대한 기본적 논의를 간단히 정리하고, ② 평화군축센터의 활동영역을 확인한 후, ③ 결론을 대신해, 평화군축센터가 최근 집중하고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단상을 담고자 한다. ① 부분은 본 발제가 가지는 개론적 성격을 고려해 서술한 것임을 밝힌다.

2. 평화운동 정의와 ‘저발전’이라는 평가

가. 평화운동 정의에 대한 기존 논의

앞서 언급한 것처럼, 평화라는 개념의 추상도를 높이면 사실상 유토피아적 개념들 대부분이 포함된다. 따라서 평화운동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데, 평화를 긍정적인 방식이 아닌 부정적인 방식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한 예로 ‘전쟁과 폭력이 없는 상태’가 평화라는

~~~~~  
\*\* 현재 한국 사회의 일제시기 강제동원 관련 운동은 운동주체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과 발신하는 담론의 내용, 여론이 해당 운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지 등도 고려했을 때, 평화(반전)운동으로 분류하긴 어렵다고 평가한다.

것이다(이삼열, 1989: 144). 이런 방식으로 평화를 정의한다면 평화운동은 ‘전쟁과 폭력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평화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폭력에 대한 정의가 된다. 무엇이 폭력인가?

요한 갈통(Johan Galtung)은 폭력에 대한 정의 문제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논자다. 갈통은 평화를 폭력의 부재로서 접근하는데, 그는 직접적인 무력충돌(직접적 폭력)이 부재한 것은 ‘소극적 평화’에 불과하다고 보며 폭력의 범위를 확장해서 평화의 범위 역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Galtung, 2000[1996]). 그의 폭력 개념 확장은 ‘직접적 폭력-구조적 폭력-문화적 폭력의 삼각구조’로 표상된다. 폭력의 다양한 층위와 상호작용을 폭넓게 분석하면서, 이러한 폭력 모두가 부재한 상태를 ‘적극적 평화’라고 규정했다.

폭력과 평화에 대한 개념 확장은 양차 세계 대전 이후에 당대의 평화운동이 결국 전쟁을 막지 못했다는 반성 속에서 이루어진 작업이었다. 이러한 평화 개념의 확장을 통해서 기존의 국가 단위 행위자에 한정된 분석틀을 넘어서고, 개인과 집단 수준의 폭력과 그 폭력이 구성되는 다양한 사회적 맥락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게 되었다(김명섭, 2002). 그러나 이렇게 확장된 폭력의 개념과 평화의 정의를 통해서 사회운동인 평화운동을 분석하는 것에는 한계점도 존재한다. 갈통의 정의에 기반을 둔 심영희(2004)의 분석을 보면 평화운동은 반전운동, 군축, 방위비 삭감과 같은 영역에서 이주노동자 문제와 복지정책까지 포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회운동을 다루는 분석적 개념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정옥식(2004)은 빈곤과 차별, 환경파괴와 가부장제와 같은 모든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적극적 평화개념이 가지는 효과를 인정하지만, 실제 평화운동을 지칭할 때에는 반전·반핵·국방정책 감시 및 군축운동 등과 같은 좁은 의미로 평화운동을 한정한다. 이재철(2007) 역시 평화의 개념이 사회적 갈등의 대부분을 포괄할 정도로 커진 상황에서 평화운동 역시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항하는 운동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인권운동, 노동운동, 환경운동의 영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적극적 평화 개념으로 앞선 영역의 영역까지 평화운동을 개념화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평화운동을 소극적 평화의 개념을 바탕으로 “전쟁을 예방하거나 반대하고 평화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시민운동”이라 규정한다.

## 나. 반군사주의 운동으로서의 평화운동

평화운동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은 갈통이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하던 ‘소극적 평화’의 수준으로 평화운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반전, 반핵, 군축을 주장해왔던 평화운동의 역사적인 흐름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소극적 평화’로 평화운동을 규정하는 것은 사회운동의 역사적 한 분파를 지칭하는 것으로는 충분할지 모르지만, 운동의 확장이나 지향을 담기에는 부족하다. 갈통의 적극적 평화

개념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평화의 확장’이 아니라 ‘폭력의 확장’이었다. 눈앞에 보이는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그 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사회·문화적 폭력에 더욱 주목해야하다는 것이었다. 그의 통찰에 기대어본다면, 평화운동 역시 ‘전쟁 반대’ 자체를 넘어서서 전쟁과 폭력이 작동하는 구조와 이를 정당화하는 담론에 대한 비판과 개입을 시도하는 사회운동으로 확장되어왔다.

이 맥락 속에서 평화운동을 ‘군사주의(militarism)’\*라는 개념을 통해 정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사회학자 마이클 만(Michael Mann)은 군사주의를 ‘전쟁을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사회적 활동으로 보이게 하는 가치관의 체계, 또는 전쟁이나 전쟁 준비가 일상적인 사회활동으로 인식되게 하는 사회적 실천이나 태도들의 총합’으로 규정한다(Mann, 1988). 평화운동이 극복하고자 하는 폭력을 ‘군사주의’로 규정한다면, 평화운동은 ‘반(反)군사주의 운동이다. 반군사주의 운동은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폭력이 사회적으로 재생산되는 메커니즘을 주목하면서도, 평화운동이 주되게 다루어왔던 전쟁과 군사·안보영역에 대한 초점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군사주의를 재생산하는 교육과 미디어, 담론에 대한 저항 역시 평화운동의 영역으로 포섭된다.

#### 다. 한국 평화운동에 대한 ‘저발전’이라는 평가

한국 평화운동은 언제 등장하였는가? 탈냉전과 민주화를 배경으로 1990년대 초기 주체들이 형성되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정옥식, 2004; 김귀옥, 2006; 구갑우, 2007). 여성평화운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1990년대 전후의 여성단체들의 선도적으로 시작한 군축과 반전활동을 태동의 순간으로 본다(심영희·김엘리, 2005). 1991년에 시작된 <반핵평화운동연합>이 시초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 위 단체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불가침조약 체결을 공론화했으며, 군비축소를 통한 사회복지 증진을 주장했다. 1993년 결성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1980년대 ‘주한미군 철수운동’과는 일정한 거리를 가지면서 미군에 의한 범죄, 환경오염, 군사훈련장 주변 주민 피해를 다뤘는데, 역시 평화운동의 대표적 영역인 반기지운동의 등장이었다(서보혁·정주진, 2018: 119-120). 1990년대의 위와 같은 흐름이 선도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대중적 사회운동’의 등장이라고 보기에는 한

\* 군사주의에 대한 여러 정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정당화된(legitimate) 조직적 폭력을 용인하는 태도’(Lang, 1968). ‘군인들의 이데올로기가 전 사회 속에 파고드는 현상’(Lasswell, 1941)이라는 정의는 폭력을 문제해결 수단으로서 적극 용인하는 사회적 태도와 전쟁을 준비하거나 수행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지지가 형성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앞선 정의가 사회적 선호나 태도라면, 제도와 체계로서 군사주의를 정의하기도 한다. ‘민간에 대한 군대의 지배, 군사적 수요의 과도한 우위의 항구화’(Vagts, 1959) 등이 있다.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은 군사주의를 “오늘날 다른 무엇보다도 군대의 상층부나 지배 세력들이 다른 수단에 비해 군대적 문제 해결을 첫 번째 수단으로 보는 것과 하층부의 사람들이 그런 문제 해결을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정의한다(1991[1985], 권인숙, 2005: 25에서 재인용).

\*\* 반핵평화운동연합의 발기 취지문에 기재된 초기 사업계획은 “핵무기 배치상황과 군사전략에 관한 정보공개요구, 핵기지 철폐, 평화협정 체결 쟁취, 핵발전소 신규건설 반대, 핵폐기물 처리의 안정성 촉구, 한반도 비핵지대화의 실현” 등이다.

계가 있다. 연구자들은 대체적으로 1990년대에 초기 주체가 형성되었으며, 2003년 이라크 반전 운동을 계기로 대중적 평화운동이 등장했다고 평가한다.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에는 거의 모든 사회운동 영역에서 351개 단체들이 참여했고(2023. 9. 22. 기준), 한국의 사회운동 사상 최초로 ‘반전’과 ‘평화’라는 구호가 당대 운동의 첨단에 위치했다.

대중적 평화운동의 등장 이후 한국 평화운동에 대한 여러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공통적인 지점은 ‘저발전’이다. “(다른 한국의) 사회운동이 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것과는 다르게 평화운동은 20년 정도 되는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사회운동 안에서도 평화운동은 여전히 소수의 운동에 머물러 있고 사회의 관심도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다. 평화운동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 높지 않다”(서보혁·정주진, 2018: 225). “왜 한국 평화운동은 늦게 시작되었는가? … 2000년대 들어 평화운동이 활성화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반적으로 퇴조하고 있는 현상마저 보이고 있다”(서보혁·정옥식, 2016: 183). 요약하면, 뒤늦게 등장해 저발전된 한국 평화운동은, 2003년 이후 대중적 사회운동으로 성장했지만,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침체기라는 것이다.

왜 저발전되었는가? 공통적으로 뽑히는 원인은 한국 사회의 강고한 군사주의다. 김귀옥(2006)은 ‘냉전문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평화운동의 등장과 성장을 막았던 요인들을 제시한다. ‘냉전문화’란 한반도 전쟁과 분단의 트라우마, 반공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사회학자 문승숙(2007)이 한국의 근대를 “군사주의에 갇힌 근대”라고 표현한 것처럼, 한국사회는 군사주의가 지배적 가치를 이루어왔다. 반공국가로서 국가안보는 ‘절대선’으로 숭상되었고, 전쟁준비는 국가 정체성의 한 가운데 놓여있었다.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한 손에 망치 들고 건설 하면서, 한 손에는 총칼 들고 나가 싸워야 했던 것이다. 이렇게 팽배했던 군사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평화운동이 가장 필요했던 사회였지만, 바로 그 이유로 평화운동이 오랜 시간 불가능했었다.

지난 평화운동의 20년 나아가 30년의 역사는 그러한 군사주의, 냉전문화, 정전과 분단이라는 악조건에 맞서, 지배적인 안보체제와 인식에 구별을 내온 과정이었다. 이하에서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등장한 2003년부터 현재까지의 활동을 통해 한국 평화운동의 개괄적 활동을 확인하겠다.

### 3.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통해서 본 평화운동의 영역

#### 가. 평화운동 영역

평화운동 관련 연구들이 꼽는 운동 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반전운동, 군축운동, 징병제 폐지운동, 평화적 갈등해결, 사회적 약자와 평화운동, 통일운동과 평화운동’(서보혁·정주진, 2018). ‘외교와 협상, 군축, 비폭력과 반차별, 기후정의, 진실규명과 화해’(김연철·서보혁·황수환, 2022). 참여



연대 평화군축센터가 표명하고 있는 활동방향(영역)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구상’, ‘군비감시’, ‘시민 평화주체 형성’으로 대동소이하다 할 수 있다. 다만,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참여연대 활동의 오랜 강점인 ‘권력감시’와 ‘시민정책제안’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다. 평화군축센터 설립 초기 문제의식은 ‘국가와 안보전문가들의 위협 해석 독점’에 도전하고 ‘안보영역을 민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안보영역의 민주화’는 사회운동으로서 평화운동의 본질이다. 폭력을 독점의 본질로 하는 근대국가의 근저와 대립하는 운동이 평화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폭력(위협)의 해석’과 ‘폭력(군사력) 행사 결정’에 대한 권력의 독점을 깨고, 감시와 개입을 통한 민주주의를 실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평화군축센터의 활동영역을 ① 한반도 긴장완화와 동북아 비핵지대화, ② 반기지 운동, ③ 군축과 국방외교정책감시개혁, ④ 전쟁과 무력충돌 반대, ⑤ 평화담론형성으로 나눠 살펴 보겠다.\*\*

## 나. 한반도 긴장완화와 동북아 비핵지대화

평화군축센터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비판의 입장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결국 전쟁으로 치닫게 되는 안보딜레마 구조에서 발생하거나 예비되는 군사적 행위들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긴장의 상승국면을 중단시키기 위해 목소리를 냈다.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가 마주하는 가장 중요한 안보위협인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비핵지대화,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등의 주장을 이어갔다.

먼저 평화군축센터는 한·미(·일) 군사훈련 및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 비판했다. 평화군축센터가 참여한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의 2023. 6. 기자회견문 중 일부다. “대규모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공세적인 무력시위입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지난 15일까지 대규모 한미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을 이어간 결과, 북은 또다시 미사일 발사로 응대하고 나섰습니다. 연이어 미 핵잠수함을 동원한 특수전훈련을 진행한다면 군사적 대응의 악순환과 전쟁 위기 고조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미국 등과의 연합훈련뿐만 아니라 한국 단독의 군사적 행위도 비판과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출범의 맥락이다. “평화군축센터의 발족은 일차적으로, 그동안 참여연대가 진행해온 ‘국가권력에 대한 시민의 감시’ 경험을 국방/안보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했다. 평화군축센터 준비주체들은 ‘공포나 안보를 이용한 국가의 시민통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안보전문가들의 위협 해석 독점’에 도전하고 ‘안보영역을 민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사회와 세계를 바라보는 평화패러다임을 마련하고 새로운 철학과 비전을 가진 주체들과 연대하는 것의 중요성에 주목했다.”

\*\* 위 분류에 ‘국내외 평화주체 역량강화’는 포함되지 못하였다. 평화군축센터는 국내적으로는 2004년부터 평화활동가대회, 2010년부터 시민평화포럼 등을 통해 평화운동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는 활동을 정기적으로 해왔다. 국제적으로는 2004년부터 GPPAC(무장갈등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참여해오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감시의 대상이었다. 2021. 10. 1.자 논평의 제목이다. “중전선언 제안하며 공격적인 무력 시위 진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모순: 국군의 날 대규모 합동상륙작전 시연과 군비 증강 공언 부적절. 종전선언 실현 위해서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추구해야.”

평화군축센터는 북한의 미사일실험 등 무력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반대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하였다. 2022. 3. 25. 북한 ICBM 발사 실험에 대한 평화군축센터의 성명이다.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를 규탄하며 더 이상의 군사 행동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사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 2013. 2. 12. 평화군축센터가 참여한 공동성명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력 규탄한다.” 평화운동단체로서 평화군축센터의 포지션은 다음 성명의 제목으로 명확히 확인된다. “한반도 주민 볼모로 하는 모든 무력시위를 중단하라!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북한의 추가 핵미사일 실험 중단해야. 한국인 의사 무시하고 군사적 위기 고조시키는 미국의 군사 행동 용납할 수 없어.” 위 성명이 나온 2017. 4.은 3월 한·미의 대규모 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6차 핵실험이 곧 예상되는 시점으로 ‘한반도 4월 위기설’이 등장했을 때였다. 이 국면에서 평화군축센터는 남도 북도 평화적 생존을 바라는 시민들의 의사와 반하는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평화군축센터의 최근 대표적인 대중적 운동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이 있다.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합시다,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듭시다,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고 한반도·아시아 평화공존 실현합시다, 군비 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시민 안전과 환경을 위해 투자합시다” 등의 요구를 걸고 20만 명이 넘는 세계 시민들의 서명을 받는 캠페인이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포괄적이면서 원칙적인 요구였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현존 국내·외 가장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활동이었다.

‘동북아 비핵지대화’와 관련해서, 평화군축센터는 2004년부터 ‘동북아 비핵지대화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특히 일본의 시민사회와 연대하며 ‘동북아비핵지대화 구상’<sup>\*</sup>을 심화시키고 국제사회에 구상과 의지를 전달해왔다(2010년 핵군축을 위한 세계의원연맹 ‘비핵지대 시민사회포럼’ 참석, 2014년 NPT 준비위원회 ‘동북아비핵지대 NGO 포럼’ 참석 등).<sup>\*\*</sup> 2010년 발간된 ‘참여연대 핵군축 보고서’에 담

\* ‘비핵지대화’는 특정 국가의 ‘비핵화’와는 다른 개념이다. 특정 지역이 ‘비핵지대’로 선포되면, 핵무기를 적재한 함정이나 항공기가 해당 지역의 영토·영해·영공을 통과하거나 기항할 수도 없게 된다. 현재 비핵지대 조약이 체결된 곳은 중남미(1967년), 남태평양(1985년), 동남아(1995년), 아프리카(1996년) 등 네 곳이다. 핵비확산조약(NPT) 제7조(핵무기가 없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적 조약 체결권)에 규정되어 있다. ‘한반도의 남북한과 일본을 비핵지대로 하고 주변 3대 핵보유국들이 이 비핵지대를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약속하는 동북아시아 비핵무기금지조약’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방향 및 동아시아 공동안보의 질서의 중요한 요소로 검토되었으나,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로 인해 최근 논의는 활발하지 않다.

\*\* 2009년 일본의 피스데포와 피스보트, 남한의 평화네트워크와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동북아 비핵지대화에 관한 국제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긴 내용이다. “동북아시아는 핵을 둘러싼 실질적 대립과 불신이 존재하는 지역인 만큼 한일 시민 사회와 의원들이 지지하는 동북아비핵지대화 구상을 이번 NPT 검토회의에서 공식 의제로 채택해 주기를 기대하고 촉구함”, “한국정부가 ‘남북 그리고 일본이 핵무기와 핵우산을 포함한 핵억지력에 의존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주변 핵보유국들이 소극적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동북아비핵지대화’ 구상을 적극 수용하고 NPT 검토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채택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함.”\*\* 또 한 평화군축센터는 핵무기금지조약(TPNW, 2017년 채택된 핵무기의 포괄적 금지를 요구하고 있는 최초의 조약)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가입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핵무기금지조약 제2차 당사국 회의에 참여해 “‘한반도 비핵화’의 전망은 갈수록 희미해지고 핵 위협은 더 커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한국과 미국, 북한이 서로를 향한 군사적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 채널을 복원할 것을 한목소리로 요구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 다. 반기지 운동

발발하는 전쟁 자체에 대한 반대를 넘어, 전쟁을 준비하는 군사기지 감시와 통제는 평화운동의 전통적인 영역이다. 특히 반기지 운동은 군사기지가 건설되거나 운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위협이 가시적이기에 전국적인 연대운동으로 확산되어왔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연대하여 오랜 시간 투쟁이 이어졌다. 2003년 이후 평화군축센터가 연대한 반기지운동은 평택의 주한미군기지 확장반대운동, 제주 강정해군기지 반대운동, 경북 성주 사드배치 반대운동이 대표적이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반대운동의 경우, 평화군축센터는 평택 현장에서의 투쟁에 연대하면서 동시에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확장, 주한미군의 성격변화 등에 관한 한미간 협상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협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인정과 평택으로의 기지이전 및 확장에 관한 한국 측 비용부담 등 정부협상 결과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일련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제주 강정해군기지 반대운동의 경우 2011년 전국적 단위에서 제주해군기지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125개 단체들이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를 발족시켰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사무국을 맡았다. 운동의 주된 방향은 정치권의 진상조사활동을 촉구하는 것을 비롯해 군사안보상의 문제와 환경파괴 문제 등을 공론화하고, 절차적 위법 사항에 대한 소송 제기 및 주민들에 대한 법률 지원, 강정집중방문 및 문화제 개최, 국회 예산 삭감 촉구 활동, 국제연대 활동 등이었다.

\*\*\* 동북아비핵지대화는 ‘3+3안’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한국·북한·일본이 비핵지대화 조약을 체결하고, 이 조약에 대해 인접한 핵보유국인 미·중·러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안전보장을 하는 방식이다.

## 라. 군축과 국방외교정책감시/개혁

평화군축센터의 군축운동은 크게 국방예산의 과도한 증가에 대한 비판과 특정 무기(체계)도입에 대한 감시, 군병력 감축운동으로 구성된다.

평화군축센터는 매해 책정(증가)되는 국방예산을 감시해왔다. 2022. 12. 26. 성명이다. “2023년 국방예산 약 57조 원, 한반도 위기 고조 국면에도 군비 증강만 추구. 군비 경쟁 악순환 속에 한반도 평화 비전 없어.” 특정 무기도입 및 무기운용시스템에 대한 감시와 반대운동도 중요한 활동이다. 차기전투기(F-X) 사업 반대(2002~), 한국형 헬기 개발 반대(2003~2006),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및 미MD 참여 반대(2004~), 확산탄 반대(2010~), 경항공모함 도입반대(2020~) 등이 대표적이다. 대표적 비인도적 무기인 확산탄 반대 운동을 살펴보면, 평화군축센터는 평화운동단체들과 연대속에 한국의 확산탄 생산 및 수출을 반대하고, 한국 정부의 확산탄금지협약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특히 2013년에는 확산탄을 생산하는 방위산업체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 투자철회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군병력 감축과 관련해서는, 평화군축센터는 초기부터 ‘1/2 수준 감축’을 주장했다. 2022년 대선국면에서는 평화군축센터는 군인권센터,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병력 30만으로 감군, 징모혼합제 도입, 병 월급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 의무복무 12개월, 군 구조 효율화, 군 인권 개선”을 요지로 하는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본 병역 제도 개편 방향”을 대선후보들과 정치권에 제안했다.

민주화 이후 집권 양당이 일관되게 추진했던 것 중 하나는 국방예산 증가였다. 민주당 정권 시절 국방비 증액의 폭은 더 컸는데,\*\* 정치권은 이러한 증가를 ‘튼튼한 안보정책’의 상징처럼 내세웠다. 시민들의 지지도 컸다. 따라서 군축운동을 위해서는 예산과 정책에 대한 감시와 함께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만들 활동도 필요했다. 평화군축센터는 ‘세계군축행동의 날 국제캠페인’의 한국측 파트너 단체로서, 2011년 35개 단체와 국회의원 33명이 함께 ‘우리 세금을 무기 대신 복지에’라는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거리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작년 세계군축행동의 날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으로 진행되었는데, “한정된 예산과 자원의 우선순위를 군사비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 평화 구축에 두어야 한다”, “군사비가 이렇게 늘어나는 와중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며, 군사 부문의 탄소 배출은 통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화군축센터와 평화운동단체들은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

---

\* 확산탄금지협약은 2024년 현재 110개국이 가입한 국제협약이나,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가입하지 않았다. 한국은 16개 확산탄 생산국 중 하나였으나, 2012년 이후 주요 생산기업이었던 한화와 풍산의 확산탄 생산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화의 경우 확산탄 자체를 생산하진 않지만 확산탄 박사 체계인 천무를 생산하고 수출까지 하고 있다. 또한 국방예산 중 2023년 확산탄 도입 예산으로 2127억원이 책정되었다.

\*\* 평화군축센터는 민주당 정권 시기 계속된 국방예산 증가에 일관된 비판적 평가를 내렸다. 다음은 2021. 7. 참여연대가 발간한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중 ‘한반도 평화 실현’ 내용 중 일부다. “미국의 선(先) 비핵화 요구와 대북 제재를 넘어서지 못하고 군사훈련과 군비 증강을 중단하지 않으면서 구체적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위산업 전시회(서울ADEX, 이하 ‘무기전시회’)를 개최하고 각종 무기의 거래와 개발을 촉진하는 것에 대항하는 행사로서 ‘평화군축박람회’를 2010년부터 시작했다. 각종 무기사업의 예산낭비 사례, 살상무기의 위험성, 국방예산과 복지, 민생예산과의 비교, 한반도 핵문제와 군사기지 문제 등을 쉽게 설명하는 판넬을 전시하고, 영화상영, 문화제, 시민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평화군축박람회는 2013년 4회를 마지막으로 현재는 이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후 ‘아텍스저항행동’의 형태로 전화하여 무기전시회에 맞춰 직접행동, 토론화, 언론기고 등을 지속하고 있다. 평화군축센터가 참여하는 아텍스저항행동은 현재 한국의 방위산업과 무기거래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대표적 사회운동이다.

평화군축센터의 국방외교정책감시는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대표적이다.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지원경비) 모니터링(2007~9, 2013~4),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반대(GSOMIA, 2012~)가 있고, 최근의 활동으로는 “캠프 데이비드 선언 검증 및 국회 동의 요구”(2023. 9.),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여 반대”(2022. 6.),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 동의 반대”(2021. 8.) 등이 있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중심으로 한 군사법제도 개혁 역시 평화군축센터가 집중했던 국방개혁 이슈였다.

### **마. 전쟁과 무력충돌 반대(해외무장개입 반대)**

평화군축센터는 당대에 벌어지는 전쟁과 무력충돌 반대하는 활동에 적극 연대해왔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반대 및 한국군 파병 반대운동부터 시작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에 대한 반대운동. 그 과정에서 평화군축센터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데, 특히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2023. 4. 21. 평화군축센터가 참여한 성명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반대한다. 군사적 개입은 적대와 폭력의 악순환만을 불러올 것. 우크라이나의 주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전면전을 시작한 러시아의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폭력을 지속하는 방법으로는 민주주의도, 자유도, 인권도, 평화도 지킬 수 없다. 각국의 무기 지원 속에 전쟁이 격화된다면 그 끝은 공멸과 폐허일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평화군축센터는 이라크 전쟁 이후 파병에 대한 통제를 낮추는 법안개정에 대해 반대운동을 진행했다. 한국정부는 이라크 파병 이후 훨씬 적극적으로 해외 파병을 진행했다. 2007년 레바논에 PKO 파병을 결정한 데 이어 아이티(2010), 남수단(2013) 등에 파병하는 등 PKO 파병을 무분별하게 확대해왔다. 이에 앞서 정부와 국회는 한국군의 해외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PKO 전담부대를 창설하고 PKO파병에 대한 국회의 사전동의권을 무력화하는 PKO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평화군축센터는 무장갈등을 예방하거나 중재하는데 군사개입이 우선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에 기초하여, 행정부의 해외파병 결정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키는 PKO법안과 전담부대 신설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한국군의 파병은 PKO에 한정되지 않았다. 정부와 군 당국은 해외군사작전 경험을 쌓기 위해 2008년 소말리아에 국군부대를 파견한 데 이어 원전 수주의 대가로 아랍에미리트(UAE)에 특전사 부대를 파병하기도 했다. 국토방위와 국제평화유지라는 헌법상의 임무와 무관한 국군의 해외 파병을 합법화하기 위해 해외 파병의 범위를 ‘다국적군 파병’뿐만 아니라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병’까지 대폭 확대하는 국군해외파견법 제정이 19대 국회에서 논의되었다. 평화군축센터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파병 사례를 평가하고 군부대의 해외파병은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입법반대운동에 참여했고, 결국 19대 국회에서 법안은 폐기되었다.

## 바. 평화담론형성

평화군축센터의 평화담론형성 운동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평화백서’ 발간과, ‘평화국가론’ 담론 형성, ‘평화권’(Right to Peace)의 공론화이다.

먼저, 평화백서는 평화군축센터가 ‘군사적 억제 위주의 국가안보 패러다임에서 평화 패러다임으로 정부 외교안보정책의 철학과 기본 틀의 변화를 요구하는 종합적인 정책제언’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제작되었다. 정부가 발행하는 국방백서, 외교백서, 통일백서에 대응하는 ‘카운터 보고서’를 목표로 했으며, 외교·안보·국방 영역에서 시민의 입장과 대안을 담은 백서를 표방했다. 2003년, 2005년 한반도평화보고서를 발간했고, 2008년과 2010년에는 『평화백서』라는 단행본을 발간했다(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2008; 2010 평화백서 편집위원회, 2010).\* 이후 단독 단행본으로는 평화백서 발간은 중단되었으나, 2024. 1.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에서 “‘시민의 관점에서 다시보는’ 2022 국방백서 □해설 및 분석서”를 출간해 ‘카운터 보고서’ 운동의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평화국가론’은 평화군축센터 창립 3주년인 2006년 제시된 평화군축센터의 지향과 관점에 대한 입론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국가는 ‘평화적 방법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체’라고 규정할 수 있다(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2008: 13). 맥락적으로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6·15시대’라는 통일담론에 대응하여 ‘통일이 아닌 평화를 만들기 위한 조건과 노력’을 제시한 것

\* ‘평화백서’에는 안보기구들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위협인식, 안보전략, 군비확장계획에 대한 시민의 반론과 평화지향적이고 갈등예방적인 대안이 담겨있고, 주요 시민평화운동 사례들

\*\* 이후 ‘평화국가론’은 2010년 이후 ‘평화복지국가론’으로 확장되었으나 분량상의 이유로 본 발제에서는 ‘평화국가론’만을 다룬다.

이다.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인 구갑구 북한대학원 교수의 발표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인용한다.

첫째, 평화국가도 '국가'이기 때문에 근대국가의 본질적 속성인, 영토성, 물리적 폭력수단의 독점, 정당성을 가진다. 그러나 평화국가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 물리적 폭력수단의 적정규모화 및 최소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근대국가와 구별된다. 그럼에도 폭력적, 억압적 국가장치가 존재하는 한 평화국가는 최종점에 도달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현실의 평화국가는 '과정'으로서의 평화국가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평화국가론을 남한에 적용할 경우, 남한의 일방적인 군축이 남한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반박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남북한 관계 차원에서는 두 가지 반론이 가능하다. 하나는 평화국가가 국가인 한 완전한 무장해제를 이룬 국가가 아니라 최소한의 방어능력을 갖춘 국가라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1950년대 중후반 북한의 병력감축에 대해 남한은 지상군감축으로 화답한 것처럼, 남북한 관계에서도 일방적 군축이 상호 군축으로 이어진 경험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 평화국가는 평화외교와 윤리외교를 지향한다. 윤리국가로서의 평화국가가 국가이익을 무시하는 국가로 비판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국가도 자신만의 힘으로 절대안보를 추구할 수 없는 세계에서 국가이익과 국제사회의 규범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을 할 때, 비로소 평화와 안보를 획득할 수 있다. 공동안보와 협력안보는 바로 이러한 인식의 산물이다. 한반도 차원에서 공동안보와 협력안보의 실현이 곧 한반도 평화체제의 건설이다. 우리는 공동안보와 협력안보를 매개로 안보의 대상이 사람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즉 인간안보 개념의 확산이다. 안보의 대상을 국가로 생각할 때, 국가보안법과 같은 억압적 국가장치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평화국가는 궁극적으로는 안보담론을 평화담론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평화외교와 윤리외교의 주체로 우리는 국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평화국가에서 전쟁억지력은 그 무엇보다도 시민사회의 평화지향적 역량이다. 동북아 시민사회와 그들의 평화연대는 동북아는 물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지세력이 될 수 있다.

셋째, 평화국가는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 구조적 폭력이 제거된 적극적 평화를 지향하는 축적체제에 기초한다. 신자유주의적 축적체제는 경제적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와 과잉자본이 공존하는 남한사회의 불균형이 한국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고 이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한반도 평화과정을 위협할 수도 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1997년체제가 2000년체제를 포섭하게 될 때, 한반도 차원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평화과정과 함께 가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평화국가의 물질 기초가 되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발전지원이 평화과정과 함께 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때, 이는 남한사회의 변혁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분단체제 극복의 실천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략)

\*\*\* 위 발표문은 2006년에 열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발족 3주년 기념 심포지엄: 이제 '평화국가'를 이야기하자, 평화국가 구상과 시민사회운동"의 첫 번째 발제문인 "한반도 분단체제와 '평화국가' 만들기"이다. 이 발표문은 구갑우(2007),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2008) 등에서 보다 정리되고 보완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6·15담론은 궁극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것은 평화과정에 대한 (신)기능주의적 가정의 한계다.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구도가 남북한의 경제적 교류와 협력만으로 해소되지는 않는다. 남북한 모두 안보담론의 전환을 이루지 못한다면, 2000년체제의 진화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른바 북한 핵문제가 남북한의 공조를 통해 해결될 수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남북한이 군비경쟁을 포기할 수 있을 때다. 그러나 남한이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를 남북한의 공조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남한을 평화국가화하고 남북한의 상호작용을 통해 북한 또한 평화국가의 길을 갈 수 있을 때, 북한 핵문제의 궁극적 해결이 가능하다. 다른 하나는 한반도의 평화(통일)과정에 대한 국제적 승인이 가능할 때다. 이 승인은 평화(통일)의 한반도가 주변국가에게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 6·15담론은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주변국가의 안보적, 경제적 우려를 담고 있지 않다.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동북아 차원의 지역적 시각이 중요한 이유다.

(중략) 아쉬운 점은 6·15담론을 주도하고 있는 통일운동세력에게서 안보담론의 근본적 전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남북한을 아우르는 통일운동세력에게서는 여전히 낡은 민족주의에 입각한 부국강병의 논리가 발견되고 있다. 부국강병의 정책은 한반도 민중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통일)과정에 대한 국제적 승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중략) 개성공단은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다. 개성공단의 건설로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완화의 계기가 마련된 것도 사실이다. 몇 개 대대병력의 수준이지만 개성공단 때문에 북한군이 후방배치되기도 했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여전히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남한의 진보는 고려의 수도인 개성에 공단을 건설하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한 바 없다. 문화도시의 유적보다는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이라는 대의가 더 중요했기 때문일 수 있다. 둘째, 개성공단의 노동조건은 남한의 진보가 먼저 제기했어야 하는 문제다. 약 57달러의 한 달 임금이 적정수준인가, 그리고 북한 노동자 개인에게는 이 임금이 어떻게 분배되는가에 관한 문제는 남한의 민주화를 이끌었던 노동운동세력이 먼저 제기했어야 하는 과제였다. 셋째, 개성'공단'이라는 표현은 한반도의 미래를 상징하기에는 너무나 협소하다. 남한의 자본과 선진기술 그리고 북한의 값싼 노동력이 결합한 공단은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기에는 불안한 결합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개성 공단은 자신들의 열등한 상태를 증명해 주는 사례로 인식될 수 있다.

평화군축센터는 평화권 공론화를 주요한 목표로 삼아왔다. 한국사회에서 '평화권'(평화적 생존권)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특히 평택 미군기지 확장반대운동과 북한인권 비판에 대한 대응 담론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다(임재성, 2011). 평화군축센터는 평화권이 평화운동의 중요한 권리담론이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2012년부터 평화권 내부 세미나 개최 등 국내 인식 제고 활동을 위해 노력해왔다. 2012. 10., "평화권의 국제적 논의와 한국에서의 수용 가능성" 원탁토론회를 개최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제주 강정, 평택 대추리, 애기봉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권 선언을 이끌어 냈다. 또한 당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논의중이었던 평화권 선언과 관련해 앞선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권 선언을 전달하고, 2014. 2. 한국 시민사회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 4. 결론 : 전쟁을 가시화하는 최근의 활동들

“힘에 의한 평화는 평화인가?” 평화운동의 답변은 ‘아니다’이다. 특정 세력의 군사력 증가는 주변의 불안으로, 그 불안은 주변의 군사력 증가로 이어진다. 힘에 의한 평화는 결국 전쟁을 가져온다는 안보 딜레마를 상호신뢰와 군축으로 끊어내자는 것이 평화운동이고, 평화의 전략이다. 그런데 지금 이 전략과 담론이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가? 제도와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있는가.

남북 간 군사긴장 완화와 북핵 문제 해결(한반도 비핵화)은 한국 평화운동 제1의 목표였다. 그러나 북한 핵무기 능력은 완성 단계다. 이 절대무기 앞에서 한국 시민 60~70%는 독자 핵무장을 지지하고 있다. “마음먹으면 1년 내 핵무장” “압도적 전쟁 준비” “힘에 의한 평화 추구”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는 역사상에서 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다. 민주화 이후 가장 노골적인 안보 딜레마 상황이다.

당대 전쟁 앞에서 한 사회의 평화는 방향을 잡는다. ‘전쟁 반대 상호군축’으로, ‘전쟁 대비 무장 강화’로 기울 수도 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을 통해 한국 평화운동이 촉발됐다. 2023년, 우리는 어느 쪽으로 기울 것인가.\*

결론을 대신해 최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참여한 활동 2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하나는 2024. 1. 25.에 열린 “전쟁을 부르는 모든 적대행위와 군사행동 즉각 중단하라”라는 기자간담회였다.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연석회의’가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는 접경 지역 주민분들이 참석해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에서의 불안과 공포를 말하고, 평화를 호소했다. 주민분들의 발언 중 일부다. “서해5도를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에게 최고의 주민 보호 태세는 바로 남과 북의 평화, 한반도 평화, 서해 평화입니다.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지금 당장 군사훈련을 멈추고 9.19 군사 합의를 복원하고 남북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가 군사 대결보다는 평화적인 대화의 길을 찾기를 전방마을에 사는 주민으로서 다시 한번 더 촉구합니다.”

다른 하나는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이 2023. 11. 17. 주최한 ‘모든 희생자를 애도하는 신발들의 시위’였다. 폭력과 학살의 물리적 거리감을 줄이고, 비극을 지금 이곳에서 가시화시키기 위한 직접행동이자 퍼포먼스였다.

평화운동은 위기감을 고조하는 권력의 거짓말을 밝혀낼 필요도 있지만, 폭력과 전쟁의 비극을 가시화해야하기도 한다. ‘고조되는 전쟁위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평범하게 느껴지는 군사적 행위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체계의 본질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것이 결국 평화운동의 ‘해야할 일’이 될

\* 위 세 단란은 임재성, ‘한국 평화운동 20년의 궤적과 미래 @’, 2023. 6. 14.자 한겨레신문에서 인용·수정했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참고자료

- 01 Carter, April. 1992. Peace Movement: International Protest and World Politics. London: Longman
- 02 Lang, K. 1968. "Military,"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 Vol. IX, New York: Macmillan Press.
- 03 Lasswell, Harold. 1941. "The garrison State and Specialists on Violenc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46.
- 04 Mann, Michael. 1988. Capitalism and Militarism, In States, War & Capitalism, Studies in Political Sociology, New York, Basil Blackwell.
- 05 Mann, Michael. 1988. States, War & Capitalism, Studies in Political Sociology. New York: Basil Blackwell.
- 06 Galtung, Johan. 강종일 외 옮김. 2000.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들녘.
- 07 2010 평화백서 편집위원회 엮음. 2010. 『2010 평화백서』. 검동소.
- 08 구갑우. 2007.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후마니타스.
- 09 권인숙. 2005. 『대한민국은 군대다』. 청년사.
- 10 김귀옥. 2006.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문화, 시민사회." 『한국과 국제정치』 52.
- 11 김명섭. 2002. "평화학의 현황과 전망." 하영선 엮음. 『21세기 평화학』. 풀빛.
- 12 김연철·서보혁·황수환. 2022. 『평화학 개론』. 박영사.
- 13 문소정. 2005. "한국여성평화운동의 전개: 한국여성운동과 평화담론의 정치학." 『한국학보』 31.
- 14 서보혁·강혁민 엮음. 2022. 『평화개념 연구』. 모시는사람들.
- 15 서보혁·정육식. 2016. 『평화학과 평화운동』. 모시는사람들.
- 16 서보혁·정주진. 2018. 『평화운동』. 진인진.
- 17 심영희. 2004. "한국 여성평화운동의 딜레마." 『한국사회학회 2004년도 특별 심포지움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 18 이삼열. 1989. "비판적(批判的) 평화연구란(平和研究) 무엇인가." 『한반도평화론』.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 19 이재철. 2007. "세계화와 한국의 시민사회: 평화운동을 중심으로." 『담론 201』 10.
- 20 임재성. 2011. 「평화권, 아래로부터 만들어지는 인권 : 한국 사회운동의 '평화권' 담론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91.
- 21 정육식. 2004. "한국 평화운동의 성과와 전망, 그리고 과제."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04년도 특별 심포지움.
- 22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2008. 『평화백서: 시민 '안보'를 말하다』. 아르케.

# 동북아 군비 증강과 무장 갈등 위험에 맞선 과제

김한민영 (동치) | 피스모모 리서치랩 액션리서치팀장

nowar.momo@gmail.com

얼마 전 동료와 나눈 얘기다.

“솔직히 2년 전에 전쟁이 터졌을 때 평화운동이 훨씬 더 잘될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뉴스에서 전쟁의 참혹함을 매일 매일 보고 있으니, 당연히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질 줄 알았죠.”

그렇다. 대단한 착각이었다. 너무 커서 실감도 잘 나지 않는 사상자들의 숫자와, 파괴된 집과 병원, 대지의 이미지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굉장한 두려움을 심었고, 전쟁이 두렵다면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이 평화라는 선택지를 택할 줄 알았던 거다. 그러나 전쟁은 더욱 심화된 군비경쟁과 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졌고, 군비축소를 말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에는 전보다 심한 반발이 일어났다. 전쟁의 참혹함에 눈물 흘리면서도, 군사비 축소, 무기거래 중단, 군사훈련 중지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 놀랍고 충격스러웠다.

## 누구 편이냐는 질문

전쟁이 시작되면, 모두가 이렇게 묻는 듯하다. ‘넌 누구 편이니?’ 전쟁의 잔혹한 피해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뉴스 속 장면들 앞에서 이 질문에 답하지 않기로 너무나도 곤란한 일이다. 공습과 전쟁범죄로 사람들이 죽고 있으니 말이다. 그 가해를 마주하면, 나쁜 놈, 나쁜 나라가 누군지 너무도 뻔하게 보인다. 그러나 누구 편을 들거냐는 질문으로는 전쟁을 끝낼 수도, 예방할 수도 없다.

누구 편을 들거냐는 질문은 더 많은 군사지원, 더 많은 군사비, 더 많은 무기거래로 이어진다. 지난 8년 동안 전 세계의 군사비 지출은 계속해서 증가해왔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시작된 2022년에는 전 세계가 한 해 동안 약 2조 2,400억 달러의 군사비를 지출했다. 한화로는 약 2,980

조원. 너무 커서 감도 안오는 이 숫자를 평화활동가들이 현실감을 더해 ‘번역’해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1분에 56억원.” 1분마다 56억이라는 돈이 전쟁과 전쟁 준비에 쓰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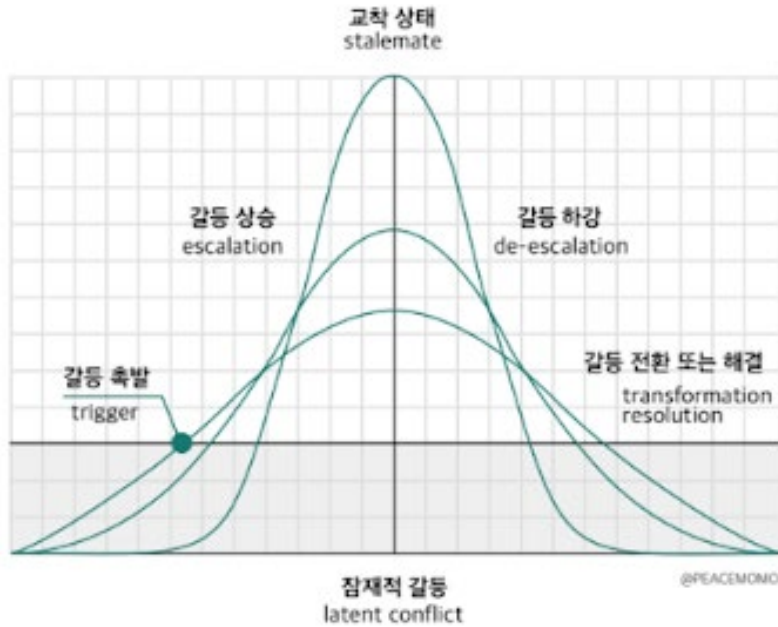
당연하게도 유럽에서 군사비가 많이 늘었다(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2023). 이미 군사비 지출이 큰 서유럽 및 중부 국가들이 전쟁 발발 이후 군사장비와 병력을 늘리고,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을 하며 군사비가 13% 증가한 것이다. 분쟁을 완화하거나 관리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자원이나 기회는 영토 방어에 집중된 군사활동에만 쓰였다. 70년대 유럽지역의 긴장완화를 위해 설립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역시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페미니스트 평화학 연구자 베티 리어든(2020)은 “전쟁은 근원적으로 서로에게 폭력을 쓰도록 연루된 집단들의 준비 태세에 따라 그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p.99).”고 말한다. 그의 말을 빌려 위의 숫자들을 들여다보면, 이 전쟁이 끝나기는 여전히 어려워 보인다.

누구 편을 들거냐는 질문은 시민사회 안에서도 강력하게 작동한다. 침공에 명확한 비판을 펼치면서도, 군사적 지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평화단체들은 때때로 큰 반발을 마주한다. 2022년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시작되자, 국내 시민사회단체는 연대체 우크라이나 평화행동을 꾸려 집회와 행진, 기자회견 등을 조직했다. 이 활동의 초반에는 재한 우크라이나인들 역시 발언이나 집회 기획 과정에 참여했지만, 군사적인 지원에 대한 입장 차이로 연대활동을 이어가지 못했다. 병역거부 운동을 하는 평화운동단체 전쟁없는세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의 병역거부자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펼쳐왔는데, 때때로 이런 반발을 마주하기도 했다. 그들도 침략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인데 왜 침략국의 병역거부자들을 지원하냐는 것이다. 피침략국 병역거부자 지원의 경우, 그런 배신자를 지원하냐는 비난 역시 익숙하다.

군사주의의 언어는 철저한 이분법으로 구성되고 발화된다. 아군 아니면 적군. 전쟁은 그 이분법을 더욱 극대화 시킨다. 그 이분법의 언어는 앞의 예시에서 보여주듯 시민들 사이의 연대 역시 어렵게 만든다. 전쟁 이후 평화운동이 더 잘될 거라고 순진한 기대를 했던 2년 전을 떠올려보면, 평화운동은 이런 이분법에 유의미한 균열을 내는 데 실패했다는 반성을 하게 된다.

모든 갈등과 분쟁은 상호적이다. 몇몇 의사결정권자들의 특정한 결정, 행위, 발언 때문에 전쟁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다양한 행위자와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상호적인 도발과 긴장고조행위가 반복되며 발생한다. 갈등은 대개 몇몇 의사결정권자들의 정치적 결정이나 행보로서 가시화되지만, 수면 아래에는 구조적인 갈등이 있다. 불평등한 권력관계, 착취, 민주주의의 훼손,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인권침해, 차별 등이 그 갈등의 재료가 된다. 이러한 갈등의 상호작용은 군사주의의 이분법 앞에서 철저히 무시된다. 아군을 지원하고, 자국 수호를 위해 무장하는 선택지만 보이게 된다. 이러한 이분법에서 벗어나면 폭력과 갈등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행위자들을 발견할 수 있고, 무한한 군비경쟁과 군사적 긴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일들이 필요한지 알 수 있다.

## 갈등 곡선



**촉발** 직접적/물리적/상징적/은유적인 특정 행위를 통해 갈등이 촉발된 상태.

**상승** 지속적인 자극과 반응으로 인해 갈등의 세기와 에너지가 증가함으로써 갈등이 누적되고 심화, 악화, 확장되는 상태.

**교착** 갈등당사자들의 에너지가 최고조에 도달하여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태.

**하강** 교착상태가 지속되면서 당사자 간에 긴장 완화와 피로가 공유되는 상태로, 갈등은 수그러들고, 합의된 해결책을 모색할 기회나 평화로운 전환을 위한 공간을 확보할 기회가 생기는 상태.

피스모모 (2023), 동북아 무장갈등 위험에 대한 조기경보

### 전쟁이 돈이 되는 사회

갈등이 어떤 경로로 상호작용하는지 포착하는 방법은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다. 갈등과 분쟁이 누구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는지를 따라가다 보면, 너무나 뻔하게도 무기산업이 나온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난 지 불과 두 달 만에 록히드마틴의 주가는 무려 21%나 치솟았다. 경제전문 언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미국 연방 재무기록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5월 기준 최소 20명의 미 연방의원 혹은 의원의 가족구성원이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의 주식을 보유했으며, 이들 중 다수는 전쟁이 시작되기 불과 몇 주 전 혹은 그 직후에 이 주식들을 매수했다는 것

이다. 그리고 미 연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을 꾸준히 승인해왔다. 군수산업의 이익이 정치인들의 경제적 이익과 연결될 때, 이들이 평화적인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설 거라는 기대는 차갑게 식어버릴 수 밖에 없다. 이들은 갈등에 불을 붙일 뿐이다.

한국은 어떨까. 한국 역시 전쟁의 돈맛을 쫓쫓히 보는 중이다. 한국은 2023년 기준 무기 수출 9위 국가다. 전쟁은 소위 “K-방산”의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으며, 언론은 연일 오르는 방산주를 두고 “자녀에게 물려줄 주식” 타령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방위산업을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스스로를 대한민국 1위 영업사원으로 호명했다.

2023년 5월, 국방부와 외교부는 주한 외교관들을 초대해 한국의 무기들을 소개하는 방위산업 수출설명회를 열었다. 여기에는 쿠데타 이후 자국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학살과 체포 및 구금, 고문 등의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미얀마 대사가 참석했다. K-방산 흥행의 절대적 전제는 전쟁과 학살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최되는 무기박람회는 K-방산의 홍보와 수출에 중요한 기회다. 무기 기업들은 자사 무기의 첨단성과 살상력을 자랑하며 각국 군대와 무기딜러들에게 어필한다. 첨단 무기와 군사력을 전시하고 자랑하는 것은 이웃에게는 안보불안을 야기한다. 2021년 한국의 가장 큰 무기박람회 아텍스에 맞춰 북한은 처음으로 무기박람회 자위-21을 열었다.

K-방산이 한반도를 포함해 세계 각지의 전쟁과 억압, 그리고 안보불안에 어떻게 일조하는지는 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것 같다. 그러나 잘 드러나고 있지 않은 불편한 구석이 또 있다. K-방산이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기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23년 7월, 방위사업청이 대전으로 이전하자 대전시는 대전이 K-방산의 거점도시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했다. 대전시는 IIG 넥스원을 포함한 방산기업 및 강소기업들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방산공장 및 시험장 신설과 이전을 약속했다. 창원, 대전, 구미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에 선정된 대표적인 도시들이다. 국비(245억원)와 지방비(254억원) 등 총 사업비 499억원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들의 방위산업 유입을 지원하며, 방위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으로 지역들은 지역 경기에 활력이 돌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교육계 역시 이런 움직임에 영향을 받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2019년부터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운영 중이다. 특성화고등학교와 기업이 협력을 맺어 방위산업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이 중 하나다. 2023년에는 경남과 부산, 대전 지역에 위치한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가 이 사업에 선정되었다.

전쟁이 돈이 되는 시스템은 이미 존재하는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이용한다. 수도권, 학력, 소득, 경제적 기회, 개발 등의 특권을 ‘박탈’ 당한 지역과 집단에게 K-방산은 일종의 기회 혹은 보상으로 작용한다. 분쟁과 학살의 책임이 K-방산에 있다면, 그 가해의 사이클에는 분명 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동료 시민들이 속해 있다. 그 사이클을 쉽게 부술 수 없는 것은 여기에 다층적이고도 거대한 불평등이 촘촘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위산업의 비윤리성을 말하는 평화운동이 전

쟁을 봄과 동시에 우리 사회 깊이 박혀 있는 불평등을 함께 읽어야 하는 이유다.

체제전환을 고민하는 운동이 전쟁과 전쟁위기에 맞선다면, 그 운동은 '전쟁이 돈이 되는 사회'에 태클을 거는 운동이어야 한다. 전쟁이 계속해서 돈을 만들고 특권을 생산한다면, 그것이 돈과 특권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바로 전쟁시스템이며, 그 시스템을 용인하고 승인하는 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전쟁이 그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의 편이 될 거냐는 군사주의의 이분법으로는 전쟁을 만들고 유지시키는 시스템을 설명할 수 없다.

## 무력감에 맞서기

누구 편이냐는 질문이 나쁜 이유는 또 있다. 니 편, 내 편으로 나뉜 세계관 속에서 군사행위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은 안보에 대한 접근과 결정에 철저히 배제되기 때문이다. 전쟁과 전쟁준비가 만연한 사회 속에서 구조적이고 군사화된 폭력은 모두의 일상을 깊이 침투하지만, 그 일상을 살고 있는 시민들이 그 폭력에 맞서는 일은 쉽지 않다. 국가와 군사 집단이 점유하고 독점해온 안보 담론은 스스로를 성역화하며 일반 시민에게는 접근 불가의 영역으로 만들어왔다. 접근 불가의 영역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무력감을 가져다 준다. 무력감은 군사주의의 교묘하고도 효과적인 지배전략이며, 따라서 무력감에 맞서는 일은 군사주의와 전쟁에 저항하는 운동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무력감에 맞서기 위해서는 평화운동의 도구와 방법론이 더욱 다양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정치와 일상정치를 넘나드는 사회운동의 언어들이 필요하다. 국제정치에 매몰된 담론은 행위자를 국가 단위에 국한시키며, 방위를 핵심으로 삼는 가부장 남성성 토대의 안보개념을 강화시킨다.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무력감을 주고, 일상 영역에서의 책임과 영향력을 간과하게 한다. 정치적/경제적 이익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결국엔 이익 보는 세력이 있다는 걸 보여 주며 전쟁과 군사행위를 대놓고 정당화하는 부작용을 만들기도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국제정치 중심의 담론은 전문가라고 여겨지는 소수 엘리트에게 주로 발언권을 주고, 새로운 행위자의 유입을 막아 운동 자체를 고립시킨다. 국제정치와 일상, 분쟁을 잇는 연결고리를 계속해서 찾아낼 수 있을 때, 운동의 방법론도 다양해질 수 있다.

신시아 인로는 국제정치에 '페미니스트 호기심'을 발휘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복잡한 글로벌 현상을 해석하는 데 젠더화된 공적/사적 관계들을 연결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제안한 페미니스트 호기심은 시민들의 삶에서 국제 분쟁의 '연루성'을 밝혀내고, 그 연루성을 토대로 다양한 책무와 행동방안을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려면 일상과 현장을 중심으로 한 연구와 조사가 더 많이 필요하다, 평화운동에 필요한 관

한 중요한 데이터들은 국가안보, 국가기밀이라는 허울로 인해 접근성이 심각하게 낮다. 특정한 캠페인을 만들고, 시민들을 초대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정보가 너무도 제한적이다보니 많은 부분 운동의 철학이나 당위성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을 겪는다. 운동의 기초적 근거가 되는 데이터와 언어들을 쌓아내고, 연구와 교육, 캠페인, 직접행동, 로비, 언론활동 등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야만, 시민들의 삶과 일상에서 전쟁과 갈등을 만드는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도구들이 다양해질 수 있고, 오랜 시간 동안 모두를 지배해온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 모두의 참여와 책임

누군가의 SNS에서 이런 코멘트를 본 적이 있다. “전쟁도 못 막는데, 기후위기는 막을 수 있을까.” 나는 이 말이 우리가 처한 복합적인 위기를 너무나도 적확하게 표현하는 말이라고 느꼈다. 평화와 안보를 말할 때, 대다수는 군사적인 접근과 계산을 한다. 그러나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안보위협과 전쟁, 그리고 군사활동과 전쟁의 기후영향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복합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복합적인 위기 앞에서, 강력한 이분법에 기인한 기존의 군사 안보 담론은 더욱 유효할 수 없고 오히려 위기를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타자화, 적대화를 뿌리 삼은 군사활동은 군사훈련, 기지건설, 무기생산을 반복하며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고 있고, 군사부문을 하나의 나라로 친다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영역이지만 배출량 보고/감축 의무에서 빠져있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사항이라는 이유에서다. 동시에 여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군사비는 변화하는 기후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한 비용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우리가 마주한 복합위기는 나의 일상이 다른 인간/비인간 존재들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인식하고, 그 연결성을 평화구축을 위한 방향으로 회복시켜야만 대응할 수 있다. ‘모두’의 상호의존성과 연결성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연결망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윤리적 책무를 발견하고, 그 책무를 이행할 힘 역시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모두가 안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음을 우리는 코로나19로부터, 기후위기로부터, 전쟁으로부터 알게 되었다. 우리가 피부로 느낀 이 위협들은 전쟁을 끝내고 예방해야 할 모두의 책임으로 이어진다. 모두의 생존이 걸린 이 시기에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또 다른 학살을 불러올 전쟁과 전쟁준비를 그만두라고 말할 책임 말이다. 평화를 모두의 것으로 만드는 책임과 참여, 도래한 무력갈등 위협에 맞서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 참고 자료

- 01 김사무엘 외. (2022. 9. 30.). K방산 장기 호황 시작된다..."자녀에게 물려줄 주식".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92916273451350>
- 02 방산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국방기술진흥연구소 (2023. 1. 26. 접속) . <https://www.krit.re.kr/krit/contents.do?gotoMenuNo=02021100>
- 03 베티 리어든, (2020) 성차별주의는 전쟁을 불러온다 (황미요조 옮김). 나무연필
- 04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2023). 2023년 SIPRI 연감 요약본
- 05 세계군축행동의날 캠페인 (2023). 1분에 56억, 평화와 지구를 위협하는 군사비 이제 그만!. <https://peacemomo.org/blogPost/untitled-107>
- 06 피스모모 (2023). 동북아 무장갈등 위험에 대한 조기경보. <https://www.peacemomo.org/boardPost/101733/39>
- 07 신시아 인로, (2015). 군사주의는 어떻게 패션이 되었을까 (김엘리, 오미영 옮김), 바다출판사
- 08 Kimberly Leonard . (2022, 5. 20.). 20 Members of Congress Personally Invest in Top Weapons Contractors That'll Profit from the Just-Passed \$40 Billion Ukraine Aid Package. Business Insider. <https://www.businessinsider.com/congress-war-profiteers-stock-lockheed-martin-raytheon-investment-2022-3>



종합 세션

# 자본주의를 질문하기, 체제전환을 모의하기

누구나 위기를 이야기하는 현재,

‘체제가 초래한 위기’라는 현재의 위기에 대한 직관을 넘어

자본주의가 주도해 온 한국사회의 구조와 현실에 대한 이해와 비판으로부터

체제전환운동 조직화의 필요성, 전망과 과제를 함께 토론한다.

이는 포럼 전체 기획을 관통하는 핵심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또한 3일 동안 펼쳐진 여러 세션들의 고민과 기획들이 종합되고 연결되는 자리이다.



종합세션+폐막식  
문자통역 QR코드

## 세션 진행

사회 :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발제 : **체제전환운동, 공동의 역사를 만들어가자**

- 미류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조직위원회)

토론1. 남영란 (노동해방 마중)

토론2.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토론3.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토론4.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토론5.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 준비팀

다른세계로길을내는활동가모임,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인권운동사랑방, 플랫폼c

# 체제전환운동, 공동의 역사를 만들어가자\*

미류 |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조직위원회

go.systemchange@gmail.com

## 1. 들어가며

기후위기와 불평등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가리키는 전 지구적 화두가 되었다. 이상기후와 재난으로,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지표들로, 공공연한 혐오의 정치에서 누구나 직관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 그만큼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맞물려 있다는 인식도 심화되면서 ‘체제전환’(system change, not climate change)이라는 구호의 설득력도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체제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는 만큼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도 커진다. 그러나 ‘체제전환’은 갑자기 생겨난 구호가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낳은 부정의에 맞서 지구 곳곳의 투쟁이 쌓이며 얻어진 통찰이다. 그러므로 체제전환의 필요성을 해명하지 않아도 되는 지금, 사회운동은 이미 한걸음 나아온 것이다. 막막함을 포기의 이유로 삼는 대신 막막함의 이유를 살피며 다시 한 걸음 나아갈 준비를 해보자. 세상을 바꾸자는 우리가 놓쳐온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왜 매년 처음인 것처럼 도전하게 되고 지치게 되는지. 체제전환운동은 새롭게 탄생해야 할 운동이 아니다. 역사 속에서 이어져 왔고, 갱신되기를 기다릴 뿐이다.

이 글은 2000년대 이후의 한국 자본주의와 사회운동의 대응을 중심으로 체제전환운동의 과제를 탐색한다. 2000년대는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체제로 급속하게 전환하며 지

---

\* 이 글은 종합세션 준비팀에서 함께 세미나와 토론을 하며 준비한 글이다. 준비팀은 구준모(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미류(다른세계로길을내는활동가모임), 박기형(서교인문사회연구원), 박상은(플랫폼c), 백종성(사회주의를향한전진), 정록(인권운동사랑방)으로 구성되었고, 글의 일부 집필은 구준모가 함께 했다. 종합세션에서 발표하기 전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쳤다.

금의 여러 사회 문제들이 구조화된 시기다. 더 거슬러갈 필요는 있다. 신자유주의는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온 것이 아니다. 80년대 금융 자유화 정책,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선언과 함께 추진된 금융 개방, 공기업 민영화 등의 정책들로부터 계열화할 수 있다. 사회운동 역시 1987년 민주화 항쟁 전후로부터 살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글의 목표는 신자유주의 분석이나 사회운동 역사 기술이 아니다. 한국 자본주의 체제 변동이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과 어떻게 닿아있으며 현재 사회운동의 지형과 경향이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살피는 목표를 중심으로 97년 이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체제전환운동을 만들어가려는 우리가 현재 마주한 곤경과 질문들을 함께 되짚어보며, 막막함을 설렘으로 전환할 실마리를 발견하는 토론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글에 앞서 자본주의 체제를 인식하는 틀을 갱신하고 확장하자는 문제의식을 밝힌다. 체제전환 운동은 체제가 작동하는 방식을 분석하고 예측하며 대항을 기획하는 일을 필요로 한다. 우리의 삶과 세계는 물질의 흐름에 토대를 두고 있다. 필수적인 것들이 어떻게 생산되는가. 누군가 일을 할수록 자본의 힘이 축적되는 착취의 구조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다. 그러나 여기에 주목하는 것만으로 자본주의 비판을 완결할 수 없다. '생산'의 비밀을 드러내는 데서 시작된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을 확장해야 한다. 자본주의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축적 양식을 변형해왔다. 자본은 스스로 만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착취와 지배의 새로운 양식을 발명해왔고 젠더화, 인종화, 식민화하는 방식으로 저항을 관리해왔다. 자본이 생태적 한계를 초과하여 세계를 망가뜨릴 수 있었던 비결이다. 자본주의는 한편에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생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생산성이 없다며 존재를 불필요한 것으로 만든다. 우리의 삶과 세계를 유지하고 재생시키는 모든 활동을 '재생산'이라 한다면, 자본주의는 '생산'한다는 명분으로 재생산의 조건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체제다.

한편, 자본주의가 언제나 세계 수준에서 작동한다는 점도 언급해야겠다. 1세계 노동계급의 성취는 3세계의 식민화에 기댄 결과이기도 했고, 한 국가에서 발생한 위기는 다른 국가에서의 격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국에서 체제전환운동으로 모이는 우리는 세계 자본주의에서 한국의 위치를 자각하고 탐문할 필요가 있다. 20세기 중반 미국의 절대적 영향 아래 재편된 한국사회 구조는 다양한 경로로 우리의 현재를 속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더이상 미국에 일방적으로 종속된 국가가 아니다. 한국이 자주성을 높인 결과가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가 변화한 결과다. 미-소로 진영화된 국제질서는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진전되며 미-중이 연결되어 갈등하고 대립하는 국제질서로 변모해왔다. 이제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 낀 약소국이 아니라 이 구조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있는 '선진국'이다. 초국적 기업이 해외로 뻗어나가며 초국적 착취와 생태 파괴에 동참하는 한국의 위치를 살피는 동시에 세계 곳곳에서 저항하는 민중과 연대하기 위한 전략이 체제전환운동에 필요하다. 다만 이 글에서는 이를 추후 과제로 남겨두고 국내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한다.

변혁의 이념과 해방의 정치는 90년대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쇠퇴 속에서 '철 지난 이념' '관

념적 급진주의' 등으로 취급당하며 밀려났다. 하지만 억압의 체제가 지속되는 한 변혁을 도모하는 운동은 사라지지 않는다. "전임자들의 패배가 아닌 자신의 분노에서 출발하여 놀라울 정도로 창의적이고 급진적인 형태의 새로운 좌파"<sup>1)</sup>도 꾸준히 등장할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스스로를 갱신하려고 했던 운동들이 서로의 기억과 전망을 채워줄수록 공동의 역사가 만들어질 것이며 역사는 우리를 더욱 나아가게 할 것이다. 이 글이 더욱 많은 기억과 전망을 불러들일 초대장이 되기를 바란다.

## 2. 우리가 마주한 한국사회, 위기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 1) 신자유주의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이 만든 구조적 위기

#### 수출 주도 경제성장, 환상 뒤에서 자라난 위기

1990년대까지 한국 경제는 스스로 성장 중이라 착각할 만했다. 탈식민 국가 중 이례적으로 발전한 국가로 평가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자본이 혁신한 결과도 '한국'의 능력도 아니었다. 미-소로 진영화된 국제질서에 한국은 미국의 영향력과 지원 아래 산업화를 추진했고 수출 주도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 모든 자원을 끌어들이며 억압하는 동시에 국내 수요는 부차화하는 구조였으므로 경제가 성장해도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70년대까지의 국가 주도 개발이 한계에 부딪치며 허둥대던 정부와 자본은 우연히 '3저 호황'(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을 만나 활로를 찾게 됐다. 그러나 '탈냉전' 시대가 되며 미국은 더 이상 무역흑자를 제공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고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 국내 수출기업들이 해외 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커지자 정부는 제한된 방식의 금융시장 개방을 단행했다. 이때 급증한 재벌 기업의 대외 부채가 1997년 외환위기를 촉발했다.

'한강의 기적'에서 도약하려던 노력은 '국가 부도' 위기가 되었다. 한국은 IMF(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IMF는 각종 요구사항을 내밀었다. 1997년 11월부터 1998년 4월까지 6개월 동안 7,643개의 기업이 부도처리 되었다. 대표적 재벌 중 하나였던 대우그룹이 해체되고 기업의 구조조정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시중은행이 합병되고 해외 자본에 매각되었다. 실업자 수는 1997년 4분기에 57만 명(실업률 2.6%)에서 1998년 1분기 177만 명(실업률 8.5%)으로 급증했다. 초유의 위기를 목도한 국민들이 '금 모으기'에 나서는 동안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 정리해고제 도입 등을 추진했다. 의외로 한국 경제는 1998년 하반기부터 경기회복세를 보였고 2001년 예정보다 이른 상환으로 '조기 졸업'을 선언했다. 한국 경제가 '체력을 강화'하고 회복의 길로 들어선다고 모두가 여겼다. 그러나 경제 지표의 성장 뒤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경제위기를 겪는 동안 한국 경제는 수출 대기업이 주도하는 성장체제로 완전히 그 성격이 변모했다.<sup>02</sup> 조선업과 자동차 대기업은 세계 수위 기업으로 거듭나며 고소득 국가와 신흥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폭력적인 구조조정과 노동 유연화가 비결이었다면 92년 한중수교 이후 열린 중국 시장이 그 배경이었다. 초기 대중 수출은 중소기업의 가공무역 중심이었으나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대중 수출은 대기업이 주도하게 되었다. 한국이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은 부채 기반 소비시장인 미국으로 최종재를 수출하는 구조였다. 수출 대기업은 대규모 직접 투자로 중국과 아세안 지역에서 해외생산을 확대하면서 초국적 자본으로 등극했다.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대기업은 중국 경제의 고성장과 미국의 부채-소비에 힘입어 2000년대 이후 크게 성장했다. 96년 대비 2012년 수출 규모는 두 배로 증가했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관이 사라지고 격차는 심화되었다. 수출이 늘어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는 줄어들고 수출 대기업을 떠받들기 위한 사회적 비용만 늘어났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서 한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적은 충격을 받았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07년 2만달러를 돌파하고, 2019년 3만 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위기를 넘긴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위기가 전개되고 있었다. 세계 자본주의 장기 침체 국면에서 중국의 경제성장 효과가 201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면서 위기가 순연되었을 뿐이다. 수출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제는 국제 질서 변동에 더욱 위태롭게 흔들린다. 2010년대 중반 조선업 구조조정은 세계 경제위기 여파가 한국으로 전이된 결과였다. 미국의 무역적자와 중국의 미국 국채 투자가 동조화된 구조는 2008년 위기 이후 국제질서에서 점차 갈등과 분쟁의 구조가 되었다. 특히 한국 경제가 거의 의존하는 반도체 산업은 미중 갈등의 핵심 사안 중 하나다. 미중 갈등은 대중국 교역의 불안정성을 증대시켜 한국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면서 경제는 중국에 기댄다는 전략(?)도 중국 경제의 저성장 국면에서는 대안이 되기 어렵다. 미국은 금융세계화와 달러 패권에 취해 국내 고용을 무너뜨린 결과에 직면하며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수출 대기업은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살아남고 국내 고용 창출 효과와의 괴리는 더욱 커진다. 한국의 지배계급은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에 편승하면서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배터리 및 군수산업 등에서 새로운 동력을 만들려고 한다. 그럴수록 전망은 불투명하고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불안정성에 우리 모두를 끌고 들어갈 뿐이다.

### 한계를 밀어붙이는 파괴의 반복

부동산과 건설산업에 대한 한국 경제의 의존은 오래되었다. 한국의 GDP 중 건설업 비중은 1991년 29.5%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에 있다. 그만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경기 부양을 위해 개발을 위한 개발이 반복되고 강제되거와 도시의 난개발이 이어진 이유다. 김대중 정부는 분양가 자율화로 건설 경기 부양을 시도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대규모 주택 공급을 이어갔다. 2000년대 중반에는 ‘뉴타운’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개발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에 이미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고 있었다. 주택 수요자가 미리 ‘분양’을 받는 선분양제도를 통한 자금 조달이 중요한 탓에 주택 수요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반복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2003년 153조원에서 2011년 389조원으로 약 2.6배 상승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예금기관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47.4%에서 2011년 60.8%로 증가했다. 동시에 건설자본은 부동산 금융화 상품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2011년 저축은행이 줄줄이 도산하고 중소 건설사들이 무너지며 한 차례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으나 프로젝트파이낸싱은 다시 한국 경제의 위기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1997년 경제위기에서 타격을 입었던 것처럼 건설자본은 위기 국면에서 쉽게 무너지며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연쇄적 위기를 낳는다.

개발사업의 생태 파괴도 심각하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했고 문재인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며 생태를 파괴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수출 주도 성장의 결과가 환류되지 않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대규모 토건사업은 정치적 이유로 반복됐다. 2010년대 제조업 쇠퇴와 해외 자본 철수의 효과로 비수도권 산업 도시의 경제적 쇠퇴가 두드러졌다. 대기업의 공장이 있는 울산과 충남의 소득 수준은 2010년대 중반 이후 떨어지고 있다. 비수도권 산업 지역에서 생산된 수익이 대기업 본사가 소재한 수도권으로 순유출되는 등 각종 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가속화되었다. 건설투자, 법인 소득 등에서 수도권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다.<sup>03</sup> 반도체 클러스터 등 새로운 제조업과 서비스업 투자도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산업화 초기에 이미 수탈된 농촌 지역은 송전탑과 재생에너지 등 자본에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고 각종 유해물질과 폐기물이 물리는 방식으로 또 다른 수탈을 겪고 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농업은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을 통해 세계농식품체계에 완전히 편입되었다.<sup>04</sup> 노동집약적 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저곡가 정책과 식량증산 정책은 세계 시장에 농업 부문이 개방되면서 변화했다. 1980년대 미국의 요구로 시작된 농산물 개방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진전되었고 2000년대 칠레, 미국 등과의 FTA가 맺어지면서 국내 농업 보호 정책이 해체되었다. 2004년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면서 농업은 세계를 무대로 하는 경쟁에 내몰렸다. 정치적 이유로 보호받았던 쌀 농사는 자급률이 계속 하락했다. 곡물 자급률은 1990년 43.1%, 2000년 29.7%, 최근 3개년(2020-2022년) 평균 19.5%로 급락했다. 한국인이 연간 30kg 이상을 소비하는 밀은 99%를 수입한다. 다른 한편 상업화된 채소와 과일 등 현금성 작물이 정부 정책에 따라 등락을 반복한다. 전체 식품 공급망에서 대기업과 대형마트의 역할이 크게 증가했다. 농민은 농사를 지으며 생태의 흐름을 살피는 대신 작물의 기대수익을 계산하는 경영자가 되어야 했다. 한편 1980년대를 거치며 기업화된 축산업은 2000년대 들어 가공, 유통, 서비스가 통합되는 축산 복합

체로 자본 통합이 심화되었다.<sup>05</sup> 2007년 식품제조업에서 축산 가공 비중이 30%를 넘어섰다. 한국의 축산업은 초국적 농식품기업과 달리 사료의 절대 수입에 의존하는 특징으로 세계 경제 위기에 직접 노출되어 있고, 점점 더 잦아지는 감염병으로 상시적 위기를 겪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과로, '축산' 되는 동물의 과밀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만든 농촌의 풍경이다.

97년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몰렸다. 김대중 정부는 자영업 창업을 실업 해소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 매년 약 50만 개의 신규 창업과 40만 개의 폐업이 있었다. 2010년대부터는 노후 대비를 위해 일찌감치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늘었다.<sup>06</sup> 경험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선택했다. 서비스업 자영업자 대부분은 종업원이 없거나 무급 가족 종사자와 함께 일한다. 경제 전반이 퇴조하는 조건에서 자영업은 경쟁으로 내몰리며 가계부채와 과로에 떠밀리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제조업 일자리 확충이 더딘 상황에서 서비스산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되며 고용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여성, 청년, 노인을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몰아넣은 결과였다. 경제위기를 생존의 위기로 겪은 이들이, 경쟁할수록 생존이 어려워지는 구조에 갇히게 됐다.

## 2) 개인화된 위험과 떠넘겨진 위기

### 사회보장, 달라진 사회의 위험에 대비하는 데 실패하다

경제위기와 함께 '사회안전망'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IMF가 요구한 조치 중 하나에 사회보장제도 마련이 포함되어 있었다.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노동시장 유연화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와 갈등을 최소화하려 했다. 한국처럼 복지제도가 매우 미흡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만으로도 제도와 재정 지출 측면에서 복지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한국 정부와 자본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공적 복지의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복지 전략을 펼쳤다. 이는 박근혜 후보가 복지국가를 내세운 데서도 드러나듯 자본에 긴요한 요구였다.

김대중 정부 이래 '4대보험'으로 일컬어지는 사회보장이 적용 범위를 확대해왔다. 건강보험 재정통합(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통합)은 사회연대를 강화하는 효과를 일부 발휘하기도 했다. 그러나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는 기능을 하는 사회보장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한국사회의 위기에 대응하는 데 엇박자를 냈다. 2001년 기준 364만 명이었던 비정규직은 2006년에 500만 명을 넘어섰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62.8%였는데 사회보장 수혜율은 40%밖에 되지 않았다.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이들이 사회보장으로부터 배제되는 연쇄적 배제의 고리가 된 것이다. 이후 4대보험 가입률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고용과 실업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 근로계약의 형식이 아닌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에게 산재보험은 더

디게 열렸다. 사회보장제도는 자본의 노동 유연화 시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국민연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더 늦게 덜 받는’ ‘개혁’을 시도했다. 이러한 접근은 사회적 연대에 기여하기보다 기금 운용을 둘러싼 논란의 화수분이 되었다. 한편, 한국 복지제도의 전환점으로도 평가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독재 정권이 도입한 생활보호제도와 다른 패러다임을 열었지만 근로 의무를 부과하며 ‘무능력’에 대한 낙인효과는 강화됐다. 지속적으로 사각지대가 확인됐고 정부 지출이 경직되면서 급여 수준은 매우 낮은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체계적으로 제도화되지 못한 사회보장은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만으로 복지 효과의 증대를 내기 어렵게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어도 민간 의료기관 위주의 수익성 구조에서 의료비 부담은 계속되고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성장해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각국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친 결과는 ‘3중고’(고금리, 고물가, 고유가)로 이어졌고 삶의 위기는 증대하지만 재정 지출은 더욱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경제위기를 맞으며 서둘러 도입하거나 확대한 제도는 사회보장에 대한 보편적 권리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지 못했다. 사회적 위험에 앞장서 대비하기보다 자본의 전략을 뒤처리하기 바쁜 제도적 틀은 ‘사회’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 지원이라는 명목의 대출, 빈곤을 금융화하다

신자유주의가 만든 위험과 불안 속에서 시민들은 기업과 가족에 더 의존하게 되었다. 1990년대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복지가 확대되었다. 1987년 이후 노동자들의 저항을 관리하며 애사심을 고취하기 위한 신경영전략의 일환이었다. 부족한 사회복지를 대체하는 한국의 기업복지는 주거와 학비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교육비가 기업 복지에 포함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한국적 상황이다.) 사회보장에 대한 감각이 거의 없던 한국에서 노동자는 부족한 임금을 메워줄 기업복지를 원했다. 하지만 기업복지에 대한 접근은 대기업 노동자들에게 가능한 것이었다.

서민들은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거나 실업·질병 등 사회적 위험에 맞닥뜨렸을 때 필요한 자금을 구하기 위해 빚을 져야 했다. IMF 위기 이후 실업과 소득 저하로 저소득층이 사금융에 의존하여 과다채무로 고통받자, 정부는 서민들에게 ‘금융 접근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정부는 신용카드업을 육성하고 대부업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소득 보장과 사회불평등 완화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민금융의 확대는 저소득층의 과다채무를 불러왔다. 가혹한 채권추심과 2003년 ‘카드대란’은 그 결과 중 하나였다. 2008년부터는 정책성 서민금융이 제공되기 시작했다.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체계가 완비되어 갔다. 국가는 재정을 투입해 공공성을 확충하는 대신 빈곤층에게 빚을 질 ‘기회’를 주었을 뿐이다. 금융자본이 국가의 보증을 통해 벌이는 빈곤 산업이었다. 정부와 자본은 ‘빚테크’ 지식을 함께 생산했고 금융과 부채의 늪 속에서 빈곤은 더욱 개인적인 문제가 되어갔다.

부동산 가격의 꾸준한 상승은 가계부채의 또 다른 동인이 되었다. 고용불안정성이 증가하고 공적 복지의 확대가 담보상태에 머무는 상황에서 가계가 기댈 수 있는 생존전략은 부동산을 통한 자산형성이었다.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의 맥락에서 금융기관은 기업보다 가계 대출이 수익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에 놓였다.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97년 위기 이후 부유층 중심으로 대출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부채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었다. 2010년대 들어 하우스푸어가 주목받은 데서 드러나듯 뒤늦게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을 받은 이들은 금리정책에 따라 이자 부담이 과중해지는 상황에 놓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주거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된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사기'의 모습으로 금융기관과 건물주의 위험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자영업자 부채도 심각한 수준이다. 자영업 창업과 유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 비용이라는 점에서 자영업자 부채는 한국 부동산 문제의 이면이기도 하다.

### 젠더화된 돌봄과 모두의 위기

1990년대 들어 더욱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경제위기 국면에서 여성이 먼저 해고되는 등 성차별은 여전했지만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라는 이데올로기와 현실의 괴리는 점차 증대했다. 1993년부터 2013년 사이 가구 소득에서 남성 가구주 소득이 50% 미만인 가구는 증가했고 남성 혼자 가족의 생계를 전담하는 가구 비중은 90년대 말 전체 가구의 1/3 수준으로 떨어졌다. 자본은 여성에게 떠넘겨왔던 가족 돌봄의 대안을 찾아야 했다. 그러나 노동력의 일상적 재생산과 노동인구의 재생산을 포함하는 사회재생산은 위기의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나날이 갱신되는 지표를 마주하고 있다.

한국의 일·가족 양립정책은 노동자 지원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양육자 지원인 보육정책으로 발전해왔다. 2001년 모성보호법이 도입되면서 이전까지 사문화됐던 모성보호 조항이 살아났다.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을 자격으로 하는 제도 구성은 시작부터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일하는 수많은 여성이 누락되는 한계를 가지게 되면서 보편적 제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보육정책은 빈곤 여성의 부담을 완화하는 복지정책의 맥락에서 시작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을 실시하며 보육시설 기준을 완화했고 보육시설은 양적으로 팽창했다. 2000년대 들어 보육률은 30%까지 증가했는데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하며 2010년 이후 보육율이 80%를 상회하기에 이르렀다.<sup>07</sup> 2009년 이후 보육정책은 바우처 도입, 가정양육수당 도입 등으로 양육 책임을 다시 가족에 떠넘기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보육서비스 공급을 거의 민간에 의존하면서 어린이집은 양육자와 돌봄노동자인 여성이 서로 갈등하는 공간이 되어갔다. 2000년대 내내 저출생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면서 모든 정부가 일가족 양립정책을 개선해왔다. 하지만 여성을 생산의 도구로만 쓰고 싶은 자본과 여성을 재생산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국가 사이에서 양육은 결국 여성이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나눠 쓸지에 관한 문제가 되어버렸다. 생산가능인구의 부족을 우려하는 자본과 국가

의 패러다임 안에서 아동 권리의 신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2008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집에서 지원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의 재가급여 우선 원칙은 취지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결국 노인돌봄에서 가족의 역할이 다시 강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2000년대 이래 줄곧 사회 문제로 인식된 고령화 대응을 위해 역대 정부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왔지만 노인돌봄 체계는 시장에서 길을 잃고 있다. 여성 노인은 돌봄서비스 시장으로, 남성 노인은 아파트 경비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가족과 시설 사이를 오가고 있다. 노령 인구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안기는 비생산 인구라는 틀에 갇혀 세대 문제로 접근되며 혐오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한편, 2000년대는 돌봄과 재생산에서 인종화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도시로 '이주'한 빈곤 여성이 '식모'나 '파출부'로 불리며 비공식 돌봄노동 시장에 참여하던 구조는 1990년대를 경과하며 다른 나라에서 '이주'한 여성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2002년 재외동포 취업관리제, 2007년 방문취업제 등으로 '조선족 이모'들이 돌봄을 분담했다. 산업화 과정에서 수탈되며 재생산 기능이 소진된 농촌에는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의 결혼이주여성들이 돌봄을 떠안기 시작했다. 상업적 결혼중개업이 성장하며 결혼이주민 숫자는 크게 증가했다.

저평가된 돌봄노동의 시장화와 인종화는 '가족'을 확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젠더화를 다시 강화하고 있다. 돌봄을 통해 서로 보살피고 살리는 관계를 맺을수록 서로의 존엄을 지키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졌다.

### 3) 사회경제적 균열의 비대칭성

#### 경쟁과 균열의 심화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노동의 권리를 해체하는 전략이었다.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이라는 설명을 초과하는 형식의 불안정노동이 확산되었다. IMF 경제위기는 '가장의 위기'로 표상됐지만 정규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중장년층은 대거 자영업으로 몰려갔고 청년 실업 문제가 곧이어 조명되기 시작했다.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 아니었다. '괜찮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 문제였다. 경제활동참가율의 저하, 즉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이 늘어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대학 졸업과 취업 사이의 기대구조가 무너지면서 대학과 기업의 연계가 더욱 밀착하게 됐다.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으로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시작된 교육 체계는 더욱 경쟁에 노출되었다. 대학의 지리적 격차는 심화되고 학벌 구조는 더욱 강화되었다. '진학' 경쟁은 점점 더 낮은 연령대로 확산되고 청소년의 학습노동 부담이 과중해졌다. '학교폭력'도 사회 문제로 등장했다. 신자유주의와 함께 자본은 수많은 길을 열어주었지만 어떤 길을 따라가도 흑사당하는 삶이 기다릴 뿐이다.

자본주의 체제가 사회재생산의 인프라로서 착취하는 동시에 포섭해온 ‘가족’은 도전받았다. 이 혼율이 증가하고 초혼 연령이 상승했고 출산이 거부되었다. ‘엄마’들은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딸을 응원한다. 누구든지 경쟁과 시장의 질서에서 뒤처지고 탈락할 수 있다는 공포는 ‘성공’ 또는 단순한 ‘생존’을 위해서라도 ‘정상적’이라고 여기던 삶의 경로를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되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 여기에 취업과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하는 5포세대라는 말이 2010년대 초부터 회자되기 시작했다. ‘고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했다. 1인 가구 중 가장 많은 노인은 노동시장에서도 가족에서도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과 ‘노인자살’로 몰리고 있다. 다양한 ‘시설’의 문제가 제기되지만 사회재생산 부담이 전가된 가족의 수요와 시장이 만나며 형성된 ‘시설사회’<sup>08</sup>는 견재하다. 가족의 균열은 심화되고 있지만 대안적 돌봄과 친밀성의 구조는 제도화되지 못한 채 삶의 균열로 이어지고 있다.

###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특권이 되었다

1990년대 이후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실질생산성과 실질임금은 2000년과 2020년 사이에 크게 괴리되었다. 2018년 이후 가처분소득의 불평등이 다소 완화했으나 구조가 바뀌지는 않았다. 시장소득(1차 분배)의 불평등은 지속되었고 특히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상대적 빈곤율은 2018년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했다. 한국의 가구 소득 불평등 수준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OECD 국가보다 높다. 자본주의가 약속하던 기회의 평등보다 부모의 자산과 소득이 생애경로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가 되었다. 임신, 출산, 보육, 교육, 의료, 요양 등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사적 기관과 사학재단, 민간기업에 시장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생애주기에 따른 삶의 불안은 더욱 다루기 까다로운 문제가 되었다. 노년의 부모에게 주택, 양육, 생계를 계속 의존하는 ‘역직계가족’이 급증<sup>09</sup>하고 있지만 모두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

많은 이들에게 ‘가족’은 탈출할 수도 진입할 수도 없게 된 선택지라면 어떤 이들에게 ‘가족’은 새로운 생애경로 전략을 발명해가는 거점이 된다. 정상규범처럼 여기던 생애경로 전략은 앞선 시대에도 모두의 전략일 수 없었다. 많은 노동자에게 고용 중단 경험은 빈번했고,<sup>10</sup> 정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들이 가족 단위 영세자영업 시장을 형성하고 도시 저소득층 여성은 노동시장의 비정규 일자리에 산재해 있었다.<sup>11</sup>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는 시기에도 비진학 청년들이 있었고 여성에게 가족은 언제나 가부장의 폭력에 대한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이었다. 다만 자본이 우연히 성장하고 정부가 ‘중산층 육성 대책’을 내세우며 주택 공급과 부채를 통한 재산 형성을 지원한 결과 1990년대 중반까지 중산층 신화가 자리잡을 수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는 중산층 신화의 한 축인 안정적 고용을 산산조각 냈고 아파트 신화만 남겼다. 이제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소득과 자산 상위 계층의 특권이 되었다.

중간계층이 분화하면서 ‘특권 중산층’이 계급정치를 주도한다.<sup>12</sup>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와 동시

에 상층 중산층의 구별짓기 전략이 강화되었다. 부동산과 교육은 핵심적 계기다. 사교육 시장은 모두가 접근할 수 없는 위계 구조로 진화했다. 의사, 법조인 등 몇몇 직업을 중심으로 한 자격증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진다. 상층 중산층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익을 볼 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은 부채와 임대료 부담으로 피해를 본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도 커졌다. 지대 수익은 수도권의 상층 중산층에게 몰리고 비수도권에서 전망을 찾기 어려운 청년들은 서울로 이주하며 비싼 주거비를 감당하는 구조다. 임금소득만으로 미래를 계획할 수 없는 이들이 금융산업과 만나며 자산경제가 형성된다. ‘부동산 재테크’가 어려워지면서 주식이나 암호화폐 등 새로운 자산 형성에 기대를 거는 청년 세대도 늘어난다. 노동소득으로 미래 대비가 어렵다고 느낄수록 ‘블로소득’ 환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sup>13</sup> 현상이 나타난다. 불평등의 역설과 함께 연대의 가능성이 줄어든다.

### 균열의 비대칭성

사회경제적 균열은 비대칭적이었다. 97년 경제위기 전후로 소득 지위를 기준으로 하는 객관적 중산층과 체감을 통한 주관적 중산층 사이의 역전이 발생했다. 지금은 소득 수준이 낮지 않은 범위에서도 스스로를 하위 계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더욱 많다. 상류층의 이해관계가 균질해지는 것과 달리 궁핍해지는 수많은 이들 사이의 이해관계는 복잡하게 대립한다.

2000년대는 청년 실업과 ‘기업 구인난’이 동시에 등장한 시기였다. ‘요즘 젊은이들이 힘든 일을 피한다’는 비난은 노동시장의 객관적 지표들 앞에서 금세 꼬리를 내렸지만 노동시장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 재벌 대기업 중심 구조에서 밀려나는 중소기업들은 착취하기 쉬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했고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꾸준히 확대하며 인력을 공급했다. 노동의 권리가 무시되는 산업 현장에서 한국 국적 저소득층 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부딪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돌봄서비스 시장이 확장되면서 한국 국적 여성과 이주여성 간 갈등 구조가 형성되는 맥락도 유사하다. 한편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등 구조도 심화되었다. 구조조정이 불러온 위기감을 지나 노동시장에서의 안정성만으로 불안이 가시지 않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정규직은 특권 중산층의 이해관계에 자신을 동일시하기 쉬워졌다.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 등 자본이 노동력을 사용하는 방식이 거듭 분화하면서 불안정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집합적 이해관계를 구성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사회에는 “다양한 정체성들의 전선이 아니라 정체성의 다양한 방식들이 싸우는 전선”이 형성되었다.<sup>14</sup> 2000년대 이후 ‘남성’과 ‘여성’으로 표상되는 갈등 구조가 특히 두드러졌다. 90년대 말 국가산점제 폐지를 계기로 남성에게 허락된 미래의 파괴에 반발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세대 간 격차의 결과(인류 역사에서 부모 세대보다 소득이 적은 첫 세대라는 등 청년의 불안정한 위치)로 해석되곤 했고 세대 내 격차는 비가시화되었다. 90년대 중반 이후 ‘적극적 평등 실현 조

치'들이 제한적이거나 시행되었으나 구조적 성차별을 철폐하는 흐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남성의 역차별 주장과 타협한 '양성평등'만 남겼고, 2010년대 들어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양성평등'과 만나며 페미니즘의 전망을 질곡했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 성차별에 대한 민감도나 성평등 인식이 높아지면서 '여성의 미래'를 개척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2010년대 중반 '페미니즘 리부트'라는 정치적 변동에 이르렀다. 그러나 남혐 대 여혐의 구도로 납작해지는 동안 능력주의로 만나는 또 다른 균열이 드러났다. 애초에 '생산' 가능 인구가 취급되지 않았던 장애인과 노인, 아동은 더욱 적대적인 사회를 마주하게 되었다.

한편, 반동성애운동과 같은 우파 대중운동이 형성되었다. 한국 근현대사 내내 있어온 우파 단체는 대체로 관제동원 방식으로 조직되었다. 2000년대 초 이념 갈등을 반영하는 '뉴라이트' 운동이 기존의 시민운동 분화와 함께 등장했다면,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며 반-이주노동자, 반-난민, 반-성소수자 등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며 정치적 결집을 시도하는 흐름이 형성되었다. 이런 흐름은 일부 개신교 그룹의 극우화 경향과 맞물리면서 '종교'와 '가족'과 '국민'을 대표하는 집단으로 정체화하고 있다. 성소수자는 이들의 표적집단이 되어 사회적 인정의 확대와 제도적 인정의 지체 간 간극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동안 자본이 먼저 '핑크 워싱'을 시도하고 있다.

상위 계층의 계급 전략은 합의되기 쉬운 반면, 주변부로 밀려나는 하위 계층에서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찾아가며 삶의 전략을 만들어가는 시도가 지극히 어렵다. 대항 주체들의 결집이 어려운 조건은 다시 불평등을 심화하며 정치의 위기를 불러온다.

#### 4) 정치의 위기, '자유주의' 정치의 구조적 한계

##### 보수 양당 구도가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다

보수 양당은 2000년대 내내 신자유주의 구조화를 촉진해왔다. 서구의 신자유주의가 보수 정부에 의해 추동되었다면 한국에서는 민주당 정부가 신자유주의의 기틀을 다졌다. 김대중 정부는 구조조정의 칼날을 빼들었고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확산을 제도화했다. 이명박 정부는 다시 '성장'을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을 베끼고, 탈계급적인 '소득주도성장'을 주창하며 '성장'이 목표인 사회를 재조직했다. 노동의 유연화가 지속적으로 시도되었고 보편적 권리로 복지를 재구성하는 전환 전략은 없었다. 급여 제공 방식을 둘러싸고 보편이나 선별이냐는 왜곡된 쟁점이 형성되었다. 90년대 중반까지 일부 은행과 대기업 노동자가 누리던 '주5일제'는 경제위기 이후 '주 40시간 노동'으로 법제화됐다. 그러나 52시간과 69시간 사이에서 논쟁하며 노동시간 유연화를 더욱 밀어붙이는 것이 보수 양당의 실체다. 성장을 이루며 복지를 책임지겠다는 자본과 국가의 전략은 성장에도 실패하고 복지는 파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의 활로가 보일 리 없다.



쟁점은 다른 곳에서 조직되었다. 부동산, 교육, 국가기구, 언론 등을 둘러싼 쟁점에서 보수 양당은 격렬하게 대적하며 진영을 동원하는 계기로 삼는다. 우리 삶의 위기를 구성하는 영역들이지만 쟁점은 왜곡된다. 교육은 입시제도의 공정성만 쟁점으로 삼으며 수시냐 정시냐 킬러냐 아니냐 사이를 오간다. 입시제도의 공정성으로 교육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은, 어떤 입시제도에도 최적화되어 반응하는 사교육 시장에 의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쟁점이 왜곡될수록 교육 체계를 재구성할 기회는 봉쇄된다. 부동산 문제는 종부세 등 세제를 중심으로 다루어지면서 문제를 도덕성으로 치환하고 시장에 내맡겨진 주거의 불안정성은 정면으로 응시되지 않는다. 검찰 개혁은 야당 정치인과 여당 정치인의 수사 공정성 문제로 격돌하며 사회 각 영역의 정의가 사법에 내맡겨진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정부 비판 성향의 언론을 서로 가짜뉴스로 지목하며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서 동안 ‘가짜뉴스’로 혐오의 표적이 되는 소수자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사회적 정치적 의제를 형성하는 언론의 기능만 무너지고 있다.

### ‘자유주의’ 정치의 위기

민주화 이후 고착된 보수 양당 구조는 중간계층의 분화를 따라 상층 중산층을 대표하는 방향으로 흘렀다. 특권적 엘리트가 지배와 통제를 재확립하는 ‘포스트 민주주의’<sup>15</sup>에서 보수 양당이 대표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양당이 만들어낸 파괴적 결과에 대항하는 대신 팬덤의 방식으로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치 엘리트 집단의 지분을 분점하려고 한다. 보수 양당이 진영화될수록 정치는 조정 능력을 상실하고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국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그러나 동시에 신자유주의가 낳은 사회경제적 균열에서 비롯된 모든 요구가 국가를 향하는 모순된 양상이 지속된다. 한국의 자유주의 정치 세력은 한편에 극단적인 반공주의가 자리하고 있다는 특수성에 기인해 대북 적대와 화해라는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서부터 이미 신자유주의 확장 전략<sup>16</sup>으로 전환한 대북 화해 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과 다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 예산이 급증하는 등 ‘자주국방’으로 ‘국가’에 대한 요구를 모면하며 평화를 미루는 데서 차이가 없다.

신자유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주권, 보호, 통제, 안전에 대한 대중의 욕구를 불러일으켰고 이는 전통적인 진보의 서사와 뒤섞이게 됐다.<sup>17</sup> 전세계적으로는 이러한 욕구가 이민과 이주민 반대 등의 쟁점으로 전유되며 우파 포퓰리즘이 성장했다. 자본의 위기가 정치의 위기로 등장하는 경로였다. 한국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안전’을 국정 기조로 내세우며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에 대한 대응으로 국가 형벌권을 강화하는 흐름이 자리잡았다. 다만 세월호 참사 이후 이어진 사회적 애도의 시간으로부터, ‘영토와 재산’의 안전에 ‘생명과 존엄’의 안전이 경합하기 시작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이게 나라냐’, ‘국가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이 함께 등장했던 것을 기억할 때 주권과 안전에 대한 욕구가 어떤 방향으로 조직될지는 열려 있다. 문재인 정부의 ‘나라다운 나라’는 이

에 응답하지 못한 동어반복일 뿐이었다.

보수 양당은 삶의 불안으로부터 비롯되는 정치적 불만족을 해소할 대답을 내놓을 수 없다. 그런 한계를 회피하려 균열을 왜곡하며 연명하고 있다. 보수 양당은 구조적 불평등이 다양한 갈등으로 표면화될 때 특정 집단의 대표를 자임하며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든다. 박근혜 정부는 ‘청년’ 세대를 대표하겠다고 “우리 딸과 아들에게 반듯한 일자리를” 만들어주자 호소했지만 ‘양보’를 요구 받은 중장년 세대가 바로 그 ‘딸과 아들’의 부모들이었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지만 국정의 변화는 없이 미투 운동을 만나며 배신감의 부메랑만 키웠을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성을 대표하기를 아예 포기하고 남성 청년의 지지를 결집시키려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웠다. 그러나 MZ세대 노조는 주 69시간 노동에 동의해주지 않았으며 2030세대의 지지율이 높아지지도 않았다. 표를 수집하거나 구걸하는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 보수 양당의 현실이다.

누구나 지적할 수 있는 보수 양당 구도의 폐해는 정당정치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했거나 양당제가 가진 한계로만 평가할 수 없다. 자유주의 자체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와 함께 마주한 한계다. 자유주의는 민중(people, 인민)을 두려워하며 민주주의에 머뭇거렸다. 계급에 관한 문제를 회피하고<sup>18</sup> 사회는 다양한 개인/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가정 아래 다양성을 대표하는 것이 그들의 민주주의였다. 다수를 포섭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는 자유민주주의가 근거한 대표성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성별, 연령, 지역 등 특정 집단과 정치 이념의 성향은 더 이상 쉽게 유형화되지 않는다. 집단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전망을 연결하는 과제는 쉽지 않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수많은 균열들에 갇혀 있는 조건은 체제전환운동에도 난관으로 작동한다. 다양한 집단이 불평등을 체감하는 접점이 다를 때 평등의 정치를 구성하기도 쉬운 일은 아니며,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도 근본적 변화를 바라는 욕구와 바로 연결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를 직시하며 단기적 이익을 넘어서는 해방을 기획할 수 있다면 균열로 드러난 자리들은 우리를 연결하는 이음매가 될 수 있다.

### 3. 사회운동의 곤경, 체제에 맞서는 도전과 좌절

#### 1) 계급이 희미해지다

##### 한국 노동계급 형성의 기대와 역전

자본주의 체제를 전환할 집합적 주체를 계급\*이라 부를 수 있다. 자유주의 정치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살피며 사회적/정치적 공간에서 자본의 힘에 맞서는 세력으로서 계급을 형성하는 것은 체제전환운동의 중요한 과제다. 한국 사회에서 계급 정치의 도전은 주로 노동운동이 주도하여 이루어진 만큼 노동운동의 곤경을 살피는 데서 2000년대 사회운동\*\* 돌아보기를 시작한다.

1990년대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에 대한 기대는 미래가 아닌 현재에 대한 기대였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헤게모니 아래 노동조합이 대거 조직되고 실질적 권리 증진이 이루어졌다. 1996년 12월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맞서 1997년 2월까지 벌인 총파업은 531개 노조 40만 명이 참여하는 규모(기간 중 집회에 참여한 총인원 150만 명)로 세계 좌파운동에 놀라움을 안겼다. ‘노동자는 하나’고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의 근거로 부족함이 없었다. 분화 중이던 사회운동 전체가 함께 하며 반신자유주의 전선이 조직되었다. 그러나 IMF 위기를 맞으며 상황은 급격하게 역전됐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의 요구에 기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나섰다. 경제위기를 맞아 민주노총이 노사정 3자기구를 제안하자 김대중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어 구조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노사관계를 제도화하는 약간의 조항과 노동시장 유연화 제도가 교환되었다. 정리해고를 인정하는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파견법이 제정되어 파견노동이 합법화됐다. 2006년 일명 ‘비정규 3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동위원회법)이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불안정노동의 제도화 기틀이 완성됐다. 저항하는 노동자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도 거침없었다. 노동운

\* ‘계급’은 맑스주의 전통의 핵심 개념이지만 사회학적으로 다양하게 개념화되고 분석되는 틀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사회적 신분이나 계층을 분류하는 틀로서의 계급이 아니라 맑스주의 전통을 따라 사용한다. 그러나 이 역시 ‘노동자’로 표상될 때 피고용 신분을 연상시키는 데 머무르기 쉽고 현실의 노동자는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기보다 포섭당하기 쉬운 위치에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 체제가 존속되는 핵심 기제다. 우리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서 노동자계급이 유효한 계급적대 또는 계급정치를 통해서만 현실에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사회운동은 분석 틀에 따라 다양한 범위로 묶일 수 있다. 사회운동의 개념 자체를 기존 체제와의 갈등적 관계를 중심으로 정의할 수도 있으며 체제를 강화하는 흐름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포괄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사회운동의 역사를 살피는 범위는 사회제도의 경계에서 사회 문제를 제기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다양한 시도들 모두를 염두에 둔다. 글의 구성에서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운동이 다른 절에서 다뤄지지만 이들 운동 모두 사회운동의 일부로 본다는 점을 밝힌다. 물론 모든 운동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수준의 분석을 하지는 못했고 공동의 관점을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읽어주시기를 기대한다.

등에 줄곧 적대적이었던 역사와 노동3권의 제도적 취약성, 경제위기와 대량 실업이라는 사회적 경험 등은 노동운동의 헤게모니를 약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 좌절과 도전이 이어지다

정리해고에 맞서는 투쟁이 시작되었다. 1998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을 시작으로 대규모 사업장의 정리해고 반대 투쟁이 이어졌지만 자본과 국가는 물러서지 않았다. 8,189명을 정리해고하겠다는 현대자동차의 방침은 277명으로 최소화됐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식당 여성 노동자들의 해고에 동의한 ‘밥꽃양’ 사건은 비정규직이 급격히 확산되는 과정에서 계급 단결의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는 상징이었다. 고용을 유지한 이들도 임금이 삭감되거나 사내하청으로 간접고용화되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고용 불안을 느끼며 자신들의 고용 안정과 제한적인 기업 복지와 같은 단기적 이익에 의존하는 경향이 형성되었다. 이런 패턴이 형성되면서 노동자 정치의 중요한 장소였던 사업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갈등하고 대립하는 장소가 되어갔다. 90년대 노동계급 형성의 주역으로 기대받았던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들이 더이상 노동계급을 대표하기 어렵게 됐다.<sup>19</sup>

2000년대 들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확대되었다.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의 정규직화 요구 파업 이래 사내하청, 특수고용직, 간접고용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불안정성에 맞서는 투쟁들이 조직되었다. ‘비정규직’은 97년 위기 이후 새롭게 등장한 집단이 아니다. 오히려 90년대 들어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에게 보장된 것들이 ‘정규직’으로 표본화된 것에 가깝다. 그러나 민주노조운동의 주체로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불안정노동체제에 맞서며 최전선에 등장한 것은 이때부터다. 비정규직 노동운동은 정규직과의 갈등에 종종 맞닥뜨려야 했지만 자본의 노동 유연화 전략과 책임 회피 전략을 무산시키는 투쟁을 벌이며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흐름을 이어갔다. 하지만 노동의 권리를 쟁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근로계약, 노동시간, 종속성, 대가성, 장소 등 기존의 노동법체계의 주요 요소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요구를 빙겨내는 동시에 특별법이나 예외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특정 고용형태, 특정 직종, 특정 사업장 등의 문제로 분할하여 제한적으로 편입시키는 데 그쳤다.(최근 대안처럼 제기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이런 문제를 방치한 채 기존 노동법의 역할만 축소할 우려가 있다.) 비정규직 확산은 노동의 위계화를 동반하였고 노동자들도 서로의 노동을 위계화하는 데 익숙해졌다. 노동자들의 치열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투쟁하는 노동자가 승리한다’는 경험은 보편적 권리 투쟁으로 확장되지 못한 채 모양을 달리한 불안정노동 체제가 유지되는 시간이 이어졌다.

### 계급대표성을 향한 도전

2000년대 후반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또다른 흐름이 형성되었다. 대기업 해외 생산과 해외 자

본의 투자 철회로 산업 공동화 현상이 부각되던 시기였다.<sup>20</sup> 기륭 투쟁, 쌍용차 정리하고 반대 투쟁, 한진중공업 희망버스와 같이 노동운동 안팎으로 '사회적 연대'를 통해 '정리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요구가 모아졌다. 민주노조운동의 산별노조 전환과 건설 시도도 본격화됐다. 연대성을 회복하고 미조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교섭력을 높이는 등의 기대는 노선과 현실의 괴리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주도해야 하지만 동기는 오히려 떨어지는 구조에서 개별화된 지부나 지회가 기업 간 위계구조에 포섭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사회적 연대'는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계급대표성을 만들어갈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 이런 흐름이 강정 미군기지 반대 투쟁이나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 등과 연결되며 이어진 점도 주목할 만하다. '노동자와 시민'의 연대로 불리곤 했던 사회적 연대는 노동이 파편화되고 탈경계화되는 변화 속에서 새로운 노동자의 연대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를 주도할 계급 구심이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파급력만큼 변화를 만드는 데로 이어지지 못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을 형식화했던 시간과 공간의 경계, 고용과 자영의 경계가 점차 사라지는 '노동의 탈경계화' 경향<sup>21</sup>은 강화되고 '노동자' 정체성은 약화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노동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 여성, 노인 등 다양한 얼굴의 노동자들은 고용과 실업 사이를 오가며 구조화된 불안정을 겪고 있고 진입에서부터 퇴출까지 구조적 차별에 처해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무법지대에 가깝다. 계급을 형성하려는 노력은 더욱 중요해졌다. 노동자가 아니라고 우기는 자본에 맞서 노동조합을 세우고 노동의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싸움은 이어져왔다. 화물기사, 건설 인력, 학교 비정규직, 케이블설치기사 등 노동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자본이 붙인 이름 대신 노동조합으로 서로를 조직하는 시도들이 또 다른 투쟁의 가능성을 만들어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필수노동'이 사회적 화두가 되고 기후위기 대응으로 '산업 전환'이 논의되는 상황은 노동운동이 체제전환에 나설 또다른 기회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체제가 만든 균열의 구조에서 '노동중심'을 강조하는 것만으로 계급 정치가 조직되지 않는다. 더욱 많은 이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고 기업의 울타리를 넘는 계급 정치를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많은 사회운동과 접촉해야 한다. 시야를 확장하고 관점을 갱신하며 새롭게 '노동'을 구성하는 도전이 필요한 때다.

## 2) 사회운동의 분절화

### 사회운동의 분기와 체제내화

87년 이후 여러 운동이 분화하며 한국의 사회운동은 새로운 지형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 사회운동의 장이 확장되며 사회의 기능 영역에 대응하는 전문화된 운동들이 분화했고 다양한 정체성을 호명하며 대중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내려는 운동들이 등장했다. 각각의 운동들이 만들어가는 변화와 함께 이념과 주체, 의제와 영역의 다원화가 이루어졌다. 물론 80년대까지의 사회운동에 문

똥그려져 있었을 뿐 이러한 운동이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방향의 흐름이 압축적으로 등장하는 시기였다.

‘시민운동’의 등장은 90년대 사회운동의 가장 큰 변화였다. 1989년 경실련이 80년대 민중운동을 비판하며 새로운 운동을 선포했지만 ‘시민운동’에는 민중운동과의 연계를 모색하는 흐름도 있었다. 그러나 1991년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 한국의 지식인 집단과 운동사회에서 탈사회주의 선언이 잇따르며 ‘민중운동 대 시민운동’ 구도로 논쟁이 이어졌다. 사회운동의 과제와 진로에 대한 토론은 변혁과 변질에 대한 토론으로 대치되었다. 민중운동 역시 체제의 변화를 인식하며 사회운동의 전망을 만들어가는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채 변혁 이념이 소실되어 갔다.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민중운동을 분리 배제하여 폭력적으로 탄압하는 기조가 선명해지고 김대중 정부 시기 다양한 거버넌스가 형성되면서, 민중운동은 위축되었고 시민운동은 주목받았다.

김대중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제도화라는 목표를 수행하면서 사회운동의 일부를 포섭하기 시작했다. 제도화의 경로에 접근하기 수월한 운동들은 민주화 운동에 잠재해있던 수많은 요구들을 입법운동 등 제도화 요구로 만들어갔고 얼마간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제도화가 진전될수록 운동의 조직역량이 약화되는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제도를 대중운동의 발판으로 삼아 운동을 더욱 나아가게 할 계기가 되게 할 이념도 대중조직도 약화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도화 이후를 함께 도모할 사회운동 전체의 구상과 질서가 부재한 상황에서 제도화 요구는 제도 개선에 운동의 힘을 소진하는 계기가 되어갔다. 결국 사회운동의 과제가 선택적으로 제도화되며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보완하는 결과에 그치게 되었다.

거버넌스가 활성화되면서 대중운동과의 괴리는 더욱 심화되었다.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공부방 처럼 현장에서 대중을 조직하는 거점이 되었던 장소들도 복지전달체계로 흡수되었다. 사회운동이 대중의 요구를 조직하며 변화를 꾀하는 기획을 추진하기보다 대중을 대신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에 갇히게 되는 흐름이 강화되었다. 전문가와 피해자가 운동을 대표하게 되거나 미디어 노출과 언론 활용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경향도 만들어졌다. 1980년대 체제변혁 지향을 견지하며 전투적 반핵운동, 반공해운동을 벌였던 환경운동은 자본주의의 ‘생태적 현대화’를 추구하는 온건한 환경운동으로 흘러가고 기후위기의 해결책으로 시장과 기술 중심 접근에 주목하는 흐름으로 이어진 맥락도 이리하다.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들에 대응하며 신자유주의 비판을 심화하고 대안과 요구를 만들어가는 의제와 영역별 운동도 있었다. 그러나 사회운동의 여러 대안을 연결할 이념의 부재와 대중운동의 약화는 대안이 점차 전문가에 의탁되는 흐름을 낳기도 했다.

### 급진화하려는 운동의 부침

다른 한편에서 급진적 운동의 흐름도 형성되었다. 97년 위기 이후 사회운동 전반에 ‘신자유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모색이 이어졌다. 경제위기의 충격이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지는 현실이 선명

하게 드러나며 ‘민주화’의 한계를 인식하고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를 살펴야 한다는 감각이 형성되었다. 2000년대 장애인이동권 투쟁을 비롯하여 국가페미니즘을 비판하는 여성주의 운동도 자리잡아갔고 이들은 한국 자본주의 변화를 통찰하기 위한 사상적 자원을 내어놓았다. 그러나 사회운동이 분화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운동은 서로 다른 ‘당사자’의 운동으로 이해되고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 그치기 쉬웠다.

사회운동 전체로 보면 여전히 페미니즘이 여성의 문제로 이해되고 부차화되는 상황에서 여성운동을 급진화하려는 운동은 자기분열적 상황을 겪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여성운동을 비판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운동을 비난하는 손가락질에 맞서야 했다. 젠더 갈등은 더 많은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인입시키되 분할을 고도화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젠더화 양식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모두가 ‘노오력’해야 하는 사회에서 페미니즘의 언어를 채택한 청년의 저항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경제적 불평등과 구조적 차별을 함께 살피며 공동의 전선을 만들어가는 쉽지 않았다. 체제를 살피는 공동의 시야와 관점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이념을 기각하며 사라져온 결과이기도 하다. 2010년대 들어 혐오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를 가로지르는 반차별 운동이 만들어졌다. 불평등이 가파르고 첨예해지는 조건에서 ‘혐오’를 순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조적 부정의를 직시하며 평등을 급진화하려고 했다. 그러나 ‘민중’이 수많은 균열들로 쪼개지고 흩어지는 사회경제적 변화에서 계급의 구성은 지체되고 사회운동은 누구를 대표하는지 스스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현재의 사회운동은 논쟁을 조직하기보다 서로 외부화하는 비판에 익숙하다. ‘터프’는 여성운동만의 한계인 듯, 정규직 노조의 능력주의는 노동운동만의 한계인 듯 평가된다. 민주노조운동이 미투운동을 만나며 구조적 성차별을 철폐할 구심을 자임하거나, 여성운동이 노동안전운동을 만나며 생명과 역량을 수탈해가는 자본의 전략을 끊어내는 주역이 되기를 상상하기는 쉽지 않다. 사회주의, 생태주의, 페미니즘 등 사회운동의 여러 사상적 자원들이 논쟁되고 종합되고 갱신되기보다 서로 다른 강조점을 확인하는 데 그치게 된다. 계급 정치를 만들어가는 구심이 형성되지 못하는 조건에서 분절화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교차성 담론이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구조적으로 연결된 문제를 다룬다는 감각은 높아지고 있다. 퀴어, 장애, 여성, 계급의 교차성에 대한 인식은 분기를 거듭하며 운동의 폭을 좁히게 될 수도, 그 모든 운동을 모아내는 대중운동의 자리를 만들어 체제에 맞서는 운동으로 나아가게 할 수도 있다. 교차로에서 길을 잃는 대신 교차로를 광장으로 만드는 도전이 필요한 때다.

### 3) 정치적 전망의 부재

#### 반보수 전선과 사회운동의 곤경

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강력한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형성하는 데 이르지지는 못했지만 개별 사안이나 의제들에서 강력한 투쟁이 이어져오기도 했다. 민중을 억압하고 평등에 역행하는 민주당 정부의 성격이 확연해지면서 이라크전쟁 파병 반대 운동,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 한-미 FTA 반대 투쟁 등이 이어졌고 WTO 반대투쟁 등 국제연대도 활발했다. 그러나 사회운동의 연결망은 남아있지만 서로를 결속할 담론이 사라지며 연대는 형식화됐다. 긴급한 현안이 발생하면 기꺼이 모여들지만 수많은 현안이 이어질수록 연대의 힘이 소진되어간다.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하며 연대체는 있지만 전선은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사회운동의 전망도 희미해졌다.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 그 계기가 되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은 'MB 퇴진'을 내건 시민들로부터 시작되었다.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가 이명박을 불러냈지만 80년대의 기업인이 2000년대 이후의 한국 경제를 살릴 수는 없었다. 정권에 대한 지지가 철회되는 국면에서 사회운동은 정권 퇴진 요구의 급진성 자체에 주목하며 달라진 정치 구조에 대한 분석도 없이 '반독재'라는 수사로 자신의 전망을 대체했다. '광우병 촛불'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을 자극하며 형성된 흐름이었다. 그러나 반독재 민주주의 요구와 미국의 경제 침략에 맞서는 반미 투쟁 등의 맥락이 뒤섞이는 동안 '운동권'은 빠지라는 요구도 등장했다. 사회공공성 요구를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개입하려 했지만 이를 반신자유주의 전선으로 만드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그 결과는 민주당에 정치적 성과를 안기는 반보수 전선이었다. 민주당은 용산참사나 희망버스 등 대중의 관심이 모이는 사안이 발생하면 반정부 투사의 위치에 자신을 놓았다.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 노동 문제와 민생의 해결자를 자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추진한 정책에 대한 면죄부 받아가기를 반복했다.

2010년대 들어서며 거버넌스의 지방화가 이루어졌다. 2010년 지방선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폭넓은 선거연합의 결과로 민주당이 우세하는 성적을 얻었다. 2011년 무상급식 논쟁과 보궐선거에서 오세훈의 패배, 박원순의 당선은 민주노동당이 주도한 무상복지 운동이 한 단계 나아간 결과로도 평가됐다. 서울시는 '마을 만들기' 등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의 활동을 서울시 정책으로 포섭하기 시작했고 국회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하면서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 늘어났다. 지역마다 인권조례 제정 추진 흐름도 확산됐다. 제도화와 거버넌스가 지방화되는 흐름은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것처럼 여겨졌다. 민주주의와 풀뿌리의 만남, 신자유주의 폐해를 완화할 대안적 실천이라고 주장되기도 했다. '청년'에 주목하는 청년 거버넌스들은 새로운 운동의 거점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대중적 기반이 이미 약화된 상태에서 사회운동이 민주당 지지체장의 지원이나 의지에 의존하게 되면서 독립성이 침식되는 결과를 낳았고 신자유주의적 통치를 보완하는 정치적 효과만 남겼다. 이 시기 확산된 각종 인권조례는 혐오세력의 먹잇감이 되어 사회운동을 곤혹스럽게 했다. 사회운동이 지역의 기반을 넓혀가는 일은 그 자체로 중요하다. 그러나 사회운동 스스로의 기획과 실력이 아닌 정치적 기회구조에 의존할 때 이는 사회운동을 소진



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

민주당의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적 전망과 분별되는 정치적 전망을 만들지 못한 한계는 촛불 이후 사회운동에 고스란히 돌아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586 정치인'들이 민주주의의 역사를 자신의 기획인 것처럼 왜곡할 때에도, '조국 사태'와 '박원순 사태'가 그 민주주의의 한계를 명백히 드러낼 때에도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고 혼돈을 거듭했다. '문재인을 급진화'하는 이상의 요구를 만들어내지 못한 사회운동은 '촛불의 배신'을 경험한 대중들에게 응답할 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수 양당이 공모하며 자신들의 특권을 강화하는 때 반보수 전선으로 포획되지 않을 사회운동의 도전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 자본주의 체제의 어떤 문제가 '윤석열'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피며 체제전환운동의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

### 독자적 전망을 세우지 못한 진보정당운동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과 2004년 열 명의 국회의원을 탄생시킨 선거 결과는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오래 가지 못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세력이 모여 있던 민주노동당은 '원내 진출'이라는 최소한의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자 이내 분열의 기로에 들어섰다. 서로 다른 정파 간 갈등을 공동의 목표와 합의를 갱신하는 과정으로 만들지 못하고 '패권-종북' 논란이 반복되었다. 이는 사회운동 전체의 정당성을 침식하는 동시에 '종북' 혐오에 일조하는 효과만 남겼다.

진보정당은 민중의 정치적 전망을 만드는 데 실패해왔다. 1980년대 변혁이념과 민중운동의 역사로부터 추진된 진보정당이 현실의 정치 무대에 올라왔을 때 이미 사회는 급변하고 있었다. 민주노동당은 부유세와 무상복지를 내세우며 큰 호응을 얻었지만 민주당이 이내 무상복지 요구를 자신의 것으로 흡수해 반값 등록금 등으로 이어갔다. 노동과 복지의 조건이 달라졌지만 새로운 시대를 이끌 정책을 대중 앞에 제시하지 못했다. 진보정당은 부족한 자원을 사회운동으로부터 빼가고 사회운동은 진보정당을 원내 자원으로만 활용하는 경향도 생겼다. 2007년 대선 이후 분당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자신의 실력을 선거 결과로 증명해야 할 필요가 커진 진보정당들은 점점 더 제도 정치의 논리와 문법을 따라 움직이게 됐다. 반복되는 '야권연대' 주장으로 이념은 더욱 모호해졌다. 2012년 대선에서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후보 등록을 포기하고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중도 사퇴하면서 제도정치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우는 길로 들어섰다.

그러나 진보정당이 제도정치에 경도되었다는 평가는 제한적이다. 사회운동 전체가 변혁의 이념과 전망을 갱신하지 못한 채 반보수 전선에 갇힌 한계의 다른 양상이었을 뿐이다. 반보수 전선을 넘어설 정치력을 갖지 못한 민주노동층에서는 '배타적 지지 방침'이 반복적인 논란이 되는 동안, 정당과 다른 사회운동의 관계가 정치의 주체와 객체로 분할되는 효과만 낳았다. 세력화를 대신하는 선거연합 논의가 사회운동의 정치를 도약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 힘든 이유다.

한편, 2000년 파란을 일으킨 ‘총선시민연대’는 사회운동이 정치를 움직이는 또 다른 흐름을 만들어냈다. 사회운동의 여러 의제를 포괄하는 동시에 낙선운동이라는 전술이 실효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남겼지만 거기까지였다. 경실련이 총선시민연대를 비판하며 시민운동 안에서 분기가 이루어졌고, 이미 다원화된 지형에서 2004년에는 총선시민연대, 총선환경연대, 총선여성연대 등으로 분산되는 등 힘을 모아내기 어려웠다. 정치 개혁을 인물 교체로 대체했다는 평가도 남았으며 ‘정치 개혁’은 선거제도 등을 개혁하는 흐름에 갇혔다. 이후 정책과 공약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는 활동이 반복되고 사회운동 출신 인사들이 사회운동과 괴리된 채 개별적으로 의회에 진출하는 흐름도 이어졌다. 사회운동의 정치적 전망이 정치개혁과 정책실현으로 대체되어갔다.

## 4. 체제전환운동을 만들어가자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는 스스로를 재조직할 능력이 소실될 정도로 체제를 유지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가 위기라는 말을 자본주의 체제가 저절로 붕괴할 것이라는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체제의 위기가 전가되는 방식조차도 체계적이지 못해 더욱 개개인들이 격렬하게 갈등하고 대립하기 쉽다. 체제에 사망 선고가 내려지지 못한 대신 숱한 생명들이 스러지고 있는 지금, 체제전환운동은 위기를 강조하는 것에 자신의 역할을 한정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위기를 함께 겪는 세계를 만들어나가며 위기의 한가운데에서 다른 세계를 탄생시키기 위한 자신의 전망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대면하는 구체적 현실에서 자본주의 체제와 단절하며 다른 원리로 작동하는 체제를 형성할 힘을 만들어가야 한다.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 서로 싸우는 대신 자본주의와 싸울 수 있는 길을 내며 민중의 세력화에 나서야 한다.

### 1) 이념을 갱신하고 급진적 요구를 세우며 체제전환의 전망을 밝히자

대중의 직관과 이미 만나고 있는 ‘체제전환’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를 분석하는 동시에 사회운동이 쌓아온 대안들을 조직하며 새로운 세계의 밑그림을 그려나가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 너머로 나아가려 했던 사회주의 운동의 경험과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좌절은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주요한 참조점이 된다. 우리의 삶과 세계가 재생되기 위한 모든 행위가 자본 축적에 기여하게 되는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으로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철폐는 여전히 대안 체제를 상상하는 기초가 된다. 그러나 이를 위한 역사적 도전들이 생산력 발전을 이행의 관건인 듯 여기며 지구를 파괴하는 데 동참하거나, 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지만 정작 민중이 정치적 주체로 나서며 차별에 맞서 투쟁할 권리는 인정하지 않았던 한계들을 도외시킬 수 없다. 이런 도전

이 부딪친 한계는 앞선 역사가 남긴, 체제전환운동이 자신의 전망을 키우기 위한 출발선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자본 축적을 위한 생산에 사회생태적 재생산을 체계적으로 종속시키며 파괴하는 체제다. 체제전환운동은 이윤에 모든 것을 종속시키는 자본주의 사회를 변혁하여, 사회생태적 재생산을 사회의 중심에 두며 사회적·물질적 필요를 생산할 대안체제를 구축하는 운동이다.

한편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와 단절할 힘을 조직할 전망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체제는 노동력을 상품화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수불가결한 재화와 서비스의 상품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한다. 자본주의의 시초 축적이 전 지구적 수준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동안 산업의 부흥과 쇠퇴는 모두 이윤 축적의 논리에 종속되고 불필요한 소비와 배출이 생태를 지속적으로 파괴한다. 인간과 자연의 모든 생명과 역량을 상품화하여 자본 축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 내재한 속성이다. 자본의 전략을 무산시키기 위한 체제전환운동의 전략을 만들어가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 낸 삶과 세계의 파괴에 대해 자본의 책임을 요구하는 구체적 투쟁의 가능성을 확장해야 한다. 이는 수탈이 시작되는 자리에서 자본의 '프런티어'에 대항하는 전선을 만들고, 자본의 착취가 고도화하는 자리에서 노동의 권리를 요구하는 전선을 만드는 일이다. 노동권 체계의 한계를 부수는 투쟁과 함께 노동의 권리를 새롭게 써나가는 투쟁이 필요하다.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존엄을 박탈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자본에 맞서 노동자의 집합적 이해관계를 구성하고, 차별의 구조를 따라 흐르는 권리 박탈에 맞서고 생태를 위협하는 수탈에 맞서는 전망이 집단의 요구나 이해관계를 넘어서 함께 모일 때 체제전환운동의 전선이 만들어질 수 있다.

동시에, 대안 체제를 조직할 전망이 필요하다. 사회생태적 재생산을 중심으로 조직되는 사회는 상호의존과 돌봄을 물질화하는 인프라가 형성될 때 가능해진다. 생산과 재생산이 이분화/위계화된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재생산의 영역에 한정하여 돌봄서비스를 사회화하는 구상으로는 부족하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변혁하여 필요의 충족과 생태적 한계라는 조건 아래 생산이 계획될 수 있는 전망을 구체화해야 한다. 세계를 돌보기 위한 재화와 서비스가 다른 방식으로 생산/환류될 수 있는 경제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주거, 교육, 의료, 에너지, 교통, 통신 등 필수적인 영역에서 사회공공성을 재조직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공공성이 자본의 이윤 축적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제공이라는 목적에 종속될 때 공공성은 비민주적이고 관료적이며 국가폭력을 동반한다. 그것은 시장적이었으므로 폭력적이었다. 필수 영역의 재화와 서비스가 공공의 소유와 통제 아래 순환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영역별로 만들어갈 탈시장화 전략을 서로 연결하면서 우리의 삶과 세계를 재생시키는 활동이 순환하는 인프라로서 대안체제의 공공성을 만들어가야 한다. '생산'의 현장과 대안적 돌봄/친밀성의 단위들은 이러한 순환이 촉진되고 머무르며 이어지는 자리가 될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와 단절하고 대안 체제를 생성하는 연결 고리로 '돌봄'을 위치시킬 수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은 사회적 자기 실현을 미끄러뜨리고 시간도 우정도 자긍심도 앗아가는 사슬이 된다. 사회적 노동의 의미와 조직 방식이 변형되는 과정 속에서 해방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식

량 생산 노동에 배치된 농사를 땅이 스스로 재생할 수 있도록 거드는,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 식량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 일로 새롭게 사유하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노동이 자본 축적의 수단이기를 멈추고 상호의존의 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조직될 수 있도록 투쟁의 방향을 맞춰가기. 노동과 돌봄의 위계 대신 돌봄-노동의 의미를 새로 쓰는 과정은 돌봄을 특정 집단이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특수한 종류의 노동으로 한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돌봄 제공자와 수혜자라는 구분을 넘어서 새로운 시민성을 발견/발명하는 실마리로 삼자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와 단절하는 투쟁들에서 대안 원리를 형성하며, 사회 체계 내 여러 단위인 직장, 가족, 학교 등을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탈환하여 대안적 구조로 만들, 민중해방의 정치를 그리며 전망을 만들어가자.

## 2) 체제전환을 위한 민중의 세력화에 나서자

존엄과 평등을 향한 역사는 언제나 사회운동을 초과하여 이어져왔다.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된 이후 사회운동이 곤경을 겪으며 고전하는 동안에도 저항의 흐름은 이어져왔다.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안녕들 하십니까’ 물었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나일 수 있었다’며 애도하고 ‘네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하며 체제가 낳은 위기를 함께 겪는 수많은 대중들이 있다. 그러나 사회운동은 각자도생에 내몰린 개인이 홀로 낸 용기에 감동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누군가 조금 덜 용기를 내도 체제전환의 전망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선 자리에서 나아가려면 새로운 시선이 필요하다. 한국 자본주의 체제 변동 속에서 ‘민중’의 모습이 달라졌음을 인식해야 한다. 노동자의 얼굴로 여성을, 농민의 얼굴로 이주노동자를, 빈민의 얼굴로 청년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부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겪으며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더욱 구체적으로 상상할수록 민중의 세력화를 위한 접점이 넓어질 것이다. 민중의 세력화는 단순히 다수를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 형성의 관점에서 적대를 조직하며 집합적 전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노동자가 ‘생산의 주체’라는 것만으로 보편계급의 자긍심을 설명할 수 없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산업의 역군’이나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국가와 자본에 호명되는 것과 동전의 양면이기도 했다. 젠더와 인종을 고려하지 않는 계급 형성은 불가능하다. 더 취약한 노동자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로도 등장하지 못하는 이들로부터 자본 축적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고용관계를 넘어서 우리의 노동과 돌봄이 다양한 관계/계약의 형식으로 다변화되고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자본의 책임을 묻기 위한 투쟁들을 폭넓게, 동시에 급진적으로 만들어갈 때 체제전환이 가능하다. 자본의 힘에 맞설 민중의 재조직화가 체제전환운동의 과제다.

민중의 세력화는 정치적 주체화의 과정이다. 정치적 주체화는 개인의 정치적 각성을 요구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치적 주체가 될 수 있는 조건으로 서로를 조직할 때 가능하다.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를 흔들었던 자발적 개인들의 도전에서 사회운동은 대중의 자발성을 발견하는 데 그치곤 했다. 이러한 흐름은 휘발되기도 쉬웠고 노동조합이나 사회단체의 개입을 반대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운동의 대중성이 여론에 회자되거나 대중 친화적 활동양식과 같은 것으로 협소하게 이해되는 동안 대중을 조직하는 도전은 점점 더 기술적 문제처럼 여겨졌다. 탈권위주의는 평등한 관계로의 조직화가 잇따르지 않으면 정치 냉소로 귀결되기도 한다. 수많은 사회경제적 균열의 자리를 가로지르며 대중을 조직하기 위한 전망을 만들어야 한다. 노동조합, 사회단체, 풀뿌리모임, 정당 등 역사적으로 자리잡아온 조직들은 민중의 세력화를 시작할 거점이 된다. 동시에 기존의 조직형식으로 포괄되지 않는 다양한 흐름들에 운동이 열려 있어야 한다. 체제전환 운동은 대중적 저항의 맥락을 자본의 전략과 동시에 읽어내며 체제전환의 힘으로 축적해가야 한다. 각각의 운동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민중의 세력화를 위한 거점을 만들자.

우리의 조직들이 체제전환운동과 함께 하는 정치의 장소가 되도록 하자. 정치의 장소는 자신이 겪는 문제를 공공의/사회의 문제로 해석해내며 대항을 기획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자리다. 그러한 관계와 결속을 조직 안팎으로 확장해가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해관계의 동일함은 집합적 이해관계의 전제가 아니다. 오히려 서로를 조직하며 집합적 이해관계를 구성할 때 개인의 이해관계도 조직된다. 노동조합의 역사가 그러했다. 사업장 안에서도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갈등하는 ‘근로자’들이 뭉쳐서 싸우기로 마음먹는 순간 ‘노동자’의 요구가 자신의 것이 된다. 체제전환운동과 함께 하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를 이동하고 존재를 변형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자. 여러 조직이 정치의 장소가 되는 만큼 민중의 세력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다양한 이름으로 분류되는 계층이 단순히 모이는 것을 넘어 서로를 가로지르는 역동을 만들어가야 한다. 조직은 특정한 정체성이나 공감대를 통해 모이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 이들이 구체적인 투쟁과 실천을 통해 만나고 부딪치면서 서로를 민중으로 엮어 세우는 과정이 민중의 세력화다. 체제전환운동이 민중이 세력화하는 공간과 장소가 되도록 공동의 투쟁을 벌이며 조직화에 나서자.

### 3) 체제전환운동의 역사를 함께 쓰자

어떤 운동도 저절로, 저홀로 체제전환을 이룰 수 없다. 모든 운동은 자신 안에 체제내화의 계기를 가진다. 동시에 사회운동은 체제의 모순과 부조리를 포착하고 드러내며 변화를 촉구하는 역할을 통해 체제전환의 길을 열 가능성을 지닌다.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적대는 투명하지 않다. 무엇이 더 중요하거나 중심에 있는지 따지는 일은 특정한 운동과 투쟁에 체제전환의 짐을 떠넘기는 일이기도 하다. 대신 어떤 운동에서도 보편적 권리를 창출하며 대안 체제로 나아갈 힘이 생성될 수 있도록 서로 짊어주고 밝혀주는 관계가 필요하다. 저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체제전환운동을 만

들어가려면 사회운동부터 상호의존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세상을 바꿀 집단적 힘을 만들어가는 사회운동의 정치를 시작하자. 다가올 선거 일정들을 계산하며 정치적 사회운동을 하자는 제안이 아니다. 정치는 갈등을 다루며 '우리'를 형성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운동이 가로지르고 수많은 대중이 오가는 자리에서 균열과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동의 전망을 만들어가는 것이 사회운동의 정치다. 분기한 사회운동들이 저마다의 도전을 이어가며 부딪히는 곤경을 외부화하기보다 비판하고 개입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기 위한 공동의 과제로 여기자. 자본주의 체제에 맞설 집단적 힘을 조직할 계급정치의 전망은 특정 운동의 과제로 한정될 수 없다. 논쟁과 갈등을 갱신해가며 사회운동이 품는 경계가 집단을, 지역을, 국경을 넘어 확장될수록 대안체제가 열릴 것이다. 반보수 전선에 우리의 힘을 내어주는 대신 여러 운동이 방향과 호흡을 맞춰가면서 사회운동의 정치를 벌여가자.

체제전환운동을 만들어갈 사회운동 간 연합의 구조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회운동에서 '품앗이 연대'가 종종 비판적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품앗이'가 아니라 품앗이를 하는 '우리'가 확인되지 않는 데 있다. 서로 다른 운동이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나누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익히며 '우리'를 엮어 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체제전환운동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제안은 단지 미래를 향하지 않는다. 각각의 영역마다 운동의 역사를 쓰지만 '사회운동'의 역사를 함께 쓰는 시도는 언젠가부터 사라졌다. 사회운동의 곤경을 함께 돌아보며 서로 넘겨줄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결속의 과정일 것이다. 각각의 운동이 제기하는 통찰을 바탕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를 살피며 우리의 힘을 모을 정세적 계기를 함께 발견해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운동의 대안이 대중 스스로의 정치적 행동을 통해 갱신될 수 있도록 그 계기를 함께 찾아가야 한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시대가 우리에게 안기는 도전은 만만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세계를 만들고 지속시킨 힘은 자본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자. 체제전환운동은 교차로를 광장으로 만들고 노동을 새롭게 조직하며 더욱 너른 세계로 넘쳐흐를 힘을 만들 수 있다. 여러 지역에서, 여러 현장에서, 서로 다른 영역에서, 공동의 인식을 형성하고 갱신해가며 투쟁과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획을 만들어가자. 저마다 다른 운동의 도전이 체제전환의 힘으로 모일 수 있도록 운동 간 상호의존의 관계가 이어질 결속의 형식과 작동 원리를 고민하자.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에서 사회운동의 정치를 확장하며 두터운 사회운동을 만들어갈 가능성을 찾아보자고 제안한다. 자본주의 체제를 전환할 해방의 정치를 사회운동의 전망으로 삼으며 체제전환운동을 만들어가자. 길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 참고 자료

- 01 예란 테르보른. 2022. "세계와 좌파". 뉴레프트리뷰 137호.
- 02 박찬중. 2018. "한국에서 수출주의의 형성과 변형 : '외연적 수출주의'에서 '내포적 수출주의'로." 『지역과 세계』 제42집 제2호, 35-67.
- 03 정준호·이일영. 2022. "두 가지 경제적 분기와 민주화 체제의 위기." 『동향과 전망』 제116호, 70-120.
- 04 김철규. 2020. "세계체계의 변화와 한국의 농식품체계 : 식량체제론을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제10권 제2호, 85-112.
- 05 송인주. 2018. "한국 산업축산의 발전과정 : 구조적 생태문제의 세계사적 연원." 『ECO』 제22권 2호, 225-266.
- 06 김도균 외. 2017. 『자신에게 고용된 사람들-한국의 자영업자 보고서』. 후마니타스.
- 07 전윤정. 2015. "탈상품화·탈가족화 관점에서 본 한국의 일·가족양립정책, 1990~2014 :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와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31권 제3호, 179-218.
- 08 장애여성공감 엮음. 나영정 외. 2020. 『시설사회-시설화된 장소, 저항하는 몸들』. 와온.
- 09 장경섭 저. 박홍경 역. 2023. 『압축적 근대성의 논리』. 문학사상.
- 10 장경섭 저. 박홍경 역. 2023. 『압축적 근대성의 논리』. 문학사상.
- 11 요코타 노부코 저. 요코타 노부코 역. 2020. 『한국 노동시장의 해부-도시 하층과 비정규직 노동의 역사』. 그린비.
- 12 구해근. 2022. 『특권 중산층-한국 중간계층의 분열과 불안』. 창비.
- 13 김도균·양종민. 2023. "자산경제와 정책태도", 『경제와 사회』 제139호, 191-226.
- 14 이즐데 카림 저. 이승희 역. 2019. 『나와 타자들』. 민음사.
- 15 콜린 크라우치 저. 이한 역. 2008. 『포스트 민주주의』. 미지북스.
- 16 박현옥 저. 김택균 역. 2023. 『자본의 무의식』. 천년의상상.
- 17 파울로 제르바우도 저. 남상백 역. 2022. 『거대한 반격』. 다른백년.
- 18 앤서니 아블라스터 저. 조기제 역. 2007. 『서구 자유주의의 융성과 쇠퇴』. 나남.
- 19 유형근. 2022. 『분절된 노동, 변형된 계급: 울산 대공장 노동자의 생애와 노동운동』. 산지니.
- 20 김철식. 2023. "1987년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 노동시장 유연화의 진전과 민주노조운동의 헤게모니 상실". 『사회와 역사』 제137집, 51-88.
- 21 김철식. 2023. "임금중심사회의 위기와 노동운동의 전망".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기본권 학교 강의자료.

# 체제전환운동에서 “지역”을 위치지우기

남영란 | 노동해방 마중  
ymam0509@gmail.com

한 동지로부터 “동지는 체제전환운동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았다. 부산모임을 4차례 함께 했던 동지의 질문에 순간 허를 찔린 듯했다. 즉답하지 못했고 “희망을 걸어보려 한다”고 답했다. 동지는 어떤가에 대해서 미처 묻지 못한 채 헤어진 후, 새삼 함께 하고 있는 조직위원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각각의 운동들에 ‘체제전환’이라는 말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작동시키려 하는지 세심히 살펴보게 된다. 한 동지의 질문이 나에게 번진 파문처럼 포럼이 서로에게 구체적인 운동을 구조적으로 연결시키고, 서로가 일으킨 파문들을 엮어 체제전환이라는 실체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체제전환”은 아직 내용적으로도 운동적으로도 명쾌한 실체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체제전환운동은 자신의 운동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하고, 내 곁에서 따로 또 같이 걸어왔던 운동들을 더 깊게 바라보게 한다. 나의 운동이 너의 운동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착취구조를 직시하게 하고, 대안체제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한다. 이것이 체제전환운동이 갖고 있는 힘이며, 누군가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이유일 것이다. 발제문은 “더 많은 기억과 전망을 불러들일 초대장”으로 이미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토론은 발제문이 제시하고 있는 진단과 과제를 중심으로 사회운동의 전체 흐름이 지역의 변화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지역에서 체제전환운동은 어떤 의미로 조직되었으면 하는지를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 희망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극한 곤경, 그러나...

노동운동이 처한 계급대표성의 부재, 사회운동의 체제내화와 급진화하려는 운동의 부침, 반보수전선의 흐름에 대항할 수 있는 정치적 전망의 부재 등 사회운동이 처한 곤경의 깊이는 체제전환이라는 도전장을 내밀기에는 너무 깊다. 노동운동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필수노동’과 기후위기 대응으로 추진되는 ‘산업전환’을 체제전환으로 나설 기회로 삼고 있지 못하다. 더욱 많은 이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고, 기업의 울타리를 넘는 계급운동으로 고양시키기 위해 더욱 많은 사회



운동과 접속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 힘이 뚜렷이 보이지도 않는다.

노동운동을 포함한 사회운동 전반의 곤경은 지역으로 오면 더욱 확연해진다. 지역 노동운동은 노동조합운동으로 축소되어 있고, 사회운동이 제기하는 급진적 전망이 지역의 노동조합운동 안에서 회자될 가능성보다 제도화된 사회운동과 접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더 크게 열려 있다. 또한 노동조합 상급조직의 지침이 갖는 힘은 생각보다 강력하다. 제도화된 사회운동의 움직임, 거버넌스의 작동은 지역에서 반보수전선으로 위력을 발휘한다.

체제전환운동을 담대하게 그려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자본주의 체제가 야기하고 있는 균열들이 체제전환의 계기로 작동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반차별의 이름으로, 생명과 존엄의 이름으로, 기후정의의 이름으로, 평등과 평화라는 이름으로, 투쟁의 현장에서 자라나는 연대의 이름으로 서로를 연결시켜왔던 운동의 존재 그 자체가 원동력이다. 지역에서도 작지만 꾸준히 이어져왔던 운동들을 체제전환이라는 방향하에서 재조직하고, 자본의 논리가 압도하고 있는 노동운동을 재구축하기 위한 구상을 구체화해야 한다.

### **“지역”에 대해 강조하기**

발제문은 체제전환의 전망을 밝히고, 민중의 세력화에 나서며, 체제전환운동의 역사를 함께 쓰자고 하고 있다. 동의한다. 서로 다른 운동이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나누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익히며 ‘우리’를 엮어 세우는 노력의 필요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바로 그 ‘우리’를 엮어 세우는 운동을 어떻게 펼쳐져야 할까?

각각의 거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민중의 세력화를 위한 거점을 만들자는 것에 동의하면서, “지역운동을 재구축”하는 것을 체제전환운동의 주요한 방향으로 삼자고 제안한다. 체제전환운동의 시작을 지역에서부터 만들어가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각각이 벌여왔던 운동을 더 깊이있게 들여다보고, 교차성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면서 체제전환의 길을 모색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지역운동으로 드러난다. 자본에 맞설 힘으로 민중운동이 재조직되기 위해서는 지역이 자본에 파열구를 내는 거점이 될 때 가능하다. 각각의 운동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민중의 세력화를 위한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의 운동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야 한다. 제도화와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한 반보수전선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지역에서 다른 대안과 구상으로 운동을 만들어 갈 필요는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 체제전환운동을 지역에서도 해나가겠다는 지역에서의 결의를 밝히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운동의 재구축”이 체제전환운동에서 갖는 중요성이 공감을 얻길 바란다.

### **지역을 이렇게 해보자**

각 지역들이 체제전환운동에 시동을 걸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자.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만나

왔던 운동관계를 질적으로 도약시킬 준비를 체제전환이라는 방향하에 시작해보자. 정치권력과 행정권력이 있는 곳을 ‘향한’ 투쟁만큼이나 자본의 착취구조가 발현되는 일터와 삶터를 연결시켜 운동을 실체화하는 곳으로서 “지역”을 조직하는 것은 중요하다. 지역에서 만들어왔던 연대를 재구성할 수 있는 제안, 교차성의 인식을 확장하는 제안으로 체제전환운동을 실물화해나가자. 체제전환의 상상의 나라를 펼칠 다양한 활동들을 세력화의 거점으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체제전환 지역포럼을 전국 곳곳에서 만들어보자.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며 체제전환운동의 밑그림을 그려나가자.

# 현장을 만들어가고 현장을 연결하는 사회운동을 위하여 돌봄과 인권을 고민하며

류은숙 | 인권연구소 '창'

체제전환이란 이름하에 나를 비롯한 사람들이 왜 모일까를 우선 생각해봤다. 각각의 칸막이로 나뉘어 그 안에 갇혀온 운동에 갑갑함을 느꼈고, 되풀이되는 관행에 지쳤고, 이에 운동 내의 협의와 조정, 공유하는 목적을 향한 결집이 필요하다고 여겨서일 것이다. 다른 방향으로의 물꼬를 트기 위해 우리(사회운동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의 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 이 포럼의 우선 목표라 생각한다.

## 총평: 평가가 제대로 됐는가?

논의의 시작점에 있는지라 방향·전략·방법은 아직 무르익지 않은 단계라는 걸 감안하고 발제문을 읽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와 분석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필요하다. 여러 분야에 걸친 진단은 '못했다', '안됐다'로 이어지는데 '왜'라는 의문이 없다. '가능한 다른 경로가 없었나?' '그게 최선이었나?'라는 질문이 필요하다. 이런 질문이 평가의 지점이 돼야 당대의 '입장 차이'가 등장하는 것이고, 그 차이를 확인해야 앞으로의 방향성이 잡히고 최소 합의(기본 입장, 방침, 규범, 전략 등)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평가와 대안은 유기적 관계에 있다. '못했다'와 '잘하자'의 반복인 루프에 갇힌 느낌이다. 이상향으로서의 체제 전환이 아니라 장단기 비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드러난다. '무엇부터 어떻게 하자'란 논의를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과 결핍된 것, 내외적 도전 요소가 무엇인지 자문해야 한다. '민중'이라 호명하든 '대중'이라 호명하든 각자도생의 상황에서 불만표출의 방식이 혐오 또는 투표뿐인 상황이다. 여기에 새로운 물꼬를 트는 게 운동이라면 '저거라면 같이 해볼 만하다'라는 제안이 필요하다. 보수 양당과 반독재, 반보수 전선을 비판하는 것은 더 이상 '정치적'이지 않다. 체제전환이 선언의 수준을 넘으려면 세부적인 의제가 나와야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가부터 잘해야 하지 않을까?

## “사회운동의 대응과 곤경”

사회운동의 주체/주어가 누구인지가 궁금하다. 각주3에서 사회운동의 범위를 밝히고 있지만, 지나치게 폭넓다. 범위가 어떠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범위를 정하고 사회운동 돌아보기를 하고 있는 위치에 ‘누가’ 있는 것인지가 궁금하다. 사회운동에 대한 개념과 범위 정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분석하고 있는 주체는 자신을 무엇이라 규정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 - 제도화 요구, 운동의 힘 소진, 선택적 제도화, 체제내화와 흡수, 전문가와 피해자가 운동을 대표, 전문가에 의탁되는 흐름

발제문 전체를 통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여겨진다. 대중은 뒤로 빠지고 지지자나 판단자, 후원자에 그치는 운동에서의 괴리 현상을 진단한 부분인데, 더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서 총평에서 말했듯이,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한다. 여기서 비판하는 전문가란 어떤 전문가이며 피해자란 어떤 피해자인가? 문제가 된 대표성은 어떤 성격의 무엇인가? 신자유주의로의 체제 전환을 보완하는 데 기여했을 뿐인 제도화는 어떤 제도화인가? 이에 대한 사회운동 내 입장 차이는 무엇인가?

### - “현재의 사회운동은 논쟁을 조직하기보다 서로 외부화하는 비판에 익숙하다”

이 문장에 대한 사례로 ‘터프’와 정규직 노조의 능력주의가 나오는데 과연 적절한 사례인가? 사회운동이 조직하지 못한 논쟁은 어떤 것이 있나? 무엇을 어떤 식으로 ‘외부화’했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그리고 결론은 교차성에 대한 인식 강화로 이어지는데, “교차로에서 길을 잃는 대신 교차로를 광장으로 만드는 도전이 필요한 때”라는 결론이 허무하다. 수사적으로는 훌륭하지만 말이다.

### - 민중의 세력화

어느 때부터 사회운동에서 사라지다시피 한 ‘민중’이란 단어가 발제문에 다시 등장했다. ‘을’, ‘동료시민’ 등 호명의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다. 어떤 호명이든 간에 개인이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그 호명을 의식할 것은 같은데 지금은 모두가 1인 기업가식 개인이 돼버린 조건들 속에서 이 호명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속할 곳,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존재, 이것이 핵심과제인 것 같다.

## 지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사회운동이 민주당 지지체장의 지원이나 의지에 의존하게 되면서 독립성이 침식되는...사회운동 스스로의 기획과 실력이 아닌 정치적 기회구조에 의존할 때 이는 사회운동을 소진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

농업 관련 얘기가 잠깐 나올 뿐, 전반적으로 발제문에서는 비수도권 지역, 농어촌 지역의 공백

이 크다. 특히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대표 사례로 언급한 이러한 진단은 철저하게 서울 및 대도시 중심이다. 소위 ‘지방소멸’로 논의되는 상황 속에서, 정주 조건의 쇠락과 파괴 속에 도시의 부산물(쓰레기 등)을 떠안는 지역에서 민관, 사회운동과 지역정치세력과의 관계는 단순하지가 않다. 물론 지역마다 모두 서로 다르기도 하다. 같이 두손두발 다 맞춰가며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일궈 가는 곳도 있고, 서로 등지고 있는 곳도 있다. ‘지역사회’라는 것은 주소지나 지명이 아니라 운동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지역에 대한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돌봄’, 말의 성찬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 **- “주요한 원리로 ‘돌봄’을 위치시킬 수 있다”**

다분히 ‘선언’으로 읽혔다. 발제문에서 논한 대로 돌봄이 “주요한 원리”이자 “새로운 시민성을 발견/발명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 경쟁하고 공정을 따지는 삶보다 돌봄에 상호의존하고 서로돌보는 삶이 더 나은 시스템이란 걸 보여줄 수 있을까? 돌봄은 질곡이고 고통으로 회자되며, 심지어 “돌봄 위험”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 형국인데, 사회운동은 돌봄을 얼마나 사유하고 실천하며 이런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일까?

### **- “재가급여 우선 원칙은 취지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결국 노인돌봄에서 가족의 역할이 다시 강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너무 서두른 결론이다. 지역사회통합돌봄, 돌봄에서 취약한 노인 상당수가 1인 가구로 가족과의 접촉 없는 현실, AIP(살던 곳에서 여생을) 강화, 방문 요양 강화 등을 같이 고려해야 하는데 ‘재가나 시설이냐’는 이분법적 선택밖에 존재하지 않는 점을 더 지적해야 한다.

### **- “돌봄서비스 시장이 확장되면서 한국 국적 여성과 이주여성 간 갈등 구조가 형성되는 맥락” 돌봄노동의 맥락에서 ‘갈등 구조’라는 용어가 의아하다.**

### **- ‘돌봄과 인권’**

인권연구소 ‘창’에서 코로나19 이래 주목해온 주제다. 3년여는 그냥 공부를 했고, 그 결과물이 2022년 12월 출간한 『돌봄과 인권』이다. 밑자료가 생겼기에 그것을 매개로 사람들을 만났다. 전국 10여개 지역에서 돌봄 토크쇼를 열었고, 일본 오사카의 돌봄현장 방문연구를 했고, 돌봄위크샵과 인터뷰 등으로 돌봄전문가 50여명을 면담했다. 그 외 돌봄강좌 등으로 만난 사람들은 더 많다.

그런 만남을 통해 배운 핵심은 첫째, 답은 현장에 있다는 점, 둘째, 지역사회, 공동체, 현장, 그 무엇이라 부르는 그것은 발명하고 창조해 가는 것이란 점, 셋째, 운동은 다양한 현장간의 연결자이자 지향점을 향한 큰 그림을 그리는 기획자이자 돌봄의 동심원을 역동적으로 오가는 실천가라는 점이다.

그리고 가장 부족하다고 느낀 점은 돌봄을 대안적 가치이자 시민적 실천 원리로 삼는다는 ‘선언’들과 달리 돌봄에 대한 이해의 결핍과 양상함이었다. 돌봄에 대한 가치절하와 무시는 사회운동 관련자에게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돌봄에 관심을 가진다 하더라도 단편적으로 ‘노동’ 사안으로만 여기거나 ‘(심각한) 인권’ 문제로만 여기는 등의 태도가 지배적이다. 전체 생태계 속에서 돌봄의 요소와 가치를 연결할 줄 아는 ‘사회적 역량’이 절실하다.

개별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의 돌봄과 목적의식적으로 조직화한 돌봄간의 관계는 동떨어있지 않았다. 서로의 ‘몸’(출발점이 되는 현장)을 향해 몸을 기울이기, 돌봄의 제도화를 위한 기초 데이터 생산, 돌봄의 언어 만들기, 실천규범과 매뉴얼 제작, 당장의 성과보다 조직화사업에 공력을 쏟기 등 많은 구체적인 실천을 배울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얘기는 올해 새로운 책으로 풀어낼 계획이다.

# 어려워도 없는 길은 아닌 빈곤에 맞서 체제전환

김윤영 | 빈곤사회연대

체제전환운동 포럼 신청이 조기에 마감되었다. 이 자리가 다 채워질까 전전긍긍했던 주최 측의 소심증이 무색해졌다. '체제전환'이라는 분명하지만 아직은 빈틈이 많은 문제의식을 내세운 포럼에 이렇게 많은 관심이 쏟아진 배경엔 한국사회의 답답한 정치상황이 한 몫 할 것 같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포럼을 준비하며 주거권과 가족구성권을 고민하는 여러 활동가들이 4주치의 세미나를 진행했다. 도시사회운동의 쟁점과 한국 사회 주택의 역사, 소수자 주거권, 세계 각지의 공공성 투쟁을 훑어보며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실과 이에 도전했던 시도를 읽었다. 약한 사람들의 연대가 현실을 바꿀 만큼 강한 힘을 발휘한 역사적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다.

활동을 하다보면 우리의 요구나 주장을 현실 가능한 수준에 맞추게 되는 일이 많다.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쳐야 계속 해나갈 힘을 얻는 것도 명백하지만, 법과 제도를 바꾸는 쪽으로만 비대한 운동은 방향을 잃기도 쉽다. 이 미세한 줄타기 속에서 몇 가지 제도화된 권리를 넘어 운동은 더 멀리 멀리 가야 한다는 것을 논의하거나 확인할 기회는 자주 없었다. 이번 포럼에서 체제전환을 향한 새로운 구호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잠시 받기도 했던 것 같은데, 발제문을 읽으니 그보다는 '역사 속에서 이어져 왔고, 갱신되기를 기다'리는 운동에 활기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서로 조직하는게 더 중요한 순간인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됐다. 어차피 새로운 구호야 좋아 보이기만 하면 금방 '저쪽'에 빼앗기기 일쑤지 않았다.

빈곤은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이 고여 드는 장소다. 가난한 이들은 이 체제의 모순을 자신의 삶과 몸으로 이고 산다. 체제를 전환하는 반빈곤 운동, 빈곤에 맞선 체제전환 운동을 기대하며 반빈곤운동의 걸어온 바와 나아갈 바에 대해 적는다.

## 1) 반빈곤 운동의 문제의식과 과제

IMF이후 김대중 정부는 '생산적 복지'를 정권의 주요 캐치프레이즈로 삼았다. 이에 대한 해석

은 진영에 따라 나뉘었다. 보수 진영에서는 복지병을 들먹이며 복지제도의 확대 자체를 문제 삼았고, 일각의 시민단체들은 복지의 확대 자체에 대한 환영과 기대를 강조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은 정부가 마치 시민사회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듯한 인상을 이끌어 냈고, 정부의 사회정책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의 전선은 사라졌다. 각 지역과 현장에 발붙이고 있던 주민운동과 실업운동의 여러 영역은 사회복지관이나 일자리 상담센터로 제도화되었다.

민중운동 내지는 좌파 운동은 김대중정부의 생산적복지가 신자유주의 노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제정 이후 곧바로 한계에 부딪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 운동을 시민단체와 함께 했다. 다만 일반적으로 좌파 진영은 사회보장제도는 계급 역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장기적 전망이 아닌 개별 제도나 긴급한 생활상의 요구 수준의 문제를 정치화하는 경험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빈곤운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곤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하되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체념하지 않는 자세’를 지향하며 시작됐다. 노동빈곤층을 비롯해 IMF이후 드러난 이른바 ‘신빈곤’의 발생도 주된 배경이었다. 반빈곤 사회운동은 가난에 빠진 이후에야 나누어지는 개별적 복지제도의 확대가 아니라 구조적 빈곤을 종식시키기 위한 가난한 이들의 연대를 목표로 한다. 민중복지연대를 비롯해 실업, 장애, 홈리스, 노점, 주거권 및 철거민 운동에 걸친 여러 단체와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2004년 빈곤사회연대가 발족했다. 빈곤사회연대는 노동권, 기본생활권,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라는 세 가지 주요 활동을 통해 빈곤에 맞선 사회연대를 꾸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

발족 직후 빈곤사회연대는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인상 투쟁과 사회서비스 민영화 저지와 같은 의제를 결합하며 연대운동을 꾸렸다. 이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중심으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 강제철거 반대, 공공임대주택 확대, 사회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한편으로 철거민, 노점상과 같은 전통적 빈민운동과 함께 하며 주거생존권 의제를 반빈곤 운동의 틀로 담아내려는 노력을 지속했다.

이 활동의 대부분은 개별 사례를 지원하거나 정치화해 새로운 복지제도나 사회정책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일상에서 반복되었다. 새로운 제도나 정책을 만드는데 실패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부당한 일에 처한 사람과 함께 싸움으로써 체제에 저항한다는 목표를 갖는다. 이런 활동들은 몇몇 분야는 제도화되기도 하였다. 이를테면 금융, 주거, 복지 상담센터와 같이 반빈곤 운동에 곳곳에서 진행하던 상담활동을 대신할 지자체·정부의 상담센터가 도입되었고, 민관협력 기관들이 등장했다. 물론 이 기관들이 운동을 대체하지는 않는다. 활동이 프로그램이 될 때 기존 정책에 도전할 역량, 의식을 보존하기는 쉽지 않다.

노점상, 철거민 등 빈민대중조직은 탄압이 있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그러나 일상적인 탄압과 장기적인 과제를 통합적으로 설명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 틀은 다소 과거의 것이다. ‘민중생



존권 쟁취'라는 구호가 담지한 핵심적인 진실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현 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좀 더 예리한 진단과 지향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 2) 2024년 한국의 빈곤 현실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생활고로 인한 죽음으로 드러나듯 빈곤 문제 또한 심각하다. 소득 상위 20%가 전체 소득의 43.9%를 차지하고, 하위 20%는 4%를 차지한다. 자산의 경우 상위 20%가 62.3%를 차지<sup>01</sup>한다. 변화 역시 빠르다. 우리나라 소득 최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7%로 2007년부터 2021년까지 3.3% 증가했다. 이는 오이시디 30개국 중 두 번째로 빠른 속도다.<sup>02</sup>

빈곤은 개별 사회가 빚어낸 구성물이다. 한국의 불평등이 금융위기나 코로나19와 같은 위기를 겪을 때마다 심화 된다는 점이 그렇고, 서울의 집값이 오를 때마다 자산 격차가 커진다는 사실이 그렇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심각한 이유는 노동소득이 없는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부족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부실하니 사람들은 오르는 집값으로 노후소득을 보충하거나, 월세 받는 미래로 생존을 준비한다. 여기에 투여되는 돈은 단지 집을 구입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의 몫이 아니다. 세입자들도 보증금과 월세로 건물주의 집값과 신용을 함께 떠받친다. 최근 집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계 순자산의 74.6%가 부동산에 쏠려있다.<sup>03</sup>

한국 빈곤문제의 특징은 심각한 소득, 자산 격차와 더불어 이것으로만 드러나지 않는 사회경제적 위기에 이른다. 사회보장을 가족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일로 치부하는 사회에서 빈곤은 가족 살해 후 자살, 동반자살로 모습을 드러낸다. 역시 가족과 여성의 무급노동에 떠넘겨온 돌봄은 시장화 되어 여성과 이주민을 저렴한 노동력으로 활용하거나, 이를 구입할 수 없는 가족들을 동반 위기에 빠뜨린다.

팽배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적 다수는 소득 자산 상위계층이다. 주식장이 폭락하면 정부가 손실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믿느냐는 질문에 소득과 계층 상위자일수록 '그렇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청년계층으로 대상으로 한 조사<sup>04</sup>는 계층에 따라 자신의 이해를 사회의 이해와 합치하는 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감세와 주택 가격 상승은 공리로, 빈곤층의 복지제도 수령은 사익으로 이해하는 사회, 빈곤을 개인의 실패로 보는 사회에서 가난한 이들은 대표성의 위기를 함께 겪는다.

사회보장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시장이 만들어내는 불평등 자체를 교정할 목표와 역량은 없다. 가처분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2012년 18.3%에서 2022년 14.9%로 꾸준히 낮아져왔지만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율은 2012년 19%에서 2020년 21.7%, 2022년 20.2%<sup>05</sup>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상속세 면제를 비롯한 부자 감세, 실업급여 개악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해체는 대통령이 연일 외치는 '약자 복지'의 진의가 '약자'를 더 많이 만들어내겠다는 뜻이었나 의심케 한다.

빈곤은 다양한 문제의 심도를 증폭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가난한 이들의 상황은 온정적인 이유에서든, 자본주의 하 빈곤이라는 '예외상태'의 측면에서든 조명받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취약함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취약을 구조화하는 사회를 바꿀 힘이다.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안적 체제를 요구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지난 20여년 변화가 한국에 남긴 것은 끊임없는 경쟁, 패배자에 대한 낙인, 단지 생존하기 위해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사회다.

### 3) 반빈곤운동이 만들어 나가야 할 전선

노동 유연화, 금융화, 부족한 사회안전망과 경쟁적 체제는 모든 사회적 리스크를 개인의 삶에 떠넘겼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경쟁적 체제를 내면화한 한편 개인의 삶에 떠넘겨진 불안정성에 허덕이고, 사회적 연대를 추구하기에 피로하다. 신뢰할만한 사회 경험은 부족하다. 이제 우리의 시작점은 신자유주의에 맞선 싸움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결과에 맞선 싸움이다.

#### ① 내나라 공공임대, 빼지마 공공의 땅, 지키자 세입자 권리

집 문제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생각은 공히 퍼져있다. 부동산 문제는 정권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이슈지만 보수 양당은 소수의 일탈을 바로 잡고 실구매자를 활성화하면 되는 문제로, 혹은 다주택자의 도덕심에 대한 훈계를 반복했다. 민간 중심 주택 공급 방식을 바로잡거나 세입자 정책을 강화하는데 관심이 없다는 점에서 보수양당은 문제 해결 능력과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주들의 이해관계자에 가깝다. 앞서 주거권 세션을 통해 논의했듯 한국 사회 주택의 문제는 개인들의 이기심의 발호가 아니라 사회가 아니라 민간과 개인을 통한 주택 공급의 역사,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대신 개개인이 알아서 '월세 받는 미래'를 준비하도록 사회가 조직된 결과로 보아야 한다. 우리가 현재 마주한 것은 그 결과다. 집을 사이에 두고 전 시민의 이해관계가 산산조각 나있는, 개인의 수준에서 합리적 선택을 추구할수록 사회 전체로는 비합리적 결과를 낳는, 초과이익 욕망에만 응답하는 완전 철거형 재개발이 반복될 때마다 마을이 사라지는, 도시 공간이 계급적으로 재편되는 현실 말이다. 명실공히 집은 한국사회에서 불평등을 확대하는 경로이자, 가난한 이들이 가난을 더욱 가혹하게 경험하도록 만드는 장소가 되고 있다. 주택의 금융화가 한국에서는 전세사기 문제로 불거졌다. 이는 집에서 이익이 발생할 땐 소유주에게 독점되지만, 위기가 발생하면 세입자에게 전가되도록 구조화되어 있는 한국사회의 면면을 담고 있다.

꾸준한 주택 공급에도 한국의 자가 점유율은 60%를 넘지 않지만 60%의 국민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 역시 엄연한 현실이다. 세입자들은 주택을 구매하지 않고 주거안정성을 얻을 수 없으며, 집을 둘러싼 정치는 오로지 소유를 둘러싸고 일어난다. 집 문제에 관한한 일망타진할 정책이 없다는 것이 명백한데 운동은 무엇을 제안할 수 있을까?

어려운 길이지만 세상에 없는 길은 아니다. 결국 집을 둘러싼 사회 계약을 변화시킬 힘은 현재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 ‘오르는 집값으로 노후 소득을 보충한다’는 주택에 대한 원 경험은 실제 새로운 실권이 그 자리를 대체할 때 사라질 수 있다. ‘빚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집’, ‘세입자로 살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집’, ‘세입자에게도 결정권을 보장하는 도시 계획’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지렛대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노동소득을 빨아들이는 집, 가족을 단위로 격차를 확대하는 집, 부채를 강요하는 집을 거부할 역량을 조직하자. 내나라 공공임대, 빼지마 공공의 땅, 지키자 세입자 권리로 응축되는 주거 공공성, 주거권에 관한 요구는 이를 위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

## ② 사회공공성 강화를 통한 보편적 기본권 확대

‘약자 복지’를 외치는 윤석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비를 인상시켰다고 생색내지만 실업급여 개악, 노동시간 증가,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삭감, 공공기관 자산 매각, 에너지요금 인상과 같은 행보로 성장기 확립해온 작은 사회 협약마저 후퇴시키고 있다.

사회공공성은 사회구성원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사회 응집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다. 공공 도서관이 문을 닫고, 공립학교가 붕괴하고, 버스 배차시간이 길어지고, 가난한 지역의 공원이 사라지거나 노후 된 채 방치되면 사람들은 서로 만나고, 공통의 경험을 쌓거나 교류할 기회를 잃는다. 부유한 사람들이 기후 위기에 대비해 자신만의 벙커를 만드는 동안 가난한 이들이 각자의 열악한 사정을 감당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무너지는 사회 공공성을 방어하고, 사적/소비적 영역으로 침식된 보편적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한 공공성 강화는 단지 ‘공공의 소유’를 넘어 ‘공적 통제’에 관한 것이다. 단기적 이익이 장기적 생존을 압살하는 사회에서 ‘공적 통제’를 통해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너무나 모호한 말일 수 있다. 그 의미를 실제 채우기 위해서는 수많은 질문과 실천을 반복해야 할 수 밖에 없다. 마을, 지역, 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층위의 공간에서 이를 실천·통제하는 경험을 쌓아가야 한다. 공공의 영역에서 자리를 빼앗긴 이들의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개방적인 지역 사회를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 충분히 저렴하거나 무상으로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보장받기 위한 행동을 조직하자.

## ③ 여성, 이주민, 기후정의 운동과의 강한 결합

경제적인 박탈만으로는 현실의 다양한 모순, 차별과 좌절, 이로 인한 개인들의 깊은 내상을 이해할 수 없다. 빈곤은 단지 경제적 위기로 오는 것이 아니며 빈민들의 정치적 행동 역시 반드시 빈곤 문제 아래서만 발호하지 않는다. 빈곤은 인종, 성별, 가부장제를 비롯한 제도화된 차별, 금융적이고 국제적인 수탈 질서와 유기적으로 결합한다. 경제적 위기가 정체성의 위기로, 정체성의 위기가 사회경제적 위기로 돌아오는 회전문이 곳곳에 존재한다. 이 유기적인 수탈을 제대로 해석하고,

운동 역시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체제를 문제 삼지 못할 때 사람들은 서로를 공격한다. 공동의 경제적 전망을 만드는데 실패한 곳에서 인종과 계급, 종교와 같은 개인들의 차이는 연합이 아니라 갈등, 반목의 근거가 된다. 시장주의적 해법이 아니라 보편적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페미니즘, 기후정의, 국제적 관점에서 이주와 빈곤문제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결합해 나가야 한다. 여성, 이주민의 기본권, 평화,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 운동과 반빈곤운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의 실천 목록을 늘려가는 것은 이를 위한 당면한 과제다.

#### ④ 가난한 이들의 요구와 실천으로 ‘대안적 체제’에 대한 상상력을

위기의 징후는 중심부보다 주변부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 역시 주변부에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운동은 그런 점에서 한국의 가족문제에 대한 징후적 투쟁이었다. 가난 때문에 가족을 유지할 수 없는 이들에게 짐 지워진 ‘부양 의무’라는 그 렷듯한 규범을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로 제기하고, 폐지의 방향을 이끌어냈다. 나는 가족의 짐이 아니다, 가난한 가족이 살 수 있어야 모든 가족이 살 수 있다는 구호는 가난한 이들에게 먼저 왔던 한국 가족 위기를 담고 있다.

강제되거나 생존을 위한 자조적 투쟁에는 저항적, 공동체적 문제의식이 담기기 마련이다. 이를 복지 담론에 가두지 않고 나아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 노점상, 철거민, 장애인, 홈리스가 겪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투쟁을 끊임없이 해나가고, 이를 반빈곤 연대운동으로 확장해나가는 것은 이를 위한 초석이다.

## 4) 나아가며

“말하자면 좌파는 세계시장에서 자본주의적 가치법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도 그 대안도 만들어내야 한다. 또, 협동적 노동자가 무엇을 어떻게 생산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놓고 민주적이고 집단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하는 능력도 길러야 한다. 이때 과연 좌파에게 이 두 가지 과제를 융합할 능력이 있는가가 딜레마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반자본주의 대안운동을 더 큰 틀에서 이해하지 못하게 방해한 핵심적인 변증법적 긴장관계다.”

- <반란의 도시>, 데이비드하비, 2018

이번 포럼에서 각 영역의 의제에 대해서 다뤘지만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할 기회가 없었다. 지금 현재 운동에 가장 부족한 것은 연합의 장소다.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로 가는 과정에서 이 의문에 대해 토론하고 실천 방향을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전통적 도시빈민운동이 철거민, 노점상과 같이 특정 주체로 대변되었던 것과 달리 반빈곤운동

은 빈곤에 맞선 사회적 연대를 구축한다는데 목표가 있다. 그러나 지난 20년 반빈곤 운동을 돌아볼 때 반빈곤운동의 전선보다는 수급자, 홈리스, 장애인과 같은 새로운 목록의 주체가 등장한 것으로 반빈곤운동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넘어 각 운동을 반빈곤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함께 투쟁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노동조합에게 주거권 운동은 어떤 목표와 투쟁을 통해 가능한가? 기후위기 문제에서 반빈곤은 단지 주거취약계층의 문제를 넘어 어떤 의미인가?

신자유주의 금융화가 초래한 파국과 위기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고통 분담을 강요하는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부양책이나 금리 대책, 대출 확대정책을 내세우지만, 이로 인해 빈곤으로 가는 길이 더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은폐하고 있다. 각자의 절망 속에 사는 사회를 끝내기 위해 '체제전환'은 가슴 뛰는 구호인 동시에 세상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인식의 틀이 되어야 한다.

## 참고 자료

- 01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23
- 02 세계불평등연구소, <한국 소득 불평등 OECD 2번째로 빠르다>(2023.4.19.), 한겨레 재인용  
[https://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1087168.html](https://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1087168.html)
- 03 한국은행·통계청, 국민대차대조표, 2023
- 04 경향신문, <자본주의가 낳은 세대 - 밀레니얼(MZ)에게 돈과 투자를 묻다>, 2020,  
[https://news.khan.co.kr/kh\\_storytelling/2020/2030-invest-report-2/index.html](https://news.khan.co.kr/kh_storytelling/2020/2030-invest-report-2/index.html)
- 05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23

# 삶의 고통을 함께 정치화하는 체제전환운동을 위해

몽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canicular67@gmail.com

“우리의 조직들이 체제전환운동과 함께 하는 정치의 장소가 되도록 하자.”

연합 혹은 연대, 구조나 장소 혹은 거점 등 무엇이든 부르든 체제전환운동을 만들어갈 사회운동 간의 연결을 더 구체적으로 형성해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 동의한다. 이와 더불어 각 운동이 스스로의 이념과 지향을 체제전환의 관점에서 제시하고 갱신하면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체제전환운동의 주체로 세우려는 시도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더 깊게 공감하게 된다. 체제전환운동포럼이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을 비롯해 모두에게 그 출발점이었을 것이다.

차별금지법제정운동에서 체제전환을 운동의 이념과 지향으로 삼는다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반차별 운동의 역사적 토대 위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인 한편, ‘뿔이 중한디’에 대한 운동 내외부의 긴장을 가시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제정운동이 본격화된 200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회적 합의’를 내세운 제도정치의 차별금지·평등에 대한 왜곡과 방치는 지속되고 있고, 가장 강력한 대중적 지지를 모았던 21대 국회 이후 다시금 제정운동이 입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또한 크다.

체제전환의 전망을 함께 그릴 역할과 책임은 제정운동 스스로에게도 있지만, 한국사회에서 차별금지법과 제정운동에 걸고 있는 사회적 기대와 요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 ‘뿔이 중한디’를 둘러싼 역동은 다채로워질 수 있다. 체제전환운동의 세력화 역시 마찬가지로 아닐까. 체제가 무너뜨리는 삶의 파국 경로를 바로잡고 새로운 정치적 전망을 만들기 위해 사회운동이 서로에게 어떤 ‘성찰적 압력’을 가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압력을 적대가 아닌 자원으로 삼는 연합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가 체제전환운동의 핵심적인 조건이자 역량이라는 문제의식에서 토론하

\* 차별금지법제정운동과 체제전환의 연결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 글을 참고하면 좋겠다. 2022년 46일의 농성 및 단식투쟁을 마친 직후, 차별금지법 제정에 이르지 못했다는 현실이 차별과 불평등에 도전해온 사람들의 열망과 15년의 시간을 실패로 규정하게 둘 수 없다는 절박함에 썼다. 몽, 「다시, 모두를 위한 평등: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시작과 현재」, 『문화/과학』 112호, 2022.

고자 한다. 이는 ‘사회운동부터 상호의존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문제의식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 1. 체제변혁 전망에서 ‘인권’의 자리

발제문에서는 ‘보편적 권리’를 제기했던 역사적 투쟁들의 중요성과 이것이 온전히 확보되기 어려웠던 시대적 조건을 짚으면서도, ‘인권’이 주요한 담론틀이자 현장으로 등장하지는 않는다(다르게 보면 인권이 모든 곳에 있기도 하다). 우리에게도 ‘인권의 제도화’는 이미 오래전의 현실로 느껴지고, 자유주의적 제도와 질서에 포섭된 인권의 상징으로서 ‘권리의 목록’이라는 말에 대한 문제의식도 새롭지 않을 것 같다. 아마도 페미니즘 운동이 ‘여성운동’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인권 역시 ‘인권운동’이라는 하나의 영역이나 부문이라는 인식으로 대체되는 경향에 따른 것일 테다. 하지만 체제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 시기에 인권은 어떤 의미인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인권/운동은 왜, 어떻게 급진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하는지, 지금의 한계나 돌파해야 할 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숙고하는 것은 또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평등권은 전통적으로 인권을 구성하는 핵심이고, 차별금지법이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평등’이다. 이는 차별을 금지·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증진’(promotion)의 방향을 규범화하는 역할을 포함하고 있다. 제정운동도 차별금지법이 간혀 있는 사회적 지형, 즉 차별금지법이 ‘평등사회’라는 이상과 풍부하게 연결되지 못한 현재를 변화시키기 위해 ‘평등’과 ‘존엄’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전면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막막하고 어려운 도전이기도 하다.

‘사회의 모든 집단들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라는 표현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전통적인 차별·평등 판단이 ‘차별받는 집단’과 ‘상대 집단’을 구분·비교하고 동일한 대우를 하는 것을 ‘평등’으로 전제하는 구조적인 한계에 놓여 있다. 이러한 한계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종교의 자유 및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보수개신교), 적극적 조치가 역차별이라거나(남성 집단), 재산권 및 자율경영권을 침해한다거나(재계),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자유를 제약한다는(윤석열 정부) 주장을 통해 집단 간 대립·갈등 구도가 강화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발제문에서 반복해서 분석하고 있는 권리의 대립, 적대의 구조, 혐오의 확산 등의 이면이고, 사회 전반에 반동성애·반페미니즘·반노동·반인종 정서를 추동하는 데에도 결정적이다. 평등이 놓인 이러한 지형은 구조적 차별을 인식할 것을 요구하거나 보다 사회변혁적인 평등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중적 거부감이나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 차별금지법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거나(기본법이기에 때문에 강제력이 크지 않다) 수 세적으로 말하게 되는(성소수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상황은 제정운동에 함께 했던 많은 활동가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인권, 평등, 특히 '존엄'의 의미를 더 적극적으로 그려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구의 남김 없는 사용이 목표가 되고 사람들을 일회용으로 만드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확산되고 전쟁이 지속되는 불황을 타개할 전략이 되고 도시 경제가 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며 불평등과 부정을 세탁하는 지금, '우리도 인간이다'라는 구호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을 바꿔내야 하는 과제가 더 절박하게 다가온다. 대안 체제를 생성하는 연결 고리가 '돌봄'이 될 수 있다면, '상호의존성'이 인간의 약점이 아니라 대안 체제를 꿈꾸는 이들의 기반이라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존엄'을 다시금 급진적인 사회적 약속으로서 등장시킬 필요를 느낀다. 그럴 때 보편적인 가치로서의 평등도, 보편적인 권리로서의 인권도 많은 이들의 저항과 희생해 만들고자 했던 전환된 세계에 자리할 수 있을 듯하다.

## 2. 변혁적인 계급 정치의 길

자본주의의 파괴력이 한도 없이 펼쳐지고 전세계적인 위기감이 고조될수록 '진보'를 구성했던 운동에 대한 평가도 함께 펼쳐진다. 사회운동이 '논쟁을 조직하기보다 서로를 외부화하는 비판에 익숙하다'는 말에 바로 내가 속해있었던 역사의 여러 장면들이 떠오르기도 한다. 개입하는 운동, 공동의 과제를 만드는 운동, 집합적 전망을 공유하는 힘으로서 대중운동... 체제에 맞서는 운동이 이러한 모습의 운동이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모든 것이 자본축적의 도구로 전략하고 있는 때, 불평등에 대한 도전과 계급 형성을 우회하지 않는 정치를 만들자는 제안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삶을 '피해자'에서 다른 곳으로 나아가게 하고픈 모든 이들에게 절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체제전환운동과 함께 하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를 이동하고 존재를 변형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자. ... 조직은 특정한 정체성이나 공감대를 통해 모이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 이 문장을 보며 사회운동의 일원으로서, 반차별 운동을 하는 활동가로서, 페미니스트 활동가로서 넘어서고 싶은 것은 지위와 계급의 이분화된 구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존엄성'이 사회적 약속이 되는 사회에 대한 조건이기도 하다. 또한 이른바 정체성의 구획으로 쉽게 치환되는 '차별금지사유' 논쟁 속에서 17년 동안 평등의 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난관을 함께 넘어서자는 제안이자 요청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체제의 결과를 분배의 문제, 물질적 불평등, 사회경제적 권리가 사라진 시대로 분석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하다. 이러한 시대에 대응해야 할 필요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거나, 외면했거나, 우회했거나, 조용하면서 포섭되어 왔던 사회운동 역시 그 풍경의 일부임을 성찰해야 한다는 것도 뼈아픈 과제다. 하지만 사회운동이 과연 지위와 계급의 허구적인 대립구도를 넘어서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시때때로 회의감이 든다. 노골적이든 우회적이든 '정체성 정치'(혹은 '소수자 정치', '문화 정치', '인정의 정치', '지위의 불평등 등 무엇이라 칭하든)를 진보의 급진적인 전망을 해쳐 온 주범으



로 지목할 때 이 회의감은 더 깊어지기도 한다.\* 지금 여기 사회운동에서 ‘정체성’, ‘위치’, ‘지위’는 어떻게 이해되고 있을까?

어떤 소수자 집단을 사회가 인정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오히려 소수자·정체성·인정이 지배 집단의 연민과 관용, 포용의 범위를 과시하며 지배적인 체제를 더 강화하는데 활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른바 정체성·소수자·문화·인정의 문제를 정치경제적 분배나 물질적 불평등과 분리된 것으로서 인식하고 왜곡하는 것은 체제전환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아니 오히려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본다. 불평등에 대한 도전이 전면화되지 못하는 현실과 마찬가지로 ‘섹슈얼리티 또한 정치경제적 투쟁의 핵심에 있다’는 주장(나영, 나영정, 2021)이 천명되어야 하는 현실 역시 비극이다.

‘젠더와 인종을 고려하지 않는 계급 형성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체제전환운동의 현실인식이라면, 몇 가지 문제의식이 더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우리는 계급 형성과 계급 정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라도 (정체성 그 자체가 아니라)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 그것이 변혁적으로 변형되는 과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체성은 유동적이지만 정체성을 고정불변의 것으로 만들고 인식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지배 권력의 매커니즘이다. 정체성이 아니라 정체성 ‘그 다음’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정체성’ 정치도, 정체성 ‘정치’도 답이 아니라고 발본하는 것은 당대의 지배와 위계, 차별과 억압의 구조에서 삶의 고통을 정치화하려고 했던 역사적 시도들을 다시금 다른 형태의 지배 속에 가두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자본과 권력들이 분리시켜놓은 이런 저런 모습의 또 다른 편린(정체성)들을 수평적으로 자기화하는 것’(이광일, 2009)을 추동하는 것이 바로 주체화의 토대가 되는 정치다.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등장한 여성 주체들의 ‘야망 담론’이 신자유주적 자본주의 하에서 포스트-페미니즘의 경향을 보여주는 동시에 또한 ‘신자유주의 페미니즘’을 넘어서는 모순을 보

---

\* 프랜시스 후쿠야마(2020)는 좌우를 막론하고(하지만 특히 좌파·진보 세력이) 노동자 계층이나 경제적인 착취에 놓인 시민들과 연대하는 전략을 추구하기보다, 주변화된 작은 집단에 주목하는 ‘정체성 정치’에 집중하면서 신자유주의 시대에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경제적 곤궁’을 ‘정체성 상실’로 치환시켜온 좌파의 정체성 정치가 바로 우파의 정체성 정치를 불러일으켰고, 사회를 소수자 집단으로 파편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새뮤얼 모인(2022)은 경제·사회적 권리의 확보, 즉 분배 구조의 개혁과 물질적 평등을 향한 집합적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 인권 차원에 집중하면서 인권이 신자유주의적 불평등 확산에는 침묵한 채 ‘무력한 동반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날카롭게 비판한다. 이에 기여한 일부가 바로 신자유주의적 인정의 정치다. 이는 한국사회에서도 직·간접적으로 분배나 인정이나, 정치경제나 문화나, 노동이나 페미니즘이나, 계급정치나 소수자정치나 등 여러 형태로 변주되고 반복되어 왔던 구도이기도 하다. 경제적 분배의 문제에 무능하면서 정체성·소수자·문화정치에 천착한 진보에 대한 비판이 누구에게 정당한 것으로 수용되고 환영받는지가 바로 어떤 정치가 어디에서 실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한다.

여준다면(이현재, 2019)\*, 이 주체성이 어떻게 체제에 도전하는 정치와 맞닿을 수 있을지를 급진화하는 것이 체제전환운동이어야 하지 않을까.

둘째로는 이른바 정치·경제·문화 정치의 분할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의 유구한 전략이라는 인식이 더 적극적으로 공유될 필요가 있다. 누가 소수자의 삶과 고통과 요구를 분배,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권리로 부터 멀어지게 하는가? 그래서 계급적 이해관계의 형성과 계급 정치의 가능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가? HIV/AIDS인권운동은 감염인이 치료제와 의료서비스를 확보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구조로 제약자본의 이윤창출 전략과 이에 화답하는 국가의 의료시장화를 제기해왔다. 그리고 이는 감염인을 건강권이라는 보편적 권리 확보의 주체로 등장하지 못하게 하는 차별과 낙인의 문제와 분리될 수 없음을 지목해왔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서 그토록 주창했던 ‘인권 기반 대응’이며, 권리를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면서 불평등에 도전하는 소수자 정치의 역사적 토대다. 가족이 개인들에게 생존의 경로가 되고 자본에게는 이윤축적의 토대가 되는 상황에서 비혼·성소수자 등 젠더규범 비순응자들의 ‘가족을 구성할 권리’ 요구가 정치경제적 투쟁으로 번역되고 있나? 인종적 정체성과 연결망이 그 구성원들에 ‘개인의 정체성, 사회적 지위, 문화적 의미, 정치적 결집의 가능성’을 제공하면서 신자유주의적 시장화에 저항하는 대안이 되고 있다는 사실(김보명, 2023)은 이주노동자 운동과 접촉될 때에만 의미 있는가?

정체성 정치의 뚜렷한 한계와 폐착에도 불구하고 이를 복원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내가 우려하는 건 ‘정체성 정치나 문화 정치를 정치적 타자로 풍자하고자 하는 충동’(리사 두건, 2017)이 바로 이 시대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여기는 계급 정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정체성’으로만 보여지는 소수자들의 요구에서 박탈된 정치경제적 권리, 삶의 물질적 토대, 삶의 생산과 재생산 양식을 우리가 함께 읽어내지 못한다면, 이 시대 새로운 계급 정치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교차로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집합적 전망을 공유하는 힘으로서 계급 정치로 나아가려면, 주변화된 정체성이 아니라 그 주변화된 정체성을 만든 지배 구조로 우리의

---

\* 이현재(2019)는 ‘야망 담론’을 분석하며 이는 신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이지만 신자유주의 페미니즘을 ‘넘어선다’고 본다. ‘야망 담론’을 정치화하는 여성 주체들에게 성공은 경쟁을 통해서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행복은 자본과 시장의 관점이 아니라 페미니즘의 관점에서의 소비이며, 이는 ‘여성들이 연대하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의미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은 ‘여성들이 연대하는 조직’이라는 기획이 배타적이며 억압적인 것이 아니라 평등하고 해방적인 기획이 되기를 바란다면, 이를 급진화하는 것이 사회운동의 과제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진다.

시야를 돌려야 한다.\*\*

‘정체성’의 확고한 토대를 기반으로 한 정치나 운동이 불평등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루지 못한다는 비판은 타당하다. 우리가 이를 넘어서야 하는 것도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주장할 때 발생하는 착시에 대해서만큼은 짚고 싶다. 정체성·지위·문화·인정의 정치가 불평등의 문제를 겨냥하지 못한다는 비판만으로 계급 정치가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루는데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젠더 갈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현재의 추상화된 남성과 여성 정체성 집단의 적대를 다르면 무조건 반대하는 ‘비토크라시’(vetocracy)의 양상으로, 즉자적인 자기정당화의 목소리들의 난립으로 파악하는 정치는 바로 사회운동이 불평등의 문제에 적절하게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여러 연구들에서 이미 제기하고 있는 바처럼 지금의 남성 대 여성 구도로 전화된 ‘젠더 갈등’은 한국사회에서 남성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남성 내부의 이질화·계층화와 연관된 정치경제적 문제다(김보명, 2021; 홍찬숙, 2021). 바로 이 남성성 규범의 변동을 정치·경제·문화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개입하지 않는 한, ‘젠더’로 격화된 불평등을 타개하기란 요원할 것이다.

### 3. 평등과 존엄의 전망의 실마리

“차별금지법은 기본을 만드는 과정인데, 이것 자체로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노동의 문제는 노조가 있으면 해결될 것 같거든요. 하루에 다섯 번씩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해야 하는 종교를 가진 노동자가 있다면, 단협을 체결하면 끝나는 문제이기도 해요. 노동조합이 있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노동조합이 없으면 불가능한 구조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논의와도 연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담긴 평등에 대한 권리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확보될 수 있을 것인가만이 아니라, 온전한 권리로서,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로서 어떻게 확장될 수 있을지가 이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고민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요할 때는 결합을 하다가도 평소에는 등을 돌리고 있잖아요. 노조에서도 현장에서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할 때 비정규직 문제만 이야기하고 끝나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노조에서는 단협안을 만들거나 사

---

\*\* 리사 두건(2017)은 많은 좌파들이 정체성·문화 정치 대 계급 정치를 분리하는 프레임을 유지해 온 역사가 신자유주의 분할통치 전략에 조응했다는 점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이른바 생물학적 여성 토대를 중시하는 터프(Terf, Trans-Exclusionary Radical Feminist)의 등장 시기, 페미니즘의 후퇴와 역행을 격렬하게 규탄하며 그 원인으로 ‘정체성’이 문제라고 지목했던 진보진영을 떠올리면 언제나 나의 입장은 그의 주장으로 대변할 수 있을 듯하다. “역사적 구체성을 과도하게 일반화하고 파괴하면서, 정체성 정치의 가장 보수적/신자유주의적 사례로부터 ‘정체성 정치’의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효과를 추상화할 것을 역설한다는 점... 이것이 어떻게 (운동에) 도움이 되겠는가? ... 가장 급진적으로 변혁적이고 창조적인 순간을 유지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지 않은가?” 박종주(2018), 홍보람(2023) 역시 신자유주의가 사회운동을 정치·경제·문화 등의 영역/범주로 분할함으로써 그 힘을 무화시킬뿐만 아니라 사회운동 역시 그 분할 전략을 적극 채택함으로써 그 에너지가 자본의 축적전략에 활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교차정의의 관점이 신자유주의 속에서 그 동력을 잃어왔던 사회운동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회복지기관에서는 지원계획을 다시 만들거나 하는 방식으로, 비록 법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 법의 지향으로) 너무나도 많은 곳의 차별들이 해소될 수 있다는 걸 서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작년 10~12월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11개의 지역 차제연 네트워크와 함께 진행한 <전국간담회 ‘평등과 존엄의 전망을 찾아서’>에서 충북의 한 활동가가 건넨 이야기는 나에게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의 전망, 그리고 체제전환운동의 전망을 찾아가는 실마리 같은 것이었다.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없이 평등이 실현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노동조합이 있고, 노동조합이 평등이라는 원칙을 실현하고, 이를 노동자의 보편적인 권리로서 확보할 수 있는 힘이 키울 수 있다면, 맞다. 차별금지법이 없어도 우리는 평등을 쟁취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많은 단협들이 정상가족의 부계혈통주의, 핵가족의 이성애중심주의에 기반해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과 불평등은 ‘단협의 결과이므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자본의 변명이 되고 있기도 하다(국가인권위원회에 남성·여성 노동자에 의해 제기된 수많은 차별 진정은 바로 호주제 폐지 이후에도 공고한 성차별의 현실을 보여준다).

차별금지법제정운동도, 노동조합운동도 모두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는 차원이 아니다. 나에게 저 말은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의 지향이 차별금지법이라는 법 하나를 만들면 끝나는 차원이 아니라는 말과 같다. 또한 노조법 2·3조 개정운동과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을 분리된 투쟁일 수 없는 투쟁으로 떠올리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의미와 같다. 그리고 노동자든, 민중이든, 시민이든 삶의 주체들이 만들어가는 사회적 관계가 어때야 하는지를 서로가 일깨워줄 수 없다면, 사회의 규율 방식이나 관계 맺기의 양식을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힘으로 세워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과 같다. 인간의 권리가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서로를 보장하는 힘을 가지기 위해서 부단히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주는 말이었다. 실제로 존재하는 정치의 희망찬 순간들을 계속 기억하면서, “다른 누군가가 해방시켜 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는 선언”을 함께 해나가는 상호의존의 관계로 체제에 도전하는 운동을 해 나가고 싶다.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의 전망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

\* 이는 성차별주의·인종주의·이성애중심주의에 저항하며 계급 정치를 확장하고자 했던 컴바히 강 컬렉티브를 분석한 김정희원(2022) 글의 일부이다. “정체성의 정치는 당사자들이 처한 억압에 주목하며, 또한 가장 원대하고 급진적인 정치가 당사자들로부터 출현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한다. 다시 말하면, 정체성의 정치는 다른 누군가가 해방시켜 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 참고 자료

- 01 김보명, 「진보' 정치학 이후와 사회적 재생산의 문제에 대한 소고」, 『경제와 사회』 132호, 2021. 김보명, 「(반)다문화주의 실천과 젠더 정치학의 교차」,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2권 3호, 2023.
- 02 김정희원, 『공정 이후의 세계』, 창비, 2022.
- 03 나영, 나영정, 「국가권력과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대항하는 섹슈얼리티-인권-운동」, 『인권운동』 3호, 2021.
- 04 리사 두건 저, 한우리, 홍보람 역, 『평등의 몰락 -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하는가』, 현실문화, 2017.
- 05 박종주, 「신자유주의 시대의 교차성 분석」, 『여성학논집』 35집 1호, 2018.
- 06 새뮤얼 모인 저, 김대근 역, 『충분하지 않다 - 불평등한 세계를 넘어서는 인권』, 글항아리, 2022.
- 07 이광일, 「민주주의, 재현, 정체성 정치들과 그 미래」, 『황해문화』 65호, 2009.
- 08 이현재, 「신자유주의 시대 젠더정의와 '유리천장 깨뜨리기': 변혁적 논의를 위한 비판 페미니즘의 제안」, 『젠더와 문화』 12권 2호, 2019.
- 09 프랜시스 후쿠야마 저, 이수경 역,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정치학 - 존엄에 대한 요구와 분노의 정치에 대하여』, 한국경제신문, 2020.
- 10 홍보람, 「평등의 황혼? - 냉소화된 백래시의 시대, 좌파적 우울증 타개를 위한 노트」, 『현대사상』 29호, 2022.
- 11 홍찬숙, 「'성 대결' 프레임: 복잡한 불평등의 단순화와 남성 동성 사회 회복의 유혹」, 『여/성이론』 45호, 2021.

# 지구 행성 거주자들의 체제전환운동

한재각 |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hanck@hanmail.net

## 1. 무너지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지구 행성의 거주자라는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발달된 미디어는 세계 곳곳의 소식을 가져다 준다. 팔레스타인 학살과 같은 아프고 슬픈 소식이 많다. 그들의 저항을 지지하고 지금 여기에서 연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당장 머리 위로 포탄이 떨어지지 않는 우리는 따뜻한 잠자리에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뿔지역의 가뭄과 수천만 명의 기아 사태와 같은 슬프고 공포스런 소식도 듣는다. 기후위기를 경고하고 기후정의를 위해 행진하지만, 마트의 풍성한 진열대를 거쳐 맛난 저녁을 즐길 수 있다. 위태롭지만 아직 안온한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다행이라 여겨진다. 물론 남북한이 공해상으로 포격을 하며 험한 말을 주고 있는 한반도에서, 더 잦고 사나워진 폭염, 가뭄, 홍수, 태풍, 산불로 이미 생명을 잃고 삶을 파괴당한 이들을 안타깝게 지켜보아야 하는 한국 사회에서, 그 다행스러움이란 초인적인 정신승리가 아닐까.

이미 세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은 꽤 널리 퍼져 있다. 그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상당하다. 그런데 그 붕괴의 느낌은 상당 부분 기후/생태위기에 대한 감각과 연결되어 있다. 부쩍 늘어난 지구 곳곳의 기후재난 뉴스들과 지금 여기에서 직접 겪는 경험들은 사람들이 안간힘을 내 견디는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감정들과 뒤섞이며, 불안을 증폭시킨다. 애써 끈추 세우는 희망을 꺾으며 절망을 확산시키고 있다. 미디어들은 기후재난 소식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소비적 삶들을 전하며 지금이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환상으로 불안과 절망을 겨우 덮고 있다. 그러나 이 불안, 절망, 무기력함은 혼자서 방구석에 돌아 앉아서 견뎌내야 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겪는 위기와 재난에 대한 사회적인 감정으로 다루어져야 할 ‘기후 우울’이다. 그리고 이 강력한 감정은 우리를 결집시켜, 이 위기의 유발자들에게 분노케 하고 또 맞서 행동하게 만드는 사회적 힘이 될 수 있다.

국경으로 기후재난에서 벗어날 철용성을 쌓을 수는 없다. 기후재난의 희생자들은 수많은 난민으로 여러 국경을 넘고 있으며, 이미 우리에게도 도달해 있다. 그러나 기후재난은 국경을 넘는 난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류 모두가 공유하는 대기 중에 배출한 온실가스의 효과는 국가와 지역마

다 구체적인 양상은 다르겠지만, 국경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과거와 다른 기후와 극단적인 기상 현상으로 재난을 가져다 준다. 미국의 규제 정책이, 포스코의 사업 계획이, 아마존 선주민의 투쟁이 모두 지구 행성의 기후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며, 그 행성 위 한 조각 땅을 차지해 살고 있는 우리의 생존과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 점에서 '기후 우울'은 지구적 감정이며, 이를 뒤집어 사용하려는 우리의 투쟁도 지구적 투쟁이다. 세계 각국에서 성장하는 기후투쟁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지구 행성의 거주자인 우리는 종의 경계를 넘어선다.

## 2. 기후위기는 급진적 해결을 요구하며, 그 길은 체제전환을 향해 있다.

기후위기가 심각할수록,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절박하다. 하지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어느 길로 걸어야 할지 혼란스럽다. 기후위기 대응의 지배적인 담론인 '탄소중립'은 시장주의, 기술주의, 성장주의를 뒤섞고 있지만, 화석연료 기반의 자본주의 체제와의 위선적인 대립과 갈등 속에서 대중적으로 지키고 추구해야 할 지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절박한 이들은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마음에 가리지 않고 '탄소중립'을 움켜쥐기도 한다. 시장, 금융, 기술의 힘을 빌려 기후위기를 해결하겠다는 이야기가 현재의 신자유주의 지배 체제에서는 더 설득력있게 들릴 지도 모른다. 국가와 기업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나란히 협력한다는 말에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다. 기후위기는 인류 모두의 문제이고 정치적 좌우 구분을 넘어선다는 말에서 찝찝함을 거두고 안도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후위기를 야기한 세력과 함께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기후정의운동의 비판을 접하고 당황하기도 한다.

기후정의운동은 '실용적 불가능주의'를 경계하고 '유토피아적 현실주의'를 추구한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부부터 시작하자는 말은 매력적일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텀블러와 에코백으로, 자전거와 비건(채식)으로, 에너지협동조합과 녹색단협으로 변화를 시작한다. 그리고 절박한 이들이 서로를 만나는 매개가 되고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도 된다. 그러나 집 한 구석에 서너 개씩 쌓인 텀블러와 에코백을 보며 '개인의 작은 실천'의 한계를 절감하듯, 이런 틈새의 전략들은 이 기후위기를 유발하고 지속, 심화하는 구조적 원인을 정조준하는 전략과 연계되고 통합되지 않으면 무력하기 일쑤다. 손 앞에 놓은 방안이라고,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명분만으로는 대기의 상품화하는 배출권 거래제를 지지하고,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한다며 공공재와 공공재를 사유화하여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자본의 전략에 동조하거나 방관할 수는 없다. 기후위기 대응을 논의한다는 이유만으로 비민주적 거버넌스 기구에 참여할 수 없다. 오히려 이 모든 것에 맞서 싸우지 않을 때, 혼란만 가중된다.

자본주의 성장체제를 넘어선다는 목표와 전략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현실주의적 방안이다. 현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지속적인 이윤 추구하고 자본 축적을 위해서, 지구 곳곳에서 자연과 선

주민들을 수탈하여 자원을 추출하며, 필요 이상의 재화와 서비스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더 많이 생산하고, 불평등에 의해서 가속되는 과시적 소비와 모방 소비 역시 계속 증가하며, 그 결과로 지구행성적 한계를 넘어서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쌓아올리는 현 체제를 중단시키지 않는 이상, 차별과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는 동시에 지구 행성의 거주 가능성도 점점 더 낮아진다. 광기어린 자기파괴적 이 경제 시스템의 속도를 늦춘다거나 혹은 방향을 튼다고 해서, 이 위기가 해결될 수는 없다. 기후정의운동이 급진적일 수 있으며, 앞장서 체제전환을 요구하는 이유는 기후위기의 절박함 속에서 이런 광기를 정면에서 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 3. 기후정의동맹은 공공재생에너지운동으로 체제전환운동의 한 전선을 만들려 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운동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중운동으로 탈바꿈하는 동시에, ‘기후정의’와 ‘체제전환’을 앞세우며 점차 급진화하고 있다. 2019년 9월, 전국의 7천 5백명으로 본격적인 ‘대중동원’이 시작되었다. 그후 코로나 재난 기간 ‘탄중위 해체’를 쟁점으로 기후운동 내부의 논쟁을 거치면서 대중적 기후정의운동이 분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존 기후운동과의 ‘협력과 경쟁’ 속에서 기후정의운동은 2022년과 2023년의 3만명 가까이 참여한 ‘기후정의행진’을 조직해냈다. 2023년 4월 세종에서 이루어진 ‘기후정의파업’은 구체적인 대정부 요구안을 내걸며 보다 급진화된 행동 방식으로 전개되면서, 기후운동 전체의 급진화를 가속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어냈다. 노동조합에 기반한 노동운동 이외에는 쉽사리 시도하기 힘든 수천, 수만 명 단위의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성공시키면서도, ‘기후정의’와 ‘체제전환’과 같은 급진적인 구호를 내걸어 조직할 수 있는 경험은, 기후정의운동에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다. 이제 이런 사회적 힘을 더욱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규모 기후정의행진이 가능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기후부정의에 대중적인 우려와 분노가 쌓여 있었기 때문이지만, 여러 사회운동들이 기후정의운동과 접촉하면서 다양한 의제와 담론을 통해서 대중들을 조직해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노동운동은 ‘기후 대 노동’의 대립 구도를 넘어서 움직여 기후위기의 사회적 차원을 부각시키면서 기후운동에 ‘정의로운 전환’의 목소리를 실물화시켰다. 반빈곤 단체들은 기후위기와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기후불평등을 부각시키고 기후정의의 구체적인 내포를 형성했다. 이를 포함하여, 전통적인 환경운동 뿐만이 아니라, 인권운동, 보건의료운동, 페미니즘운동, 성소수자운동, 평화운동, 시민운동, 지역운동, 진보정당운동 등, 한국사회의는 거의 모든 사회운동들이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면서, 기후정의운동은 ‘운동의 운동’이 되기 시작하였다. 기후위기가 거의 모든 것에 관한 일이기에 자연스러운 일이면서도,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이기도 했다. 기후정의동맹이 2022년 말부터 2023년까지 거의 일년 반의 시간을 들여 N개의 기후정의학교와 기후정의선언



운동을 조직했었다. 이는 의식적으로 여러 사회운동이 기후정의와 어찌 연결되었는지 탐색하고 이를 다룰 담론들을 발굴하고 가다듬는 상호간의 노력이었다. 기후정의의 다양한 면모가 펼쳐지는 동시에 ‘체제전환’이라는 공동 목표도 확인하게 되었다.

이제 기후정의동맹은 기후정의운동의 핵심적인 ‘전장’으로 공공재생에너지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재생에너지운동은 경합하는 다양한 에너지전환 경로 중에서 보다 신속하며 또한 보다 정의로운 경로로서 제시하면서, 기후/환경운동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사회공공성 운동, 반빈곤운동, 지역운동, 진보정당운동 등이 상호협력하는 운동이 될 것이다. 이 운동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국가(의 일부)를 탈환하여 기후위기를 넘어서고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국가로 재구성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런 국가의 탈환과 재구성을 통해서, 부유층과 대기업들에게 기후위기 책임을 물어 소득과 이윤에 누진적으로 과세하며, (재생)에너지의 민영화를 막고 공유재인 재생에너지를 공적으로 소유관리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이용 이익을 공유하여 에너지기본권을 보장하며, 기존 발전노동자들의 고용을 지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녹색일자리를 제공하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지난 1년간의 연구와 토론을 통해서, 여러 사회운동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공동 행동의 인식적, 조직적 틀을 형성해왔다. 이 운동이 성공적으로 전개된다면 체제전환운동의 전선(의 일부)를 형성하고 가시화하게 될 것이다. 그 전선에 여러 동지들과 함께 설 수 있기를 바란다.

#### **4. 우리의 비판, 운동, 대안의 서사 속에서, 생태주의가 더 깊이 녹아들어가야 한다.**

생산을 너머 재생산까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인식틀을 재구조화할 것을 요청한 발표문에 동의한다. 기존 노동-자본 사이의 모순에 집중하였던 기존의 분석과 비판을 확장해서, 젠더화되고 인종화된 축적 양식과 함께 지구행성적 한계를 초과하는 무한 성장 체제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포괄하는 것은, 현실의 다양한 사회운동들을 연결하고 결집시킬 수 있는 인식론적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론에 기반하여 사회주의, 페미니즘, 생태주의와 같은 대안적 이념과 담론들이 더 긴밀하게 얽히고, 또 각각을 자신의 이념으로 표방하는 여러 사회운동들이 현실에서 상호 얽힘에 대한 공동의 경험을 쌓아 가면서, 사회운동의 각 전선들이 고립, 분절되는 것이 아니라 체제전환을 위한 하나의 전선으로 상호 연결되기를 기대한다. 오늘의 포럼은 그런 기대를 현실화하기 위한 시도가 고 중요한 진전이겠지만, 시작점일뿐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 훨씬 많이 남아 있다.

현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고 변혁하려는 체제전환운동은 다양한 이념과 운동들을 결집시키려는 운동의 운동으로서, 어떤 총체성을 갖기를 기대할 수 있다. 과거 총체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협소한 환원주의로 제약되었다는 불만이 쌓이면서, 언젠가부터 그 총체성을 붙잡으려는 시도들이 사라지거나 약화되었다. 병렬된 다원주의가 선호되기도 했다. 사회주의, 생태주의, 페미니즘을 한 바구니에 담으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러 이념 지향을 가진 현실 사회운동을 한 바구니

니에 답을 뿐만 아니라 이를 상호 연결하려는 시도는 드물었다. 이제 그 시도를 본격화한다고 했을 때, 과거에는 마주할 일이 드물었던 과제들이 드러난다. 즉, 각 이념과 운동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원리들의 고유함을 유지하면서도 긴밀히 연결하여, 총체적인 시야에서 정세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며 전략을 기획하고 대중들을 규합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쉽지 않은 과제로서, 체제 전환운동 안에서 긴장과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 우리에게 용기, 인내, 지혜가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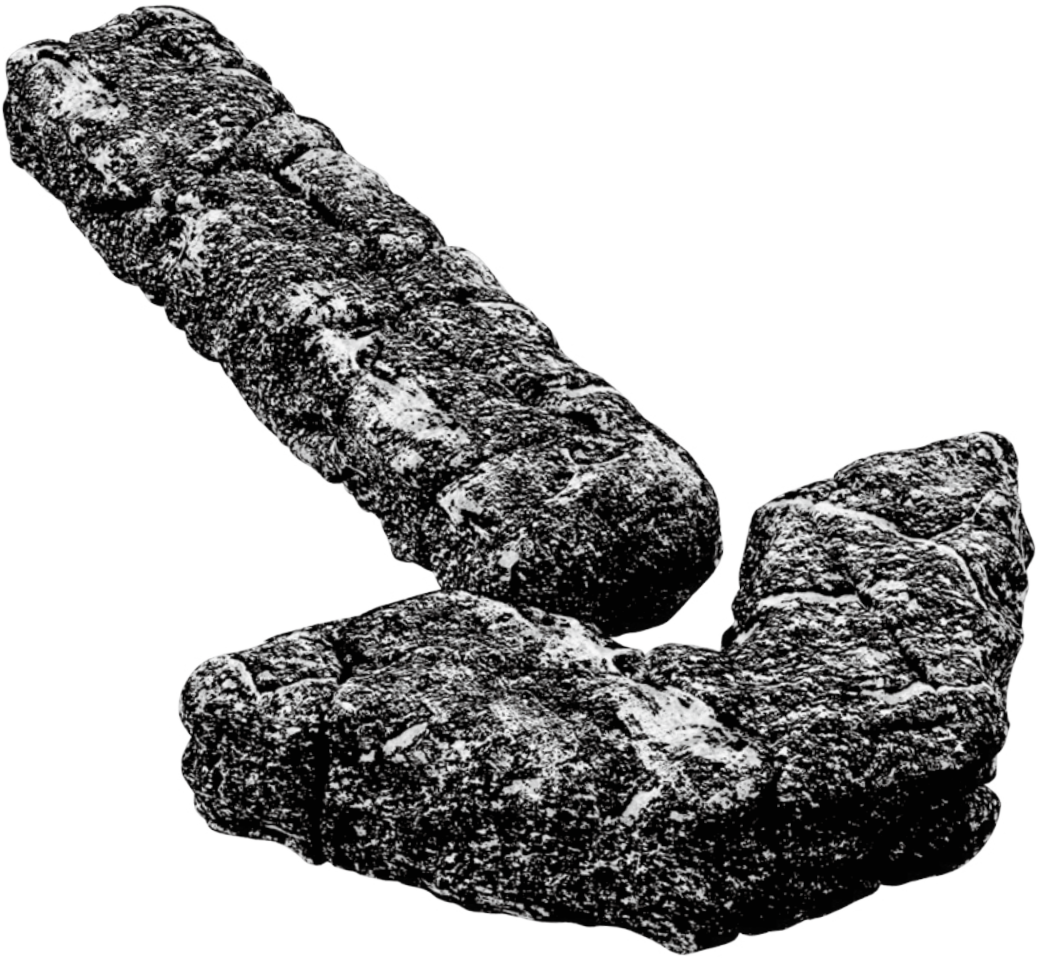
생태주의(운동)는 사회가 자연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사회는 자연 속에서 배태되어 있으며 자연은 사회를 통해서 (재)생산되는 사회-생태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염두에 두고 2000년대 이후의 한국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분석을 보완해보자. 발표문에서는 원경으로 물러나 있는 생태주의의 분석을 근경으로 가져다 놓고 다른 분석들과 섞어 보려는 시도다.

1990년대 말 IMF 사태를 계기로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화가 본격화되었다고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의 ‘자연의 신자유주의화’는 10년 정도 후인 2007년 이명박 정부와 ‘녹색성장’ 담론의 등장과 함께 본격화되었다. 산업화 시기 기업들은 자본주의 생산을 위해서 자연을 자원으로 채굴/투입하고 폐기물을 쏟아내 공해를 유발했다. 이에 대응하여 국가의 환경 규제가 자리잡고 조금씩 환경 지표들이 개선되기 시작한다. 2000년대에 들어서 ‘에너지 민영화’와 함께 시도된 ‘물 민영화’, GMO의 개발 등으로 자연의 상품화와 기술화가 추진되면서 자연에 대한 자본 축적 과정으로의 실질적 포섭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그런 흐름이 누적된 끝에,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공개적으로 표방할 수 있었다.

한국의 개발/토건 국가의 경로 의존성으로 인해서 녹색성장은 4대강 ‘삼질’으로 가시화되었지만, 그 이면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기에 기후변화를 녹색자본주의 등장의 계기로 삼으려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여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주요 기제로 삼는 등의 자연의 금융화까지 진행되었다. 사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4대강 사업과 핵발전 확대 정책 등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날카롭게 맞서곤 했지만, ‘녹색성장’이라는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기조에서는 동일했다. 탄소중립을 선언했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처음에는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선언하기를 주저했었다. 그러나 기후위기가 점차 심화되면서 국제사회의 압력과 한국 시민사회의 압박으로 더 버틸 수 없을 때, 그들은 이명박 정부가 주조한 ‘녹색성장’ 담론에서 길을 찾을 수 있었다. 녹색성장이 4대강으로 상징화되어 있어 꺼려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인 성장을 하면서 기후위기를 해결한다는 ‘생태적 근대화’ 노선 이외에 달리 선택할 수 없었다. 차이라면 개발/토건 국가의 잔재를 여찌 하느냐에 있었다. 이제 ‘환경’은 잘 팔리는 ‘상품’이 되었고, 기후/생태위기를 새로운 자본 축적의 계기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모두가 망하든 말든.

한편 환경 규제와 인프라에 대한 투자 등으로, 한국 내에서 전반적으로 환경오염은 개선되고

생활/자연 환경의 질이 향상되는 경향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내외로 환경 부담을 외부화하면서 이루어진 결과이다.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지표들이 향상되거나 기준치 내에서 유지/관리되고 있지만,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량과 폐기물량은 증가하고 있다. 그것을 처리할 산업 생산의 배출구와 도시 소비의 폐기물 처리장은 지역과 농촌에 집중되면서 환경부정을 낳는다. 핵과 석탄 발전소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위치에 있고 초고압 송전탑이 농촌 지역을 거쳐 서울로 향하는 일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내부 식민화’로 굳건하다. 국경 밖 ‘자원 식민지’들은 더욱 비가시화되어 있다. 한국이 지구적 자본주의 내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전지구적 자원의 채굴, 이동, 폐기에서도 상당한 위치를 차지한다. 자동차, 선박,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거대한 수출 뒤에는 지구 어디선가 채굴한 자원과 에너지가 있으며(아프리카 콩코의 코발트, 볼리비아의 리튬, 호주의 석탄, 인도네시아의 팜오일 등), 전지구적 운송 시스템을 통한 대규모 자원과 상품의 이동, 그리고 소비 끝에 해외 어딘가에(필리핀, 중국 등) 버려지는 엄청난 규모의 폐기물도 있다. 한국 경제와 사회가 누구 그리고 무엇에 의해서 지탱되는지 시선을 넓혀야 한다.



폐막식

# 봄을 부르는 편지

사흘 간의 체제전환운동포럼에서

체제전환운동을 함께 만들어 갈 동료들 만났을지 궁금합니다.

포럼을 닫는 그곳에서 체제전환운동으로 나아가는 길로 나아갑시다.

체제전환운동포럼이 남긴 의미를 함께 나누며

앞으로 체제전환운동으로 이어질 우리의 기대를 이야기합니다.

3월 23일,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를 통해 체제전환운동의 포문을 엽시다.



종합세션+폐막식  
문자통역 QR코드



 **세션 진행**

사회: **김윤영**

스케치 영상 "2024 체제전환운동포럼까지 이어진 우리의 장면들"

발언: **닷별·조영은·진영·홍명교**

함께 만드는 시간 - 함께 봄을 맞이하고 싶은 나의 동료에게

공연: 옥바라지선교센터 **황푸하**

# 체제전환운동포럼 공동주최 단위소개

|                                             |                                                                                                                                                                                                                                      |
|---------------------------------------------|--------------------------------------------------------------------------------------------------------------------------------------------------------------------------------------------------------------------------------------|
| 가족구성권연구소                                    | 모든 사람이 원하는 가족과 공동체를 구성하고 차별없이 지위를 보장 받는 가족구성권이 확보되는 사회를 위해 소수자, 페미니즘, 인권의 관점에서 다각적인 연구와 실천적 대안을 모색합니다.                                                                                                                               |
| 건강권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 건강한 사회를 위해, 모든 사람들의 건강권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행동합니다.                                                                                                                                                                                      |
|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 경북북부지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평등세상을 열어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br>교육공동체 나다<br>교육공동체 벚        | 케이블·방송·통신·콜센터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조직 제도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인문학 교육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br>협동조합을 모델로 삼아 격월간 <오늘의 교육>을 발행하고 출판물을 펴내며 우리 교육에 필요한 담론장을 만들어가고자 노력합니다.                                                                                       |
| 교육노동자현장실천                                   | 정규직 비정규직 교육노동자가 반자본 사회변혁 교육노동운동을 지향하며 활동하는 현장활동가 조직                                                                                                                                                                                  |
| 권리찾기유니온<br>기후위기기독교인연대                       | 근로기준법과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의 노동조합<br>공평과 기후정의로 세워진 새로운 세상을 위해 기독교와 시민사회에서 기후정의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
| 난민인권센터<br>넥스트젠코리아                           | 한국사회에서 난민의 시민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br>생태마을을 주제로 교육, 국내외 공동체여행, 생태공동체 게더링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단체입니다                                                                                                                                          |
| 노동건강연대<br>노동당<br>노동중심 사회대전환 실천모임<br>노동해방 마중 | 모든 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을 위해 활동하는 노동건강연대입니다.<br>사회주의 대중화를 기치로 건 사회주의정당, 노동당입니다.<br>노동 중심 사회대전환과 대안의 활동가조직 건설을 지향하는 활동가 모임<br>노동해방 세상을 향한 길을 내기 위해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들을 모색하고 실천합니다.                                                            |
|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전국결집<br>녹색당<br>녹색정치Lab 그레      | 노동운동 현장활동가조직<br>생태, 평등, 기후정의 등을 핵심 기조로 하는 정당입니다.<br>녹색정치Lab '그레'란? 그린 레프트,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지구를 바꿀 "녹색 좌파 양성소" 그린 레드, 자본주의와 성장주의 너머를 상상하고 실천하는 "적록정치 실험실 그레, 생명의 공존을 가능케 한 갯벌 살림의 도구 같은 "생태주의 연구소"를 의미합니다.                                 |
| 누구나데이터<br>다른 세계로 길을 내는 활동가모임                | 비영리조직들이 온라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조직을 돕는 일을 합니다.<br>변혁적 사회운동의 흐름을 만들어 다른 세계로 길을 내고자 하는 활동가 모임입니다.                                                                                                                                               |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br>마창거제산채추방운동연합<br>문화연대     | 평등과 평화세상, 부처님 세상<br>노동보건단체입니다<br>우리는 1999년에 창립하여 문화사회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문화운동단체입니다. 검열과 배제가 없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싸우고, 문화공공성의 관점에서 문화정책과 문화행정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시민의 문화권리와 문화산업의 종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직접행동과 캠페인을 벌이고, 폭력과 불평등의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와 연대합니다. |
| 민달팽이유니온<br>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 주거권 보장과 주거불평등 해소를 위해 활동하는 청년 세입자 당사자 연대<br>대학원생들의 연구환경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설립된 노동부 공식 인가 노동조합입니다. 2023년 현재, 대학원생노조는 3기 집행부가 수립되어 정두호 지부장, 이준영 수석부지부장, 윤희상 사무국장이 활동하고 있으며 두 명의 반상근활동가가 노조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 반올림은 전자산업 직업병 피해노동자들의 산재 인정 활동과 함께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피해자 상담 및 산재 지원, 연구, 국내외 연대, 제도 개선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                                                                  |                                                                                                                                                                                                                                                                                                |
|------------------------------------------------------------------|------------------------------------------------------------------------------------------------------------------------------------------------------------------------------------------------------------------------------------------------------------------------------------------------|
| <b>반성매대인권행동 이름</b>                                               | 경제적 불평등에 의한 착취와 젠더/섹슈얼리티 권력관계로 인한 억압 없이 모두가 자기 자신 그대로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자 성매매 현장의 경험을 길어올려 한국 성매매 산업을 뒷받침하는 정치·경제·문화에 균열을 내는 페미니스트 현장단체입니다.                                                                                                                                            |
| <b>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br/>빈곤사회연대<br/>사회주의를향한전진</b>              | 대구경북지역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입니다<br>반빈곤운동단체<br>위기의 시대, 노동계급이 주도하는 혁명으로 자본주의를 철폐해 착취·억압·차별이 없는 해방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입니다.                                                                                                                                                                            |
| <b>새로운노동자정치운동추진모임</b>                                            | 이대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노동자 정치운동이 필요합니다. 노동현장에서부터 세력화와 연대연합을 실현합니다.                                                                                                                                                                                                                                    |
| <b>서강대 인권실천모임 노고지리</b>                                           | 노고지리는 노동, 빈곤, 장애, 기후정의, 페미니즘, 국제연대 등의 의제들을 공부하고, 다양한 운동 주체들과 연대하는 서강대 학생들의 모임입니다. 격월로 주제를 선정하여 투쟁에 함께하고, 관련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 <b>서교인문사회연구소</b>                                                 | 서교인문사회연구소는 1. 교육제도와 학술제도의 안과 밖을 가로지르며 자율적인 공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2. 독립적인 연구와 활동의 공동기반을 창출하고, 지식생산의 과정을 공유하는 학술운동을 지향합니다. 3. 학문적, 사회적 의제에 개입하고, 비판적 담론을 형성하고자 하는 학술운동체입니다. 4. 새로운 사회와 삶의 형식을 만드는 사회운동과 연대하며, 학술사회와 운동사회를 매개하고자 합니다.                                                              |
| <b>성미산학교 포스트중등<br/>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b>                     | 성미산학교 11-12학년 학생들입니다<br>세어는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자유롭게 건강하게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누리며, 충분한 정보와 평등한 자원을 바탕으로 서로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
| <b>시민건강연구소<br/>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br/>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br/>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b>    | 건강과 보건의료 분야의 진보적 학술운동 단체입니다<br>에너지기후 분야 정의로운 전환 지향 연구조사<br>에너지 공공성과 정의로운 전환을 추구합니다<br>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은 건강 문제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적 맥락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율적 연구 공간입니다                                                                                                                                  |
| <b>연대하는 교사잡것들</b>                                                | 지배하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는 교육,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학생인권과 평등한 노동을 지향하고 차별과 혐오에 저항하기를 선택한 교사들의 모임<br>사회정의, 인권, 생태환경의 전환을 위한 천주교 단체<br>안티 젠트리피케이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
| <b>예수회 인권연대연구소<br/>옥바라지선교센터<br/>음성노동인권센터</b>                     | 충북 음성지역 노동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상담, 법률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
| <b>이윤보다인간을<br/>인권교육센터 들<br/>인권연구소 '창'<br/>인권운동사랑방<br/>정의기억연대</b> | 노동해방, 인간해방, 여성해방'을 이룰 사회변혁운동을 지향합니다.<br>인권교육운동과 청소년인권운동에 주력합니다<br>인권연구소<br>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인권의 이름으로 지키고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합니다.<br>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는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부터 세상에 알려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할머니들께서 끊임없이 외쳤던 메시지를 이어받아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 <b>장애여성공감</b>                                                    | 장애여성공감은 장애여성인권운동단체입니다. 정상성에 도전하며 장애여성과 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반차별, 탈시설, 돌봄, 성적권리 등 동료시민으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을 합니다.                                                                                                                                                                        |
| <b>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b>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권리를 빼앗고 노동과 삶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모든 것에 맞서,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숨 쉬고 살아가는 단체입니다.                                                                                                                                                                                                  |
| <b>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br/>전환<br/>정의당</b>                                | 장애인 차별을 비롯한 모든 차별에 저항하는 상실적 투쟁체입니다.<br>녹색사회주의로의 체제 전환을 위하여 사회/정치운동을 만들어가는 정치단체<br>진보정치의 미래를 여는 혁신적 진보정당                                                                                                                                                                                        |



|                                           |                                                                                                                                                                        |
|-------------------------------------------|------------------------------------------------------------------------------------------------------------------------------------------------------------------------|
|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 민중신학을 바탕으로 차별과 배제가 없는 사회를 꿈꾸며 신학운동을 하는 연구단체입니다.                                                                                                                        |
|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 제주지역에서 평화와 인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제주지역의 여러 사안들을 인권적 관점에서 연구/분석하고, 인권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지혜를 모아 다양한 인권 논의의 장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
|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br>진보 3.0                      | 체제전환을 위한 적녹보라/지구지역적 전환을 목표로 운동<br>한국사회의 현실에서 진보진영의 성찰과 상호 소통, 공동 실천을 통한 신뢰 형성을 기반으로 노동 중심의 공동 전망을 모색<br>정보인권단체입니다.                                                     |
| 진보네트워크센터<br>차별금지법제정연대<br>책방79-1<br>책방토닥토닥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실천하는 연대체<br>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동네 서점입니다.<br>전북 전주에서 인권과 사회운동을 응원하며 연대하는 생각과 가치를 파는 책방입니다.                                                        |
|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 청소년인권모임 내다(Childrens' Rights Society NAEDA)는 청소년-시민 인권 보장을 위해 2023년 9월 3일 출범한 단체입니다. 내다는 학생인권법과 차별금지법 제정, 전국적 학생인권 제도화 및 청소년인권 보장, 참정권 연령 하향과 나이주의 철폐를 투쟁 의제로 삼고 있습니다. |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청소년인권 바로 지금, 지음!" 우리는 좋은 어른이 많은 세상이 아니라 나쁜 어른을 만나더라도 두렵지 않은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청소년의 자유와 존엄을 위한 청소년인권운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활동가들의 단체입니다.                                              |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모든 청소년에게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천/부산/서울에 지부를 두고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입시경쟁 폐지, 학생인권 보장, 청소년 참정권 보장 등을 요구합니다.                                                                       |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 온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소년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활동을 합니다.                                                                                                           |
|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개네                            | 개네는 연결되기를 희망합니다. 충북 청주지역에 거주하는 페미니스트를 잇는 네트워크입니다. 별도의 상근자 없이 회원들의 자발적인 팀 활동과 연대활동으로 운영됩니다.                                                                             |
|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br>춘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체제전환을 지향하는 기후정의운동 연대체입니다.<br>춘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성소수자에게 안전하고 차별없는 춘천을 만들고자 2022년에 결성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연 1회 씩 총 세 번의 춘천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하였고, 24년도 4회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br>탄소잡는채식생활네트워크<br>투명가방끈   |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노동안전보건단체입니다.<br>대전에서 기후정의운동과 동물권 운동을 하는 모임입니다.<br>학력학벌 차별과 능력주의에 저항하며 대학중심사회를 바꿔나가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
| 플랫폼C                                      | 이원론적 구도에 갇힌 우리 사회에서 급진적 비판과 대안 마련, 사회운동 혁신과 재생산을 위해 활동합니다.                                                                                                             |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br>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단체입니다<br>사이버 공간의 성폭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2017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여성단체입니다.                                                                                        |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분법적 성별권력관계 구조, 여성의 몸과 성을 규범화하는 통념, 차별과 혐오를 확대하는 사회문화에 맞서 평등하게 관계 맺고 나다운 모습으로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활동합니다.                                                            |
| 항꾸네 틈모임                                   | 혼자 말고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꾸며 전남 곡성에 세워진 항꾸네 협동 조합 안에는 착취와 억압을 통해 자신의 토대를 갉아먹는 자본주의 체제를 벗어나 탈성장의 생태사회주의를                                                                       |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성소수자들이 존엄과 권리를 위해 함께 소통하고 저항과 연대를 일구는 공동체입니다.                                                                                                                          |
| 홀리스행동                                     | 홀리스 인권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홀리스인권운동단체입니다.                                                                                                                                  |

## Special thanks to:

---

### 후원 단체

(사)한국도시연구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 고마운 분들

디자인 | 봄밤

녹화 | 스튜디오 R

협력 | 독립출판 뜻과닿

#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 사회운동의 정치를 시작하자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파괴적 결과를 자본주의 체제는 수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위기들을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재정의하고

구체적 현실에서 자본주의 체제와 단절하며

상호의존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과 세계가 이어지게 할 대안 체제를 만들어갑시다.

어떤 운동도 저절로, 저홀로 체제전환의 미래를 밝힐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운동의 통찰을 공동의 과제로 만들어가며

자본의 힘에 맞설 민중의 세력화를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체제전환운동의 전망과 과제를 살피며

두터운 사회운동을 만들어갈 기획을 모색하는 자리.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일시 : 2024년 3월 23일(토) 오후**

**장소 : 서울 모처 (추후 공지)**

**프로그램 : 수백 명의 원탁토론과 힘다지기**



# 2024 체제전환운동

## 2024 체제전환운동포럼 '우리의 대안을 조직하자'

발행일 2024년 2월 1일

퍼낸굿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조직위원회  
주소 (04018)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41 (2F)

홈페이지 [gosystemchange.kr](http://gosystemchange.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ystemchange](http://www.facebook.com/gosystemchange)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gosystemchange](http://www.instagram.com/gosystemchange)  
트위터 [twitter.com/gosystemchange](http://twitter.com/gosystemchange)  
전자우편 [go.systemchange@gmail.com](mailto:go.systemchange@gmail.com)

값 10,000원